국 민 과 언 론 을 이 어 주 는 ,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발간에 즈음하여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6.8%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동시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입니다. 60%를 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우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이처럼 높은 투표율이 기록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부수적으로는 사전투표제의 도입과 방송인들을 위시한 유명인사들의 선거 참여 독려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점도 높은 투표율에 일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선거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널리 전파함으로써 선거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공정성을 포기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게 될 때,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하나의 견제장치로서 공정한 선거, 나아가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을 위해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선거기간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으로서 시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아직도 대다수 언론은 구태의연한 보도관행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시민의식을 언론이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언론은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하는데 집중하여 정작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구태의연하게도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와 치적을 부각시키는 홍보성 기사들,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거나 아예 그 후보 자신의 기고문을 게재한 기사들, 특정 후보가 앞서거나 뒤처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출처와 기본적 보도요건조차 밝히지 않은 기사들이 여전히 지면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장애가 되는 이러한 기사들을 심의하여, 위원회 설치 기간 동안 206건의 자체심의건 및 20건의 시정요구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이며,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여도 2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기 동**

발족에 발맞추어 여론조사보도요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제재조치건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거에 대한 보도의 심의권한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우리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 점은 선거기사심의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달리 비상설기구이기 때문에 기사심의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피해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제재조치로서 정하고 있는 사과문 게재 결정은 위헌 소지가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이 정하고 있는 정정보도문 게재결정 역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단일 상설기구로 통합하고 경고결정문 게재결정, 경고나 주의 및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헌법이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굳이 필요하지 않도록 언론 스스로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부적절한 기사를 자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선거기사심의백서의 발간을 앞두고 과연 심의위원회가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자신할 수 있는가 자문해 봅니다. 일말의 부끄러움도, 공익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자랑스러움도 이제 이 한 권의 책으로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홉 분 심의위원들의 고민과 토론의 결과가 담긴 선거기사심의백서가 짧게는 후임 심의위원회 활동의 거울이 되고, 길게는 민주주의 발전에 걸맞는 언론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기간 동안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수고하여 주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사무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

제 1 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제 1 장 위원회 구성 8

제 2 장 심의 · 의결 절차 11

제 3 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3

제 2 부 심의 · 의결 현황 15

제 1 장 심의 운영방침 16

제 2 장 심의 · 의결 현황 분석 17

Ⅰ. 심의 · 의결 현황 17

Ⅱ. 자체심의 분석 19

Ⅲ. 시정요구심의 분석 43

제 3 부 종합평가 49

제 1 장 심의위원 평가 50

제 2 장 결산 좌담 66

제 4 부 심의 · 의결 사례 69

제 1 장 자체심의 70

1. 경 고 70
2. 주 의 124
3. 권 고 311

제 2 장 시정요구심의 470

1. 정정보도문 게재 470
2. 경고결정문 게재 480
3. 경 고 483
4. 주 의 493
5. 권 고 521
6. 기 각 530

부 록 539

1. 선거기사심의기준 540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544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553

제 1 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 장 위원회 구성
제 2 장 심의 · 의결 절차
제 3 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제 1 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출범했다.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2014년 2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활동하였으며,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

구 분	운 영 기 간	선 거 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보궐선거 시에도 선심위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구 분	운 영 기 간	선 거 일	비 고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2. 23. ~ 2013. 5. 24.	2013. 4. 24.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8. 31. ~ 2013. 11. 29.	2013. 10.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2. 3.~ 2014. 7. 4.	2014. 6. 4.	

2. 구 성

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언론학회, 한국신문협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 추천을 의뢰했으며, 추천권자인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요약력	추천단체	비 고
위 원 장	박 기 동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김 도 윤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연장자순)	유 원 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대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시민단체)	

구 분	성 명	주요약력	추천단체	비 고
위 원 (연장자순)	임 성 규	전 한국의료조정중재원 감정위원 현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김 동 기	전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현 변호사	민주당	
	문 재 완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신문협회(언론인단체)	
	문 종 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이 은 경	청와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변호사	새누리당	
	이 후 동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3. 기 능

심의위원회는, 첫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둘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마지막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중앙당에 한함)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사진. 왼쪽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 문재완 위원, 김도윤 부위원장, 박기동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정학철 위원장 직무대행, 유원옥 위원, 이은경 위원, 김동기 위원, 이후동 위원, 문종대 위원〉

제 2 장

심의 · 의결 절차

1. 자체심의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사심의팀과 심의보조원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각종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보도를 조사하여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각각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2 제6항).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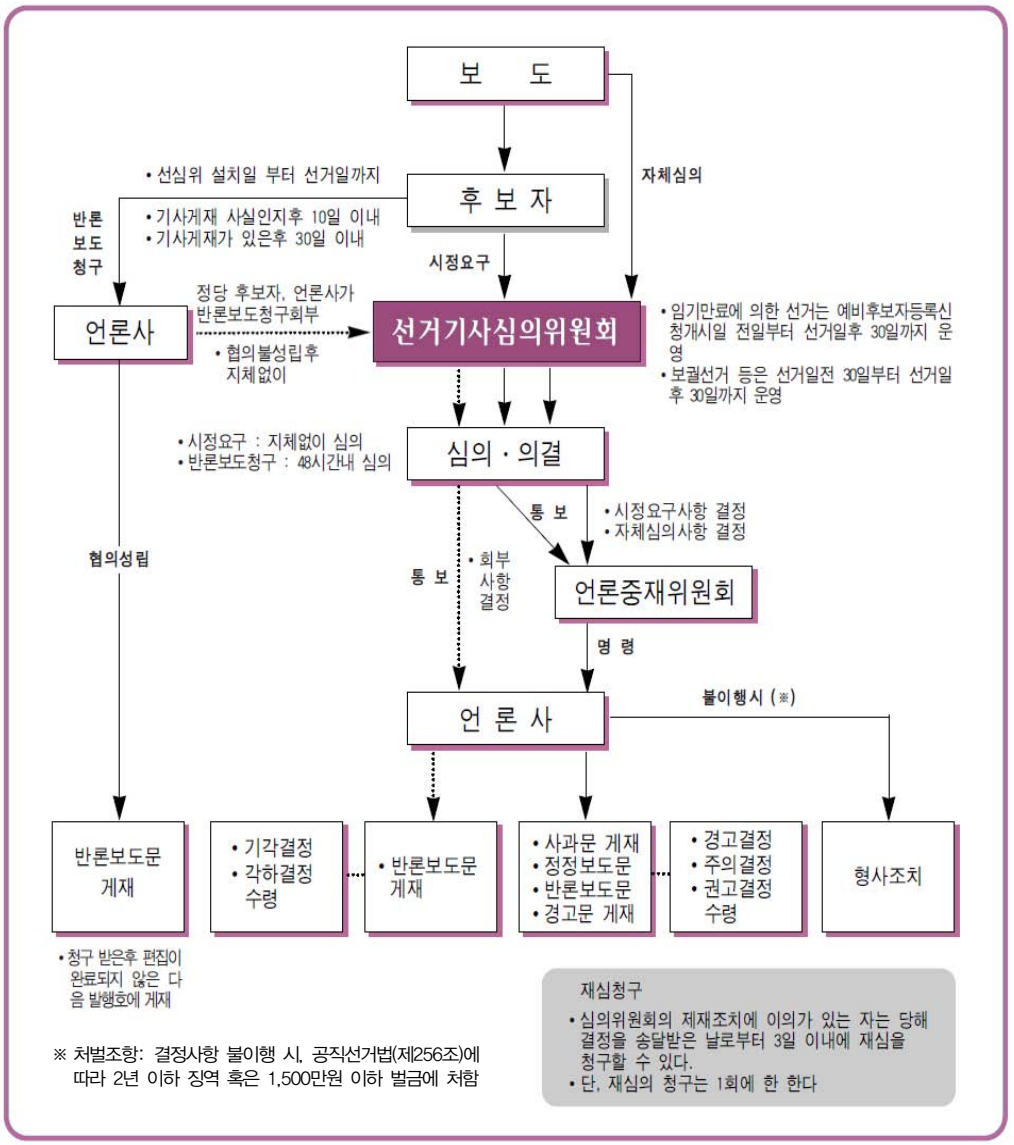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에 한함)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2항, 제3항).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나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심의 · 의결 흐름도】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 공직선거법 개정 (위원회 관련)

2014년 2월 13일에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 개정되어 공표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언론사 등이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 등이다. 개정된 선거법 중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제256조이다.

선거법 제256조는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인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제8조의4 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개정 전 4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2014년 3월 31일)

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발족과 그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심의기준 제정에 상응하여 여론조사관련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선거기간 등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재정립하였다. 개정된 심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 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을 표기하도록 하였다(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둘째,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의 심의기간을 '선거기간 중'에서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수정하는 등 심의기준의 '선거기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



〈선거기사를 심의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제 2 부 심의 · 의결현황

제 1 장 심의 운영방침

제 2 장 심의 · 의결현황 분석

제 1 장

심의 운영방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운영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사과문 게재' 결정은 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결정이지만 해당 결정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 여부 심의 중임을 감안하여,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정정보도문 게재'는 양 당사자의 제출 자료나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사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왜곡되고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경우 결정하도록 했다.

'반론보도문 게재'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과는 달리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았으나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하기로 했다.

'경고결정문 게재'와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언론사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제재조치로서 선거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변형 결정인데,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경고결정문 게재'와 '주의사실 게재' 결정이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다.

결국 '사과문 게재' 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하여 실제로 사과문 게재 결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정보도문 게재'나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후보자나 정당 등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며, '경고'나 '주의' 결정만으로는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경고결정문 게재'나 '주의사실 게재'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경고' 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하기로 했다.

'주의', '권고'는 비록 기사로 인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긴 하나 의도성이 거의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 경중을 따져서 결정하기로 했다.

제2장

심의 · 의결현황 분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는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심의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심의 결과 자체심의 206건, 시정요구심의 20건이 이루어졌으며, 반론보도청구회부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I. 심의 의결 현황

1. 자체심의

심의실무를 담당하는 기사심의팀 및 심의보조원 3인은 대상매체(중앙일간지 26개, 지역일간지 103개, 뉴스통신 5개, 주·월간지, 263개 기타 전문지 및 잡지 50개)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사전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쳤다.

심의위원회는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206건의 자체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206건 중 주의결정이 108건(52.4%)로 가장 많았고, 권고 75건(36.4%), 경고 23건(11.2%)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로 인한 제재가 86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84건(40.8%), 칼럼 및 기고 기준 위반이 35건(17.0%), 기타 1건(0.5%)이었다.

【 자체심의 회차별 의결현황 】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회 차	계	공정성·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기 고	기 타	사과문 게재	정정 보도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2차	29	22	4	2	1			3	12	14
3차	44	29	13	2				7	32	5
4차	28	11	15	2				2	10	16
6차	35	12	8	15				3	30	2
7차	8	4	2	2				1	6	1
8차	13		13						2	11
9차	11		10	1				1	2	8
10차	5		5						1	4
11차	7	1	2	4					5	2
12차	11		8	3					5	6
13차	4	1	2	1					2	2
14차	9	2	4	3				4	1	4
15차	2	2						2		
계	206	84	86	35	1	0	0	23	108	75
	100%	40.8%	41.7%	17.0%	0.5%	0.0%	0.0%	11.2%	52.4%	36.4%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일간지가 가장 많은 128건(62.1%)의 제재를 받았으며, 지역주간지 38건(18.5%), 중앙일간지가 26건(12.6%), 종합주간지 7건(3.4%), 월간지 5건(2.4%), 뉴스통신이 2건(1.0%) 순으로 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의결현황 】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 별		계	공정성·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기 고	기 타	사과문 게재	정정 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 신문	중앙	26	0	26	0	0	0	0	0	4	22
	지역	128	61	44	23	0	0	0	15	75	38
종합주간지		7	0	6	0	1	0	0	0	1	6
지역주간지		38	19	7	12	0	0	0	8	24	6
월간지		5	4	1	0	0	0	0	0	4	1
뉴스통신		2	0	2	0	0	0	0	0	0	2
총 계		206	84	86	35	1	0	0	23	108	75
		100%	40.8%	41.7%	17.0%	0.5%	0.0%	0.0%	11.2%	52.4%	36.4%

2. 시정요구심의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는 총 20건이다. 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와 가장 많은 지역주간지가 8건, 중앙일간지와 지역주간지, 뉴스통신이 각각 2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결정유형별로는 정정보도문 게재 3건, 경고결정문 게재 1건, 경고 4건, 주의 5건, 권고 2건, 기각 2건, 취하 3건이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3건으로 2건은 기각되었으며, 1건은 일부 인용되었다.

한편, 반론보도청구회부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 시정요구심의 매체유형별 처리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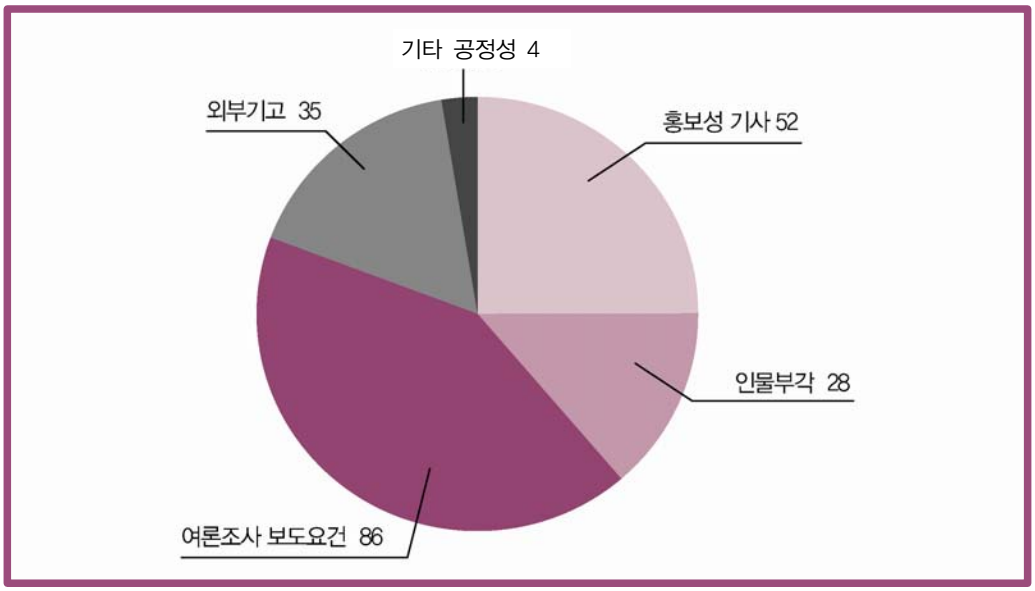
구 분		결 정 내 용						
간 별	계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기 각	취 하
일간지	중앙	2	0	0	0	1	0	0	1
	지역	8	2	0	1	1	1	1	2
종합주간지		0	0	0	0	0	0	0	0
지역주간지		8	1	1	3	2	1	0	0
월간지		0	0	0	0	0	0	0	0
뉴스통신		2	0	0	0	1	0	1	0
총 계		20	3	1	4	5	2	2	3
		100%	15.0%	5.0%	20.0%	25.0%	10.0%	10.0%	15.0%

Ⅱ. 자체심의 분석

1. 위반유형별 분석

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해 제재조치를 한 선거기사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84건, 외부기고 요건 위반이 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현직 단체장의 역점 사업 등을 홍보하는 홍보성 기사, 특정 후보를 부각하는 인물부각보도, 그리고 기타 공정성 위반이다.



가. 여론조사 보도요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서 발표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발맞추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선거기사심의기준의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여론조사결과 보도 시에 최초 보도의 경우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보도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초 보도가 아닌 인용보도의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게재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심의기준이 강화되면서, 자체심의에서 의결된 총 206건의 제재결정 가운데 가장 많은 86건이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에 해당되었다.

전라일보는 2014년 2월 10일자 3면에서 전주시장 선거의 판세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표현으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주의 결정을 받았으며, 문화일보는 2014년 2월 5일자 3면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를 분석하면서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박원순 현직 시장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였지만 출처만을 밝혔을 뿐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아 권고 조치되었다.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꾸준한 활동으로 인하여 선거 후반에는 선거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갖춘 보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나. 공정성 및 형평성

(1) 홍보성 기사

선거기간 초반에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유형은 홍보성 기사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현직 지자체장의 실적과 성과를 부각하는 홍보성 기사와 인터뷰 기사가 많았다. 이 기사들은 대부분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지나치게 우호적인 표현으로 후보자를 미화하고 그의 성과를 과장해 보도함으로써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사는 보도일자와 매체만 바꿔 같은 내용이 반복 게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정 후보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에는 경고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울산신문은 2014년 2월 6일자 9면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두겸 현직 울산 남구청장이 지역 행사에 참가한 모습을 담은 여러 컷의 사진 및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고, 다음날인 2월 7일자 4면에서 동일 인물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경고 조치되었다.

(2) 인물부각(형평성)

선거기간 동안 특정후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보도를 하거나, 반대로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보도만을 하거나, 특정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보도를 하면서 동시에 경쟁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보도만을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주성영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제작한 포토카툰을 2월 12일에서 14일까지 3일간 연이어 게재한 대구영남매일에 대하여 경고 결정을 내렸다.

완주군민신문은 현직 임정엽 완주군수의 '북콘서트' 이벤트와 관련된 기사를 2월 12일에 1면, 19일에는 1면과 12면에 게재하면서 동일 인물의 치적을 부각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직 지자체장에 우호적인 보도가 주로 제재대상이 된 것에 비하여, 뉴스경남은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당시 경남도지사이자 재선에 도전하는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2월 11일에서 26일의 기간 동안 8차례 연이어 보도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월간 주부생활은 2014년 3월호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인천시장에 대한 인터뷰를 게재하였으나 타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계획이 없어 주의 조치되었다. 월간지 등에서 진행하는 일상적인 인터뷰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선거기간 동안은 자제를 바란다는 취지다.

다. 기고 등

이번 심의위원회는 총 35건의 기고에 대해 자체심의 의결했다. 기고 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선거와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경향일보는 2014년 2월 11일자 2면에 게재된 「지·덕·예·도 갖춘 '황은성 안성시장'」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시민을 내 가족과 식구처럼 대하며, 웃어르신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고 예의를 갖추어 영접하는 사람", "지방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부패적 행태를 강력히 척결하는데 앞장섰으며 목민관으로서 행동의 표상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선조" 등 특정 후보에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안일보, 경북일보 등 8개 매체는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으로 경북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 권영세 안동시장의 기고를 게재하여 모두 주의 결정을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인의 주장을 근거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뉴스포스트 제360호의 '서울시장 예상 후보자 관상 분석'의 기사에 대해 주의결정을 내렸으며, 경기과천시장의 후보군을 소개하면서 특별한 근거 없이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의 사진을 다른 후보에 비해 크게 확대한 경인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주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아직 수상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안양시, UN공공기관 노벨상 수상 쾌거'라는 제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수도권일보와 경인종합일보도 각각 주의 결정을 받았다.

2. 결정내용별 분석

가. 경 고

자체심의로 의결한 총 206건 가운데 경고 결정은 23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가 15건, 지역주간지가 8건의 경고를 받았다. 경고결정이 지역신문에 집중된 이유는 해당 지역의 현직 지자체장 등 특정 인물을 부각시키는 기사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인물부각 보도로 공정성 및 형평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가 8건, 특정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논조의 기고나 기획기사, 칼럼을 게재하여 경고 조치된 건이 8건, 특정 후보의 홍보성 기사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하여 경고 조치된 건이 7건이었다.

창원일보는 2014년 3월 3일부터 17일까지 경남 도지사 예비후보인 박완수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경쟁자인 홍준표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경고 결정을 받았고, 경북도민일보는 2014년 2월 13일자 19면에 「한심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친박'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대하여 논설하면서 경쟁자인 박원순 시장에 대하여 '좌파시장', '변태적 후보단일화'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설을 실어 경고결정이 내려졌다.

담양신문은 「이낙연 전남도지사 후보의 출사표」라는 제목으로 특정 후보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내놓은 출마의 변 전문을 지면에 게재하여 경고 결정을 받았다.

【 인물부각 】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46	영남일보	2014. 2. 11.	3면	국가기관 · 민자유치 성과에 안동권씨 지지… 權 군수 독주 분위기
2014지선48	대구영남매일	2014. 2. 12.	2면	“포토카툰으로 감각적 소통 시도”
		2014. 2. 13.	2면	주성영후보, (사)담수회 방문 인터뷰 담은 포토카툰 공개
		2014. 2. 14.	1면	주성영 대구시장 예비후보 포토카툰 ‘별그대’편 공개
2014지선106	창원일보	2014. 3. 3.	1면	홍준표 지사, 또 정부와 불협화음
		2014. 3. 4.	1면	“홍준표 지사 ‘거짓말 퍼레이드’ 중단” 요구
		2014. 3. 5.	1면	홍준표 ‘경남도청 마산이전’ 공약 논란 재점화
		2014. 3. 7.	1면	박완수 “윗선과 교감 … 메시지 받았다”
		2014. 3. 7.	7면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출마 포기하라”
		2014. 3. 10.	2면	박완수 ‘두 바퀴 민생투어’ 마치고 ‘朴心’ 업기
		2014. 3. 10.	15면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부메랑’ … 이젠 어떻게 할 건가
		2014. 3. 17.	2면	홍준표 두얼굴 진주의료원 폐업 마산의료원 확장
		2014. 3. 17.	15면	박완수의 ‘경남 평양사무소’에 거는 기대
2014지선108	대경일보	2014. 3. 10.	3면	박승호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색 제안
		2014. 3. 11.	3면	박승호 도지사 예비후보, 경주서 기자회견
		2014. 3. 12.	3면	박승호 도지사 예비후보 “영천 비상 시키겠다”
		2014. 3. 13.	3면	“경북 농가소득 매월 1백만원 늘리겠다”
		2014. 3. 17.	1면	“김관용 일병 구하기 눈물겹다”
		2014. 3. 17.	1면	지방선거 앞두고 ‘박정희 마케팅’눈길
2014지선226	군위신문	2014. 5. 19.	19면	“명품 경북교육 우뚝 세우겠다”
2014지선227	예천신문	2014. 5. 22.	16면	“명품 경북교육 우뚝 세우겠다”
2014지선233	하나로신문	2014. 5. 30.	1면	금주의 초대석
			3면	4년간 의정활동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행복 여주 건설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자 출마
2014지선234	이천일보	2014. 6. 2.	1면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 어르신들께 ‘건강 선물’
			2면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 , “마지막 열정 바치겠다”
			4면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 “빼앗긴 자존심 되찾아 시민에게 돌려 주겠다”

【기 고】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43	경북도민일보	2014. 2. 13.	19면	한심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친박' 논란
2014지선44	경향일보	2014. 2. 11.	2면	지·덕·예·도 갖춘 '황은성 안성시장'
2014지선45	전남중앙신문	2014. 2. 11.	15면	"시간을 거슬러 목포를 생각하다 – 대성동 재개발 사업"
2014지선78	경기신문	2014. 3. 4.	14면	"시민 모두가 100세 누리는 행복한 안양"
2014지선84	대경일보	2014. 3. 5.	19면	박승호 시장의 8년간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2014지선168	새거제신문	2014. 4. 3.	14면	권민호 시장의 심야버스
			4면	거제시는 난개발 토목행정을 중지하라
2014지선223	영광신문	2014. 5. 16.	11면	이낙연 후보를 전남도지사로…
2014지선224	담양신문	2014. 5. 20.	4면	이낙연 전남도지사후보 출사표

【홍보성 기사】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3	울산신문	2014. 2. 6.	9면	자연에 대한 동경과 사랑으로 빚어낸 경이로움
		2014. 2. 7.	4면	자연과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 역점 백년대계 초석다져
2014지선4	우리일보	2014. 2. 6.	16면	인천의 투자유치는 멈추지 않는다
		2014. 2. 10.	16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child-care)' 책임 보육 실현
		2014. 2. 10.	16면	Eue-Care와 함께 인천교육의 찬란한 비상 시작~
2014지선5	전북중앙신문	2014. 2. 5.	15면	탄소산업 부흥 '남다른 열정' 치하 탄소산업 집적화-탄소섬유 출시 '탄소도시'로 자리매김
2014지선58	경기신문	2014. 2. 12.	24면	광교컨벤션센터 건립 14년 표류 종지부 수원 단독 추진 '국제회의도시' 거듭난다
		2014. 2. 13.	24면	역동적 시정 시민 웃음꽃 결실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 착착
		2014. 2. 17.	5면	"현장에서 답 찾는다"…새벽부터 밤까지 '시민 곁으로'
		2014. 2. 19.	24면	고양시 창조성장 미래도시로 거듭나다
2014지선62	전북중앙신문	2014. 2. 17.	16면	노후산단 확 바꾸고 천사마을 조성 … 도시가 되살아난다
		2014. 2. 19.	16면	"사랑-낭만-흥이 있는 남원으로 오세요"
		2014. 2. 26.	16면	건강-문화-어르신 섬김 우수 '삶의 질' 쑥~쑥
2014지선130	경향일보	2014. 3. 18.	16면	포천시, 수도권 제일의 녹색휴양도시 건설한다
2014지선148	내외일보	2014. 3. 25	16면	물 맑고 깨끗한 환경, 이유 있다
		2014. 3. 26	16면	기업·투자유치 올땐 꼭 성공 지원한다

나. 주 의

제6회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결정 중 주의 결정은 결정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108건으로 전체의 52.4%에 이르렀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가 4건, 지역일간지 75건, 종합주간지가 1건, 지역주간지 24건, 월간지가 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현직단체장의 치적을 집중 보도한 홍보성 기사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가 33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이 31건, 후보자의 기고문이나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칼럼 등을 게재하여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27건, 기타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하여 인물을 부각한 기사가 16건, 객관성 위반이 1건이었다.

여수신문은 2014년 3월 6일자 1면에 「'민주당=당선' 본선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이라는 제목으로 특정 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여타 정당 소속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뉴스포스트는 2014년 2월호에 "신년기획 서울시장 예상"이라는 제목으로 한 무속인이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관상을 보고 당락을 예측한 내용을 기사화하여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홍보성 기사】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1	현대일보	2014. 2. 5.	16면	기업이 살아야 '포천시 미래'가 열린다
		2014. 2. 6.	16면	600년 역사 담은 문화 정책 지역경제 OK 한류관광 OK
		2014. 2. 7.	16면	평택시, 미래 이끌어갈 인재육성 "아낌없이 지원"
		2014. 2. 10.	16면	100만 행복도시 성장기반 다진다
2014지선2	경인종합일보	2014. 2. 4.	16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2014. 2. 6.	16면	인천의 투자유치 멈춤없이 고공행진중
		2014. 2. 10.	16면	범시민 이웃사랑 나눔축제 '의정부에 희망과 온정 선물하다'
2014지선6	경기신문	2014. 2. 4.	5면	"가장 수원적인 '수원화성'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온힘"
		2014. 2. 10.	24면	엄마처럼 살뜰 아빠처럼 푸근 맞춤형 돌봄에 시민 함박웃음
2014지선7	경향일보	2014. 2. 5.	16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2014. 2. 7.	16면	인천시, 투자유치는 멈추지 않는다
2014지선51	중부일보	2014. 2. 11.	11면	600년 고양의 저력이 일군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2014. 2. 13.	11면	대규모 사업 속속 착수… 미래 먹거리 준비 OK
			12면	첨단산업 · 국제무역 · 교통 · 물류 중심도시 기반 구축…
			13면	복지 · 교육 · 문화 · 일자리 확충 시민의 삶 '업그레이드'
2014지선52	중부신문	2014. 2. 11.	12면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2014지선53	울진신문	2014. 2. 14.	4면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54	경주신문	2014. 2. 14.	19면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2014지선55	성주신문	2014. 2. 11.	8면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2014지선56	경산신문	2014. 2. 10.	6면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2014지선57	화성신문	2014. 2. 12.	6면 7면	"임기내 추진했던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매진"
2014지선59	경안일보	2014. 2. 5.	12면	대한민국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구미"
		2014. 2. 11.	12면	근대아리랑의 본향 … 스포츠·관광 중심도시 '문경'
		2014. 2. 13.	12면	구미 전통시장이 살아 움직인다
2014지선60	현대일보	2014. 2. 17.	16면	복지중심 수호천사 역할 '톡톡'
		2014. 2. 18.	16면	고양 '시민우선' 신개념 주거환경 조성
		2014. 2. 19.	16면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 늘고 생활은 편리해진다
2014지선61	전국매일신문	2014. 2. 14.	3면	금강송처럼' 곧게 뻗어갈 울진의 미래
		2014. 2. 24.	20면	"뚜벅뚜벅 걷는 순천여행서 '느림의 미학' 만끽하세요"
		2014. 2. 25.	20면	동해안 별미 '울진대게·붉은대게' 맛보이소~
2014지선63	시대일보	2014. 2. 13.	16면	고양시, 창조성장의 미래 도시로 '도약'
		2014. 2. 18.	16면	구민과의 소통 행정 '무한신뢰' ↑↑
2014지선64	아시아타임즈	2014. 2. 19.	22면	구미 전통시장, 情·추억이 살아 숨쉰다
2014지선65	수도일보	2014. 2. 5.	16면	기업 살리고, 일자리 창출이 포천시 미래의 '희망'
2014지선66	대경일보	2014. 2. 14.	14면	상주시축산업 육성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힘쓴다"
2014지선67	대구영남매일	2014. 2. 13.	16면	상주시, 그 무엇보다 서민위해 일한다
2014지선68	내외일보	2014. 2. 5.	16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2014지선69	전북일보	2014. 2. 18.	5면	도심곳곳 '문화예술의 옷' … 관광객 발길 불렀다
2014지선70	서울일보	2014. 2. 11.	20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 교사는 자긍심
2014지선72	경인종합일보	2014. 2. 19.	16면	시민 맞춤형 서비스 '김포3.0' 선도과제 발굴 추진
2014지선73	시정신문	2014. 2. 6.	5면	주민에게 직접 듣고 즉시 응답하라' 소통행정 제1원칙
2014지선74	중구신문	2014. 2. 12.	4면	똑'소리 나는 행정 … 구민과의 약속 100% 달성
2014지선101	전라일보	2014. 2. 26.	16면	압축성장→질적성장정책전환…살기 좋은 도시 만들다
2014지선102	기호일보	2014. 3. 5.	16면	탄탄한 교통인프라 구축 물류 무역 중심도시로 급부상
2014지선126	내외일보	2014. 3. 11.	16면	"전국 최고 전통축제로 화려한 부활할 것"
2014지선127	중도일보	2014. 3. 14.	11면	"당진항 육성 통해 환황해 경제중심도시로 우뚝"
2014지선128	경북매일	2014. 3. 10.	12면	42만시민 공감 맞춤형 복지로 행복지수 '껑충' 올린다
2014지선129	대경일보	2014. 3. 17.	14면	대한민국 복지1번지 구미시가 펼쳐갑니다
2014지선131	중부매일	2014. 3. 14.	12면	"진정한 청원 발전 위해 통합길 선택했다"
2014지선132	지방시대	2014년 3월호	16~19	"주민·현장목소리로 태안발전 견인"
			30~31	실력과 경쟁력' 갖춘 도시 평택
			34~35	느림을 찾아, 비움을 찾아 뚜벅뚜벅
			58~59	활발한 의정활동 시민 삶의 질 UP

【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26	전라일보	2014. 2. 10.	3면	숨 죽인' 전주시장 선거 … '안갯속' 구도
2014지선27	부산일보	2014. 2. 5.	3면	"정체성 다른 사람" vs "지지율 돌아봐라" … 막오른 초반 기싸움
2014지선28	대구일보	2014. 2. 4.	3면	고윤환 · 신현국 · 강명국 · 신영진 팽팽한 4인 구도
2014지선29	전북도민일보	2014. 2. 4.	1면	민주-安신당 전북놓고 '대격돌' 교육감 선거전도 달아 오를 듯
2014지선34	매일신문	2014. 2. 10.	4면	김 군수 여론조사 독주, 공천 연결될까
		2014. 2. 17.	5면	전문직 · 토박이 공천장 놓고 대격돌
		2014. 2. 18.	8면	장욱 "현역 프리미엄 탄탄" 김영만 "4년간 표밭 일궈"
2014지선35	대구일보	2014. 2. 11.	3면	본선보다 뜨거운 여당 공천경쟁…권영택 군수 여론조사 1위
		2014. 2. 12.	3면	김성락 · 조두원 · 박진현 · 이희진 · 장성욱 등 오차 범위내 접전
2014지선36	광주매일신문	2014. 2. 12.	7면	장만채 道교육감 재선가도 날개다나
2014지선37	군산신문	2014. 2. 10.	2면	도지사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 우세
2014지선38	문화일보	2014. 2. 18.	9면	"나가면 이긴다" vs "이겨도 안나가"
2014지선39	한국일보	2014. 2. 20.	8면	김황식-정몽준 빅매치 기대 새누리, 수도권 전선 '맑음'
2014지선40	우리일보	2014. 2. 24.	1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선거 D-100
2014지선41	아시아타임즈	2014. 2. 17.	4면	무주공산된 대전시장 자리 누가 잡나
2014지선85	광남일보	2014. 3. 6.	3면	진보' 분열 우려 경선 참여 수용
2014지선86	경남매일	2014. 2. 28.	2면	전운 감돈다
2014지선87	대구영남매일	2014. 2. 25.	2면	"40년 공직경험, 영덕 발전에 도움되길"
			5면	안동시장 선거, '새누리당 공천권' 선거 향배 가늠
			9면	새누리 정서 강한 영덕 '공천이 곧 당선'
2014지선133	익산투데이	2014. 3. 5.	1면	익산시장선거 무소속 다자대결 결과는?
2014지선134	서울경제	2014. 3. 5.	8면	달아오르는 수도권 빅3 경쟁
2014지선135	여수신문	2014. 3. 6.	1면	민주당도 무공천…여수시장 선거 어떻게 전개될까
2014지선136	경북매일	2014. 3. 7.	3면	"도민과 함께 경북의 꿈 완성"
2014지선137	광주매일	2014. 3. 12.	3면	전남지사 선거 '공천=당선' 공식 신당 권역별 표심이 승부 가른다
2014지선138	전북도민일보	2014. 3. 17.	3면	소지역주의 저물고 세대대결 양상 대국면
		2014. 3. 18.	3면	기초 무공천 결정 … '찻잔 속 태풍'
2014지선139	충청투데이	2014. 3. 19.	3면	與경선치열 · 야권 단일화…복잡다단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140	경북일보	2014. 3. 21.	3면	이현준 군수 아성에 김학동 · 오창근 도전장
2014지선146	해피데이고창	2014. 3. 20	3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참일꾼이 되겠다”
2014지선154	경남도민신문	2014. 4. 1.	1면	이창희 진주시장 경선 1차 컷오프 통과하나
2014지선155	경기인천일보	2014. 4. 8.	1면	정병국 ‘1차예선 통과 남경필과 맛대결 확정’
2014지선169	경기인천일보	2014. 4. 15.	1면	새정치 도지사경선 박빙
2014지선170	충북일보	2014. 4. 15.	12면	괴산군수 ‘4파전‘ 압축
2014지선184	전남일보	2014. 1. 4.	3면	교육감 선거 광주 ‘혼전‘ 전남 ‘차분‘
2014지선200	국제신문	2014. 5. 7.	1면	양자 · 3자대결 모두 서병수 1위
2014지선203	경향신문	2014. 5. 7.	8면	최대 승부처 서울, ‘야 우세‘로 바뀌었다
		2014. 5. 8.	12면	무당파로 돌아서는 40대 엄마들…51.3% “야당이 선거 이여야”
		2014. 5. 13.	12면	정몽준 · 박원순 빅매치…수도권 ‘세월호 후폭풍‘

【기 고】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47	여수신문	2014. 2. 6.	4면	민주당=당선‘ 본선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
2014지선83	경향일보	2014. 3. 3.	4면	의정부 안병용 시장 상복 터졌다
		2014. 3. 5.	2면	특수상황 지역개발 대통령 수상을 축하하며
2014지선111	광주매일신문	2014. 3. 18.	19면	“힘들 땐 광주시에 기대세요”
2014지선112	나주투데이	2014. 3. 24.	2면	나주시 천여 공직자여 단결하라
2014지선114	경안일보	2014. 3. 11.	15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2014지선115	경북일보	2014. 3. 12.	18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2014지선116	경북도민일보	2014. 3. 10.	19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2014지선117	대경일보	2014. 3. 10.	19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2014지선118	대구일보	2014. 3. 11.	26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2014지선119	경도일보	2014. 3. 10.	19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2014지선120	경북매일	2014. 3. 10.	18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2014지선121	경상매일	2014. 3. 11.	19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2014지선122	거제중앙신문	2014. 3. 6.	11면	국민과의 약속,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하라‘
2014지선123	아시아경제	2014. 3. 19.	30면	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2014지선124	영광신문	2014. 3. 7.	9면	의원직 사직에 즈음하여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2014지선125	강원일보	2014. 3. 10.	7면	폭설 이겨냈듯 동계올림픽도 하나된 힘으로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144	당진투데이	2014. 3. 20.	9면	투자유치설명회와 규제완화
2014지선145	한남일보	2014. 3. 19.	15면	민심의 목소리를 어찌 구태(舊態)라 하는가
2014지선191	반월신문	2014. 4. 17	4면	돌봄과 살림 정치를 위한 정책 제언
2014지선192	고성신문	2014. 4. 25	15면	박종훈 경남교육감 에비후보의 경남도민들에게 드리는 글
2014지선193	한남일보	2014. 4. 21	2면	밀양나노산단의 성공적 조성 위해 '밀양시장 예비후보 연석회의' 공식 제안합니다
2014지선194	세종신문	2014. 4. 25	3면	정말 초라한 '기초연금 20만원'을 넘어서는 안정적 노후를 보장해야
2014지선197	경북일보	2014. 5. 2.	18면	"권영진 후보는 제 아들입니다"
2014지선198	정읍신문	2014. 4. 30.	4면	민선 6기 시장 당선자께 건의합니다 천변 벚꽃도 산내 구절초도 좋지만…
2014지선199	반월신문	2014. 5. 8.	4면	당신은 국민을 버린 대통령입니다
2014지선211	서대문신문	2014. 5. 10.	3면	문석진 후보 공약이행률 96점 이라고 확신?
2014지선225	나주신문	2014. 5. 12.	6면	아버지의 '윤장현'을 부르는 법, '큰 사람아, 큰 사람아'

【인 물 부 각】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22	대경일보	2014. 2. 4.	4면, 7면	"24시간 안전·행복한 포항 만든다" 2014년 청마의 해 "시정을 단디 챙기겠습니다" "떡국으로 정 나눠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평가 포항시, 도내 '최우수기관' 선정 일하고 싶은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포항시
2014지선23	경향일보	2014. 2. 6.	2면	안성시, 민선5기 발로 뛰는 소통 행정 빛났다
2014지선25	경북도민일보	2014. 2. 10.	1면	권영세 현시장 재선 텃밭 이상없다 권영세 안동시장 "시정업무 잘한다" 69.3%
2014지선49	경인일보	2014. 2. 12.	5면	現시장 출마제한…후보군 10여명 백중지세
2014지선50	완주군민신문	2014. 2. 12.	1면	임정엽 군수, 오는 15일 북 콘서트
2014지선75	뉴스경남	2014. 2. 11.	5면	"거짓말에 색깔론까지…조급해진 홍준표"
		2014. 2. 18.	3면	"경남도청 홍지사의 선거캠프로 전락"
			3면	박완수, 무상급식 정책 신뢰성 잃어
			4면	박완수 "새로운 모델 '경남행복의료원' 설립한다"
		2014. 2. 24.	1면	"지지율 정체된 홍 지사가 민심 분열" 박완수 후보 측, 여론조사 분석 '제각각'
		2014. 2. 26.	3면	"'도청 마산 이전' 공약 입장 밝혀라" 박완수 측 "홍준표 도지사, 선거 진술용 헛 공약"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79	주부생활	2014. 3. 1.	302	젊은 도시기획자 송영길 시장
2014지선80	여성조선	2014. 3. 1.	400쪽	edu interview 2 학교는 행복해졌나요?
2014지선81	전남저널	2014. 2. 18.	12면	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직위유지
2014지선107	경안일보	2014. 3. 7.	2면	이재만 예비후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2014. 3. 10.	2면	“여성 지위 향상 위해 힘쏟을 것”
		2014. 3. 11.	2면	“시장 당선 시 월 10회 이상 택시타고 출 · 퇴근 하겠다”
		2014. 3. 14.	2면	“신공항 입지선정 정치 이슈화 안 된다”
		2014. 3. 17.	2면	이재만 예비후보, “범죄발생 제로, 안전도시 대구 만들겠다”
		2014. 3. 18.	2면	이재만 예비후보,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2014. 3. 19.	2면	이재만, 도심재생 ‘228 브릿지 타워’ 조성 계획 밝혀
		2014. 3. 20.	2면	이재만 예비후보, 도시철도 3호선 시운전
		2014. 3. 25.	2면	“대구,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로 육성”
		2014. 3. 27.	2면	이재만 예비후보, 범안로 무료화 공약 발표
2014지선110	함안뉴스	2014. 2. 28.	4면	경남도의회 조근제 부의장 의정보고서 발간 “도의원 8년 동안의 성적표를 올려드립니다”
2014지선149	수도권일보	2014. 3. 25	1면	안양시, UN공공기관 노벨상 수상 쾌거
2014지선150	경인종합일보	2014. 3. 25	1면	안양시, UN공공기관 노벨상 쾌거
2014지선151	여성중앙	2014년 4월호	432면 ~ 435면	정치인보다 행정가, 인천시장 송영길 부부의 주말데이트
2014지선190	정읍뉴스	2014. 3. 6.	1면	“유심의 향배 어디에 있느냐”로 지역정가 뜨겁다
			2면	유성엽의원 논평 통합과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환영한다
				유성엽의원 “30일현장속으로!”
				유성엽 의원, “동해표기 및 위안부 문제에 관심 가질 것”
			3면	유성엽 의원 “30일, 현장속으로!”
		2014. 3. 13.	2면	유성엽의원 논평 전북연구개발특구 반드시 지정돼야!
			7면	유성엽 의원 ‘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 제정안 발의
				유성엽 국회의원, 전북 발전구상 밝혀
		2014. 3. 20.	3면	유성엽의원논평 ‘동해 위안부 교육 법안’통과를 환영한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 3. 27.	2면	유성엽의원 논평 나호남지역본부, 통폐합돼도 전북에
				유성엽후보 “버스공영제 정책연대” 선언
		2014. 4. 3.	2면	유성엽의원 논평 착신전환 전화, 여론조사서 원천배제를 환영한다
			5면	동학혁명 유적지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추진
			7면	유성엽 ‘전기세 0, 에너지 도민주권’ 정책제시
		2014. 4. 10.	2면	유성엽 의원, 대통령 새누리당에서 탈당 요구」
			7면	대한민국 산지 가치, 열배된다! 노인복지, 일자리로 풀겠다
		2014. 4. 17.	2면	유성엽의원 논평 기초선거 공천 결정을 존중한다
			7면	“TV토론 3회 이상 개최를 공식 제안합니다”
			8면	도지사경선, 공론조사 100%로 바꿔야한다
		2014. 4. 24.	1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될 수있기를 빕니다
			2면	유성엽의원 논평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를 환영한다」
			7면	현금 없이 편하게 타는 전북 택시
2014지선212	전북중앙신문	2014. 5. 20.	3면	송하진 후보 득표율 70% 넘어설까

【객 관 성】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21	뉴스포스트	제360호	2~3면	서울시장 예상 후보자 관상 분석

다. 권 고

권고 결정이 내려진 안건은 75건으로 전체 자체심의 결정유형의 36.4%를 차지한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22건, 지역일간지 38건, 종합주간지가 6건, 지역주간지 6건, 월간지 1건, 뉴스통신이 2건의 권고 조치를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으로 55건, 홍보성 기사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가 12건, 기고 및 칼럼과 기타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하여 인물을 부각한 기사에 각각 4건씩의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경북도민일보는 2014년 4월 14일자 3면에 실린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출처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밖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아 권고 조치를 받았다.

【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30	중앙일보	2014. 2. 6.	6면	“잘 할 사람 뽑아야” vs “거품 곧 꺼질 것” “믿을 건 신당밖에” vs “안, 적극성 거시기해”
		2014. 2. 10.	4면	호남 1위 탈환한 민주당 … 안철수 신당 심상찮다
		2014. 2. 11.	6면	부산시장 권철현 급부상 오건돈과 엎치락뒤치락
2014지선31	시사저널	2014. 1267-1268호	30~35	‘소통령’ 누가 될지 40대 표심에 갈렸다 안철수 비집고 들어갈 틈 좁아졌다
2014지선32	문화일보	2014. 2. 5.	3면	“특정 후보 추대 없다”…정몽준-김황식 ‘빅매치 눈앞’
2014지선33	한국경제	2014. 2. 8.	5면	새정치신당‘으로 물었더니 安 신당 지지율 6%P 하락
2014지선42	경남일보	2014. 2. 18.	3면	洪-朴 ‘공청권 전쟁‘ 시작됐다
2014지선88	세계일보	2014. 3. 10.	4면	대형 이슈에 선거판세 출렁…격전지 오차범위 안팎 ‘접전‘
				與 친박진영, 인천시장 유정복으로 ‘교통정리‘
2014지선89	서울신문	2014. 3. 4.	3면	서울 與 정문준 · 김황식 흥행몰이…안개 걷힌 野 박원순과 빅매치
		2014. 3. 5.	25면	6 · 4 지방선거 누가 뛰나 충북 기초자치단체장 통합 청주시 첫 수장 누가 될까 최대 관심
2014지선90	한국경제	2014. 3. 3.	3면	지방선거 판세 요동…서울 · 인천 野 힘받고 경기 · 부산은 ‘혼전‘
		2014. 3. 4.	1면	남경필 47.5% 〉 김상곤 40.5%
			6면	野후보 적합도, 김상곤 〉 김진표 〉 원혜영
		2014. 3. 6.	1면	안희정 50.7% 〉 이명수 35.2%
		2014. 3. 6.	6면	與후보 적합도, 이명수 · 홍문표 ‘박빙‘
		2014. 3. 10.	1면	충북지사 후보 가상대결 이시종 45.9% 〉 윤진식 42.4%
			6면	與후보 적합도, 정우택〉윤진식〉서규용
2014지선91	국민일보	2014. 3. 8.	5면	너무 느긋한 ‘추격자‘ 김황식 역전 가능할까
2014지선92	매일경제	2014. 3. 1.	5면	남경필, 경기지사 출마하나
		2014. 3. 3.	5면	유정복, 인천시장 도전한다
2014지선93	뉴스포스트	2014. 2. 23.	2면	인천시민, 안정과 새 경쟁력 놓고 ‘갈등‘
2014지선94	중부일보	2014. 3. 3.	1면	파주 이인재, 압도적 우세
2014지선95	충남일보	2014. 3. 6.	1면	지방선거, 요동치는 판세 與 우위속 野신당 맹추격
2014지선96	대전일보	2014. 3. 6.	14면	민주-安통합 시너지…지지율 대폭 상승
2014지선97	음성뉴스	2014. 2. 25.	1면	지방선거 본격 돌입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98	뉴스1	2014. 3. 5.	정치	요동치는 지방선거 판세…여론조사서 지지율 요동
			전국	[6.4地選D-90] 인천시장 선거 판세는?
		2014. 3. 6.	전국	[6 · 4地選D-90] 경북 예천군수 선거 누가 뛰나
		2014. 3. 7.	전국	[6 · 4地選D-89]경북 문경시장 선거 누가 뛰나
2014지선99	연합뉴스	2014. 3. 5.	정치	요동치는 판세…與 격전지 우위속 野신당 맹추격
2014지선147	중부일보	2014. 3. 31	1면	「김윤주 독주 속 '1강 · 2중 · 8약' 구도」
2014지선156	시사저널	2014. 4. 1. ~ 4. 8	36면	남경필 vs 정병국, 김상곤 vs 원혜영 동지는 간데없고 적으로 으르렁
2014지선157	목포시민신문	2014. 4. 2.	1면	목포시장후보 8명 난립 … 4강 4약 변화조짐
2014지선158	한국경제	2014. 4. 8.	6면	鄭 43.8% vs 朴 42.7% … 서울도 '혼전속으로'
2014지선159	한국일보	2014. 4. 8.	6면	與 후보들 상승세 … 수도권서 엎치락뒤치락
2014지선160	세계일보	2014. 4. 8.	4면	與 서울시장 경선 내일 첫 TV 토론회
				새누리 경기지사 경선 남경필 · 정병국 맞대결
2014지선161	조선일보	2014. 4. 8.	5면	서울 정몽준 · 박원순 초박빙 … 忠北 이시종 … 윤진식 접전
2014지선162	경향신문	2014. 4. 8.	5면	고정관념 깨는 선거구도 유권자들 '당'보다 '인물'
2014지선163	중도일보	2014. 4. 8.	4면	대전시장 박성효 · 권선택 '선두권' 충남지사 가상대결은 안희정 1위
2014지선164	신아일보	2014. 4. 8.	3면	지방선거' 서울 · 인천 · 부산 여야 접전 양상
2014지선165	주간한국	2014. 3. 31.	6~7면	요동치는 경기지역 민심 … 與 전략공천 승부수 통할까
2014지선166	경북일보	2014. 4. 7.	1면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선호도 긴급 여론조사 이강덕 25.1% '선두' 공원식 19.4% '정체' 김정재 19.2% '상승'
2014지선171	전국매일신문	2014. 4. 15.	3면	50년 절친 리턴매치 등 '與野 대격돌'
2014지선172	경향신문	2014. 4. 14.	4면	7:5:5
2014지선173	동아일보	2014. 4. 14.	4면	새누리는 '黨心' 새정연은 '安心'
2014지선174	한국일보	2014. 4. 15.	5면	경기 · 대전은 새누리, 충남 · 강원은 새정치 우세…서울 · 인천은 박빙
2014지선175	뉴시스아이즈	2014. 4. 8~ 4. 14	16~17면	박원순 시장 수성? 새누리당 탈환? 여야 사활 건 한판 승부…예측 불가
			25면	여, 남경필 1위 … 맞설 야권 후보는 누구?
			26면	최문순 1위, 새누리 3인 추격…'원주'가 변수
			27면	여야 예선 2강 2약 … 본선은 변수 많아 '혼전'
			32면	여, 홍준표 · 박완수 재대결 …야, 단일화 관건
			33면	여야 경선 막판까지 혼선 … 우근민 출마 촉각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176	경북도민일보	2014. 4. 14.	3면	여야 광역長 대진표 속속 확정…수도권 초접전 양상
2014지선177	중부일보	2014. 4. 14.	6면	새정연, 도지사 경선룰 따라 지지율 순위 '엎치락뒤치락'
		2014. 4. 14.	1면	현삼식, 2위와 2배 이상격차 '선두'
2014지선178	광주일보	2014. 4. 14.	1면	광주시장 강운태 · 이용섭 오차범위내 '혼전' 전남지사 이낙연 · 주승용 1.3%P '초박빙'
2014지선185	경향일보	2014. 1. 4.	2면	의정부 · 양주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2014지선186	한라일보	2014. 4. 22	3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 관심↑
2014지선187	매일경제	2014. 4. 16	6면	서울 정몽준 · 부산 권철현 與후보 약진
2014지선188	시대일보	2014. 4. 17	3면	6.4 광역판세 … '12대 5'냐, '7대 10' 이냐
2014지선195	주간한국	2014. 4. 21	10면~11면	與7 · 野 5 우세속 5곳 혼전 양상 5월 중순 우열구도 확연해질 듯
2014지선196	월간조선	2014.년 5월호	108면~127면	'지방선거=여당의 무덤' 공식 깨어지나?
2014지선201	한국교육신문	2014. 5. 12.	2면	광주 · 전북, 보수 단일화시 승부수
2014지선202	중앙일보	2014. 5. 12.	8면	고교 · 교회까지 같아…김진표 · 남경필 형님 · 아우 대결
2014지선204	서울신문	2014. 5. 12.	2면	남경필 vs 김진표…고교 선후배 '맞짱'
		2014. 5. 14.	1면	7〈與 우세〉 : 5〈野 우세〉 : 5 〈접전〉
2014지선205	한겨레	2014. 5. 14.	4면	박원순–정몽준 격차 더 벌어져…남경필–김진표는 줄어
			5면	40대 '앵그리맘' 표심 · 세월호 심판론 · 지지층 결집…'3대 변수'
2014지선206	헤럴드경제	2014. 5. 14.	8면	격전지 수도권 · 충청…세월호 파고 휩쓸리는 與
2014지선207	아주경제	2014. 5. 14.	6면	세월호 여파 '수도권 빅3' 野 상승세…與 전패 위기 고조
2014지선213	아주경제	2014. 5. 20.	5면	경기지사,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떠올라
2014지선214	내일신문	2014. 5. 20.	6면	남경필 일방적 우세서 초박빙 대결로
2014지선228	경북도민일보	2014. 5. 26.	3면	경기, 엎치락뒤치락 … 與 텃밭 부산도 새 접전지 부상
2014지선229	일간경기	2014. 5. 26.	1면	D–9 중반 판세진단 '사활건 표심잡기'
2014지선230	광주일보	2014. 5. 22.	4면	장만채 40% 웃도는 지지율…재선가도 순탄
2014지선231	남도일보	2014. 5. 27.	3면	"단일화 후보, 새정치 후보에 앞서"

【홍보성 기사】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8	새전북신문	2014. 2. 4.	5면	“군민의 행복이 곧 순창의 미래입니다”
2014지선9	아시아일보	2014. 2. 4.	16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2014지선10	서울일보	2014. 2. 5.	20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구미
2014지선11	울산매일	2014. 2. 6.	16면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울산의 중심‘ 자리매김
2014지선12	수도권일보	2014. 2. 4.	14면	기업·구직자에게 행복의 날개 달아주는 포천시 만든다
2014지선13	대구영남매일	2014. 2. 4.	5면	겨울에도 모두 따뜻하고 훈훈한 구미 만들기
2014지선14	경도신문	2014. 2. 5.	12면	기업살리고 일자리 창출 나선다
2014지선15	수도일보	2014. 2. 4.	12면	“인천시, 투자유치는 멈추지 않는다”
2014지선16	인천일보	2014. 2. 6.	18면	따뜻한 복지·거침없는 소통 … “시민이 최고입니다”
2014지선17	중부일보	2014. 2. 6.	11면	구리, 시민 행복도시 디자인하다
2014지선18	시대일보	2014. 2. 10.	16면	고양시, 600년 역사 신한류로 완성하다
2014지선100	인천일보	2014. 2. 13.	18면	교육·문화·복지 어우러진 ‘희망 가득‘ 창조도시로
		2014. 2. 27.	18면	대기업 산단 차례로 유치…지속발전 가능성에 날개
2014지선19	광남일보	2014. 2. 4.	19면	일자리 창출과 취업확대에 올인하는 광주시
2014지선20	대구영남매일	2014. 2. 10.	17면	자기주도 행정과 창조 행정
2014지선77	거창한뉴스	2014. 2. 17.	12면	도의원(2자규) 출마를 선언한 농업(촌)전문가 김일수!
2014지선113	완주군민신문	2014. 3. 12.	3면	“당신이 있어 지난 8년 완주는 행복했습니다”

【인 물 부 각】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14지선24	영남일보	2014. 2. 6.	3면	중앙과 원활한 소통에 국비확보 독보적 … 金 군수에 힘 실리는 형국
2014지선76	울산신문	2014. 2. 17.	3면	여야 시장 예비후보, 인지도 높이기 잰걸음
		2014. 2. 20.	15면	남구, 가금류 소비촉진행사
		2014. 2. 24.	3면	울산시장 예비후보 “바쁘다 바빠”
2014지선82	경주신문	2014. 2. 28.	19면	경북도 국가예산 10조원 돌파
2014지선109	경북일보	2014. 3. 10.	3면	김항곤 현 군수 독주에 이수열·오근화 각축

3. 매체유형별 분석

제6회 지방선거 선거기사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총 457종이었다. 세목별로는 중앙일간지 26종과 지역일간지 103종 등 일간지 총 129종, 주간지 및 월간지 263종, 전문신문 11종, 교육신문 10종, 잡지 29종, 뉴스통신 15종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 15개, 지역일간지 69개, 중앙주간지 4개, 지역주간지 34개, 월간지 5개, 뉴스통신 2개 총 129개 매체가 심의기간 동안 최소 1건 이상 자체심의를 통해 제재를 받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 매체 비율은 평균 약 23.3%였으며 중앙일간지(57.6%)와 지역일간지(79.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앙일간지 26개 심의대상매체 가운데 15개 매체에 대하여 총 26건의 제재조치가 의결되었다. 결정 내용별로는 주의 4건, 권고가 22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26건 모두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에 해당되었다.

지역일간지는 103개 심의대상매체 가운데 69개 매체가 총 128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경고결정이 15건, 주의가 75건, 권고는 38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44건, 기고 23건이다.

종합주간지는 28개 심의대상매체 중 4개 매체가 7건의 제재를 받았다. 주의 1건, 권고 6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6건, 객관적이지 못한 기사가 1건이다.

교육지를 포함한 지역주간지는 심의대상 284개 심의대상매체 가운데 34개 매체가 38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결정내용별로 경고 8건, 주의 24건, 권고가 6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9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7건, 기고 기준 위반이 12건이다.

월간지는 5개의 매체에 대해 각각 1건씩 5건의 제재가 내려졌으며 주의가 4건, 권고가 1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형평성 위반이 4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건이었다.

심의대상 매체 중 5회 이상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총 6곳으로 모두 지역일간지이며 6곳 중 4곳이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언론사이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방선거 때보다 경선이 치열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매체별 위반현황 】

구분			위반유형				결정내용				
간별	매체명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기고	기타	사과문 게재	정정 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3		3						1	2
	국민일보	1		1							1
	내일신문	1		1							1
	동아일보	1		1							1
	매일경제	2		2							2
	문화일보	2		2						1	1
	서울경제	1		1						1	
	서울신문	2		2							2
	세계일보	2		2							2
	조선일보	1		1							1

구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별	매체명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기고	기타	사과문 게재	정정 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중앙일보	2		2							2
	한겨레	1		1							1
	한국경제	3		3							3
	한국일보	3		3						1	2
	헤럴드경제	1		1							1
	소 계	26	0	26	0	0	0	0	0	4	22
지역 일간지	강원일보	1			1					1	
	경기신문	3	2		1				2	1	
	경기인천일보	2		2						2	
	경남도민신문	1		1						1	
	경남매일	1		1						1	
	경남일보	1		1							1
	경도신문	1	1								1
	경도일보	1			1					1	
	경북도민일보	5	1	2	2				1	2	2
	경북매일	3	1	1	1					3	
	경북일보	5	1	2	2					3	2
	경상매일	1			1					1	
	경안일보	3	2		1					3	
	경인일보	1	1							1	
	경인종합일보	3	3							3	
	경향일보	6	3	1	2				2	3	1
	고성신문	1			1					1	
	광남일보	2		1	1					1	1
	광주매일	1		1						1	
	광주매일신문	2	1	1						2	
	광주일보	2		2							2
	국제신문	1		1						1	
	기호일보	1	1							1	
	남도일보	1		1							1

구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별	매체명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기고	기타	사과문 게재	정정 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내외일보	3	3						1	2	
	뉴스경남	1	1							1	
	대경일보	6	4		2				2	4	
	대구영남매일	5	3	1	1				1	2	2
	대구일보	3		2	1					3	
	대전일보	1		1							1
	매일신문	1		1						1	
	부산일보	1		1						1	
	새전북신문	1	1								1
	서울일보	2	2							1	1
	세종신문	1			1					1	
	수도권일보	2	2							1	1
	수도일보	2	2							1	1
	시대일보	3	2	1						1	2
	신아일보	1		1							1
	아시아경제	1			1					1	
	아시아일보	1	1								1
	아시아타임즈	2	1	1						2	
	아주경제	2		2							2
	영남일보	2	2						1		1
	완주군민신문	1	1								1
	우리일보	2	1	1					1	1	
	울산매일	1	1								1
	울산신문	1	1						1		
	인천일보	2	2								2
	일간경기	1		1							1
	전국매일신문	2	1	1						1	1
	전남일보	1		1						1	
	전라일보	2	1	1						2	
	전북도민일보	2		2						2	

구분			위반유형				결정내용				
간별	매체명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기고	기타	사과문 게재	정정 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전북일보	1	1							1	
	전북중앙신문	3	3						2	1	
	전주일보	0									
	정읍신문	1			1					1	
	중도일보	2	1	1						1	1
	중부매일	1	1							1	
	중부일보	5	2	3						1	4
	창원일보	1	1						1		
	충남일보	1		1							1
	충북일보	1		1						1	
	충청투데이	1		1						1	
	한남일보	2			2					2	
	한라일보	1		1							1
	함안뉴스	1	1							1	
	현대일보	2	2							2	
	소 계	128	61	44	23	0	0	0	15	75	38
중앙 주간지	뉴스포스트	2		1		1				1	1
	뉴시스아이즈	1		1							1
	시사저널	2		2							2
	주간한국	2		2							2
	소 계	7	0	6	0	1	0	0	0	1	6
지역 주간지	거제중앙신문	1			1					1	
	거창한뉴스	1			1						1
	경산신문	1	1							1	
	경주신문	2	2							1	1
	군산신문	1		1						1	
	군위신문	1	1						1		
	나주신문	1			1					1	
	나주투데이	1	1							1	
	담양신문	1			1				1		

구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별	매체명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기고	기타	사과문 게재	정정 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당진투데이	1			1					1	
	목포시민신문	1		1							1
	반월신문	2			2					2	
	새거제신문	1			1				1		
	서대문신문	1			1					1	
	성주신문	1	1							1	
	시정신문	1	1							1	
	여수신문	2	1	1						2	
	영광신문	2			2				1	1	
	예천신문	1	1						1		
	완주군민신문	1	1							1	
	울산신문	1	1								1
	울진신문	1	1							1	
	음성뉴스	1		1							1
	익산투데이	1		1						1	
	하나로일보	1	1						1		
	이천일보	1	1						1		
	전남저널	1	1							1	
	전남중앙신문	1			1				1		
	정읍뉴스	1	1							1	
	중구신문	1	1							1	
	중부신문	1	1							1	
	한국교육신문	1		1							1
	해피데이고창	1		1						1	
	화성신문	1	1							1	
	소 계	38	19	7	12	0	0	0	8	24	6
월간지	여성조선	1	1							1	
	여성중앙	1	1							1	
	월간조선	1		1							1
	주부생활	1	1							1	

구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별	매체명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기고	기타	사과문 게재	정정 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지방시대	1	1							1	
	소 계	5	4	1	0	0	0	0	0	4	1
뉴스 통신	뉴스1	1		1							1
	연합뉴스	1		1							1
	소 계	2	0	2	0	0	0	0	0	0	2
총 계		206	84	86	35	1	0	0	23	108	75
		100.0%	40.8%	41.7%	17.0%	0.5%	0.0%	0.0%	11.2%	52.4%	36.4%

가. 중앙일간지

제재를 받은 15개 중앙일간지를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지 11개, 경제지 4개이다. 종합지는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3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가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고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가 각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경제지는 한국경제가 3건, 매일경제가 2건, 서울경제, 헤럴드 경제가 각각 1건씩 제재를 받았다.

위반유형은 모두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였다. 전국의 선거판세를 분석하면서 타 매체의 여론조사를 인용하였으나 심의기준에서 요구하는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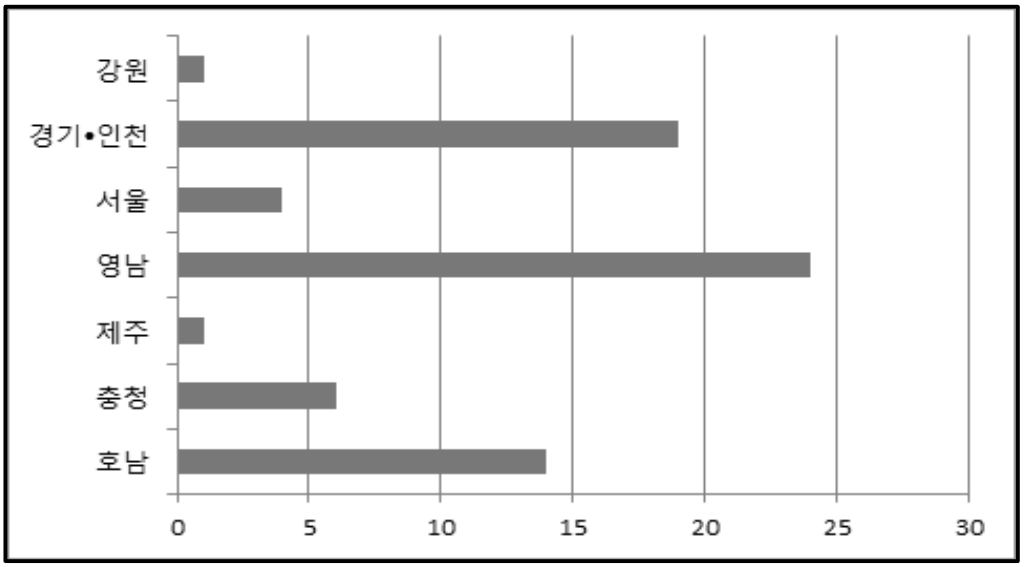
결정내용별로는 주의가 4건, 권고가 22건이다. 종합일간지는 19건의 제재 중 주의가 3건, 권고가 16건이며, 경제지는 주의 1건, 권고 6건이다.

나. 지역일간지

지역일간지는 103개 심의대상 매체 중 67%인 69개매체가 128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는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1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44건(34.5&), 기고 23건(18.0%) 순이다. 결정내용별로는 주의 75건(58.6%), 권고 38건(29.7%), 경고 15건(11.7%) 이었다.

발간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 대구를 포함한 영남지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 경기지역이 19건, 호남 14건, 충청 6건, 서울 4건, 강원 · 제주 각 1건씩을 기록하였다. 경남도지사,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인천시장선거 등 경쟁이 치열하여 주목의 대상이 되는 선거구였던 영남, 경기 · 인천 지역의 선거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발간지역별 위반현황 】



또한 총 11개의 지역일간지가 경고 결정을 받았으며 경기신문, 경향일보, 대경일보, 전북중앙신문은 각각 2차례의 경고 결정을 받았다.

대경일보는 특정 경남도지사 후보자에게 유리한 보도와 기고문을 게재하였으며, 전북중앙신문도 현직 단체장의 홍보성 기사를 연속으로 게재하여 경고 결정을 받았다.

다. 중앙주간지, 지역주간지

중앙주간지는 총 4개의 매체가 7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위반유형별로는 6건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권고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1건은 무속인의 주장을 근거로 판세를 분석한 객관성이 없는 기사로 주의 결정을 받았다.

지역주간지는 34개의 매체가 38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보도가 19건, 기고 12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7건이다. 결정내용별로는 주의가 24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경고 8건, 권고 6건순이다. 군위신문과 예천신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만을 인터뷰하여 경고 결정을 받았고, 이천일보와 하나로 신문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부각하고 경쟁후보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여 경고 결정을 받았다.

라. 월간지, 뉴스통신

월간지는 5개 매체가 각 1건씩 총 5건, 뉴스통신은 2개 매체가 각 1건씩 총 2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월간지 가운데 여성조선은 현직 교육감에 대한 인물부각보도로, 여성중앙은 경기 포천시장과 인천광역시장 등 현직 단체장에 대한 우호적 부각보도로, 지방시대는 충남 태안군수와 경기 평택시장, 전남 순천시장, 서울 중랑구청장의 재임중 성과를 부각하는 보도로, 주부생활은 인천광역시장의 인터뷰를 게재한 데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월간조선은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으로 권고 결정을 받았다.

뉴스통신은 뉴스1과 연합뉴스가 각각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으로 권고 조치되었다.

Ⅲ. 시정요구심의 분석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는 총 20건이다. 처리결과별로는 정정보도문 게재 3건, 경고결정문 게재 1건, 경고 4건, 주의 5건, 권고 2건, 기각이 2건, 취하 3건이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3건 있었으며, 2건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고 1건은 언론사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결정문이 수정되었다.

1. 정정보도문 게재

'제6회 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은 총 3건이었다.

의성문소신문은 2014년 4월 16일자 1면에서, 특정 후보자의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금품 제공 관련 사건이 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의 운동원과는 관련없음 확인", "'외밭에서는 신을 고쳐신지 말라' … 의혹사건 해프닝으로 끝나" 라는 제목과 부제목하에 해당 운동원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의성군수 예비후보인 시정요구인은 이 기사가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단정적인 제목과 부제목으로 인하여 일반 유권자는 금품제공자와 특정 후보자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점, 의성경찰서 담당부서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볼 때 위 심의대상기사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였다.

대경일보는 2014년 5월 16일자 「'막말 파문' 포항시 기초의원 후보, 또(?)」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특정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추가 개소하고 현수막을 두 곳에서 이중으로 게시하는 등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선거사무소 철거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의심받게 된 해당 후보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사실확인결과 해당 후보가 선관위에 이전 신고를 완료한 후 사무소를 이전하여 법적 문제가 없었고, 현수막 이중게시 문제도 1시간가량 중복으로 게시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이 왜곡 보도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문 개제를 결정하였다. 대경일보는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경남도민신문은 2014년 5월 20일자 1면 기사에서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양해영 후보에 대하여 양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7년 까지 2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원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의혹이 있으며, 원장 소유의 건물이 아니면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되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후보자측은 일방적 허위 주장에 근거한 보도임을 이유로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후보자는 국가보조금 불법수령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어린이집이 원장 소유가 아님에도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지정된 것은 예외적으로 영아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였다. 경남도민신문은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정부지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선정이 마무리된 기간과 보건복지부 기준이 시행된 기간이 맞지 않아 해당 시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언론사의 주장이 인용되어 정정보도 결정문이 일부 수정되었다.

2. 경고결정문 게재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경고결정문 게재결정은 1건이었다.

포천신문은 2014년 5월 31일자 1면에서 포천시장 선거 입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포천시장 선거 막판 여론과 판세는? 서장원 VS 최호열 양자 대결 압축」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선거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두 후보의 양자대결구도로 묘사하였다. 이에 포천시장에 입후보한 김창균 후보는 해당보도는 불공정하고 악의적인 보도라며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포천신문은 이미 지난 3월에 유사한 기사를 게재하여 한 차례 경고결정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세분석 기사는 반드시 분석에 부합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근거라고 볼 수 없는 선거에 정통하다고 하는 지역 정가 인사들의 주관적 의견을 근거로 선거 판세가 특정 후보자간 경쟁으로 압축되었다고 단정 보도한 것은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경고결정문 게재를 결정하였다. 포천신문은 이에 대하여 기사 제목 선정은 데스크 고유의 편집권임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3. 경고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경고결정은 총 4건이었다.

포천신문은 2014년 3월 31일자 1면 기사에서, 포천시장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최호열, 김창균 2인임에도 불구하고 김창균 후보의 소개는 누락하면서 「'새누리당 vs 무소속' 구도 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결승선착 무소속 최호열' 등의 표현으로 특정 후보를 부각하였다. 보도에서 누락된 김창균 후보측은 이를 문제삼아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공정성 기준 위반으로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함평천지신문은 2014년 5월 26일자 1면 「함평군수 선거 정책 대결 실종되다」 제하의 기사에서 여야 고양시장 후보를 평가하면서 "각 후보들이 언론사에 보냈거나 보도된 정책공약 발표현황을 보면 안병호 후보가 5월 25일 현재 23건으로 가장 많은 정책공약을 발표한 반면 노두근 후보는 6건의 정책공약만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노두근 후보는 선거공보를 통해 안병호 후보는 7건, 노두근 후보는 12건의 공약을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요구하였고, 언론사측은 해당 보도는 후보들이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보낸 정책발표공약 현황을 조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선거공보에 적시된 공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언론사나 기자에게 전달한 보도자료 수만을 근거로 보도하여 시정요구인이 경쟁후보자보다 정책공약 준비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중부일보는 2014년 5월 16일자 5면, 28일자 4면의 기사에서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강현석 후보와 최성 후보의 고양터미널 화재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을 보도하면서 강 후보에게 불리하고 최 후보에게 유리한 논조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또한 5월 26일자 8면 기사에서도 최성 후보에 대한 검찰고발을 주도했던 인사가 강 후보의 적극적 지지자라고 보도하면서 고발자가 강 후보측과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강 후보측은 이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들이 사실 전달보다 기자의 가치판단이 많이 반영되었고, 객관적 근거라고 볼 수 없는 타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을 이유로 경고를 결정하였다.

우리군민신문은 2014년 5월 26일자 3면에 「손수정 2006년 선거 당시, 유두석 후보에 거액 건낸 사실 증언」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며 전남 장성군수선거에 출마한 유두석 후보자의 과거 금품수수의혹을 보도하였다. 이에 유 후보측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대상 기사가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유 후보측에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반면, 유 후보측에 불리한 증언내용을 눈에 띄게 편집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시정요구인이 손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유 후보측도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경고 결정에 그쳤다.

4. 주의

심의위원회는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총 5건의 주의를 의결했다.

경남투데이는 2014년 2월 19일자 1면 「특화산단 지원확정 권시장 공천 '파란불'」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제목과 내용에서 현직 거제시장에게 유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에 거제시장선거에 출마하는 유승화 예비후보는 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심의를 신청하여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권시장 공천 '파란불'」, 「공천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서는 … 희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등의 표현이 현직시장의 공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한려투데이는 2014년 3월 28일자 1면, 2면 「통영시장선거, 양강구도냐 3강체제냐」 제하의 기사에서 객관적인 자료나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시중의 평가와 여론만을 근거로 판세를 분석하여 '놀라운 것은 강석주 후보가 두 번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강 후보측은 이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공정성, 객관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등을 위반하였음은 인정되지만 독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제목과 부제목은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판 기사에서 여론조사 관련 부분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의 결정에 그쳤다.

충북도지사 선거 경선에 출마한 윤진식 후보는 충청투데이에 2014년 2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게재된 23건의 기사에 대하여, 이시종 현 충북도지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보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이나 흠집내기 등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사과문 게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들이 윤 후보측에 비판적인 점은 인정하였으나, 도정을 책임질 수도 있는 유력한 후보자의 검증 차원에서 언론이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기사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행동', '망발'등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점이나 후보자를 비판한 외부인사 칼럼을 게재한 점 등에 대하여 주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는 2014년 5월 23일자 「[선택 6·4-서울도봉구] 이석기-이동진-조용현」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도봉구청장 후보들의 사진과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장일 후보를 누락하여 보도하였고, 이에 장 후보는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경쟁후보자들이 모두 참여한 공통인터뷰 기사에서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시정요구인을 배제한 것은 피시정요구인이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주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한국일보는 2014년 5월 26일자 14면 「새정치 윤장현 후보, 자신 병원 건물 지하창고 '술방'으로 무단 용도 변경」 제하의 기사에서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후보가 개인 소유의 병원 지하실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2014년 5월 27일자 14면 「광주동구청 윤장현 눈치보기?」 제하의 기사에서는 광주 공무원들이 윤 후보측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윤 후보측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역단체장에 선출될 수도 있는 시정요구인의 도덕성과 준법성 등에 관한 것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안에 해당되어 보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시정요구인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도에 사용

된 “술 방”, “상류층 밀실문화를 흉내 내면서” 등의 표현이 다소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여 주의 결정을 내렸다.

5. 권고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권고결정은 총 2건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경남도민신문이 2014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일련의 보도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고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과장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경남도민신문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보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결과를 근거로 한 분석 기사 등에서 감정이 개입된 제목 등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판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권고를 결정하였다.

수원시민신문은 2014년 4월 11일자 1면, 2면「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눈먼 돈’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수원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직 수원시의회 상임위원장으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이칠재 시정요구인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공적 감시 대상인 수원시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과 관련한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보도한 것은 유권자인 독자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역력해 제보자는 공직선거법위반, 공금횡령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카드대금 명세서와 함께 보도한 것은 비록 보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카드사용내역 모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권고 결정을 내렸다.

6. 기각

후보자의 시정요구 가운데 2건은 기각되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경남매일에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가 게재되었다며 주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일부 여론조사결과와 관련된 기사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의 기사는 시의성 있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보아 시정요구를 기각하였다.

뉴스1은 2014년 4월 24일자「‘당비대납’ 이낙연 측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 제하의 보도에

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당비대납」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언론사의 소명과 예비후보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정요구를 기각하였다.

제 3 부 종 합 평 가

제 1 장 심의위원 평가

제 2 장 결산좌담

제 1 장

심의위원 평가

선거기사 심의기준과 제재에 대한 제언

문 종 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서 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가 끝나면 〈선거기사 심의 백서〉를 발간한다. 각 백서에는 심의위원의 평가와 결산좌담이 실려 있다. 여기에서 자주 논의되는 것들이 첫째, 선거기사 심의제도에 대한 정당성 문제다. 선거기간동안 선거기사를 심의하여 제재하는 것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성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나 언론사의 자율규제에 맡겨야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를 심의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이준웅(2011)은 '잘못된 선거보도는 민주적인 권력구성 과정 자체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선거기사 심의 제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선거기사 심의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배정근(2010)은 심의기준으로 제시된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중립성 등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또는 학문적 합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웅(2012)도 심의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비실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셋째,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제재수단의 실효성 문제다. 현재 공직선거법의 제재수단은 사과문과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밖에 없다. 그런데 사과문 게재는 현재 위헌 제청중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헌재 판결을 미뤄볼 때 위헌의 소지가 높아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과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경고결정문 게재나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공직선거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변형결정으로 언론사가 불이행시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른 언론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배정근, 2010). 이를 위해 '경고문 게재 결정'과 같은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하고 있다(박기동, 2012).

넷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다. 배정근(2010)은 매체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소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3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현재 선거 때마다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조직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도 제안하고 있다.

이런 기존의 논의들 중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선거기사 심의제도의 정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심의기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논의를 수렴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2. 선거기사 심의의 정당성

선출된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민주공화국 하에서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스스로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왜 그가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국민들은 그가 적합한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지배하고, 스스로 대표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 권력의 사유화와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행위의 모든 것들에 대해 국민은 알아야 하고, 권력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직자의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기회와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5. 25. 95헌마105)"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서명 및 날인 운동, 현수막, 어깨띠, 신문 및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 연설, 공공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등 선거운동 방법에 다양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문재완, p.222).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8조는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 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언론의 선거보도 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공정하지 않은 선거보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재완, p.222).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모든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인권은 어떤 권력도 침범할 수 없다. 자유민주공화국 체제에서 국민은 자신의 천부적 인권을 양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 21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자유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복리는 국민 기본권 간의 상호 이해 상충을 조정하고 각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본 조건이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권리들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원리로서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의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공직선거법 제1조에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문재완, p.249 : 93헌가 4).

언론의 선거와 관련된 규제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왜곡되어 제공된다면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할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이 정치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의견을 사회적으로 검증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의 정치적 표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 따라서 정치와 선거에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방해하는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이 국가에게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반면, 국가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 및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을 통제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제8조 3항)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신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에서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특별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제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합당한가가 문제다.

문재완(2008)은 선거에 있어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성 심사기준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는 선거일이라는 시한적 제한을 받는 특수한 상황으로서, 언론보도가 선거후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선거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선거와 관련한 해악은 사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은 정당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문재완, p.250)

이준웅(2011)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의 필요성은 선거보도의 특수한 성격에서 도출된다고 하면서, 잘못된 선거보도는 민주적인 권력 구성과정 자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선거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를 통해 언론의 선거보도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선거보도가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율적 심의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지적, 환기, 공시하는 최소한의 심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준웅과 문재완의 주장처럼 선거는 국민의 자기 지배와 관련된 국민주권 및 민주공화국의 실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가치도 매우 크지만, 동시에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잘못된 선거보도의 해악이 크다. 또한 선거보도와 관련한 해악은 사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고 시간적 긴박성 때문에 기존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를 심의하는 것은 입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기지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선거보도로 인해 초래될 해악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명백하게 크다는 것이 명확할 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거기사 심의내용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3.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불공정성 기준

공직선거법 제8조에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 제3항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지체없이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공직선거법은 제4조 제4항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도록 한 제94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객관적 자료 없이 선거결과 예측을 금지한 제108조,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보도, 사실 왜곡 보도 또는 논평을 금지한 제96조, 제108조 제2항의 정책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제한,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선거보도에 관한 규제를 내용중립규제와 내용규제로 분류할 수 있다[1].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 금지, 제 108조 제2항의 정책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1) 보도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은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 즉 선거법상의 광고 금지, 여론조사 보도 요건 등은 메시지나 사상, 주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선거기사 심의규정 중에서 직접적인 보도내용에 대한 심의가 아닌 내용중립적인 사안에 대한 규제를 내용중립적 규제라고 했다.

결과의 공표제한, 제 108조 제5항의 여론조사 보도 요건은 보도 관점의 공감이나 반감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용 중립적인 것이다. 이런 규정은 보도를 하는 언론기관이나 이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상호 일치도가 높은 명확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심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다만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선거보도에서 이런 규정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가의 여부와 그 규제와 처벌의 합당성이 문제가 될 뿐이다.

문제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심의, 반론보도청구, 허위사실 또는 왜곡 보도,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의 선거보도 내용규제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표현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보도, 보도에서 주장된 것과 대립하는 사실관계의 주장을 보도 요청할 수 있는 반론보도 청구는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선거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규제된다. 문제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심의와 후보자 비방에 관한 내용규제다.

무엇이 공정한 보도인지를 심의할 때 일관된 공정성 위반요건을 적용하기 어렵다. 공정성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공정성 개념에는 '공평성', '올바름'이라는 도덕적 가치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공평한 것이 모두 올바른 것이 아니다. 올바르다고 모두 공평한 것도 아니다. 공평하면서도 올발라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다.

유추할 수 있고, 증거와 비중을 가릴 수 있고, 경쟁적인 생각들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비슷한 사유능력과 판단력을 공유하고,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존중하고 사회의 협력적인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도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견해들 간의 차이로 가치들 간에 합당한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롤즈, p.69). 각 가치들이 서로 다른 기초를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충분한 이성을 갖춘 양심적인 개인이 자유로운 토론 후에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상충적인 합당한 판단들의 일부는 진리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거짓일 수도 있으며, 생각에 따라서는 모두가 거짓일 수도 있다(롤즈, pp.72-73). 공정성 개념의 본질상 보도가 공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상호 합당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강명구(1989)는 뉴스의 공정성을 정확성과 균형성으로 구성된 사실성, 합법성과 윤리성으로 구성된 윤리성, 전체성과 역사성으로 구성된 이데올로기성의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민웅(1996)은 공정성을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독립성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강태영(2004)은 정확성, 질적 양적 균형성, 정보의 적절성, 종합성, 견해 다양성, 불편부당성, 양시양비론 지양을 공정성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모두 공정성을 다양한 하위 개념들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상호 상충하는 다원적 가치의 병존과 인식의 불확실성으로 뉴스 공정성 판단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특히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언론사가 공정한 관찰자로서 보도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보도의 이해 당사자나 수용자들 역시 자신의 가치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언론의 공정성 개념에 입각한 공정성 판단은 또 다른 공정성 판단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특정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복잡하고 서로 상충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 또한 관련된 증거 등 몇몇 고려 점에 있어서 상호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

에 대해서 불일치하여 다른 판단에 도달할 수도 있다.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개념들은 어느 정도 모호하여 기자나 언론사는 상이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기자나 독자들이 증거를 평가하고, 도덕적, 정치적 가치를 형량하는 방식은 그들의 총체적 경험과 지금까지의 전체적 인생경로에 의해 형성되는 만큼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갈래로 분화되는 것이 정상이다[2].

다원적 요소와 가치로 구성된 공정성 개념에서 무엇이 공정한 보도인가를 확정하기보다는 무엇이 불공정한 보도인가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다. 무엇이 불공정한 보도인지를 판단할 때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상호 상충하는 가치들이 함께 공존해야하는 다원적 가치 사회에서 가치가 개입된 부분을 중심으로 불공정성을 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언론보도의 공정성 논의에 있어서 가치를 제외한 사실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사실 보도에 있어서도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복잡하고 서로 상충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사실과 관련된 증거 등 몇몇 고려에 있어서 상호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에 대해서 불일치할 수 있어 여전히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의 공정성에 있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적다. 허위사실이나 과도한 사실 왜곡은 상호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보도라는 데 동의하기 쉽다.

허위사실이나 과도한 사실 왜곡, 또는 보도에서 주장된 것과 대립하는 사실관계 제시 등 보도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명예훼손 침해나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요청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사실과 관련된 권리 침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들만이 권리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허위사실이나 사실왜곡 보도 중 피해자 특정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보도는 될 수 있다. 모든 허위보도가 명예훼손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보도도 피해자 특정이 있어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는 한 언론사 스스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언론사 자체에서도 뉴스의 허위사실 여부를 인지 못할 수도 있고, 인지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묵살할 수도 있다.

선거국면에서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잘못된 불공정한 보도의 해악이 큰 만큼 불공정한 보도를 신속하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 적격이 있든 없든 간에 허위사실 및 왜곡된 사실에 기반한 보도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선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도에서 주장된 것과 대립하는 명확한 다른 사실관계의 주장이 있을 경우, 반론보도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론보도 요청은 편집권 침해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공익성이 매우 높은 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편집권 침해보다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

선거기사 내용규제 중 공정성 심사와 더불어 논란이 되는 것은 후보자 비방에 대한 규정이다. 우리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방이나 욕설 등 모욕적 언사도 타인에 대한 증오나 경멸의 표현으로서 극단적이기는 하나 타인에 대한 평가로서 개인의 견해 중 하나이므로

2) 롤즈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당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원천들을 판단의 부담이라 부른다. 롤즈의 판단의 부담을 초래하는 요소들을 참고하여 뉴스 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롤즈, 1993/1998, pp.68-73).

표현자유의 한 영역이다(박경신, p.126). 언론이 비속어나 욕설 등 저속한 언어를 동원하여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후보자를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언론사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다.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윤리의 문제이지 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이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미국 판례법상 사적이라고 간주되는 일부의 프라이버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면적 공적인사로 분류된다(박용상, p.288). 후보자에 관한 표현에서 언론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 시기라는 특수성으로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못하게 할 정도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비방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비판과 비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비방기사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비방과 비판에 대한 판단에는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심사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규제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심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아무리 저급한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 불쾌해도 그런 언사도 사상과 설명이 불가능한 감정을 전달한다고 보면 보호되어야할 법익이다(박경신, p.137). 예를 들어 친일의 후손에게 "악질 친일분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경우 "악질"이라는 감정과 의견 표현을 들어 비방으로 규제할 것인가 문제다. 이 경우 보도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표현의 대상자 뿐 아니라 심사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선거기사 보도내용에 대한 심사에서 내용중립성 규제는 내용규제보다 상대적으로 심사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쉽고, 그만큼 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적다. 반면에 선거보도 기사의 내용규제는 실증적으로 사실 규명이 명확한 허위보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선거보도 심사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 결과 심의 규정의 적용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표 1〉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기사 보도 규제와 공정성 판단

	내용중립성 규제	내용 규제	
공직선거법 규제 내용	– 제94조 : 방송 · 신문 등에 의한 광고 금지 – 제108조 제5항 : 여론조사 보도 요건 – 제108조의2 : 정책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제한	– 제8조 : 공정성 심의 – 제8조의4 :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제110조 :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 제96조 :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규제의 공정성 시비 여부	내용규제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내용중립성 규제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제8조, 제110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선거보도의 경우 기사에 포함된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나누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 주장이 허위인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명예훼손 적용과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명예훼손적인 기사는 불공정한 기사다. 따라서 정정보도를 신속하게 명하는 것은 타당하다. 비록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는 기사도 허위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명할 필요가 있다.

〈표 2〉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불공정성 기준

분류	사실적 주장				의견		
표현 내용	허위 주장		진실주장		비방 (저속어, 욕설 등)		의견의 불공정성
	적용가능 현행 법률	피해자 특정 불가	사생활 보도	일반적 진실주장	피해자 특정	피해자 특정불가	
불공정성 가능 여부	명예훼손죄		사생활 침해		모욕죄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4. 선거기사 심의 기준과 제재의 명확성

선거 국면이든 아니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언론자유의 근간이다. 그가 자연인이든 언론사와 같은 법인이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과 이데올로기, 윤리와 세계관, 제 사회영역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다원적이면서 때로는 상호 대립적이다. 그러므로 선거 국면은 일종의 이념과 가치관, 정책 대결의 장이다. 정치적 표현이 가장 활발한 공간이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치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자기주장을 근간으로 한다. 모두를 선택할 수 없고 누군가를 선택해야하는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은 근본적으로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계급적 이해관계든, 이념적 편향성에 기반하든 간에 누구나 나름의 정파적 경향성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양한 정파적 경향성은 다양한 정책시장과 사상의 자유시장과의 상호 교합과정에서 공론을 만들고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각 언론사가 정치적 경향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정책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나름의 입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기도 하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언론사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 간의 입장차이가 다르다고 해서 상호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문제는 특정 정파와 동일시하면서 추종하고, 이해를 공유하며, 일관된 정치적 지향점과 가치기준 없이 보도하는데 있다. 일관된 관점과 지향성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 누락함으로써 언론이 지켜야할 기초적 규범도 지키지 않는다(이대근, 2009, p.66). 한국 언

론이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의도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여론을 조작하고 개입하려는 이런 성향으로 인해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자율적 규제를 통하여 언론의 품위를 스스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한국 언론이 외부규제를 불러온 것이다.

현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를 결정하여, 그 게재를 지체없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또한 이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 256조). 이런 공직 선거법 규정을 토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사과문 게재,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권고 또는 주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과 규칙에 기반하여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심의 기본원칙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는 1.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의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 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4.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5.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의도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 심의기준으로 공정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정하고, 세부 심의기준으로 여론조사보도 요건, 인터뷰 및 인용기사 보도, 사진게재, 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재 결정으로는 1. 사과문 게재, 2. 정정보도문 게재, 3. 반론보도문 게재, 4. 경고결정문 게재, 5. 주의사실 게재, 6. 경고, 7. 주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칙과 규정에 따른 최근 몇 년 간의 선거기사 심의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3〉〈표 4〉와 같다. 위반유형으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광고제한, 외부기고, 정책비교 등이고, 제재결정은 사과문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자체심의 위반유형과 결정내용

선거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광고제한	외부기고	정책비교	사과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5회 지선	160	100 (62.5%)	24 (15.0%)	4 (2.5%)	32 (20.0%)	0 (0.0%)	0 (0.0%)	8 (5.0%)	91 (56.9%)	45 (28.1%)	16 (10.0%)
19대 국회	106	62 (57.9%)	13 (12.1%)	15 (14.0%)	16 (15.9%)	0 (0.0%)	4 (3.7%)	0 (0.0%)	11 (10.3%)	58 (54.2%)	33 (30.8%)
18대 대선	46	12 (26.1%)	12 (26.1%)	10 (21.7%)	4 (8.7%)	7 (15.2%)	1 (2.2%)	0 (0.0%)	8 (17.4%)	26 (56.5%)	11 (23.9%)
6회 지선	206	84 (40.8%)	86 (41.7%)	0 (0.0%)	35 (17.0%)	0 (0.0%)	0 (0.0%)	0 (0.0%)	23 (11.2%)	108 (52.4%)	75 (36.4%)

〈표 4〉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 처리 결과

선거	시정요구	처 리 결 과								
		사과문 게재	정정 · 반론 보도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기각	각하	취하
5회 지선	178	0	8	12	91	45	17	4	1	
19대 국회	129	7	3	0	14	58	33	5	1	8
18대 대선	50	1	1	0	8	26	11	1	1	1
6회 지선	226	0	3	1	27	113	77	2	0	3

위반 유형을 보면 내용규제 부문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다. 그 외 다른 위반유형은 모두 내용중립성 위반유형이다. 여론조사보도 요건 미비 위반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규정대로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 관련 기본사항 및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규정위반이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외부기고 규정 위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광고 제한 위반,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를 금지한 정책비교 금지 위반 등은 내용중립성 위반이다. 이런 위반사항들은 명확성을 갖춘 심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내용중립성 위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경고, 주의 또는 권고 수준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선거시기 초기에는 주로 권고를 통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선거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반복될수록 주의, 경고 수준으로 격상해서 제재한 것이다. 문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내용규제다. 보도 내용은 사실과 의견으로 구성되는데 허위사실이나 사실왜곡은 정정보도로, 사실에 대한 상호 다툼은 반론보도 게재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허위사실이나 사실왜곡의 경우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 등 강한 재제조치를 내려 왔다. 문제는 정파적 경향성을 갖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불공정한 보도와 후보자 비방에 대한 제재다. 언론의 노골적인 정파적 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심의 위원들 간에, 그리고 선거시기마다 제재수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각 선거위원회별로 심의 위반 건수나 제재 수위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공정한 선거를 해쳐서는 안 된다. 정치적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도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견해들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들 가치들 간에 상호 상충할 수도 있는 다원적 가치사회에서 언론의 정치적 경향성은 자연스런 현상

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적 경향성을 뉴스의 공정성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가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정파성을 드러낸 불공정한 뉴스보도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보도 공정성에 대한 지적과 환기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 끝난 후 각 언론사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 심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각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를 시민들이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비방에 대한 심의기준도 욕설, 저속한 비어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정파성에 기반한 불공정한 보도 기준을 토대로 심사하고, 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기사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과문 게재 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사과의 정도에 따라 굴욕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사과'의 문구가 포함되는 한 그것이 마음에 없는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자존심에 큰 상처요 치욕임에 다름없으며, '사과문', '진사문', '해명서' 등 어떠한 명목의 것이든 관계없이"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법원명령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헌법재판소 1991.4.1.선고 89헌마160 결정)[3].

헌법재판소는 또한 "사죄광고제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깊이 "사과한다" 하면서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 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 강요하여 외부에 표시하기를 명하는 한편 의사·감정과 맞지 않는 사과라는 도의적 의사까지 광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인 것으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1.4.1.선고 89헌마160 결정)고 판시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볼 때 공직선거법상의 불공정보도에 대한 사과문게재 결정은 위헌의 소지가 거의 명백하다. 따라서 사과문 게재는 삭제되어야 하고 대신 권리 침해사실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결정문 게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있는 경고 결정문 게재 및 주의사실 게재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들 규칙에 있는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심의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마다 심의기준이 달라지거나, 언론사가 그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어떤 기사가 불공정한 기사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 결과 사전 자기검열을 강요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3) 이것은 《여성동아》 1988년 6월호에 "전경환과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김성희 진상 해명—호기심 끌려고 진실 외면했다"라는 기사에 대해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내린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광고를 게재하라는 선고(1989.7.25.선고 88가합31161판결)에 대해, 동아일보가 사죄광고 게재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 심판이다.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심의 및 제재기준은 헌법에서 금지한 언론에 대한 사전 심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재 결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 〈표 5〉과 같지만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표 5〉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

조치 종류	조치 사유
사과문 게재	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인정되는 경우 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정보도문 게재	–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론보도문 게재	–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결정문 게재	–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실 게재	–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	–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과문 게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하여 사과문 게재에 대한 제재를 삭제하고 권리침해 사실 게제,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결정문 게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공정한 보도의 수준에 따라 경고, 주의, 권고,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이나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심의 결과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중립성 선거보도와 내용관련 선거보도로 나누어서 심의기준 및 제재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표 6〉, 〈표 7〉과 같다.

선거 초기에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영향력이 미미한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4]는 권고 수준으로, 후보자에 대한 홍보 또는 광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광고제한 위반, 외부기고 위반, 정책비교 위반은 주의 또는 경고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일이 긴박하여(예를 들면 선거일전 20일전 등 기준을 정하여) 위반하는 경우와 반복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예전에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이 임박해서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결정문이나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4) 여론조사 자체가 비과학적이거나 의도적 질문을 통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려고 시도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실 왜곡에 준하여 경고문 게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기준은 형식적 기준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의 불공정의 정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형식적 차원에서의 기준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판단하고, 2차적으로 내용의 불공정성 정도를 평가하여 제재 수준을 정하면, 좀 더 일관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내용중립성 보도에 대한 제재

위반유형	여론조사 보도 요건 미비	광고제한 위반	외부기고 위반	정책비교 위반
시간적 긴박성이 낮으면서 첫 위반 시	권고	주의	경고	경고
시간적 긴박성 또는 반복 위반	주의	경고	주의 또는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또는 경고 결정문 게재
반복위반과 시간적 긴박성	경고	주의 또는 경고 결정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보도내용의 불공정성 위반 시에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모욕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사실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문 또는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권리 침해는 아니더라도 허위사실이나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와 함께 경고문 결정을 게재하도록 하고, 과도한 정파성으로 인한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고려하여, 공정한 보도에 대한 협조요청을 통해 공정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표 7〉 보도내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제재

분류	사실적 주장				의견		
표현 내용	허위 주장		진실주장		비방 (저속어, 욕설 등)		불공정한 의견 기사
	피해자 특정	피해자 특정 불가	사생활 보도	상반된 진실 중 일면만 보도	피해자 특정	피해자 특정불가	
적용가능 현행 법률	명예훼손죄		사생활 침해		모욕죄		
공정성 판단	불공정 보도	불공정 보도	불공정 보도	불공정 보도			불공정 보도
제재 수준	권리침해 사실 및 정정보도 게재		권리 침해사실 게재	경고문 및 반론보도 게재	권리침해 사실 및 경고문 게재	경고문 게재	불공정 보도에 대한 공정보도 협조 요청

5. 선거기사 심의기준과 제재에 대한 제언

선거는 선택이다. 선택을 위한 정보 없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에 필요한 정보는 왜곡되지 않고 사실대로 보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하게 언론이 독점된 경우 언론의 경향성 보장만큼이나 언론의 공정한 보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클 수 있다. 반면 언론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정보에 접근하기가 더 쉬운 사회에서는 언론보도의 경향성을 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진 정보화 사회에서는 언론의 정치적 경향성을 더 많이 보장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이라는 시한적 제한을 받는 선거 시기 보도의 경우, 잘못된 선거보도가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결과가 너무 크고, 그 해악을 사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선거기사 보도를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거기사 심의제도는 입법적 타당성이 있다.

지금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입법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규정의 명료성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심사규정의 명료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보도 규제를 내용규제와 내용중립성 규제로 나누고, 각각의 심사규정 및 제재수준을 제시했다. 내용중립성 규제는 그 규정과 제재가 명확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제재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는 거의 없다. 반면 내용규제인 선거기사의 공정성 심사는 다차원적 개념과 가치들로 구성된 공정성 개념으로 인해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

내용중립성 규제의 경우 시간적 긴박성과 반복의 정도를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결정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선거기사 내용규제인 경우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었다. 허위사실의 경우 정정보도와 함께 권리침해사실 및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의견으로 인한 불공정한 보도는 경고문 게재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규정을 위해 공직선거법 및 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과문 게재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으로 삭제하고, 대신 권리 침해사실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결정문 게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있는 경고결정문 및 주의사실 게재 결정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 기존의 제재 실효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거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과 제재수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재 결정 등),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 등 주관적 판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중대', '상당', '영향'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중대하고, 상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이 선거기사심의위원들이 선거가 끝난 후 평가에서 심의기준과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이유다.

심의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절감한 사실이다. 심의기준의 일관성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형식적 기준을 설정했다. 위반 기사가 내용중립성 규정 위반인지, 내용규정 위반인지 분류했다. 보도 내용의 불공정 위반의 경우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고,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의견의 경우에는 비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경우에도 현행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진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생활 침해사항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갖는 불공정성의 정도를 2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런 2단계 심의 절차는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매뉴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단계론 역시 심의위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주관적 판단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좀 더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선거의 성격이나 선거기사에 내포된 내용의 질적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선거기사심의 위원들이 갖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 절차나 규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강명구(1994), 한국 저널리즘 이론, 나남

강태영(2004), “텔레비전 보도와 공정성 기준”, 텔레비전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정치세미나, 한국방송학회

문재완(2008), 언론법, 늘봄

박경신(2013), 표현 통신의 자유-이론과 실제, 논형

박기동(2012),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사 심의를 마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사 심의 백서〉

박용상(1998),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배정근(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언”,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선거기사 심의 백서〉

언론중재위원회(2012),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사 심의 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20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기사 심의 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선거기사 심의 백서〉

이대근(2009), “정파성 측정의 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의 정파성〉

이민웅(1996), 한국 TV저널리즘의 이해, 나남

이준웅(2012), “제 18대 대선 선심위를 마치며-선거기사 개념과 심의기준에 관한 소견”,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사 심의 백서〉

이준웅(2011), “선거심의의 정당성과 원칙”,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기사 심의 백서〉

John Rawls(1993),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 역(1998),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제 2 장

결 산 좌 담 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 일 시 : 2014. 6. 23.(월) 17:00

□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참 석 자 명 단	
• 박 기 동(심의위원장, 변호사) • 김 도 윤(부위원장, 전 인터넷선심위 상임위원) • 유 원 옥(공선협 공동대표) • 임 성 규(변호사)	• 김 동 기(변호사) • 문 재 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 종 대(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운영 활동을 마무리하는 좌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선거보도 실태와 심의위원회 운영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심의위원장 : 오늘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마감하면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윤 위원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둘 다 경험해 본 결과 인터넷 선심위가 좀 더 언론사에 대한 제재효과가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기사의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하면 언론사에서는 심의대상이 된 기사를 삭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면의 경우 이미 인쇄가 되어 배포가 되었으니 경고나 주의를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장 :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재조치 효과를 제고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보도는 위원회에서 여러 조치를 내린 후에 예전보다는 많이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원옥 위원 : 위원회에서 언론사에게 경고나 주의를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언론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언론사로 하여금 '함부로 선거기사를 써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는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그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우리가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하여 재발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문종대 위원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언론보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유도하는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언론사에게도 사전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성규 위원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목적에 대하여 논의를 할 때는 징벌주의도 있습니다만 위하주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제재수단이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의나 경고를 하면 선거기사심의제도를

모르던 언론사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향후 재발 방지 등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문재완 위원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설사 다소 불공정한 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의 방향도 기사의 공정성이 애매한 것은 제외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작성된 보도를 찾아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의유형도 객관성을 판단하기 애매한 자체심의보다는 후보자 당사자들이 신청한 시정요구심의 중심으로 위원회가 진행이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기 위원 : 선거기사를 심의하는 제도는 세계에 유례없는 유일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이상과 언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충돌하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의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대부분 중앙일간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심의했던 것들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해당지역의 유권자들이 그 언론의 기사를 보고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지 의문입니다. 그 영향력의 정도가 대단히 미미하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활동도 근거가 박약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이를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일반사람들이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심위 제도 홍보와 함께 심의결과 등도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도 있었으면 합니다.

심의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근 결정된 안건들을 보면 해당 후보 측에서 시정요구를 할 만한 사건인데도 시정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임박하여 캠프 내에서 신청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후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등록 시 부터 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김도윤 위원 : 선관위는 출마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도 직접 선거기사심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체심의보다 시정요구 사안이 많아지면 우리 역할도 외부적으로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장 : 오늘 간담회에서도 선거기사심의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니 이런 점을 선관위 등과 논의해서 개정법안이 가급적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사과문 게재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고 경고결정문 게재 등에 대하여는 법개정이 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하게 명확한 결정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결산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4 부 심의 · 의결 사례

제 1 장 자체심의

제 2 장 시정요구심의

제 1 장

자 체 심 의

1. 경 고

의 결 번 호	2014지선3
언 론 사	(주)울산신문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 11층 (달동, 삼호빌딩) 대표이사 조 희 태
심의대상기사	울산신문 2014년 2월 6일자 9면 「"장성포의 미래, 고래가 그 출발점"」 2014년 2월 7일자 4면 「자연과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 역점 백년대계 초석 다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2014년 2월 6일과 7일 이틀 연속으로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울산광역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울산 남구청장)이 지역 행사에 참가한 모습을 담은 여러 컷의 사진 및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장성포의 미래, 고래가 그 출발점"

▌김두겸 남구청장 인터뷰

(전략) "고래 조각전은 구청장직을 떠나며 마지막까지 챙기고 싶었던 특별한 자리입니다"

6일자로 구청장직을 사임하는 김두겸 청장은 5일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치른 '2014 고래조각 국외 및 국내작가 초대전 개막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고래'를 장생포의 미래를 담보할 아이콘으로 꼽았고, 그 중에서도 '고래 조각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장생포의 미래는 경제적 활성화가 관건인데 고래가 그 출발점이다"며 "그러나 이런 인프라는 하루 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며 말문을 뗐다.

이어 “그래서 고래 생태체험관과 고래박물관을 세웠고, 후속 추진했던 고래마을도 완공을 앞두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조각전은 매년 새로운 작품을 보충해가면서 장생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을 함께 놓아왔다”고 설명했다.

(중략) 김 청장은 “임기 동안 장생포의 부활을 경제적 시각에서 재조망해왔던 그간의 행정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모든 사업이 완수되는 시점에는 장생포가 분명히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 아파트, 호텔 등 인프라 확보도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래조각전을 끝으로 구청장직을 떠나는데 대한 소회도 빼놓지 않았다.

김 청장은 “공식적인 직함으로 갖는 마지막 자리이다보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그러나 종착역이라는 것은 달리보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각오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신문 특집 2014년 2월 8일 목요일 9

“장생포의 미래, 고래가 그 출발점”

자연에 대한 동경과 사랑으로 빚어낸 경이로움

2014년 고래조각 국내외 작가 초대전 개막식

김두겸 남구청장 인터뷰

자연과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 역점
백년대계 초석다져

▌김두겸 남구청장 8년의 기록

불도저, 아이디어뱅크, 고래 박사, 행정의 달인….

김두겸 청장은 민선 3·4기 남구청장으로 재임했던 8년 동안 특유의 뚝심으로 숱한 사업을 성공시키며 무수한 별명을 얻었다. 확신이 있는데도 예산 때문에 사업이 가로막힐 때는 "일단 땅부터 파고 봤다"는 그는 예리한 판단과 억척같은 고집으로 남구의 도시가치를 재창출했고 정주의식을 끌어올려놓았다.(후략)



4 2014년 2월 7일 금요일 특집 울산신문

자연과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 역점 백년대계 초석 다져

김두겸 남구청장 8년의 기록

불도저, 아이디어뱅크, 고래 박사, 행정의 달인…. 김두겸 청장은 민선 3·4기 남구청장으로 재임했던 8년 동안 특유의 뚝심으로 숱한 사업을 성공시키며 무수한 별명을 얻었다. 확신이 있는데도 예산 때문에 사업이 가로막힐 때는 "일단 땅부터 파고 봤다"는 그는 예리한 판단과 억척같은 고집으로 남구의 도시가치를 재창출했고 정주의식을 끌어올려놓았다.

돌고래 수족관과 4D영 입체 영화관, 바닷고기 수족관 등을 갖춘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은 고래를 테마로 한 국적인 유원시설을 타는 등 시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사진은 돌고래 쇼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

울산시장 도전을 위해 지난 직무를 마무리하고 있는 김두겸 남구청장의 퇴임사를 듣고 있다.

문화·체육·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새로운 행정 주구 타 구·군 모범
111건 수상성과 '27억원 인센티브

'전국 최초' 새로운 시도 많았= 하는 사업마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얻었던 그는 늘 새로운 행정을 시도해왔고 이를 타 구·군으로 전파해왔다.

'DK생활기동대'를 신설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복스존 행정서비스의 날'도 함께 운영해 각 동을 순환하면서 문제점이, 없앴어, 자전거 수리, 무료 이·미용 서비스, 무료 건강검진, 임차인 알선 등을 해결해왔다. 또 가가호호를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는 폭넓혀진 주민 수요를 봐야 알으했다. 최초장애 물리치유에 주민 참근이 어려웠던 산업수리도 결국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놓았다. 24시 여가 수지원 공식화 군부대를 건립기에 성취한 결과였다. 선암 호수공원에는 세계에서 제일 처은 종교사설인 안민사, 호수교회, 성 베드로 기도원의 테마생태를 만들어 한국기독원의 인증을 받았고 선암호수공원에서 남산까지 20km 구간에는 솔마루길을 조성했다. 특히 고래를 테마로 한 고래생태체험관과 고래레다이행선은 한국에선 유명세를 얻다.

문화·체육= 울산의 랜드랜인 문화체육분야 발전을 위해 먼저 인프라를 확대했다. 울산체관을 설득해 세운부지 내에 대형 체육관을 건립했고, 야외 테니스장과 남구 국민체육센터도 세웠다. '2007 국제 양궁월드컵'을 유치하고 '주야의 70M가상궁원원'을 개최하는 등 크고 작은 대회도 저년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양궁선수단과 예술원단을 창단해 엘리트 체육의 발판도 마련했다. 도심 주거 밀집지역에는 어울림 공원 꽃밭이장 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울산고등학교내를 3년 연속 우수추석으로 이끌어냈고, 제36회 세계축제협회 총회 피니들에서는 30개국 1,300개의 축제의 개최 2개 분야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휩쓸었다. 수상체구로 구상해온 대회규모 하루에는 수상레저 계류장 조성으로 해양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다.

사회복지= 백년도계 행정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를 손꼽았다. 우선 문수실버 체육관과 선암 호수공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남구복지관을 도산노인복지관으로 개관했다. 부티동 새활촌 프로그램과 노인 연속 일 등 각 동에 경로식당인 노인 복지 관련 행지를 분수영공원으로 통합해 내실화했다. 또 다문화 가정 기반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결혼 이주여성 전통부모 초청, 다문화 한국학교 운영 등을 실하했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립 신정4동 어린이집과 선암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경사지등 100%무상 급식을 실시했다. 남구청 앞에 '영유아프라자' 를 건립해 달별의 부모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역 경제=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정시장·수암시장·여천시장·번거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현대화 사업을 지원했다. 또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태화강 비지의 위한장을 개장했고, 태화강의 특산물인 네지와 생산을 합법화했다. 이와에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지원과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발굴 사업 등으로 전문위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도시건설= 김 청장이 가장 두각을 드러낸 분야가 바로 도시건설이다. 그는 축송의 감이었던 부지면과 여천천을 개복해 물고기가 서식하는 자연형 친환경하으로 만든 주민공간이다. 또 '고래를 테마로 한 도시 재건'을 목표로 추진해왔고, 고래 도시 거점 지역인 장생포에는 고래생태체험관과 고래박물관 건립에 이어 고래문화마을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외함께 자연과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을 병행해왔고 이를 위해 남산 근린공원에는 수변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했다. 삼산동과 무거동 버보사거리 일대 '디지털거리', '구청 앞 먹을거 솔마는 거리' 등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다.

대내외 공신력= 확신을 현실로 만들었던 김 청장은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수상실적을 거두며 행정가로서의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김 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통령상, 여성·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평가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보육시책추진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지방세외수입 기반확충 최우수기관(행정안전부장관상), 지역안전도 평가 1등급 우수기관(소방방재청장 상), 노인일자리 우수 지자체 선정상(행정안전부장관상),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 지방자치 경영혁지수 행상 종합부분 2위(한국공자치연구원), 입고 준공자수평가 1위 등 총 111건의 수상성적과 27억6,300만원의 인센티브 수여 성과를 올렸다.

하주용기자 sah@

의 결 번 호	2014지선4
언 론 사	(주)우리일보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14, 305호 (연수동, 두손브랫슬) 대표이사 김 대 호
심의대상기사	우리일보 2014년 2월 6일자 16면 「인천의 투자유치는 멈추지 않는다」 2014년 2월 10일자 16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child-care)' 책임 보육 실현」 2014년 2월 13일자 16면 「Edu-Care와 함께 인천교육의 찬란한 비상 시작~」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2014년 2월 6일, 10일, 13일 연속으로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인천광역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천의 투자유치는 멈추지 않는다

인천에 대한 투자 가치는 여전히 상한가 행진중

민선5기 출범이후 지난 해 10월까지 인천시가 유치한 주요 기업본사는 코오롱글로벌(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주), 티오케이 첨단재료(주),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주), LG전자 인천캠퍼스, 대한사료(주), 스태츠 칩팩 코리아(주) 등 3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 관심대상이 되고 있으며, 투자유치도 멈춤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10월 30일 인천시와 패션그룹 '형지'는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998년 설립돼 2012년 약 7,3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패션그룹 '형지'는 '패션을 통해 세상에 행복을 전한다'라는 미션을 실현하고 있다. (중략)

오피스 시설에는 ▲패션마케팅연구센터, 신소재연구센터, 한류패션연구센터, 디자이너 협업디자인센터 등 R&D센터 ▲패션스쿨, 리테일전문인력양성스쿨, 섬유패션 MBA스쿨, 대리점 CEO 교육이 진행될 교육시설 ▲ 계열사, 브랜드사업부 등 패션그룹형지의 오피스가 들어서게 된다.

또한 판매시설은 패션브랜드 멀티매장, 콜라보레이션 특별매장, 식당 및 소매점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오피스텔은 임직원이나 바이어들의 휴식공간으로 운영된다.

지난 해 11월 11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 「BMW 서비스 및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바바리안앤코(주)-BMW 그룹 코리아간의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후략)

우리일보







인천의 투자유치는 멈추지 않는다

인천에 대한 투자 가치는 여전히 상한가 행진중

인천기 출범이후 지난 해 10월까지 인천시가 유치한 주요 기업 본사는 코오롱글로벌(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주), 티오케이 첨단재료(주), 엠로 테크놀로지 코리아(주), 디건타 인천캠퍼스, 대한사료(주), 스페코 합격 코리아(주) 등 3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 관심대상이 되고 있으며, 투자유치도 멈춤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10월 30일 인천시와 패션그룹 '형지'는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996년 설립해 2012년 약 7,3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패션그룹 '형지'는 '패션을 통해 세상에 행복을 전한다'는 미션을 실천하고 있다.

'지센탈', '코로커리일 레이디', '엘르보이 키즈룸' 등 어성복 중심시장 최근 '와일드로즈', '노스페이드' 등의 브랜드를 통해 아웃도어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으며, '예작', '본', '탑텐' 등 력브랜 을 보유한 우성I&C를 인수해 남성복 시장에 진출한데 이어 화장품 브랜드 '엘르르' 를 보유한 '어반코 베이직' 도 인수해 '종합패션기업' 의 면모를 갖추게 됐었다.

이 사업은 국내 여성패션산업을 이끌고 있는 형지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녹오패션형지'가 주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인 일본의 'Daiki Oriment(다이키오리엔트)' 사가 함께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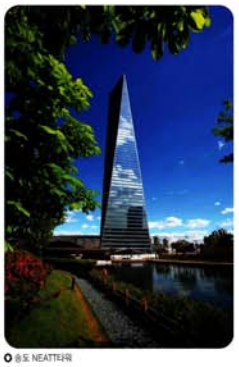
패션그룹형지는 2018년 12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1-2번지 일대 12,501.6㎡(약 3,782평)의 부지에 '사업비 약 800억원을 들여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를 건립한다.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는 오피스텔(지상1층), 판매시설(지상2층) 등으로 구성된다.

오피스 시설에는 ▲패션비즈니스센터, 산소재연구센터, 한류패션연구센터, 디자이너 협업디자인센터 등 R&D센터 ▲패션스쿨, 리허설전문복합공연스쿨, 삼육패션 MBA스쿨, 대리점 CEO 교육이 진행될 교육시설 ▲ 계열사 브랜드사업부 등 패션그룹형지의 오피스가 들어서게 된다.

또한 판매시설은 패션브랜드 멀티매장, 몰리브레이션 퍼블매장, 식당 및 소매점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오피스텔은 임차된 이나 바이레임의 휴식공간으로 운영된다.

지난 해 11월 11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 'BMW 서비스 및 문화센터'건립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녹색성장연구원·(주)BMW 그룹 코리아간의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O 송도 NEATT타워

바이로인천프주는 총 440억원을 투자해 송도지구 첨단산업을 리스트내 13,225㎡ 부지에 연면적 22,480㎡, 지상 4층 규모의 BMW 문화센터와 서비스 차량을고 센터를 함께 건립할 예정이다.

2013년 8월)가 문화센터를 건립해 '인차 빌포 갤로', '갤러랑동 브레이닝 센터', 'BMW 문화공간'이물관·어린이 교통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차량 정비 수요에 맞춰 서비스 센터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 번 투자는 BMW 그룹이 한국이 성장 잠재성을 인정하고 아시아 지역 최초로 'BMW 서비스 및 문화센터'건립에 합작 투자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설립된 BMW 그룹은 2013년 약 80조 20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럭셔리 자동차 제조 글로벌 기업으로 15개국 24개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140개국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BMW, MINI, Rolls-Royce 등 프리미엄 브랜드 4개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계획 예정인 영종지구내 'BMW 그룹 드라이빙센터'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5일에는 송도과학단지에코비즈니스센터)와 송도테마파크 인천광 유치를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송도과학단지에코비즈니스센터 및 홈플러스측은 약 98억 원을 연 사적으로 투자해 2015년 4분기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연면적 약 5만 m²의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된다.

홈플러스 유치로 500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약 32만 명의 관광객 유입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TP 화로프로단지의 동 사업부지 내 건립될 한국프라임 아울렛과 함께 7층구조 쇼핑 엔터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TP 화로프로단지 스트리트몰에 투자할 인천관도 및 제휴등로와 인식제가 될 KAV(Korean Armenian Village) 사업 등과 함께 인천TP 화로프로단지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 본격 시동

지난 해 8월 1일 체결한 '청라 경제자유구역 하나드림타운 사업 추진협약'이 그 동안 외국인투자자 유치 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투자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금년 상반기 중에 투자자를 확정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게 된다.

지난 해 연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하나금융타운이 단순한 대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하나금융그룹의 비전을 담아 그룹 임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인의 중심으로서 하나금융타운을 상징적으로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사업주체인 론칭노하나금융지주의 론칭노하나에셋스는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약 7,300억원을 투자해 24기계에의 규모에 2017년까지 하나금융지주 본사, 금융경영연구소, 통합IT센터, 인재개발원 등 그룹 계열사의 주요 기능을 집적화한 '하나금융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드림타운 조성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시 인천 지역 거주자의 우선 채용 및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를 노력하기로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7년까지 단계별 조성기간 중 상당한 지역경기 부양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고 하나금융지주의 그룹비즈니스 등 주요 앵커시설 이전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지난 해 7월 20일 임해각서 체결을 통해 송도 동북아무역타워(NEATT)에 입주하기로 한 대우인터내셔널도 금년 하반기에 정식 입주할 예정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매출 17.5조원, 자산규모 약 7.5조원의 대형 글로벌기업으로 수출입, 에너지플랜트를 포함한 무역부문과 자원개발부문, 그리고 국내외 제조, 유통부문의 세부분을 운영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입주로 기대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5천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은 2014년 하반기 중 입주를 목표로 2014년 약 1,000명의 직원의 송도근무를 목표로 단계별 입주인력을 확대해 2016년까지 1,500명 규모의 인력이 송도 NEATT타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앞으로 NEATT타워는 1~33층까지는 업무시설로 활용되며, 34~36층은 시도, 언회장, 레지니스, 비즈니스센터 등 복대시설, 37~64층은 호텔, 콘도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2014 투자유치 종합계획' 발표, 최고의 국제도시로 비상
상반기중 하나금융타운 착공, 대우인터내셔널 연내 입주 예정

컨텍센터 필두로 원도심 창조경제, '인천시가 일낸다'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1월 29일 원도심 고용창출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2014년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발표 했다.

교육을 담당할 복합테크론센터도 2020년까지 보임사 발표 기존 전세계 100만여명의 조종사와 정비사 등의 입자리를 일부 담당할 130만평의 한국MRO복합단지, 압력용기 타일링 입자사속기 및 글로벌 물류기업 등 10여개 기업의 투자사와 협력으로 다.

아울러, 에어 현지의 입금상승과 경쟁력화 등으로 아래들을 격어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역 연고기업과 수도권복귀기업을 대상으로 강화 정단 등 신규지정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중점 유치정책을 펀재이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하여 친환경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핵심 기자재 12건의 인천랜드스를 비롯하여 일본 TDK사, 미국 앱프, 삼가로로 투자기업 스마트컴팩트리아 등 세계적 반도체기업을 유치하여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었다.

또한, 셀트리온과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이지노도 도매제산 등을 유치하여 세계적 바이오 메카도시로 급부상하였다.

이미 미국 보잉(Boeing)사와 항공운항훈련센터와 프랫앤휘트니(Pratt & Whitney)사와 항공연진정비센터가 유치됨으로써 인천은 국제공항과 더불어 명실상부 항공산업의 허브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 덕에도 유엔녹색기후기금사무국(GCF)과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세계산기경제협력개발사무처와 유치된 상태로 인천은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소가 어우러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발전가능한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인천시는 투자 관련 인프라를 포함하는 투자유치기본단을 구성해 투리, 도화, 검단신도시, 송도관광단지, 역세권개발, 신정단지 구조고도화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 투자유치업무를 총괄하여 효율성 및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핵심피지역에 산업을 통한 합동설명회 개최와 개별기업 맞춤형 투자지원을 병행하여 선택적 집중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KOTRA, 산업통상자원부, 각급 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해을 추진하고, 투자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계사업을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와 지합 연계되는 원도심지역에 많은 투자유치의 산업체인, 새로운 개념의 투자유치 전략을 통하여 원도심을 살리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도시' 로 도약하는데 온힘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박영재 기자


O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O BMW 그룹 드라이빙센터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child-care)’ 책임 보육 실현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보육과 교육부담이다. 인천시는 아이들은 우리들의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민선5기 핵심사업(3-care)중 하나를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child-care)’으로 정하고 시민이 행복한 책임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2012년에는 만4세 무상보육료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등 앞선 보육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로부터 ‘보육정책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보육 선도도시를 실현하여왔다.

2014년도에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보육정책 방향을 3-childcare로 선정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3-childcare’예산으로 보육인프라 구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의 분야에 총 4,768억원의 보육예산을 편성하였다.

보육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보육비전을 설정하고 무상보육료의 전계층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할 것이다.(후략)


우리얼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child-care)’ 책임 보육 실현

3-chilecare 추진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 교사는 자긍심

2013년 보육정책 최우수기관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쑥쑥 늘어나는 보육지원, 2014년 4,768억 편성

보육지원, 2014년도 4,768억 편성

영·유아 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서창 라온나

아이키우기 좋은 인천 (함께키움)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보육

Edu-Care와 함께 인천교육의 찬란한 비상 시작~

Edu-care, 유학오는 교육특별시를 조성한다

흔히 인천의 학력은 전국 최하위라고 한다. 이로 인해 우수학생이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교육경쟁력이 정체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시는 학력을 높이고 수능꼴찌의 오명을 씻기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후 교육을 3대 핵심 정책중 하나로 설정하고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지원, 송도글로벌캠퍼스 뉴욕주립대·조지메이슨대·유타대 개교,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 포스코자사고 설립,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등 다각도로 힘쓴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며 인천이 변하고 있다.(후략)



우리일보

Edu-Care 와 함께 인천 교육의 찬란한 비상 시작~

Edu-care, 유학오는 교육특별시를 조성한다

▶ 전국 학력 수준 꼴찌에서 찬란한 비상

▶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국제교육도시 인천 조성

현모인천(賢母仁遷)·유학(遊學)오는 교육특별시, 인천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유학 오는 국제교육도시 인천 조성

송도글로벌캠퍼스

포스코자사고

채드윅국제학교

의 결 번 호	2014지선5
언 론 사	(주)전북중앙신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5 (서노송동, 전북중앙) 대표이사 이창승
심의대상기사	전북중앙신문 2014년 2월 5일자 15면 「탄소산업 집적화-탄소섬유 출시 '탄소도시'로 자리매김」 2014년 2월 12일자 16면 「전통자산 잘꿰어 '관광객 1천만시대' 보배로 키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2014년 2월 5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도지사)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전북 전주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터뷰내용 및 인물사진,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탄소산업 부흥 '남다른 열정' 치하

송하진 전주시장이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에 공을 세운 공로로 한국탄소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종래 한국탄소학회장 등 회원 일행은 4일 오후2시 전주시청을 찾아 송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후략)



전북중앙신문

2014년 02월 05일 15면 (인물)

화제

한국탄소학회 송하진 전주시장 감사패 전해

탄소산업 부흥 '남다른 열정' 치하

송하진 전주시장이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에 공을 세운 공로로 한국탄소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종래 한국탄소학회장 등 회원 일행은 4일 오후2시 전주시청을 찾아 송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남다른 열정으로 대한민국 탄소산업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 뒤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 고강도 탄소섬유 양산 등 한국의 위상을 대내외로 알리는 등 탄소산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탄소산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명실상부 탄소산업 도시로 자리잡게 됐다"며 "탄소산업으로 전라북도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석창기자 jsc@

4일 전주시청을 방문한 한국탄소학회 박종래 회장이 대한민국 최초,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 고강도 탄소섬유 양산 등 탄소산업 발전에 헌식적으로 노력한 송하진 전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20.9×12.8)cm

탄소산업 집적화-탄소섬유 출시 '탄소도시'로 자리매김

전라북도 문화경제산업의 중심지 전주시의 경쟁력이 백년 먹거리 산업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주가 신 중흥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기저에 최첨단 신소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산업의 선점 집적화가 있다. 탄소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제효과가 이제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과 전주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백년 먹거리 초석을 다지고 있는 탄소산업에 대한 전망과 기대효과를 짚어봤다.(후략)



전북융영신문

탄소산업 집적화-탄소섬유 출시 '탄소도시'로 자리매김

전주시가 탄소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은 창업보육센터 개소식.

전라북도 문화경제산업의 중심지 전주시의 경쟁력이 백년 먹거리 산업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주가 신 중흥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기저에 최첨단 신소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산업의 선점 집적화가 있다.

탄소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제효과가 이제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과 전주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백년 먹거리 초석을 다지고 있는 탄소산업에 대한 전망과 기대효과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세계 3번째 탄소섬유 '탠섬' 생산
영국-인도시장 개척 교두보 확보
2020년까지 6,000명 일자리 창출

탄소산업은 미래 100년 먹거리 신소재개발 산업이다. 국내외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최첨단산업이다. 전주시가 이를 선점해 탄소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에 탄소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 지자체 주도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세계 3번째로 탄소섬유 '탠섬' 생산에 성공하고, 전주에 대기업 효성공장 준공에 이어 GS칼텍스 유치, 국내 굴지의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주)와 탄소복합재 자동차부품생산 협약도 체결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말 탄소복합재 응용제품 세일즈를 위해 세계 유력 수출시장을 두드리고 나섰다. 영국과 인도시장 개척에 나서 교두보를 확보했다.

▲탄소산업 미래 부가가치

전주시는 일찌감치 미래 경제를 이끌 신소재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의 부품소재산업 연구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섬유'를 찾아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007년 국내 최초로 160억원을 투입해 연산 150톤 규모의 '탄소섬유생산 PILOT'를 완공하고, 이듬해 효성과 탄소섬유 생산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3년여만에 독자적인 기술로 탄소섬유 생산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주시는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투자기업에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탄소산업 이끌 핵심 인프라 구축 완료

전주시 탄소산업의 핵심적 강점 요인 중 하나는 관련 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미 탄소산업을 이끌 인프라를 모두 갖췄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현재 국내 탄소산업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밸리 조성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앞으로 탄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인력양성 시스템 유치 구축에도 성공했다. 탄소산업과 연계해 창업보육의 요람이 될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해서 지난 12일 국내 최초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가 전주에서 문을 열었다. 창업보육센터는 2016년 이후 신규 고용인원 150명, 매출액 150억 규모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전주산 탄소섬유 '탠섬' 세계 3번째 출시

21세기 최고의 황금알 사업인 전주 탄소밸리 조성과 관련된 첫 개발품인 '탠섬(TANSOME)'이 지난 5월 세상에 첫 공개됐다. 전 세계적으로 3번째, 국내에서는 최초이다.

㈜효성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T700급 전주산 탄소섬유 브랜드 '탠섬(TANSOME)'이 공개됨에 따라 이미 국제 및 국내 탄소섬유 시장내에서의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세계화를 향한 전주시와 ㈜효성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는 계기가 됐다. ㈜효성은 지난 5월 전주공장 준공을 계기로 올해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연산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를 생산한다. 2020년까지는 1조2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생산규모를 연 1만4000톤 규모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으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시장은 앞으로 국산 탄소섬유로의 대체가 가능하게 됐다. 연 2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탄소섬유는 항공우주 분야는 물론 스포츠 · 레저, 자동차 · 풍력, 건설 등 수많은 산업분야에서 무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중간재와 복합재료까지 합친다면 무려 100조원이 넘는 국내외 시장이 기다린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전북권역 시너지 효과

전주시는 탄소산업과 관련해 2020년까지 입주 대기업 최소 2개사 이상, 핵심 중소기업 100여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6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이다.

(주)효성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1000여명의 고용 및 3조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 대기업 규모의 투자가 기대되는 GS칼텍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도 공동 연구개발이 끝나는 2~3년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복합재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의 전주 이전도 자연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전주로 이전해 공장을 가동 중인 탄소관련 기업은 현재 12개사이다. 탄소 관련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2만명의 일자리창출과 핵심 중소기업 200여개를 육성해 지역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43
언 론 사	(주)경북도민일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58-1 (해도동) 대표이사 윤 두 영
심의대상기사	경북도민일보 2014년 2월 13자 19면 「한심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친박' 논란」 제하의 기사(사설)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와 관련하여 특정정당의 공천문제를 지적하면서 상대후보인 현직 서울시장에 대해 '좌파시장', '변태적 후보단일화' 등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표현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사내용이 특정 정당의 관점에서 경쟁당사자인 현직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5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7조(정치적 중립성)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심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친박' 논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정몽준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 이혜훈 전 의원은 11일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전직 국무총리와 현역 6선 의원과 여성까지 참여한 '빅매치'가 성사되면 민주당 박원순 현 시장을 물리칠 경쟁력있는 후보를 배출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니다.(중략)

새누리당에 필요한 것은 '좌파시장'인 박원순 시장을 이길 후보를 뽑는 것이다. 박 시장은 3년 전 자력으로 시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 아니다. 지지율 5%에 불과했지만 안철수씨가 양보하고 지지하는 바람에 야권후보로 서울시장 자리에 올랐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3년 전의 왜곡된 야권 서울시장후보 선출 과정을 시정하고 바로 잡는 선거다. 새누리당이 '박심(朴心)' 논란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후략)



한심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친박' 논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정몽준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 이혜훈 전 의원은 11일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전직 국무총리와 현역 6선 의원과 여성까지 참여한 '빅매치'가 성사되면 민주당 박원순 현 시장을 물리칠 경쟁력있는 후보를 배출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니다.

그러나 김황식-정몽준 빅매치를 둘러싸고 '친박'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 의원이 반 박근혜 노선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당내 친박 의원들이 똘똘 뭉쳐 김 전 총리를 지원할 것이라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11일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친박은 안 좋은 표현"이라는 것이다. 우려했던 계파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따지고 보면 김황식, 정몽준 모두 친박이 아니다. 김 전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국무총리로 지명된 친 MB(이명박)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정 의원과 다를 게 없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내 친박들이 정 의원 대신 김 전 총리를 지지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청와대 의중을 특별히 전달받았다는 식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암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다.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대통령이 후보 경선에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준 새누리당내 친박의 행태가 요구된다.

새누리당에 필요한 것은 '좌파시장'인 박원순 시장을 이길 후보를 뽑는 것이다. 박 시장은 3년 전 자력으로 시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 아니다. 지지율 5%에 불과했지만 안철수씨가 양보하고 지지하는 바람에 야권후보로 서울시장 자리에 올랐다. 이번 서울시장선거는 3년 전의 왜곡된 야권 서울시장후보 선출 과정을 시정하고 바로 잡는 선거다. 새누리당이 '박심(朴心)' 논란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서울시장에 김황식, 정몽준 가운데 누가 되어도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누가 새누리당 후보로 시장에 당선돼도 사사건건 시비걸고, 국무회의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박원순 시장보다 나을 것이다. 국정운영도 훨씬 원만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에서 전직 총리와 6선 의원이 정면 승부하는 것만으로도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다. 국민적 관심 속에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의 경쟁력 또한 크게 상승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심(朴心)' 논란으로 자기 살을 깎아 먹을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배출하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선거는 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시험대다. '친박'이 진정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친박 후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누가 좌파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3년 전 박원순-안철수의 변태적 후보단일화를 기억하기 바란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44
언 론 사	주식회사 경향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대표이사 현 재 오
심의대상기사	경향일보 2014년 2월 11일자 2면 「지·덕·예·도 갖춘 '황은성 안성시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경기 안성시장)을 "지·덕·예·도 갖춘 '황은성 안성시장'" 등의 제목으로 미화하고 재임 중 시정성과 등을 우호적으로 기술한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덕·예 도 갖춘 '황은성 안성시장'

황은성 시장은 참 곧고 바른 사람, 탐독하여야 할 좋은 분이며 자상하면서도 엄한분이다.

시민들을 대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목민심서에 나오는 여섯 가지 조항으로 시민을 내 가족과 식구처럼 대하며, 웃어르신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고 예의를 갖추어 영접하는 사람이다.(중략)

지방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부패적 행태를 강력히 척결하는데 앞장섰으며 목민관으로서 행동의 표상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선조라고도 볼 수 있다.

칼럼

지·덕·예·도 갖춘 '황은성 안성시장'



한범용 국장

황은성 시장은 참곧고 바른사람, 탐독하여야할 좋은분이며 자상하면서도 엄한분이다.

시민들을 대할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목민심서에 나오는 여섯가지 조항으로 시민을 내가족과 식구처럼 대하며, 웃어르신을 보면 그냥지나치는 경우가 없고 예의을 갖추어 영접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요즘시대 보기드문 목민관이며 지자체 수령이다. 2월에 접어들면서 황은성 시장은 각 읍·면·동 초두순시를 연기하고 현행에 다급한 조류인플루엔자A1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하루 25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어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오직 살기좋은 안성건설,시민이 만족하는 안성건설에 피로에 지친 자신의 몸을 이끌고 귀가 하였을 때는 새벽녘,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 자녀들과 이야기 조차 못하는 귀로에 선지 오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지만 자녀들은 아빠의 고생을 귀감삼아 늦은 시간대 까지 아빠을 기다리며 어깨와 찜질로 피로에 지친 시장의 팔,다리가 되어 주기 때문에 황은성 시장은 더한층 기운을 차려 실전전문가로 돌입한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지방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부패적 행태를 강력히 척결하는데 앞장섰으며 목민관으로서 행동의 표상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선조라고도 볼 수 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45
언 론 사	전남중앙신문협동조합 전남 목포시 청호로 116 (산정동, 2층) 대표이사 김 성 두
심의대상기사	전남중앙신문 2014년 2월 11일자 15면 「"시간을 거슬러 목포를 생각하다 – 대성동 재개발사업"」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목포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전 시의원(목포시의회 의장)의 재임 중 목포 대성동 재개발사업에 기울인 개인적인 노력, 성과 등을 본인의 기고를 통해 우호적으로 기술한 칼럼을 게재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간을 거슬러 목포를 생각한다 – 대성동 재개발사업"

주민직접방문, 타지 거주자 우편발송으로 주민 97% 동의 이끌어 내
대성동 재개발 추진에 힘 보태, 원도심 변화에 설레는 기대

시간을 거슬러 목포를 생각한다.

지난 90년대 목포지역에 공유수면 매립으로 '하당'이 생기면서 신도심이라는 명칭이 자연스레 시민들에게 회자되었고, 이때부터 원도심의 공동화는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인구와 중심상권이 자연스레 밀집지역으로 이동되고, 새로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필자는 1995년 33살의 최연소 시의원으로 목포시의회에 입성하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대성지구 재개발, 구)가톨릭병원 랜드마크사업, 산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중앙하이츠 주차장 확보, 서남방송에서 본옥동 도로개설, 북항 완충녹지 추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원도심 공동화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특히, 96년 5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대성동 공동주택건설은 IMF 사태로 인한 대한주택공사의 유보 결정과 재개발 반대 주민들에 의해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표류하게 되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나 간담회 없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포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는 다르게 주민오해로 사업반대에 부딪혀 시에서도 한때 손을 놨던 적이 있었다.

필자는 피난민촌이라 불리는 거주지역과 대성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 사업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향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설문지와 동의서를 들고, 재개발에 반대했던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타지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편 서한문 발송과 전화통화를 통해 공동주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간곡히 설득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2005년 주민설문조사 결과 97%의 주민동의를 얻게 됨으로써, 2006년 2월에 목포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비 1,65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시행 협약 체결식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필자가 직접 주민 97% 동의를 얻고, 대한주택공사와 많은 노력 끝에 전국 최초 단일 1,400여 세대 공동주택 건설로 추진된 사업 중 하나로 무산될 뻔 했던 사업이 갈등도 있었지만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변화되어 가는 현장을 보노라면 뿌듯하고, 또한 대성지구 아파트가 완공되면 침체된 원도심에 많은 변화와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설레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많은 사람이 정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필자는 생각하며, 그 사람들이 거주할 주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인구정책과 주거환경 변화로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도심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성지구 공동주택 사업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개발과 집행이 중요하며, 더불어 원도심에 수산물 특성화 공단 설치, 평화광장 같은 공간조성, 해양관광사업 육성 및 내·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연안여객선 터미널 주변의 특산품 특구 조성 등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후략)

특별기고

"시간을 거슬러 목포를 생각한다 - 대성동 재개발사업"



장복성
전 목포시의회 의장

주민 직접방문, 타지 거주자 우편발송으로 주민 97% 동의 이끌어 내
대성동 재개발 추진에 힘 보태, 원도심 변화에 설레는 기대

시간을 거슬러 목포를 생각한다.

지난 90년대 목포지역에 공유수면 매립으로 '해당'이 생기면서 신도심이라는 명칭이 자연스레 시민들에게 회자되었고, 이때부터 원도심의 공동화는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인구와 중심상권이 자연스레 밀집지역으로 이동되고, 새로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필자는 1995년 10월의 최연소 시의원으로 목포시의회에 입성하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대성지구 재개발, 구가톨릭병원 랜드마크사업, 산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중앙하이츠 주차장 확보, 서남방송에서 본옥동 도로개설, 북항 완충녹지 추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원도심 공동화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특히, 9년 5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대성동 공동주택건설은 IMF 사태로 인한 대한주택공사의 유보 결정과 재개발 반대 주민들에 의해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표류하게 되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나 간담회 없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포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는 다르게 주민오해로 사업반대에 부딪혀 시에서도 한때 손을 놓던 적이 있었다.

필자는 피난민촌이라 불리는 거주지역과 대성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 사업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향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설문지와 동의서를 들고, 재개발에 반대했던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타지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편 서한문 발송과 전화통화를 통해 공동주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간곡히 설득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2005년 주민설문조사 결과 97%의 주민동의를 얻게 됨으로써, 2006년 2월에 목포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비 1,65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시행 협약 체결식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필자가 직접 주민 97% 동의를 얻고, 대한주택공사와 많은 노력 끝에 전국 최초 단일 1,400여 세대 공동주택 건설로 추진된 사업 중 하나로 무산될 뻔 했던 사업이 갈등도 있었지만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변화되어 가는 현장을 보노라면 뿌듯하고, 또한 대성지구 아파트가 완공되면 침체된 원도심에 많은 변화와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설레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많은 사람이 정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필자는 생각하며, 그 사람들이 거주할 주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인구정책과 주거환경 변화로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도심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성지구 공동주택 사업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개발과 집행이 중요하며, 더불어 원도심에 수산물 특성화 공단 설치, 평화광장 같은 공간조성, 해양관광사업 육성 및 내·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연안여객선 터미널 주변의 특산품 특구 조성 등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은 정주여건의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 지역에 사람이 모여드는 다양한 도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생산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특색을 살리는 틈새사업의 지역특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자는 목포에서 자란 토박이이며, 서민의 대변자로 일해 온 젊은 일꾼으로 위낙 젊은 나이에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3차례 의장직 수행으로 어려움과 고충도 많았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주춧돌을 놓는 소중한 경험은 목포의 미래발전의 자산으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의 입장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해며, 원도심에서 생활하면서 부대 낀 시간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생활정치 경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어떤 자리에 있던 원도심과 나아가 목포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46
언 론 사	(주)영남일보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신천동) 대표이사 손 인 락
심의대상기사	영남일보 2014년 2월 11일자 3면 「국가기관 · 민자유치 성과에 안동권씨 지지… 權 군수 독주 분위기」 제하의 보도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權 군수 독주 분위기'라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제목을 사용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국가기관 · 민자유치 성과에 안동권씨 지지… 權 군수 독주 분위기

영양군수 선거는 출마 후보자가 적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권영택 현군수(52)의 독주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변수가 있다면 새누리당 공천이다. 새누리당 텃밭이어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당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양자, 삼자, 다자 선거구도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권 군수가 공천을 받을 경우 무리없이 3선이 점쳐진다.

권 군수의 3선 고지 점령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이상용 경북도의원(55), 이갑형 전 양양경찰서장(60), 윤철남 남해화학 경북북부지사장(54) 등이다.

안동권씨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권 군수는 재임 기간 젖소개량사업소 등 국가기관을 유치해 미래성장동력의 디딤돌을 놓았다.

또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 가꾸기에 나섰으며, 남영양농공단지 조성과 일월지구 생약단지, 석보지구 휴타운 조성 등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권 군수의 3선가도에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조명되고 있는 후보는 이 도의원이다.

기초의원과 경북도의원 재선에 각각 성공하면서 다진 풍부한 의정 경험이 가장 큰 장점이다.(후략)


영남일보 6·4 지방선거 누가 뛰나 (끝) 2014년 2월 11일 화요일 3

국가기관·민자 유치 성과에 안동권씨 지지…權 군수 독주 분위기

■ 영양군수

영양군수 선거는 출마 후보자가 적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권영택 현 군수(52)의 독주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변수가 있다면 새누리당 공천이다. 새누리당 텃밭이어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당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양자, 삼자, 다자 선거구도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권 군수가 공천을 받을 경우 무리없이 3선이 점쳐진다.

권영택 / 이상용 / 이갑형 / 윤철남

권 군수 3선 가도에 李 도의원 대항마 부상
새누리 공천이 변수될 듯

의 결 번 호	2014지선48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구영남매일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71(지저동) 대표이사 최 종 탁
심의대상기사	대구영남매일 2014년 2월 12일자 2면 「"포토카툰으로 감각적 소통 시도"」 2014년 2월 13일자 2면 「주성영후보, (사)담수회 방문 인터뷰 담은 포토카툰 공개」 2014년 2월 14일자 1면 「주성영 대구시장 예비후보 포토카툰 '별그대'편 공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구광역시장)와 관련, 특정 후보자가 SNS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제작한 포토카툰을 연속적으로 게재하여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포토카툰으로 감각적 소통 시도"

주성영 대구시장 후보 '토끼와 늑대' 공개

주성영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자신의 현장정책투어 중 발생한 내용을 담은 '주성영의 포토카툰'을 공개했다. 주 후보는 이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주성영의 포토카툰 1화 '토끼와 늑대'편을 공개했다.

주 후보가 지난 10일 칠성시장 방문 중 시장 초입에 대형식자재마트가 들어서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토끼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평화로운 들판에 늑대가 나타나면 안 되죠"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현장사진에 말풍선을 붙여 만든 이 포토카툰은 '재치있다'는 평가와 함께 대구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신선한 선거운동 방법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후략)


새누리당 대구시장예비후보 주성영의 포토카툰

①토끼와 늑대

주성영 ㅂ

토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평화로운 들판에 늑대가 오면 안 되죠.

칠성시장에 대형 식자재 마트가 들어오는데 막아주세요!

2월 10일 칠성시장 현장정책투어 중

"포토카툰으로 감각적 소통 시도"

주성영 대구시장 후보 '토끼와 늑대' 공개

주성영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자신의 현장정책투어 중 발생한 내용을 담은 '주성영의 포토카툰'을 공개했다. 주 후보는 이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주성영의 포토카툰 1화 '토끼와 늑대'편을 공개했다.

주 후보가 지난 10일 칠성시장 방문 중 시장 초입에 대형식자재마트가 들어서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토끼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평화로운 들판에 늑대가 나타나면 안 되죠."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현장사진에 말풍선을 붙여 만든 이 포토카툰은 '재치있다'는 평가와 함께 대구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신선한 선거운동 방법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포토카툰은 지난해 미국프로야구(MLB) 류현진의 돌풍 때 네티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주 후보측은 이날 1편 '토끼와 늑대'에 이어 11일 경영자협회 방문을 다룬 2편 '롭좀한 성영씨'도 함께 공개했다.

주성영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네티즌들과 보다 부드럽고 감각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시도다. 선거일 전까지 계속해서 주성영의 포토카툰으로 주요정책 및 현장스케치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성영 후보는 11일 오전 대구경영자협회 총회에 참석했고, 오후 김대현 전 시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가 서문시장 화재 소식을 접하고 바로 화재현장으로 달려갔다. 주 후보는 "최근 대구에서 잇단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방재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yskim684@hanmail.net

주성영 후보, (사)담수회 방문 인터뷰 담은 포토카툰 공개

주성영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17, 18대 국회의원)가 12일 현장정책투어로 (사)담수회를 방문, 대구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노인공경 등 윤리를 바로 세우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배영식 전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고, 이어 북부정류장 방문 등 광폭행보를 이어갔다.(후략)


주성영 후보, (사)담수회 방문
인터뷰 담은 포토카툰 공개

주성영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17, 18대 국회의원)가 12일 현장정책투어로 (사)담수회를 방문, 대구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노인공경 등 윤리를 바로 세우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배영식 전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고, 이어 북부정류장 방문 등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한편 주 후보는 전날 공개한 '주성영의 포토카툰'이 네티즌 및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과 관련해 "심제로는 유쾌하고, 부드러운 남자인데 외부에는 강한 이미지로만 알려져 있다는 캠프 내부 조언에 따라 작은 시도를 한 것인데 예트게들 봐주서 무척 고맙다."며 "앞으로도 사람냄새 나는 뒷얘기와 주요공약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성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담수회 현장정책투어 도중 생긴 방송인터뷰 모습을 담은 포토카툰 3화 '초보뉴스(이상화 때문에)'를 공개했다.

3. 초보뉴스(이상화 때문에)

시작하시죠!

너무 길어서 짧게 다시 한번씩...다 !!!

2월 12일 오전 담수회 현장정책투어 도중에

김경식 기자 yskim684@hanmail.net

주성영 대구시장 예비후보 포토카툰 '별그대' 편 공개

주성영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현장정책투어로 대구화물운송협회를 방문, '운수종사자가 행복한 대구(3차 파워공약)'를 설명하고 큰 박수를 받았다.(후략)


주성영 대구시장 예비후보
포토카툰 '별그대' 편 공개

주성영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현장정책투어로 대구화물운송협회를 방문, '운수종사자가 행복한 대구(3차 파워공약)'를 설명하고 큰 박수를 받았다.

오후에는 조원진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찾아 "조 의원과 함께 대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축사를 했고, 이어 대명동 계명대학교에서 열리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워크숍에 참가해 '스마트시티 구축(2차 파워공약)'을 설명하고 전문가들로부터 구체적인 조언을 들었다.

한편 주 후보는 이날 '주성영의 포토카툰' 4화 '별그대 공간이동(대구-파리)편'을 발표했다.

점심 때 자신의 주요공약 대상인 경상감영공원을 방문했는데 이를 인기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이 공간이동을 하는 것과 연관시켜 경상감영을 루브르박물관식으로 복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재치있게 표현한 내용이다.

④ 별그대 공간이동 (대구-파리)편

여기가 영남의 심장 경상감영이 있던 자리입니다.

4년 내에 '대구의 루브르박물관' 경상감영으로 바뀝니다.

제 ○○ 공클하시면 1월 20일 2차 파워공약 참조하세요~.

2월 13일 현장정책투어 도중 정식 경상감영에 들러

김경식 기자 yskim684@hanmail.net

의 결 번 호	2014지선58
언 론 사	(주)경기신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744번길 3 (연무동, 경기신문) 대표이사 박 세 호
심의대상기사	경기신문 2014년 2월 12일자 24면 「광교컨벤션센터 건립 14년 표류 종지부 수원 단독 추진 '국제회의도시' 거듭난다」 2014년 2월 13일자 24면 「역동적 시정 시민 웃음꽃 결실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 착착」 2014년 2월 17일자 5면 「"현장에서답찾는다"…새벽부터 밤까지 '시민 곁으로'」 2014년 2월 19일자 24면 「고양시 창조성장 미래도시로 거듭나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수원시장, 경기 양주시장, 경기 고양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광교컨벤션센터 건립 14년 표류 종지부 수원 단독 추진 '국제회의도시' 거듭난다

道·경기도시공사와 사업 이관 협약
市, 관련 업무 맡아 2017년 준공

국제규모 대회 유치 경험 풍성
수원화성 등 문화인프라 완비
마이스 산업 최적 경쟁력 갖춰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도 가속화

IT 등 지역산업 중심 특화상품 개발
인지도 향상·고용창출 등 경제효과

광교컨벤션 사업 주체 수원시 일원화… 건립 본격화

지난 2004년 6월 사업결정 이후 3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10월 첫삽을 뜬 명품도시 '광교신도시'.

경기도의 경기도청 이전 계획 철회와 초등학교 부족, 사설연구소 건립 중단사태 등 그동안 광교신도시가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에 걸림돌도 많았다.

광교신도시 대다수 부지가 속해있는 수원시와 일부 용인시를 포함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다.

광교컨벤션사업 역시 수원시와 경기도, 정부 간 의견 차이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아픔을 겪었다.

11일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컨벤션 사업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데 완전히 합의하면서 사업주체의 일원화로 본격적인 컨벤션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도권 남부지역 대표도시를 뛰어넘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컨벤션사업 단독추진 합의부터 수원시가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하는 그날까지의 과정을 내다본다. (후략)



24 | 특 집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경기신문

■ 광교컨벤션 사업 주체 수원시 일원화… 건립 본격화

지난 2004년 6월 사업결정 이후 3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10월 착공을 한 명품도시 '광교신도시'. 경기도와 경기도청 이전 계획 철회와 초등학교 부족, 사설연구소 건립 중단사태 등 그동안 광교신도시가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에 걸림돌도 많았다.

광교신도시 대다수 부지가 속해있는 수원시와 일부 용인시를 포함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다.

광교컨벤션사업 역시 수원시와 경기도, 정부 간 의견 차이로 협상소송까지 진행되는 아픔을 겪었다.

11일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컨벤션사업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건립하는데 완전히 합의하면서 사업추체의 일원화로 본격적인 컨벤션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도권 남부지역 대표도시를 뛰어넘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컨벤션사업 단독추진 합의부터 수원시가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하는 그날까지의 과정을 내다본다. (편집자 주)

광교컨벤션센터 건립 14년 표류 종지부
수원 단독 추진 '국제회의도시' 거듭난다

인터뷰 염 태 영 수원시장

마이스 산업도시 도약 계기 마련

"그동안의 난항은 오늘같은 성과를 이룰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여기고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1일 광교만남센터에서 열린 '광교 컨벤션센터 건립 정상화를 위한 협약 체결식'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그동안 어려움던 점은 120만 수원시민이 기뻐하는 광교 컨벤션센터라는 목표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산고의 과정이었다"라며 "수원의 미아를 살짝우고 수원 미래의 핵심적인 부분 창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컨벤션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실제 수원시는 R&D 농생명산업, 태크노파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산업 지원 및 글로벌 기업의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형성, 지역산업과 동반성장 가능성도 높아 전문테마 중심의 회의 및 행사 유치에 중점을 둔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수원시를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이기도 하다.

염 시장은 "수원에서 컨벤션 시설 부족으로 전시사업과 중·대형 회의의 개최가 어려웠지만 광교 컨벤션 센터 건립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경기남부권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전체와 국제회의산업은 경제적 효과가 크다.

실제 국제회의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이 2011년 2,953$로 일반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인 1천 400불의 약 2배에 달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관광, 숙박업체, 항공운송, 식음료업 등 관련 산업과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롯해 수원의 국제도시로써의 인지도 제고, 도시 홍보 및 평판 제고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배급가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MICE산업의 최적지, 수원

수원시는 광교컨벤션센터 건립추진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 발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불리는 MICE산업에 적극 투자해 수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계획이다.

'생태교통 수원2013'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수원국제그린포럼', '2016 수원방문의 해' 추진, 2017년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대회 유치' 신청 등 이미 수원시는 지역적상에 맞는 국제규모 대회 유치 경험을 풍성하게 갖고 있어 국제회의도시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과 분당선을 비롯해 2017년 완공예정인 지하철 신분당선, 수인선, 노면전차 등 교통망과 컨벤션을 중심으로 전시장, 호텔, 쇼핑센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돼 MICE산업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터전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비롯해 인근 지역의 에버랜드와 민속촌, SK아트리움과 현대아이파크마을은, 국립농어업인지대협관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도 완비될 예정이다.

시는 경기남부권의 산업적 특성을 담은 IT융복합산업, 자세대반도체 및 소프트웨어와 지능형로봇산업, 해양레저산업 등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한 마이스 특화상품을 개발중이다. /정재훈기자 jh2@

道·경기도시공사와 사업 이관 협약
市, 완전 업무 맡아 2017년 준공

국제규모 대회 유치 경험 풍성
수원화성 등 문화인프라 완비
마이스 산업 최적 경쟁력 갖춰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도 가속화

IT 등 지역산업 중심 특화상품 개발
인지도 향상·고용창출 등 경제효과

또한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는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과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통부부한 관광자원이 있는 도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삼성전자 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IT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특화, 농생명 R&D 등 수원의 장점과 특징을 살린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컨벤션센터만 건립되면 수원시는 100만 이상 특례도시의 장점과 함께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참가자들의 소비액이 일반 관광객의 2배 이상인

역동적 시정 시민 웃음꽃 결실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 착착

다양한 교육 투자 학업성취도 향상올 4년제
경동대 · 예원예술대 개교 평생학습센터 등
교육인프라 구축

지난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개관
섬유클러스터 구축 기업도시 박차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다양한 공연
일자리 확충 등 삶의 질 향상 기여
녹지벨트 · 자전거도로 · 둘레길 확대
품격있는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

전철 7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진행
교외선 재개통 · 국지도 39호선 추진
교통중심지로 道북부 발전 원동력

양주시 교육 · 기업 · 문화복지도시 구현 전략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민선5기 양주시가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이르렀다. 시는 그동안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도시를 3대 전략목표로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들을 거두고 올해 시정방침을 '소통과 배려로 함께 여는 양주시정'으로 정해 매력적인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 한다. 그동안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오며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했던 민선5기 양주시정의 행보와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 건설을 위한 올 한 해 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후략)


24 특집 2014년 2월 1일 목요일 경기신문

역동적 시정 시민 웃음꽃 결실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 착착

양주시 교육·기업·문화복지도시 구현 전략

및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

다양한 교육 투자 학업성취도 향상
올 4년제 경동대·예원예술대 개교
평생학습센터 등 교육인프라 구축

지난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개관
섬유클러스터 구축 기업도시 박차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다양한 공연
일자리 확충 등 삶의 질 향상 기여
녹지벨트·자전거도로·둘레길 확대
품격있는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

전철 7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진행
교외선 재개통·국지도 39호선 추진
교통중심지로 道북부 발전 원동력

“현장에서 답 찾는다”… 새벽부터 밤까지 ‘시민 곁으로’

우만동에서 환경미화원과 하루 시작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아파트 방문
아줌마들 사이에서 연예인급 인기 확인

세류1동서 ‘좋은시장 열린대화’ 개최
여성예비군과의 간담회 · 화상회의 가져
수원시 통합방위시스템 직접 시연

오원춘 살인사건 충격 남아있는 지동순찰
폐가 난립 등 충격… “매월 한번씩 점검”
방범순찰대원 손 잡으며 하루 일정 마감

염태영 수원시장 1일 동행취재

팔달구 우만동 효성사거리 근처의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밤 11시 방범순찰대원들과의 저녁식사로 막을 내렸다.

염태영 시장의 하루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마무리하는 현장 행정의 본보기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13일, 16시간 동안 염태영 시장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가 추구하는 미래 수원의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후략)


경기신문 2014년 2월 17일 월요일 특집 5

염태영 수원시장 1일 동행취재

“현장에서 답 찾는다”… 새벽부터 밤까지 ‘시민 곁으로’

고양시 창조성장 미래도시로 거듭나다

고양 3년간 미래도시로 성장

신한류 관광산업 등 발빠른 대응 결실
킨텍스, 아시아 5위권 전시면적 확보
굵직한 대형 마이스행사 유치 성공도
미매각부지, 시설 구축에 행정력 집중

브랜드관광상품 38개 업체 직접 참여
52종 상표등록 248개 품목 개발 완료
우수 의료인프라 활용 관광환자 유치
아쿠아스튜디오, 2억6천만원 매출 올려

고양시가 지난해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조성장개발국을 신설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창조성장 미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 면에서 많은 잠재력을 지닌 MICE 산업, 신한류관광산업, 첨단지식산업에 일찌감치 주목하고 있는 고양시의 발빠른 대응의 결실로 평가된다.

최근 3년간 고양시 산업규모의 질적·양적 측면의 많은 변화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 ▲K-pop 아레나공연장 건립 확정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 조성 ▲특1급 호텔인 엠블호텔 개관 ▲고양원마운트 개장 ▲고양 아쿠아리움 건설 등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글로벌 인프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조성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최성 시장은 "다양한 최첨단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도시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풍부한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지역경제도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후략)


24 특집 경기신문

고양시 창조성장 미래도시로 거듭나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62
언 론 사	(주)전북중앙신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5 (서노송동, 전북중앙) 대표이사 이 창 승
심의대상기사	전북중앙신문 2014년 2월 17일자 16면 「노후산단 확바꾸고 천사마을 조성… 도시가 되살아 난다」 2014년 2월 19일자 16면 「"사랑-낭만-흥이 있는 남원으로 오세요"」 2014년 2월 26일자 16면 「건강-문화-어르신 섬김 우수 '삶의 질' 쑥~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도지사, 전북남원지사)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노후산단 확 바꾸고 천사마을 조성…
도시가 되살아난다

공동체 유지속 고유자산 활용 도시개발
아트폴리스 도시재생으로 도시 디자인
노송동 천사마을 도시재생 거점센터 마련
중앙시장 만원의 행복-영화거리 등 조성

송하진 시장 인터뷰
"주민참여 한국형 도시재생 추진"

"주민참여 한국형 도시재생, 대한민국 도시재생 선도적 모델로 키워나가겠다." 송하진 시장은 전주가 도시재생 선도적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 이 같이 배경을 설명하고 "지역 내 보존자산을 활용한 환경 문화 경제적 재생의 성과"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전주시의 도시재생이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것은 주민참여 입체적 도시재생 방식 추진과 주민, 행정, 전문가가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대표적 사례로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도심 속 주민 거주 한옥밀집지역의 특화된 지역자산을 전통문화와 아트폴리스를 융합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며 재생을 추진, 현재 연간 국내외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었다"며 "이는 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로 평가받으면서 벤치마킹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송 시장은 특히 "최근 도시재생이 재개발 재건축의 새로운 도시발전 대안으로 정부 핵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천사마을가꾸기(정부 R&D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등 도시재생 기반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선도도시 위상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시장은 "전주는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주도하게 될 도시재생거점센터를 핵심으로 전라감영 복원과 덕진공원 전통정원화사업 추진 등 도시의

남·북에 도시재생 파급 거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도심 주거환경정비와 마을 만들기, 해피하우스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 중심 도시재생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쇄광고인문

굿모닝 전북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16

노후산단 확 바꾸고 천사마을 조성… 도시가 되살아난다

“사랑-낭만-흥이 있는 남원으로 오세요”

“사랑·낭만·흥이 넘치는 남원의 매력에 푹 빠져 보세요!”. 남원시는 ‘2014 지리산권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의 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승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이며 영호남 지역에 자리 잡은 지리산권 7개 시군(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이 모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진행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후략)



인쇄광고인문

굿모닝 전북

남원 '지리산권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박차 16

“사랑-낭만-흥이 있는 남원으로 오세요”

건강–문화–어르신 섬김 우수 '삶의 질' 쑥~쑥

의사–병상수 많고
비만–흡연율 낮아
건강도시 1위 선정

시민공감 정책 추진
문화자원–향유 높아
문화지수 5위 눈길

고령자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두각
노인 가장 우대받아

송하진 시장 인터뷰

"윤택한 주민 삶위해 최선"

(전략) "민선 4~5기 전주시의 질적 성장이 각 분야 지표에서 '살기 좋은 도시 전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분야별 지속적인 시책 추진의 성과라고 봅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최근 사회의 질(SQ) 지표의 전주시 전국 최상위 랭크를 비롯해 문화, 복지, 건강, 생활 등의 분야에서 전주시가 질적 성장을 통해서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그동안의 시책추진 노력을 설명했다.

송 시장은 "행정의 본질이 결국에는 시민들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민선 4~5기 동안 전주시정의 기본적인 핵심 과제를 삶의 질 정책에 두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이를 통해 전국 최고의 건강도시, 어르신이 우대 받는 도시, 자원봉사도시, 도서관도시 등의 전주시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러한 분야별 성과들이 모여 전주시가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도시가 되고, 삶의 질 부분 전국 우수도시가 됐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 체감형 정책과 부문별 사회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500만 관광객이 드는 한옥마을 관광지와 탄소산업을 일궈낸 저력으로 전주시는 이제 삶의 질과 더불어 사람과 돈(경제)이 모이는 새로운 변화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굿모닝 전북

전주시 살기좋은 도시 가속도

건강-문화-어르신 섬김 우수 '삶의 질' 쑥~쑥

의 결 번 호	2014지선78
언 론 사	(주)경기신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대표이사 이 상 원
심의대상기사	경기신문 2014년 3월 4일자 14면 「"시민 모두가 100세 누리는 행복한 안양"」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안양시장)와 관련하여 현직 단체장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 '명예욕'도 '권력욕'도 '물욕'도 없는 지자체장. '희망'을 주는 시장…" 등의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후보자를 미화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민 모두가 100세 누리는 행복한 안양"

■ 인터뷰 최대호 안양시장

'명예욕'도 '권력욕'도 '물욕'도 없는 지자체장. '희망'을 주는 시장이 대한민국에서도 존재한다. 바로 최대호 안양시장이다. 최 시장은 최근 4년간의 급여 4억여원을 지역사회 어려운 학생들의 후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아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이렇듯 '희망'을 주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만나 앞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들어봤다.(후략)



경기신문

"시민 모두가 100세 누리는 행복한 안양"

인터뷰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건강 프로젝트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총력

'명예욕'도 '권력욕'도 '물욕'도 없는 지자체장. '희망'을 주는 시장이 대한민국에서도 존재한다. 바로 최대호 안양시장이다. 최 시장은 최근 4년간의 급여 4억여원을 지역사회 어려운 학생들의 후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아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이렇듯 '희망'을 주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만나 앞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들어봤다.

'희망'을 주는 시장이라고 불리는데 어떠냐고 묻자 최 시장은 "희망이 주는 시장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으로서 당연한 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웃음 날렸다.

최 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민 모두가 건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몸이 아프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우선 건강한 도시가 돼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건강 100세를 누리는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시책과 사업 도입시 '시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건강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도 비책이 있었다.

"이미 우리시는 과거 굴뚝산업에서 스마트콘텐츠산업으로 도시구조를 탈바꿈하는 '스마트창조도시 안양' 비전을 선포하고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웹처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효과가 큰 우수기업들이 우리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어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는 말이 있다.

교육 분야에 대해 최 시장에게 물었다.

"창조적인 미래인재 육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최 시장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유치원과 초·중학교 전학년까지 확대 실시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시장은 안양시의 문화예술·체육과 관련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 놓았다.

"지난해 예술공원 내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전문도서관인 '안양파빌리온'을 개관한 데 이어 올해 3월에 갑중앙박물관을 개관해 안양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국 최초이자 최고인 '공공예술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욱이 시민이 구단주인 FC안양의 약진도 확신하고 있죠."

/안양=이동훈기자 Leedh@

의 결 번 호	2014지선84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경신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41 대표이사 우 성 대
심의대상기사	대경일보 2014년 3월 5일자 19면 사설「박승호 시장의 8년간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도지사)에 출마하는 전 지자체장(경북 포항시장)의 재직기간 중 성과와 행정능력을 부각하고 지지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승호 시장의 8년간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난달 17일, 포항시장 3선을 포기하고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5일에는 퇴임식을 갖고 8년 동안 재임했던 시장직에서 물러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박승호 시장의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포항운하 준공식과 포항시의 모태였던 영일군의 출범 10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공연과 수상퍼레이드를 포항운하 일원에서 퇴임을 앞두고 거행했다. 포항운하 준공에 큰 역할을 했던 LH공사와 포항운하 건설에 300억 원을 지원한 포스코에 감사를 표하며, 최종영 대구·경북지역본장과 이정식 포항제철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영일군 출범 100주을 기념해 영일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상은 전 영일군수 등 역대 군수를 비롯한 생존 원로 등 7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1914년 3월 1일 흥해군과 청하군·연일군·장기군이 통합해 영일군으로 새롭게 출범한지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군을 상징하는 '4색 시루떡'을 53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절단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3월 3일,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기를 4개월 앞두고 먼저 떠나게 돼서 무척 아쉽다"며 "이번 결정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한 출발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포항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 해준 덕분이다."이라며 2,000여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날 박시장은 "경북의 1/5에 해당하고 대도시 특례에 적용받는 포항이 그동안 경상북도 23개시·군의 하나로 1/23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쉽다."고 말하면서 "도지사가 되면 경북 전체 인구의 1/3이 넘는 120만이 살고 있는 동남권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도지사 후보로서의 소신도 밝혔다.

그리고 "노선확정이 된 영일만대교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무척 아쉽다."면서 "오늘부터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김재홍 부시장님과 7월부터 취임하는 새시장님을 중심으로 더 나은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영일대 해수욕장 개선,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339억 원을 조성했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대구에 포항학사 건립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7층 규모의 포항학사를 건립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면학의 길을 열어 주었다.

지난 8년 동안 박승호 시장은 전직 시장이 이룰 수 없었던 굵직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포항시의 지형도를 변화시켰다. 포항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포항시를 위해 헌신한 8년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社 說

박승호 시장의 8년간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난달 17일, 포항시장 3선을 포기하고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5일에는 퇴임식을 갖고 8년 동안 재임했던 시장 직에서 물러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박승호 시장의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포항운하 준공식과 포항시의 모태였던 영일군의 출범 10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공연과 수상퍼레이드를 포항운하 일원에서 퇴임을 앞두고 거행했다. 포항운하 준공에 큰 역할을 했던 LH공사와 포항운하 건설에 300억 원을 지원한 포스코에 감사를 표하며, 최종영 대구 · 경북지역본장과 이정식 포항제철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영일군 출범 100주년을 기념해 영일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상은 전 영일군수 등 역대 군수를 비롯한 생존 원로 등 7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1914년 3월 1일 흥해군과 청하군, 연일군, 장기군이 통합해 영일군으로 새롭게 출범한 지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군을 상징하는 '4색 시루떡'을 53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절단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3월 3일,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기를 4개월 앞두고 먼저 떠나게 돼서 무척 아쉽다."며"이번 결정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한 출발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포항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 해준 덕분이다."이라며 2000여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날 박 시장은"경북의 1/5에 해당하고 대도시 특례에 적용 받는 포항이 그동안 경상북도 23개 시 · 군의 하나로 1/23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쉽다"고 말하면서 "도지사가 되면 경북 전체 인구의 1/3이 넘는 120만이 살고 있는 동남권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도지사 후보로서의 소신도 밝혔다.

그리고"노선확정이 된 영일만대교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무척 아쉽다."면서 "오늘부터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김재홍 부시장님과 7월부터 취임하는 새 시장님을 중심으로 더 나은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영일대 해수욕장 개선,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339억 원을 조성했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대구에 포항학사 건립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7층 규모의 포항학사를 건립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면학의 길을 열어 주었다.

지난 8년 동안 박승호 시장은 전직 시장이 이룰 수 없었던, 굵직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포항시의 지형도를 변화시켰다. 포항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포항시를 위해 헌신한 8년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06
언 론 사	창원일보(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169번길 15, 803호 (레이크펄스빌딩) 대표이사 임 수 창
심의대상기사	창원일보 2014년 3월 3일자 1면 「홍준표 지사, 또 정부와 불협화음」 2014년 3월 4일자 1면 「"홍준표 지사 '거짓말 퍼레이드' 중단" 요구」 2014년 3월 5일자 1면 「홍준표 '경남도청 마산이전' 공약 논란 재점화」 2014년 3월 7일자 1면 「박완수 "윗선과 교감 … 메시지 받았다"」 2014년 3월 7일자 7면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출마 포기하라」 2014년 3월 10일자 2면 「박완수 '두 바퀴 민생투어' 마치고 '朴心' 업기」 15면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부메랑' … 이젠 어떻게 할 건가」 2014년 3월 17일자 2면 「홍준표 두얼굴 진주의료원 폐업 마산의료원 확장」 15면 「박완수의 '경남 평양사무소' 에거는 기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남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 경쟁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론기회 등을 제공하지 않은 비판적인 기사 및 칼럼을 여러 날 동안 보도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홍준표 지사, 또 정부와 불협화음

洪 "서부청사로 리모델링 … 복지부 반대하면 투입국비 반환"
복지부 "국회 국정조사 결과 존중 · 공공의료 시설 활용 바람직"
박완수 측 "대한민국 정부 부인 · 무시 양자택일…거짓말 우롱"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또 다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활용방안을 놓고 경남도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후략)


진주의료원 활용 놓고 경남도 - 복지부 '따로 국밥'

홍준표 지사, 또 정부와 불협화음

洪 "서부청사로 리모델링…복지부 반대하면 투입국비 반환"
복지부 "국회 국정조사 결과 존중·공공의료시설 활용 바람직"
박완수 측 "대한민국 정부 부인·무시 양자택일…거짓말 우롱"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또 다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활용방안을 놓고 경남도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가 지난달 27일 진주시를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에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달 진주에서 서부권 개발본부 문을 연데 이어 서부청사 건립 준비단계에 와 있다"며 "서부청사를 신축할 것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할 것지를 용역 중이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그러나 서부청사를 신축하면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남부내륙철도 KTX 사업과 항공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해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없다"며 "서부청사를 조기 개청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해 12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송년기자 간담회에서 "진주의료원 매각을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와 충돌하지 않고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진주의료원의 공공시설 활용방안을 제시 바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나서 의료원 건물을 병원 등으로 매각하고 서부청사 등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이 같은 홍 지사 입장과 달리 진주의료원을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렵다는 견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주당 김광익 국회의원이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매각하는 대신 공공시설(도청 제2청사 등)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재출해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진주의료원 활용방안과 관련해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에 진주의료원 매각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구'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진주의료원 시설은 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을 존중해 서부경남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담당자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회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복지부가 반대입장을 내자 지난달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서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광우 기자

"홍준표 지사 거짓말 퍼레이드 중단" 요구

박완수 후보측, 연일 논평 · 기자회견 통해 조목조목 반박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박완수 전 창원시장측이 시·군 순방을 계속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최근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짓말 퍼레이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도민들의 판단이 경선의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후략)


"홍준표 지사 '거짓말 퍼레이드' 중단" 요구

박완수 후보측, 연일 논평·기자회견 통해 조목조목 반박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박완수 전 창원시장측이 시·군 순방을 계속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최근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짓말 퍼레이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도민들의 판단이 경선의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측은 지난 2일 대변인 논평과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말과 거짓말로 유명한 홍 지사의 '입'은 시·군을 옮겨가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며 "관권선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홍 지사와 시·군 순방이 거짓말로 점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측은 홍 지사가 지난달 28일 김해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청 마산 이전 공약은 박완수 전 창원시장 자신이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나에게 덮어씌우려 한다'고 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도청 마산 이전은 홍 지사가 지난 2012년 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내놓은 공약이다.

박 후보측은 "후보가 한 번도 공공청사 이전 그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고, 단지 도청 마산 이전을 포함한 공공청사 이전은 실현 가능성과 적법성, 효율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창원과 김해를 잇는 비용만 5대 개념에 대해서도 박 후보가 원칙에 있을 때 반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도의원들의 반대로 홍 지사가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청 서부청사 개청 역시 서민 공공의료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공공청사 이전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박 후보측은 강조했다.

박 후보측은 3일 '홍준표 지사는 이상을 꿈꾸리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준표 지사가 또 다시 막말과 거짓말로 도지사로서의 '어른스러움'을 기대하는 새누리당과 도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며 사과와 함께 진정성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홍 지사의 김해 순방 때 나온 "말이 안되면서 시비를 거니"라는 '말 발언'과 관련, "홍 지사가 탑승에 실수가 많고 상하이 급행 중심말이 문제를 일으키는 본인 책은 없고 있지만 이러한 발언은 정치인으로서의 도덕도 아니고 도지사 경선을 치루고 있는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난했다.

홍 지사는 김해 순방에 앞서 창원시를 순방하면서 기자실에서 "선거는 대립적인 상태에서 하지만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은 "말씀이 대선출마 운운하시는 분이 지방자치의 시장감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공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드리는 것 일뿐 아니라 도지사로 만들어준 도민들의 품격 또한 떨어드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윤수 기자
kc@changwonilbo.com

창원 제조업체들 "엔화 경제에 부정적 영향" ▶ 16면

홍준표 '경남도청 마산이전' 공약 논란 재점화

洪 "박완수 창원시장이 극렬히 반대해 추진할 수 없었다"
朴 "책임전가할 것 아니라, 입장변경 사과 · 거짓말 중단해야"

홍준표 경남지사의 '도청 마산 이전' 공약 불이행 책임을 놓고 홍 지사와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합을 벌이는 박완수 전 창원시장 사이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보궐선거 당시 이 공약을 나섰던 홍 지사가 최근 공약 불이행을 박 후보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자, 박후보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후략)


홍준표 '경남도청 마산이전' 공약 논란 재점화

洪 "박완수 창원시장이 극렬히 반대해 추진할 수 없었다"

朴 "책임전가할 것 아니라, 입장변경 사과·거짓말 중단해야"

홍준표 경남지사의 '도청 마산 이전' 공약 불이행 책임을 놓고 홍 지사와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합을 벌이는 박완수 전 창원시장 사이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보궐선거 당시 이 공약을 내걸었던 홍 지사가 최근 공약 불이행을 박 후보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자, 박 후보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17개월만에 경남도지사 새누리당 공천을 놓고 리턴매치를 벌게 됐다.

홍 지사는 2012년 말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경남도청을 옛 마산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뜰출 카드'는 통합 창원시, 특히 마산권 주민들의 민심을 흔들어 놓았고 홍 지사에게 기우는 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지난달 28일 창원시 순방 때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도청 마산이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진심(박완수) 창원시장이 극렬히 반대해 추진할 수 없었다"며 "이제 반대했던 시장이 그만둬 지사가 되면 새로운 시장과 검토하겠다"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도청을 마산으로 옮기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지만 박완수 후보가 반기를 들면서 지금껏 제대로 진척이 없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이었다. /홍종원 기자

… 2면에 이어짐

박완수 "윗선과 교감…메시지 받았다"

기자회견서 새누리당 핵심 의중 · 도지사 출마 배경 설명
어르신 평생 돌봄 '행복장수 4대 프로젝트' 추진 공약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에 나선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6일 "윗선과 교감이 이뤄져 출마를 결심했고 윗선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후략)


박완수 "윗선과 교감…메시지 받았다"

기자회견서 새누리당 핵심 의중·도지사 출마 배경 설명

어르신 평생 돌봄 '행복장수 4대 프로젝트' 추진 공약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출마 포기하라”

보건노조 · 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책위원회, 불출마 촉구 기자 회견

“도지사 15개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불통 · 갈등만 남겼다” 주장

새누리당에 “홍준표 도지사를 경남지사 후보에서 배제하라”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홍준표 지사 경남도지사 후보 불출마 촉구’ 기자 회견을 열고 출마 포기를 촉구했다.(후략)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출마 포기하라”

보건노조-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책위원회, 불출마 촉구 기자 회견

“도지사 15개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불통·갈등만 남겼다” 주장

새누리당에 “홍준표 도지사를 경남지사 후보에서 배제하라” 요구

박완수 ‘두 바퀴 민생투어’ 마치고 ‘朴心’ 업기

홍 지사 약점 파고들며 공세수위 높여 ‘차별화’ 시도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한 판 대결을 앞둔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1라운드 탐색전을 마쳤다.

홍 지사는 현역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이란 논란 속에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18개 시·군을 바쁘게 한 바퀴 돌았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월 22일 출마선언에 이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8일까지 민생 탐방에 나서 도내를 두 바퀴 돌았다.(후략)



박완수 ‘두 바퀴 민생투어’ 마치고 ‘朴心’ 업기

홍 지사 약점 파고들며 공세수위 높여 ‘차별화’ 시도

[정종민 칼럼]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부메랑'… 이젠 어떻게 할 건가

홍준표 경남지사가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속전속결로 강행한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홍 지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현재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와 관련한 정국 기류가 재선을 노리는 홍 지사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후략)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부메랑'…이젠 어떻게 할 건가

정종민 칼럼

진주의료원 폐업 홍준표 두 얼굴 마산의료원 확장

마산의료원 본관 2016년 8월 준공… 300 병상 들어서
일각 "진주·마산 두 지역 표 의식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속전속결로 강제 폐업된 반면, 같은 도립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은 대규모 확장에 들어가 홍준표 도정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후략)


진주의료원 폐업 홍준표 두 얼굴 마산의료원 확장

[정종민 칼럼]

박완수의 '경남 평양사무소'에 거는 기대

경상남도가 북한에 '평양사무소'를 설치한다?

한 경남도지사 후보가 공약한 사항이지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다.

지난 11일 박완수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 발전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대안으로 '경남도 평양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많지만, 본격적인 남북교류 시대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후략)


박완수의 '경남 평양사무소'에 거는 기대

정종민 칼럼

의 결 번 호	2014지선108
언 론 사	(주)대경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41 대표이사 우 성 대
심의대상기사	대경일보 2014년 3월 10일자 3면 「박승호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색 제안」 2014년 3월 11일자 3면 「박승호 도지사 예비후보, 경주서 기자회견」 2014년 3월 12일자 3면 「박승호 도지사 예비후보 "영천 비상 시키겠다"」 2014년 3월 13일자 3면 「"경북 농가소득 매월 1백만원 늘리겠다"」 2014년 3월 17일자 1면 「"김관용 일병 구하기 눈물겹다"」 「지방선거 앞두고 '박정희 마케팅' 눈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기사를 경쟁 후보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횟수로 부각하여 보도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승호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색 제안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자"

박승호〈사진 · 전포항시장〉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9일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자"는 이색적인 공약을 제안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후략)


박승호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색 제안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자"

박승호 도지사 예비후보, 경주서 기자회견

경주 · 포항 · 영천 등 동남권에 제2청사 반드시 필요
도청 북쪽이면 도지사는 남쪽이어야 지역균형발전

박승호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전 포항시장)가 10일 오전 10시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도지사가 되면 반드시 경북도청 제2청사 개념의 출장소를 경주와 포항, 영천 등에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후략)


박승호 도지사 예비후보, 경주서 기자회견

경주 · 포항 · 영천 등 동남권에 제2청사 반드시 필요

도청 북쪽이면 도지사는 남쪽이어야 지역균형발전

박승호 도지사 예비후보 "영천 비상 시키겠다"

항공산업의 중심기지로 육성

박승호 경북도지사 새누리당 예비후보(전 포항시장)는 11일 "영천을 항공산업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겠다"면서 '영천비상(飛上) 프로젝트' 공약을 밝혔다.(후략)


박승호 도지사예비후보 "영천 비상 시키겠다"

항공산업의 중심기지로 육성

"경북 농가소득 매월 1백만원 늘리겠다"

박승호 경북지사 후보, 에너지마을 사업추진

포항시장 출신인 박승호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상주시 합동기자실에서 "경북지역 농가소득을 매월 약 1백만원 가량씩 늘어나게 하는 '에너지마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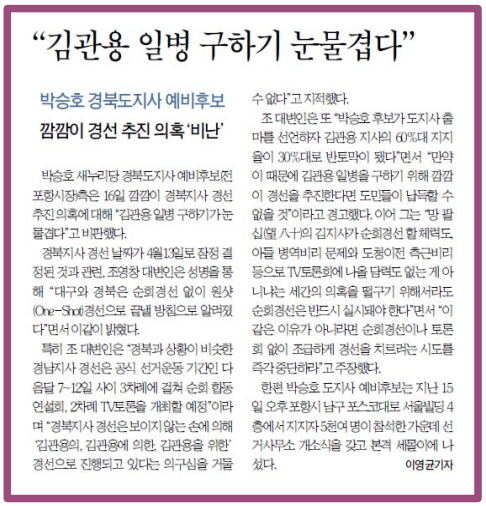

"경북 농가소득 매월 1백만원 늘리겠다"

박승호 경북지사 후보, 에너지마을 사업추진

"김관용 일병 구하기 눈물겹다"

박승호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깜깜이 경선 추진 의혹 '비난'

박승호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전 포항시장)측은 16일 깜깜이 경북지사 경선추진 의혹에 대해 "김관용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비판했다.(후략)


"김관용 일병 구하기 눈물겹다"

박승호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깜깜이 경선 추진 의혹 '비난'

지방선거 앞두고 '박정희 마케팅' 눈길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 진영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른바 '박정희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박정희 마케팅'은 전략적 의도는 다르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정희마케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새누리당 경북지사 후보경선에 출마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다.(후략)

지방선거 앞두고 '박정희 마케팅' 눈길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 진영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른바 '박정희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박정희 마케팅'은 전략적 의도는 다르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정희 마케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새누리당 경북지사 후보경선에 출마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도시도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라며 "구미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토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기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구미시의 명칭을 '박정희시(市)'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박 전 시장은 '박정희시' 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제안을 풍자하며 "박정희씨를 구미씨로 개명하는 건 찬성"이라고 비난하자 14일 성명을 내고 "기억에서 저물어 가던 정치인 노회찬씨가 '박정희씨를 구미씨로 개명하는 건 찬성입니다'라고 막말을 퍼부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사야디 고레스탄의 명언이 있다"며 "노회찬씨가 꼭 새겨들어야할 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박 전 시장의 박정희시 제안에 대한 논란이 일던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산은 박정희 신도시"라며 "시화방조제로 반월공단을 만들고 한양대학교 캠퍼스를 열고 공원을 많이 만들었다. 일자리 없는 베드타운이 아니다. 77개 나라에서 6만여명이 찾아와 코리안드림을 이뤄가고 있는 글로벌도시"라고 밝혀 네티즌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의도와 상황은 다르지만, '박정희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야권내 유력 경기지사 후보 중 한 사람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참배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3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과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는 참배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묘역은 찾지 않았다.

김 전 교육감의 이런 행보를 놓고선 진보 진영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시각이다. 뉴스1

의 결 번 호	2014지선130
언 론 사	주식회사 경향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대표이사 현 재 오
심의대상기사	경향일보 2014년 3월 18일자 16면「포천시, 수도권 제일의 녹색휴양도시 건설한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동일 단체장에 대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포천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기사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포천시, 수도권 제일의 녹색휴양도시 건설한다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2013년도 경기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정부합동 평가에서 녹색제품 구매율 전국 1위 수상 등 환경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시는 포천시민과 지역 방문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들은 추진해 환경과 휴양이 조화를 이루는 수도권 제일의 명품 녹색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후략)


경향일보 Special

포천시, 수도권 제일의 녹색휴양도시 건설한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48
언 론 사	(주) 내외일보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길 82, 4층 (온수동) 대표이사 이 희 찬
심의대상기사	내외일보 2014년 3월 25일자 16면 「물 맑고 깨끗한 환경, 이유 있다」 2014년 3월 26일자 16면 「기업·투자유치 올 땐 꼭 성공 지원한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포천시장, 전남 나주시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기사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물 맑고 깨끗한 환경, 이유 있다

수도권 으뜸 녹색휴양도시 포천

포천시는 2013년도 경기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정부합동평가에서 녹색제품 구매율 전국 1위 수상 등 환경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시는 포천시민과 지역 방문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들은 추진해 환경과 휴양이 조화를 이루는 수도권 제일의 명품 녹색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후략)


물 맑고 깨끗한 환경, 이유 있다

기업 · 투자유치 올땐 꼭 성공 지원한다

일자리 잘 만드는 나주

'일자리 창출 1만개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취임해서 수도권 기업과 투자유치에 힘써온 민선5기 나주시 임성훈 시장은 지난 한해만 모두 6,95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인일자리와 보육돌봄 서비스 등 정부사업에서 3,563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목표치 2,860개를 초과달성했고, 투자유치기업과 농촌인력 부문 등에서 3,394개를 만들어 목표치 2,975개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1년에는 3,702개를, 2012년에는 5,30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3월 1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 결과, 임성훈 나주시장이 최우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후략)



내외일보

일자리 잘 만드는 나주

'일자리 창출 1만개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취임해서 수도권 기업과 투자유치에 힘써온 민선5기 나주시 임성훈 시장은 지난 한해만 모두 6,95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인일자리와 보육돌봄 서비스 등 정부사업에서 3,563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목표치 2,860개를 초과달성했고, 투자유치기업과 농촌인력 부문 등에서 3,394개를 만들어 목표치 2,975개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1년에는 3,702개를, 2012년에는 5,30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3월 1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 결과, 임성훈 나주시장이 최우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남damp;damp;damp;

의 결 번 호	2014지선168
언 론 사	(주)새거제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52. 4층(고현동, 하은빌딩) 대표이사 김 기 덕
심의대상기사	새거제신문 2014년 4월 3일자 4면「거제시는 난개발 토목행정을 중지하라」 2014년 4월 3일자 14면「권민호 시장의 심야버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남 거제시장)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의 기고를 게재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3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동 선거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칼럼에서 '거제시장과 마주친 시민이라면 시장의 청렴함에 가슴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감탄을 자아냈을 것이다.', '만원버스에서 시장에게 자리 하나를 양보한 젊은이들은 당장은 비록 자리 하나를 양보하였을 뿐이지만 다른 기회에는 더 높고 좋은자리(?)에 앉혀 드리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자신도 모르게 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등 지나치게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거제시는 난개발 토목행정을 중지하라

지방선거를 70여 일 남겨둔 요즘 거제에서 각종 토목사업 추진이 한창이다. 고현항 매립을 통한 재개발사업, 사곡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룡산 골프장과 아파트 건설 사업, 300만 원대 아파트 건설사업 등이 그것이다.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현항 재개발을 위한 실시협약과 사업자 지정이 완료되었고, 이를 축하하는 해수부 장관, 거제시장, 사업자의 크게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 국가가 지원하는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되었다고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거제 곳곳에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주요일간지 P일보는 계룡산 400m에 700세대의 아파트 건설 허가가 특혜의 소지가 있는 이상한 허가라는 보도를 하는가 하면, 경남도에서 부결된 300만 원대 아파트 건설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야단이다. (중략)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 사업들은 거제시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들이다. 따라서 졸속적으로 처리되거나 특정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도, 뜻있는 다수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중략)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사업비가 무려 2조 이상(어떻게 2조 이상인지 두고두고 따져 볼 일이다)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토목사업이다. 고현 앞바다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고현천, 연초천의 지형도 큰 영향을 미친다. 거제시민의 정서 또한 마

찬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목적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다.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업자의 이익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를 매립하고 아파트 3000세대를 건설하는 업체의 배만 불릴 뿐, 거제시민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얘기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가 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이 하는 일에 초를 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바다 20만 평을 매립하는 사업이 지지를 받으려면, 그 사업으로 인해 증대되는 시민의 이익이 예상되는 불이익보다 높아야 한다.

이 사업은 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수질오염과 심각한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고현상권의 위축은 물론이고 심각한 침수 위험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조선사업에도 나쁜 영향이 예상된다.(중략)

필자는 국회의원 시절 삼성중공업이 인공섬을 개발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부터(그때는 3000세대 아파트 계획은 없었다) 당시 국토해양부 공직자들에게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하였고, 그들은 본 필자의 우려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이유 있는 것이라 보고 2년 동안이나 보류했고 결국 삼성중공업은 그 사업을 포기했던 것이다.

아무리 선거 앞이라지만 이 사업은 거제시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거제시의 무분별한 토목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계룡산 꼭대기의 골프장 건설은 많은 거제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중략)

골프장 건설허가와 골프텔 2~3층 규모라면 모르겠으나 이런 식의 행정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거제시민들이 등산과 휴식을 즐겨야 하는 대표적인 산을 업자의 이익을 위해 내주었으니 말이나 될 법한가.(중략)

이에 대해 거제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참에 계룡산 중턱 아파트 건설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국가지원 산업단지냐 아니냐로 의견이 분분하고 지역여론도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으나, 20여 년간의 행정경험과 4년간의 국회의원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자체로 국가지원 산업단지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가 확정한 사업이라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취소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세계 조선시장의 여건이나 국가의 산업정책, 그리고 조성될 산업단지에 대한 실수요자의 정도 등 여러 가지 변수로 국가의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니만큼 지금 단계로는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단지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제시는 세계제일의 조선도시인만큼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동에 뺏겨 안타까웠는데 국가가 지원·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긴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거제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을 국가가 표명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난 후 분양이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 한두 개가 아니고, 가까이 통영안정공단을 분양하기 위해 본 필자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시절 무던히 노력했던 일이 생각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공단에 많이 입주하고 해양플랜트산업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바란다.

필자가 거제시장 출마 기자회견 때 도시가스 공급 등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을 언급한 이래, 도시가스 공급이나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조기완공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거제시는 이제 난개발을 부추기는 토목행정을 지양하고 물가,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방안 등 더더욱 민생행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 고

거제시는 난개발 토목행정을 중지하라



윤 영
거제시장 예비후보

지방선거를 70여 일 남겨둔 요즘 거제에서 각종 토목사업 추진이 한창이다. 고현항 매립을 통한 재개발사업, 사곡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룡산 골프장과 아파트 건설 사업, 300만 원대 아파트 건설사업 등이 그것이다.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현항 재개발을 위한 실시협약과 사업자 지정이 완료되었고, 이를 축하하는 해수부 장관, 거제시장, 사업자의 크게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 국가가 지원하는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되었다고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거제 곳곳에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주요일간지 P일보는 계룡산 400m에 700세대의 아파트 건설 허가가 특혜의 소지가 있는 이상한 허가라는 보도를 하는가 하면, 경남도에서 부결된 300만 원대 아파트 건설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야단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 사업들은 거제시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들이다. 따라서 졸속적으로 처리되거나 특정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도, 뜻있는 다수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사업비가 무려 2조 이상(어떻게 2조 이상인지 두고두고 따져 볼 일이다)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토목사업이다. 고현 앞바다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고현천, 연초천의 지형도 큰 영향을 미친다. 거제시민의 정서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목적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다.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업자의 이익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를 매립하고 아파트 3000세대를 건설하는 업체의 배만 불릴 뿐, 거제시민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얘기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가 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이 하는 일에 초를 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바다 20만 평을 매립하는 사업이 지지를 받으려면, 그 사업으로 인해 증대되는 시민의 이익이 예상되는 불이익보다 높아야 한다.

이 사업은 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수질오염과 심각한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고현상권의 위축은 물론이고 심각한 침수 위험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조선사업에도 나쁜 영향이 예상된다.

필자는 국회의원 시절 삼성중공업이 인공섬을 개발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부터(그때는 3000세대 아파트 계획은 없었다) 당시 국토해양부 공직자들에게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하였고, 그들은 본 필자의 우려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이유 있는 것이라 보고 2년 동안이나 보류했고 결국 삼성중공업은 그 사업을 포기했던 것이다.

아무리 선거 앞이라지만 이 사업은 거제시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거제시의 무분별한 토목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계룡산 꼭대기의 골프장 건설은 많은 거제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허가와 골프텔 2~3층 규모라면 모르겠으나 이런 식의 행정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거제시민들이 등산과 휴식을 즐겨야 하는 대표적인 산을 업자의 이익을 위해 내주었으니 말이나 될 법한가.

이에 대해 거제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참에 계룡산 중턱 아파트 건설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국가지원 산업단지냐 아니냐로 의견이 분분하고 지역여론도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으나, 20여 년간의 행정경험과 4년간의 국회의원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자체로 국가지원 산업단지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가 확정한 사업이라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취소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세계 조선시장의 여건이나 국가의 산업정책, 그리고 조성될 산업단지에 대한 실수요자의 정도 등 여러 가지 변수로 국가의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니만큼 지금 단계로는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단지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제시는 세계제일의 조선도시인만큼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동에 뺏겨 안타까웠는데 국가가 지원·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긴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거제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을 국가가 표명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난 후 분양이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 한두 개가 아니고, 가까이 통영안정공단을 분양하기 위해 본 필자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시절 무던히 노력했던 일이 생각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공단에 많이 입주하고 해양플랜트산업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바란다.

필자가 거제시장 출마 기자회견 때 도시가스 공급 등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을 언급한 이래, 도시가스 공급이나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조기완공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거제시는 이제 난개발을 부추기는 토목행정을 지양하고 물가,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방안 등 민생행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권민호 시장의 심야버스

"모름지기 목민관의 자리는 정말로 능력있고 올바른 사람이 차지하여 백성들에게 봉사하도록 마련되었을 따름이다."

최근 재야 운동권출신인 어느 군수가 "한 고장의 군수가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인 줄 몰랐다."고 털어 놓았다.

보장된 임기에 막강한 인사권 수백억 예산이 자신의 결제 없이는 단 한 푼도 집행될 수 없고,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라는 정보까지 군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나날이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 시장·군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한 아무나 목민관(牧民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민관은 오래 동안 억눌려 지내온 사람이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호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도 아니며 이미 남의 여자가 된 옛 애인 앞에 나서서 이 몽룡처럼 폼 잡고 연적을 혼내주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모름지기 목민관의 자리는 정말로 능력 있고 올바른 사람이 차지하여 백성들에게 봉사하도록 마련되었을 따름이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 이런 말이 있다.

"부임하기 위해 행장을 차릴 때는 의복과 말은 모두 옛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절약하여 쓰는데 있고 절약하여 쓰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한 후에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후에 자애로울 수 있으므로 검소야 말로 목민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여 산뜻한 옷에 좋은 갓을 쓰고 좋은 안장을 놓는 날쌘 말로 위세를 떨치려고 한다. 하지만 늙은 아전들이 수령을 살필 때면 먼저 새 수령의 의복과 안마에 대해 물어보고 만약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면 씽긋 웃으면서 "알 만하다"하고 만약 검소하고 소박하다면 놀라서 "두렵다"고 하는 줄은 알지 못한다. 길거리의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식자들은 더럽게 여기니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착각하여 남들이 자신을 부러워한다고 말하지만 부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미워한다. 자신의 재산을 축내면서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남의 미움을 받게 되니 이 또한 어리석지 아니한가. 무릇 사치스러운 자는 모두 어리석은 자이다.

목민관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서울에서 관직이 있었으므로 의복과 안마는 대강 갖추었을 것이다.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또한 좋지 않았겠는가. 한 가지 물건이라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비록, 부임하러 가는 길이 아니지만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당선된 권 민호 시장은, 서울 출장길에는 번듯한 관용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간다. "번잡한 버스 속에서 사람들과 서로 몸을 부대끼다보면 세상사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심야버스 안에서 거제 시장과 마주친 시민이라면 시장의 청렴함에 가슴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감탄을 자아냈을 것이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민적 동지애를 느꼈을 것이다.

만원버스에서 시장에게 자리 하나를 양보한 젊은이들은 당장은 비록 자리 하나를 양보하였을 뿐이지만 다른 기회에는 더 높고 좋은 자리(?)에 앉혀 드리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자신도 모르게 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시 론

권민호 시장의 심야버스

손 열 민
칼럼니스트

모름지기 목민관의 자리는 정말로 능력 있고 올바른 사람이 차지하여 백성들에게 봉사하도록 마련되었을 따름이다.

최근 재야 운동권출신인 어느 군수가 "한 고장의 군수가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인 줄 몰랐다."고 털어 놓았다. 보장된 임기에 막강한 인사권 수백억 예산이 자신의 결제 없이는 단 한 푼도 집행될 수 없고,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라는 정보까지 군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나날이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 시장·군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한 아무나 목민관(牧民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민관은 오래 동안 억눌려 지내온 사람이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호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도 아니며 이미 남의 여자가 된 옛 애인 앞에 나서서 이 몽룡처럼 폼 잡고 연적을 혼내주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모름지기 목민관의 자리는 정말로 능력 있고 올바른 사람이 차지하여 백성들에게 봉사하도록 마련되었을 따름이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 이런 말이 있다. "부임하기 위해 행장을 차릴 때는 의복과 말은 모두 옛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절약하여 쓰는데 있고 절약하여 쓰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한 후에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후에 자애로울 수 있으므로 검소야 말로 목민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여 산뜻한 옷에 좋은 갓을 쓰고 좋은 안장을 놓는 날쌘 말로 위세를 떨치려고 한다. 하지만 늙은 아전들이 수령을 살필 때면 먼저 새 수령의 의복과 안마에 대해 물어보고 만약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면 씽긋 웃으면서 "알 만하다"하고 만약 검소하고 소박하다면 놀라서 "두렵다"고 하는 줄은 알지 못한다. 길거리의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식자들은 더럽게 여기니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착각하여 남들이 자신을 부러워한다고 말하지만 부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미워한다. 자신의 재산을 축내면서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남의 미움을 받게 되니 이 또한 어리석지 아니한가. 무릇 사치스러운 자는 모두 어리석은 자이다. 목민관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서울에서 관직이 있었으므로 의복과 안마는 대강 갖추었을 것이다.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또한 좋지 않았겠는가. 한 가지 물건이라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비록, 부임하러 가는 길이 아니지만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당선된 권 민호 시장은, 서울 출장길에는 번듯한 관용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간다. "번잡한 버스 속에서 사람들과 서로 몸을 부대끼다보면 세상사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심야버스 안에서 거제 시장과 마주친 시민이라면 시장의 청렴함에 가슴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감탄을 자아냈을 것이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민적 동지애를 느꼈을 것이다. 만원버스에서 시장에게 자리 하나를 양보한 젊은이들은 당장은 비록 자리 하나를 양보하였을 뿐이지만 다른 기회에는 더 높고 좋은 자리(?)에 앉혀 드리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자신도 모르게 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223
언 론 사	주식회사 영광신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37번지 대표이사 박 용 구
심의대상기사	영광신문 2014년 5월 16일자 11면「이낙연 후보를 전남도지사로…」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정성 형평성에 맞혀 선거보도를 해야하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 기사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낙연 후보를 전남도지사로...

지난 10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도지사 경선에서 승리한 이낙연 후보가 공천자로 확정되면서 영광출신 전남지사 탄생이 기대된다.

새정연은 14일 당비대납 의혹으로 측근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후보 확정을 미뤄온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의 공천을 최종 결정하고 15일 공천장을 수여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열린 전남지사 경선에서 당초 열세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주승용 의원을 간발의 차로 눌렀다.

동부권을 장악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에게 서부권의 이낙연과 이석형 등 두 명이 나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한 값진 승리였다.

이 후보는 경선 하루 전인 9일 이 후보의 비서와 지역사무실 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되는 악재를 만났으나, 정면 돌파를 시도해 선거인단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이다.

이 후보는 '당비대납은 유출되어서는 안될 전남도당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투서가 시작되었고, 경선 코앞에 체포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조직적 음모를 선거인단의 정의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이 후보는 각종 토론회에서 차분하고도 논리정연하게 공약을 제시하면서 전남도민들에게 도지사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14일 공천이 확정되자 "6.4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겠으며 전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남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이번 6.4 지방선거를 돈 안쓰는 선거, 정책선거, 도정준비 선거로 치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이번 선거를 최대한 조용하게 치르기 위해 방송차량을 없애고, 선거운동원도 가능한 한 축소할 예정이며, 홍보물도 값싸고 실속있게, 시·군 사무실 역시 기존 당사를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이미 발표한 정책과 공약을 좀 더 다듬어 체계화하고, 현장방문과 도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이다.

이 후보가 전남지사에 당선되면 최초의 영광출신 도지사이다. 36대까지 단한명도 배출치 못한 영광의 불명예를 씻고, 민선 4대 지사를 영광출신이 자리한다는 영예도 기쁨이다.

이제 영광군민 모두는 영광출신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과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

사설

이낙연 후보를 전남도지사로...

지난 10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도지사 경선에서 승리한 이낙연 후보가 공천자로 확정되면서 영광출신 전남지사 탄생이 기대된다.

새정연은 14일 당비대납 의혹으로 측근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후보 확정을 미뤄온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의 공천을 최종 결정하고 15일 공천장을 수여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열린 전남지사 경선에서 당초 열세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주승용 의원을 간발의 차로 눌렀다.

동부권을 장악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에게 서부권의 이낙연과 이석형 등 두 명이 나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한 값진 승리였다.

이 후보는 경선 하루 전인 9일 이 후보의 비서와 지역사무실 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되는 악재를 만났으나, 정면 돌파를 시도해 선거인단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이다.

이 후보는 '당비대납은 유출되어서는 안될 전남도당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투서가 시작되었고, 경선 코앞에 체포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조직적 음모를 선거인단의 정의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이 후보는 각종 토론회에서 차분하고도 논리 정연하게 공약을 제시하면서 전남도민들에게 도지사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14일 공천이 확정되자 "6·4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겠으며 전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남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이번 6·4 지방선거를 돈 안쓰는 선거, 정책 선거, 도정준비 선거로 치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이번 선거를 최대한 조용하게 치르기 위해 방송차량을 없애고, 선거운동원도 가능한 한 축소할 예정이며, 홍보물도 값싸고 실속있게, 시·군 사무실 역시 기존 당사를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이미 발표한 정책과 공약을 좀 더 다듬어 체계화하고, 현장방문과 도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이다.

이 후보가 전남지사에 당선되면 최초의 영광출신 도지사이다. 36대까지 단한명도 배출치 못한 영광의 불명예를 씻고, 민선 4대 지사를 영광출신이 자리한다는 영예도 기쁨이다.

이제 영광군민 모두는 영광출신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과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224
언 론 사	(주)담양문화 담양신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68, 3층 (지침리, 경원회관) 대표이사 정 은 주
심의대상기사	담양신문 2014년 5월 20일자 4면「이낙연 전남도지사후보 출사표」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도시자)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의 기고를 게재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3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낙연 전남도지사후보 출사표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선장을 보았습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뻔뻔하며, 판단능력이 부족한 선장이 얼마나 큰 참극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느 경우에도 책임을 다하는 선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희생해서라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먼저 지키는 선장, 그런 지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이자 열성적 야당 당원이셨던 아버지 슬하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하숙비가 없어서 친구나 선배들의 자취방이나 하숙집을 전전했습니다.

때로는 굶으면서,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대학시절을 마쳤습니다. 저는 배고픔을 압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무엇을 아파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저는 가난한 전남의 믿음직한 장남이 되겠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도민들과 함께 아파하는 지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도민들께 따뜻한 도정을 펼치는 가족같은 지사가 되겠습니다.

선장은 안방처럼 자주 다니는 연안만 알아서는 안됩니다. 먼 바다까지 꿰뚫고 있어야 좋은 선장이 됩니다.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만 알아서는 지방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방을 알고, 중앙을 알고, 세계를 알아야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해 4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민주당의 대변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선진국을 배우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일하면서 국회에서 손꼽히는 국제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70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10년이나 선정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최초의 노인복지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방을 알고, 중앙을 알고, 세계를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남을 살릴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전남은 가난합니다. 경제, 교육,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상대적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발전전략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는 전남을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기지, 즐기고 쉬고, 치유하며 충전하는 생명의 힐링기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런 전남을 만들기 위해 '6대 산업부문별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장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전남 주력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비용 저소득 구조의 농어업을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전환해가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겠습니다.

전남의 섬, 해안선, 갯벌 등을 활용해 세계의 새로운 문화관광 추세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조류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혁신도시의 한전과 함께 견인하겠습니다.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어르신 복지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시행하며,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산업수요, 생활수요,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SOC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 이낙연은 서민과 함께하는 이낙연, 지방과 중앙과 세계를 아는 이낙연, 의로운 땅 전남의 얼굴로서 손색없는 이낙연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전남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변화와 혁신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책임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책임있는 변화와 혁신을 전남에 이루고자 합니다. 도민과 공직자들이 동참해서 부드러운 변화, 즐거운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저의 꿈은 어제 오늘의 전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전남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남을 위한 즐거운 변화, 저 이낙연과 함께 시작하십시다.

이낙연 전남도지사후보 출사표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선장을 보았습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뻔뻔하며, 판단능력이 부족한 선장이 얼마나 큰 참극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느 경우에도 책임을 다하는 선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희생해서라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먼저 지키는 선장, 그런 지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이자 열성적 야당 당원이셨던 아버지 슬하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하숙비가 없어서 친구나 선배들의 자취방이나 하숙집을 전전했습니다. 때로는 굶으면서,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대학시절을 마쳤습니다. 저는 배고픔을 압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무엇을 아파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저는 가난한 전남의 믿음직한 장남이 되겠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도민들과 함께 아파하는 지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도민들께 따뜻한 도정을 펼치는 가족같은 지사가 되겠습니다.

선장은 안방처럼 자주 다니는 연안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먼 바다까지 꿰뚫고 있어야 좋은 선장이 됩니다.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만 알아서는 지방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방을 알고, 중앙을 알고, 세계를 알아야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해 4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민주당의 대변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선진국을 배우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일하면서 국회에서 손꼽히는 국제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70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10년이나 선정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최초의 노인복지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방을 알고, 중앙을 알고, 세계를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남을 살릴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전남은 가난합니다. 경제, 교육,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상대적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발전전략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는 전남을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기지, 즐기고 쉬고, 치유하며 충전하는 생명의 힐링기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런 전남을 만들기 위해 '6대 산업부문별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장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전남 주력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비용 저소득 구조의 농어업을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전환해가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겠습니다. 전남의 섬, 해안선, 갯벌 등을 활용해 세계의 새로운 문화관광 추세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조류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혁신도시의 한전과 함께 견인하겠습니다.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어르신 복지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시행하며,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산업수요, 생활수요,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SOC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 이낙연은 서민과 함께하는 이낙연, 지방과 중앙과 세계를 아는 이낙연, 의로운 땅 전남의 얼굴로서 손색없는 이낙연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전남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변화와 혁신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책임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책임있는 변화와 혁신을 전남에 이루고자 합니다. 도민과 공직자들이 동참해서 부드러운 변화, 즐거운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저의 꿈은 어제 오늘의 전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전남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남을 위한 즐거운 변화, 저 이낙연과 함께 시작하십시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226
언 론 사	주식회사 군위신문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73-5 (동부리) 대표이사　사공화열
심의대상기사	군위신문 2014년 5월 19일자 19면 「"명품 경북교육 우뚝 세우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교육감)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약력 및 공약을 담은 인터뷰를 게재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명품 경북교육 우뚝 세우겠다"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후보, 본 후보 등록

이영우 경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9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 후보에 등록했다.

이날 본 후보 등록을 마친 이영후 후보는 지난 2009년 보궐선거로 민선 교육감에 당선돼 초대 1년, 2대 4년간 우리 교육을 '명품! 경북교육'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노력한 장본인이다.(후략)



제461회　　종 합　　2014년 5월 19일(월요일) 19

"명품 경북교육 우뚝 세우겠다"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후보, 본 후보 등록

이영우 후보

이영우 경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9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 후보에 등록했다.

이날 본 후보 등록을 마친 이영우 후보는 지난 2009년 보궐선거로 민선 교육감에 당선돼 초대 1년, 2대 4년간 우리 교육을 '명품! 경북교육'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노력한 장본인이다.

이 후보는 지난 5년간 경북교육감으로 재임한 기간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 3백억 예산의 기관평가 시상금을 수상해 도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왔다.

도민들에게 이 후보의 감칠은 선비의 기상으로 청지하고 깨끗한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북교육을 가장 잘 하는 교육청의 및 행정가로서 경북교육가 측에게 '명품! 경북교육' 이라는 브랜드를 선사한 견줄된 교육 명장으로 알져져 있다.

이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명품! 경북교육 완성' 이며, 정책 목표는 △학생에게 행복을 주는 교육환경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교육정책 △교직원에게 보람을 주는 교육행정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서비스이다.

이 후보의 공약은 이 시대 교육수요자들의 교육적인 희망과 요구사항에 기초해 5대 공약을 개발하고, 각 공약별 10개의 세부 공약으로 구성했음을 이 후보 측은 밝혔다.

이 후보 측이 밝힌 5대 공약을 보면, 1. 감성과 인성, 확실히 가르쳐줍니다' '인' 하여 함성,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3. '사교육비 부담, 더 줄이겠습니다' 4.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5. '교직원에게 보람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이다.

이 후보는 이날 본 후보 등록 후 '선거 기간 중에 공약을 가지고 유권자를 찾아가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북교육에 바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선거운동의 개혁에 앞장서겠다'면서 끝을 결의로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 협약에 동참했다.

이 후보가 완성을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는 '명품! 경북교육' 을 실현을 위한 50개 세부 공약 가운데 하나 도민을 직접 찾아가 발표한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마을 품성한당' 실시 운영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관석해 우리나라를 지켜오고 발전시키온 어르신들을 입일이 찾아뵙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행복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건강에 대해 덕담을 나눴다. 아 자리에서 이영우 후보는 어르신들에게 집안과 마음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혼장이 되어주길 주문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게 될 '우리마을 품성학당' 운영 지원을 약속해 참석 어르신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영후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은 '경북 정체성 교육' 강화 약속이다.

경북 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경북 정신으로서 화랑정신, 선비정신, 새마을 정신, 호국정신에 기초한 '한국 정신의 창' 교육이다. △경북 사람을 나타내는 적합한 메시지로서 황상 먼저 세울께 생각하고, 먼저 계획해 가는 '김합 여는 사람' 교육이다. △경북 사람이 지켜야 할 주요 덕목으로서 정직, 신뢰, 화합, 협동 교육이다. △경북의 문화적 특성으로서 정신의 뿌리, 문화의 현장으로서 '한국 정신문화 본산' 교육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경북 정체성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나라사랑, 부모사랑, 고장사랑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 중심 '자율적농학교' 육성을 약속하고 있다.

경북도는 정책 학교의 60%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인 점을 감안해 따나는 학교에서 즐겨는 소규모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자율재농학교 육성에 관한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세부 내용은 △대상 학교는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2~3년간 시범 운영 △교육 중점영역은 창성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운동(축구, 탁구), 음악(국가, 성악), 연기(뮤지컬, 연극), 힘힘(행복, 건강) 등 특기 적성 교육과 감성 및 협력교육을 강화함 △운영방법은 학교장 재량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최대한 이용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지역의 교육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체험활동 강화 등이다. 이 후보 측은 이를 통해 농촌학교가 성동감 넘치는 학교로 변모되고, 소규모 학교를 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지역보와 및 전통문화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명품! 교육 길 따라 나선 투어' 의 일환으로 청도 풍양읍, 청도군청 및 여러 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영우 후보는 지역 공약으로서 푸른 산, 맑은 물, 순박한 인심 등 3청의 보호 및 화랑정신, 새마을정신, 도청습유(道不拾遺-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지 않는다는 뜻)의 3보신을 지역 넘림 및 전통 문화 교육의 내용과 자료로 활용한다는데 도민과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청도청생생애영장을 찾은 많은 화생들이 현장체험을 통해 이들 분화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도하기로 약속했다.

다음은 '교육안전의 총체적 시스템 정리 및 정비' 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의원회 참가에 따른 회생자 애도에 전념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경북도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가 분향을 하고, 교육가로서 자숙하는 기간을 가졌다.

지난 5월 7일 이 후보는 자신의 5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안전의 총체적 시스템 정리 및 정비' 에 관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학생 안전교육의 강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안전매뉴얼 재정비 △교직원 안전연수 강화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활용 △전 학생 대상 참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안전교육 강화 △야영활동 기간에 안전교육 실습 이행 등이다.

둘째는 시설 및 설비의 안전점검 및 정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학생 안전교육 전담부서 운영 △전 학교 대상 보건운동가구 점검 및 정비 △전 학교 대상 산불시설 교체공사 이행 △폐학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10대 사업 추진 △교육공무원자가 참여하는 학교안전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이다.

이어 '경로효친교육' 을 다시 세우기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안동시 서부지역 노인회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직 인사를 올리고 덴스투강을 기원하는 역담을 전했다.

또 제42회 어버이날에 즈음해 우리 교육에서 경로효친교육을 다시 세우려는 의지가 담긴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경로효친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이 시대에 맞는 경로효친의 의미 재해석 △교과 및 재량활동 관련 효 교육 강화 △효 교육 지도를 프랜츠 개발 보급 △경로효친 우수사례 발굴 및 교재화 등이다.

둘째, 경로효친의 생활화 지도를 위한 사회으로는 △경로효친 모범 교직원 발굴 표창 △지역의 효자 · 효부 관련 문화재 답사코스 개발 △효 권문법 올리기 대회 △부모님과 함께 조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캠페인 기, 찾아뵙기 △이웃의 어거노인 섬기기 등이다.

이날 이영우 후보는 인간의 태가지 행실의 근본이 되는 효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날이 되길 바라며, 우리 경북교육에서 효 교육을 중심에 세워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미래교육의 중핵 '문화 교육' 의 새 지평을 열기로 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9일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상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경북에서 면저 뿌쳐 나갈 문화교육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공약은 △경북에 산재한 유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탐방코스 개발 △전통본화 및 지역문화 교육을 전문조 제도 배부 △고전, 인문학 서적, 문화관련 도서 비치 및 독서운동 전개 △장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문화교육 및 현장탐방 지도 등이다.

또 이 후보는 지난 5월 10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국제포터라랑입 지구대회에 참석해 평소 나눔과 봉사로써 존경받는 화원읍과 덕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민정신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또교육청이 중심이 돼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해 전개해 나갈 '행복, 감사, 봉사 나눔 운동' 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공약을 보면 첫째, '행복, 감사, 봉사 나눔 교육' 으로 △행복, 감사, 봉사 교육 모델 개발 △지역의 힘복, 감사, 봉사 우수사례 발굴 및 교재화이다.

둘째는 '행복, 감사, 봉사 나눔 운동으로 △해피 바이러스 운동 전개 △가족 봉사활동 전개 및 발표회 등이다.

'한지협 경북협의회의 이상우 연합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227
언 론 사	(주)예천신문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59 (서본리, 대심양념통닭) 대표이사 김 도 영
심의대상기사	예천신문 2014년 5월 22일자 16면 「"명품 경북교육 우뚝 세우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교육감)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약력 및 공약을 담은 인터뷰를 게재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명품 경북교육 우뚝 세우겠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후보 등록자에게 듣는다
이 후보는 우리 교육을 명품! 경북교육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노력한 장본인

이영우 경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9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 후보에 등록했다.

이날 본 후보 등록을 마친 이영후 후보는 지난 2009년 보궐선거로 민선 교육감에 당선돼 초대 1년, 2대 4년간 우리 교육을 '명품! 경북교육'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노력한 장본인이다.

도민들에게 이 후보의 강점은 선비의 기상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북교육을 가장 잘 하는 교육정책 및 행정가로서 경북교육 가족에게 '명품! 경북교육'이라는 브랜드를 선사한 검증된 교육 명장으로 알려져 있다.(후략)


"명품 경북교육 우뚝 세우겠다"

●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후보 등록자에게 듣는다 // 민선2 경북교육감

의 결 번 호	2014지선233
언 론 사	(주)하나로 일보 경기도 이천시 진리동 311-1 대표이사 정 봉 영
심의대상기사	주간 하나로신문 2014년 5월 30일자 3면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행복 여주 건설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자 출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여주 시의회 의원)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시의원 재임 중 성과 및 향후 포부 등을 담은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보도함으로서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행복 여주 건설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자 출마

■ 선후배들의 의견향상 수렴공정 현실성 있는 의정활동 펼쳐

■ 올바른 일 불의와 타협 않고 정의와 강직하게 관철시켜야

본지에서는 금주의 초대석을 기획시리즈로 연재 하고 있는 바 본지 하나로신문 발행인 정봉영과 이환설 새누리당 공천후보이자 여주시의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오는6.4지방선거 여주시의회의원 새누리당 공천후보와 대담을 통해 이후보에 대한 지도자 역량과 자질을 독자들과 유권자 시민들에게 올바른 평가와 검증과 함께 현 이환설후보에 대한 견해와 활동상과 식견 이사회와 여주시의 미래와 발전 방향 문제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주민들과 하나로 신문 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나로 신문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시의회 의원 가선거구 "새누리당(1-나)"로 공천을 받고 출마한 이환설 후보입니다.

시민여러분과 하나로신문 독자여러분들게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데 대하여 양해 부탁드리며,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하나로 신문이 지역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애독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질책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주시의회 제6대 의원으로 활동할 때 여러분들께서 질책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2.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시 활발한 의정을 펼치면서 민원 해결사로 정평이 나 있는데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시민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이 옳다고 판단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 뜻이 아닌 시민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항상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여주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적극 동참하여 제일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나 혼자 만의 독단적인 판단보다 지역의 어르신들, 그리고 선후배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여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더라도 시민을 위해, 특히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은 일에도 귀 귀울이고, 작은 고통까지 관심과 사랑으로 치유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열과 성을 다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3. 오는 6·4지방선거에 여주시의회의원 가선거구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출마하게 된 동기를 밝혀 달라.

▶저는 어언 6백여년 성상의 세월 조상대대로 현재까지 21대를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양지길 51-4번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미소(방앗간)를 운영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사이에서 4남 1녀중 차남으로 태어난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적부터 부모님께서는 교육보다는 건강에 대하여 남달랐을 만큼 철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격물치지(格物致知)에 입각하여 공자왈 맹자 왈만 찾으시는 연로하신 아버지와 집안 어르신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옛 고서 속의 시서문사((詩書文辭)와 이야기들을 들려 주셨습니다. 요즘 밥상머리 교육처럼 말입니다.

서(書)와 시(詩), 특히 대륙의 성현(聖賢)들의 공맹사상(孔孟思想)에 대한 주옥(珠玉)같은 말씀들을 늘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 가슴에 담은 말과 글은 저를 끝없이 채찍질하였고, 어려운 고비 고비를 만날 때마다 어르신들의 앞에서 무릎 꿇고 배우고 익혔던 말과 글은 저의 삶의 좌표(座標)가 되고 지혜(智慧)를 불러일으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 불의를 보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의협심(義俠心)이 앞서 뜨거운 몸짓으로 세상과 마주하면서도 항상 정의(正義)편에 서서 올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대처하며 청장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2010년 여주군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원 배지를 가슴에 달던 날, 저는 의원 배지에 새겨진 의(議)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언(言)에 옳을 의(義)가 아니겠는가? 즉 의원은 옳은 말을 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하는 역할을 오늘부터 저에게 주어진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민원인들의 어려운 사연들을 접했습니다.

저만의 마인드로 민본사상(民本思想)에 입각한 민본정신(民本情神)으로 단 한번도 이들의 민원을 거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과,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가슴에 새기며, 어려운 이웃의 행복을 위해 크고 장대한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작은일에도 귀 귀울여 해결하여야겠다는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민심을 이분법(二分法)적이 아닌 옳고 그름만을 따지지 않고, 경중(輕重)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집행부에 전달하는 소임을 다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의회의 의정 단상에서도 여주발전의 원대(遠大)한 비전(vision)과 청사진(青寫眞)을 그려내는 과정에서는 구태(舊態)에서 벗어나 우리는 여주라는 공동 운명체(運命?)임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단상에 서서도 여주시가 가야할 미래(未來),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체계적(體系的)으로 준비고 대안을 제시하며, 상생(相生)과 공존(共存)으로 서로 타협하고 합의를 도출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사실 지방의원은 고정된 시선(視線)으로 지역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늘 고민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

의 생각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였습니다.

저는 매회 기고문을 가감 없이 몇 꼭지식 작성하여 각 지역신문 등을 통해 시민들게 알렸습니다. 이 환설 여주시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철학(哲學)을 가지고 여주의 미래를 위해 뛰고 있는지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글로서도 지역민들과 소통(疏通)해야 한다는 저의 뜨거운 가슴으로 글을 써서 지역민들에게는 언론(言論)을 통해서 전했고 공무에 바쁜 공무원들과 시장께는 문자로 전송해서 각종 민원 처리에 도움을 요청(要請)했으며 여주만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발로 뛰었고, 더 통 크게 시민들 곁으로 앞으로도 더더욱 의원활동을 하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민의 염려와 우려 속에 해외연수(海外硏修)를 다녀올 때도 항상 의원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워 왔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연수교육 등을 다녀오면서 기행문(紀行文) 형식을 빌어서 비교 분석하여 우리여주 지역에 대안을 제시하고 붓 가는 대로 저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언론을 통해 밝혔고, 그 일부분을 발췌(拔萃)하여 4백여페이지 분량의 『여주시의원 이환설의 말 따라 글 따라』라는 제목의 책으로 지역민들께 내 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여주시 발전을 이끌어갈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주시의회 의원 가선거구 "새누리당(1-나)" 공천을 받고 여주시의회 의원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4. 여주시의회 의원 후보로서 각오는?

▶ 여주시민의 뜻을 가까이에서 듣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꾼이 필요 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여주시의회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어 4년동안 여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충실히 하여 2013년12월에는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의원활동을 하면서 동여주IC설치를 강력히 주창했고, 짐카나(자동차 묘기)대회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최초의 우수한 기업 아이팜 유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흥(점봉권)체육공원 설치를 강력히 주문 시장으로부터 답을 받아내 추진중에 있으며,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도로건설, 농축산농가 지원사업 등 건설적인 사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한바도 있지만 정신적인 성숙을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역신문을 통하여 "성공(成功)을 부르는 삶에 대한 젊음의 미학(美學)", "득롱망촉(得?望蜀)", "광복68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며" 등등 기고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희망을 주고 국가관을 확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사는 여주,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땀을 흠뻑 적시겠습니다.

5. 기초의원으로써 중요한 자질과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의사전달능력, 주민의사를 전달함에 있어 그 의사의 허상과 실상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관심사에 관한 대화와 토의에 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사회의 공통과제를 주인의식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시화 · 산업화 · 정보화등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과,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봅니다.

더불어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이성과 민주적 사고를지닌 성격이라면 금상첨화 일 것입니다.

6. 여주시 의원에 당선된다면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을 소개해 달라.

▶ 힘 있는 의정활동

6대 의회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올바른 일이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강직하게 밀어붙여서 관철시켜 나갔으며, 예산편성이나, 조례제정 및 개정, 당면시책 등을 관철시키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왔듯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힘 있는 의정활

동을 펼치겠습니다.

▶ 복지증진

국민소득 2만불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어려운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모두가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농촌경제활성

여주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인구의 상당수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의 비중이 큽니다. 최근 농촌은 가축질병, 고유가, 농산물 수급불안정, FTA 등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매우 힘듭니다. 농축산업을 강소농으로 육성발전시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도농간 이익추구, 환경 친화적인 농촌개발, 농촌관광 활성화는 물론 농업 전문분야에 대한 소득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쟁력 강화로 농촌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술 진보와 경영혁신을 통해 농가 생산성이 우수한 선진농가 중심의 농업구조 형성과 경쟁력 있는 주체에 생산자원 집중, 전문화 특화 등 경쟁력 제고입니다. 그리고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농, 겸업농을 위한 소량다품목의 다양한 농산물 생산도 지원하여 시장 경쟁을 위한 다양한 경영체가 공존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7. 앞으로 여주시의 도시계획과 개발정책을 제시한다면?

▶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계획 및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과는 다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 개발정책을 직접 입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주시 발전을 위해 개발 정책등의 의견을 제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근본적 문제는수도권 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규제 악법이 우리군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상수원 특별 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지정 등 중첩된 각종 개발제한으로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며 주군의 현실입니다.

중앙관계부처에 수차에 걸친 규제완화 건의를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규제 악법은 반드시 개선 또는 철폐 되어야 하며, 이러한 여주의 규제악법에서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걸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 제2영동고속국도사업 등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개발 호재로 도약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러한 환경을 잘 연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인구 30만이 넘는 예정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로서의 기능은 물론 자연환경도 보전하여 쾌적한 여주를 만들어가는 지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8. 하나로신문 독자와 여주시민 유권자들에게 당부 및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하나되어 화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사회는 좀 더 따듯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 입니다.

여주시로의 전환과 동여주(주암)IC 유치는 여주가 발전하는데 있어 가일층 획기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일궈낸 것 입니다.

이렇듯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뭉치면 못 이룰 것 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한강 종합개발로 우리시는 많은 변모를 꾀 하였습니다.

3개보 주변에는 연일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릉, 명성황후생가, 목아 박물관, 신륵사 등

기존의 문화유적과 남한강변의 레져시설을 개발하여 연계시킨다면 여주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누구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살기 좋은 여주가 아니라 피부로 느낄수 있는 행복한 도시, 문화관광의 도시 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9. 본인의 생활신조와 좌우명 간단한 가족사항을 소개 한다면?

▶ 민본사상(民本思想)에 입각해 민본정신(民本精神)을 인(仁),의(義)로서 생활신조로 삼고,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보고 정직함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이 없고,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다 라는 생활신조로 의리를 가장 중시하는 본인 이환설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헤어디자너인 최재미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영원한 해병정신으로 자그마한 자영업을 열심히 꾸려가는 아들 이휘와 자부 김다정 그리고 어여쁜 손녀딸 이설화와 이렇게 오손 도손 다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환설 새누리당 여주시의원 가선거구기호1나 후보(중앙 여흥 오학동 북내 강천면)

4년간의 의정활동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행복 여주 건설에 대한 초석 다지고자 출마

선후배들의 의견청상 수렴공정 현실성 있는 의정활동 펼쳐

올비른 일 불의와 타협 않고 정의와 강직하게 관철시켜야

의 결 번 호	2014지선234
언 론 사	주식회사 뉴스앤뉴스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 47-12 (중리동) 대표이사 배 석 환
심의대상기사	이천일보 2014년 6월 2일자 1면「조병돈 이천시장 후보 어르신들께 '건강 선물'」 2면「조병돈 이천시장 후보, "마지막 열정 바치겠다"」 3면「조병돈 이천시장 후보, "빼앗긴 자존심 되찾아 시민에게 돌려 주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이천시장)와 관련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지면에 걸쳐 우호적으로 보도하면서, 유력 경쟁 후보자에 대한 보도 없이 소속 정당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 어르신들께 '건강 선물'

■ 65세 이상 어르신 신체검진 자료 · 건강상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헬스케어 관리운영

새정치민주연합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가 100세 시대를 맞아 65세 이상의 관내 어르신들에게건강을 선물한다.(후략)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

어르신들께 '건강 선물'

65세 이상 어르신 신체검진 자료 · 건강상태 데이터베이스 구축
헬스케어 관리운영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 “마지막 열정 바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는 28일 오전 10시 설성면 설성농협 앞에서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는 유세를 이어갔다.(후략)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

“마지막 열정 바치겠다”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 “빼앗긴 자존심 되찾아 시민에게 돌려 주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는 6.4지방선거를 5일 앞둔 30일 이천시 창전동 소재 문화의 거리(중앙통) 및 관고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발로 뛰는 유세’를 펼쳤다.(후략)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

“빼앗긴 자존심 되찾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중앙통 및 관고전통시장 발로 뛰며 적극적인 지지 호소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경기도당위원장 등 유세지원

2. 주 의

의 결 번 호	2014지선1
언 론 사	현대일보(주)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디동 1214호 대표이사 권 오 륜
심의대상기사	현대일보 2014년 2월 5일자 16면 「기업이 살아야 '포천시 미래'가 열린다」 2014년 2월 6일자 16면 「600년 역사담은 문화정책 지역경제 OK 한류관광 OK」 2014년 2월 7일자 16면 「평택시, 미래 이끌어갈 인재육성 "아낌없이 지원"」 2014년 2월 10일자 16면 「100만 행복도시 성장기반 다진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들(경기 포천시장, 경기 고양시장, 경기 평택시장, 경기 용인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기업이 살아야 '포천시 미래'가 열린다

■ 경영애로 속시원한 해결·일자리창출 총력
■ 수출·매출 체감온도 '후끈' 웃음꽃 '활짝'

포천시는 새해를 맞이해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는 기업친화도시를 만들어 기업과 취업 희망자에게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2014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후략)


News Plus
기업이 살아야 '포천시 미래'가 열린다
경영애로 속시원한 해결·일자리창출 총력
수출·매출 체감온도 '후끈' 웃음꽃 '활짝'

600년 역사 담은 문화정책
지역경제 OK 한류관광 OK

꽃박람회등 축제기간 중 문화행사 집중 배치
주변상권고려 장소선정등 시너지효과 극대화

전통 · 현대예술 균형있는 발전위한 예산지원
'신한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성장기반 확보

■ 최성 고양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앞으로도 고양시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과 나눔,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창조적 문화예술도시에 걸맞는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등 1백만 고양시민을 위한 신한류 글로벌 문화예술도시의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후략)



평택시, 미래 이끌어갈 인재육성 “아낌없이 지원”

올해 교육예산 290억 책정… 3~4세 아동 무상급식 확대등

■ “꿈 · 역량 마음껏 펼치세요”

평택시는 2014년 도약 발전하는 평택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지원 사업에 2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쾌적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129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91억원, 일반계 고교 육성지원 사업에 15억원, 교육분야 지역개발 특별지원사업비 55억원 등 총 290억원을 책정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들이 평택시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게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며, 교육 분야 지원이 평택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중요한 지원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으로 발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후략)



News Plus

2014년 2월 7일 금요일 현대일보 16

평택시, 미래 이끌어갈 인재육성 “아낌없이 지원”

올해 교육예산 290억 책정… 3~4세 아동 무상급식 확대등

평택시장 김선기

“꿈·역량 마음껏 펼치세요”

평택시는 2014년 도약 발전하는 평택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지원 사업에 2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쾌적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129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91억원, 일반계 고교 육성지원 사업에 15억원, 교육분야 지역개발특별지원사업비 55억원 등 총 290억원을 책정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들이 평택시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게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며, 교육 분야 지원이 평택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중요한 지원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으로 발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재정 건전화 토대 · 성장동력 갖춘
기업친화도시 목표
'역사문화 · 여성친화 · 안전건강 도시'
새 브랜드 구축

긴축재정 운용 · 생활공감형 사업 지속 추진
기업 친화도시 총력 ·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생활공감형사업 최우선 · 살기좋은 안전도시

인구 95만 5907명(2013.12.31기준)의 용인시가 100만 대도시 성장 기반을 다지는 2014년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 건전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친화도시 토대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창조경제를 위한 성장잠재력을 구체적으로 발현시키고, 생활공감형 사업 집중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을 선진화하며, 용인 600년 사업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한다.(후략)



의 결 번 호	2014지선2
언 론 사	종합일보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4, 3층 (매산로3가) 대표이사 김 수 만
심의대상기사	경인종합일보 2014년 2월 4일자 16면「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2014년 2월 6일자 16면「인천의 투자유치 멈춤없이 고공행진중」 2014년 2월 10일자 16면「범시민 이웃사랑 나눔축제 '의정부에 희망과 온정 선물하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들(경기 포천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 의정부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 근로자생활환경 개선에 기업 어려움 적극 해소
■ 우수 중소기업 국내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포천시는 새해를 맞이해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는 기업친화도시를 만들어 기업과 취업 희망자에게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2014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후략)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인천의 투자유치 멈춤없이 고공행진중

■ 지난 해 10월까지 30여 개 기업 유치

민선5기 출범이후 지난 해 10월까지 인천시가 유치한 주요 기업본사는 코오롱글로벌(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주), 티오케이 첨단재료(주),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주), LG전자 인천캠퍼스, 대한사료(주), 스태츠 칩팩 코리아(주) 등 3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 관심대상이 되고 있으며, 투자유치도 멈춤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인천에 대한 투자 가치는 여전히 상한가 행진중

지난 해 10월 30일 인천시와 패션그룹 '형지'는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998년 설립돼 2012년 약 7,3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패션그룹 '형지'는 '패션을 통해 세상에 행복을 전한다'라는 미션을 실현하고 있다.(후략)


인천의 투자유치 멈춤없이 고공행진중

지난 해 10월까지 30여 개 기업 유치

민선5기 출범이후 지난 해 10월까지 인천시가 유치한 주요 기업본사는 코오롱글로벌(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주), 티오케이 첨단재료(주),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주), LG전자 인천캠퍼스, 대한사료(주), 스태츠 칩팩 코리아(주) 등 3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 관심대상이 되고 있으며, 투자유치도 멈춤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 대한 투자 가치는 여전히 상한가 행진중

대우인터내셔널 입주 · 오크우드 호텔 운영 협약식

일시 : 2013. 7. 26.　장소 : Oakwood Premier Coex Center

하나금융타운 사업추진 협약 체결식

올 해에도 대기업 입주, 착공 잇따라

패션그룹 형지 · BMW 서비스 및 문화센터 · 대형할인매장 유치

상반기중 하나금융타운 착공, 대우인터내셔널 연내 입주 예정

인천시 '2014 투자유치 종합계획' 발표, 최고의 국제도시로 비상

범시민 이웃사랑 나눔축제 '의정부에 희망과 온정 선물하다'

- 100일간 사랑 릴레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 작년 대비 성금·현물 환가 총액 50% 상당 증가

의정부시는 작년 10월 22일을 시작으로 올해 설명절 전까지 100일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의정부시가 협력해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이 릴레이식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현물을 기부하는 행사인 사랑 나눔 캠페인 "2013년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의정부시 내의 크고 작은 정성이 모여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후략)



범시민 이웃사랑 나눔 축제 '의정부에 희망과 온정 선물하다'

불우이웃돕기성금전달 ₩5,000,000

의정부시는 작년 10월 22일을 시작으로 올해 설명절 전까지 100일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의정부시가 협력해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이 릴레이식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현물을 기부하는 행사인 사랑 나눔 캠페인 "2013년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의정부시 내의 크고 작은 정성이 모여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나눔 행사가 되었다.

사업 기간 중 의정부시에 접수된 현물·성금은 '의정부 이웃사랑 특별 모금 생방송'에서 모금된 액수를 포함해 총 5억1000만원 상당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모금액인 3억4000만원 보다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금액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의정부시 내에 나보다 우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며, 모금된 현물·성금은 의정부시 관내 86여세대,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 등 216개소에 전달되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정겨운 겨울과 설명절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의정부시는 100일간 사랑릴레이 사업 외에도 '제3회 김장나누기 행복듬하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민간 성금 기탁으로 조성된 후원금으로 새마을남녀지도자 및 국군 장병, 자원봉사자 600여명이 함께 참여 해 김장김치 10kg 총 2000여 상자를 사랑의 손길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어 의정부 지역의 나눔으로 행복을 더하는 본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현재는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된 성금으로 '공직자 사랑의 동전 모으기, 교복 선물하기'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의정부시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신입생 청소년 171명에게 교복 쿠폰이 지원되었으며, 공직자가 앞장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청소년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 더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의정부시는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잇기', '김장나누기, 행복듬하기', '공직자 사랑의 동전모으기, 교복 선물하기'등 실제로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눔 활동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많은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기부를 하고, 시민장학회를 후원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눔 활동에 너 나 할 것 없이 동참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따뜻하고 훈훈한 의정부시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임재신 기자/jongbopnews.com

100일간 사랑 릴레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작년 대비 성금·현물 환가 총 액 50% 상당 증가

'2013년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의정부시 내의 크고 작은 정성이 모여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사업 첫 후원자인 NH농협의정부시지부, 쉐보주유소를 포함해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이바돔, ㈜풍아실업월드ENG, ㈜현대홈쇼핑, ㈜대원E&S, 한국철도공사, 롯데리아의정부점, 의정부예술의전당, ㈜휴먼테크, ㈜한일건설, ㈜신세계 의정부지점, KT&G의정부 등의 크고 작은 기업·기관들과 의정부고등학교총동창회, 의정부지역건축사회, 경명교회, 의정부청과의사회, (사)의정부사회적경제협회, 국제피플투미플의정부협회, 의정부교육삼락회, 일력회 등의 단체들을 포함해 개인 365명, 기업 및 단체 37개이 함께 이웃 사랑 나눔 활동에 동참해 뜻을 더하였다.

이번 사업 기간 동안에는 예년과 다르게 2013년 12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정부시지역사업협의체, CJ헬로비전 주관으로 '의정부 이웃사랑 특별 모금 생방송'을 의정부역사 내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이날 현장에서만 불구하고 총 5200만원 상당의 성금 및 현물이 모금되었고,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온정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나눔 행사가 되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6
언 론 사	(주)경기신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744번길 3 (연무동, 경기신문) 대표이사 이 상 원
심의대상기사	경기신문 2014년 2월 4일자 5면 「"가장 수원적인 '수원화성'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온힘"」 2014년 2월 10일자 24면 「엄마처럼 살뜰 아빠처럼 푸근 맞춤형 돌봄에 시민 함박웃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시의원 및 현직 단체장(경기 수원시의원, 경기 평택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터뷰내용 및 인물사진,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가장 수원적인 '수원화성'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온힘"

- 3선 시의원 활동하면서 화성 애착 키워
-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태부족
-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조성 밑그림 추진
- 한옥 형태 '게스트하우스' 확충 최우선
- 정조대왕의 효와 애민정신 계승하는
- 관광콘텐츠 상품화… 체류형 관광지 전환
- 구도심권 금융·의료 클러스터도 계획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화 현상 우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저지해야

"수원시의 미래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 있다"

명규환(52) 수원시의회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원에서 태어나 자금까지 수원에서 살아온 수원토박이다.

이런 그에게 수원이라는 곳은 단순히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고향인 동시에 후배들과 이웃들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이다.

명 위원장은 소중한 수원을 앞으로 더욱 아름답고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수원화성'을 가장 강조했다.(후략)


경기신문
"가장 수원적인 '수원화성'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온힘"
interview

엄마처럼 살뜰 아빠처럼 푸근 맞춤형 돌봄에 시민 함박웃음

권역별 복지타운 순차적 설치
북부 · 팽성 이어 남 · 서부 추진 착착

평택복지재단 운영 남다른 서비스
여성일자리 · 건강가정 · 다문화센터 등
연령 · 계층별 다양한 지원 활발

시민 '1인 1차트' 평생건강 프로젝트
어린이 키크기 · 아토피 · 비만 관리
성인 구강 · 만성질환 프로그램 등
가시적 성과 거둬 참가자들 호평

■ 평택시 차별화된 복지정책 성과 · 추진 전략

평택시는 2010년 7월 '평택시가 엄마가 됩니다, 평택시가 복지사가 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과 건강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복지타운을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형 재단인 평택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등 평택시만의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평택시의 차별화된 복지정책과 그동안 성과와 올해 추진할 주요 복지정책을 살펴본다.

■ 권역별 복지타운 설치,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복합사회복지와 보건복지가 함께하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후략)


경기신문

엄마처럼 살뜰 아빠처럼 푸근
맞춤형 돌봄에 시민 함박웃음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알찬 정책 추진
市 예산 32% 편성, 서비스 업그레이드

김 선 기 평택시장

평택시 차별화된 복지정책 성과·추진 전략

권역별 복지타운 순차적 설치
북부·팽성 이어 남·서부 추진 착착

평택복지재단 운영 남다른 서비스
여성일자리·건강가정·다문화센터 등
연령·계층별 다양한 지원 활발

시민 '1인 1차트' 평생건강 프로젝트
어린이 키크기·아토피·비만 관리
성인 구강·만성질환 프로그램 등
가시적 성과 거둬 참가자들 호평

의 결 번 호	2014지선7
언 론 사	주식회사 경향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삼동) 대표이사　현 재 오
심의대상기사	경향일보 2014년 2월 5일자 16면「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2014년 2월 7일자 16면「인천시, 투자유치는 멈추지 않는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들(경기 포천시장, 인천광역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이 포천시 미래의 희망

열악한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사기진작 및 교육공간 마련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새해를 맞이해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는 기업친화도시를 만들어 기업과 취업희망자에게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2014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개선사업(근로자이용 기숙사, 화장실 개·보수)으로 군내면 씨앤씨(주) 기숙사 개·보수 등 7개소 1억 4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2의 가정의 역할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생활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후략)


경향일보 Special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이 포천시 미래의 희망

인천시, 투자유치는 멈추지 않는다

- 올해에도 대기업 입주, 착공 잇따라
- 패션그룹 형지 · BMW 서비스 및 문화센터 · 대형할인매장 유치
- 상반기중 하나금융타운 착공, 대우인터내셔널 연내 입주 예정
- 인천시 '2014 투자유치 종합계획' 발표, 최고의 국제도시로 비상
- 컨택센터를 필두로 한 원도심 창조경제, 인천에서 실현



경향일보 Special

16 2014년 2월 7일 금요일 제 1631호

■ 올해에도 대기업 입주, 착공 잇따라
■ 패션그룹 형지 · BMW 서비스 및 문화센터 · 대형할인매장 유치
■ 상반기중 하나금융타운 착공, 대우인터내셔널 연내 입주 예정
■ 인천시 '2014 투자유치 종합계획' 발표, 최고의 국제도시로 비상
■ 컨택센터를 필두로 한 원도심 창조경제, 인천에서 실현

인천시, 투자유치는 멈추지 않는다!

인천에 대한 투자 가치는 여전히 상반기 명한중

인천시가 올림이후 지난 해 10월까지 인천시가 유치한 주요 기업투자는 프모종글로벌(주), 신선 바이오프지스(주), 티오케이 항공테크(주), 에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주), 디큐브 인터랙스, 대한시료(주), 스카프 컴퍼 코리아(주) 등 30여 개에 이른다.

한지만, 인천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적인 투자 관심대상이 되고 있으며, 투자유치도 양호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10월 30일 인천시와 패션그룹 '형지'는 '형지글로벌패션타운단지'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1999년 설립해 2012년 약 7,300억원의 매출액을 탄생한 패션그룹 '형지'는 '패션을 통해 세상에 행복을 전한다'는 미션을 선포하고 있다.

'사트로', '고트어러피 레이디', '엘리트이 하늘이' 등 여성복 중심에서 최근 '위일드로즈', '노스케이프' 등의 브랜드를 통해 아웃도어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므로, '에잇', '엔', '팀블 캠퍼스' 를 보유한 우리보다 앞 서 진출하여 이미 확보해 브랜드 '엘리트' 를 보유한 '에리트 베이직' 도 인수해 '경합패션기업' 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 사업은 국내 어패럴산업만 이루고 있는 형지가 설립한 뉴스톤페럴인(주)와 '네오프리엔지(주)' 가 수관하고 유로인투자기업인 영한의 'Dalois Grimm(다이아이오리오노)' 사가 함께 참여한다.

패션그룹형지는 2018년 12월까지 인천시성 연수구 송도동 11-2번지 외에 12,500.8㎡(약 3,780평) 의 부지에 사업비 약 800억원을 들여 랜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를 건립한다.

원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는 오피스(지상2층), 오피스텔(지상3층), 테에사실(지상2층) 등으로 구성된다.

오피스 시설에는 ▲패션아케일(연구센터, 신소재연구센터, 한글프션연구센터, 디자이너 합업준지원센터) 등 R&D센터 ▲패션스쿨, 리테일전문아카데미실스쿨, 섬유패션 MD스쿨, 테리칭 CEO 과정이 진행된 교육시설 ▲ 게일시, 브랜드시업부등 패션그룹본사의 오피스가 들어서게 된다.

정책 하나금융타운 조성본격 시동 및 대우인터내셔널도 입주 확정기에 정식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해 6월 1일 체결한 '정리 경제자유구역 하나금융타운 사업추진합의' 이 그 동안 과국업부터의 유치 지연으로 사업 추수가 지연되었었으나, 현재 부지의 정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금년 상반기 중 예외 투자자를 확정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후 본격인 사업을 착공하게 된다.

지난 해 연말 김정대 하나금융지주 회장및 하나금융타운의 단순한 대형 건설사업이 아니라 하나금융그룹과 비전을 담다 그룹 임직원들의 아이를 하나로 모으는 하나정신의 중심으로서 하나금융타운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사업부체인 큰하나금융지주와 큰하나이엔에스는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약 7,300만원을 투자해 2단계에로 유로에 2017년까지 하나금융지주 본사, 글로벌연구수소, 통합IT센터, 인재개발원 등 그룹 계열사와 주요 기능을 집적화한 '하나금융타운' 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도림타운 조성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시 인천 지역 거주자의 우선 채용 및 지역산업계의 공사업 이용 노력이기로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7년까지 단계별 조성기간 중 상당한 지역경기 부양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고 하나금융지주의 그룹에 도착다 등 주요 생카시설 이전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리인터내셔널(WOORI INTERNATIONAL)은 우리인터내셔널(주)로 분할하여 대우인터내셔널로 분리 이전하기로 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매출 17조원, 자산규모 약 1조2천억 대형 글로벌기업으로 우량업, 에너지산업분야를 포함한 무역부문과 자원개발부문, 그리고 국내의 제조, 유통부문의 세부분을 운영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입주로 기대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 3천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택센터를 필두로 한 원도심 창조경제, '인천시가 앞장서'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1월 29일 원도심 교통창출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2014년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발표 했다.

2014년 투자유치 종합계획에 대표적 도시형 비제조시설업인 컨택센터기업유치를 필두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글로벌기업 및 인천 연고기업 700개 기업방문, R&D 등을 원도심에 집중 유치한다는 목표하에 전문화된 투자유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우선 경제자유여역, 청년실업지, 다문화주부 등 시민들이 아간의 교육훈련만 받으면 손쉽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기업부터 투자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원도심에 비대형 지식서비스산업인 컨택센터를 다수 유치해 향후 2015년까지 3만명에 달하는 양자리 창출의 성과를 낼 예정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 개인사업으로 해외이케팅, 바이어 초청, 인천시도시홍보관 운영, 투자유치 전문인력양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컨택센터를 집중 유치하여 온라인마케팅을 통해 18개가 비즐랜드, 우에잉리스와 같은 신무역강국 대형인국을 인천에서 집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원도심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컨택센터 기업유치는 물론 투원시티, 도심주택 등 개발을 위한 국내외 자본의 투자유치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빈틈한 신도에서 국제도시 인천시에 글로벌컨택산업 입지를 한마에 와 인천시에서는 글로벌이케팅 첨병도시로 갈 수 있는 희망도 갖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현 상수도사업본부 건물과 각 군 · 구에서 요구하는 일당 및 5~10개 정류장을 신축해 컨택센터 기업유치 원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산인수시 등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거친 결과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속에 철한 인물진물은 1만물당 5,000원에서 1만5천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 개발사업과 연계성에 주간할 경우 타당한 업종의 유치사업이 가능하여 원도심활성화에 결합적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만 아니라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신인간지를 삼분 활용한 IT, 서에에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환경, 물류, 유통, 해양, 항공산업 등 인천 입지에 맞는 일자리창출 기업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되어 있는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과 연계하여 설계한 기자사술 분석을 통한 관련 기업들을 원도심에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이 상생 발전하는데 중점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공항공사, 항만공사 등과 함께 세계의 인재산업을 선도할 국제인심센터, 국제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의 선도교육을 담당할 복합의료종합센터, 2200년까지 보장시설 기준 전세계 100만이명의 초중시와 장비시설 등이 입지할 일부 유당할 13만평의 항공MICE복합단지, 입지효과 확보한 입지자유구 및 글로벌 첨류기업 등 200여 기업에 투자지역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시는 투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투자유치 기획단을 구성해 부평, 도화, 검단신도시, 송도글로벌단지, 에세국개발, 4대농산 구도고도화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 투자유치전략을 통합하여 효율성 및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투자유치지역에 선정을 통한 집중성장과 개최와 개발기업 맞춤형 투자실적을 발생하여 선택적 집중 이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의 직접 연계되는 원도심지역에 많은 투자유치와 산업혁신, 새로운 기념의 투자유치 전략을 통해이 원도심을 살리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도시' 로 도약하는데 온힘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21
언 론 사	(주)뉴스포스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05호 대표이사 강 중 구
심의대상기사	뉴스포스트 2014년 2월 제360호, 361호 2~3면 「서울시장 예상 후보자 관상 분석」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출마 예상후보자 등을 분석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역술인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예상후보자들의 당선 여부 및 특정 정당의 우세나 열세를 단정하여 보도함으로써 해당 예상후보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울시장 예상 후보자 관상 분석

■ 무속인이 본 정가 전망

2014년 갑오년(甲午年) 청마(靑馬)의 해가 밝았다. 청마는 말 중에서도 진취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어 올해를 '희망찬 해'로 풀이하기도 한다. 2014년 청마의 기운을 받아 미소를 지을 정치권 승자는 누가 될까? 지난해 개봉한 영화 〈관상〉은 개봉과 동시에 영화관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누적 관객 수 913만 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역시, 관상(觀相)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관상을 통해 바라보는 6·4 지방선거를 살펴봤다. 서울시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 서울시장 예상 후보자 3인의 관상은?

관상(觀相)이란 얼굴의 형태로 운명을 판단해 미래에 닥쳐올 복을 부르는 점법의 하나이다.

이번 서울시장 예상 후보자 3인의 관상 분석을 맡은 선우원 오광호 원장은 정치인의 관상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꽃이 피어나는 형상이라고 표현했다. 김황식 전 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 서울시장 예상 후보자 3인의 관상 가운데 꽃이 피어나는 관상은 누구일까?(후략)


02 | 정치

무속인이 본 정가 전망

신년기획 서울시장 예상

선우원 오광호 원장이 예측한 6·4지방선거

NP 뉴스포스트 2014년 1월 26일 (일요일) | 제360 · 361호


선우원 오광호 원장

후보자 관상 분석

김황식 전 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 서울시장 예상 후보자 3인의 관상?

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관상운 시각에서 볼 때 재선은 어려워 보인다고 풀이했다. 오 원장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시장은 두각을 나타낼 인물보다는 무난한 카드라고 표현하고 싶다. 자신의 파워가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해서도 서울시장 당선이 어려워 보이는 관상운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선 김황식 전 총리 이외에 '제3의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원장은 역학(易學)은 역을 학리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야로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내용을 풀이하지만 관상학(觀相學)은 이와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관상(觀相)에 따른 정치적인 운은 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에 적합한 정치적 관상이 없다고 분석하면서 '제3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풀이했다.

오 원장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대권 운은 없었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양보해 여당이 승리했던 과정처럼 새누리당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의 덕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물론이 없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도 아직까지는 안 의원 신당에서 단일 대표나 대권주자로 나서기 어려워 보인다고 예측했다.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관상운은 적다고 풀이했다. 오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관상운을 가졌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철수 신당에서 서울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예측했다. 오 원장은 안 의원 관상에서 살펴본 신당 창당과 관련해 "창당론을 내세우기 이전에 당을 이끌어 가는 인물을 먼저 영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다.

그는 그러면서 "관상이 계속 반복 된다면 인생의 글곡이 없을 것이다. 시기마다 관상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승리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관상에선 보름달의 빛과 해가 뜨는 빛이 있다고 한다. 보름달의 빛은 재물을 안고 오는 빛으로 해석하고 해가 뜨는 빛은 재물이 보이는 빛으로 해석한다고 한다.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 그 빛을 받을 인물을 예측할 수 있을까.

정치권 일각에선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마의 희망찬 기운을 받아 빛의 기운을 받을 서울시장은 누가될까? 선우원 오광호 원장은 이 빛을 받아 꽃을 피우게 될 '제 3의 인물'이 있을 것이고 말했다. 결과는 오는 6월 4일에 있을 지방선거 뚜껑을 열어 봐야 할 것이다.

홍미선 기자
hms242@nate.com

포토에세이

철수 신당, 제1 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추진위원회가 21일 3월말 창당계획을 밝히면서 안철수 신당이 사실상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정국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안 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정치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이제 힘을 합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 포토에세이는 국내 · 외 정치현황을 빗대 가상으로 연출했다.

〈글 · 구성 : 정치부〉







NEWS POST 뉴스포스트 〈제360 · 361호〉
www.newspost.kr
제360 · 361호 2014년1월26일자 · 구독신청 : (02)780-7778~9 · 값 : 1,000 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 편집인 : 강중구 · 부사장 · 편집국장 : 이도훈
대표전화 : (02)780-7778 · FAX : (02)780-7688 · 정치부 : (02)780-7673 · 경제부 : (02)780-7672
· 사회부 : (02)780-7674 · 연예부 : (02)780-7779 · 편집부 : (02)780-7678 · 광고부 : (02)780-7684
등록일자 : 2006년 12월 14일 · 등록번호 : 서울 다 07569 제 3종우편물(가)급인가
발행소 : 서울 중구 중림동 500번지 디오센터빌딩 302호 · 발행처 : (주) 뉴스포스트

의 결 번 호	2014지선22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경신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41 대표이사 이 성 대
심의대상기사	대경일보 2014년 2월 4일자 4면, 7면 「"24시간 안전 · 행복한 포항 만든다"」 「2014년 청마의 해 "시정을 단디 챙기겠습니다"」 「"떡국으로 정 나눠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평가 포항시, 도내 '최우수기관 선정'」 「일하고 싶은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포항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경북 포항시장)의 시정활동 및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복수의 지면에서 다수의 기사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4시간 안전 · 행복한 포항 만든다"

포항시 통합관제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안전한 포항', '행복한 포항'에 한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포항시는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승호 포항시장, 이경희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호 포항남부경찰서장, 심덕보 포항북부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후략)


"24시간 안전 · 행복한 포항 만든다"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업무협약… 본격 운영

-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
관리·운영 업무협약식
2014. 2. 3(월)

2014년 청마의 해 "시정을 단디 챙기겠습니다"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간부공무원들이 3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고 있다.

2014년 청마의 해 "시정을 단디 챙기겠습니다"

포항시 간부공무원, 설 연휴 후 첫 출근길 새해 인사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간부공무원들이 3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고 있다.

포항시 간부공무원들은 3일 오전 출근시간에 포스코 대교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근로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고, 올 한해 53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자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 공단 근로자들에게 연휴 안부 인사를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남·북구청장, 국·소·원장 등 주요 간부공무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포스코대교 입구에서 현수막을 들고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새해 다짐 인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박승호 시장은 "음력으로 2014년 청마의 해가 비로소 시작됐는데, 올해는 KTX가 개통되고 포항운하가 준공되는 등 포항의 푸른 꿈이 이뤄지는 청마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 한해 53만 시민과 함께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7일 포스코대교 1km 구간에 걸쳐 지역 기업체 회사기 200여개를 계양해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영균기자

"떡국으로 정 나눠요"

"직원 여러분! 떡국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승호 포항시장이 설 명절 연휴 후 출근 첫날인 3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600여명의 직원들에게 직접 떡국을 배식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업무에 임해준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후략)

"떡국으로 정 나눠요"

직원들과 함께하는 새해 떡국 나누기



박승호 포항시장이 3일 점심시간 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떡국을 배식하는 모습.

"직원 여러분! 떡국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승호 포항시장이 설 명절 연휴 후 출근 첫날인 3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600여명의 직원들에게 직접 떡국을 배식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업무에 임해준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 시장의 "떡국 많이 드시고 올 해에도 건강하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새해 덕담에, 직원들 또한 "시장님도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화답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배식에 이어 박 시장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일선 직원들의 고충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했으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새해 첫 날, 시무식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창조기반의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도시 포항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균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평가 포항시, 도내 '최우수기관 선정'

포항시가 '20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에서 경북도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후략)



지난해 포항시청 2층 로비에서 열린 장애인생산품 홍보특판행사 당시 모습.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평가 포항시, 도내 '최우수기관' 선정

포항시가 '20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에서 경북 도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3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3년도 시군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에서 2.17%(16억7300만원)를 구매하는 성과를 거둬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8일 경상북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공공기관은 공사 금액을 제외한 물품 및 용역금액을 합하여 1%이상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2주간 구미시, 울릉군 등 도내 17개 시?군을 방문,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종량제봉투 우선구매와 과메기, 가시오가피 등 지역생산품 홍보를 위한 투어를 통해 6억원의 성과를 올렸다.

윤영란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다각화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당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포항시민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균기자

일하고 싶은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포항시

호항의 장애인일자리 커피전문점인 '카페 히즈빈스'가 장애인들을 위한 행복한 일자리르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중략)

임정택 히즈빈스 대표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잇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포항시가 적극 지원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후략)



포항상공회의소 히즈빈스 6호점 현판식

일하고 싶은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포항시

포항의 장애인일자리 커피전문점인 '카페 히즈빈스'가 장애인들을 위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1년 한동대 구내에 1호점을 연 '히즈빈스'는 당시 민생현장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행복e정장'에 나선 박승호 포항시장이 포항시내 중앙아트홀에 있는 '히즈빈스' 2호점을 찾아 "포항시청 내에 매장 개설과 함께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설치하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시작으로 현재 포항시내에 7개점, 35명의 장애인들이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임정택 히즈빈스 대표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포항시가 적극 지원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재 충남도의 '희망카페'와 충북도의 '꿈드래 카페', 광주시의 '이룸카페', 부산시의 '카페C', 인천 부평구의 '나비북 카페' 등 장애인일자리를 위한 커피전문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히즈빈스에서 일하고 있는 신민철씨는 "경제적인 문제 등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랐지만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극복 할 수 있었다"며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해 준 박승호 시장에게 감사하고, 직접 커피를 만들어 파는 카페를 운영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박승호 시장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로 이들이 빈곤과 차별의 이중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며 "주류사회에서 소외돼 있던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균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23
언 론 사	주식회사 경향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대표이사 현 재 오
심의대상기사	경향일보 2014년 2월 6일자 2면「안성시, 민선5기 발로 뛰는 소통행정 빛났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경기 안성시장)의 시정활동 및 성과와 관련해 "발로 뛰는 소통행정 빛났다"는 등 미사여구를 사용하였고,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상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황은성 안성시장, 7조원 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능력 인정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성시는 전통적으로 여당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새누리당에서는 2명의 후보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이번 6·4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이 당 공천에 자만하지 않는다면 승리하지 않을까 싶다.

안성시, 민선5기 발로 뛰는 소통 행정 빛났다

황은성 안성시장, 7조원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능력 인정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성시는 전통적으로 여당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새누리당에서는 2명의 후보를 내놓고있는 실정이다.

황은성 현 안성시장은 현직 프리미엄과 민선5기를 이끌면서 맨발로 뛰는 현장 행정등으로 공직자들과 유권자로 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며 취임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7조원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와 2만여개의 주민 일자리 창출공약을 이행하여 그 능력을 인정 받았다.

황은성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로 현장행정을 통하여 다져진 시민과의 교감을 시정의 지지도를 한층 끌어올리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기업하기 좋은안성, 살기좋은 안성 건설에 시민을 위한 시정에 전력투구을 기울여 왔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이 당 공천에 자만하지 않는다면 승리하지 않을까 싶다.

/한범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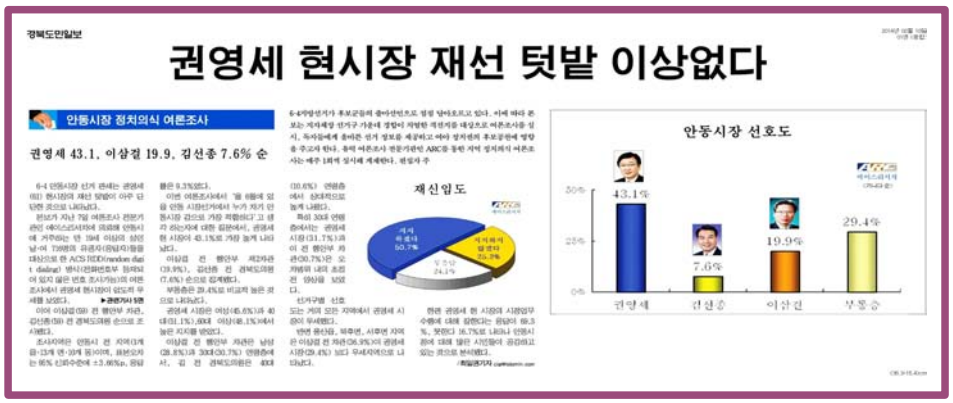
의 결 번 호	2014지선25
언 론 사	경북도민일보(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58-1 대표이사 윤 두 영
심의대상기사	경북도민일보 2014년 2월 10일자 1면「권영세 현 시장 재선 텃밭 이상 없다」 2014년 2월 10일자 5면「권영세 안동시장 "시정업무 잘한다" 69.3%」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안동시장)의 판세를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분석하여 보도하면서, "현 시장 재선 텃밭 이상 없다", "'시정업무 잘한다' 69.3%" 등의 제목을 통해 특정 예상후보자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여타 예상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권영세 현 시장 재선 텃밭 이상 없다

6·4지방선거가 후보군들의 출마선언으로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지자체장 선거구 가운데 경합이 치열한 격전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독자들에게 올바른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여야 정치권의 후보공천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유력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ARC를 통한 지역 정치의식 여론조사는 매주 1회씩 실시해 게재한다.

6·4 안동시장 선거 판세는 권영세(61) 현시장의 재선 텃밭이 아주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경북도민일보

권영세 현시장 재선 텃밭 이상없다

안동시장 정치의식 여론조사

권영세 43.1, 이삼걸 19.9, 김선종 7.6% 순

재신임도

안동시장 선호도

43.1%
7.6%
19.9%
29.4%
권영세
김선종
이삼걸
부동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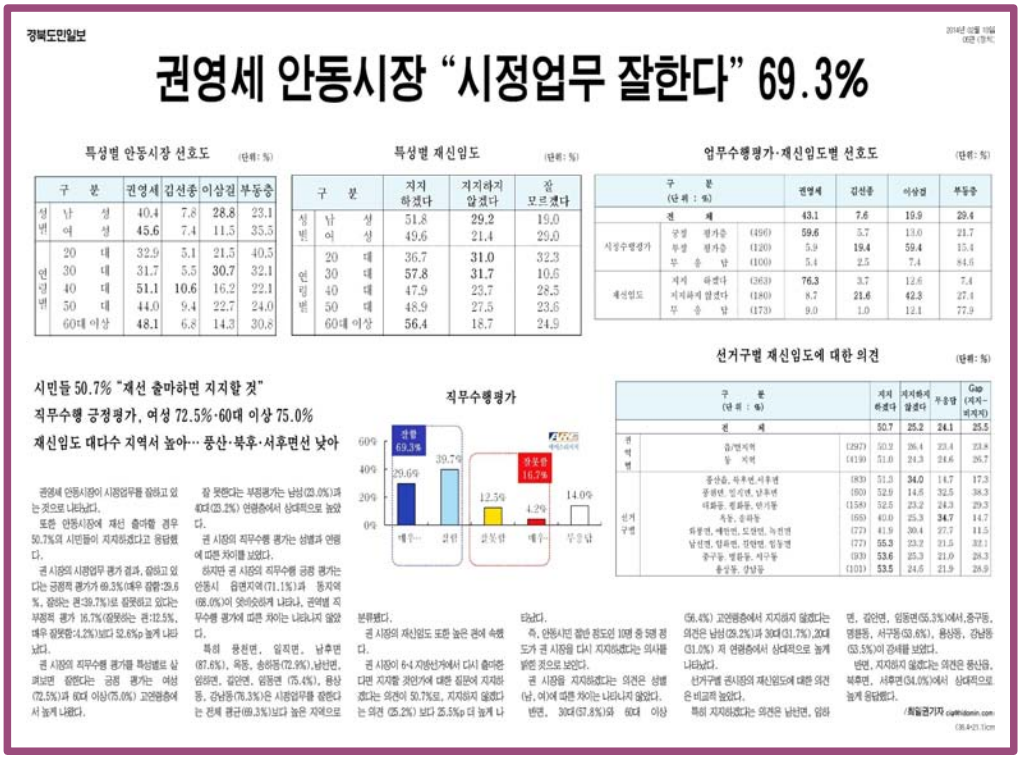
권영세 안동시장 "시정업무 잘한다" 69.3%

■ 시민들 50.7% "재선 추마하면 지지할 것"
■ 직무수행 긍정평가, 여성 72.5%·60대 이상 75.0%

■ 재신임도 대다수 지역서 높아··풍산·북후·서후면선 낮아

권영세 안동시장이 시정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동시장에 재선 출마할 경우 50.7%의 시민들이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후략)



경북도민일보

권영세 안동시장 "시정업무 잘한다" 69.3%

특성별 안동시장 선호도 (단위 : %)

구 분		권영세	김선종	이상걸	부동층
성별	남 성	40.4	7.8	28.8	23.1
	여 성	45.6	7.4	11.5	35.5
연령별	20 대	32.9	5.1	21.5	40.5
	30 대	31.7	5.5	30.7	32.1
	40 대	51.1	10.6	16.2	22.1
	50 대	44.0	9.4	22.7	24.0
	60대 이상	48.1	6.8	14.3	30.8

특성별 재신임도 (단위: %)

구 분		지지 하겠다	지지하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성별	남 성	51.8	29.2	19.0
	여 성	49.6	21.4	29.0
연령별	20 대	36.7	31.0	32.3
	30 대	57.8	31.7	10.6
	40 대	47.9	23.7	28.5
	50 대	48.9	27.5	23.6
	60대 이상	56.4	18.7	24.9

업무수행평가·재신임도별 선호도 (단위 : %)

구 분 (단위 : %)			권영세	김선종	이상걸	부동층
전 체			43.1	7.6	19.9	29.4
시정수행평가	긍정 평가층	(496)	59.6	5.7	13.0	21.7
	부정 평가층	(120)	5.9	19.4	59.4	15.4
	무 응 답	(100)	5.4	2.5	7.4	84.6
재신임도	지지 하겠다	(363)	76.3	3.7	12.6	7.4
	지지하지 않겠다	(180)	8.7	21.6	42.3	27.4
	무 응 답	(173)	9.0	1.0	12.1	77.9

시민들 50.7% "재선 출마하면 지지할 것"
직무수행 긍정평가, 여성 72.5%·60대 이상 75.0%
재신임도 대다수 지역서 높아… 풍산·북후·서후면선 낮아

권영세 안동시장이 시정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동시장에 재선 출마할 경우 50.7%의 시민들이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권 시장의 시정업무 평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69.3%(매우 잘함:29.6%, 잘하는 편:39.7%)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 16.7%(잘못하는 편:12.5%, 매우 잘못함:4.2%)보다 52.6%p 높게 나타났다.

권 시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여성(72.5%)과 60대 이상(75.0%) 고연령층에서 높게 나왔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남성(23.0%)과 40대(23.2%)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권 시장의 직무수행 평가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권 시장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안동시 읍면지역(71.1%)과 동지역(68.0%)이 엇비슷하게 나타나, 권역별 직무수행 평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용천면, 일직면, 남후면(87.6%), 옥동, 송하동(72.9%),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75.4%), 용상동, 강남동(76.3%)은 시정업무를 잘한다는 전체 평균(69.3%)보다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권 시장의 재신임도 또한 높은 편에 속했다.

권 시장이 6·4 지방선거에서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50.7%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견 (25.2%) 보다 25.5%p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안동시민 절반 정도인 10명 중 5명 정도가 권 시장을 다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았다.

권 시장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성별(남, 여)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30대(57.8%)와 60대 이상(56.4%) 고연령층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남성(29.2%)과 30대(31.7%), 20대(31.0%) 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거구별 권시장의 재신임도에 대한 의견은 비교적 높았다.

특히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55.3%)에서, 중구동, 명륜동, 서구동(53.6%), 용상동, 강남동(53.5%)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용산동, 북후면, 서후면(34.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다.

직무수행평가

선거구별 재신임도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단 위 : %)			지지 하겠다	지지하지 않겠다	무응답	Gap (지지-비지지)
전 체			50.7	25.2	24.1	25.5
권역별	읍면지역	(297)	50.2	26.4	23.4	23.8
	동 지역	(419)	51.0	24.3	24.6	26.7
선거구별	풍산읍, 북후면,서후면	(83)	51.3	34.0	14.7	17.3
	풍천면, 임하면, 남후면	(80)	52.9	14.6	32.5	38.3
	대화동, 북화동, 안기동	(158)	52.5	23.2	24.3	29.3
	옥동, 송하동	(66)	40.0	25.3	34.7	14.7
	와룡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77)	41.5	30.4	27.7	11.5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77)	55.3	23.2	21.5	32.1
	중구동, 명륜동, 서구동	(93)	53.6	25.3	21.0	28.3
	용상동, 강남동	(101)	53.5	24.6	21.9	28.9

최일권기자 cjp@kbmin.com

의 결 번 호	2014지선26
언 론 사	(주)전라일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대표이사 유 춘 택
심의대상기사	전라일보 2014년 2월 10일자 3면 「숨죽인 '전주시장 선거 · · · '안갯속'구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 전주시장)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들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갖추지 않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 등의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그 상징성으로 볼 때 광역단체장이상으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전주시장 선거구도가 여전히 안갯속 구도를 보이고 있다.(중략)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는 임 군수와 김 정무부지사.(후략)

全羅日報

2014년 02월 10일 03면 (정치)

'숨 죽인'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구도

정당공천 폐지 여부 결정 안돼
후보자들 혼란 속 관망세 여전
민주-안신당 놓고 유불리 계산
일각 전 국회의원 출마 여론도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가운데 그 상징성으로 볼 때 광역단체장이상으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전주시장 선거구도가 여전히 안갯속 구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역대 도내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선거는 초반부터 강자들의 출전 속에 치열한 선거전이 펼쳤으나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의 전주시장 선거전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유무가 결정되지 않아 후보자들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점과 일부 후보군들의 경우 민주당과 안철수의원의 신당사이에 유불리를 따지며 주판알을 굴리는 등의 줄타기(?) 모습들을 들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전주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복수의 인사들이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론되고 있어 전주시장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내에서는 임정엽 완주군수와 김승수 전 정무부지사, 그리고 가장 선거전에 늦게 뛰어든 진봉현 전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들 수 있다.

먼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는 임 군수와 김 정무부지사.

임 군수는 로컬푸드로 자타가 인정하는 '국제적 군수'라는 닉네임이 따라붙을 정도로 그 역량들이 이미 검증된 만큼 전주시장 선거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 있고, 김 정무부지사는 16년 동안 전주시와 전북도에서 행정경험을 쌓아온 것들이 장점이다.

다만, 임 군수는 전주·완주 통합 무산에 따른 일정부분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이, 김 정무부지사는 김완주지사의 최측근이라는 것 말고는 스스로가 일궈낸 성과물이 없다는 것이 숙제라 할 수 있다.

이어 진봉현 변호사는 앞선 두 후보들에 비해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으나, 2006년 전주시장 선거당시 현 시장인 송하진 시장에게 근소한 차로 석패했던 만큼, 본격적인 선거국면에서 이슈를 선점한다면 또 다른 강자가 될 것임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에 맞서 안신당측에서는 조지훈 전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유대희 변호사, 김병수 전 남부시장 청년몰 총감독 등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조지훈 전 의장의 경우 현재 40대를 대표하는 지역의 간판 정치인으로서 전국 대형마트의 영업재한(의무 휴업)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장본인이다. 그만큼 조 전의장에 대한 평가가 재조명 받고 있어 태풍의 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여기에 시의원과 도의원 등을 두루 거친 또 다른 강자 유창희 전 의원이 최근 전주시장 출마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전 의장과의 피할 수 없는 혈전이 예고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화 한 김병수 총감독, 그리고 유대희 변호사도 안신당의 최종 후보로 낙점되기 위해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장 후보군들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전주완산을에서만 내리 4선을 지냈던 장영달 전 의원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장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각에서 형성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차기 전주시장의 위상으로 볼 때 중앙에서 이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다시 말해 전체 후보들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고, 본선경쟁력이 높은 후보라는 것이다.

민주당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안신당에게 전주시장을 빼앗기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냐"고 강조 한 뒤 "기존 후보들 가운데 안신당 후보 측에게 밀릴 경우 필승카드로 장 전 의원 같은 분도 모셔 와야 할 것이다"면서 그 가능성 열어놨다.

/서울=김형민기자 · bvjan@

(24.4×13.7)cm

의 결 번 호	2014지선27
언 론 사	부산일보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5 대표이사 이 명 관
심의대상기사	부산일보 2014년 2월 5일자 3면 「"정체성 다른 사람" vs "지지율 돌아봐라" … 막오른 초반 기싸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산광역시장)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들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갖추지 않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 '본보-한국갤럽 신년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 등의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체성 다른 사람" vs "지지율 돌아봐라" … 막오른 초반 기싸움

- 외부 인물 영입론 발끈한 서 의원
- 오 전 장관 거론하며 불쾌감 표출
- "영입론, 새누리 내부서 나온 얘기"
- 오, 무시 전략 접고 적극 반박 나서

(전략)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과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다.(중략)

특히 본보-한국갤럽 신년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만만찮은 지지세를 확인하고 있는 오 전 장관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외부인물 영입론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다.(후략)



부산일보

"정체성 다른 사람" vs "지지율 돌아봐라"… 막 오른 초반 기싸움

서병수-오거돈 설전 왜?

외부 인물 영입론 발끈한 서 의원
오 전 장관 거론하며 불쾌감 표출

"영입론, 새누리 내부서 나온 얘기"
오, 무시 전략 접고 적극 반박 나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4 지방선거가 본격 막을 올린 4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과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앞으로 4개월 간 펼쳐질 두 사람간의 치열한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신경전은 갈수록 격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 서병수, 오거돈 지켓대로 외부 영입론 차단

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서병수 의원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부 인물 영입론에 대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본보-한국갤럽 신년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만만찮은 지지세를 확인하고 있는 오 전 장관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외부인물 영입론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다.

서 의원은 먼저 오 전 장관을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경선에 참여시키자는 당내 일각의 여론에 대해 열린우리당 후보로 2번이나 부산시장에 출마를 했던 오 전 장관의 전력을 부각시켰다. 그는 "광역시장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정치 철학과 노선으로 평가받는 자리"라며 "오 전 장관은 열린우리당으로 3번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등 새누리당과 반대편에서 정치를 해 정체성이 다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새누리당에) 들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부산의원 중 일부가 외부인물 영입론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꾸 차출론이나 영입론이나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조심해서 해야할 일"이라면서 "결국은 새누리당 후보가 한 사람 만들어질 것이고 그 후보가 당선되도록 지지도를 높이고, 특히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후보를 보호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지지율이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군들의 지지도가 고만고만한 것은 각 후보마다 지역기반이 나눠져 있는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니냐"면서 "오 전 장관과 관철했 전 주일대사 등은 이미 부산시장 선거 혹은 한나라당 경선에 3번이나 나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도전자의 입장이며 역으로 생각하면 지지세를 확장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한 핵심측근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대해 "서 의원이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 전 장관의 기세를 초반에 제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한 말"이라면서 "오 전 장관의 과거 열린우리당 출마를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지렛대로 당 일각의 무분별한 외부인물 영입론에도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 오거돈, "서병수와의 싸움 아니다" 일축

서 의원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알려지자 오 전 장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서 의원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열린우리당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나섰던 점을 거론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공격할때만 해도 "대꾸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무반응으로 일관했지만 이날은 적극적 반박으로 태도를 바꿨다.

4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부산시장 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만큼 초기에 정체성 공격의 예봉을 꺾어 놓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장관은 이날 "나의 새누리당 경선 참여 이야기는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시장후보들의 지지율이 좀처럼 뜨지 않기 때문에 당당함을 느낀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을 사이에 나오는 소리 아니냐"면서 "경선장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을 두고 정체성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지지율이 좀처럼 뜨지 않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내가 열린우리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것은 부산출신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 집권여당 소속 시장이 되어 부산발전을 해보로 이뤄보겠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2003 APEC 부산유치와 아에 따른 각종 인프라 구축 등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선 것만으로 부산발전을 알탈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감히 이뤄내지 못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오 전 장관은 이어 "부산발전을 위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부엇이 부산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통큰 연대를 성사시킬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재적 경쟁자인 서 의원과의 차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오 전 장관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후보군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부산지역에서 50%대가 넘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의 싸움"이라면서 "부산발전을 위한 통큰 연대는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전 장관의 핵심측근은 "오 전 장관은 현재의 게임룰이라면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되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기대 대마보이 정치를 해 온 서 의원이 오 전 장관의 정체성을 계속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낮은 지지율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철환·김아선 기자 jnno@busan.com

의 결 번 호	2014지선28
언 론 사	(주)대구일보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0 대표이사 이 태 열
심의대상기사	대구일보 2014년 2월 4일자 1면「고윤환 · 신현국 · 강명국 · 신영진 팽팽한 4인 구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문경시장)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들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갖추지 않은 '현재까지는 4곳의 언론매체 여론조사에서 고 시장이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 등의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고윤환 · 신현국 · 강명윤 · 신영진 팽팽한 4인 구도

(전략) 현재까지는 4곳의 언론매체 여론조사에서 고 시장이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신 전 시장의 고정적인 지지자들의 분포가 많고, 선거의 노하우가 있다는 평이 나있는 만큼 향후 치열한 경쟁 구도로 팽팽한 선거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후략)



大邱日報

2014년 02월 04일 01면 (종합)

고윤환·신현국·강명윤·신영진 팽팽한 4인 구도

6·4지방선거 대구·경북 단체장 누가 뛰나 〈20〉

문경시장

전·현직 시장 한판대결 관심

여론조사 고윤환 시장 1위

문경시장 선거 후보군은 현재까지 4명으로 압축된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고윤환(57) 현 문경시장과 신현국(62) 전 문경시장, 강명윤(56) 전 문경시청직장협의회 회장, 신영진(42)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등이다.

지역 정가에서 바라보는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전·현직 시장의 한판 승부다. 고 시장의 재선 도전에 신 전 시장도 출마의지를 다지고 있어 이들의 대결이 불가피해 때문이다. 이들의 선거전이 눈길을 끄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 차례 이상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과 인지도, 시정 운영 경험 등 공통분모가 겹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4곳의 언론매체 여론조사에서 고 시장이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신 전 시장의 고정적인 지지자들의 분포가 많고, 선거의 노하우가 있다는 평이 나있는 만큼 향후 치열한 경쟁 구도로 팽팽한 선거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또 고 시장은 보궐선거를 통한 짧은 시간 때문에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가업체 유치 등의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신 전 시장도 2년 전 시장직을 그만두고 '중도사퇴'한 전력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현직 시장의 한판승부는 이러한 약점을 얼마나 극복할 지가 승패를 가를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고윤환 시장은 정통 관료출신으로 안정적인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는 줄이고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등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중소도시의 발전 모델"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고 시장은 "문경시를 모범적인 자치도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행복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명윤 전 문경시 공무원

-전 문경시청직장협의회 회장

고윤환 문경시장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신영진 전 국무총리 서기관

-전 행정자치부 공무원

-전 충북도청 공무원

신현국 전 문경시장

-전 안동대 초빙교수

-전 환경부 공보관

신현국 전 시장은 자난달 출판기념회를 가졌던 자서전 '죽기로 해야 한다'는 제목처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신 전 시장은 2006년부터 5년6개월여의 시장 재임기간에 국군체육부대 유치, 기업 유치 등 경제농촌, 일등 문경을 위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전 시장은 "문경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상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달라고 호소를 작정"이라는 입장이다.

강명윤 전 문경시청직장협의회 회장은 오랜 세월 문경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 문경을 발전시킬 방안도 가지고 있다는 포부다. 문경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해 명예퇴직했다. 강 전 협의회장은 "무준히 발품을 팔고, 돈 안 들이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전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영진 전 서기관은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희망리드 등 신세대 선거운동방식을 도입해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만큼 출마의지도 남다르다. 짧은 지도자를 내세우는 선거 전략으로 실속을 단단히 배르고 있다. 신 전 서기관은 "폐광도시였던 문경의 화려한 부활을 위해 인구 20만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29.6×13.4)cm

의 결 번 호	2014지선29
언 론 사	(주)전북도민일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 대표이사 임 병 찬
심의대상기사	전북도민일보 2014년 2월 4일자 1면 「민주-安신당 전북 놓고 '대격돌'」, 「교육감 선거전도 달아 오를 듯」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지역, 전북교육감)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들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갖추지 않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전북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 …', '여러 여론조사 결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 등의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교육감 선거전도 달아 오를 듯

■ 오늘 4명 등록 레이스 전망

(전략) 여러 여론조사 결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현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자리수 지지율이어서 범추대위와 범진보추대위도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후략)



전북도민일보

2014년 02월 04일 01면 (종합)

교육감 선거전도 달아 오를 듯

오늘 4명 등록 레이스 전망

오늘 6.4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이 4일 오전 9시 전북도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신환철 전북대 교수·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유홍열 새전북희망포럼 대표 등도 이날 차례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22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는다.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은 복잡한 학내문제 등으로 인해 공식 출마선언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고, 이상휘 전북대 교수는 15일 출판기념회를 한 뒤 등록할 예정이다. 채정룡 군산대 총장은 이달 안에 할 예정이고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는 이달 말 명예퇴직후 하게 된다. 유기태 도의원은 정치개혁 특위를 보며 출마를 저울질한다.

9명 가운데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 예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물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선거전은 예열기간이 있을 전망이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현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자리수 지지율이어서 범추대위와 범진보추대위도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범추대위는 3월3일로 추대위 참여기한을 못박아 완전한 단일화를 꾀하고 범진보추대위도 정책과제를 발굴중이나 대상이 현 교육감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인섭 기자

(15.1×10.9)cm

민주-安신당 전북놓고 '대격돌'

(전략) 전북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전북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안 의원 측이 대규모 전북행을 계획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북도민일보

2014년 02월 04일
01면 (종합)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막오른 6.4지방선거

민주-安신당 전북놓고 '대격돌'

安, 내일 대거출동 민심공략
民, 세배투어에 안방 사수전

민주당과 다음 달 출범할 안철수 신당이 전북을 놓고 큰 싸움을 벌이게 된다. 안 신당이 전북을 최대 공략지로 삼아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자 민주당도 안방 사수에 사활을 걸 태세다. **관련기사 3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윤여준·김효석 새정치추진위 위원장단은 5일 전북을 방문, '새정치의 길, 전북도민에게 듣는다'는 전주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계안·송호창 위원장단과 금태섭 대변인, 정기남 공보팀장 등 새정추 고위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게 된다.

안 의원은 이날 전주 풍남동에 있는 동학혁명기념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전주 덕진예술회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내가 생각하는 새정치'에 대해 참석한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설 연휴 직후에, 그것도 6.4지방선거의 막이 오르는 예비후보 등록(4일) 다음날에 안 의원 측이 대대적인 전북 공략에 나섰다는 점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에 1박2일로 전북을 찾은 직후 안 의원 측이 반격에 나서듯 대규모 방문을 계획한 것은 전북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큰 싸움을 벌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김 대표는 앞서 설날인 지난달 31일 전북을 방문, 한옥마을에서 숙박하는 등 1박2일 일정으로 지역 민심사냥에 적극 나섰다.

김 대표는 전북 방문에서 "전북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혁신을 이뤄내겠다. 더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고 민주당이 확실히 변화해서 6.4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또 3일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축·부의금 등 경조금 5만 원 제한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등 정치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안 의원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안 신당이 전북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대전쟁을 예고하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민심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데다, 호남의 정치 1번지 공수 대결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전북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안 의원 측이 대규모 전북행을 계획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15.1*15.0)cm

의 결 번 호	2014지선34
언 론 사	(주)매일신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계산동2가) 대표이사 이 창 영
심의대상기사	매일신문 2014년 2월 10일자 4면 「김 군수 여론조사 독주, 공천 연결될까」 2014년 2월 17일자 5면 「전문직·토박이 공천장 놓고 대격돌」 2014년 2월 18일자 8면 「장욱 "현역 프리미엄 탄탄" 김영만 "4년간 표밭 일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혀야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구 달성군수, 경북 영주시장, 경북 군위군수)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실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실제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등의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 군수 여론조사 독주, 공천 연결될까

(전략) 공천 국면에서는 현직인 김 군수가 다소 유리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언론사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군수가 경쟁자를 따돌리고 독주하고 있기 때문이다.(후략)



| 기초단체장 선거 이슈·판세는? 대구 달성군수

김 군수 여론조사 독주, 공천 연결될까

대구 달성군수 선거는 출마자 간 인연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등이 위치해 향후 대구의 먹거리를 책임질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발전 적임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이 결국 '공천' 싸움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얽히고설킨 인연

달성군은 2010년 재량선거에서 '태풍' 수준의 무소속 바람이 불어 지역 정치권을 충격에 빠뜨린 지역이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김문오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맴 이트리고 군수에 당선됐고, 박성태 대구시의원도 무소속으로 당당하게 시의회에 입성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군에 장기간 상주할 지만 무소속 태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김문오 군수 후보와 박성태 시의원 후보는 무소속 연대를 통해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 이기는 기적 같은 결과를 끌어냈다.

이후 행보는 갈렸다. 2012년 이종진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설 당시 박 시의원은 이 후보를 도왔고, 김 군수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군수 공천을 두고 서로 정조준하고 있다. 어제도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셈이다.

공천 국면에서는 현직인 김 군수가 다소 유리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언론사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군수가 경쟁자를 따돌리고 독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성군수 출마자 (가나다순)			
이름(나이)	강성환(58)	김문오(64)	박성태(50)
최종학력	영남대 행정대학원	경북대	성균관대
경력	전 달성군 다사읍장	달성군수	대구시의원

당원 참여 경선하면 3선 경력 朴 시의원도 해볼만
"군정 성공적" 자평…경쟁 후보들은 "전시성 행정"

인물이 출신으로 행정 경험이 없다는 애초 우려와 달리 지난 4년간 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인구가 많은 화원읍(5만4천여 명)이 고향이라는 점도 호재다.

반면 당원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진행되면 박 시의원도 해 볼만한 싸움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 군수에 비해 입당 시점이 빨랐고, 당원들과 스킨십 및 당 기여도에서 앞서 있기 때문이다. 박 시의원은 3선 시의원을 거쳐는 동안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화원읍과 다사읍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달성군 환경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출마 선언을 한 강성환 전 달성군 다사읍장은 이 의원과 친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 의원이 달성군 부군수와 군수를 거치는 동안 인간적인 인연을 맺었다는 것이다. 강 전 읍장은 지난달 17일 명퇴를 했고, 19일 달성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지역 발전론

달성군이 대구 전체 면적의 48%를 넘고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이 위치해 향후 대구에서 핵심적인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출마자 간 지역발전 적임자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김 군수는 화원유원지 주막촌, 대견사 증창, 도동서원 사액 행렬 재연, 달성·경정보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제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했다.

또 지난해 부채 '제로' 기초단체가 됐고,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공모사업에 27건을 신청해서 24건이 선정됐을 국비 183억원을 지원받았다. 최근 서울대행정대학원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에서 행복도 지수가 전국 11위, 대구 1위에 올랐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군수는 "달성군이 대구의 루리이고 보태겠지만 늦게 편입돼 소외감이 많았지만 지난 4년간 대구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 4년간 달성군이 문화 및 이벤트성 행정에 치우쳤다고 날을 세웠다.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전시성 행정으로 일관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는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가 이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소에는 잠재돼 있지만 선거전이 불붙으면 (김 군수의 실정이) 불거지고 확산될 것"이라며 "현재 인지도가 다소 낮지만 선거가 임박하면 (인지도가)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강 전 읍장은 군이 소모적인 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사 수를 줄이고 그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보육, 소외계층 등 복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사진들이 찾아와 쉴 수 있도록 수상레포츠 시설을 유치하고, 국가산업단지에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lc156@monet.co.kr

전문직 · 토박이 공천장 놓고 대격돌

(전략) 실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시장은 여타 현직에 비해 지지율이 다소 낮다.(후략)



| 기초단체장 선거 이슈·판세는? 영주시장

전문직·토박이 공천장 놓고 대격돌

영주시장 출마자 (가나다순)					
이름(나이)	김주경(65)	박남서(57)	장욱현(53)	장학식(54)	전무진(51)
최종학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안동농축산대학	안동대학교	안동대학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경력	영주시장	영주시의회 의장	전 대구테크노파크 노동경영	전 국무조정실 고용정책관	제19·20대 국회의원 보좌관

3선 고지 앞둔 현 시장 재공천 여부 최대 변수
무소속 강세 지역, 여당 프리미엄도 무시 못해

장욱현 전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낙선 후 고향을 떠나지 않은 채 민심을 다독거리며 한 발 먼저 뛰었다. 전 시장의 공백한 대행체로 로모으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도 낙선한 전력이 이번 공천 싸움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다.

장학식 전 대구교육노동청장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달 28일 명예퇴직을 했고, 다음 날 출마선언을 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동부에서 인배가 굵은 강 전 청장은 노동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 고향 발전을 설명기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전무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거에 뛰어들었다. 서울대 법대와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전 교수는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지능홍보본부 법조단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을 지냈다.

전문직에 몸서 포박이들도 출사표에는 영주 최고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으로 입증"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이야를 만들고, 관광자원을 일으켜 새로운 영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장학식 전 청장은 "대구교육노동청장 재직 시절 영주노동청사 이전, 영주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지원을 많이 했다"며 "노동 갈등 현장에서 이번 노동이슈를 위원으로 지역 갈등 치유에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했다. 또 "시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군수는 "청조 경제를 위해 지역 농업경영 혁신과 마케팅 역량 강화, 관광스타 창대, 기업유치 등에 있은 역량을 총결기에 "또 성공한 외국 교민들과 접촉해서 영주에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다.

박 경한은 "시장이 되면 장 의원과 호흡을 맞춰 영주 발전을 일궈 기겠다"며 "준공도시와 가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무대변인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고, 탕평적 경제를 일으켜 살기 좋은 영주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주·박정태기자 kshss@monet.co.kr
이창훈기자 lc156@monet.co.kr

장욱 "현역 프리미엄 탄탄" 김영만 "4년간 표밭 일궈"

(전략) 실제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장 군수가 김 전도의원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후략)



| 기초단체장 선거 이슈·판세는? 군위군수

장욱 "현역 프리미엄 탄탄" 김영만 "4년간 표밭 일궈"

군위군수 출마자 (가나다순)		
이름(나이)	김영만(61)	장욱(55)
최종학력	경북대 농업개발대학원	대구대 행정대학원 박사
경력	전 경북도의원	군위군수

새누리-무소속 리턴매치
장 군수 여당 공천 유력
김 "바닥 민심 지지 확신"

6·4 지방선거 군위군수 선거는 새누리당 대 무소속 후보 간 싸움으로 한개월 전망이다. 장욱 군수의 새누리당 재공천이 확실시되고, 김영만 전 경북도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리턴매치

새누리당 공천은 장욱 군수가 올 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때까지 장 군수에 맞서 공천 싸움을 벌이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 군수는 김대현 국회의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김 전 도의원은 지난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4대 도의원과 3대 농수산위원장을 지낸 재선의 김 전 도의원은 두 번 도전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력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맞붙었다. 당시에도 장 군수는 새누리당 후보로, 김 전 도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장 군수가 승리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리턴매치로 지역을 전망이다.

장 군수는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압승을 거두겠다는 계산이고, 김 전 도의원은 바닥 민심에서 자신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새누리당 프리미엄에다 현역 프리미엄까지 더한 장 군수가 다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장 군수가 김 전 도의원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장 군수는 "군위읍이 시가지 명품거리 조성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읍소재지로 선정되는 등 사업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며 "군민들이 농사를 자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강소농업 육성, 교육발전기금 확충 등에서도 정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도의원은 "군위가 낙후되서설, 비리와 악업, 지병 등에 신음하고 있다"며 "군민 화합을 위한 지병 없는 군정과 군림하지 않고 다가가는 군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또 "획일적 부자 농촌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 정체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희망찬 군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군위·이재기자 hdeep@monet.co.kr
이창훈기자 lc156@monet.co.kr

의 결 번 호	2014지선35
언 론 사	(주)대구일보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0 (범어동) 대표이사 이 태 열
심의대상기사	대구일보 2014년 2월 11일자 3면 「본선보다 뜨거운 여당공천경쟁… 권영택군수 여론조사 1위」 2014년 2월 12일자 3면 「김성락 · 조두원 · 박진현 · 이희진 · 장성욱 등 오차범위 내 접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혀야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영양군수, 경북 영덕군수)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밝히지 않고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등의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 · 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본선보다 뜨거운 여당 공천경쟁… 권영택 군수 여론조사 1위

(전략)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권영택 현 군수가 타 출마예상자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 의원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천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군수는 동서6축 고속도로 영양나들목, 2차 영양풍력발전단지, 야생동물멸종복원센터, 음식디미방 등 중 · 장기사업의 확정으로 영양 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후략)



본선보다 뜨거운 여당 공천경쟁…권영택 군수 여론조사 1위

6·4지방선거
대구·경북 단체장 누가 뛰나 〈24〉

영양군수

이상용·이갑형·윤철남 등 지지기반 다지기 나서
강석호 의원 영향력 변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공천이 유지될 경우 영양군수 선거도 새누리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평가가 자배적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예비후보자들 간 공천장 잡기와 민심잡기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양군수 예비후보로 자천타천 나선 4명의 출마자 중 누가 공천장을 잡느냐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예비후보로는 3선에 도전하는 권영택(51) 현 영양군수를 비롯, 이상용(54) 경북도의원, 이갑형(59) 울산지방경찰청 보안과장, 윤철남(53) 남해화학(주) 경북북부지사장 등 4명이다.

공천의 최대변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의 입김이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역대 어느 때보다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권영택 현 군수가 타 출마예상자들에 비해 몰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 의원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천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군수는 동서축 고속도로 영양나들목, 2차 영양풍력발전단지, 야생동물 멸종복원센터, 음식디미방 등 중·장기 사업의 확정으로 영양 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3선 고지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엄쭉갑치 출사표를 던진 이상용 경북도의원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층과 농민들을 상대로 구석구석을 누비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02년 영양군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윤철남 남해화학(주) 경북북부지사장은 매년 지역 행사 때마다 참석해 주민들과 접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밑바닥 정서부터 차근차근 기반 지지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이갑형 울산지방경찰청 보안과장은 정보통으로서 오랫동안 쌓아 온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낙후된 지역발전을 이룩하겠다며 경주 이씨 문중과 40·60대 지식층을 중심으로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고 영양에서 출판기념회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김성락 · 조두원 · 박진현 · 이희진 · 장성욱 등 오차범위내 접전

(전략)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성락 전 실장은 지난 7일 명예퇴직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후략)



김성락·조두원·박진현·이희진·장성욱 등 오차범위내 접전

6·4지방선거
대구·경북 단체장 누가 뛰나 〈25〉

영덕군수

출마의사 밝힌 사람만 12명
현직 프리미엄 없어 후보군 난립
권오섭·오장홍 등도 공식 출사표

현소 지역민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등 수년 전부터 군수 출마를 염두에 두고 내실을 다져왔으며, 오는 25일 예정된 출근기념회가 공식적인 선거 출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의 박진현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 자신의 정치 기반인 영덕북부 주민들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북부지역 단일후보임을 지역민들에게 각인시키며 남부지역 여론 확산에 주력하는 등 한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지난 8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민과 지근 소통하며 인정 넘치는 고장, 미래가 있는 영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의 쌓은 활동기간에도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희진 전 보좌관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지역을 누비고 있다. 이 전 보좌관은 "22년간 국회 및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일하며 배웠던 소통과 신뢰를 거울삼아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두원 전 서장은 퇴임 후인 지난 2010년 고향인 지품면에 자리를 잡고 3년 전부터 군수 출마 선언과 함께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와 지지층 모으기에 주력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는 조 전 서장은 "경찰에 몸담은 35년간의 경험을 살려 청렴성과 새로운 리더십으로 영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욱 전 감사관은 지난 7월 명예퇴직한 후 출마예상자 중 가장 먼저 영덕읍에 사무실을 열고 학연 및 지연등을 바탕으로 지지세 확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는 15일 출근기념회를 열기로 한 장 전 감사관은 "중앙 및 경북도에서 근무하면서 맺은 인맥들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덕의 10년 후를 대비해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할 때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군수 선거에서 출마를 저울질했던 재선의 권오섭 군의원도 최근 출마 선언을 한 후 평소에 다져 놓은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권 군의원은 "8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현신적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장홍 전 원장은 최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풍부한 공직경험을 살려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영덕을 새로운 관광산업도시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황승일(56) 강구면장이 지난 7일 명예퇴직한 후 선거전에 가세했으며, 박문태(60) 영덕군 자원봉사센터 희림봉사단장, 박병일(54) 영덕자치발전연구회장, 류학래(60) 영덕시장 상인회장 등도 지역을 누비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고, 이강석(54) 영덕군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구 기자 kkg@idaegu.com

의 결 번 호	2014지선36
언 론 사	(주)광주매스컴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구동, 구동오피스텔) 대표이사 마 형 렬
심의대상기사	광주매일신문 2014년 2월 12일자 7면「장만채 道교육감 재선가도 날개다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혀야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교육감)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40%안팎의 높은 지지율로…' 등의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장만채 道교육감 재선 가도 날개다나

(전략)특히 장 교육감은 차기 전남도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바짝 긴장하게 됐다.(후략)


장만채 道교육감 재선 가도 날개다나

의 결 번 호	2014지선37
언 론 사	(주)군산신문사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7길 54 (월명동, 정명인쇄사) 대표이사 김 정 진
심의대상기사	군산신문 2014년 2월 10일자 2면「도지사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 우세」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혀야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도지사)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밝히지 않고 '최근 지역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10% 이상 앞선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등의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도지사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 우세

(전략) 최근 지역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선호도 1위를 차지했고, 송하진 전주시장과 유성엽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후략)



도지사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 우세

강봉균 안 신당 합류 결심(?)보도 잇따라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전북도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안갯속이다.

급 지자율에서는 안 신당이 앞서고 있지만 도지사 후보군 경쟁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지역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선호도 1위를 차지했고, 송하진 전주시장과 유성엽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민주당 후보들이 상위 1~3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 통신사 조사에서도 송 시장과 유 의원이 새누리당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안철수 신당 측 강봉균 전 의원을 제쳤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3자의 대결할 경우 안 신당 후보가 42.8%로 민주당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정동영 상임고문의 차출설이 끊이질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강봉균 전 의원이 안 신당에 합류하기로 최종 결심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안의원으로부터 직접 합류를 제의받았으며 고심 끝에 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의원은 지난 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신당합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선 "고민 끝에 신당에 합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수철 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38
언 론 사	(주)문화일보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2 (충정로1가, 문화일보) 대표이사 이 병 규
심의대상기사	문화일보 2014년 2월 18일자 9면 「"나가면 이긴다" vs "이겨도 안나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혀야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광역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정책연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나가면 이긴다" vs "이겨도 안나가"

(전략) 18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지난 10~12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인천시장 가상대결에서 46.3%를 얻어 42.4%에 그친 민주당 소속 송영길 현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후략)


"나가면 이긴다" vs "이겨도 안나가"

인천 유정복-경기 남경필
여론 여론조사서 野 꺾어
새누리, 출마 설득 본격화

의 결 번 호	2014지선39
언 론 사	(주)한국일보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남대문로2가, 한진빌딩) 대표이사 장 재 구
심의대상기사	한국일보 2014년 2월 20일자 8면 「김황식-정몽준 빅매치 기대 새누리, 수도권 전선 '맑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혀야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광역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정책연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황식-정몽준 빅매치 기대 새누리, 수도권 전선 '맑음'

(전략) 정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중국을 다녀 와서 말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다음주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최고위원까지 포함한 3자 경선의 '빅 매치'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정복 안행부장관이 출마할 경우 송 시장을 46.3%대 42.4%로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후략)

김황식-정몽준 빅매치 기대 새누리, 수도권 전선 '맑음'

남경필·유정복도 경기·인천서 '우세' … 중진 차출론 탄력

6·4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전선에서 새누리당의 전황이 최근 갑자기 밝아졌다. 서울과 인천에서 민주당 박원순 시장과 송영길 지사에 밀리고 경기에서도 야권 주자인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크게 열세였지만 최근 격차를 좁히거나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쟁력 있는 중진 의원들에 대한 차출론도 한층 힘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와 정몽준 의원이 공히 출마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면서 '빅 매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석 고문으로 부임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총리는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월 10일께 스탠퍼드대에서 동북아 정세 특강을 한 후 적절한 시점에 일단 귀국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당초 4월 중순까지 머물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 뜻을 밝힌 것은 출마에 무게를 두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국을 다녀 와서 말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다음주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최고위원까지 포함한 3자 경선의 '빅 매치'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다.

빅 매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박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도 크게 좁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박 시장은 안철수 신당을 포함한 3자 구도에서도 정 의원이나 김 전 총리를 10%포인트로 리드해 왔지만 한국경제 등 최근 조사에서는 양자 대결 격차도 오차범위까지 좁혀졌다.

인천에서는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정복 안행부장관이 출마할 경우 송 시장을 46.3%대 42.4%로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유 전 장관에 대한 설득 작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송 시장이 시 예산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문제삼아 고발여부를 검토하는 등 '송영길 때리기'에도 적극 나서며 인천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에서는 출마에 유보적이긴 하지만 남경필 의원이 민주당 후보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가운데 김상곤 교육감의 거취가 남은 변수다. 새누리당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걱정하고 있지만 2010년 김문수 지사가 야권 단일 후보를 꺾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필승의지를 다지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의 결 번 호	2014지선40
언 론 사	(주)우리일보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14, 305호 (연수동, 두손브랫슬) 대표이사 김 대 호
심의대상기사	우리일보 2014년 2월 24일자 1면「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선거 D-100」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혀야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광역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정책연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선거 D-100

6·4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시장 자리에 여권 후보로 누가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불출마 선언을 한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자리를 놓고 수성이나 탈환이냐 한판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중략)

최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 장관이 출마할 경우 송 시장을 46.3%대 42.4%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선거 D-100

서울시 · 경기도 수성 or 탈환 '빅매치' 예견
새누리, 거물 내세워 '인천시장 탈환'에 총력 펼칠 듯

6·4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시장 자리에 여권 후보로 누가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불출마 선언을 한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자리를 놓고 수성이나 탈환이냐 한판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인천지역은 현 시장인 송영길 시장만이 재선에 나서면서 공격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때 민주당에서 인천시장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이던 문병호 후보는 한발 물러선 상황. 새누리당에서는 이학재 의원을 비롯해 박상은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등 여러명이 지근거리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송 시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게가 있는 황우여 대표나 친박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들이 '간'만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일 내로 후 공천이 가시화되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이미 출마선언을 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더불어 김황식 전 총리, 정몽준 의원의 출마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소속 박원순 현 시장의 대항마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의 흥미가 배가될 전망이다.

우선 새누리당내 최다선(7선)인 정몽준 의원이 이번주 중으로 출마의사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을 갔다 와서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 측근들에 따르면 그의 출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23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정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장고(長考)를 해 온 김황식 전 총리도 출마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미국 출국 당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전 총리는 최근 출마 쪽으로 무게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0일께 스탠퍼드대에서 강연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인 김 전 총리는 귀국과 동시에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는 정 의원과 김 전 총리가 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을 포함해 3자가 대결하는 빅매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경선을 거치면서 당 후보가 주목을 받는 붐업 효과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원순'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지만 초반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최대 변수로 등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다. 새정치연합이 후보를 내면 박 시장의 표가 일부 잠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시장의 여유있는 승리가 예상됐던 초반 전망과 달리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과 새누리당 예상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박빙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서울시장 선거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판세는 지방선거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여야 모두 당력을 집중시키며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재선인 새누리당 김문수 지사가 불출마하면서 여야 간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뚜렷한 강자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는 4선의 원유철 의원과 정병국 의원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 김영선 전 의원도 뛰어 들었다.

민주당에서는 4선의 원혜영 의원과 3선의 김진표 의원이 당내 후보 적합도 선두를 다투며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거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필승 카드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9일 남경필 의원을 만나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 의원은 원내대표 자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남 의원은 회동 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저는 얘기하지 않고 들었다"고 했고 '원내대표 출마'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경기도 역시 선거의 최대 변수는 '새정치연합'이다. 새정치연합은 경기지사 후보를 내는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선거 구도가 요동칠 조짐이다.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후보군으로는 김성곤 경기도 교육감의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특히 김 교육감은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타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서울시장은 박원순 현 시장으로, 경기지사는 새정치연합 후보로 단일화 할 것이란 이른바 '수도권 빅딜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 장관이 출마할 경우 송 시장을 46.3%대 42.4%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엄정애 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41
언 론 사	(주)아시아타임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58 (양평동4가) 대표이사 조 용 하
심의대상기사	아시아타임즈 2014년 2월 17일자 4면「무주공산된 대전시장 자리 누가 잡나」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혀야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전광역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정책연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무주공산된 대전시장 자리 누가 잡나

(전략) 대전시장을 지낸 박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한 자릿수를 얻은 데 반해 단독으로 두 자릿수를 차지하며 여유 있게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다.(후략)


무주공산된 대전시장 자리 누가 잡나

의 결 번 호	2014지선47
언 론 사	주식회사 여수신문 전라남도 여수시 장성1길 26(안산동) 대표이사 황 상 석
심의대상기사	여수신문 2014년 2월 6일자 4면 「'민주당=당선' 본선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도의원)와 관련하여 예상후보자들을 소개하면서 '민주당=당선'이라는 단정적인 기사 제목를 사용하여 여타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당=당선' 본선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

여수지역에서는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6개 선거구에서 각 1명 씩 6명의 도의원을 뽑는다. 이번 호에는 1(돌산읍, 남면, 삼산면, 국동, 대교동, 월호동), 2(여서동, 문수동), 3(한려동, 동문동, 중앙동, 서강동, 광림동) 선거구 입지자들을 소개한다.(후략)


'민주당=당선' 본선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

의 결 번 호	2014지선49
언 론 사	(주)경인일보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대표이사 이 길 여
심의대상기사	경인일보 2014년 2월 12일자 5면「現시장출마제한…후보군10여명백중지세」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과천시장)와 관련하여 사진이 포함된 판세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를 중앙에 배치하며 사진크기를 타 후보자들보다 크게 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現시장출마제한…후보군10여명백중지세

정부청사가 줄줄이 세종시로 이전되면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던 과천시가 도시공동화에 직면했다.(후략)



現시장 출마제한… 후보군 10여명 백중지세

과천시

새누리 강한석·신계용·백남철· 이경수·박연우·구승완

민주 배수문·정의 황순식·녹색 서형원 등 '연갯속 판세'

의 결 번 호	2014지선50
언 론 사	유한회사 완주군민신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대표이사 김 상 곤
심의대상기사	완주군민신문 2014년 2월 12일자 1면「임정엽 군수, 오는 15일 북콘서트」 2014년 2월 19일자 1면「임정엽 완주군수, 북 콘서트 대성황」 2014년 2월 19일자 12면「'변방이 중심을 구할 것이다' 임정엽 완주군수 북콘서트」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 전주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전북 완주군수)의 개인적 행사인 '북콘서트'와 관련 기사를 2주 연속으로 복수의 지면에서 개인사진 및 행사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임정엽 군수, 오는 15일 북콘서트

임정엽 완주군수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북콘서트를 연다.(후략)



임정엽 군수, 오는 15일 북콘서트

오후 2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변방이 중심을 구할 것이다' 첫 선
우석훈 교수와 김미화와의 사회연대경제 토크쇼… 창생 플랜 제시

변방이 중심을 구할 것이다

임정엽이 우석훈과 함께하는 돌직구 대담

임정엽 완주군수, 북 콘서트 대성황

전주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임정엽 완주군수의 북콘서트가 지난 15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무려 1만5천여명의 구름관객이 몰리는 등 도내 출판기념회 사상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후략)

임정엽 완주군수, 북콘서트 대성황

1만5천여명 구름관객 몰려… 도내 출판기념회 사상 최대
2006년 민주당 필승 전진대회 때 7천명 보다 두배 많아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선출 합동연설회 3천명 보다 5배

전주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임정엽 완주군수의 북콘서트가 지난 15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무려 1만5천여명의 구름관객이 몰리는 등 도내 출판기념회 사상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관련화보 12면>

이는 전주화산체육관 개관 이래 최다 관객을 갈아 치운 수치로,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최한 민주당 전주지역 필승전진대회 당시 7,000명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지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등이 후보로 나선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전주합동연설회 당시 3,000명보다 5배나 많다.

특히 이날 행사 시작 전부터 북콘서트를 보러 오기 위한 차량의 행렬로 일대도로가 심한 정체현상을 빚기도 했으며, 행사 한 시간 전 이미 주차장이 만원을 이뤄 화산체육관 진입조차 못하고 되돌아간 차량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도로 정체를 예상하고 일찌감치 행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500여미터 이상 걸어왔다는 관객들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이 인파로 가득 메워져 장내 입구조차 발을 딛지 못하고 밖에서 머물거나 아예 되돌아가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당초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밀려드는 인파로 20분가량 늦춰 진행된 임정엽 완주군수의 '변방이 중심을 구할 것이다' 북콘서트에는 손학규 민주당 고문과 유종근 전 도지사, 이춘석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비롯 이상직(완산을)·김성주(덕진) 등 전주권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강동원(남원 순창)·전정희(익산)국회의원, 최규성(김제완주), 최진호 전북도의회의장, 송하진 전주시장,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전 국회의원과 윤철상 전국회의원 등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인맥들도 대거 참석하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바울교회 원팔연 담임목사, 송광사 도영 큰스님과 금산사 전주지인 원행스님, 섬진강 시인 김용택 선생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임군수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파트너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영상을 통해 북콘서트를 축하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임정엽 완주군수는 참 일 잘하는 사람이다. 완주군을 전국의 대표모델로 성장시키고, 기업도시로 만드는 등 전북을 먹여 살리는 동네로 만들었다"며 "완주군 예산이 전국 1위의 성장률을 보이고, 농촌의 인구와 일자리 증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극찬했다.

임정엽 군수의 미래비전을 담은 '변방이 중심이 되다' 동영상은 전주에서 도의원 등을 지낸 그의 젊은 시절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한 청와대 시절, 8년간 완주군수로서 이뤄낸 성과, 그리고 전주시 창생 플랜 등을 담아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난 15일 열린 임정엽 완주군수의 출판기념회에 2만여명의 관객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진은 북콘서트 장면.

임정엽-우석훈-김미화간에 이뤄진 토크쇼는 사회연대경제의 메카가 된 완주군의 성공을 자양분삼아 전주를 재창조·창생하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와 구체적 플랜 등이 주를 이룬 가운데 자타가 공인하는 입담꾼들답게 진행내내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말미에는 '희망의 길을 열다'라는 임동창의 공연과 함께 관객 모두가 아리랑을 합창했고, 임정엽과 우석훈, 김미화 싸인회에는 관객들이 길게 줄을 서서 인기를 실감케 했다.

저서는 '변방이 중심을 이길 것이다'의 첫 번째 돌직구를 시작으로 ▲두번째 돌직구-지역과 농업농촌에 대한 미처하지 못한 말 ▲세번째 돌직구-지방자치의 본질 ▲네번째 돌직구-전주의 창생(創生) ▲다섯번째 돌직구-창생교육 교육도시 전주의 부활 ▲여섯번째 돌직구-오해와 진실 등 총 6가지 테마로 이뤄졌다.

특히 자신이 구상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전주재창조와 창생 플랜과 관련 창생과 시민, 순환과 미래라는 4개의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는 활력을 잃어버린 지역경제와 주민공동체를 통해 전주를 창생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연결해 통합적 시너지를 만드는 사회연대경제의 실행방안을 담아냈다.

한편 임 군수는 전주완산고를 나와 전주대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법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8년 손주항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 전주 선거구에서 제 4대 도의원을 지낸 뒤 전북도지사 비서실장과 김대중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로 당선돼 8년간 완주군정을 이끌었으며, 2010년부터 4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가 주관한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사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공약지킴이'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장과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 회장, 전주대 총동문회장 등을 맡고 있다. 좌우명은 '도전과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이다.

원제연 기자/bemsuwon@hanmail.net

'변방이 중심을 구할 것이다' 임정엽 완주군수 북 콘서트

- 행사장 인근지역 교통마비 될 정도로 많은 인파 몰려
- 다듬이 연주 · 난타 · 아리랑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져

임정엽 완주군수의 북콘서트가 지난 15일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북콘서트는 도내 출판기념회 사상 최대인파가 몰리면서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후략)



'변방이 중심을 구할 것이다' 임정엽 완주군수 북콘서트

행사장 인근지역 교통마비 될 정도로 많은 인파 몰려
다듬이 연주 · 난타 · 아리랑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져

임정엽 완주군수의 북콘서트가 지난 15일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북콘서트는 도내 출판기념회 사상 최대인파가 몰리면서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
주최측은 이날 행사장이 가득차서 들어오지 못한 채 입구에서 되돌아가거나 행사장 밖에서 머물렀던 참석자들까지 합하면 1만5천여명이 된다고 자체추산 했다.
저서 '변방이 중심을 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북콘서트는 완주군 고산 창포마을 다듬이 할머니들의 투박하지만 아름다운 다듬이 연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주시 '전주아리랑' 율동단, 이성동호회 난타공연도 펼쳐져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토크쇼는 임정엽, 우석훈, 김미화간에 사회적경제연대의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완주군의 사례들에 대해 '뼈있는 입담'이 오가는 등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관객들로 하여금 웃음과 감동도 자아내게 했다.
우석훈 교수와 김미화씨는 토크쇼 말미에 임 군수에게 "로컬푸드를 통해 고령농·소농·여성농 등 사회적 약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올려 놓은 것처럼 전주에서도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정엽 완주군수의 북콘서트를 사진으로 만나본다.

최재연 기자/tamuwon@hanmail.net

임정엽 군수가 우석훈 교수(좌), 개그우먼 김미화(우)씨와 함께 들직구 대담 토크쇼를 펼치고 있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임동창 선생과 제자들이 꾸민 아리랑 노래에 맞춰 임동창 선생과 함께 임실춤을 추고 있는 임정엽 군수.

북콘서트 행사의 포문을 연 함머니그림이 공연(좌)과 전주아리랑 율동단의 부채춤 공연 모습(우).

의 결 번 호	2014지선51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3(인계동) 대표이사 임 재 율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4년 2월 11일자 11면 「600년 고양의 저력이 일군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2014년 2월 13일자 11면 「대규모사업속속착수…미래먹거리준비OK」 12면 「첨단산업·국제무역·교통·물류 중심도시 기반 구축…」 13면 「복지·교육·문화·일자리 확충 시민의 삶 '업그레이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고양시장, 경기 평택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표명구가 만난 최성 고양시장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 삶의 질 세계 1위 도시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현재도 고양시는 교육, 문화, 문맹율 등 모든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비교해도 영국 런던 등 선진국 수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그 근거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화훼, 방송·통신, MICE산업,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일자리 창출도시로 발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역량 평가에서 전국 161개 지자체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페이스북 팬 5만명을 돌파한 소셜미디어 활성화, 전국 최초 현장민원담당제 실시, 주민참여조례 제정, 서울시 기피시설문제 해결, 3천억 예산절감의 시청사 리모델링 등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제도정책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그동안 부족한 재정이지만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분야의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을 40%(4천489억원), 교육예산을 5%(540억원)까지 확대해 보편적 복지 구현과 공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전국 최초 민·관 거버넌스인 고양형 복지브랜드인 '고양 복지나눔 1촌맺기'를 활성화시킨 것은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울러 그는 신한류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라는 비전을 확립했다. 고양 6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시 차원에서 계승 발전 시켰고 한류문화예술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따른 매년 수천억 경제파급효과 달성과 연간 1천만 관광객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2020고양평화통일특별시' 선포,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추진, 고양생태공원 조성, 고양누리길 조성 등을 통해 고양시를 초록평화도시로 탈바꿈 시켜 나가고 있다.(후략)

표명구가 만난

최 성 고양시장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 삶의 질 세계 1위 도시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현재도 고양시는 교육, 문화, 문명을 등 모든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비교해도 영국 런던 등 선진국 수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그 근거로 "아래로 경제상황 속에서도 화훼, 방송·통신, MICE산업, 문화행사가 아우러진 전국 최고의 일자리 창출도시로 발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역량 평가에서 전국 1위가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페이스북 팬 5만명을 돌파한 소셜미디어 활성화, 전국 최초 현장민원담당제 실시, 주민참여조례 제정, 서울시 기피시설문제 해결, 3천억 예산절감의 시청사 리모델링 등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거창 경정이 지정한 제도정책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이와함께 그동안 부족한 재정이지만 일정하고 소모적인 분야의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을 40%(4천4백억원), 교육예산을 5%(54억원)까지 확대해 보편적 복지 구현과 공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전국 최초 만·곤 거버넌스인 고양형 복지브랜드인 '고양 복지스 1촌맺기'를 활성화시킨 것은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울러 그는 신한류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라는 비전을 확립했다. 고양 6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시 자원에서 계승 발전 시켰고 한류문화예술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매년 수천억 경제파급효과 달성과 연간 1천만 관광객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2020고양문화통일축제시' 선포,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추진, 고양생태공원 조성, 고양누리길 조성 등을 통해 고양시를 초록평화도시로 탈바꿈 시켜 나가고 있다.



최성 시장은? ▶1953년 8월 10일 출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참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제 17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 고양시장 ▶한일문화대상 수상 ▶제4회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매니페스토활동분야 우수상

600년 고양의 저력이 일군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지역사회부장 hyo@koonsbo.com

-6·4지방선거가 3개월여 남았는데, 시정운영 방침에 변함은 없나?

"지방선거가 시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간 저의 시정운영의 기본 철학은 '시민제일주의'이고, 이 철학의 바탕에서 여러 성과들이 나왔고, 남은 기간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일에 전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올해는 아미 알고 계시겠지만, '100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정책과 일자리·복지·교육·신한류 등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핵심역량을 육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고양시의 미래경쟁력 구축과 비전을 확립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일자리창출과 주민자치, 한류의 중심도시 위상구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여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시민참여의 다양한 사업들을 활성화시켜 100만 시민이 행복하고 600년 역사도시의 자긍심을 확립,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양원점 AI 발생으로 비상이 걸렸는데 대책은?

"현재 35명으로 예찰반을 구성하고, 지역내 가금류 사육농가 112개 농가를 대상으로 AI 증상 발생과 입·출하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축협의 일반방제기 2개팀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역방제기(1팀)와 일반방제기(3개팀) 등 총 6개팀으로 방역소독반을 구성, 매일같이 철새도래지와 농가, 하천 등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성 종계농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서 현재 고양IC와 장항IC 등에서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지역내에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역내에 발생되더라도 소독약품과 방역물품 등을 충분하게 비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다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우여곡절 끝에 국내 최초로 지정자체 합단지 조성으로 5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시장께서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고, 현재도 불법공제 아쪽으로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바로 덕양구 강매동입니다. 이곳 강매동은 자동 기피시설 집적지역으로 인선ENT·라는 폐기물 업체가 이전해 올 예정으로 덕양구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조성 등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질긴 설득과 협상 끝에 해당 업체의 폐기물시설을 고양시 밖으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외부기관의 연구용역결과 이 지역을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로 조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동차클러스터는 기존 폐차장 개념의 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센터, 전시장, 자동차 정비·교육·튜닝 단지 테마파크 등 자동차 산업의 모든 것이 집약된 종합적인 문화 공간입니다. 자동차클러스터는 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덕양구의 균형발전 그리고 고양시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컨벡스의 모터쇼, 현대오토월드 및 한류월드, 기타 방송관련 시설 등과 연계해야 다양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우리시를 명실상부한 자동차메카도시로 성장시켜 지역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고양시를 찾아오면서 지역경제는 대폭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World는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3만 일대 40만㎡장에 조성되는데, 총 2천567억 원을 투입, 2015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창상 최제를 뿌려왔는데 올해 계획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세계적 규모의 화훼박람회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1회년 발전을 거듭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전행정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대한민국 5대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으며, 포털사이트 다음(DAUM) 2013년 올해의 검색어 전시·공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사로는 유일하게 9위에 선정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삼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단순한 문화 축제가 아닙니다. 그 뛸기에 모든 초점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등 많은 제약에 말인 고양시로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나 대기업 등을 유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류 문화 예술 산업의 육성은 가장 효과적인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꽃박람회는 예년 행사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으로 3천200만 달러 화폐수출계약과 53만 명의 유료관람객을 기록했으며 고양시 전역에서 펼쳐진 문화예술행사와 연계되어 총 110만 명의 관람객들이 고양시를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절목산업장 시장 점유율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고양시 지역내 선인장 농가 및 화훼농가 등에 직접적인 활로가 개척됨은 물론이고, 1천9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100만 시민이 창조하는 600년 고양의 신한류 꽃축제'를 주제로 2014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는 신한류문화예술의 도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일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인구 100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은 우리 고양시민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준 광역시로 위상이 격상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행정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부시장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본청의 실무 국장실도 6국에서 7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지난달 1일 안전행정부에서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에 대한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입법제고(2014.1.1~1.21) 내용을 보면 국장급 3급 정원이 3명이나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변화를 실감하실 텐데요. 안전도시분야에서 위급상황과 관련된 소방 및 구급·재난 등의 업무 처리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이구요.(창원시 사례) 광역단체 업무가 일부 이관되어 일부이지만 광역행정을 고양시에서 처리 받을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됩니다.

아울러 도시 브랜드 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전국 1위의 일자리창출과 주민자치, 한류의 중심도시 위상구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여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시민참여의 다양한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왔습니다.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100만 시민이 행복한 600년 역사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고양시의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캐릭터를 활용한 SNS서비스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페이스 북 팬 수가 5만 명이 넘었는데 비결은?

"우선 무엇보다도 '고양이 세계'와 '고양이 캐릭터'로 친근한 관공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현직 시장인 제가 직접 고양시 페포던스를 한 것도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재미가 넘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구요. '전격의 고양시'와 같은 참신한 홍보아이디어들이 연이어 히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가장 많은 5만 7천명의 팬들을 확보하고 있으니, 저희 스스로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어느 광역자치단체 (서울시청, 경기도청의 3배)보다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SNS를 통해 시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매개체로서, 즐거움도 드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또 민원도 처리하는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서 우리 고양시 SNS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의 SNS는 꾸준한 즐거움을 드리면서 긍정적 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SNS로 들어오는 민원을 실시간으로 담당자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앞으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곁에서 늘 소통하고 나누는 민주주의와 희망의 공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등 10개 분야에서 159개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추진 상황은?

"민선5기 공약사항은 교육·복지 등 10대 분야에서 모두 159건이고, 현재 공약사항 전체 추진율은 8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완료 94건(60%), 정상추진 57건(35%), 단계추진 5건(3%), 장기검토 3건(2%)이며 대부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제일주의'라는 민선 5기의 시정운영철학을 기반으로 수많은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남은 시간 그래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더욱 최선을 다해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감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과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자치 도시를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복지도시를 위해 사방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창조적인 교육, 우리의 부모님들과 장애인,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민들 모두가 따뜻한 마음과 빛나는 재능을 나누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자치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100만 시민들의 열정적인 시정참여는 한편의 드라마였고 감동적인 오케스트라의 공연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예환과 눈물, 진솔한 시민들을 접하며 드거운 눈물을 참 많이도 흘려야 했습니다. 이런 저를 두고 많은 시민 분들은 '울보시장'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시민들께 더 큰 희망을 드리지 못해 스스로 좌절해야 했던 저의 진실성을 알아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같은 이유로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올해 고양시는 600년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100만 시민의 행복도시로 비약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역사적 행보의 한복판에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문화적 수준을 지닌 꽃보다 아름다우신 100만 시민의 열정적인 참여가 자리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2천500여명의 고양시 공직자와 유관기관의 직원들은 시민이 중심되는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위해 모든 열정을 남김없이 쏟아 부을 것입니다. 오직 100만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600년 고양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김호기자·편집-김병순기자

인터뷰/김선기 평택시장

삼성전자산단 현재 22% 공정률
LG전자산단 이미 보상작업 착수
KTX신평택역 · 광역환승센터 준비

채무액 1천510억 연차별 상환결과
현재 719억 채무 재정건전성 양호
예산 절감편성 · 효율적 운영 노력

올해 사회복지 · 건강복지 등 확충
권역별 복지 인프라 구축 앞당겨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온힘

최근 평택시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산업과 경제, 교통과 물류, 복지와 문화 등 지역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평택시가 민선 5기 동안 이뤄낸 주요 성과와 올해 추진할 주요 시책에 대해 김선기 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후략)


인터뷰/ 김선기 평택시장

최근 평택시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산업과 경제, 교통과 물류, 복지와 문화 등 지역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평택시가 민선 5기 동안 이뤄낸 주요 성과와 올해 추진 할 주요 시책에 대해 김선기 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대규모 사업 속속 착수… 미래 먹거리준비 'OK'

삼성전자산단 현재 22% 공정률
LG전자산단 이미 보상작업 착수
KTX신평택역·광역환승센터 준비

채무액 1천510억 연차별 상환결과
현재 719억 채무 재정건전성 양호
예산 절감편성·효율적 운영 노력

올해 사회복지·건강복지 등 확충
권역별 복지 인프라 구축 앞당겨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온힘

2014년 도약하는 평택시

고덕신도시 1단계 착공·포승
현덕지구 사업 순조

삼성전자 · LG전자 등
입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KTX 신평택역사 유치
광역교통 핵심축 자리매김

평택시는 경제 불황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민선 5기 출범 이후 산업과 경제, 교통과 물류, 복지와 문화 등 지역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큰 성장으로 평택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삼성전자 산업단지 착공에 이어 LG전자 산업단지 추가확장, 고덕신도시 1단계공사 착공,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보상 착수 및 현덕지구 신규사업자 선정 등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후략)



2014년 도약하는 평택시

평택시는 경제 불황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민선 5기 출범 이후 산업과 경제, 교통과 물류, 복지와 문화 등 지역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큰 성장으로 평택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삼성전자 산업단지 착공에 이어 LG전자 산업단지 추가확장, 고덕신도시 1단계공사 착공,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보상 착수 및 현덕지구 신규사업자 선정 등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김선기 평택시장이 고덕산단 개발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위)
지제역 삼성도(아래)

첨단산업·국제무역·교통·물류 중심도시 기반 구축…

고덕신도시 1단계 착공·포승
현덕지구 사업 순조

삼성전자·LG전자 등
입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KTX 신평택역사 유치
광역교통 핵심축 자리매김

삼성전자 기공식

복지 · 교육 · 문화 · 일자리 확충
시민의 삶 '업그레이드'

후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 이층레포츠 · 내리문화공원사업 등
- 주민편익시설사업 1천901억 책정
- 시립도서관 · 산단 진입로 사업
- 신장 · 안정지구 도시계획시설 확충
- 평택호횡단도로 · 평택대교 등도 추진

대외기관 우수평가 줄이어
- 공공자치硏, 경쟁력지수 우수기관 선정
- 경영활동부문 전국 2위 오르기도
- 6개부처 후원 지방자치경영대전서
- 복지서비스 · 지역개발 부문 '우수상'
- 기업환경 개선부문은 '최우수' 쾌거(후략)



① 김선기 시장이 지역내 일선 고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② 평택시가 (사)한국컨설팅산업협회와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③ 평택시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아이맘 카페.

복지·교육·문화·일자리 확충 시민의 삶 '업그레이드'

1면에 이어

▶지역개발사업 후대에 기념되는 사업으로 전환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추진된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는 이원대상자가 제한적이고 파급효과가 적은 소규모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대신 후대에 기념이 되는 대형핵심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도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교육, 복지, 문화, 공원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특히 시는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총 1조7천여억원의 미군기지이전 지원사업비에 대해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그동안 마련된 예, 소공원, 소규모 체육시설 등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던 사업비를 줄감조정해 미집행분 8천여억원 중 4천여억원을 변경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시는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부 예산 중 8개 사업 1천901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신규 책정된 공원사업은 내리문화공원사업 308억원, 부락산공원 220억원, 이층레포츠공원 확장에 230억원, 농업생태공원 179억원 등 총 94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 시립도서관 사업에 35억원을 확보해 오성면에 지상 2층, 연평적 716㎡ 규모의 오성시립도서관을 지난해 9월 개관했으며, 복부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35억원을 확보 지난해 11월 개관했다. 이밖에 남부와 북부 산업단지 진입로사업에 71억원, 신장·안정 지구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81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시는 안전행정부, 농축산부, 국토부 등이 특별지원하는 국비 예시 조정을 통해 4개 사업 1천619억원을 추가 및 신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모산골평화공원사업에 281억원, 서부복지타운 205억원, 이화-상계간 도로개설 383억원, 평화예술의 전당 750억원 등 총 1천619억원(전체사업비 2천145억원, 국비 1천619억원, 도비 458억원, 시비 69억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호횡단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자전거도로 및 터널구간의 추가설계에서 사업비가 당초 1천691억원에서 2천695억원으로 추가돼 사업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지역개발사업을 과감히 변경, 국비 657억원을 포함해 전체 증액분 804억원을 모두 확보하기도 했다.

평택호횡단도로 건설사업은 안성천으로 인한 서남부간 통행 불편과 평택호 관광사업의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으로 2006년 말부터 추진했다.

이 사업은 평택대교(1.34km)를 포함해 총 연장 11.89km 왕복 4차로로 개설되며 총 사업비만 2천500억원대에 이른다.

시는 그동안 동안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국도 38호선, 45호선, 34호선이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서남부지역이 연결돼 그동안 장거리 우회로 인한 통행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 사업과 함께 건설되는 평택대교도 평택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기관서 우수한 평가 이어져

최근 평택시는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13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평택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매년 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자료,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 70개 지표를 세분해서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평택시는 시(市) 부문 전국 종합 3위를 차지해 전국 최고수준의 경쟁력 있는 도시임을 이정받았다.

특히 평택시는 행정서비스, 재정운용, 고용창출, 국제경쟁력 등의 지표가 포함된 경영활동부문에서 평택항을 통한 산업효과, 삼성·LG전자 등 초일류기업 유치, 진전재정 운영 측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정부부처에서 후원한 '제10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작각 기업환경 개선, 복지서비스, 지역개발 3개 부문의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기업환경 개선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외부청렴도 전국 1위, 내부청렴도 전국 5위) 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거두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임을 입증하는 등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밖에도 지방재정 군형집행 평가 우수상 수상, 경기도 세정분야 평가에서 11년 연속 수상, 경기도주관 2013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 등 시정의 전반 걸쳐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며,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도시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선기 평택시장은 "앞으로 삼성산단 및 LG전자 산단 조성,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수서-평택간 수도권 KTX 개통 등 우리시 도약발전을 이끄는 각종 사업들을 본격 진행시켜 지방자치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평택시가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민선5기 각종 사업의 추진효과가 이제 다양한 지표로서도 가시화되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52
언 론 사	(주)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2길 19 대표이사 김 락 상
심의대상기사	중부신문 2014년 2월 11일자 12면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올해말 KTX 개통, 서울서 2시간대... 전국적 관광명소로 급부상,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행보 나서

포항시는 지난 1월 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100여 개의 중견기업을 비롯해 부동산투자전문가와 재경 출향 기업인 등 약 300여 명과 30여 언론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후략)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올해 말 KTX 개통, 서울서 2시간대... 전국적 관광명소로 급부상,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행보 나서

의 결 번 호	2014지선53
언 론 사	(주)울진신문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5-1 대표이사 전 병 식
심의대상기사	울진신문 2014년 2월 14일자 4면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올해 말 KTX 개통, 서울서 2시간대

■ 대규모 사업 투자유치에 나서

포항시는 지난 1월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100여 개의 중견기업을 비롯해 부동산투자전문가와 재경 출향기업인 등 약 300여 명과 30여 언론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후략)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올해 말 KTX 개통, 서울서 2시간대

의 결 번 호	2014지선54
언 론 사	(주)경주신문사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69 대표이사 김현관, 손동우
심의대상기사	경주신문 2014년 2월 14일자 19면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올해말 KTX 개통, 서울서 2시간대…
전국적 관광명소로 급부상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통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행보 나서

포항시는 지난 1월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100여 개의 중견기업을 비롯해 부동산투자전문가와 재경 출향기업인 등 약 300여 명과 30여 언론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후략)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55
언 론 사	(주)성주신문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경산리) 대표이사 최 성 고
심의대상기사	성주신문 2014년 2월 11일자 8면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올해말 KTX 개통, 서울서 2시간대…
전국적 관광명소로 급부상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통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행보

포항시는 지난 1월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100여 개의 중견기업을 비롯해 부동산투자전문가와 재경출향기업인 등 약 300여 명과 30여 언론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후략)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포항운하 배 타고, 죽도시장 회 먹고… 포항으로 오이소!"

의 결 번 호	2014지선56
언 론 사	(주)경산신문사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173, 2층 (중방동) 대표이사 최 승 호
심의대상기사	경산신문 2014년 2월 10일자 6면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올해말 KTX 개통, 서울서 2시간대…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통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포항시는 지난 1월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100여 개의 중견기업을 비롯해 부동산투자전문가와 재경출향기업인 등 약 300여 명과 30여 언론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후략)


6 경북소식 2014년 2월 10일 월요일 경산신문

"포항도 이제 수도권이다"

올해말 KTX 개통, 서울서 2시간대 …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통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포항운하 바 타고 죽도시장 회 먹고…포항으로 오이소"

박승호 포항시장

의 결 번 호	2014지선57
언 론 사	주식회사 화성뉴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121-1 세화빌딩 3층 대표이사 민 병 옥
심의대상기사	화성신문 2014년 2월 12일자 6면~7면 「"임기내 추진했던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매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화성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2면에 걸쳐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임기내 추진했던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매진"

■ 창의지성교육은 학생중심의 눈높이 프로그램
■ 공동형장사시설, 님비극복 中 인민일보 소개
■ 공룡 수장고, 연구시설 지은 후 전시관 완성

채인석 시장은 지난 5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관내 학교 3곳이 선정되는 등 민선5기 들어 역점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보여줬다' 며 그동안 이룬 성과를 설명했다. 여기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선정, 콜비 없는 화성콜과 택시안심서비스 개시 등에 대한 나름의 성공을 의미한다.

채인석 시장을 만나 민선5기 역점사업은 무엇이 있었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들었다.(후략)


"임기내 추진했던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매진”

창의지성교육은 학생중심의 눈높이 프로그램
공동형장사시설, 님비극복 中 인민일보 소개
공룡 수장고, 연구시설 지은 후 전시관 완성





정지반 경제 국 · 도비 자본은 실제 사업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이 필수적인 부대시설(편 · 즐임로, 차폐시설 등)을 조합한 선제 사업비의 국비 70%을 도비 15%로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당 건립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에서 행정절차 기간이 길어지는 등 사업지연이 우려됨,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 승인 등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요구도 건의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문) 양극화 문제 해결과 새로운 경제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이 될 '사회적협동조합' 발굴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 지역별, 계층별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발굴을 통한 다양한 업지리장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는 24기의 협동조합과, 3개의 마을기업, 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설립됐으며,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 창업에 6천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프로보노 활동지원 및 빈 · 관협의체 운영(3회)과 지역자원조사 및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운영(6회), 특히 무엇보다도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학교 급식용 등 생산 및 가공 시설(두부, 콩나물 등)을 지원하는 등 도농복합시의 장점을 잘 살린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협동조합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취약소비층확인, 직거래장터,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공모를 통한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 로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 중인가요?

답) 관내 농가에서 100% 계약 재배한 물을 재료로 하는 물가공 공장이 준공되면 더 건강한 학교급식이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도 올 4월 중에 봉담읍에 오픈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소농 · 고령농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참여 농가 조직화 및 교육을 실시해 1,090여명을 교육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 시설과 1차 가공식품 · 친환식품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물, 가공품(두부, 콩나물) 생산 외에도 일반과 등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적극 공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공품은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 학생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고품농업인, 여성농업인, 소농의 인큐파인 농산물 판로 확보로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판매목적 생산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 지난해 화성 국제공룡 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는데, 공룡 화석 보존을 위한 수장고와 공룡 연구시설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 박물관이라 하면 수장고, 연구시설, 전시관 등이 아우러져야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박물관은 전시관만 지어놓고 수장고,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반쪽짜리 박물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시는 공룡알 화석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물공룡 '마리아케라톱스 화성연서스' 공룡 화석을 비롯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화성시 지원으로 실시된 '한~몽 공룡탐사 프로젝트'를 통해 180여점 분량의 공룡화석을 확보했으며, 뿐만 아니라 시화호와 인접한 우수한 지질경관과 다양한 연안 등 · 식물 생태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형 연구 및 교육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가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몽 공룡탐사 프로젝트, 생물 다양성 정보 확보등에 힘을 쏟에 전시표본을 더욱 확보하고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에 수장고, 연구시설을 먼저 시작해 추후 전시표본이 많는 맞춤형 전시관을 지어 박물관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자연유산인 공룡화석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자연체험과 교육장 등의 에듀 테인먼트요소를 결합해 미래 신성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문) 쓸데 없는 통합브랜드 '화성콜'을 운영하고 계시죠?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택시안심서비스' 제도도 도입했는데요. 택시 분야는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답) 지난해 4월 택시 콜 통합브랜드인 '화성콜'을 출범시켜고 콜비도 폐지했습니다. 화성콜은 출범이후 일평균 콜 수가 5천콜 이상으로 호출기 증가했습니다. 아에 시는 충분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올해 신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화성콜 가입 유도와 미콜랑 지역콜에 대한 화성콜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택시 콜 통합브랜드인 '화성콜'의 출범과 안에 이다서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택시서비스도 지난해 11월 시작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택시안심서비스는 택시 승하차시의 위치와 사건, 택시번호 등을 승객 지인과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실아시간 귀가하는 이점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문) 열화칼슘이 아닌 장비를 활용하는 것 위주로 친환경 종합제설대책을 마련하셨죠? 그동안의 경과와 성과가 궁금합니다.

답) 우리시는 서울시 대비 1.4배의 광대한 면적에 관리대상 도로가 1,149개 노선으로 총연장이 1,034km로서 제설장비 및 인력 등이 크게 부족해 그간 도로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겨울부터 '장비위주의 친환경 종합제설대책(섭진화)'을 수립하고 습염식 제설장비와 트비장착 제설 삽날(134대), 보도용 제설기(4대), 제설제 살포기(6대)를 추가 구입해 보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제설효과가 탁월한 친환경 제설방식 중 습염제설방식으로 도로 제설을 하면서 염화칼슘 살포량식 대비 살포거리가 약 2개나 길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해 연간 5억 6천3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 마지막으로 화성신문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답) 화성신문 독자여러분, 형매의 푸른 기운을 받아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많음드린 사업들이 일기내 충실히 추진되거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복지와 크육이 최우선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화성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이 높은 화성시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상복 기자(news@snnews.com)

의 결 번 호	2014지선59
언 론 사	(주)경안일보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829 (용상동) 대표이사 강 정 미
심의대상기사	경안일보 2014년 2월 5일자 12면「대한민국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구미"」 2014년 2월 11일자 12면「근대아리랑의본향…스포츠·관광중심도시 '문경'」 2014년 2월 13일자 12면「구미 전통시장이 살아 움직인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구미시장, 경북 문경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연이어 대규모 국제·전국단위 행사 4개 유치로 들썩

최근 구미시에는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다. 대규모 국제·전국단위 행사가 연이어 유치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단적으로 보면 구미시의 대외적 위상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유진 구미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국제단위 행사 2개, 전국단위 행사 2개를 한꺼번에 유치한 것은 지방의 중소도시로서는 유래가 없는 일이다. (후략)


12 특 집 경안일보

대한민국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구미"

연이어 대규모 국제·전국단위 행사 4개 유치로 들썩

2014

2015

2년만에 전국 최고 모범 도시 · 중소도시 발전 모델 탈바꿈
고윤환 문경시장 “시민 협조와 동참이 밝은 문경 원동력”
폐광촌 위기 넘어 부자농촌, 교육 · 복지가 뛰어난 도시로~

고윤환 문경시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2년이 안되는 짧은 시간에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샘솟게 하고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중소도시의 발전 모델’ 이라는 시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후략)



12 2014년 2월 11일 화요일 특 집 경안일보

근대아리랑의 본향… 스포츠·관광 중심도시 ‘문경’

2년만에 전국 최고 모범 도시 · 중소도시 발전 모델 탈바꿈
고윤환 문경시장 “시민 협조와 동참이 밝은 문경 원동력”
폐광촌 위기 넘어 부자농촌, 교육·복지가 뛰어난 도시로~

고윤환 문경시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2년이 안되는 짧은 시간에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샘솟게 하고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중소도시의 발전 모델”이라는 시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문경의 달라진 위상, 모범 강소도시로 도약

문경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인구 8만의 작은 소도시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모범 강소도시로 변모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문경시는 벤시민 3% 개선운동을 통한 생활흐름가 줄이기 운동, 문경새재의 노정상 철거, 문경냉 수질지역의 돌, 나무를 활용하여 문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푸르미 공원화 사업 등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큰 실적을 거뒀다.

또한 시내경기활성화를 위해 문화의 거리 조성과 같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펼쳐 폐광이후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지속적으로 낙후내 오던 원촌 도심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등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펼치며 모범 중소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했다.

▶예산 5,000억 시대 개막, 최정천 첨의의 해

문경시의 2014년 예산은 총 4,770억원이다. 작년에 비해 9%나 증액된 예산인데, 5,000억 예산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불필요한 경상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유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실현하여 농업 분야와 주민복지 사업 예산에 중점했다.

고윤환 시장은 올해도 실림살이를 알뜰히 하여 시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농가소득 배가운동 지속 추진

‘농민이 참사는 부자농촌 건설’을 꿈꾸는 문경은 사과·오미자 등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해마다 소득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비 농업분야 예산을 18%나 증액하여, 고소득 명품농업 육성에 힘써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꾀한다.

농식품 가공 산업과 농특산물 유통지원을 통한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는 물론 농작물 재배기술 보급과 양파, 감자, 콩 등의 여유작물 재배와 우량종자 보급 및 소득작물 개발을 통해 5년 내 농업소득 2배 늘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내실 있게 추진

지난해 문화의 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예술의 거리, 문화의 거리 조성과 찍거리 특성화 거리 구축을 추진하고 원촌역 주변도 정비하여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모전 오거리에서 흥덕 삼거리까지 중앙로 구간의 원선 지중화 및 간판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만성적인 주차난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근대아리랑의 본향 문경

여러 역사적 고증을 통해 본 때 문경은 근대 아리랑의 효시이자 문경새재아리랑의 탄생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러 상당한 인적을 보이고 있는 국립아리랑 문화센터 유치건립을 통하여 한국정신문화의 정수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아리랑 세계화 포럼을 개최하여 문경새재 아리랑의 가치를 되살려 보며 국립아리랑 문화센터 유치의 전국적 관심도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아리랑 오케북, CD 및 역보도 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국립아리랑 문화센터 유치에 전념하고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 기반 확충

지난해 10월 10일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로 인해 부대원과 가족을 포함하여 상주인구 1,000여명이 유입되고 연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지훈련의 중심으로 탈바꿈했다.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금년 5월에 열리는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도민화합의 장으로 개최하여 2015 경북문경새재국민체육대회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해나갈 수 있다.

기존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문화의 향기를 더하고 스포츠와 레저의 역동성이 가미되어 더욱 밝은 미래가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명품교육도시 건설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5개소를 선정하는 육아종합지원 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과 도비 3억을 확보하여 전국 최고의 키즈드림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분에 전년 대비 140% 증가된 재원을 투입하여 교육경비 지원과 학교시설 공사지원, 원촌공공도시권 현대화사업, 특성화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진취적 급식 등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0년간 200억 거금조성을 목표로 장학한 문경시장학회와 사학진흥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며 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 없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위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다함께 행복한 복지 문경 건설

또한 주민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점비, 자활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영육아 보육사업, 출산장려 사업 등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에 전년 대비 21% 증가된 재원을 투입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보육 사업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출산장려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사회를 실현해고자 한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성장동력 구축

시는 각 분야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모두가 함 사는 문경을 만들기 위해 읍면동별 특화된 사업추진방을 발굴·추진하고자 노력중이다.

문경새재 관광의 고도화 차원에서 주업장이 활성화, 문경 토요자전거 운영, 천둥구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문경온천지구 조성 등 관광, 휴양, 레포츠가 연계되는 관광 코스가 개발될 예정이다.

가은읍 지역의 경우 국책사업인 녹색 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명품 녹색길인 선유동천 나들길의 홍보를 강화하여 제2의 문경새재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지역은 무운터널과 단산터널을 조기에 개설하여 지역을 연결하는 사통팔달 도로망을 완성시킬 계획이며, 산업면의 급한 주변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동로면의 오미자 관여정비 및 오미자 테마관 조성 등 균형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지 정비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심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모범중소도시 모델로 세계의 주목받는 문경

이와 같이 문경시는 혁신적인 발상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문경은 인구 8만의 작은 배꼽촌에서 세계스포츠행사를 유치·개최하고 고소득 명품농업을 기반으로 문화와 관광, 스포츠가 있는 새로운 복합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고윤환 시장은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이 곧 밝은 문경을 만드는 원동력”이라 하며, “그 동안의 도약기를 발판삼아 새로운 명품시대를 시민들과 함께 열고 싶다”고 희망을 밝혔다.

노춘식 기자 knsnco2000@naver.com

문경새재가 시작되는 제1관문인 주흘관 풍경. 잘 정비된 성벽과 관문이 아름다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믿고 찾을 수 있어요"… 문화 관광·지역 경제 중심 발돋움

시설 현대화사업과 상인 역량 강화 교육에 철저

1사1전통시장 결연·온누리상품권 이용 등 만전

구미시는 전통시장과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후략)



12 2014년 2월 13일 목요일 특 집 경안일보

"믿고 찾을 수 있어요"… 문화 관광·지역 경제 중심 발돋움

구미 전통시장이 살아 움직인다

시설 현대화사업과 상인 역량 강화 교육에 철저

1사1전통시장 결연·온누리상품권 이용 등 만전

구미시는 전통시장과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서민들의 생활공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가림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과 장보기구매단 운영, 편의시설 및 주차장 설치, 전통시장과 기업체간 MOU체결, 온누리상품권 판매추가, 착한가격업소 지정(5개)운영, 소상공인 자금지원, 장보기운동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 시설 현대화사업 통한 탈바꿈

도심지역에 대형마트들이 입점하면서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소비층이 이동함에 따라 전통시장은 급격하게 쇠락의 감을 겪게 되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점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배처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2006부터 2013년까지 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가림시설과 점포시설 개보수, 주차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고객이 몰려 찾을 수 있도록 특, 광, 순대, 국밥거리 등 먹을거리를 조성하고 노점상 정포를 집적 단계 정비하는 등 중앙시장 주변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구미중앙시장은 역세권에 위치하여 과거부터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었던 곳으로 보다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시비 79억원을 들여 21면 주차장을 설치한데 이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추가설치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에 나서고 있다.

선산종합시장은 '86년 시군통합이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시골 장터로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배어있는 만남의 장소로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설노후화와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흡어들면서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가림시설, 소방시설, 전기공사 등 1차 시설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시장 이미지 제고와 및 경쟁력 강화 등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과 기업체간, 1사 1전통시장 자매결연

구미시에서는 전통시장과 기업체간 '1사 1전통시장 자매결연 맺어주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구미시지부 상인회와 LIG넥스원을 비롯하여 700개 개 기업·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금년 중으로 1000개 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미지역은 도·농간 복합도시로서 전통시장과 기업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간 MOU 체결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축수산물 및 시자재를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고 있다.

구미 중앙시장은 LIG넥스원, 삼성전자, KR-EMS에 닥자재(3억7천만원)를 납품하여 휴일 좋은 지역농산물을 근로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상생발전과 멤버쉽식으로 애향심을 불어 넣고 있다.

▲ 온누리상품권 이용으로 시장 활성화

'1사 1전통시장 자매결연 맺어주기 운동' 전개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KR-EMS, LIG넥스원, 구미시공무원, 자매결연기관 단체 등에서 기업 및 단체 직원생일, 회사 창립기념일, 각종 행사 시 지급되는 기념품, 체수등품 및 시자재구입을 지역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2012년 113억원, 2013년 40억원, 2014년 300억원을 구입하여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2013년부터 영세 상인들의 자립과 경영력 강화를 위해 자금 지원과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실시하여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경영컨설팅과 창업할 수 있는 금융지원 등 교육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상인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지원

구미시는 상인들의 경영 마시 향상과 고객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점포교육이해분기 실시 및 상인대학 운영, 친절서비스 워크숍, 상인 역량강화 등을 통해 경영인으로서의 자세를 고취시키고 또한 고객 불만 해소법, 시장별 특화상품 개발, 경영시스템 개선 교육 및 성공사례 발표, 선진시장 견학 등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구미시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에 전통시장 전문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수 공산품 노하인 새일센터로 고객 유치에도 박차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부녀회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문화관광지를 연계한 '장보기 구매단'운영, 가판단체 공지자에 대해 매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를 통해 지역에고 품질 좋은 업소를 지정해 지역물가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추석 명절을 전후해에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전개와 온누리상품권(이하 '구입)으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새롭게 도약

2014년 구미시에서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와 부합하기 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하여 구미 중앙시장이 제3의 도약을 하고자 한다.

시장내 지속적인 문화행사 운영 및 고유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체험거리를 개발하여 다시 오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도약하려고 한다.

또한 박정희대통령의 생가와 금오산, 새마을운동의 중흥지로서 이미지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첨단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구미시민의 문화를 창출하여 '그시 오고 싶은, 한 번은 반드시 들러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정덕 기자 kcd7000@yahoo.com

①구미 선산전통시장 전경

②구미시가 전통시장에 편평 공고판을 설치, 상인들과 고객들의 큰심을 끌었다.

③선산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이 구조물로 인해 외부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으며 쾌적한 장보기가 가능해 졌다.

④구미중앙시장 전경

⑤구미중앙시장

선산전통시장 활력주저서 그적허리은혜 심사드립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60
언 론 사	(주)현대일보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 SK 테크노파크 D동 1214호 대표이사 권 오 륜
심의대상기사	현대일보 2014년 2월 17일자 16면 「복지중심 수호천사 역할 '톡톡'」 2014년 2월 18일자 16면 「고양 '시민우선' 신개념 주거환경 조성」 2014년 2월 19일자 16면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 늘고 생활은 편리해진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 옹진군수, 경기 고양시장, 경기 김포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복지중심 수호천사 역할 '톡톡'

- 도서지역서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 취약층 일자리창출등 복지증진 전력
- 소야도 연도교 건설 등 교통불편 해소
- 300인미만 무의도서에 진료소 개소
- 농어업분야 투자 소득기반마련 최선

옹진군은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 서해5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 도발 등으로 나라 전체는 물론 안보에 취약한 옹진군은 어렵고 힘든 한해로서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후략)


News Plus

복지중심 수호천사 역할 '톡톡'

도서지역서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취약층 일자리창출등 복지증진 전력
소야도 연도교 건설등 교통불편 해소
300인미만 무의도서에 진료소 개소
농어업분야 투자 소득기반마련 최선

고양 '시민우선' 신개념 주거환경 조성

주민이 도시설계… 난개발방지·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공청회·시민자문단…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 정립

■ 최성 고양시장

고양시는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시민공청회와 시민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官 주도의 일방통행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소통의 도시계획을 추진한 결과, 생명의 숨소리가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인구 100만명의 준광역도시로 도약하는 고양시는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따뜻한 도시공동체를 목표로 도시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후략)



News Plus

꿈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현대일보 16

고양 '시민우선' 신개념 주거환경 조성

주민이 도시설계… 난개발방지·투명한아파트 만들기

시민공청회·시민자문단…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 정립

① 덕양선 정비공사 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 ③ 2020도시계획 일부변경 공청회

최성 고양시장

고양시는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시민공청회와 시민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官 주도의 일방통행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소통의 도시계획을 추진한 결과, 생명의 숨소리가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인구 100만명의 준광역도시로 도약하는 고양시는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따뜻한 도시공동체를 목표로 도시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정책 지속 추진

고양시는 덕양 · 일산 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 최초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의 조성과 일산서구 지역의 차인정화를 위한 일산서부정비계획 개서 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지난 해 11월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도시브랜드 가치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도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을 놓았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시민참여단, 전문가 자문단, 행정TF팀을 구성하고 주민의 견을 최대한 반영한 고양지역 상생 발전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주민소통과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그린벨트(GB)해제취락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GB지역 해제, 개발행위 · 토지거래허가지역 규제완화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시민의 재산권을 회복시켰다. 특히, △장기간 지체되었던 덕양원 정비공사 준공 △백마사격장 소음 및 도비탄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군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백마사격장 폐쇄 △통행에 불편함을 주었던 탄현지하차도 입시개통 등 시민과 소통하는 업무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어 시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 늘고 생활은 편리해진다

김포, 시민 맞춤형 서비스 '김포 3.0'
선도과제 발굴 추진
정부3.0 실천 4대 핵심가치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관점 공공정보 적극 개발
- 기관 · 부서간 칸막이해소 효율성 극대화
- 중앙부처 공모평가 발굴 우수과제 활용
- 불합리한 제도개선 위한 정책일몰제 운영
- 정책콘서트 활성화 등 소통 채널 다변화
(후략)

News Plus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현대일보 16

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 늘고 생활은 편리해진다

김포, 시민 맞춤형 서비스 '김포 3.0' 선도과제 발굴 추진

정부3.0 실천 4대 핵심가치 '개방·공유·소통·협력' 강화



수요자 중심의 관점 공공정보 적극 개방
기관·부서간 칸막이해소 효율성 극대화
중앙부처 공모평가 발굴 우수과제 활용
불합리한 제도개선위한 정책일몰제 운영
정책콘서트 활성화등 소통 채널 다변화

김포시는 새 정부의 핵심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의 전략 실현을 위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시민이 행복한 '김포3.0'의 시책을 발굴 추진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민관 · 협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 · 부서간 칸막이 해소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협업행정을 실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표과제 발굴 · 추진, 추진체계 확립과 홍보 강화, 협업행정 강화 등 시민이 행복한 '김포3.0'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앙부처의 공모와 평가에도 발굴된 우수과제를 활용,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포시는 '정부3.0'의 4대 핵심가치의 실행을 위해 공공정보 적극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

주요 정책, 복지, 환경, 식품위생, 의료, 교통 등 행정정보 사전 공표 확대와 표준안 모델 적용을 통한 시민들의 정보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입물규정 등 관련 조례의 제 · 개정을 추진한다.

시민패널, 시민제안, SNS 운영을 통해 민-관협치 온-오프라인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입물제 운영, 정책콘서트 활성화 등 소통 채널을 확대 다변화하여 시민 의견의 적극적인 시정 반영으로 정책의 품질 향상과 집행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기관 간, 부서 간 협업행정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광역-기초 간 칸막이 제거와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영상회의를 확대하고 이해관계 및 갈등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관 및 부서 간 공유·협력을 통한 공조강화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같은 과제 발굴로 사회적비용 절감과 예산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민의 그린 PC 운영,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확대 보급, 스마트무한돌보미, U-City 서비스 모델 개발, 취약지역 CCTV 확대설치, 취약계층 안심보호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처럼 '정부3.0」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대 시민홍보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계획 점검과 과제별 컨설팅 등 운영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핵심가치별 과제 실현을 위한 시민 및 공무원 제안 공모를 활성화하고, 추진역량과 실천의식 제고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해 기관 간 기능 중복, 업무영역 간 경계 모호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 개선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조기 완결을 위해 기관 · 부서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포취재본부 기자 pgo@hyundaibo.com
편집=김현희 기자 kh@

Best Gimpo

유영록 김포시장

김포시가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의 전략을 갖는 '정부3.0'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시대 새 희망의 시민이 행복한 '김포3.0' 시책 선도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민관 · 협치 기반

의 결 번 호	2014지선61
언 론 사	(주)전국매일신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 4층 (수진동, 예농빌딩) 대표이사 박 종 문
심의대상기사	전국매일신문 2014년 2월 14일자 3면 「'금강송처럼' 곧게 뻗어갈 울진의 미래」 2014년 2월 24일자 20면 「"뚜벅뚜벅 걷는 순천여행서 '느림의 미학' 만끽하세요"」 2014년 2월 25일자 20면 「동해안 별미 '울진대게 · 붉은대게' 맛보이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울진군수, 전남 순천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광역교통망 확충 · 미래지향적 사업
일자리 확충 ·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품격 있는 지역문화예술 등 육성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군 건설

경북 울진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을 만들어 가는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밝혔다.(후략)



-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천만→ 동천→ 봉화산둘레길 코스 각광
- 밀물과 썰물 · 비움과 채움의 공간 '순천만' 대한민국 최대 규모 자랑 '순천만정원'
- 도심 한 중앙을 가로지르는 '동천' 시민들 대표적 휴식 · 운동 공간으로 사랑 듬뿍
- 동천 장대공원~죽도봉 연결 청춘데크길과 연결 봉화산둘레길 여행객 탄성 절로 (후략)



20 전국매일신문 2014년 2월 24일(월) 제4198호

feel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천만

"뚜벅뚜벅 걷는 순천여행서 '느림의 미학' 만끽하세요"

조충훈 순천시장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순천여행 ▼ 검색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천만→ 순천만정원→ 동천→ 봉화산둘레길 코스 각광

밀물과 썰물·비움과 채움의 공간 '순천만' 대한민국 최대 규모 자랑 '순천만정원'

도심 한 중앙을 가로지르는 '동천' 시민들 대표적 휴식·운동 공간으로 사랑 듬뿍

동천 장대공원~죽도봉 연결 청춘데크길과 연결 봉화산둘레길 여행객 탄성 절로

국내 최대 대게잡이 울진 후포항서
무료 시식 · 도전 기네스 · 요트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 즐길거리로 추억 선사

경북 울진군은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가 품은 보석 같은 먹을거리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언제나 첫 손에 꼽히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를 만날 수 있는 '201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국내 최대의 연안 대게 잡이 항구인 울진군 후포항에서 펼쳐진다.(후략)


20 전국매일신문 2014년 2월25일(화) 제4199호

feel

▼ 임주성(사진 왼쪽) 후포수협장과 임광원(사진 오른쪽) 경북 울진군수가 울진대게를 들고 있다.

동해안 별미 '울진대게·붉은대게' 맛보이소~

201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28일부터 사흘간 ▼ 접속

국내 최대 대게잡이 울진 후포항서
무료 시식·도전 기네스·요트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로 추억 선사

경북 울진군은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가 품은 보석 같은 먹을거리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언제나 첫 손에 꼽히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를 만날 수 있는 '201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국내 최대의 연안 대게 잡이 항구인 울진군 후포항에서 펼쳐진다.

201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는 넉넉한 울진대게 인심과 함께 먼 길을 달려온 관광객들의 소중한 시간을 특별하게 채워줄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준비돼 있다.

먼저 눈여겨봐야 할 행사로는 축제의 주인공인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특별경매 체험이다.

후포수협 위판 장에서 이뤄질 관광객 특별경매 현장체험은 내일 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2일 오전 11시에 각각 울진대게와 붉은대게를 경매에 붙이는 이벤트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미션에 성공하면 현장경매를 통해 모집한다.

입찰된 대게는 즉(살)는는 곳을 마련해 5000원을 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찌서 맛볼 수 있도록 했으며, 만약 경매시간을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1일, 2일 행사장내 부스에서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시식할 수 있도록 자신했보다 많은 물량을 준비했다.

대게와 함께 축제장에는 관광객들이 참여한 재미와 상품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이벤트가 기획되고 있으며, 같은 날 1일 2회, 2일 1회 진행되는 '경매하는 모든 기네스'에는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관람객들의 배꼽을 잡게 될 것이다.

'울진대게를 잡아라', '대게 계급 당기기', '돌려주므 돌려고 대게 뽑기 먹기', '동전 넣고 대게 계급 맞추 먹기' 등 웃음보 터지는 다양한 종목들이 도전자를 앞에 펼쳐진다.

축제기간 중 1일 날 3회에 걸쳐 진행되는 '행운의 보물상'은 201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이벤트로서 보물상이 직접 관람객을 찾아가 다트 판에 선택기회를 주고 선택한 미션을 통과한 대게와 대게 뽕, 축제 기념품 등을 선물로 주어 이는 올진 12명 바지게꾼 놀이에서 영감을 얻은 이벤트로 솜솜한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또한 하루를 여는 입출의 등장, 새해을 장애하는 요트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울진대게 원조마을을 찾아서', '요트체험'이 준비돼 있다.

요트를 타고 에메다운 동해의 바다를 장애하는 기회을 누릴 수 있는 요트체험은 일출요트체험(1일 1회)과 요트체험(1일 5회)으로 나눠 운영돼며 선상일출과 요트소년의 재미뿐 아니라 선상한 대게를 넣고 끓인 선상 대게뚝한 시식(일출요트체험)도 기대되고 있어 색다른 재미를 더할 것이다. 이외에도 '돌솥은 당기기', '12명 바지게꾼 놀이 마당극' 등의 지역 문화행사와 '스타~킹! 쇼', '오픈스테이지 거리의 악사', '열린 공연실' 등 화려한 공연행사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군 관계자는 "올해한 울진대게가 키운 동해안의 별미!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그리고 다양한 행사 모두를 만끽하며 관광객들의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 김상수기자 <kimss@eonmae.co.kr>

의 결 번 호	2014지선63
언 론 사	(주)시대정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54번길 24, 9층 (중동, 천마프라자) 대표이사 권 기 현
심의대상기사	시대일보 2014년 2월 13일자 16면「고양시, 창조성장의 미래 도시로 '도약'」 2014년 2월 18일자 16면「구민과의 소통행정 '무한신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고양시장, 서울 용산구청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MICE산업 폭발적 증가 ·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등

■ 최성 고양시장

고양시는 지난 2013년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조성장개발국을 신설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창조성장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 면에서 많은 잠재력이 지닌 MICE 산업, 신한류관광산업, 첨단지식산업에 일찌감치 주목하고 있는 고양시의 발빠른 대응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다양한 최첨단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풍부한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지역경제도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후략)


시대일보

고양시, 창조성장의 미래 도시로 '도약'

MICE산업 폭발적 증가 ·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등

최 성 고양시장

▲ 전시 · 컨벤션 산업 지원 부지 조성 매진
▲ 브랜드 관광상품의 집중적인 육성
▲ 방송영상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도시 환경 조성
△ 모두가 행복한 복지용산 건설 박차
△ 2030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비전 수립

"구민과의 소통은 민선 5기에 들어선 이후, 우리 구정에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지역간, 계층간, 나아가 정당 간의 갈등을 허물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용산에서만큼은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으로 발목을 잡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민선 5기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성장현 용산 구청장은 소통의 달인으로 구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자자하다.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오는 구민이라도 만나는데 주저함이 없다. 법적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제한이 있지만, 구청장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구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밝다. 용산구의 소통 행정은 무한 신뢰로 이어졌다. 구는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하고, 구민들은 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다. 용산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곧 구정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기에 구민들의 말 하나하나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성장현 구청장으로부터 민선 5기의 소회를 직접 들어봤다.(후략)



시대일보

인·터·뷰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민선5기 소회를 들어본다

구민과의 소통 행정 '무한신뢰' ↑↑

성 장 현 용산구청장

"구민과의 소통은 민선 5기에 들어선 이후, 우리 구정에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지역간, 계층간, 나아가 정당 간의 갈등을 허물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용산에서만큼은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으로 발목을 잡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민선 5기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소통의 달인으로 구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자자하다.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오는 구민이라도 만나는데 주저함이 없다. 법적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제한이 있지만, 구청장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구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밝다. 용산구의 소통 행정은 무한 신뢰로 이어졌다. 구는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하고, 구민들은 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다. 용산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곧 구정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기에 구민들의 말 하나하나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성장현 구청장으로부터 민선 5기의 소회를 직접 들어봤다.

■2014년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용산구가 중점 추진하게 될 화해 역점 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어느새 민선 5기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새로운 용산을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해며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는 책에서도 이르는 덜러가서 구민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계획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급변하도 구민 행복지수 일등구의 명성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구에서는 지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2015년까지 국비와 시비 포함 총 500억을 투입해서 한강로 일대에 방재시설들을 확충해 여름철 집수피해를 예방하고, 한남로로 앞 보도육교와 상가지 고가차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남동에 250대 규모의 주차전용빌딩을 건립해서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해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 용산을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과 청파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계속해서 늘려 나 갈 것 이 며 , 이태원2동과 원효로2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맞벌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선 5기의 최대 성과는 무엇입니까?

우선 구정의 주체인 구민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민선 5기 구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기보다는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현안 사항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직원들,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의아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용산에 오래도록 살고 싶어졌다고 해신 젊은 가장주부들에 이르기까지 구민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용산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데 어입과 대립, 세대와 계층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용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장기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구의 구정목표는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입니다. 이제까 기대되는 도시, 앞으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용산을 끌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습니다. 지금도 용산의 역사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2030년 까지의 장기 비전을 담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용산구가 지금 현 상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생각하면 원칙론, 연속성도 있어야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용산을 중조적 인재와 산업이 모이는 글로벌 중심지이자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녹색지연 환경지로,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세부 계획들도 모두 세웠습니다.

■경복 교육 1번지 용산을 꿈꾸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셨습니다. 용산의 다양한 교육 관련 정책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용산을 "경복 교육 1등구"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민선 5기 취임 초기부터 총 1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했던 용산구 공나무 장학금이 지난해부터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용산구로 이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외국어와 문화까지 배우는 '원어민 외국어 교실'은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중부남습학원연합회와 연계해 어린 학생들을 위한 무료 학원 수강권을 제공하는 '호프엔 드림업(Hope Up Dream Up)', 속명여대와 연계해 베트남 노력을 지속해오셨습니다. 특히, 용산에는 세계적인 소음 관광명소인 이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정운영의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용산구를 '문화 도시'에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태원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곧 용산을 세계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을 세계유수 특화거리로 조성해 주말에는 차량은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지구촉속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 대표 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역 명소들을 중심으로 연계해 캠프 내 학생들을 지원하고 도시로 생각합니다.

■용산을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정운영의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용산을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태원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곧 용산을 세계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을 세계유수 특화거리로 조성해 주말에는 차량은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지구촉속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 대표 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역 명소들을 중심으로 연계해 캠프 내 학생들을 지원하고 도시로 생각합

의 결 번 호	2014지선64
언 론 사	(주)아시아타임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58 (양평동4가) 대표이사 조 용 하
심의대상기사	아시아타임즈 2014년 2월 19일자 22면「구미전통시장, 情·추억이 살아 숨쉰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구미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설 현대화사업
상인 역량 강화 교육 경쟁력 up
1사 1전통시장 자매결연
온누리상품권 이용
지역 경제 활성화

경북 구미시는 전통시장과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구미시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가림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과 장보기구매단 운영, 편의시설 및 주차장 설치, 전통시장과 기업체 간 MOU체결, 온누리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25개)운영 하고 있다.(후략)


구미 전통시장, 情·추억이 살아 숨쉰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65
언 론 사	수도일보 주식회사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4, 705호 (철산동, 금산빌딩) 대표이사 임 영 식
심의대상기사	수도일보 2014년 2월 5일자 16면 「기업 살리고, 일자리 창출이 포천시 미래의 '희망'」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포천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기업 살리고, 일자리 창출이 포천시 미래의 '희망'

■ 기업친화도시 만들어 기업과 취업 희망자에게 행복의 날개 달아준다
■ 2014년 경영여건 개선 주력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경기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2014년 새해를 맞아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는 기업친화도시를 만들어 기업과 취업 희망자에게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올해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후략)


기업 살리고, 일자리 창출이 포천시 미래의 '희망'

기업친화도시 만들어 기업과 취업 희망자에게 행복의 날개 달아준다
2014년 경영여건 개선 주력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66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경신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41 대표이사 이 성 대
심의대상기사	대경일보 2014년 2월 14일자 14면 「상주시축산업 육성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힘쓴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상주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상주시축산업 육성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힘쓴다

상주시는 한·미 FTA 등 시장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선진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총 236억7000만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는 전년대비 103%가 증가한 120억30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축산업을 지켜나가겠다는 시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성백영 상주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중 분석해 본다.(후략)

영세 한우농가에 톱밥지원 사업 지속 추진
한우 암소능력검정·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124억 지원

노후화된 착유시설 현대화사업 등
낙농분야 7개 사업 1억8000만원
가축방역지원 사업 17억원 투자 계획
(후략)


"상주시축산업 육성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힘쓴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67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구영남매일 대구시 동구 공항로 271 (지저동) 대표이사 최 종 탁
심의대상기사	대구영남매일 2014년 2월 13일자 16면「상주시, 그 무엇보다 서민위해 일한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상주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상주시, 그 무엇보다 서민위해 일한다

■ 친 서민 시책 · 각종 현안사업 적극 발굴로 행복도시 건설해

농업도시 상주시가 이미지의 틀을 벗고 새로운 도약을 일궈 시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주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총 35개 사업에 총 1조 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상주·영천, 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로 명실 공히 4통8달의 교통 요충지를 일궈 국토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주시는 시민의 행복한 도시,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상주를 건설하기 위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발굴·추진하는데 매진해오고 있다.

관광도시를 위한 상주 기반조성과 지역문화재 발굴 및 체육활성화로 활기찬 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선지복지구현을 일궈냈다.(후략)


상주시, 그 무엇보다 서민위해 일한다

친 서민 시책·각종 현안사업 적극 발굴로 행복도시 건설해

의 결 번 호	2014지선68
언 론 사	(주)내외일보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길 82, 4층 (온수동) 대표이사 이 희 찬
심의대상기사	내외일보 2014년 2월 5일자 16면「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포천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 기업환경 개선사업 및 기업불편(SOS) 해소
- 신평집단화단지 기반시설 개선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판로확대 위해 해외시장 개척·제품홍보 지원
- 고용률 70% 달성 위해 일자리 창출 확대 집중


16 기획 내외일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기업친화도시 '포천'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새해를 맞이해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는 기업친화도시를 만들어 기업과 취업 희망자에게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2014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기업환경 개선사업 및 기업불편(SOS) 해소
신평집단화단지 기반시설 개선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판로확대 위해 해외시장 개척·제품홍보 지원
고용률 70% 달성 위해 일자리 창출 확대 집중

■ 기업친화도시 '포천'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새해를 맞이해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는 기업친화도시를 만들어 기업과 취업 희망자에게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2014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후략)

의 결 번 호	2014지선69
언 론 사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우석빌딩) 대표이사 서 창 훈
심의대상기사	전북일보 2014년 2월 18일자 5면 「도심곳곳 '문화예술의 옷'… 관광객 발길불렀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 전주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도심곳곳 '문화예술의 옷'… 관광객 발길 불렀다

특화광장 · 거리, 도심품격 높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

지난 2000년 대 중반 도시 디자인의 개념이 부각되면서 전국적으로 도시 디자인 열풍이 불었다. 일명 '아트폴리스(Art-Polis)' 사업으로, 도시 디자인 하나로 도시의 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뛰어 들었다. 전주시도 그 대열에 동참했다.(후략)


도심 곳곳 '문화예술의 옷' … 관광객 발길 불렀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70
언 론 사	서울일보미디어(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815 (구로동 코오롱 싸이언스밸리 2차) 대표이사 김 용 석
심의대상기사	서울일보 2014년 2월 11일자 20면「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 교사는 자긍심」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광역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 교사는 자긍심

- 인천, 2013년 보육정책 최우수기관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3-childcare 추진
- 보육료 · 서비스 · 영 · 유아 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
- 쑥쑥 늘어나는 보육지원, 2014년 4,768억 편성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보육과 교육부담이다. 인천시는 아이들은 우리들의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민선5기 핵심사업(3-care)중 하나를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child-care)'으로 정하고 시민이 행복한 책임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후략)


20 Special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 교사는 자긍심

의 결 번 호	2014지선72
언 론 사	종합일보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92 우성빌딩 4층 대표이사 신 만 균
심의대상기사	경인종합일보 2014년 2월 19일자 16면 「시민 맞춤형 서비스 '김포3.0' 선도과제 발굴 추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김포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민 맞춤형 서비스 '김포3.0' 선도과제 발굴 추진

김포시가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의 전략을 갖는 '정부3.0'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시대 새 희망의 시민이 행복한 '김포3.0' 시책 선도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민관·협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부서간 칸막이 해소, 정책일몰제 운영 등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에 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중략)

핵심가치별 과제 실현을 위한 시민 및 공무원 제안 공모를 활성화하고, 추진역량과 실천의식 제고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해 기관 간 기능 중복, 업무영역 간 경계 모호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 개선하며 각종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조기 완경을 위해 기관·부서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후략)


Newsbank

시민 맞춤형 서비스 '김포3.0' 선도과제 발굴 추진

정부3.0 실천, 4대 핵심가치 개방·공유 소통 협력 강화

의 결 번 호	2014지선73
언 론 사	(주)한국시정일보사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43 (한남동, 시정신문) 대표이사 주 동 담
심의대상기사	시정신문 2014년 2월 6일자 5면 「'주민에게 직접 듣고 즉시 응답하라' 소통행정 제1원칙」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 서초구청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주민에게 직접 듣고 즉시 응답하라' 소통행정 제1원칙

- 규제 풀어 1조3천억 규모 우면산 삼성 R&D센터 유치
-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추모공원 옆 이전 약속 지켜내
- 공무원-주민 한자리에 모여 현안회의, 문제 즉시 해결
- 손주돌보미 강화 · 육아품앗이 등 보육지원 사업 확대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철학을 갖고 현장에서 주민의 불만의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정책을 배우고, 주민의 의견에 즉시 반응하는 현장 소통 행정을 해오고 있다.

또한 소통의 핵심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서초구민들의 불만을 정책아이디어로 발전시키고 있다.

진익철 구청장은 행정의 어떤 영역이 더 필요한지 주민들 의견에 늘 귀 기울이고, 잘 들리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 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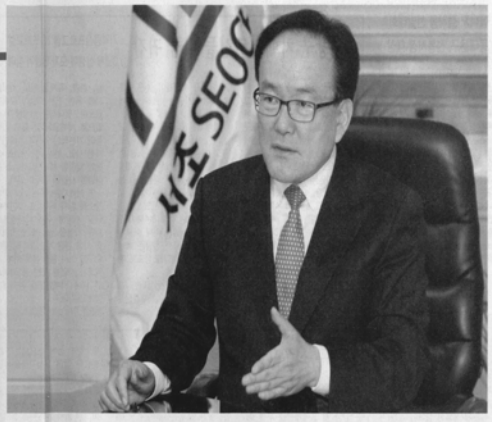
이에 그는 지난 3년 6개월여 동안 1300여명의 서초구청 공무원들을 이끌고 토착비리 뿐 아니라 전례답습, 복지부동, 부서 간 할거주의 같은 관료제 폐해를 척결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창의행정 추진에 열정을 다해왔다.

또한 민선5기 들어 중요한 정책결정 시에는 담당,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및 주민과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 후 결정하는 현안회의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서초구는 2년 연속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에서 '행복지수 1위 도시'로 평가받았다.(후략)

'주민에게 직접 듣고 즉시 응답하라' 소통행정 제1원칙

진 익 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철학을 갖고 현장에서 주민의 불만의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정책을 배우고, 주민의 의견에 즉시 반응하는 현장 소통행정을 해오고 있다.

또한 소통의 핵심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서초구민들의 불만을 정책아이디어로 발전시키고 있다.

진익철 구청장은 행정의 어떤 영역이 다 필요한지 주민들 의견에 늘 귀 기울이고, 잘 들리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 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그는 지난 3년 6개월에 동안 1300여명의 서초구청 공무원들을 이끌고 토착비리 뿐 아니라 전례답습, 복지부동, 부서 간 할거주의 같은 관료제 폐해를 척결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창의행정 추진에 열정을 다해왔다.

또한 민선5기 들어 중요한 정책결정 시에는 담당,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및 주민과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 후 결정하는 현안회의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서초구는 2년 연속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에서 '행복지수 1위 도시'로 평가 받았다.



진익철 구청장이 설을 맞아 어르신들께 떡국을 대접하고 있다.



서초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참여 지도자들과 단체사진 촬영한 모습.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진익철 서초구청장.

규제 풀어 1조3천억 규모 우면산 삼성 R&D센터 유치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추모공원 옆 이전 약속 지켜내
공무원-주민 한자리에 모여 현안회의, 문제 즉시 해결
손주돌보미 강화·육아품앗이 등 보육지원 사업 확대

-취임 후 보람을 느끼는 업적은.

"규제를 풀어 1조3000억 이상의 민자유치(우면삼성 R&D)를 할 수 있다.

우면삼성R&D센터는 2015년 완공까지 3년 공사기간 동안 건설인력 2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완공 후에는 1만여명의 석·박사가 상주하게 돼 다음세대의 일자리,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우면동 2만평 연구시설 부지는 당초 4층 이하, 용적률 240%로 묶여있어 기업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이었으나, 취임 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들까지도 직접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했는데 이는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이 투자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2년 만에 층고 10층, 용적률 360%로 완화해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가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됐고, 1조3000여억원 이상을 투자해 2012년 6월부터 디지털 융합센터와 소프트웨어 R&D센터를 건립 중이다. 공사기간 중에는 건설인력 연간 700명, 총 21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15년 5월 준공 후에는 석박사 1만여명이 상주하는 첨단 과학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또 하나의 보람이라면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추모공원 옆 이전 결실을 들 수 있다.

올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예산으로 185억원을 편성하면서 11년간 지지부진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옆으로 이전하게 돼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2000년 서울시와 복지부는 원지동 일대를 서울추모공원 부지로 선정하면서 그 보상책으로 종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원지동 추모공원으로 이전하는 안을 2003년5월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원이 이전할 부지 66,960㎡(약 2만1000평)을 확보했지만 의료원 이전 부지 비용을 놓고 복지부는 서울시에 토지매상 압박 또는 장기체한 상환을 요구한 탓에 서울시는 '지역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며 시세를 반영한 토지매매가를 요구하는 등 3년 넘게 표류상태이던 것을 서초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 KDI 등을 설득한 결과 이전을 확정하게 됐다.

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 700여개를 갖추고 중증 외상, 감염병, 국가재난 등에 대비하는 공공의료 중앙병원 역할을 할과 동시 노후된 원지동 지역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년 6개월동안 구청을 위한 원칙이 있다면.

"행정의 제1원칙은 '주민에게 직접 듣고 즉시 반응'하는 것이다. 주민과의 현장소통과 주민의 말에 즉시 반응하는 행정, 그리고 주민불만을 정책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왔다.

예산편성은 투명성, 업무처리 속도 개선이다. 전례답습이나 탁상행정 등 폐정폐해를 철저히 타파하고, 업무담당대서부터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외부 전문가 및 관련 주민이 한자리에서 수평토론을 통해 즉시 문제를 해결해 왔다."

-2014년 서초구 행정의 정책 방향과 중점 사업은.

"서초구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시 최초로 안문트윈업무추진 서초구청시대를 발족했다. 서초구민업무추진위원회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도로교통관단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대표 90여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기획총보 등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3대 유형, 23개 실천과제를 발굴·선정했다.

3대 유형으로는 첫째 최근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 즉 성폭력 등 4대 범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 등이 있다. 둘째 매년 많은 피해가 반복되는 분야로는 자살, 중수해, 산불, 감기사고 등이 있다. 셋째 대규모·복합적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로는 지진, 대형화재 등이 있다.

먼저 구는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강남역 침수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루 유동인구 100만인 서초구 강남역 일대는 인근 강남구 논현동보다 매일 17미터 이상 낮아 집중 호우시 빗물이 몰려 물바다가 되고 강남역 일대로 모인 빗물은 반포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가는데 반포천 배수관로(1)"바일이 부족해 매년 침수문제에 시달려 1986년부터 상습침수 지역으로 지정된다.

시에서 강남역 주변 침수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 시설을 포함한 하여본다 방안 등 강남역 침수원인 사안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강남역 침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구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역경을 전달하고 협의에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사람역 주변 반복동 침수 문제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시 상류인 관악구, 동작구의 고지대에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방배역으로 급류가 몰아져 상습적인 침수가 된다. 70년대 도시개발 시 기존 저지대 주거지를 존치시키면서 기형적으로 사당천을 복개해 통수단 면적이 절대 부족하고 자전 및 건선 관거 용량 부족으로 사당역 인근 저지대가 상습적으로 침수 되고 있다.

서방천 주변은 업진 및 반포천의 제곡 통수위 15.76m보다 낮은 저지대가 많아 한강 배수위 영향을 받았다. 서에서는 서방천 주변 침수예방을 위해 서방 I ·Ⅱ제터 현장까지 3.7mm에 대해 지하 하천 빗물저류 배수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올려 중이다.

다음으로 보육분야 사업을 들 수 있다.

우선 보육사업의 일환인 손주돌보미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0년 서초형 아이돌보미제 시행, 2011년 손주돌보미를 시행했다. 손주돌보미 사업 시행으로 아이돌보미 총 398명, 손주돌보미 총 65명을 양성해 총 2956가정에 돌보미를 파견(손주 돌보미 421명 포함) 했다.

현재 551가정에서 돌보미 이용 중 (맞벌이 가정 85, 무지녀 가정 368, 세자녀 가정 94)이며 급년부터는 서초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이용가정의 건의사항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양육품앗이 사업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양육품앗이는 한 5세이하 아이 엄마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육아해주는 내용으로 2011년 2개 모임으로 출발, 올해 32개 그룹, 186가족(아동 320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품앗이에 필요한 활동비(유아 1인당 매월 40000원의 활동비), 양육전문가의 순회 지원, 다양한 양육프로그램 강좌(신체활동, 음악놀이, 숲체험, 요리활동, 과학활동, 공연관람, 미술활동 등), 교재 및 교구와 장소 대여, 부모상담 및 워크숍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구는 올해 이에따른 참여하는 회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이하고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육품앗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서초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지방에 산효율화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또 한국인터넷협회가 주는 지방자치단체분야 인터넷 소통대상을 3년 연속받아 우수한 소통능력을 입증받기도 했다.

이러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변함없이 주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배우고 즉시 반응할 것이며, 서초구의 정책계획과 주민과정들은 모두 주민 여러분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 갈 것이다."

황태홍 기자 kjung7388@naver.com

의 결 번 호	2014지선74
언 론 사	중구신문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9길 2-1, 502호 (저동1가, 이화빌딩) 대표이사 변 봉 주
심의대상기사	중구신문 2014년 2월 12일자 4면 「'똑' 소리나는 행정… 구민과의 약속 100%달성」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 중구청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기사 및 인터뷰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똑' 소리나는 행정… 구민과의 약속 100%달성

중구신문 창간 21주년 특별인터뷰 최창식 구청장에게 듣는다

"일자리는 감동이자 최고의 복지다. 가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상의 해법, 취업 집중 지원 한다"

"학력 신장 상향 평준화 고무적이다. 역사문화 체험하는 관광명소화로 중구 전체에 활력 불어 넣는다."

"중구의 안전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다. 동네 생활 안전도로 만들고 안심하고 편안한 중구 조성 한다."


중구신문 창간 21주년 특별 인터뷰 ⟩⟩ 최창식 구청장에게 듣는다

'똑' 소리 나는 행정 … 구민과의 약속 100% 달성

"일자리는 감동이자 최고의 복지다. 가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상의 해법, 취업 집중지원 한다"

"학력 신장 상향 평준화 고무적이다. 역사문화 체험하는 관광명소화로 중구 전체에 활력 불어 넣는다."

"중구의 안전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다. 동네 생활 안전도로 만들고 안심하고 편안한 중구 조성한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75
언 론 사	(주)일간뉴스경남 경남 진주시 촉석로180번길 10 대표이사 권 성 덕
심의대상기사	뉴스경남 2014년 2월 11일자 5면 「"거짓말에 색깔론까지…조급해진 홍준표"」 2014년 2월 13일자 5면 「홍준표 경남지사 시·군 순방 '논란'…논평 발표」 2014년 2월 17일자 3면 「홍준표, 도지사직 사퇴 후 선거 임해야」 2014년 2월 18일자 3면 「"경남도청 홍지사의 선거캠프로 전락"」 2014년 2월 18일자 4면 「박완수, 무상급식 정책 신뢰성 잃어」 2014년 2월 19일자 5면 「윤영 전 의원, 홍준표 지사 정면 비판」 2014년 2월 24일자 1면 「"지지율 정체된 홍 지사가 민심 분열" 박완수 후보 측, 여론조사 분석 '제각각'」 2014년 2월 26일자 3면 「"'도청 마산 이전' 공약 입장 밝혀라" 박완수 측 "홍준표 도지사, 선거 진술용 헛 공약"」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남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경쟁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연속적으로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거짓말에 색깔론까지…조급해진 홍준표"

(전략) 특히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공해 경남도민을 분열시키고, 자신의 실정을 엉뚱한 '색깔론'으로 은폐시키려는 홍 지사야 말로 정치인 시절 경남보다 대구 챙기기에 바빴던 '뱃속까지 대구시민'이고 진정한 새누리당 당원도 아니다.(후략)


NEWS경남

"거짓말에 색깔론까지…조급해진 홍준표"

박완수 측, 논평 통해 저급한 정치공세 지적

kim6053@hanmail.net

홍준표 경남지사 시·군 순방 '논란'…논평 발표

박완수 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김범준 대변인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시·군 순방에 대해 "선거용 꼼수 순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논평을 내고 중단을 촉구했다.(후략)



NEWS경남

2014년 02월 13일 06면 (사회)

홍준표 경남지사 시·군 순방 '논란'…논평 발표

박완수 측, "홍 지사 시·군 순방 즉각 중단하라"…선거용 꼼수

박완수 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김범준 대변인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시·군 순방에 대해 "선거용 꼼수 순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논평을 내고 중단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홍 지사는 지난해 취임 후 불과 8개월 만에 두 차례나 사전선거용 순방을 하려다 도민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된 지 6개월 만"이라며 "연두 순방은 연초에 하는 것이 관례임에도사전 계획도 없었던 시·군 순방카드를 또 다시 이탈에 몹아 들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홍 지사는 지난해 선거운동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시·군 순방을 전격 취소하고 한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개별 방문하기로 한다고 밝힌 것은 도민의 반대를 피하려 했던 임시방편용 꼼수였었나?"라며 "갑작스럽게 무슨 '긴급 현안'이 생겨서 도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다시 시·군 순방을 강행하려는지, '당당한 도지사'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홍준표 경남지사(왼쪽)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

또한 "경남도민들도 홍 지사의 시·군 순방의 그 속셈을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홍 지사는 중앙정가에서 '홍 꼼수'로 유명하신 분이다"며 "더군다나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국회의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며 꼼수를 부리다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홍 지사는 이번 '지방 선거용 순방'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도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관계자는 "이번 순방계획은 새해 도정운영방향과 시·군의 현안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경남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일우 기자

(20.5×12.0cm)

홍준표, 도지사직 사퇴 후 선거 임해야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민들의 반발 여론에도 지난 13일부터 18개 시·군을 돌며 선심성 약속과 자신의 치적 홍보에 열중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후략)



NEWS경남

2014년 02월 17일 03면 (종합)

"홍준표, 도지사직 사퇴 후 선거 임해야"

박완수 예비후보…'구체적 자료없이 치적 홍보' 비판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민들의 반발 여론에도 지난 13일부터 18개 시·군을 돌며 선심성 약속과 자신의 치적 홍보에 열중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시·군 순방에서 홍 지사는 해당지역 유지들과 주민 등 200~300명씩을 초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론 지역의 주요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등도 포함돼 있다.

박 예비후보 측은 "그의 시·군 순방 일정을 보면 단순한 시·군 순방이 아니다" 며 "도내 전 지역을 몰며 수백 명의 지역주민들과 접촉하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막상으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아니라 박완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홍 지사의 조급증을 반영한 것으로, 명백한 관법과 공수의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백 명의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간부공무원들까지 동원시켜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행위는 자신의 표현대로 '사법적 관단과 정치적 관단'이 다를 분,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박완수 후보 측은 "홍 지사는 즉각 도지사 직을 사퇴한 뒤 예비후보로 정식 등록하고 선거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하고 부명한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새누리당 당원과 경남도민들은 홍 지사의 변한 속셈에 휘둘리지 않는다"며 "정당한 권고와 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사전선거용 시·군 순방을 이어갈 경우 자신에게 준엄한 심판이 '부메랑'으로 몰아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홍 지사는 순방 첫 걸음으로 지난 13일 거제시를 찾아 당당한 경남시대 구현을 위한 도민과의 소통시간을 가졌다.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시·군 현안 등을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통해 도정에 반영, 도민의 삶과 집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홍 도지사는 이날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도정소개 및 도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박일우 기자

(20.8×14.3cm)

"경남도청 홍지사의 선거캠프로 전락"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청을 선거운동 캠프로 전락시키고 있는 여러 정황과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후략)



NEWS경남

2014년 02월 18일
03면 (종합)

"경남도청 홍 지사의 선거캠프로 전락"

박완수, 관권선거 의혹 제기…정보공개 청구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청을 선거운동 캠프로 전락시키고 있는 여러 정황과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은 논평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근일 내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지난 12일 '정무부지사 출장 현황'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경남도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17일에는 정치적 불법 사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계획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박 예비후보측은 "자신에 대해 점점 불리해져 가는 도민들의 여론을 불공정한 관권 선거로 만회시키려 하지 말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박 예비후보측이 제기한 '경남도청을 선거운동 캠프로 전락시키고 있는 여러 정황'이 무엇인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추후 '근일 분명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한 것으로 봐도 또 다른 파장으로 지탄을 개연성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예비후보측은 최근 홍 지사의 시·군 순방과 관련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의 반대성명을 들어 홍 지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예비후보측은 "도민들의 반발 여론에도 경남도내 18개 시·군에 대한 순방을 강행하면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계속해 확산되고 있다"며 "홍 지사의 동보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자 지역 순방 초기에는 관망적 자세를 보였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도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꼬집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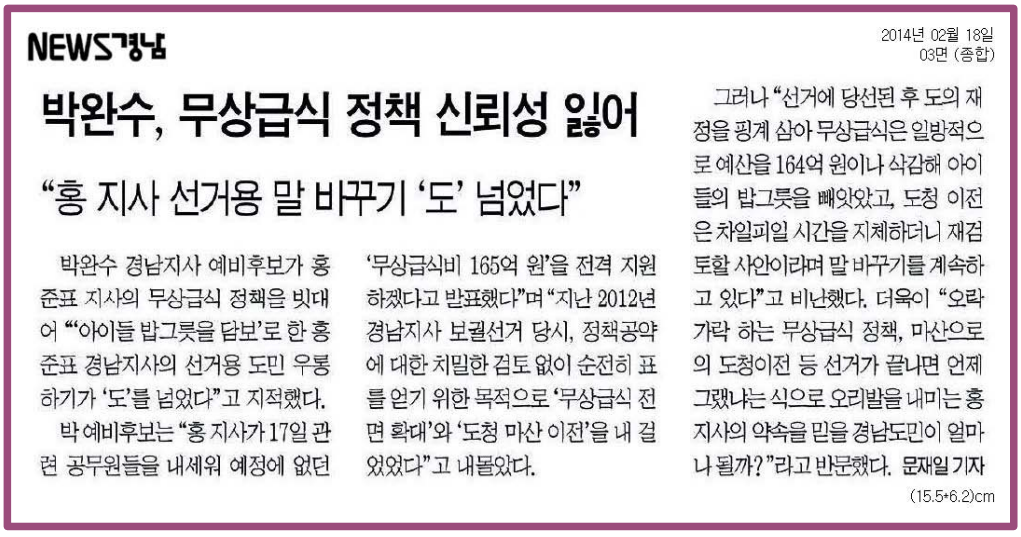
한편 17일 홍준표 도지사는 세 번째 연두순방지로 남해군을 방문해 남해실내체육관에서 400여 명의 남해군민, 기관단체장들과 남해군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도정을 소개했다.

보고회를 마친 홍준표 도지사는 참석한 군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브리핑실을 찾아 남해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연두순방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는 남해전통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등 현장 시찰을 마지막으로 남해군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감했다. 박일우 기자

(20.6*16.3)cm

박완수, 무상급식 정책 신뢰성 잃어

박완수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정책을 빗대어 "'아이들 밥그릇을 담보'로 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선거용 도민 우롱하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후략)



NEWS경남

2014년 02월 18일
03면 (종합)

박완수, 무상급식 정책 신뢰성 잃어

"홍 지사 선거용 말 바꾸기 '도' 넘었다"

박완수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정책을 빗대어 "'아이들 밥그릇을 담보'로 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선거용 도민 우롱하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홍 지사가 17일 관련 공무원들을 내세워 예정에 없던 '무상급식비 165억 원'을 전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난 2012년 경남지사 보궐선거 당시, 정책공약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순전히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도청 마산 이전'을 내 걸었었다"고 내몰았다.

그러나 "선거에 당선된 후 도의 재정을 핑계 삼아 무상급식은 일방적으로 예산을 164억 원이나 삭감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았고, 도청 이전은 차일피일 시간을 지체하더니 재검토할 사안이라며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오락가락 하는 무상급식 정책, 마산으로의 도청이전 등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홍 지사의 약속을 믿을 경남도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문재일 기자

(15.5*6.2)cm

윤영 전 의원, 홍준표 지사 정면 비판

윤영 전 국회의원(사진)이 거제시를 방문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300만 원대 아파트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윤 전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300만 원대 아파트 건설을 성사시키겠다는 홍 지사의 말은 정치적 수사로 치더라도 너무 빗나간 느낌이다.왕조시대도 아닌데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중략)

특히 그는 "300만 원대 아파트 건설 사업은 시장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약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해 특혜시비 등으로 거제시민들 사이에서 무수한 우려와 비판을 받았고, 도 스스로가 이 사업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스스로 부결시킨 사업"이라고 전했다.



NEWS경남

2014년 02월 19일 03면 (종합)

윤영 전 의원, 홍준표 지사 정면 비판

윤영 전 국회의원(사진)이 거제시를 방문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300만 원대 아파트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윤 전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300만 원대 아파트 건설을 성사시키겠다는 홍 지사의 말은 정치적 수사로 치더라도 너무 빗나간 느낌이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 전의원은 "그런 말(300만 원대 아파트 관련)을 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 사업의 실체나 절차적인 문제에 관해 그의 판단능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300만 원대 아파트 건설 사업은 시장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약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해 특혜시비 등으로 거제시민들 사이에서 무수한 우려와 비판을 받았고, 도 스스로가 이 사업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스스로 부결시킨 사업"이라고 전했다.

박일우 기자

km6053@hanmail.net

(10.4*11.2)cm

"지지율 정체된 홍 지사가 민심 분열" 박완수 후보 측, 여론조사 분석 '제각각'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임박하면서 경남도지사 경선에 참여할 박완수 예비후보와 홍준표 도지사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후략)



NEWS경남

2014년 02월 24일 01면 (종합)

박완수 후보 측이 자료화한 지지율 변동표.

"지지율 정체된 홍 지사가 민심 분열"

박완수 후보 측, 여론조사 분석 '제각각'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임박하면서 경남도지사 경선에 참여할 박완수 예비후보와 홍준표 도지사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홍 지사 측 선거준비사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완수 예비후보에 대한 후보적합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야권이 박완수 후보를 역선택한 결과'라며 박완수 후보의 지지도 상승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완수 후보측은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까지 '역선택'이라는 정치공학적 단어를 사용, 무리한 이념공세와 경남도민의 민심을 이분법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최근 홍 지사가 예를 든 4개 언론사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박완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 어디까지 상승세가 미칠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일요서울과 지방언론 여론조사에서 각각 16.3%와 19.8%에 머물렀던 박완수 후보의 후보적합도가 한 달여만에 이뤄진 진주모 일간지와 KBS 여론조사에서 각각 10%가 넘는 28.5%와 39.8%로 상승한 사실 등으로 두 후보 간 격이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홍준표 도지사측은 "지지율 격차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경계할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사를 지지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역선택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일우 기자

km6053@hanmail.net

(10.3*18.5)cm

"'도청 마산 이전' 공약 입장 밝혀라"
박완수 측 "홍준표 도지사,
선거 진술용 헛 공약"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누리당 경선 당시 발표한 '도청 마산 이전'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후략)



NEWS경남

2014년 02월 26일
03면 (종합)

"'도청 마산 이전' 공약 입장 밝혀라"

박완수 측 "홍준표 도시자, 선거 전술용 헛 공약"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누리당 경선 당시 발표한 '도청 마산 이전'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측은 25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약한 '경남도청 마산이전'은 당시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거 전술이었다"며 "지금이라도 그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당시 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후보가 갑작스럽게 '경남도청을 옛 마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마산지역 표를 '구걸'하기 위한 허위공약으로 어렵사리 당선된 홍 지사는 당선과 동시에 '시청사 논의가 마무리되면 견해를 밝히겠다'며 발뺌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시청사 문제가 일단락되자 마산 출신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집단으로 홍 지사를 면담하고 도청 마산이전을 촉구하는 자리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현재로서는 재개하기 힘들다'고 밝혀 사실상 도청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홍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 관계자, 창원시 등을 슬며시 끼워 넣은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 자신의 허위공약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비난의 강도를 더했다.

특히 박 후보측은 "홍 지사 스스로 '선거를 앞두고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광소의 발언처럼, 오직 자신의 정략적 욕심만을 위해 소모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홍 지사는 도지사 경선에 앞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박 후보측은 "홍준표 지사가 더 이상 지역 간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도청 마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것만이 상처받은 옛 마산시민과 창원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경남도청 이전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2년 10월 말 새누리당 경선에 앞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남도청을 옛 마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는 "현재로서는 재개하기 힘들다. 이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경남도 관계자 등을 포함한 연석회의에서 갈등 조정 방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박일우 기자
km6053@hanmail.net
(20.7*16.2)cm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누리당 경선 당시 발표한 '도청 마산 이전'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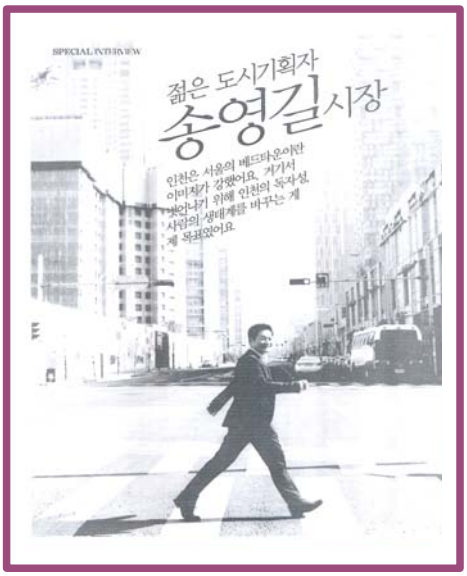
의 결 번 호	2014지선79
언 론 사	(주)더북컴퍼니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1-11 삼덕빌딩 3~6층 대표이사 이 소 영
심의대상기사	주부생활 2014년 3월호 302면~305면 「젊은 도시기획자 송영길 시장」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광역시장)와 관련하여 현직 단체장의 단체장으로서의 일상, 인생관, 문학적 소양등을 활동적인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젊은 도시기획자 송영길 시장

인천은 서울의 베드타운이란 이미지가 강했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인천의 독자성, 사람의 생태계를 바꾸는 게 제 목표였어요.

'세렌디프(Serendip)', 우연히 만난 행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터뷰 장소인 카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는 송 시장은 자상하고 친절했다. 송 시장 부부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처럼 보였다. 아시안게임,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선정 등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인천, 송영길 시장은 활기가 넘쳤다.(후략)







서울 공무원 재촉하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죠

제 꿈이 통일이에요.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4대 강국의 언어를 화성에 배치할 다는 생각으로 서울 공무원 시험했죠. 영어, 중국, 도로 제한 능에 보이는 인프라와도 일치한 능에 있 보이는 인프라요. 언어와 문화는 그런 만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만이에 문화는 인프라입이요. 저는 서울으로서 두 자유처럼 아시안 개념 여론에 의사결정을 많이 합니다. 또 언젠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니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죠. 1년 동안 한 서울 공무, 서울이 해서 아주 잘 처리고 있어요.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공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서서울특을 이용해요. 중국어, 러시아 선생님들이 그날 공부할 문장을 음성으로 녹음해 보내주면 시간 날 때마다 들으면서 그 문장을 읽고 외우는 거예요.

최근에 자기계발서도 냈는데 시간 관리를 무척 잘하나봅니다

아니죠 워커홀리아에요. 스스로 일을 만드는, 일이 좋아 일에 빠져 사는 사람 같아요. 계획된 일정만 소화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일정을 새로 추가해요. 원서 전공해결단계도 4개월에 한 번씩은 방학에서 넘어올 일에요. 일이 일은후 2년 동안을 전공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편 말공로가기 나무 힘들어서 반박은 생길 선생님께 인정받은 혼자 살아 외로우시겠지만 같이 살아도 외롭다고 하소연한 적도 있어요(웃음)

자녀들도 불만이 많았겠는데요

아니죠 아들 키우면서 제가 유독 많이 한 아이거가 있어요. 어떤 때 여자는 이렇게 느낀다. "남자는 어떤 때 이렇게 느낀다. "여자는 어떤 때 이런 걸 원한다" 기획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을 했죠. 이해하면 되면 내 세상에서는 이분법에 적응하죠. 아들은 아빠를 통해 사회를 배우는데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더 주의해서 가르쳤죠. 생학교 2학년을 다니며 아이가 아빠에게 존경심을 갖기를 고요. 조금 어렵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면 아빠에게 물어요. 다른 아빠들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진 못했지만 아빠의 삶 자체가 공정하인 영향을 많이 줬죠. 그 점은 참 감사하죠.

굳 살았는 아이처럼 보존 아이지들의 공간에 어떤 이벤이 있나요

아니죠 도움이 필요. 아내가 예를 이렇게 때 아빠와 함께한 추억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해서 아이디어도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지금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들에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아들에게 이런 큰 시간 갖게 허락받고 유럽일기 여행을 다녀왔죠. 그때 함

제 공부에고 어떻도 다녀본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죠. 지난해엔 아들랜드 생이서 여름휴가를 다녀왔고요.

시 낭송 이벤트를 즐기는 시장

"대체 할머님은 시장이 되어" 송 시장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그 나라 만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대체 가능한 사람이란 좀 비판하잖아요. 그 교육법 비전으로 갖추라고도 조언하죠." 입도 그렇지만 자녀들과 시간을 넓 별 조차 아니들에게 집중한다. 아내 남명심씨는 송 시장이 퇴근해서 종 아이이와 많이 무척 자상한 아버지라고 칭찬한다.

"보이는 아이지만 많이 많아요. 제가 오히려 좀 남성적이고, 남편은 섬세 여성스러운 면이 많아요. 남편이 라 20년 중 막내아들이라 그런지 대학이고 있으면 제 품에 파이 속 안겨요. 제가 도피가라주면 목 떨어 품에 안긴 채로 글로스톤을!"

안에 시장에도 그랬다. 두 사람은 연애결혼으로 이화여대에 재학 중 교회 처음 만났다. 송 시장이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졸은 좋아한다다. 어떻? 면 사람 수 있을까 궁리하던 중 배우들 기획가 찾아왔다. 두 사람이 함께 해서 멀던 집회와 참여했다가 경찰에 붙기는 상황이 됐는데, 아내가 그런 제 남아줬 것, 그 순간, 송 시장이 슈퍼콘처럼 남아가 아내를 일으켜 함께 ! 홈 했고, 두 사람은 그 시간을 계기로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귀지는 송아 프러포즈에 아내는 "나랑 나 사이에 친구지, 두근 떨면우리"에 이들도 아니었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안 것은 송 시장의 편지.

"남구에 남편이 A을우에 넌 함께 리안해야를 써서 보냈죠, 나에게 어머니 되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좋은 글귀, 성경 구절, 시 등 온곳 담겨





인천이 고향인 분에스고 제에 해의 수도로 결정된 데는 분력을 좋아하는 시장님의 영향도 있었겠군요

제 좋아하는 건 아니지 다른인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의 아이에는 늘 뛰을 있는 모습이었다요. 자라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유에스로 계에 해의 수도' 인 것은 3000년도부터 시장에 내놓아면 프러해인에, 해당 세계 여러 도시들이 경합에 의 참여 수도를 정합니다. 인천은 내년 2월부터 계에 해의 수도가 합니다. 특집은 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큰 결에서 한 도시의 심에적입니다. 도시심에서로서 시장님이 가장 큰심을 두는 기획인는 무엇입니까

제가 일이일이으로 삼고 있는 분구가 "한 15년이 걸릴 한 테스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과 독립이 있어야 정도, 사실, 문화적 자주성도 있다는 생각이요. 개인도 자식과 아내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 없이는 다른 것 할 수 없기요. 정치도 그렇죠. 지기 의해적 없으면 정치적으로도 자주성을 지키기 어려워요. 나아도 마찬가지요. 인천은 서울의 베드타운이란 아이지기 생 했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인천의 독자성, 시대의 생태계를 바꾸는 세 계 목표였죠. 고부가가치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했죠. 당장부터도, 별의료, 동아해양 등을 유치해 지금은 인천이 바이오산업 분야의 생산능력 면에서 세계 10 도시가 됐어요.

언젠 의미를 찾았는데 내가 다시 시장 해야 하는 이유'고아라면 골으신다면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웃음). 우선 아직한해입이 5월 10일에 있어요. 제 임기가 6월 30일 끝나니까 두 달 반 정도가 남아는 끝나죠. 지난 4년 내내 준비해왔는데 제가 아무아해서요(웃음). 그리고 '일 안 다기 경제 많을 바꿔 따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가야을 잡고 일하는데 다시 잡을 분 두고 교육혼란 이용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셋째, 인천은 가장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바탕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하죠. 그러려면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의 리더십을 갖추어 하는데, 그 분야에서는 제가 훈련이 잘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허도급 경직가 돼서는 안 돼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인천을 이끌어 이죠. 이해의 가능성도 커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당 독주체제를 견제하는 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내 남편 송영길은 어떤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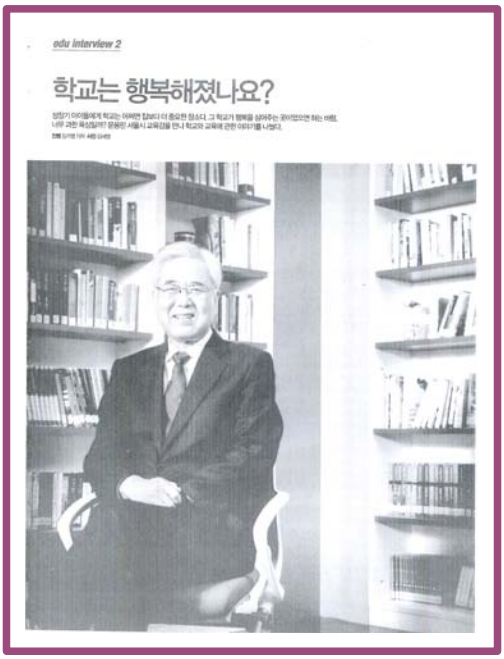
친 남편에게 가장 말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당신 아는하는 만 피할 거면, 당신 같은 코나는 모지고 알궂고요. 고생스러워서 결혼은 다시 못하겠어 만 정말 모지고 싫은 성격요. 아내로서는요? 남편이 보통내스트인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절 무척 사랑한다는 걸 잘 아니까 이정할 수 없지만요.(웃음)

의 결 번 호	2014지선80
언 론 사	조선매거진(주)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2-4 조선미디어 광화문센터 7층 대표이사 김 창 기
심의대상기사	여성조선 2014년 3월호 400면~403면 「학교는 행복해졌나요?」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교육감)와 관련하여 현직 교육감의 재임 중 성과, 교육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학교는 행복해졌나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학교는 어쩌면 집보다 더 중요한 장소다. 그 학교가 행복을 심어주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 너무 과한 욕심일까?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학교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후략)


edu interview 2

학교는 행복해졌나요?



학교 폭력, 학생 인권, 교권 회복— 문 교육감의 고뇌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복장과 두발 등을 규제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례를 교육상 필요할 경우 학교의 장이 복장 등 통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고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도 마찬가지. 이에 시민 단체 등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 문 교육감이 이에 대해 가진 생각은 무엇일까.

자꾸만는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어요. 학교 폭력이나 자살처럼 최근 들어 더욱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떤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 세상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폭에 같아요. 십마 보면 방에도 없지고, 사고도 불구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도 그중 하나고요. 그렇게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희망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혼자 희망을 발견하고 옥저하기가 어려워요.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늘진 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안전망이 되어줘야죠. 세심한 눈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이라는 건 끌어안는 거지, 아이들에게 '네게 어떤 권리가 있으니 주장해야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낸 건가요? 학생인권조례가 아이들로 하여금 '너에는 이런 권리가 있어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잘 보호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생이 교권을 세워서 이들을 보호해주지, 무조건 선생이 학생의 초주이 나를 뒤집 수 없다는 건 아니지요.

아직은 어리니까 선생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학생의 인권은 선생이나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지, 아이가 주장해야 할 인권이 아닙니다. 아이로 하여금 '선생님은 내 초주이나를 뒤집 권리가 없어요. 나도 사생활이 있다고요'라고 얘기하도록 시킬 것이 아니라 선생들이 앞서서 그걸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 사회는 10세 미만에게 복입을 못 물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는 기관으로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겠군요. 교사들을 상대로 한 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알아도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선생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내에서 학생 인권 침해는 선생에 의해서보다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약한 아이가 강한 아이에게 얻어맞았다고, 강한 아이는 주머니에 흉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가 약한 아이를 때리는 데 주머니에 뭔가 위험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선생이 '너 이리 와봐, 주머니에 뭐 들었어?' 할 수 있어야죠. 선생이 화장실을 지나다가 저 뒤에서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걸 목격했다고 쳐요. '너 담배 피웠지?' 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안 피웠다고 발뺌합니다. '주머니에 그건 뭐지? 담뱃갑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하면 아이는 버릴다. 왜인 내놓느냐고 하면 '학생인권조례에 선생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라고 해요. 멀게 있는 친구들은 알양구지하나 사정을 펙스퍼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죠.

그래서인지 생인하면 아이에 관여하지 않는 선생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들이 적음하는 것보다가 나중에는 비겁해지죠. 또본 체하는 거죠. 교육감으로서 선생이 비겁해지는 걸 봐야 합니까? 난 그렇지 않아요. 선생은 부모를 대리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해요. 당 때 피곤 계 화실하고 주머니에 담배가 있고 가방에 라이터가 든 게 화실하다면 '너 가방 열어봐'라고 할 수 있어야죠. 선생은 교육자잖아요. 그 아이의 소지품을 검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하여 위면 학교에서 생활지도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 교육감은 반인권 교육감이다'라고 몰아붙이면 안 되죠.

남은 임기 동안 교권 회복에 신경 쓰고 싶다고 했어요. 교권 회복이라 기보다는 선생들의 생활 지도권을 회복시키고 싶어요.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아이에게 국영수를 잘 가르쳐달라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 사람 만들어주세요'도 있잖아요. 근데 많아 선생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걸 제을라한다면 학부모들은 선생들에게 실망할걸요? 인권조례가 다분히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을 비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을 습관 들이고 적성을 찾을 것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 수업으로 한 주를 시작한다. 시장 수업의 핵심은 사자소학, 인성의 기본이 되는 효와 예를 가르친다. "학문은 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문용린 교육감의 인성 교육의 일환이다.

학구적인 교육보다 인성 교육을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인성 교육은 교육의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명한 말 중에 '사람은 습관이라는 정원을 지나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 조는 일은 단순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습관이라는 정원을 지나야 한다는 거죠. 그 습관이 무아냐. 예의, 정직, 용서, 책임, 의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로 학습에는 책 아니고 존중에 책 습관이지든요. 우리 주변에 많아서 특especially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특especially 한 여러를 넘어 책임을 못 물어요. 아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는 기관으로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보호해야 합니다.

인성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인성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존중에 책 습관이지든요. 우리 주변에 많아서 특especially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특especially 한 여러를 넘어 책임을 못 물어요. 아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는 기관으로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보호해야 합니다.



요. 내가 생기하는 교육의 목표는 출세, 성공, 돈이 아니라 그 세 가지가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페아니힘을 줄 써주는 거죠.

정말 돈 많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지그저한 수레를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대입이요, 웹든지 각자에게 맞는 직업을 하나 가지면 60세 넘어서까지 대다수가 보장이 되는 사회예요. 한국에만 1만5천개. 전 세계적으로 3만 개의 직업이 있어요. 그중 어느 하나만 소질과 적성에 맞게 잘하면 되잖아요. 소사에 간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 하나 잘 타서 세계 최고가 됐어요. 소질, 적성에 맞게 자아실현을 하면 어느 정역에서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학교가 이이상 출세, 성공,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습관, 행복을 위한 소질과 적성의 계발소로 바뀌어야 합니다.

입에서는 어떤 교육적 가치를 가장 중요시한 아버지였나요? 아무래도 내가 이 분야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어디에 소질이 있나, 어디에 관심이 있나에 자연히 관심이 많았죠. 큰아이는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집유히, 공대 쪽으로 갔어요, 둘째는 공부보다는 운동 쪽에 아주 소질이 있어서 결국 체육 쪽으로 가서 체육과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 자녀의 소질, 적성은 언제 어떻게 발견한 건가요? 우리 큰할의 경우, 학교에서 방학 동안 과학 실험 보고서를 쓰라고 했어요. 고민을 하길래 우리 집사람과 내가 힘을 줬죠. '작품의 우유 중에 어느 게 먼저 찌고 거기서 뭔 곰팡이의 차이가 뭔지 알아보면 어떠니?' 그랬더니 재밌겠다며 매일 아침 곰팡이가 슬었나 안 슬었나 들여다보고 혈미경으로 관찰하더라고요. 나중에 학교에서 칭찬받고 과학전시회도 나가면서 스스로 재미를 붙이고 더 열심히 하게 됐지요.

반대로 아직 적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방황하는 경우도 많죠.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적성을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요. 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라고 해요. 아이가 다른 데 관심을 보이면 '잔말 말고 공부나 해'라고 하죠. 공부를 잘해야 할도 살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잘이 계발돼야 하거든요? 근데 꼽은 접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끝이 낮아가버려요.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수능 점수 높게 나오면 부모들은 법대 가서 판사 되고 의대 가서 의사 되라고 말해요. 근데 아이는 판사도 싫고 의사도 싫다고 해요. 그런 뒤 할때, 둘으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 해요. 빼나, 스스로 뭐가 좋은지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에 등 떠밀려 법대, 의대를 가지만 나중이 되어서야 적성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만두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계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유독 '행복'과 '끝'이라는 두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돈구등 같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면 아이 스스로 꿈을 찾게 된다는 것. 결국 자기 주도 학습이다.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키겠다"는 문 교육감의 굳은 의지가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81
언 론 사	주식회사 전남저널 전남 나주시 금성길 3(남내동) 대표이사 허 재 옥
심의대상기사	전남저널 2014년 2월 18일자 12면 「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직위유지」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교육감)와 관련, 현직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관련 등에 대한 2심 재판판결을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의미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재선가도 '청신호'" 등의 내용으로 선거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직위유지

(전략) 50여회에 걸친 압수수색, 100여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 이미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먼지떨이식 집중조사를 한 결과가 이처럼 허무하게 나타난 것이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이 새벽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날이었다는 게 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중략)

2012년부터 시작되엇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순천지법과 광주고법의 수 십 차례의 재판과정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었고 또 이를 지켜보는 교육가족과 전남도민들에게도 안타까운 고통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다.

정치검찰의 집요한 탄압으로 인신이 구속된 상화에서도 "잘못이 있다면 내가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전남교육만은 훼손하거나 흔들지 말라"며 목숨을 건 옥중 단식을 했던 장만채 교육감이다.

교육가족의 자존감과 전남교육을 지키고자 했던 교육감의 의지가 승리한 순간이다. 사불범정(邪不犯正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 장만채 교육감이 너무 억울해 하며 기자회견 장에서 했던 말이다. 정치검찰이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을 부당하게 탄압할 수 없고 전남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판경이었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4개월여 후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도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후략)

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 직위유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1·2심 판결 요지

가. 기소된 사건내역

1. 친구의 카드를 사용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은 중·고·대학 동창과 고교동창 등 29명의 친구들로부터 개인한 공직자로 외압이나 금품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용무유지에 사용하라고 그리고 배당 1백만 원부터 1백50만원까지 자신들이 정산하겠다며 지원한 카드사용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친구들의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찰의 지적과 달리 확립한 대가성이 없었고 교육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한 카드를 두고 정치적 목적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기에 뇌물 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억지주장이라며 1·2심 모두 무죄판결을 했다.

2. 순천대와 신학협력사업을 하는 (주)A사 대표이사로부터의 금품수수

기업이 대외활동이 명목으로 학술장학재단에 기부하정서까지 작성하고 기부한 3천만 원과 1천만원 도합 4천만 원을 문제 삼아 시작한 한 것이다. 정식으로 수입처리 하고 예산에 편성된 음은 물론 대학 이사회의 승인까지 거친 후 용장의 대외활동비로 일부 집행한 것이기에 회령·배임 또는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기업은행 순천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그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P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준 것인데 이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며 1심부터 무죄판결을 했다.

3. 관사관세금의 배임혐의

참은 대학의 특성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의 단순의사이 부른 질문이라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대외활동비 입금통장과 급여통장을 혼용하여 입금한 대학 측의 미숙한 행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총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대외활동비를 사용한 것이 3000만원을 근거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에 따라 이를 단에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그 용서를 정확히 밝히지 못한 900만 원에 대해서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횡령으로 인정하고 1심은 벌금 1천만 원, 2심은 벌금 2백만 원의 판결을 했다.

5. 교수로부터 받은 50만 원 뇌물수수 혐의

피아노과의 H교수가 기획서 부재중으로 일하면서 지난을 잘 보냈다는 취지로 50만원을 사적인 뇌물로 주장한 것을 기소한 것이다.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다. 그 인적 관여과정을 H교수가 담당했었고 그 정산을 마치기 수익금 500만 원이 발생했다. H교수는 학과의 폭넓성과 자율권에 따라 해당교수들과 협의한 후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총장에게 대외활동비로 사용하도록 그 수익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해당교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일이고 또 총장이 그 비용이상으로 대외활동비를 사용한 것이 드러난 상태인데 이를 무고 개인적인 뇌물수수로 볼 수 없어 1·2심 모두 무죄판결을 했다.

6. K교수로부터 3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기부금 모집과 관련하여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심과금으로 받은 K교수가 그 가운데 300만원을 다시 학술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학술장학재단은 외 금액을 수입 처리한 뒤 예산에 편성했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 집행에 따라 총장에게 대외활동비로 지급했다. K교수가 기부한 대상은 총장과는 독립된 학술장학재단이고 대외활동비를 총장에게 지급한 것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결 론

이상기의원이 운영했던 CNC(선거기획사)와 공모하고 장 교육감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차액 한 것으로 본 수사기관이 그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을 부보게 파악하고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다른 방향에서 다시 수사했다.

50여회에 걸친 압수수색, 100여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 이미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단을 받았던 언지웰이사 김종조사를 한 결과가 이처럼 허무하게 나온다 것이다. 이치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게 무리할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이 새벽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날이었다는 게 전남교육자치기 법도단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2012년부터 시작해왔던 소송조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순천지법과 광주고법의 수 십 차례의 재판과정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었고 또 이를 지켜보는 교육가족과 전남도민들에게도 안타까운 고통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다.

정치정장의 집요한 탄압으로 당신이 구속 된 상황에서도 "집행이 있든한 내가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전남교육인은 깨끗하거나 존들의 없다"며 복순을 건 욕한 단식을 했던 장만채 교육감이다.

교육가족의 자존감과 전남교육을 지키고자 했던 교육감의 의지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사법정의(正義)로 '바로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방해하 못할 '. 장만채 교육감이 너무 어둠에 한어 기자회견 장에서 했던 말이다. 검찰정부이 포한들이 있도하인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을 부당하게 탄압할 수 없고 전남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판결이었다.

무려변호사와 일된 4개월의 후에 있을 교육감 선거로도 큰 고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재복 기자

50여회 압수수색, 100여명의 참고인 조사 종지부… 대법원 판결 무난할듯

"판사전세금 배임혐의 적용은 상식수준 넘는 과잉적용"… 재선거도 '청신호'

압박과 핵을 갖이하게 된 교과부가 감사결과에 대해 수사를 요구한다니도.

그 전에를 찾아볼 수 없이 감사가 끝나고 수개월 만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절이었으니 정부의 정책 카운에 하나로 비판지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정부의 태도를 의식해서인지 처음부터 의도적인 목표로 한 순천대학교 총장 그리고 현재는 전남도 교육감을 진보성향이라고 낙인 이를 압박한기 위해 법인 법령공방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사법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막아 억울함을 줄고 부당한을 느끼는 단 한사람의 희생도 없도록 해야만 정변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권력의 잘못된 의도와 부당한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 관심과 노에이 필요함을 새삼 깨닫게 한 재판이었다.

1심의 판결이 정부사업의 입장을 어떠 감조한 판결이었다면 2심은 정부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형실을 직시하고 사회정의를 더욱 심도있게 분석·적용한 판결로 비춰지고 있다.

검찰 측이나 장 교육감 측이 상고를 할 것인지는 더욱 두고 볼 일이지만 법리적용을 떳어나 사건자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차이가 1심과 2심이 크게 다름을 이심의 보여주고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 또한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를 들기 위해 기소된 사건내역과 1·2심 판결 내용을 함께 수록 했다.

(편집자 주)

순천대 총장 재직 시 공사구입비 1억5천만 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2010년 6월 총장을 퇴임하면서 반환한 것을 두고 배임혐의를 적용한 사항이다.

기존의 총장관사가 낡고 수리가 불가능했으며 예산확보가 어려워 전세형태로 확보키로 결정한 순천대학이었다. 전세아파트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전세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웃돌아 어렵 수 없이 총장이 책임지고 아파트를 확보키로 했다. 그러나 총장도 역시 주머지 못했다. 어렵 수 없이 자신의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신 입주키로 했다. 따라서 대학 실무자가 그 입체보관금을 총장의 급료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다. 그 관사구입비를 급료와 함께 사용했는데 이를 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이라고 사건화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정부 업무자오의 하나일 뿐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또 이에 대해서는 교과부와의 감사에서도 지적 은바 없었의 예산을 일집하기 위한 효과적인 일로 해석했다. 따라서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은 상식수준을 넘는 과잉적용이라며 무죄판결을 한 것이다.

4. 학술장학재단의 자금 횡령 혐의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비를 지급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광양제철소 조성, 의·약대 유치 등 국가의 대규모 핵심 프로젝트의 수주를 주도해야 할 총장이었다. 당시 학술장학재단은 총장이 대외적인 역할수행 과정에 그 비용이 부족하여 사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있고 있었다. 총장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대학발전에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술장학재단 이사회는 이를 돕기 위해 장관규정에 따라 대외활동비로 매달 300만원씩 주기로 논의 · 의결 한 것이다.

이 같은 대외활동비의 지원은 전국 국 · 공립대 대부분이 대학발전기금에서라도 총장에게 매달 200~5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장려으로 해 왔 · 지원하고 고 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총장의 업무를 단순하게 따내행사를 비롯하여 공식적인 일정과 언제사에 파악한 경은 법자에 따른 정당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K교수가 300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제공한 것은 사실을 폭로한 참보다 1·2심 모두 무죄판결을 했다.

7. 20억고문료 명함사건

순천대 생활관내의 식당을 운영하는 P모씨(경남 김해시 주산동)이 본인지갑으로부터 3천5백만 원을 사용했다가 반환한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로 엮은 것이다.

정교육감과 관련된 사건과 함께 지금까지 이 사실을 조사한 검찰이었다. 그러나 혐의점이 부족해서인지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경 일가사자한 증소유지 의심 여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은 P모씨를 불러 조사하였다. 따라서 대학 실무자가 그 입체보관금을 총장의 급료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다. 그 관사구입비를 급료와 함께 사용했는데 이를 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이라고 사건화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정부 업무자오의 하나일 뿐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또 이에 대해서는 교과부와의 감사에서도 지적 은바 없었의 예산을 일집하기 위한 효과적인 일로 해석했다. 따라서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은 상식수준을 넘는 과잉적용이라며 무죄판결을 한 것이다.

1심의 판결이 정부사업의 입장을 어떠 감조한 판결이었다면 2심은 정부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형실을 직시하고 사회정의를 더욱 심도있게 분석·적용한 판결로 비춰지고 있다.

검찰 측이나 장 교육감 측이 상고를 할 것인지는 더욱 두고 볼 일이지만 법리적용을 떳어나 사건자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차이가 1심과 2심이 크게 다름을 이심의 보여주고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 또한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를 들기 위해 기소된 사건내역과 1·2심 판결 내용을 함께 수록 했다.

(편집자 주)

나. 순천지법(1심)에서의 유죄판결 내용

가. 국민참여인 순천배판로 총장 재임시절 그 지위를 이용한 '뇌물죄의 배임'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의 판결 받음.

다)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총장의 대외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대출금 상환, 주식거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것은 인정 그 과정이 좋지 못하고 횡령금액도 900만원이다.

나) 총장관사 확보과는 명목아래 순천대학교가상회 자금 10억천만 원을 지원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무상사용 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그리고 추징금 388만5천원.

순천대학교 생활관 내의 식당을 운영하는 P모씨로부터 3천5백만 원을 차용하고 그 원리금 변제으로 3천888만5천원을 법제한 사실을 두고 24개월간 무상사용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에 정한지 않은 방법으로 금융이익 상당액(이자)인 388만5천원을 정치자금으로 부당하게 기부 받은 것으로 판결했다.

다른 지인들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은 선거직후 선관위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했으나 P씨로부터 받은 3천5백만 원과 그 이자 분을 누락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다. 광주고법(2심)의 판결내용

1심판결 가운데 업무추진비 900만원의 횡령혐의만 인정했다. 그리고 벌금 1천만 원이 2000만 원으로 사감되었다.

그런 이노성 총장관사와 관련한 기성회 자금 10억5천만 원의 무상사용은 무죄로,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역시 개인 2억 금전거래에 불과할 뿐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한 것이다.

이석기의원이 운영했던 CNC(선거기획사)와 공모하고 장 교육감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차액 한 것으로 본 수사기관이 그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을 부보게 파악하고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다른 방향에서 다시 수사했다.

50여회에 걸친 압수수색, 100여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 이미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단을 받았던 언지웰이사 김종조사를 한 결과가 이처럼 허무하게 나온다 것이다. 이치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게 무리할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이 새벽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날이었다는 게 전남교육자치기 법도단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2012년부터 시작해왔던 소송조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순천지법과 광주고법의 수 십 차례의 재판과정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었고 또 이를 지켜보는 교육가족과 전남도민들에게도 안타까운 고통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다.

정치정장의 집요한 탄압으로 당신이 구속 된 상황에서도 "집행이 있든한 내가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전남교육인은 깨끗하거나 존들의 없다"며 복순을 건 욕한 단식을 했던 장만채 교육감이다.

교육가족의 자존감과 전남교육을 지키고자 했던 교육감의 의지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사법정의(正義)로 '바로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방해하 못할 '. 장만채 교육감이 너무 어둠에 한어 기자회견 장에서 했던 말이다. 검찰정부이 포한들이 있도하인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을 부당하게 탄압할 수 없고 전남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판결이었다.

무려변호사와 일된 4개월의 후에 있을 교육감 선거로도 큰 고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재복 기자

광주고등법원 형사 전경.

의 결 번 호	2014지선83
언 론 사	주식회사 경향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삼동) 대표이사 현 재 오
심의대상기사	경향일보 2014년 3월 3일자 4면 칼럼「의정부 안병용 시장 상복 터졌다」 2014년 3월 5일자 2면 칼럼「특수상황 지역개발 대통령 수상을 축하하며」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의정부시장, 경기 동두천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수상을 축하하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해당 단체장의 행정 능력 등을 지나치게 미화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의정부 안병용 시장 상복 터졌다

의정부 안병용시장이 임기 4개월을 앞두고 4년여 임기중 그의 치적에 대한 공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까이는 지방행정 혁신에 대한 공헌으로 “2014 한국을 빛낸 사람들” 행정공직부문에서 지방자치발전부분에 대한 지방행정혁신 공로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번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월 26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평소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율곡대상을 수상했다.(중략)

이를 위해 감성행정에서는 시장이나 공무원 자신의 의식전환은 물론, 복장·용모와 언어·태도 등 모든 것을 감성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아울러, 의정부시 주민들에게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싶다.



칼럼

의정부 안병용 시장 상복 터졌다

섬김행정, 율곡문화정신실현대상 지자체민생행정부문 수상

황호 국장

의정부 안병용시장이 임기 4개월을 앞두고 4년여 임기중 그의 치적에 대한 공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까이는 지방행정 혁신에 대한 공헌으로 "2014 한국을 빛낸 사람들" 행정공직부문에서 지방자치발전부분에 대한 지방행정혁신 공로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번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월 26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평소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율곡대상을 수상했다.

율곡대상은 중부율곡재단이 선정하는 상으로, 율곡 이이의 경천사상을 이어받은 이 시대의 참다운 정치인에게 표창해왔다. 수상부문은 국가정치 부문과 자치단체경영 부문, 그리고 광역정치 부문과 기초정치 부문으로 나눠어 각 부문의 관심지역 정치인을 선발한다. 표창하는데, 안병용 시장은 자치단체경영 부문에서 율곡의 수상자로 선정된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의정부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 민주행을 위한 소통행정,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혁신을 위한 참여행정을 4대 시정방침으로 삼아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시장운영이 제 궤도에 들어선 2012년,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와 광생학습도시로 지정받도록 하여 어성과 아동이 행복한 맘룸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2013년 말에는 가족친화우수기관, 민원행정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는 등 자치체로서는 드물게 명성그랜드상을 달성하였다. 또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와 230개 기초지자단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의 크기를 측정한 주민행복도 조사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해 내 도시브랜드인 "행복특별시"에 걸맞는 위상을 떨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가 각종 업무수행에서 얻은 전행정부에서 우여하는 지방재정관행상 최우수 기관 선정을 발부로 2011년부터 3년동안 의정부시의 업무평가 수행 50개분야에서 214회의 각종수상을 비롯해 2012년 지방재정조기집행 평가 대상 (행안부) 지적에어나 과제발표 최우수(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1등급,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평가 최우수선정 중소기업청장의 한국사노비즈클러스터 운영기관 평가 최우수등 2013년도에는 지방재정관행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행안부 최우수) 대한민국 가족지킴이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실천대상(교육부부) 대상,등 특히 민원사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2013년도 각종 평가 수상 실적 등 부공하다.

이와같이 안병용시장은 의정부시 주민생혁도, 폐기는 시장과 공무원 주민이 이루어낸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주거,교통,교육,의료,복지서비스 분야에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의정부에 사는 주민들의 행복한 복도가 전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였다.

의정부시가 주민행복도 우수지자체를 발기까지는 안병용시장은 민선5기 출범부터 민원행정 확인 · 전달업을실시하는 등 안심확인설위원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민원행정 종합기획전략 및 민원행도 추진지점을 수립하여 민원 서비스에 대한 계획부터 평가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을 "가족서열" 로시정하는 "집 작원 가족서열 바지달기 운동"은 전국에서도 유일한 시책으로, 그 복잡상을 인정 받아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트위터, 블로그, 케이스북을 개설운영하여 시민들이 시장에 대한 활발한 디지털 참여와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신속히 수행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서비스로, 임산부, 노약자 전용창구를설치하여 민원처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다양한민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또한,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해민원 1회 방문 신속 장구 운영, 민원인 휴게실 설치, 민원조정위원회, 시민심사청구제, 민원무인단말 제도 등 민원인의 편의성증능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 12일 9일 경기도로부터 2013년도 민원시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율곡대상을 계기로 의정부시 의정부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365일 언제나 시민과 소통하고 섬기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의정부시가 그동안 주민에오던 각종 시책들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이해들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많은 수상의 영예를 받은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안 시장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빨로 뛰면서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바라는지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일기를 바부리해 줄으로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주민지지의 확산에 근거하여, 취하 직원들에게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성(感性)은 이성(理性)에 반(反)하는 개념이다. 이성이 냉철함 이라고하면, 감성은 따뜻한 가슴이다.

이성은 "사람을 움게 한다"라는 힘, 또는 진부(眞理) · 선악(善惡)을 식별하는 능력" 이다. 이에 이어졌든 우리 보통 시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성보다 감성에 더 호감이 간다. 이성은 딱딱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데 비해, 감성은 부드럽고 인정이 넘치는 돗하다.

그래서인지 감성행정을 중요시하는 의자체은 "감성은 인간본성에 내재하는 것"이라면서 "거리보다는 가슴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성행정은 감성화를 도모하는 행정이다. 감성행정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 친화적 · 고객 지향적 행정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감성행정에서는 시장이나 공무원 자신의 의식전환은 물론, 복장 · 용모와 언어 · 태도 등 모든 것을 감성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아울러 의정부시 주민들에게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싶다.

특수상황 지역개발 대통령수상을 축하하며

당당한 동두천! 바로서는 동두천! 두드림 동두천! 이라는 기치를 내 걸고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를 열겠다는 신념으로 미래의 희망과 행복의 꿈을 키우는 교육문화도시, 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 일자리 많고 살맛나는 지역개발의 핵심도시로 삶의 질이 최고인 행복한 두드림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위해 오늘 도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시민행복 서비스를 실현해 가고있다. 또한 두드림 동두천 완성을 위해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성원에 소통과 신뢰를 아끼지 않고 있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서울과인접한 미군부대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했으나 민선4.5기 오세창시장 재임이래 2011년 행정선진화 우수사례 국무총리상을 필두로 201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015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을 수령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3월에는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제3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한편, 지난해 말에는 명품거리선정 (전철하부공간녹지 및 메타세콰이어) 산정으로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민선 5기에서만 120개의 많은 수상의 영예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타 지자체의 모범으로 꼽고 있다.

이와같이 오시장은 교통대책 어려운 지역 재개도를 극복하고 지방행정 균형집행이라는 집행을 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각종 정부인증제도를 활용면서 지방행정의 롤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동두천 오세창시장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섬김행정을 펼치면서 출곧 시민들과 밀접한 민원서비스 재고노력, 친절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친 것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 같다"면서 "시민들이 믿어주시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참호 국장

칼럼

특수상황지역개발대통령수상을축하하며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주거,교통,교육,의료,복지서비스 분야에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동두천에 사는 주민들의 행복만족도가 전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동두천시가 각종 업무수행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수여하는 지방행정달인수상, 명품거리 선정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오세창 시장이 그만큼 타 지방자치단체장보다 행정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며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과 신뢰에서 비롯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은 민선5기 출범부터 시정방침인 두드림 동두천의 기치와 살맛나는 미래도시를 구현하기위한 노력의 결과로『시민을 위한 섬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 서비스 시책을 발굴 · 실천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시에서는 민원행정확인을 위한 ·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계획부터 평가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을 "가족처럼" 모시겠다는 일념으로"전 직원들은 주민을 가족처럼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들이 시장에 대한 활발한 디지털 쌍방향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신속히 수렴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서비스로 임산부, 노약자전용참구를설치하여 민원처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또한, 법과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해민원 1회 방문 상담 참구 운영은 시장 직속부서 민원상담관제를 운영, 민원인 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사전 심사청구제, 민원미란다 제도 등 민원의 편의성은높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여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 12월 5일 경기도로부터 2013년도 민원시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동두천시는 향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계기로 희망도시 동두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365일 언제나 시민과 소통하고 섬기는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며,민원행정 증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구축 등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한다.

수요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행정 실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행정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증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기 개선 · 보완하고 민원서비스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혔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지만하지 않고 2014년에는 지난해의 평가결과를 거울삼아 보다 많은 분야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섬김행정의 실천으로 동두천시가 명실상부한 교육, 문화, 행정의 중심도시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자는 오시장을 중심으로동두천시가 그동안추진해오던각종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강한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많은 수상의 영예를 받은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오세창 시장은 자신감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난관에 직면해 있는 동두천시의 담당사업도 주민들과 가슴을 열고 오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

오 시장은 이번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투한불꽃대회 수상은 540여 동두천시 공직자와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9만8천명의 동두천시민의 공으로 돌렸다.

한 지역의 수장으로서 행정력을 펼치다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될 수 있다. 그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를 보필하는 참모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민관, 전문가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듭해서 시행해야 하며, 한번 결정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으로 알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지방행정 균형집행 평가로 안전행정부의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은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동두천 시민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값진 결과이다.

이는 동두천시의 자랑이자 동두천시민이 다함께 축하할 일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동두천시와 시민들이 더욱 합심하여 연속글로벌 CEO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길 기대한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85
언 론 사	광남일보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00-3 대표이사 김 선 남
심의대상기사	광남일보 2014년 3월 6일자 3면 「'진보' 분열 우려 경선 참여 수용」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혀야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시 교육감)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등의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진보' 분열 우려 경선참여 수용

■ 경선방식 등 세부 합의까진 험로 예고
■ 非전교조 후보들도 합종연횡 나설 듯

(전략)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장 교육감은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후보들은 이를 최소화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중략)

또 다른 예비후보는 "앞으로 다른 후보들과 긴밀히 협력해 광주 교육을 되살리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결국 선거가 전교조와 비전교조간 대결로 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시민사회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에 참여하기로 전격 선언하면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시교육감 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현 교육감 추대냐, 3자 경선이냐'를 놓고 분열 양상마저 보이던 진보 시민·교육단체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후속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선 이른바 비(非)전교조 후보 6명의 표 결집을 위한 정치적 연대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경선 방식과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적 변수 등으로 단일후보 선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진보' 분열 우려 경선 참여 수용

경선방식 등 세부 합의까진 험로 예고
非전교조 후보들도 합종연횡 나설 듯

◇경선 전격 수용 이유

그동안 장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은 "시민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4년 전 자신을 시민후보로 추대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들에게 정치적, 도의적 빚을 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전교조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경쟁 후보들이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면서 불출마를 촉구하거나 공개토론을 통한 경선을 주장할 때도 장 교육감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던 장 교육감이 경선 참여로 뜻을 굳힌 데는 진보진영의 분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정면 승부를 통해 진보진영을 껴안고 가겠다는 정치적 승부수로 보인다.

장 교육감의 한 측근은 "경선 참여 시 예상되는 흔탄과 신학기 행정 공백 등을 우려,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진보진영의 대의(大意) 실현을 위해 통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전교조 간부 등 주변 측근들에게 '누가 되든 단일화는 꼭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진보진영의 분열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 추대에서 선거운동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4년 전과 달리 진보진영이 좀처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 한 관계자는 "어젯밤 추대냐, 경선이냐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전교조에 함께 활동했던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과 정희곤 광주시 교육의원이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장 교육감을 포함, 다자간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촉구하며 "5일 오전 11시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최후통첩한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민주화와 개혁, 참교육, 전교조 운동을 함께 한 이들과의 갈등이나 결별 등의 말들이 나와 마음이 아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선 방식과 주체는

장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진영의 후보 단일화에는 같은 전교조 출신인 윤봉근·정희곤 예비후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봉근 의원 등이 문호를 개방한다고 밝혔지만 정책이나 성향이 근본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경선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면 경선 주체와 방식을 놓고 후보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일련의 과정은 누가 책임지고 진행할 것인지, 선거인단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과제는 산적하다.

특히 후보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여론조사 반영 비율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장 교육감은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후보들은 이를 최소화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5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타 지역 후보단일화의 경우 경남은 여론조사(40%)+선거인단(60%), 인천은 현장투표(55%)+여론조사(35%)+시민단체(10%)로 경선 룰을 정했다.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만큼 장 교육감이 언제 경선에 뛰어들지도 관심사다. 신학기 교단의 혼선과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3월은 지나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시교육청은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은 5월14일까지며 정식선거운동 기간은 5월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3일까지다.

◇비전교조 후보 단일화

그동안 10명에 가까운 후보가 난립하면서 시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성향과 비(非)전교조, 제3지대 등 3각 구도로 치러질 것이 예상됐으나 장 교육감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전교조 단일후보와 비전교조 후보간 이념적 양강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비전교조 진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을 비롯해 고영을 고구려대 이사장, 김영수 광주발전연구소 이사장, 김왕복 전 조선이공대 총장,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박표진 전 광주시 부교육감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공식 출마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사실상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당수 후보들은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어서 전교조 출신 후보의 단일화에 맞선 합종연횡이 점쳐진다.

이번 선거가 전교조 진영 대 비전교조 진영의 싸움인 만큼 상대방이 결속했다는 것은 상대 후보들의 선거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전교조 진영의 한 예비후보는 "몇몇 후보는 이미 출마를 접거나 조만간 포기를 선언할 것"이라며 "남은 후보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시민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긴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앞으로 다른 후보들과 긴밀히 협력해 광주교육을 되살리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결국 선거가 전교조와 비전교조간 대결로 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경석 기자 pius97@

(20.5×31.9)cm

의 결 번 호	2014지선86
언 론 사	경남매일신문(주)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104번지 6층 대표이사 이 미 호
심의대상기사	경남매일 2014년 2월 28일자 2면「전운 감돈다」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혀야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남도지사)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밝히지 않고 '최근의 여론조사결과…' 등의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홍준표vs 박완수 전운 감돈다

(전략)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이것에 기초한다. 지난 17일 도내 모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란 질문에 홍준표 지사 49.6%, 박완수 후보 21.9%로 홍준표 지사가 2.2배 이상의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완수 후보가 50.4%로 홍준표 지사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후략)

경남매일
2014년 02월 28일
02면 (종합)

홍준표 전운 감돈다 박완수

홍, 캠프 운영 박차 박, 홍보전략 강화


홍준표 경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예비 후보

경선 전 당원과 대의원 확보 총력전
여론조사 결과 신경전… 경쟁 가열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날 선 공방에 대해 "나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협력자일 뿐이다"며 대응을 극히 자제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캠프운영에 나선다.

따라서 지난 도지사 보궐선거에 이어 다시 한 번 맞붙은 선거전은 경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임을 감안할 때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예비후보가 결선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로 인력을 결집시키는 등 경선체제로 돌입했다. 이 같은 발빠른 조직 강화는 경선전에서 투표권을 가진 당원과 대의원을 빠른 시간안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한 인사는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물밑에서 양측이 활발하게 국회의원과 시의원, 당협위원장에 대한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 경선이 3자 구도에서 양자 대결로 굳어진 것과 관련, 양자대결이란 게 공방전만으로만 볼 경우 엇비슷한 것 같지만 속내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는 조직확보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이것에 기초한다. 지난 17일 도내 모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란 질문에 홍준표 지사 49.6%, 박완수 후보 21.9%로 홍준표 지사가 2.2배 이상의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완수 후보가 50.4%로 홍준표 지사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 지사 측은 "상대방 정당의 역한 후보를 본선에 올리기 의한 민주당 지지층 등의 역선택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완수 후보 측은 "경남도민의 선택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받았다.

아무튼 도정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의 선거운동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던 홍 지사 측은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측근들을 선거캠프에 전진배치, 이후부터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 측은 그동안 박 후보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도민만 보고 간다며 시군순방을 해오다 최근 경선을 대비, 적극적으로 움직일 태세다.

홍 지사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정장수 공보특보와 오태완 도 정책단장이 3월 1일 자로 경남도에 사직서를 낸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선거준비사무소로 합류하기 위해서다. 이곳은 지난 2012년 당내 경선 때 선거사무실로 썼던 곳으로 그 당시, 승리한 곳이어서 다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홍 지사 취임 후 경남도청에서 1년 2개월간 근무하며 공보업무와 정책을 만들어 왔으나 경선이 가까워 짐에 따라 차출된 것이다. 두 사람은 캠프에서 주로 선거공약과 홍보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재기 경남도 중소기업특보가 먼저 도청을 떠나 선거준비사무소로 옮겨 경선을 준비해 왔다. 박 특보는 대의원과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박완수 후보 측은 일찌감치 선거사무소를 내고 새로 영입한 언론팀을 가동해 홍 지사를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명빌딩 6층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종부 전 창원부시장을 비롯, 주임환 전 MBC 국장 등 전직 언론인들이 홍보를 맡고 있다.

박완수 후보 측은 연일 보도자료와 성명서 낸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 측은 선거준비사무소 명의로 단 한 번의 보도자료를 냈을 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3월 1일 자로 선거사무실이 개소된 후 두 후보 간 공방전은 어떻게 전개될지가 미지수다.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15.5*30.8)cm

의 결 번 호	2014지선87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구영남매일 대구시 동구 공항로 271 대표이사 최 종 탁
심의대상기사	대구영남매일 2014년 2월 21일자 2면 「"40년 공직경험, 영덕 발전에 도움되길"」 5면 「안동시장 선거, '새누리당 공천권' 선거 향배 가늠」 9면 「새누리 정서 강한 영덕 '공천이 곧 당선'」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혀야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영덕군수, 경북 안동시장)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 '최근의 지역 여론은 …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 등의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0년 공직경험, 영덕 발전에 도움되길"

(전략) 현재 각종 여론사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1등을 달리고 있는 김 전 실장은 다음달 1일 열릴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오는 6.4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 영덕군수 입후보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후략)



"40년 공직경험, 영덕 발전에 도움되길"

김성락 前 영덕군 기획실장, 3월1일 자전적 에세이 출판기념회

바람을 피하지 않는 나무

김성락 전 영덕군 기획감사실장이 오는 3월 1일 영덕군민회관에서 '바람을 피하지 않는 나무'라는 자전적 에세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자서전은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전적에세이와 고향인 영덕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미래 영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정책에세이의 성격으로 서술됐다. 자서전에서는 그의 오랜기간 동안의 공직생활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으며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영덕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바람을 피하지 않는 나무'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김 전 실장이 공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얻어낸 결과물인 장사상 폐자전기념공원조성사업과 장사상폐자전 광역비를 통하여 영덕의 숨겨진 역사를 재조명했다.

제2장은 그가 살던 고향의 추억과 어린시절부터 장위은 군민을 위한 행정기도서의 삶에 대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가족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공직생활의 애환과 경험 및 심수담 등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마지막장에서는 함께이 넘치는 영덕, 새롭게 발전하는 영덕을 위한 리더십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현재 각종 여론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1등을 달리고 있는 김 전 실장은 다음달 1일 열릴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오는 6.4 지방선거를 복표로 한 영덕군수 업후보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은 자전적 에세이에 대해 "40여년간 정신없이 달려온 공직생활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그동안의 나의 경험과 생각이 영덕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내기로 마음먹었지만 막상 군민들에게 보여드리자니 부끄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락 전 실장은 지품면 송천리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1948의 나이에 공직에 입문해 영덕군청 문화관광과장, 남정면장,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등을 역임하며 리더십과 업무능력을 함께 갖춘 지방행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제2사회부

안동시장 선거, '새누리당 공천권' 선거 향배 가늠

(전략) 최근 지역 여론은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없은 권 시장이 단연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후략)



안동시장 선거, '새누리당 공천권' 선거 향배 가늠

권영세

권혁구

김선종

이삼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시장 선거에 현직인 권영세(61) 시장과 이삼걸(59) 전 안전행정부 차관, 권혁구(60) 경북북부 민더넷방송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김선종(59) 전 경북도의원도 아예 가세할 태세이다.

최근 지역 여론은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권 시장이 단연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대구부시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2010년 6월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권 시장은 지난 4년간 별다른 과오 없이 안동시를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유의 부드러운 소통을 바탕으로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권 시장은 "올해말부터 시작되는 신도청 신청사 입주를 비롯해 사통팔달 도로망 개설 사업 등 크고 작은 각종 사업들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재선이 꼭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이 전 차관은 공직생활 32년을 마무리한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안동에 내려와 출마를 준비해 왔다.

경북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지사를 역임해 행정에 밝은데다 인맥도 만만찮다.

지난달 '변화와 도전'을 강조하며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는 "세력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 전 차관은 "정부정책의 변화 방향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갈등과 침체를 극대화시켜 선진통합을 구현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굳히고 있다.

권혁구 대표는 "안동정신과 주인의식 회복을 통해 이 나라가 반석위에 올라설 때 안동권에도 살아날 것이다"며 안동정신 회복을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선종 전 도의원은 도의원 4선의 경험이 강점이지만 "아직 경선을 통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4파전 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권 시장과 이 전 차관의 대결로 압축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누가 새누리당의 공천권을 거머쥐느냐가 이번 선거의 향배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한 기자 kdl1936@hanmail.net

새누리 정서 강한 영덕 '공천이 곧 당선'

(전략) 이런 후보 난립 속에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성락(58) 영덕군 기획실장이 퇴직한 후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후략)



새누리 정서 강한 영덕 '공천이 곧 당선'

김병목 군수 3선 연임 제한… '무주공산' 10명 후보 거론

영덕군이 현 김병목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자 자천타천으로 10여명의 후보가 거론되는 등 후보가 난립했다.

이런 후보 난립 속에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성락(58) 영덕군 기획실장이 퇴직한 후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선두권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김성락 전 실장과 함께 조두원(63) 전 구미경찰서장, 이희진(52) 전 강석호 국회의원 보좌관, 박진현(54) 경북도의원, 장성옥(58) 전 문경부시장 등이다.

선두권 역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공무원인 부인과 함께 퇴직하며 레이스에 본격 가세한 김성락 실장은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는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연과 학연 등 두터운 인맥을 쌓았다.

퇴임 후 3년간 꾸준히 표밭을 누빈 조두원 전 서장은 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얼굴을 알리며 지지층을 다졌다.

이희진 전 보좌관은 수년간 같이한 강석호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점을 기대하며 또 20여 년간 여러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흐름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청년활동을 통해 지역의 젊은 지도자의 역할을 해온 박진현 도의원도 최근 출사표를 던지며 표밭을 누비고 있으며, 장성옥 전 부시장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이 밖에도 김기홍(50) 도의원, 권오섭(62) 영덕군의원, 권두철(67) 전 신한은행동우회장, 김진덕(56) 보배건설 대표, 류학례(60) 전 영덕농협장, 오장홍(67) 전 경북도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조(52) 전 영덕한우협회장, 박문태(59) 영덕군자원봉사센터 화림봉사단장, 이강석(52) 황명산업 대표, 이재춘(61) 전 대전국토청장, 정라곤(63) 전 봉화부군수, 조주홍(44) 한동건설 대표, 황승일(56) 영덕군 강구면장, 박병일(58) 영덕자치발전연구회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다.

영덕군은 새누리당 정서가 강한 지역으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서가 깊게 깔려 있어 공천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영덕군 정가 한 관계자는 "상당수 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바라고 있어 공천이 결정되면 많은 후보가 출마를 접는 등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2사회부

의 결 번 호	2014지선101
언 론 사	(주)전라일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대표이사 유 춘 택
심의대상기사	전라일보 2014년 2월 26일자 16면 「압축성장→질적성장정책정환‥살기 좋은 도시 만들다」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도지사)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인터뷰와 기사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압축성장→질적성장정책정환…
살기 좋은 도시 만들다

1인당 복지예산
전국 10대 도시 중 2위
건강종합지수 최고 득점

한옥마을 · 탄소산업 공종
'도시재생' 성공 큰 주목
영화촬영 유치사업
경제유발 · 홍보효과 으뜸

전주시가 삶의 질 부문에서 '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4~5기 동안 전주시 삶의 질 성장 정책이 압축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돼 문화, 복지, 건강, 생활 등 각 분야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랭크되면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대변하고 있다.(후략)


전라일보

압축성장→질적성장정책전환…살기좋은도시만들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02
언 론 사	(주)기호일보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5 정산빌딩9층 대표이사 서 강 훈
심의대상기사	기호일보 2014년 3월 5일자 16면 「탄탄한 교통인프라 구축 … 물류·무역 중심도시로 급부상」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평택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인터뷰와 기사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KTX 신평택역사 유치 내년 완공 계획
부산까지 2시간… 전국 반나절 생활권

삼성·LG전자 등 대기업 산단 '둥지'
총 5만여 명 직·간접고용 창출 효과

주한미군 이전 지원금 민생에 적극투자
대외기관 문화·복지분야 평가도 '우수'

평택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산업과 경제, 교통과 물류, 복지와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산업단지 착공에 이어 LG전자산업단지 추가 확장, 고덕신도시 1단계 공사 착공,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보상 착수, 현덕지구 신규 사업자 선정 등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2014년 평택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대해 알아본다.(후략)


탄탄한 교통인프라 구축… 물류·무역 중심도시로 급부상

"재정건전성 노력 끝에 부채 절반 이상 줄여"

의 결 번 호	2014지선107
언 론 사	주식회사 경안일보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829 대표이사 강 정 미
심의대상기사	경안일보 2014년 3월 7일자 2면 「이재만 예비후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2014년 3월 10일자 2면 「"여성 지위 향상 위해 힘쏟을 것"」 2014년 3월 11일자 2면 「"시장 당선 시 월 10회 이상 택시타고 출·퇴근 하겠다"」 2014년 3월 14일자 2면 「"신공항 입지선정 정치 이슈화 안 된다"」 2014년 3월 17일자 2면 「이재만 예비후보, "범죄발생 제로, 안전도시 대구 만들겠다"」 2014년 3월 18일자 2면 「이재만 예비후보,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2014년 3월 19일자 2면 「이재만, 도심재생 '228 브릿지 타워' 조성 계획 밝혀」 2014년 3월 20일자 2면 「이재만 예비후보, 도시철도 3호선 시운전」 2014년 3월 25일자 2면 「"대구,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로 육성"」 2014년 3월 27일자 2면 「이재만 예비후보, 범안로 무료화 공약 발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구광역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공약 및 선거운동 관련 기사를 경쟁 후보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횟수로 부각하여 보도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재만 예비후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 도매시장 방문… 상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 갖고 의견교환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오후 2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상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후략)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팔을 걷어 붙이겠다"고 약속했다.(후략)


경안일보

이재만 예비후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도매시장 방문… 상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 갖고 의견교환

경안일보

"여성 지위 향상 위해 힘쏟을 것"

이재만 예비후보, '여성의 날' 맞아

“시장 당선 시 월 10회 이상 택시타고 출 · 퇴근 하겠다”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시장 당선 시 월 10회 이상 택시로 출·퇴근하겠다고 약속했다.(후략)



경안일보

“시장 당선 시 월 10회 이상 택시타고 출 · 퇴근하겠다”

이재만 예비후보, “택시산업 활성화에 힘 쏟겠다”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시장 당선 시 월 10회 이상 택시로 출·퇴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초청 간담회에서 “택시산업 활성화 및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을 쏟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택시업계의 감차 요청에 대해 “이용객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감차의 경우 예산 범위에서 점진적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용차 대신 필요 시 택시로 업무 용도를 대체하는 부분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의 이 같은 택시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들은 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조합 측은 아울러 이 자리에서 택시발전법안의 구체적 시행 및 택시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심질적 지원을 촉구하고 택시연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한 감차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택시 이용객수가 크게 준 것은 지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관광객 300만명 유치 등을 통해 택시 이용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은 △기본거리 이용무론제 도입 시행 △단거리 전용 택시 도입 △ 장기적 택시공급 총량제 검토 △택시기사 복지회관 건립 △택시지정 정차장 설치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등으로 압축된다.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택시타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충모 기자 jmson220@gaibo.com

“신공항 입지선정 정치 이슈화 안 된다”

■ 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 입장 거듭 천명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중앙당은 남부권 신공항입지 선정과 관련해 6·4지방선거에서 이를 정치 이슈화하는 후보에게는 경선 배제 원칙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후략)



경안일보

“신공항 입지선정 정치 이슈화 안 된다”

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 입장 거듭 천명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중앙당은 남부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6·4지방선거에서 이를 정치 이슈화하는 후보에게는 경선 배제 원칙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공항 입지관련 선거공약을 배격한다’는 제목의 건의서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공식 전달했다.

대구시당은 이 건의서를 이르면 14일께 새누리당 중앙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남부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최근 6·4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가덕도 당위성을 주장하며 선거 공약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 이슈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신공항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발전과 남부지역 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면서 “특정지역을 염두하고 신공항 유치를 주장하는 후보들은 결국 신공항 무산이라는 책임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죄인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충모 기자 jmson220@gaibo.com

경안일보

이재만 예비후보, “범죄발생 제로, 안전도시 대구 만들겠다”

치안 현장 직접 점검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범죄 없는, 안전도시 대구를 만드는 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지고 있다.

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하고 경찰지구대를 잇달아 찾아 치안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오후 서 대구시 서구 이현동자율방범대 월례회에 참석해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범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데 이어 14일에도 수성구 황금지구대와 만촌지구대를 잇달아 방문해 “범죄발생 제로(Zero) 도시,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치안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치안 현장에서 범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대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낮은 도시”라면서 “안전한 치안 확보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손충모 기자 jmson220@gaibo.com

이재만 예비후보,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의 보건복지부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인 글로벌씨앤씨어린이집에서 일일 교사 체험을 했다.(후략)



경안일보

이재만 예비후보,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글로벌씨앤씨어린이집서 일일 교사 체험 실시

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의 보건복지부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인 글로벌씨앤씨어린이집에서 일일 교사 체험을 했다.

차량에서 내리는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하차 도우미를 맡은데 이어 7세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화책 읽어주기 등 일일교사 체험을 통해 보육업무 전반을 두루 살폈다.

이 예비후보가 동화책을 읽어주자, 어린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도 했다. 아선화 원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티타임(Tea-Time)에선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시가 공공형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야한다”면서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어린이, 부모, 보육시설 관계자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선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 강화를 기반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보육정보센터 확충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충모 기자 jmson220@gaibo.com

이재만, 도심재생 '228 브릿지 타워' 조성 계획 밝혀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도심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228 브릿지 타워'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후략)



경안일보

2014년 03월 19일 02면 (종합)

이재만, 도심재생 '228 브릿지 타워' 조성 계획 밝혀

기자회견 열고, 공약 발표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도심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228 브릿지 타워'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자본 유치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업비 3,000억원을 들여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117-7번지 일원의 1만3,377㎡(4,033평) 부지에 건물면적 15만2,000㎡ 규모의 28층 높이의 2개 복합타워를 건립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예비후보는 "사업 예정부지는 영남의 중심지인 대구의 전통을 이어가는 경상감영과 근대 한국의 모습을 간직한 대표적 도심지역"이라면서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문화와 창조경제를 융화시킬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재생을 통해 도심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대구 도심재생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 시 감영공원 및 중앙상가 일원의 침체된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도심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복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연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내년께 시범지구 지정이 이뤄질 경우 무리 없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금조달방안과 관련해선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부동산 투자회사 및 외국계 투자자본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관련해선 "경상감영, 대구문학관 등 도심 명소와 수제화골목, 북성로공구골목 등 기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촌동과 포정동 일원의 도시정비 및 신규 건축물 개발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예비후보는 "'228 브릿지 타워'가 건립되면 낙후된 도심지 기능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독심있게 추진해 대구의 새 랜드마크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15.3×16.7)cm

이재만 예비후보, 도시철도 3호선 시운전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9일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 시운전과 관련, "전면 개통에 앞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후략)



경안일보

2014년 03월 20일 02면 (종합)

이재만 예비후보, 도시철도 3호선 시운전

"도시철도 3호선 안전성 확보 만전기해야"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9일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 시운전과 관련, "전면 개통에 앞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도시철도 3호선 시점 역인 칠곡경대병원역을 찾아 모노레일 운행 전반의 안전도 및 점검 상태를 살펴보고, 이같이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측이 이날 오전 도시철도 3호선 시점지인 북구 동호동에서 종점지인 수성구 범물동까지 23.95km 전 구간에 대한 시운전을 시작한데 대해, 안전성 확보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같이 강조한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 운행 상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운전 의무주행거리를 늘리는 등 한층 강화된 점검상태가 요구된다"면서 "모노레일 운영에 따른 안전 문제를 말끔히 해소한 후 전면 개통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또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개통시기를 늦춰야한다"면서 "향후 전면 개통에 따른 적자경영탈피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10.0×11.8)cm

"대구,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로 육성"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시장 당선 시 대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학습 중심도시로 창조하겠다"고 약속했다.(후략)



경안일보

2014년 03월 25일 02면 (종합)

"대구,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로 육성"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시장 당선 시 대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학습 중심도시로 창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제일의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통해 대구를 활력 넘치는 역동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는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는 현재 평생학습을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키워드로 삼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평생학습 도시 대구 조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지원 예산 확대 ▲평생학습 조직 개편 및 지원 강화 ▲학점은행제 방식의 시립평생학습대학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군 직영행태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평생학습 주간을 지정해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다"면서 "대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선 독립재단으로 구성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력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15.2×9.0)cm

이재만 예비후보, 범안로 무료화 공약 발표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안로 무료화 공약'을 내놨다.(후략)

경안일보

2014년 03월 27일
02면 (종합)

이재만 예비후보, 범안로 무료화 공약 발표

일일 통행량 27.1%… 지원금만 매년 수백억원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안로 무료화 공약'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범안로는 교통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해 대구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표적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나머지 개통후 적잖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시장 당선 시 범안로 무료화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선 "민자사업자 측에 지원하는 보장 수익률을 현행 6%에서 4% 이하로 관철시킨 후 매입가격을 낮춰 양수도 협상에 나서겠다"며 "민자사업자와 원만한 협상 타결을 통해 대구시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범안로 무료화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협상력이 중요하다"면서 "민자사업자를 충분히 설득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사업비 2,254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2년 개통한 범안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일일 통행량은 고작 2만1,900여대에 불과해 예측 통행량의 27.1%에 머무른 실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민자사업자에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만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는 이 때문에 범안로 개통 첫해인 2002년부터 지난 2009년까지 민자사업자 측에 1,084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 2012년 실시협약 변경 후에도 통행료 수입보장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2,5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보존해 줘야하는 실정"이라면서 "시민들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라도 범안로 무료화는 반드시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15.2*9.6)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10
언 론 사	(주)함안뉴스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626-11 대표이사 조 용 찬
심의대상기사	함안뉴스 2014년 2월 28일자 4면 「경남도의회 조근제 부의장 의정보고서 발간 "도의원 8년 동안의 성적표를 올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남 함안군수)와 관련하여 현직 도의원(경남도의회 부의장)의 의정보고서 발간 소식을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재임 중 성과 및 업무추진능력, 품성 등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부각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경남도의회 조근제 부의장 의정보고서 발간
"도의원 8년 동안의 성적표를 올려드립니다"

경남도의회 조근제 부의장은 그동안의 의정 성과를 총정리 해 지역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서를 펴냈다.

조근제 부의장은 "함안군을 위해 일해보라고 선택해주신 군민여러분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아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직 함안, 한결같은 조근제'라는 제목의 의정보고서에는 군민의 선택을 받아 그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일꾼으로서 도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데 대한 보람과 그동안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과 성과 등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등 그의 성실함이 고스란히 배어있다.(후략)


경남도의회 조근제 부의장 의정보고서 발간
"도의원 8년 동안의 성적표를 올려드립니다"
900여 개 넘는 지역현안 사업 추진 성과 등 지난 8년 간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오직 함안 한결같은 조근제

의 결 번 호	2014지선111
언 론 사	(주)광주매스컴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이사 서 유 창
심의대상기사	광주매일신문 2014년 3월 18일자 19면 「"힘들 땐 광주시에 기대세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광역시장)와 관련하여 광주시가 서민들을 위해 운영중인 '채무힐링센터'와 '긴급복지제도'를 현 광주광역시장의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부각한 광주시 대변인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힘들 땐 광주시에 기대세요"

우수 경칩도 지나고 춘분이 머지않았다. 꽃샘추위가 이름값 하느라고 가끔 기승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들녘은 푸른빛을 더해가고 있다. 산수유와 매화를 비롯한 봄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계절이다. 특히 올 봄에는 새로 개장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멋진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돼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꿈은 어느 해보다 크고도 높다.

그런데 새 봄이 오는 길목에 우울한 소식이 전해져 안타깝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삶을 비관한 나머지 생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광주시는 경제난으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돈 문제를 조정해 주는 '채무힐링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센터에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짧은 기간임에도 채무조정 같은 서민금융 지원이 177건에 달했다. 일자리 정보제공과 취업알선도 500건에 이른다. 건강 상담을 비롯한 복지문제까지 합하면 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았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긴급복지제도도 운영중이다. 돈을 버는 가장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가출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다. 직장을 잃거나 화재가 나서 생활이 곤란한 가정도 해당된다. 이들에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가 지원된다.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친족이나 통반장, 이웃이 신고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46억원을 들여 9286명을 구제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누구나 위기상황을 맞게 되면 고민을 거듭하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여주는 일, 그들에게 보살펴줄 이웃과 행정기관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래서 강운태 시장은 "행정의 법규가 아니더라도 공직자들이 피와 정성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눈물과 땀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실천하자"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선 자치센터에만 맡기지 않고 시청 공직자들이 직접 챙기고 있다. 시청에 긴급구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일부터 시작했다.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복지단체 등이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특별 발굴단'도 가동중이다. 속사정을 잘 아는 사회복지공무원과 통반장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료 체납자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부터 방문한다. 최근에 복지급여를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 중지 세대도 관심 대상이다. 쪽방촌과 창고, 공원,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집중 조사한다. 이번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래서 단 한사람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파악해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강운태 시장은 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자의 부인을 위로했다. "제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세상을 등지고 혼자 눈물짓지 마세요. 그럴 땐 광주시에 기대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 7년 된 다문화가정 주부다. 그녀의 눈물이 따뜻한 광주를 만드는데 헛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어느 때보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다.

광주매일신문 2014년 09월 18일 19면 (오피니언)

기 고



유 종 성
광주시 대변인

"힘들 땐 광주시에 기대세요"

우수 경칩도 지나고 춘분이 머지않았다. 꽃샘추위가 이름값 하느라고 가끔 기승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들녘은 푸른빛을 더해가고 있다. 산수유와 매화를 비롯한 봄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계절이다. 특히 올 봄에는 새로 개장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멋진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돼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꿈은 어느 해보다 크고도 높다.

그런데 새 봄이 오는 길목에 우울한 소식이 전해져 안타깝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삶을 비관한 나머지 생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광주시는 경제난으로 버랑 끝에 선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돈 문제를 조정해 주는 '채무힐링센터'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센터에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짧은 기간임에도 채무조정 같은 서민금융 지원이 177건에 달했다. 일자리 정보제공과 취업알선도 500건에 이른다. 건강 상담을 비롯한 복지문제까지 합하면 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았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긴급복지제도도 운영중이다. 돈을 버는 가장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가출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다. 직장을 잃거나 화재가 나서 생활이 곤란한 가정도 해당된다. 이들에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가 지원된다.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친족이나 통반장, 이웃이 신고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46억원을 들여 9286명을 구제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누구나 위기상황을 맞게 되면 고민을 거듭하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여주는 일, 그들에게 보살펴줄 이웃과 행정기관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래서 강운태 시장은 "행정의 법규가 아니더라도 공직자들이 피와 정성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눈물과 땀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실천하자"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선 자치센터에만 맡기지 않고 시청 공직자들이 직접 챙기고 있다. 시청에 긴급구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일부터 시작했다.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복지단체 등이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특별 발굴단'도 가동중이다. 속사정을 잘 아는 사회복지공무원과 통반장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료 체납자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부터 방문한다. 최근에 복지급여를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 중지 세대도 관심 대상이다. 쪽방촌과 창고, 공원,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집중 조사한다. 이번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래서 단 한사람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파악해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강운태 시장은 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자의 부인을 위로했다. "제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세상을 등지고 혼자 눈물짓지 마세요. 그럴 땐 광주시에 기대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 7년 된 다문화가정 주부다. 그녀의 눈물이 따뜻한 광주를 만드는데 헛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어느 때보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다.

(24.1×14.4)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12
언 론 사	유한회사 주간나주투데이 전남 나주시 예향로 3803 (이창동) 2층 나주투데이 대표이사 나 기 철
심의대상기사	나주투데이 2014년 3월 24일자 2면 「칼럼 나주시 천여 공직자여 단결하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나주시장)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없이 현직 단체장을 폄하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나주시 천여 공직자여 단결하라

"승진과 좋은 보직에 눈이 어두운 이들은 솔선수범해 선거 때부터 영혼을 팔았고 그후 이를 적절히 이용한 '장사꾼'의 당근과 채찍에 나주 공직의 자존심은 하나 둘 무너져 내렸으며 '시다바리'로 전락"

▲ 이철웅 편집국장

공직자 조직에 있어서 직언을 둘러싼 문제는 영원한 숙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유가 전통에서 직언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어 왔다. 유가에서는 윗사람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그런 원칙에 이런저런 단서를 달지 않았다.

논어 헌문편 23장에서 공자는 제자 자로(子路)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속이지 말고 직간하라"(勿欺也 而犯之)고 가르친다. 자로가 임금 섬기는 것에 대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 직간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것과 같이 취급되었던 것이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안평중(晏平仲)을 칭송할 때도 그가 임금의 낯빛을 살피지 않고 직언한 것을 큰 덕목으로 꼽고 있다. 오죽하면 범안색(犯顔色), 즉 임금의 낯빛에 구애됨 없이 할 얘기를 다 하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나주 공직사회도 4년 전만해도 안평중 같은 '범안색'은 아니더라도 직언을 서슴지 않는 공직자가 꽤 있었다. 지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공직사회에서는 이름만 대면 고개를 끄덕거릴 이들이 많이 존재했다. 그런데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나주공직사회의 직언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직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알려진 공직자가 하나 둘 정년퇴임 하면서 나주의 공직사회에서 직언은 설자리를 잃었다.

2010년 시장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평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공직자 몇 명이 민선 5기가 시작되자 득세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주공직사회는 면면히 지켜온 공직의 자존심을 잃고 말았다. 좋은 보직과 승진에 눈이 먼 이들은 솔선수범해 선거 때부터 영혼을 팔았고, 그 후 이를 적절히 이용한 '장사꾼'의 당근과 채찍에 나주공직의 자존심은 하나둘 무너졌다. 2010년 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이들은 권력의 힘에 휩쓸리며 권력의 조아(爪牙)한 생리를 배웠다. 그들은 나쁜 의미의 '정치'에 눈을 뜨게 되고 그곳의 감각을 배워 익히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게 되었다. 권력관계,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처신하는 법을 익혔고 공직의 가치와 정도는 시야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나주 공직의 풍토는 어지럽혀졌으며 혼돈에 빠졌다.

정의, 형평성, 객관성, 공공성 등, 우위에 놓여 있어야 할 공직의 가치들이 '정치논리'에 부화뇌동하면서 이해관계 속으로 곤두박질하는 경우들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이러다보니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할지를 몰랐고 제시된 행동기준이나 지침은 없었다. 알아서 기고 처신하는 것이 지침 아닌 지침이 돼 버렸다. 속된 표현으로 나주시 공직사회와 공직자는 '장기판의 졸(卒)'이 돼 버렸다.(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장기판의 졸은 장기 두는 사람의 손길을 떠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듯이 그렇게 동력을 잃어버렸다. 선출직인 시장은 수시로 바뀌지만 나주의 공직사회는 나주시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영원하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마저 외면됐다. 자신들의 반평생과 꽃다운 젊음을 송두리째 바친 나주의 공직사회를 너무 쉽게 '헌납' 했다. 시장의 부침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공직의 숭고한 자존심이 민선 5기 들어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이름들을 거명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부 고위공직자가 소명의식을 잃고 자신의 안위 추구를 위해 직언은커녕 '윗사람'의 '시다바리'로 전락했다. 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은 팽개친 채 윗사람의 'Enter key' 역할에 충실 하는 충견(忠犬)으로 자리매김했다. 어떤 이는 이마저도 부족했던지 퇴직 후 '궐 밖 정승' 끼지, 반평생을 함께한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주구(走狗) 노릇을 놓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정년퇴임한 고위공직자가 나주공직사회의 자존심회복을 위해 6.4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서 마이크를 잡겠다고 한다. 관선, 민선시대를 거친 본인의 공직생활 중 민선 5기 같이 공직의 질서가 무너지고 상식이 결여된 공직사회는 없었다고 한다. 시장과 공직자 몇 명이 '공동정범'이란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출근은 하고 있지만 몇X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나주시공직자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푸념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오죽하면 터놓고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은 공무원도 의외로 많다. 임시장의 선악을 떠나 나주공직사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들을 솎아내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바꿔야 한다는 원색적인 표현도 마다 않는다. 얼마 전만 해도 시장의 거취에 대해 쉬쉬하며 주위의 눈치를 살폈는데 이제는 노골적이다. 나주의 공직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공직자들의 쌓인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다.

그래도 나주공직사회를 고민하는 공직자는 지금도 많다. 작금의 나주 공직사회가 최선은 아닐망정 이만큼이라도 견뎌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민선 5기에 희망을 잃고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를 읊조리고 있지만 그런 공직자가 아직까지 우리 곁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공직사회,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희망이다.

"공산당이라는 망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는 극적인 문장으로 시작된 공산당선언(1848년)에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속박의 사슬밖에 없다. 그들은 세계를 얻을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고 했듯이, 그로부터 166년, 대한민국하고도 나주에 바꾸라는 망령이 지역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나주시 공직자가 잃을 것은 시장의 '시다바리' 나 하수인이라는 불명예밖에 없다. 여러분은 공직자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 나주시 천여 공직자여 단결하라.'


나주시 천여 공직자여 단결하라

의 결 번 호	2014지선114
언 론 사	주식회사 경안일보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829 대표이사 강 정 미
심의대상기사	경안일보 2014년 3월 11일자 15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안동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 자치단체장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전략)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후략)



특별기고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권 영 세 – 안동시장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27~2008)은 저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 책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서로 다른 문명을 가진 집단 간 갈등이 될 것이라며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많은 전문가들이 정의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전통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많고 외국문화 따라잡기에 바빴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것을 자신있게 내놓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외국인의 생활방식과 먹을거리에 눈높이를 맞춘 서비스 제공에 더 급급했다.

구름은몸에서 아랫목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도, 한옥 안에 침대를 들여 놓고 편의 바른고 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서비스라고 착각하기도 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일수록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다.

민족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될 때 연일 매진 기록을 세웠고,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힘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책판 10만장 수집운동'의 결과물인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확정 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처하고 유교문화의 연원정맥으로서 자존심 강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 주고 있다.

이번에 등재 후보로 결정된 유교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718종 6만 4,226장으로 방대한 자료이다.

그 종류만 해도 유학자들의 문집 583종, 성리서(性理書) 52종, 족보·연보 32종, 예학서(禮學書) 19종, 역사서(歷史書) 18종, 훈몽서(訓蒙書) 7종, 지리지(지도) 3종, 기타 4종이다.

유교책판은 국가 주도가 아닌 순수하게 민간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해 제작되었다.

책판의 지자나 제작자들은 모두 조선의 지식인 계층인 사대부들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 정책과는 별개로 함흥관찰사의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를 선호한 계층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을 이용해 농법개량에 앞장서고, 유교의 이념을 해결으로 하는 인본공동체의 구현을 함흥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품성을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관념을 실천하면서 대동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유학자들의 남기로운 통합력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빛나는 유교책판, 그 속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혜안이 담겨있는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제는 우리를 넘어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은 우리가 그동안 부끄럽게 여기던 전통문화의 가치도 새롭게 이해하여 의미를 찾고 우리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왜나하면 헌팅턴의 예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며, 전통문화야말로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답게 해주는 문화적 신분증이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기르려면 먼저 물이 통하게 하고, 새가 오게 하려면 먼저 숲을 만들어야 한다.(欲養魚先通水 欲來鳥先栽木)'는 명제를 떠 올리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인 국내심의를 통과한 유교책판이 당당히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15
언 론 사	경북일보(주)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93 대표이사 한 국 선
심의대상기사	경북일보 2014년 3월 12일자 18면 「'유교책판'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안동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 자치단체장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전략)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후략)



특별기고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권영세 안동시장

조상의 지혜·삶의 혜안 담겨
문화융성 재창조 하는게 우선
우리의 관심·역량 모아야 할 때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27~2008)은 저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로 다른 문명을 가진 집단 간 갈등이 될 것이라며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목판 10만장 수집운동'의 결과물인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확정 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처하고 유교문화의 연원정맥으로서 자존심 강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

이번에 등재 후보로 결정된 유교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718종 64,226장으로 방대한 자료이다. 그 종류만 해도 유학자들의 문집 583종, 성리서 52종, 족보·연보 32종, 예학서 19종, 역사서 18종, 훈몽서 7종, 지리지 3종, 기타 4종이다.

유교책판은 국가 주도가 아닌 순수하게 민간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해 제작되었다. 책판의 저자나 제작자들은 모두 조선의 지식인 계층인 사대부들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화 정책과는 별개로 향촌공동체의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를 선호한 계층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을 이용해 농법개량에 앞장서고, 유교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는 인륜공동체의 구현을 향촌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품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관념을 실천하면서 대동사회 구현을 갈망했다. 유학자들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빛나는 유교책판, 그 속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혜안이 담겨있는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제는 우리를 넘어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은 우리가 그동안 부끄럽게 여기던 전통문화의 가치도 새롭게 이해하여 의미를 찾고 우리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물고기를 기르려면 먼저 물이 풍하게 하고, 새가 오게 하려면 먼저 숲을 만들어야 한다.(欲魚先通水 欲鳥先樹木)'는 명제를 떠 올리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인 국내심의를 통과한 유교책판이 담당히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16
언 론 사	경북도민일보(주) 대표이사 윤두영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심의대상기사	경북도민일보 2014년 3월 10일자 19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안동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 자치단체장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전략)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후략)



기고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권 영 세
(안동시장)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27-2008)은 저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 책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서로 다른 문명을 가진 집단 간 갈등이 될 것이라며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전통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외국문화를 모방하기에 바빴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것을 자신있게 내놓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외국인의 생활방식과 먹을거리에 눈높이를 맞춘 서비스 제공에 더 급급했다.

구텐베르크에서 아날로그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지도 한옥 안에 잠자리를 들어 보고 편리 더불고 기계 하는 것이 체험형 된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상수에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인쇄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하회별신굿 탈놀이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될 때 연일 매진 기록을 세웠고,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힘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 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 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 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목판 10만장 수집운동' 의 결과물인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종신문화의 수도를 자처하고 유교문화의 연원경백으로서 자존심 강한 지역인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

이번에 등재 후보로 결정된 유교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관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718종 61,536장으로 방대한 자료이다. 그 종류만 해도 유학자들의 문집 583종, 성리서(性理書) 52종, 족보·연보 32종, 예학서(禮學書) 19종, 역사서(歷史書) 18종, 훈몽서(訓蒙書) 7종, 지리지(지도) 3종, 기타 4종이다.

유교책판은 국가 주도가 아닌 순수하게 민간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해 제작되었다. 책판의 저자나 제작자들은 모두 조선의 지식인 계층인 사대부들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화 정책과는 별개로 향촌공동체의 운영을 통한 자율지향을 선호한 계층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자식을 이용해 농법개량에 앞장서고, 유교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는 인륜공동체의 구현을 향촌사회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특히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윤리를 이념으로부터 부여 받았다" 는 관념을 실천하였서 대동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유학자들의 남다르은 통찰력과 혜안에 대한 염원이 엿보는 유교책판, 그 속에는 조선왕의 지혜와 삶의 해안이 담겨있는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제는 우리를 넘어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 융성은 우리가 그동안 부고법계 여기던 전통문화의 가치도 새롭게 이해하여 의미를 찾고 우리 사회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최근은 한지인의 예전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이며, 전통문화야말로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답게 해주는 문화적 신분증이기 때문이다.

"말고기를 기르려면 먼저 물이 풍족해 하고, 새가 오게 하려면 먼저 숲을 만들어야 한다. (欲養馬先通水 欲來鳥先樹木)" 는 명제를 떠 올린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인 국내심의를 통과한 유교책판이 담당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17
언 론 사	(주)대경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41 대표이사 우 성 대
심의대상기사	대경일보 2014년 3월 10일자 19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안동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 자치단체장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전략)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후략)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기고

권영세 안동시장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27~2008)은 저서『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 책에서 21세기의 세계는 세계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서로 다른 문명을 가진 집단 간 갈등이 될 것이라며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많은 전문가들이 정의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전통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들지 않고 외국 문화 따라잡기에 바빴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것을 자신있게 내놓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외국인의 생활방식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춘 서비스 제공에 더 급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지도 한국 안에 외국을 들여 놓고 편히 머물고 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서비스라고 착각하기도 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입수록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다. 민족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한국형 신오페라인 '카우스'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될 때 연일 매진 기록을 세웠고,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힘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목판 10만장 수집운동'의 결과물인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확정 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처하고 유교문화의 연원정맥으로서 자존심 강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

이번에 등재 후보로 결정된 유교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718종 64,208장으로 방대한 자료이다. 그 종류만 해도 유학자들의 문집 (56종, 성리서적(理書) 52종, 족보 · 연보, 32종, 예학서(禮學書) 19종, 역사서(歷史書) 13종, 훈몽서(訓蒙書) 7종, 지리지(地誌) 3종, 기타 4종이다.

유교책판은 국가 주도가 아닌 순수하게 민간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해 제작되었다. 책판이 저자나 제작자들은 모두 조선의 지식인 계층인 사대부들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화 정책과는 별개로 향촌공동체의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를 선호한 계층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을 이용해 농업개량에 앞장서고, 유교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는 인륜공동체의 구현을 향촌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특히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모든 사람을 이 몽매한 봉성을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큰 넘을 실천하면서 대동사회 구현을 갈망했다. 우리자들의 남기심은 봉황처럼 하늘에 대한 열정이 '넘'는 유교책판, 그 속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혜안이 담겨있는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제는 우리를 넘어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은 우리가 그동안 부끄럽게 여기던 전통문화의 가치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고 우리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팅턴의 예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며, 전통문화야말로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답게 하주는 문화적 신분증이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기르려면 먼저 물이 풍하게 하고, 새가 숫게 하려면 먼저 숲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옛말과 같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인 국내심의를 통과한 유교책판이 당당히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애정을 모아야 할 때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18
언 론 사	(주)대구일보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0 대표이사 이 태 열
심의대상기사	대구일보 2014년 3월 11일자 26면「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안동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 자치단체장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전략)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후략)



大邱日報

2014년 03월 11일 26면 (오피니언)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특별 기고

권영세
안동시장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1927-2008)은 저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 책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서로 다른 문명을 가진 집단 간 갈등이 될 것이라며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많은 전문가가 점쳐 왔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조명 하려는 움직임 없고 외국문화 따라잡기에 바빴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것을 자신 있게 내놓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외국인의 생활방식과 먹을거리에 눈높이를 맞춘 서비스 제공에 더 급급했다.

구들은돌에서 아랫목 문화를 체험하는 3박4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도 한옥 안에 침대를 들여 놓고 관광 버스로 기계 하는 3박 체험은 본 서비스라고 자각하기도 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임수록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다. 반족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될 때 연일 매진 기록을 세웠고, 관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어느 누구도 흠내 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목판 10만5장 수집 문동의 결과물인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처하고 유교문화의 연륜정맥으로서 자존심 강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아주고 있다. 이번에 등재 후보로 결정된 유교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자작품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718종 6만4천236장으로 방대한 자료이다. 그 종류만 해도 유학자들의 문집 583종, 성리서 52종, 족보·연보 32종, 예학서 19종, 역사서 18종, 훈몽서 7종, 지리지서도 3종, 기타 4종이다.

유교책판은 국가 주도가 아닌 순수하게 민간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해 제작되었다. 책판의 저자나 제작자들은 모두 조선의 지식인 계층인 사대부들로 조선 왕조의 중앙집권화 정책과는 별개로 향촌공동체의 운영을 통한 자율자치를 선호한 계층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을 이용해 농법개발에 앞장서고, 유교적 이념을 백성들에게 보급하는 민풍공동체의 구현을 향촌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품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관념을 실천하면서 대동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유학자들의 남기로운 통찰력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빛나는 유교책판. 그 속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예안이 담겨 있는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제는 우리를 넘어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은 우리가 그동안 부끄럽게 여기던 전통문화의 가치도 새롭게 이해하여 의미를 찾고 우리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예나라면 현탈한의 예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며, 전통문화야말로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답게 해주는 문화적 신분증이기 때문이다.

'필고기를 기르려면 먼저 물이 통해게 하고, 새가 오게 하려면 먼저 숲을 만들어야 한다(欲養魚者先通水欲來鳥者先樹木)'는 명제를 떠올리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인 국내심의를 통과한 유교책판이 당당히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19
언 론 사	주식회사 경도일보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89, 5층 (황성동, 미림빌딩) 대표이사 박 준 현
심의대상기사	경도일보 2014년 3월 10일자 19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안동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 자치단체장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전략)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후략)



특별기고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권 영 세
안동시장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27~2008)은 저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 책에서 21세기에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가장 위심적인 변수는 서로 다른 문명을 가진 집단 간 갈등이 될 것이라며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일컫 전문가들이 증되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전통문화에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들지 않고 외국문화 따라잡기에 바빴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것을 자신있게 내놓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외국인의 생활방식과 백화거리에 눈높이를 맞춘 서비스 제공에 더 급급했다.

구텐베르크에서 아랍목 문화를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도 한쪽 안에 끌려를 들어 놓고 편히 머물고 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서비스라고 착각하기도 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일수록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다. 민족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하회별신굿 탈놀이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될 때 연일 매진 기록을 세웠고,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목판 16만장 수집문화'의 결과물인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확정 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정신문화의 우수성을 자부하고 유교문화의 연원정책으로서 자존심 강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

이번에 등재 후보로 결정된 유교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718종 64,226장으로 방대한 자료이다. 그 종류별 현도 유학자들의 문집 583종, 성리서(性理書) 52종, 족보·연보 32종, 예학서(禮學書) 19종, 역사서(歷史書) 18종, 훈몽서(訓蒙書) 7종, 지리지(지도) 3종, 기타 4종이다.

유교책판은 국가 주도가 아닌 순수하게 민간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해 제작되었다. 최근의 제작나 복작자들은 모두 조선의 지식인 계층인 사대부들로 조선왕조의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명제로 참혹한 역사의 문화를 통한 지방자치를 선도한 계층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을 이용해 능력개량에 앞장서고, 유교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는 인류공동체의 구현을 중촌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모든 사람을 이 동일한 존재를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관념을 심리하면서 대동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유학자들의 남기로운 봉건역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빛나는 유교책판, 그 속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해안이 담겨있는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제는 우리를 넘어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은 우리가 그동안 부끄럽게 여기던 전통문화의 가치도 세계에 이바지하며 미래를 향고 우리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올내하면 헌팅턴의 예견을 빌리자 '클대라도'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며, 전통문화야말로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답게 해주는 문화적 신분증이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거인처면 먼저 물이 볼라게 하고, 세가 오게 하려면 먼저 숲을 만들어야 한다.(欲致魚先通水 欲來鳥先樹木)'는 명제를 꼬 볼리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인 국내심의를 통과한 유교책판이 당당히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20
언 론 사	(주)경북매일신문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대표이사 최 윤 채
심의대상기사	경북매일 2014년 3월 10일자 18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안동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 자치단체장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전략)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후략)


경북매일

기 고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권영세

안동시장

의 결 번 호	2014지선121
언 론 사	(주)경상매일신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85(대신동) 2,3층 대표이사 정 철 용
심의대상기사	경상매일 2014년 3월 11일자 19면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안동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 자치단체장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특별기고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권 영 세
안동시장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27~2008)은 저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중략)

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본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후략)

의 결 번 호	2014지선122
언 론 사	거제중앙신문(주)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6 배진빌딩 2층 거제중앙신문 대표이사 김 철 환
심의대상기사	거제중앙신문 2014년 3월 6일자 11면「국민과의 약속,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하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거제시장)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국민과의 약속,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하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기존의 정치영역이 중앙정치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정치참여를 통한 시민정치의 실현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후략)


기고

국민과의 약속,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하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기존의 정치영역이 중앙정치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정치참여를 통한 시민정치의 실현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정치권력은 수평적 권력분립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으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현대정치는 정치권력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요구받고 있다. 즉, 국가권력의 단순한 권력분립에서 수평적·수직적이면서도 다원화된 권력분권화를 지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정치권력을 수직적으로 분권화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정신적·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럼다면 결국 지방자치제 본래의 목적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분리될 때 그 단초가 제공되지만 이제껏 우리의 지방자치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조례제정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형식적 지방자치를 실시해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선진각국에서도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특정당이 분할하고 있는 정치구도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적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한 점에 하에서는 공천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약화와 ▲중앙정치권의 줄 세우기가 만연하기에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한 폐지를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 해 연
거제시장 예비후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다. 1952년 6·25전쟁 중인 부산 피난시절 자유당 정부도 정당 공천에 관한 법 규정이 없이 처음으로 시·도의원과 시·읍·면의원 선거를 치렀다.

1956년 제2대 지치선거에서는 시·읍·면장까지 선출했다. 1960년 제3대 지치선거는 시·도지사 선거까지 했다. 그러나 1961년 이후 지방자치 선거는 중단되었다. 1991년 재실시 된 제4대 지방자치선거에선 시·도의원은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시·군·구의원은 정당공천을 금지하였다. 1995년 제5대, 1998년 제6대, 2002년 제7대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까지 추가해서 실시했는데, 시·군·구의원의 정당공천은 금지했다. 2005년 제8대, 2010년 제9대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광역과 기초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정당공천을 허용했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소장 김해연)에서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범위에 대해 지난 달 경남도민 의식조사를 실시 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한 반면 기초의원과 단체장 모두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27.8%로 나타났고 기초의원과 단체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와 단체장까지 지방선거 선출직 모두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16.7%가 나왔다. 결국 응답자의 44.3%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기초의원은 공천하지 말고 단체장은 공천하자는 의견이 34.9%로 나타나 현행 공천제도를 일부 보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중앙정치권에선 '정치개혁특위' 라는 것을 만들어 마치 새 정치를 추진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만을 고수한 채 국민들의 여론은 무시되고 적당히 마무리하곤 했다.

이번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각 정당이 국민적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그렇기에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시켜야 한다. 이것이 약속정치이고 신뢰받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무시한 채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지탄이 거세게 불어 닥칠 것임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23
언 론 사	(주)아시아경제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9 아시아미디어타워 10-11층 대표이사 이 세 정
심의대상기사	아시아경제 2014년 3월 19일자 30면「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 동대문구청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 자치단체장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사회 가정들의 비극적인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동두천에서 30대 주부가 4살 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화곡동에서는 50대 부부가 자택에서 숨졌고,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두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었다. 모두 생활고를 비관한 동반자살이었다.(후략)



아시아경제 더 넓리

2014년 03월 19일
30면 (오피니언)

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뷰&비전

유 덕 열 동대문구청장

우리 사회 가정들의 비극적인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동두천에서 30대 주부가 4살 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화곡동에서는 50대 부부가 자택에서 숨졌고,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두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었다. 모두 생활고를 비관한 동반자살이었다.

앞서 2월말에는 송파구의 한 지하 셋방에서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함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가난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회에 대한 원망 없이 끝까지 염치를 잃지 않은 망자의 메모는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00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1970년대 중반 국민소득 1000달러에 불과하던 우리 경제가 40년 만에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이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동반자살 앞에서 이런 수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의 양극화현상이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구명 돌린 사회안전망을 자살 증가 원인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어도 정보가 없어 이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세 모녀가 긴급지원 혜택만 받았더라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연이은 동반자살 보도를 접하면서 지역사회의 저소득가구 주민들에 대한 염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동대문구가 시행하고 있는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이 제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민관이 함께 발굴하고 소통하며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보듬누리 사업은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과 소외계층 간의 결연사업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한 '희망의 1:1 결연사업'과 이웃의 복지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자 구성된 '동 희망복지위원회'가 융합된 동대문구만의 맞춤형 복지공동체를 의미한다.

보듬누리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의 1:1 결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과 결연을 맺은 동대문구청 직원과 기업 및 단체는 매월 1회 이상 결연가구를 방문해 상담 및 물품 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취약계층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있다.이렇게 파악된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와 문제들은 실무직원들로 구성된 '복지욕구 솔루션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해결이 어려운 사례는 희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연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빵에 담긴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고 했다. 삶의 벼랑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작지만 따스한 손길을 내밀면 자살이라는 마지막 선택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속담이 주는 교훈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고 함께 가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단단히 무장됐을 때 비로소 국민소득 3만달러는 공허한 숫자놀음이 아닌 현실감 있는 수치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즈음이다.

(24.5×13.4)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24
언 론 사	주식회사 영광신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길 37 대표이사 박 용 구
심의대상기사	영광신문 2014년 3월 7일자 9면「의원직 사직에 즈음하여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도의원)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인 전 군의원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의원직 사직에 즈음하여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전 의장 나승만입니다.

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광군 제1선거구 도의회의원직에 도전하기 위하여 3월 6일자로 군의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제6대 전반기 영광군의회 운영위원장과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후략)


특별기고

의원직 사직에 즈음하여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나 승 만
전 영광군의장

의 결 번 호	2014지선125
언 론 사	(주)강원일보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53 대표이사 이 희 종
심의대상기사	강원일보 2014년 3월 10일자 7면「폭설 이겨냈듯 동계올림픽도 하나된 힘으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원 강릉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 자치단체장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폭설 이겨냈듯 동계올림픽도 하나된 힘으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큰 고통과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하나된 힘으로 제설 작업에 혼신을 다해 주신 강릉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큰 힘을 주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과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주신 지자체 및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江原日報

강원포럼

최명희 강릉시장

폭설 이겨냈듯 동계올림픽도 하나된 힘으로

지난 2월6일부터 9일간 계속된 폭설은 1911년 강릉지방기상청 관측 이래 최장기간 적설을 기록하며 누적 적설량 1m79cm가 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 앞에서는 제설의 달인 강릉도 damp자설할 수밖에 없었고, 장비와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로가 막히고, 산간마을이 고립되고, 도심의 기능까지 상실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한 우리 강릉시에 강원도 전역에서, 그리고 멀리 순천, 광양을 비롯해 전국에서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은 그야말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고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시민 등 37만여명의 인력과 굴삭기, 덤프트럭, 트랙터 등 연 1만여 대의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모두가 밤낮없이 막힌 길을 뚫고, 산더미 같은 눈을 치우면서 땀 흘려주신 덕분에 도심은 하루가 다르게 정상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진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310억원에 달하며, 장기간 내린 폭설로 관광객 감소, 영업 손실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하면 그 수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릉은 저력이 있습니다. 하나 된 힘과 위대한 시민정신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태풍 루사와 매미, 대형 산불 등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 폭설도 그러한 저력과 힘이 있었기에 모두가 힘을 모으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어떠한 난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4년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빙상경기가 개최되는 강릉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빙상경기장 건설에 들어갑니다. 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하려면 경기장 건설 이외에도 관광, 문화, 교통에서부터 음식, 숙박, 진흥, 도시환경 정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선진화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시련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만의 폭설도 이겨냈듯이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전 세계인의 이목이 강릉과 평창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큰 틀을, 확고한 신뢰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더 많은 노력과 세밀한 정성으로 쉽게 이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영광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모두의 하나된 힘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선진 강릉, 강원도를 창조합시다.

2014년 3월 10일 (토요일)

117.8×17.9cm

도 본격적으로 빙상경기장 건설에 들어갑니다. 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하려면 경기장 건설 이외에도 관광, 문화, 교통에서부터 음식, 숙박, 진흥, 도시환경 정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선진화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시련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만의 폭설도 이겨냈듯이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전 세계인의 이목이 강릉과 평창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큰 틀을, 확고한 신뢰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더 많은 노력과 세밀한 정성으로 쉽게 이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영광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모두의 하나된 힘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선진 강릉, 강원도를 창조합시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26
언 론 사	(주)내외일보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길 82 온수동 4층 대표이사 이 정 남
심의대상기사	내외일보 2014년 3월 11일자 16면 「"전국 최고 전통축제로 화려한 부활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 남원시장)와 관련하여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를 소개하면서 행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 자치단체장의 인물사진을 부각하여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 기본계획 설명회 가져… 4개 분야 29종목 행사 다채
- 광한루 프로그램 집중, 효과적 축제장 동선 구축
- 춘향길놀이 집중육성… 남성놀이 용마놀이 복원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안숙선)는 최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이환주 남원시장과 춘향제전위원, 행사부장 그리고 시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제84회 춘향제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춘향제는 "사랑이야기, 남원에 물들다"는 주제로 춘향과 몽룡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남원 광한루 일원에서 펼친다.(후략)


제84회 춘향제 5월1일부터 6일간 개최

"전국 최고 전통축제로 화려한 부활할 것"

의 결 번 호	2014지선127
언 론 사	(주)중도일보사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32 (오류동) 대표이사 김 원 식
심의대상기사	중도일보 2014년 3월 14일자 11면 「"당진항 육성 통해 환황해 경제중심도시로 우뚝"」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남 당진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사진을 부각하고 '행정의 달인' 등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당진항 육성 통해 환황해 경제중심도시로 우뚝"

부채전액 탕감 '행정의 달인' 이철환 당진시장에게 듣는다

민선 5기 성과에 대하여

- 친환경 급식·노인일자리 확대 등 복지사업 주력
- 현대제철공장 건설로 2만2천명 고용창출 효과
- 시민 염려는 고맙지만 건강이상설은 '사실무근'

개선점과 앞으로의 계획은…

- '고령화시대' 제2의 인생 시작할 밑바탕 구축
- 발전소 송전선로로 인한 보상 등 대책 마련
- 뿌려 놓은 씨앗 거두려 6·4地選 재선에 도전

이철환 당진시장이 지난 4년 가깝게 당진시정을 이끌어오면서 건전재정 운영, 무상급식, 무상예방접종, 100세 건강지원센터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을 앞장 서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힘써 왔고 행정의 달인답게 건전행정과 예측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하며 부채를 모두 탕감하는 성과를 올렸다.(후략)

중도일보

2014년 03월 14일 11면 기획

"당진항 육성 통해 환황해 경제중심도시로 우뚝"

부채전액 탕감 '행정의 달인' 이철환 당진시장에게 듣는다



민선 5기 성과에 대하여

친환경 급식·노인일자리 확대 등 복지사업 주력
현대제철공장 건설로 2만2천명 고용창출 효과
시민 열려는 고맙지만 건강이상설은 '사실무근'

개선점과 앞으로의 계획은

'고령화시대' 제2의 인생 시작할 밀바탕 구축
발전소 송전선로로 인한 보상 등 대책 마련
뿌려 놓은 씨앗 거두러 6·4地選 재선에 도전

이철환(사진) 당진시장이 지난 4년 가깝게 당진시장을 이끌어오면서 건천재정 운영, 무상급식, 무상 예방접종, 100세 건강지원센터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을 열정 시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힘써 왔고 행정의 달인답게 건전행정과 예측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부채를 모두 탕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편집자 주)

-시장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나는 부모로부터 기초가 튼튼한 건강체질을 물려 받아 할일과 담노도 없고 그 흔한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먹은 적이 없이 365일 생생하게 시정을 살피고 있기에 오히려 음식이는 현장 건강진단서를 몸에 붙이고 다닌다고 표현하고 싶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며 휴일이 없이 공식 일정에 매달리에 하기 때문에 건강이 돼번정도지 알으면 시장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

다만 눈이 푹 들어간 것을 놓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계신데 금번을 한 후 금단현상의 일환이지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월부터 금연을 했는데 이는 일생일대 최대의 싸움이었고 내가 한 일 중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는 시장이 암에 걸렸다는 모함도 있었단 것으로 아는데 암에 걸렸으면 치료하러 가야지 시정을 돌보고 있겠는가? 걱정은 고맙지만 건강에 적신호는 없고 아무런 이상도 없음을 지면을 통해 거듭 말해고 싶다.

-지난해 시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해는 민선 5기 동안 추진한 사책중 여러 성과가 나타난 한해였는데 그 중에서 당진시종합복지타운 개관과 전국 최초 건강100세지원센터 설치 등은 2012년 1월 1일 시승격 후 성장하는 도시답게 전국 최고의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감동을 주고 행복지수를 높였던 한해였다. 그리고 레저·여체능 계열의 1200명 규모의 세한대학교가 개교 되었고, 자연재해와 FTA 등 농어업기반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전통 농축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선정하고자 전국 최초 종자은행과 환경농업과학관을 설치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유통과와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고 축산과를 분리했다.

현대제고등에서 1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현대제철 특수강공장 건설이 별표5면서 2만2000명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이 6조 1000억원의 효과가 있다. 또한 행한 물동량 증가율이 1위로 달리고 있는 당진항이 있는 우리 도시와 증국의 얼도시 청도시 등 여러 항만도시와 교류협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해양 항만도시로 뉴 아시아 게이트(New Asia Gate)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많에 맞게 당진경제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항만운영지원센터학교과 기존의 해양관광공사 조직을 정비하고 해양항만공사로 전환 심비하여 인프를 타워했다 구축했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아직 분양률이 25%인 365만평의 석문 국가산업단지내에 11년평 규모의 산학종합대학 캠퍼스, 연구시설, 철강R&D센터 등 513억원 규모의 산업융합지구가 유치되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에 수요에 부합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이끌어 기업과 지역이 상생발전하고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당진은 서해안의 교두보이자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진이 자족특례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가 성장하는 속도를 높고 볼 때 한만, 아산, 당진 이 셋이 서해안의 3대 중심지라 봐도 부방하다. 국토의 심장부에 있는 충남이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지 못하면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진은 가장 물류비가 적게 들고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수도권이 이미 인구과밀화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진으로 내려오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매년 3000~4000대씩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당진이 제2의 수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가장 빨리 수립해놓았다. '자족'의 뜻을 설명하자면, 한 도시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이 되면 그 도시의 거주민들끼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시 말해 생산과 수요가 자립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례'는 특별한, 그 자치시의 특수성을 가지고 농업, 수산 등 각 분야에서 특별히 생산된 것들로 도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특례도시를 말한다. 더 간단히 말해 특례도시는 특별한 자치를 행성하고 있는 도시라는 뜻이다.

-당진은 도농복합도시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권련시킬이 있다면?

▲도농 복합도시 정책도 주민욕구가 다양해다.

우리시도 산업화된 지역과 문화와 농촌 지역의 문화가 확연히 다르다.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의 도시 근로자들은 여무래도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많이 배운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농촌 분들보다 평균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생각이 깨어있는 편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육과 문화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다. 반면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우스와 같은 농업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한다. 이렇게 농촌문화와 도시문화가 병존해 있다.

농업은 우리대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의 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잡시할 수 없는 산업이다. 농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한들 도시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음에 농수산유통 및 판로 개척을 전담하는 농수산유통과와 도시근교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전담하는 친환경농업과를 만들어 업무여량을 농업 분야에 집중시켰다. 우리시는 전국 단보당 쌀 생산량 1위에 감분계 미래산업이라 할수 있는 식량산업을 선정하고자 전국 최초로 종자은행을 설치했고 친환경농업과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당진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100세건강지원센터가 두자들 나타내고 있다. 노인복지에 대한 향후 계획은?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100세 시대란 평균수명이 100세라기보다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가 90대로 높아져 점차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도 2020년경에 100세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는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육체적·정신적 건강, 경제력 등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분도 많을 것이다. 따지만 늘어난 인생의 시간표를 그동안 가족사랑, 경제적 책임 등으로 못했던 일을 다시 시도하여 자아실현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100세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100세까지 산다는 것을 현실로 인식해고 우리가 노력해야 준비해야 된다.

먼저, 행복한 100세 시대는 일을 통해야 얻어가야 한다. 존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 한다. 60세 이후에도 일을 한다는 것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등 몸읍으로 인생을 가치다 준다.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한 여러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경륜이나 지혜를 살릴 수 있는 유치원 아이키 할머니와 같은 교육형 일자리, 반찬가게 등 사장형 일자리, 연변도우미 등 공익형 일자리와 경로당 생산화사업, 마을기업 참여 등이 있다. 이런 일자리 참여를 통해 당당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야 한다. 우리 시도 매년 1200여 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더 많은 여러신들이 보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려 나갈 것이다.

행복한 인생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와 비교해지 않고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 행복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기회로 삼아 행복한 100세 인생을 디자인해보자는 것이다. 당진시는 여성친화도시이며 국제건강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제 100세 시대는 축복의 시대이고 행복한 사회다.

-당진시의 학교급식이 친환경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전국 최초로 건립한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당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관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어 농민들이 새 가격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됐다. 당진의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먹거리는 이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이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에 납품된다. 그리고 어린이집 44개소, 종합병원, 대기업 등에도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확대 공급되고 있다.

-당진 송전선로 대책 범시민 대책위가 출범되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 당진은 화력발전소 등을 통해야 막대한 국가잔력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 주변지역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 및 환경피해 대책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이제는 부분별한 증앙집권적인 송전선로 증설은 반대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와 환경피해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 따라서 당진도 이러한 뜻에서 송전선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된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골으로 6·4지방선거가 재선에 도전하는데 정치적 소신을 밝혀 달라.

▲일을 하던 사람이 중요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 4년 동안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좋은 밑을 항에 뿌렸는데 새싹으로 돋아나고 열심히 가꾸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미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도 있으나 더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됐다.

지는 이미 당선에 빼를 묻었다.

반드시 당진을 명품도시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다.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사라라고 믿는다.

당진=박승균 기자

(35.5×36.4)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28
언 론 사	(주)경북매일신문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대표이사 최 윤 채
심의대상기사	경북매일 2014년 3월 10일자 12면 「42만시민 공감 맞춤형 복지로 행복지수 '껑충' 올린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구미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기사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2만시민 공감 맞춤형 복지로 행복지수 '껑충' 올린다

■ 구미시 '행복 특별시' 건설 총력전

구미시가 42만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서 전국 제일의 행복 특별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구미시는 구미 행복특별시 건설에 대비해 올 한해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지난해보다 15.89% 증가한 1천887억7천만원(시 전체예산의 17.69%)을 편성해 시민 행복지수 제고에 전력투구해 나갈 방침이다.

행복특별시 건설에는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과 가족친화적인 통합서비스 제공 등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쳐 42만 시민들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후략)


42만시민 공감 맞춤형 복지로 행복지수 '껑충' 올린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29
언 론 사	(주)대경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41 대표이사 우 성 대
심의대상기사	대경일보 2014년 3월 17일자 14면 「대한민국 복지1번지 구미시가 펼쳐갑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구미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기사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후략)

대한민국 복지1번지 구미시가 펼쳐갑니다.

- 올해 사회복지 예산 1,887억 7천만원
- 작년 대비 15.89% 증가, 구미시 전체예산의 17.69%
-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 세계한민족여성네크워크
- 회의 개최로 국제적 위상제고
- 영유아 · 학부모 보육교사 고려한 양질의 안심 보육환경 조성
- 시립화장시설 노인 일자리사업 등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 일자리 창출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도모


14 특집

대한민국 복지1번지 구미시가 펼쳐갑니다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올 한해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전년대비 15.89% 증가한 1,887억 7천만원(시 전체예산의 17.69%)으로 편성하고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과 가족친화적인 통합서비스 제공, 다양한 복지욕구에 충족하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쳐 42만 시민의

의 결 번 호	2014지선131
언 론 사	(주)중부매일신문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6번길 22 대표이사 장 덕 수
심의대상기사	중부매일 2014년 3월 14일자 12면 「"진정한 청원 발전 위해 통합길 선택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북 청주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충북 청원군수)이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과정에서 보여준 행정능력 및 인생철학 등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부각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진정한 청원 발전 위해 통합길 선택했다"

- 헌정 사상 첫 주민주도 쾌거 군수당선때보다 감동
- 10년 이내 新수도권 시대 핵심도시 급성장 '확신'

■ 마지막 청원군정 이끈 이종윤 군수

헌정 사상 전국 최초로 주민이 주도해 이뤄낸 통합 청주시 탄생의 1등 공신인 이종윤 청원군수가 이달 27일 통합 청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사실상의 군수직을 내려놓는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은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이종윤 청원군수, 한범덕 청주시장의 합작품이자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이 한마음으로 3전4기만에 만들어낸 걸작품이다.(후략)


중부매일

"진정한 청원 발전 위해 통합길 선택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32
언 론 사	전국매일(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011 예농빌딩 대표이사 박 종 필
심의대상기사	지방시대 2014년 3월호 16면~19면「"주민 · 현장목소리로 태안발전 견인"」 2014년 3월호 30면~31면「'실력과 경쟁력' 갖춘 도시 평택」 2014년 3월호 34면~35면「느림을 찾아, 비움을 찾아 뚜벅뚜벅」 2014년 3월호 58면~59면「활발한 의정활동 시민 삶의 질 UP」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남 태안군수, 경기 평택시장, 전남 순천시장, 서울 중랑구청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예비후보자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기사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주민 · 현장목소리로 태안발전 견인"

-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비로소 생명력 지녀
- 공론의 장 마련… 숨겨진 아이디어 발굴 · 키워야

제가 체득한 읍 · 면과 시 · 군, 도청과 국제사무소 등 지방행정의 다양한 근무경험은 그 누구보다도 생동감 넘치는 태안을 건설하는데 안성맞춤의 적임자이고 그동안 준비된 리더의 잠재역량과 뜨거운 열정은 분명 태안의 가치를 높이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튼튼히 살려낼 것이다.(후략)


"주민·현장목소리로 태안발전 견인"

태안군은 올해로 복군 25주년을 넘어서는 사람의 생애주기에 견주어본다면 그야말로 패기와 혈기가 충만한 청춘예찬으로 찬미해줘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태안이 관광휴양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패턴을 벗어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후략)



'실력과 경쟁력' 갖춘 도시 평택

■ 2014 신도약 · 발전 기대

경기 평택시는 어려운 국내 · 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난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이후 산업과 경제, 교통과 물류, 복지와 문화 등 지역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큰 성장으로 평택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지난해 5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산업단지 착공에 이어 LG전자 산업단지 추가 확장, 고덕신도시 1단계 공사 착공,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보상 착수 및 현덕지구 신규사업자 선정 등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후략)



느림을 찾아, 비움을 찾아 뚜벅뚜벅

■ 강!력!추!천 뚜벅뚜벅 걷는 순천여행길

여행은 시간을 들이는 일이 아닌 시간을 벌어오는 일이다. 낯선 도시에 도착한 여행객은 도시의 100년 전 또는 100년 후를 여행한다. 일상에선 쉽게 잡히지 않는 시간이 여행에선 순순히 잡힌다. 여행의 묘미다. 하늘과 삶,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 순천시가 쉼을 찾아 느림을 찾아 비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객을 위해 뚜벅뚜벅 걷는 순천 여행길을 소개했다. 뚜벅뚜벅 걷는 순천 여행 동선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천만에서 시작해 순천만정원 그리고 동천에서 봉화산둘레길을 걷는 코스다.(후략)



활발한 의정활동 시민 삶의 질 UP

"가난한 아이 부자 아이 차별 없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행정과 토목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공석호 의원(중랑2)이 지난 2010년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밝힌 다짐이다. 공 의원은 8대 시의회에서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힌다.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등 8개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160여건의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했다. 또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경전철 전도사로 나섰고 사업회경제기업을 설립자문하는 민간 인큐베이터인 중랑협동조합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협동조합을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랑구청장 출마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공석호 서울시의원을 만나 지방정치인이 된 배경, 의정활동과 향후 정책 비전을 들었다.(후략)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 8개 특위 활동·160여건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 시민 삶의 질 UP

"가난한 아이 부자 아이 차별 없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행정과 토목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공석호 의원(중랑2)이 지난 2010년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밝힌 다짐이다. 공 의원은 8대 시의회에서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대표적이 의원으로 꼽힌다.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청책연구위원회 등 8개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160여 건의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했다. 또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용경전철 전도사로 나섰고 사업최장제기업을 철회시킨 데는 민간 인큐베이터인 중랑협동조합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협동조합을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랑구청장 출마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공석호 서울시의원을 만나 지방정치인이 된 배경, 의정활동과 향후 정책 비전을 들었다.

● 중랑구에서 무슨하게 정치를 했는데, 지역 토박이 인가

1991년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 동대문구 변두동(1995년 중랑구로 분구)으로 이사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어 중랑구 토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성부동에서 체지 개발을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수업을 마치면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어렵게 공부했다. 고등학교 졸업 스승 전(前)공인회계사를 선배로 하면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하던 중 군 입대를 했다. 병영생활을 하면서 공인회계사를 목표로 하고 제대 후 다시 학업에 전념했다.

● 유학생활을 한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대학을 입학한 시기에 한국은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다른 유학생들처럼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수업을 마치면 도서관으로 향했고 주말이면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 등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5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던 중 한국대학가 소식을 접했고 청년들의 아픔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주화를 외치면 자신의 몸을 내 던지는 열사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질 듯 아팠다.

● 국제회계사의 꿈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지방정치인의 길을 걷었는데 심적은

국제회계사를 위했던 부모님이 동을 뿌리지고, 중압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졸루터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정치인의 길을 걷었다. 마침내천년국민회의으로 정치를 입문해 구의원 선거에서 연속 2번 낙선해 정치를 포기할까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자원봉사들의 격려로 다시 시작했고, 중랑구의원과 서울시의원에 연속 당선되는 기쁨을 안았다.

● 서울시의원에 들어와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이었는지

공약 이행이었다.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전시·도적행정의 폐해를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의 개선책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등 8개의 특별위원회를 활동하면서 300건이 넘는 보도자료와 160여 건이 넘은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했다.

그 결과 일가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약속대상 '최우수상' 2회, 주수사례경진대회 '주수상과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매니페스토부문 '의정대상',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정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 면목선경전철 조기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설과는

면목선경전철은 중랑구 지역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점 사업으로 하다 나섰다.

서울이 뉴타운과 기업과 큰 기관단체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면목선(지하)경전철조기착공 주민위원회'를 꾸려 서명운동을 펼쳐,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뿐만 아니라 중랑동래를 조성 사업의 방주고개 연결다리 용역비, 중랑전면 아파수명상 건설, 봉화산 화약고 이전 등의 예산을 확보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서울시 주차장설치 조례를 개정해 상봉터미널 부차 개발이 탄력을 받게 했다.

● 앞으로 중랑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은

중랑구는 서민층이 다수 거주해 지역경제한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상봉터미널 부지를 주상복합 단지로 개발해 중랑구 랜드마크로 만들고 면목동 · 상봉동 일대를 의류패션특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두보 만들어야 한다.

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야 한다. 봉화산을 힐링공원으로, 용마 공원을 테마파크로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확충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노인과 장애인은 일자리를, 청년과 여성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함께 누리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24시간 맞춤형 보육센터를 도입하고 어르신 건강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국가 미래를 위해 교육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마을도서관과 주수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등 · 하굣길 안전을 위해 스쿨존 CCTV 설치를 늘려야 한다.

생활체육 지원과 대회 유치를 통해 중랑구를 체육메카로 조성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서정익 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133
언 론 사	(유)익산투데이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5길 15, 2층(창인동 1가) 대표이사 이 용 득
심의대상기사	익산투데이 2014년 3월 5일자 1면「익산시장선거 무소속 다자대결 결과는?」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 익산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 등으로 표현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익산시장선거 무소속 다자대결 결과는?

(전략) 그동안 실시했던 다자대결구도 각종 여론조사결과에서 이한수 시장이 20% 후반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기존지지층에 10% 남짓의 득표율을 보태면 당선권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후략)

기초선거 기호 2번이 사라졌다

익산시장선거 무소속 다자대결 결과는?

다자 대결시 '조직력 + 인지도' 현 시장 절대적 유리
새정치연합 후보군 단일화해야 해 볼만, 박경철 변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투표지에 기호 2번이 사라지게 됐다. 기호 2번은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고유번호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민주당-안철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따라 익산시장 선거는 무소속 다자대결 구도가 벌어지게 돼 선거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위원장은 지난 2일 '제3지대 신당창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들 두 사람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하고 당내 추인을 받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양자대결 구도가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기초선거는 무소속 후보 간 다자대결 구도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면서 조직과 인지도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들이 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익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는 민주당 이한수, 새정치연합 정현욱, 배승희, 양승길, 배병욱, 박종엽, 무소속 박경철 등 7명이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새정치연합 5명의 후보군은 경선을 통해 1명이 최종 주자에 오르게 돼, 익산시장 선거 본선은 3자 대결구도가 예상됐다.

그러나 양당이 통합에 합의하고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익산시장 선거는 정당구분이 없는 무소속 다자 대결구도가 될 전망이다. 무소속 다자대결 구도는 3선에 도전하는 이한수 현 시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이다. 지난 8년간 다져온 조직력과 인지도는 기본적으로 30%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밑반찬'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실시했던 다자대결구도 각종 여론조사결과에서 이한수 시장이 20% 후반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기존지지층에 10% 남짓의 득표율을 보태면 당선권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상황이 급변하면서 새정치연합 후보군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난립은 '헌납'이라는 공식이 분명한 이상 '이한수 대 비이한수'라는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해 볼 만한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후보군의 단일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뿐더러, 박경철 대표의 단일화 합류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제3지대 창당이라는 폭탄에 새정치연합 후보군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 단일화 필요성이 절실하더라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차차기를 노리는 정치적 득실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소속으로 정치인생을 일관한 박경철 대표는 4일 통합신당으로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박 대표는 이번 선거를 역대 어느 선거보다 물실호기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민주당에 '묻지마' 투표 행태를 보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무소속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해볼만한 선거라 고무돼 단독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며, 통합신당 입당에 대해 "이미 기초단체장 무공천을 선언한 시점에서 통합신당에 들어가면 다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해야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단체나 영향력 있는 인사의 중재를 통한 단일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전례가 없고 영향력 있는 인사 역시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 이한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후보난립은 '필패'라는 인식을 공유하면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석달 앞으로 다가온 익산시장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보지 못한 2번이 없는 무소속 대결이다. 다자대결 구도는 현 시장 절대적 유리,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한수 현 시장을 제외한 후보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의 결 번 호	2014지선134
언 론 사	(주)서울경제신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9층, 13층 대표이사 이 종 환
심의대상기사	서울경제 2014년 3월 5일자 8면「달아오르는 수도권 빅3 경쟁」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 등으로 표현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달아오르는 수도권 빅3 경쟁

(전략)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시장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보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자신의 지역구인 김포를 찾아 인천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중략)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경기지사 후보군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서울경제
2014년 03월 05일
08면 (정치)

유정복, 인천시장 출사표…이학재·안상수와 경선 3파전

달아오르는 수도권 빅3 경쟁

6·4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빅3' 지역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결정 이후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하던 유력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수도권 지역을 둘러싼 여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시장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보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자신의 지역구인 김포를 찾아 인천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유 장관은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김포시당 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인천시장에 출마하라는 정치적 명령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과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기꺼이 던지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5일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장 출마에 대한 입장을 재차 표명할 예정이다. 유 장관이 이날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새누리당 인천시장 경선은 앞서 출사표를 던진 이학재 의원, 안상수 전 시장 간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정몽준·김황식·이혜훈 vs 박원순
경기지사 김상곤·원혜영·김진표 vs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여야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 후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한다"며 "비록 험한 길이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엄중한 명령이라면 기꺼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권의 경기지사 경선은 이미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김진표 민주당 의원과의 삼각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김 교육감이 새정치연합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출마 요청을 받으면서 범야권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돼온 만큼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존 후보군이 경선을 통한 공천을 주장하고 있어 세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경기지사 후보군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내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과 만나 경기지사 출마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남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들이 다들 출마를 권했다"며 "내일 최종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기 순회경선을 통해 경기지사 선거 흥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미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이 이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조기 순회경선을 제안했고 황 대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시장에 맞서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등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공천 티켓'을 둘러싼 여권 내 경쟁이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0일까지인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신청 마감일을 15일로 닷새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공천신청 마감일을 연장하는 방안이 14일 미국에서 귀국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11.8*22.3)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35
언 론 사	주식회사 여수신문 전남 여수시 장성1길 26 (안산동 725-16 3F) 대표이사 황 상 석
심의대상기사	여수신문 2014년 3월 6일자 1면 「민주당도 무공천 … 여수시장 선거 어떻게 전개될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여수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 등으로 표현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당도 무공천 … 여수시장 선거 어떻게 전개될까

2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도 기초선거구(시장, 시의원)에 대해 공천하지 않겠다" 고 밝히면서 선거 구도가 출렁대고 있다.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까지 무공천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 공천 희망자 2명과 새정치연합 공천 희망자 6명은 모두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마 뜻을 접어야 한다.

8명 모두가 무소속으로 본선에 출마할 경우 예상되는 구도는 △새누리당 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0명 등 최소 12명이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심정우 전 당협 위원장이,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상일 현 여수시의원이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

무소속은 민주당 공천 희망자 2명과 새정치연합 공천 희망자 6명에 더해 김충석 현 시장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좋은 시민후보' 1명 등 10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 반전에 반전…유리해진 김충석

김충석 현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당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공천자가 결정되면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을 밝히면서 새정치연합 공천을 준비하는 인물들은 울상이 됐다.

반면 민주당 후보 공천을 준비하는 인물들은 내심 반기는 눈치였다.

김충석 시장과 1:1 양자 구도로 선거가 진행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하지만 2일 민주당마저 무공천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각 진영은 앞으로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후략)



민주당도 무공천…여수시장 선거 어떻게 전개될까

새누리,통진당 후보, 무소속 10여명 등 12명 가량 출마 예상

2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도 기초선거구(시장, 시의원)에 대해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선거 구도가 출렁대고 있다.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까지 무공천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 공천 희망자 2명과 새정치연합 공천 희망자 6명은 모두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마 뜻을 접어야 한다.

8명 모두가 무소속으로 본선에 출마할 경우 예상되는 구도는 △새누리당 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0명 등 최소 12명이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심정우 전 당협 위원장이,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상일 현 여수시의원이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

무소속은

의 결 번 호	2014지선136
언 론 사	(주)경북매일신문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대표이사 최 윤 채
심의대상기사	경북매일 2014년 3월 7일자 3면 「"도민과 함께 경북의 꿈 완성"」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 등으로 표현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도민과 함께 경북의 꿈 완성"

(전략)실제 김 지사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50%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어 출마여부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자신'일뿐 거침이 없는 상태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도지사 도전에 잠재적 뜻을 뒀다 꿈을 접은 것 또한 김 지사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후략)

경북매일
2014년 03월 07일
03면 (정치)

"도민과 함께 경북의 꿈 완성"

김관용 지사 3선 도전 의미

경첩인 6일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전국적으로 오는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유일한 광역단체장이 됐다.

김 지사는 이날 출마를 선언하면서 유독 '소통'을 강조했다. 출마선언 장소로 영천 청통(淸通)면을 택한 그 자체가 행정 현장의 최일선에서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 맑고 깨끗하게 소통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김 지사는 출마선언을 통해 "우선 지난 민선 4, 5기를 거치면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다"며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경북도 도읍지를 개도 700년 만에 이전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며 자신의 8년 도정 성과를 평가했다. 또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능력이다"고 지적하고 "경주 신라 왕경 복원 등 문화융성시대 개막, 새마을운동 세계화 확산,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해양 실크로드 복원 등의 마무리를 하겠다"며 경북 도정의 중단 없는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0여년간 인연을 이어 왔다는 대통령과의 관계도 내세웠다. 김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경북인의 손으로 선택한 만큼 그 성공을 통해 경북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경북의 꿈을 반드시 완성해 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그동안 박 대통령이 잡권하기를 오래동안 기다려 온 만큼, 이 호기를 이용해 경북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적임자는 바로 '김관용'"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그동안 자신의 3선 출마 포기설의 유력한 근거가 돼온 고령(72)과 건강 악화 소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시중에 얼토당토 않은 여러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고, 아는 도민이 선택을 하는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불식시키기 위해 좀 일찍 출마선언을 한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김 지사는 "지역과 국가발전의 막중한 책무를 회피하는 것은 도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판단,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고, 이제 법이 정한 마지막 3선 도지사로서 경북발전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놀라지 말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가볍게 처신하지 말자. 또 타인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자신에게는 가을 서릿바람처럼 더 날카롭게 하자'는 내용인 '처변불경 처변불경(處變不驚 處變不驚), 접인춘풍 임기추상(接人春風 臨己秋霜)'의 좌우명을 언급했다.

새마을세계화·투자유치·해양실크로드 등 의지
'강한 경북시대' 역사적 대장정에 적극지지 호소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하게 자신을 던져 도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였다. 김관용 지사는 이날 환동해발전본부의 경북동해안 설치 공약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동남권 주민들과 미묘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원인이 돼 온 경북도 제2청사 설치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지사가 본부의 규모나 기능을 제2청사에 버금갈 만큼 추진할 구체적 의향이 있다면 더 이상 쟁점이 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영천 출마선언을 마치고 곧바로 포항으로 이동, 포스텍 청암동산에 위치한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의 동상을 참배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포항을 비롯한 동해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사퇴 시기와 관련, 당분간 현직을 유지한 채 오는5월 예비후보 등록때까지 지사직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를 출마포기와 달리 김 지사가 이날 3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번 선거는 본인의 의지대로 가겠다는 정면 돌파라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실제 김 지사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50%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어 출마하여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자신'일뿐 거침이 없는 상태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도지사 도전에 잠재적 뜻을 뒀다 꿈을 접은 것 또한 김 지사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3선 도전을 공식화 한 김 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과 멈출줄 모르는 광폭 행보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일각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건강을 염려하긴 하지만 참모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움직이는 보폭이 크고 일에 대한 정열이 대단하다"면서 "정치권은 물론 중앙부처, 박근혜 대통령과도 두터운 신뢰로 소통하고 있는 만큼 3선이 되면 지사 이상의 큰 역할이 기대돼 경북발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김 지사는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상징적으로 표현, 직원들이 붙여준 별명이 DRD(경상도 사투리로 들이대의 영문 이니셜)"이라면서 미스터 새마을, 문화전도사, 야전사령관 등 언론과 국내외 지도자들이 붙여준 닉네임 자체가 김 지사의 업적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현재 예비후보 등록한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준비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준비위에는 공직자로서 청렴성을 강조했던 윤정용 전 행복재단 대표이사, 김상준 전 경주 부시장, 이상학 전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박남수 전 경북개발공사 기획실장, 전충진 전 매일신문 기자이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독도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김 지사가가 제시할 3선 도전의 밑그림을 사실상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관용 경북도지사 예비캠프에는 조건 없는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어 즐거운 비명이다.

김 지사는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도민 중심을 거듭 되풀이했다. "도민만을 보고, 도민만을 생각하며, 도민만을 위한 행해를 시작하겠다"면서 "경북이면 가능하고, 경북인이면 할 수 있다. 강한 경북을 만들어가자"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민선 6기 경북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새누리당 권오을 전 국회의원, 박승호 포항시장,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윤병태 통합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 새정치연합측에 김병희 오너앤파트너스컨설팅그룹 대표 등 7명이 도전하고 있다.

/서인교·이창훈기자

(20.8×22.8)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37
언 론 사	(주)광주매스컴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이사 서 유 창
심의대상기사	광주매일 2014년 3월 12일자 3면 「전남지사 선거 '공천=당선' 공식 신당 권역별 표심이 승부 가른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 마다 선두권 …' 등으로 표현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영록·이낙연·이석형·주승용 4파전 구도
서남권 분산 속 광주근교권·동부권 관심사

(전략)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중남권을 중심으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하며 선전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는 높은 지지도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광주근교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세를 기록하

고 있다. 광주근교권에 자신의 지역구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또 서남권과 중남권에서도 고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동부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마다 선두권에 포진한 이 의원의 지지도가 눈에 띄게 반등하지 않는 것은 결국 동부권에서의 상대적 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동부권의 최강자로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후보군을 멀찌감치 따돌리는 양상이다. 주 의원은 중남권과 광주근교권에서도 2·3위를 오가며 선전하고 있다.(후략)

광주매일신문

2014년 03월 12일
03면 (종합)

전남지사 선거 '공천=당선' 공식 신당 권역별 표심이 승부 가른다

김영록·이낙연·이석형·주승용 4파전 구도 서남권 분산 속 광주근교권·동부권 관심사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전남지사 불출마를 최종 선언함에 따라 통합 신당내 후보간 4파전으로 진행될 지사 선거전은 결국 '공천=당선' 공식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선룰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김영록·이낙연·주승용(이상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석형(새정치연합) 전 함평군수 등 유력 후보 4명의 강세·약세 지역이 뚜렷이 구분돼 향후 각 권역별 표심이 '통합 신당' 경선의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의 선거전략도 강세 지역의 표 분산을 막고 약세 지역을 중점 공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그동안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다자구도 기준) 결과, 출마를 선언하거나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남지사 후보 4명의 권역별 지지도가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통상 전남지역 여론조사는 서남권(목포·무안·신안·영암·진도·해남)과 동부권(광양·순천·여수·구례·고흥), 중남권(강진·보성·완도·장흥), 광주근교권(나주·곡성·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으로 구분한다.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서남권 27.7%, 동부권 41.9%, 중남권 10.0%, 광주근교권 20.4%로 비례 할당한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중남권을 중심으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하며 선전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는 높은 지지도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광주근교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세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근교권에 자신의 지역구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또 서남권과 중남권에서도 고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동부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마다 선두권에 포진한 이 의원의 지지도가 눈에 띄게 반등하지 않는 것은 결국 동부권에서의 상대적 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동부권의 최강자로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후보군을 멀찌감치 따돌리는 양상이다. 주 의원은 중남권과 광주근교권에서도 2·3위를 오가며 선전하고 있다.

주 의원이 유권자가 가장 많은 동부권에서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타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은 서남권의 약세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석형 전 군수는 광주근교권과 서남권에서 이낙연 의원과 지지를 나눠 갖고 있다. 동부권과 중남권에서도 선전하고 있지만 지지세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권역별 지지도가 엇갈리면서 각 후보진영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자신의 '텃밭'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약세지역으로 분류되는 권역을 집중 방문하는 등 20-30% 가량의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앞으로 통합 신당의 경선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최대 관건이겠지만 각 후보들이 약세지역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서부권 표가 분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동부권과 광주근교권의 표심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정 기자 jjk@kjdaily.com

(20.6×19.6)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38
언 론 사	(주)전북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진북동 417-62) 대표이사 임 병 찬
심의대상기사	전북도민일보 2014년 3월 17일자 3면「소지역주의 저물고 세대대결 양상 대국면」 2014년 3월 18일자 3면「기초 무공천 결정… '찻잔 속 태풍'」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 장수군수, 전북 순창군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와 …',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 등으로 표현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소지역주의 저물고 세대대결 양상 대국면

기초단체장 3선 연임 제한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장수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가 출마하지 않는 무주공산지역이다.(중략)

정치권은 이 때문에 과거 선거 막판 당락의 최대 변수였던 지역주의 대결 구도 대신 젊은층과 논년층의 세대간 대결 여부가 장수군수 관전포인트로 지목하고 있다.(후략)



전북도민일보

2014년 05월 17일 03면 (종합)

점화된 전북 지방선거 레이스 ⑭ 장수군수

소지역주의 저물고 세대대결 양상 새국면

김창수 직능특별위원 | 권건주 전 원장 | 김창수 전 농협장 | 박성근 전 농협장 | 송만섭 회장 | 장영수 도의원 | 최용득 전 군수

기초단체장 3선 연임 제한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장수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가 출마하지 않는 무주공산 지역이다.

전북을 탈당은 하고 있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도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으로 장수군수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은 장수군수를 둘러싼 이같은 정치구도를 틈어 무소속 후보 난립속에 각 후보간 치열한 난타전을 예상했다.

실제 권건주 전 지방공무원연수원장, 김창수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 김창수 전 장수농협장, 박성근 전 장계농협장, 송만섭 전북서H 회장, 장영수 도의원, 최용득 전 군수 등 7명이 차기 장수군수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6·4지방선거가 아직 초반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후보간 우열은 예상외로 쉽게 드러나고 있다.

장영수 도의원의 독주속에 김창수 전 장수농협장, 최용득 전군수가 추격하는 1강2중 모양이 차기 장수군수 구도라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와 지역내 여론에 따른 분석이다.

장 도의원의 경쟁력 확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때 불기 시작한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이 가장 큰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의원이 무진장·임실 지역구를 떠나고 젊은 박민수 의원이 자리를 이어 받으면서 불기 시작한 세대교체 바람이 6·4지방선거에서 정점을 치닫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역대 선거때 마다 장수와 장계를 중심으로 한 소지역주의도 세대교체 바람에 약화된 것도 선거 초반부터 장수군수 선거 판세가 드러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 때문에 과거 선거 막판 당락의 최대변수 였던 지역주의 대결 구도 대신 젊은층과 노년층의 세대간 대결 여부가 장수군수 관전 포인트로 지목하고 있다.

김창수 전 장수농협장은 현재 출마하고 있는 군수 후보중 지지층이 가장 폭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내 높은 인지도와 합리적인 성격이 강점으로 작용하면서 차기 장수군수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긴 전 농협장이 정치 경험 부족으로 확실한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약점으로 꼽고 있다.

최용득 전 군수는 오랜 선거경험과 2번의 낙선이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초반 인지도에 비교해 고전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동정여론과 세대교체에 대한 역풍이 불 경우 의외의 상황을 연출할 수 있지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 전군수는 특히 지역내 확실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장수군수 선거가 바람이 아닌 조직선거 형태를 띨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성근 전 장계농협장은 당초 무소속 입장을 고수해 왔던 터라 통합신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인한 충격파가 그리 크지 않고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인지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20.2×17.6cm)

기초 무공천 결정… '찻잔 속 태풍'

(전략)현 황숙주 군수의 독주가 무공천 결정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중략)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황 군수는 높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타 후보의 추격 의지를 꺾어 놓고 있다.(후략)



전북도민일보

2014년 03월 10일 03면 (종합)

점화된 전북 지방선거 레이스 ⑮ 순창군수

황숙주 군수 | 설동진 전 단장 | 유영선 회장 | 장종일 전 이사장 | 정재규 전 보좌관 | 홍승채 전 시의원

기초 무공천 결정… '찻잔 속 태풍'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을 정대기반으로 하는 통합신당은 기초선거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은 기초단체장 무공천 결정이 가져올 지선 구도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렸다.

정치권은 그러나 순창군수의 선거는 통합신당의 무공천 결정이 찻잔 속의 태풍처럼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현 황숙주 군수의 독주가 무공천 결정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설동진 전 전남·광주 공동혁신도시단장, 유영선 복흥중총동문회장, 장종일 전 순창효사랑요양병원 이사장, 정재규 전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특별보좌관, 홍승채 전 서울시의원 등이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황 군수는 높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타 후보의 추격 의지를 꺾어 놓고 있다. 황 군수의 지지율은 재선거를 통해 군수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보여준 청렴성, 개혁성이 군민들에게 각인시킨 것이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홍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두 번의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흥기 씨와 강동원 국회의원 선거에 핵심참모로 참여했다. 지역 내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민과 스킨십을 강도를 높이면서 황 군수를 쫓고 있다.

설동진 전 단장은 18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단장을 하면서 지역발전 방향을 꿰뚫었다는 후문이다. 유영선 회장은 안철수 실행위원 출신으로 공직생활 커리어가 경쟁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종일 전 이사장도 안철수 실행위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정재규 전 보좌관은 지역 내 일정 기반을 토대로 민심에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빗빗하게 흐르고 있는 이번 순창군수 선거는 오은미 도의원 지지세력의 향방과 강인형 전 군수 측의 움직임, 신당에 발기인으로 나선 강동원 의원의 행보에 따라 일정한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9대 총선 당시 한때를 탔던 강동원 의원과 오은미 도의원이 정치적으로 결별해 이번 지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런 분위기 속에 정당공천 지지율 보호막이 사라진 만큼 현직 군수의 프리미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황 군수의 독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서울=전형남 기자

(14.9×18.3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39
언 론 사	(주)충청투데이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30번길 67 (갈마동) 대표이사 정 남 진
심의대상기사	충청투데이 2014년 3월 19일자 3면「與 경선치열 · 야권 단일화 … 복잡다단」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남 금산군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최초 공표 · 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각종 언론매체의 여론 조사에서 …' 등으로 표현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 · 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 · 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 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與 경선치열 · 야권 단일화 … 복잡다단

(전략)현재 판세로만 보면 각종 언론매체의 여론 조사에서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박동철 군수 3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중략)더욱이 박 군수의 3선 도전에 대한 저지와 오로지 이기기 위한 단일화는 명분이 약하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아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후략)

與 경선치열·야권 단일화… 복잡다단

6·4 지선 누각 뛰나 D-77

금산군수

새누리당 6·4지방선거 공천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단체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의원 출마자들이 경선 룰에 대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들은 도당과 당협위원장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하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어 금산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 67.2%(1만 8888표)라는 높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박동철(62·새누리당) 군수의 3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어 수성여부가 지역정가 최대 관심사다. 또 같은 당 소속 고재중(66) 충남도당 부위원장이 당내 경선에 도전, 완주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영준(49)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문정우(50·무소속) 건국대 겸임교수, 박범인(55·무소속) 전 충남도 농정국장이 출마를 선언하고 표밭을 다지면서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무공천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나오면서 예비후보자 마다 판세 분석에 열중이다.

2010년 지방선거 후보별 득표율

정당	출마자	득표수	득표율
민주당	박병남	4833표	17.19%
자유선진당	박동철	1만8888표	67.20%
무소속	김행기	3573표	12.71%
무소속	안재호	814표	2.90%

현재 판세로만 보면 각종 언론매체의 여론 조사에서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박동철 군수 3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더구나 여기에 맞설 대항마 찾기가 그다지 녹녹지 않다는 지역정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마다 제시할 공약과 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부위원장은 박 군수와의 경선에 사활을 걸어 한판 승부를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단할 수 없는 공천 경쟁이 박 군수를 긴장하게 만들면서 캠프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무소속 출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을 거머쥐는 후보와 1대1 구도가 아닌 다자구도로 군수 선거판이 짜여질 경우 야권 후보들은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3명의 군수 후보자들이

6·4지방선거 금산군수 출마예상 후보군 현역·정당·가나다 순



박동철 금산군수 | 고재중 새누리 도당 부위원장 | 최영준 민주 농어민위 부위원장 | 문정우 건국대 겸임교수 | 박범인 전 충남도 농정국장

새누리 박동철 現군수 40%대 지지율… 고재중과 경선 경쟁
야권 최영준·문정우·박범인 출마 선언… 단일화 움직임
與 경선 불복 우려 野 단일화 명분론에 지선 선거판세 복잡

지난 12일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어 단일화 성사 여부가 판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들의 단일화 합의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각종 부작용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지역정가에서 단일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박 군수의 3선 도전에 대한 저지와 오로지 이기기 위한 단일화는 명분이 약하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아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금산군 제6대 지방선거는 총인구수 5만 5497명 가운데 유권자는 4만 7063명이다. 2010년 제5대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별 득표현황은 △자유선진당 박동철 후보 1만 8888표 △민주당 박병남 후보 4833표 △무소속 김행기 후보 3573표 △무소속 안재호 후보 814표를 각각 얻었으며 63.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금산=김혁수 기자 kdks575@cctoday.co.kr

의 결 번 호	2014지선140
언 론 사	경북일보(주)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93 대표이사 한 국 선
심의대상기사	경북일보 2014년 3월 21일자 3면 「이현준 군수 아성에 김학동 · 오창근 도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예천군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최초 공표 · 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마다 …' 등으로 표현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 · 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 · 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 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현준 군수 아성에 김학동 · 오창근 도전

(전략)이현준 군수가 올해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마다 인지도 지지도 등 타 후보자들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으며 새누리당 공천도 무난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후략)

경북일보
2014년 03월 21일
03면 (선거)

이현준 군수 아성에 김학동·오창근 도전장

대항마 김학동 2위로 바짝 추격…새누리 공천 결과 초미관심

가나다순

▌예천군수


김학동


오창근


이현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천군수 출마후보자들이 각종 모임 행사장을 누비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예천군수 선거는 이현준(60) 예천군수, 김학동(53) 전 예경포럼회장, 오창근(68) 전 예천경찰서장 등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상향식 공천에 기대감을 보이며 인지도 및 지지도 쌓기에 여념이 없다.

이현준 군수가 올해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마다 인지도 지지도 등 타 후보자들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으며 새누리당 공천도 무난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공약 이행 부분, 주민 간 소통, 각종 행정업무평가에서 중앙도, 단위 우수기관 선정 등 눈부신 성과로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

이군수의 대항마로 알려진 김학동 전 예경포럼회장은 여론조사에서 2위에 머물며 이군수를 추격하고 있다.

김학동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각종 행사장을 누비며 자신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며 강행군을 하고 있으나 이 군수에게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강하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 선거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창근 전 예천경찰서장은 올해 1월 출판 기념회를 열고 새로운 지지세 몰이에 나서고 있으며 여론이 뜨지 않고 있으며, 새누리당 공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만기자 smlee@kyongbuk.co.kr

(15.3*13.9)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44
언 론 사	주식회사 당나루신문사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635-14 3층 대표이사 전 순 환
심의대상기사	당진투데이 2014년 3월 20일자 9면「투자유치설명회와 규제완화」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남 당진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 자치단체장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투자유치설명회와 규제완화

당진시는 지난 2월 25일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수도권 위주의 기업과 투자자를 상대로 초청한 결과, 처음 보는 생소한 외지인이 많이 자리한 것이 보였다.

예년에는 산업단지만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면, 올해는 개별적인 공장입지를 찾는 기업, 대기업에 납품하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사중점에 변화를 시도했다.(후략)



기고

투자유치설명회와 규제완화

이 철 환
당진시장

당진시는 지난 2월 25일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수도권 위주의 기업과 투자자를 상대로 초청한 결과, 처음 보는 생소한 외지인이 많이 자리한 것이 보였다.

예년에는 산업단지만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었다면, 올해는 개별적인 공장입지를 찾는 기업, 대기업에 납품하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사중점에 변화를 시도했다.

현대제철이라는 대기업이 나와서 어떤 신규투자를 할 것인지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고, 토지에 대한 투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토지 관련 부서의 직원도 대거 참석시켜 궁금증을 해소토록 노력했다.

인천 등 수도권에서 자방이전을 고려중인 금속, 기계업체들과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문사, 개발대행사 등이 참석자 명단에서 눈에 띈다. 시장에게 직접 다가와서 명함을 건네며 당진에 투자하고 싶다며 추후에 방문하겠다고,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에서 근무중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장들이 설명회에 많은 수도권 투자자가 온 것 같다고 부러워하며 그 비결을 묻는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회를 준비한 직원들의 설명도 뒤따 되었다.

아직도 당진은 투자유망지로서 관심을 받는다는 자부심에 푸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유치와 투자등이 경기침체의 여파로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기에 불안감도 몰려 온다는 게 사실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당진시에 대한 투자가 점점 힘들어지는 요인 중 최고의 요인은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중앙정부는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수도권의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대한민국이 치루는 값비싼 대가의 일부에 불과하다.

전국 인구의 49.38%가 몰려 살고 있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탓에 지방은 점점 고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쇠퇴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다.

중앙정부는 지방을 배려한다고 여러 시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세종시 이전 외에는 피부로 느껴지는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 같다.

중앙정부는 한동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할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또한 수도권이외의 한 개의 지방에 불과하다.

위에 설명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진시는 50만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의 입장에서는, 당진시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투자 메리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당진시로 투자하면 무엇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묻기 때문이다.

투자에 따른 메리트는 당진시도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대화를 통한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투자가 늘면 그 결과로 우리지역이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으로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된다.

규제완화와 지원확대 방안은 우리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만 또한번의 도약의 기회가 당진시에 올것이다.

시장으로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증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명한 당진시민들의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기대해본다.

끝으로 투자의 효과와 열매를 당진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45
언 론 사	주식회사 한남일보 경남 거제시 고현로 9길 25(고현동) 대표이사 정 일 응
심의대상기사	한남일보 2014년 3월 19일자 15면 「민심의 목소리를 어찌 구태(舊態)라 하는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남 거제시장)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심의 목소리를 어찌 구태(舊態)라 하는가

3월 14일자 거제언론보도를 통해 나는 김한표 국회의원으로부터 '윤영 예비후보는 책임을 떠넘기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등의 구태정치로 거제정치가 더 이상 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무리 처해진 상황이 어려워도 품의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충고를 받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선거를 불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김한표 국회의원 당선에 어찌 보면 일조(?)한 선배 국회의원에 대해, 덕담은 못 할지언정 인격모독에 가까운 충고를 받고 보니 기분이 썩 유쾌하지 못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후략)


한남일보

기고

민심의 목소리를 어찌 구태(舊態)라 하는가

의 결 번 호	2014지선146
언 론 사	주식회사 해피데이고창신문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상원사길 214, 3층 (월곡리, 상원빌딩) 대표이사 박 성 학
심의대상기사	해피데이고창 2014년 3월 20일자 3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참일꾼이 되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 고창군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 '지난 1월말 전북일보 여론조사 등에서 월등히 1위를 차지하고있다' 등으로 표현하였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참일꾼이 되겠다"

(전략)한편, 전북일보 기자는 "정원환 후보는 고창을 떠난 적이 없지만, 정학수·유기상 후보에 비해서는 고창에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꾸준히 터를 닦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지난 1월말 전북일보 여론조사 등에서 월등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학수·유기상 후보에 비해 행정경험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며, 그에 대한 반론이나 대비책을 질의했다.(후략)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참일꾼이 되겠다"

박우정, 고창군수 출마 기자회견
'고창의 밝은 미래를 위한 5가지 정책방향' 제시
"TV토론 등 모든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고창군수 후보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우정 고창군애향운동본부장이 3월18일(화)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박우정 후보는 민주당 고창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가슴으로 경청하며, 그 뜻을 받드는 참일꾼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쟁후보에 비해 공개행사를 하지 않았던 박우정 후보의 출마선언은,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후보들간의 공개경쟁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박 후보는 "민선시대 이후 고창은 비옥한 토지와 양호한 기후, 그리고 군민들의 남다른 근면성과 성실성이 바탕이 된 애향심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늘의 고창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발전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고창군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품격높은 고창을 건설하려는 것이 본인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창의 밝은 미래를 위한 5가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첫째, 아름답고 청정한 '친자연적 고창건설'을 목표로 하여, 관광·레저·휴양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농·축·어업 분야의 기반을 확충·정비해, 농·축·어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시행을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우량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청·장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군내 거점별 마을의 고유산업을 발굴·육성해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셋째, 전시성 업적과 치적위주의 사업을 배제하고, 개별마을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민생 행정'을 실천하겠다.

넷째, 동학농민혁명의 의기를 되살리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는 사업과, 고창 고유의 전통문화 및 그 예술혼을 담은 문화사업을 적극 지원해, 고창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의기와 문화의 본고장'으로 만들겠다.

다섯째,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와 군정으로, 공직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여,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우정 후보는 세 번째 정책방향을 강조했다. "이 정책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본인과 주민에게는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며 "전시성·불요불급한 예산을 아껴, 주민의 생활공간인 부락을 살리는 일,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3분의2라도 부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일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일보 기자는 "정원환 후보는 고창을 떠난 적이 없지만, 정학수·유기상 후보에 비해서는 고창에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꾸준히 터를 닦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지난 1월말 전북일보 여론조사 등에서 월등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학수·유기상 후보에 비해 행정경험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며, 그에 대한 반론이나 대비책을 질의했다.

박우정 후보는 "공무원이 되면 행정경험을 쌓게 되고,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행정경험은 없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목적은 공무원들이 군수·시장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뜻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군정을 펼쳐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이 성하면 주민은 엎드려야 하고, 주민이 성하면 행정은 주민을 받들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티비토론 등 토론회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는 "토론회는 기회만 있다면 많이 하기를 원한다"며 "지금 공직선거법은 후보를 알리기에 부족하고 제한돼 있다. 유권자는 여러 방법으로 후보를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티비토론 등 토론회가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김동훈 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149
언 론 사	(주)수도권일보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39-3 이룸빌딩 3-5층 대표이사 강 신 한
심의대상기사	수도권일보 2014년 3월 25일자 1면「안양시, UN공공기관 노벨상 수상 쾌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안양시장)와 관련하여 안양시가 UN 공공행정상 2차심사를 통과한 것임에도 기사제목에는 수상한 것으로 표기하여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양시, UN공공기관 노벨상 수상 쾌거

안양시가 공공기관 노벨상이라 불리는 'UN 공공행정상' 2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중략)

지난해 말 전 세계 30여 개국, 200여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간이 참여,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후략)



수도권일보

2014년 03월 25일
01면 (종합)

안양시, UN 공공기관 노벨상 수상 쾌거

공공행정 2차 심사 통과

안양시가 공공기관 노벨상이라 불리는 'UN 공공행정상' 2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양시는 정보화 시대의 범정부적 접근방식 부문에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을 주제로 응모해 다음달 최종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30여개국, 200여 공공기관의 경쟁에서 최종 결선 대상 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UN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선진행정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제정했다.

지난해 말 전 세계 30여 개국, 200여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간이 참여,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 수상작은 공공행정포럼에서 전세계 참가자들에게 발표되고 토론된다. UN이 발간하는 책자에 수록, 각 국의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아직까지 국내 기초지자체 수상 사례가 없어 기대가 크다. 최종 선정시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의 위상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안양시 미래 비전인 스마트창조도시는 최대호 시장의 발상의 전환과 창의 행정이 낳은 결과다.

안양시는 지난 2012년 7월, 도시구조를 과거 굴뚝산업에서 스마트산업으로 대전환을 단행했다. '스마트창조도시 안양' 비전 선포식을 갖고 스마트경제, 스마트 문화, 스마트 행정, 스마트 도시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125개 콘텐츠 기업들을 직접 육성하며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최초로 조성중인 '스마트콘텐츠밸리'는 창조경제를 앞서 실행한 경우다. 지자체인 안양시가 차세대 핵심 산업인 콘텐츠산업을 먼저 기획, 제안해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채택한 우수사례다. 지난해 9월에는 정부가 현재, 평촌스마트스퀘어에 건립중인 안양시 '스마트콘텐츠센터'를 국내 콘텐츠산업의 정책·지원기지로 발표하기도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행복을 담아내는 스마트한 행정역량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1700여 공직자와 그간 성원을 아끼지 않은 62만 시민의 공으로 돌렸다. 아울러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UN공공행정상은 오는 4월말까지 최종 심사를 거친 후, 5월초 수상기관 확정 발표, 6월 23일 '유엔의 날'을 기념해 시상하게 된다.

안양/정영창기자 jungyc@sudokwon.com

(14.7×1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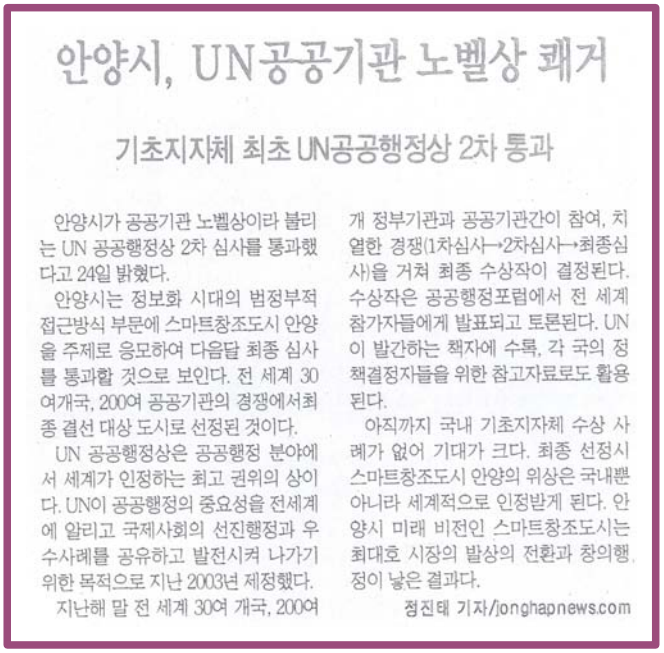
의 결 번 호	2014지선150
언 론 사	종합일보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29 우성빌딩 4층 대표이사 신 현 승
심의대상기사	경인종합일보 2014년 3월 25일자 1면「안양시, UN공공기관 노벨상 쾌거」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안양시장)와 관련하여 안양시가 UN 공공행정상 2차심사를 통과한 것임에도 기사제목에는 수상한 것으로 표기하여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양시, UN공공기관 노벨상 쾌거

안양시가 공공기관 노벨상이라 불리는 UN 공공행정상 2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중략)

지난해 말 전 세계 30여 개국, 200여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간이 참여,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후략)



안양시, UN공공기관 노벨상 쾌거

기초지자체 최초 UN공공행정상 2차 통과

안양시가 공공기관 노벨상이라 불리는 UN 공공행정상 2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양시는 정보화 시대의 범정부적 접근방식 부문에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을 주제로 응모하여 다음달 최종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30여개국, 200여 공공기관의 경쟁에서최종 결선 대상 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UN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선진행정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제정했다.

지난해 말 전 세계 30여 개국, 200여 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간이 참여, 치열한 경쟁(1차심사→2차심사→최종심사)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 수상작은 공공행정포럼에서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발표되고 토론된다. UN이 발간하는 책자에 수록, 각 국의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아직까지 국내 기초지자체 수상 사례가 없어 기대가 크다. 최종 선정시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의 위상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안양시 미래 비전인 스마트창조도시는 최대호 시장의 발상의 전환과 창의행정이 낳은 결과다.

정진태 기자/jonghapnews.com

의 결 번 호	2014지선151
언 론 사	주) 제이콘텐트리 엠엔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6 (논현동, 중앙엠앤비사옥) 대표이사 조 인 원
심의대상기사	여성중앙 2014년 4월호 432면~435면「정치인보다 행정가, 인천시장 송영길 부부의 주말데이트」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들(경기 포천시장, 인천광역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치인보다 행정가, 인천시장 송영길부부의 주말 데이트

주관이 분명하고 목표가 뚜렷한 원칙주의자 남편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감성적인 성격의 아내,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지 4년 차, 송도 국제학교와 아시안게임 유치를 비롯해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선정 등 인천의 비약적인 발전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부부의 지혜로운 소통에서 시작되었다.

'우직한 황소' '노동운동가 출신 변호사' '색깔이 분명한 정치인' '영민한 행정가'. 송영길 인천시장을 묘사하는 수식어다. 노동운동가에서 변호사, 정치인으로 변신해 온 송 시장은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아내의 내조가 컸다고 말한다. 27년간 '곁'이 되어준 아내는 송 시장에게 '작은 거인'이다. 송 시장과 아내 남영신 씨를 만났다. 송 시장은 '황소'라는 별명답게 큰 덩치에 범상치 않은 오라를 뿜어냈다. 하지만 강하고 무뚝뚝한 인상과는 달리 편안하고 유쾌했다. 송 시장의 얼굴에 만연한 천진난만한 미소는 한순간에 긴장감을 풀어주었고, 사교성 좋은 남씨의 친근한 태도는 대화에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부부와의 만남은 주말 늦은 오후에 이루어졌다. 주중에는 산적해 있는 시정업무와 출판 기념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밀린 인터뷰 일정과 회의 등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도 세 개의 일정을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한 자리에 마주할 수 있었다.(후략)

정치인보다 행정가,

인천시장 송영길 부부의 주말 데이트













의 결 번 호	2014지선154
언 론 사	(주)경남도민신문 경남 진주시 동진로 143, 4층 대표이사 황 인 태
심의대상기사	경남도민신문 2014년 4월 1일자 1면「이창희 진주시장 경선 1차 컷오프 통과하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남 진주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 …'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창희 진주시장 경선 1차 컷오프 통과하나

- 새누리당 경남도당 1차 컷오프 4명, 3일 발표예정
- 낙관측 : 이창희 진주시장 컷오프 시킬 명분 없다
- 비관측 : 컷오프 탈락 외 공천배제 시킬 방법 없다

새누리당 기초단체장의 컷오프 발표가 계속 늦어지자 이창희 시장을 비롯한 현역들의 컷오프 통과여부가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경남기초자치단체의 컷오프 대상지역은 진주시, 김해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등이다. 이중 현역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진주시와 사천시이다. 그런데 유독 진주시 이창희 시장에게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창희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간의 소원한 관계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이창희 시장이 공천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돌았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경선에 나갈 1차 컷오프 대상자를 이번 주 중으로는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컷오프는 여론조사와 해당 당협위원장의 의견, 당 기여도, 도덕성, 전문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하겠다는 게 경남도당의 입장이다.(중략)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창희 진주시장의 1차 컷오프 통과여부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경남도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1차 컷오프 통과자는 모두 4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창희 시장이 1차 컷오프 통과 대상자 4명에 포함되느냐의 여부가 관건.(후략)



경남도민신문

2014년 04월 01일 이른 (종합)

이창희 진주시장 경선 1차 컷오프 통과하나

심사항목에 여론조사 외 국회의원 의견 등 주관적 요소 들어가 '변수'

이창희 진주시장

새누리당 경남도당 1차 컷오프 4명, 3일 발표예정

낙관측 : 이창희 진주시장 컷오프 시킬 명분 없다

비관측 : 컷오프 탈락 외 공천배제 시킬 방법 없다

새누리당 기초단체장의 컷오프 발표가 계속 늦어지자 이창희 시장을 비롯한 현역들의 컷오프 통과여부가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경남기초자치단체의 컷오프 대상지역은 진주시, 김해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등이다. 이중 현역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진주시와 사천시이다. 그런데 유독 진주시 이창희 시장에게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창희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간의 소원한 관계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이창희 시장이 공천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돌았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경선에 나갈 1차 컷오프 대상자를 이번 주 중으로는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컷오프는 여론조사와 해당 당협위원장의 의견, 당 기여도, 도덕성, 전문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하겠다는 게 경남도당의 입장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상향식 공천이라면 당협위원장(국회의원이나 심사위원의 의견이 배제된 채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경남도당은 여론조사에다가 도덕성, 당 기여도 등의 요인을 가미해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의해 1차 컷오프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공천심사위원회로서 기능하겠다는 의지이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의 기준대로라면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공천을 주고 싶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1차 컷오프를 시키버림으로써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2차 경선에 출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의 개입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예 1차 컷오프에서 탈락시켜 공천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게 국회의원들로서는 안전한 방편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창희 진주시장의 1차 컷오프 통과여부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경남도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1차 컷오프 통과자는 모두 4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창희 시장이 1차 컷오프 통과 대상자 4명에 포함되느냐의 여부가 관건.

지역정가에서는 이창희 시장의 컷오프 통과를 낙관하는 측과 비관하는 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창희 시장의 컷오프를 낙관하는 측은 아무리 국회의원이 이 시장을 배제하려고 해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진주시장에 출마한 다른 예비후보들의 경우 아직 한 자리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여론조사만으로 보면 이창희 시장과 여타 후보간에는 격차가 큰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을 자의적으로 배제해버릴 경우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실제 이 시장이 불복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갈 경우 국회의원의 진주시장 공천개입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향식 공천을 천명해 온 새누리당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 진주시 지역 국회의원이 이런 상황을 감당할 만큼 현재 자신의 여건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 따라서 비록 이 시장에게 공천을 주고 싶지 않더라도 1차 컷오프 탈락이라는 무리수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컷오프 통과를 낙관하는 측의 분석이다.

이 시장의 컷오프 통과를 비관하는 측은 "이 시장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려면 1차 컷오프에서 탈락 시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들은 2차 경선에 가면 이창희 시장이 현역이라는 프리미엄과 여론에서의 우위를 무기로 경선현장을 누비고 다닐 경우 다른 후보들이 사실상 이창희 후보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경선에서 승리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내심만으로 당원들을 지휘해 이창희 시장을 패배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난한 일이기도 하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선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얻는 것 없이 시비만 쌀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만약 지역 국회의원이 이창희 시장에게 공천을 주고 싶지 않다면 1차 컷오프를 시키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과연 이창희 시장을 1차 컷오프 시켜 비상한 정치 상황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경선과정을 통해 이창희 시장을 검증해 나갈 것인지 진주 지역정가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선효 선임기자

(25.8×21.0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55
언 론 사	㈜인천일보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26 대표이사 김 정 섭
심의대상기사	경기인천일보 2014년 4월 8일자 1면 「정병국 '1차예선' 통과 남경필과 맞대결 확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병국 '1차예선' 통과
남경필과 맞대결 확정

(전략) 남 의원은 최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적합도와 지지율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40% 이상을 얻어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새누리 컷오프…도지사 경선후보 2명 압축

정병국 '1차예선' 통과 남경필과 맞대결 확정

6·4지방선거 D-57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남경필과 정병국 의원이 맞대결을 펼친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병국·원유철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중 정 의원으로 후보를 압축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공천위 부위원장은 당사 브리핑에서 "여론조사에서 세명의 후보자 중 정 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어 앞으로 우리 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는 남경필·정병국 의원 두 사람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후보별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극히 미세한 차이였기 때문에 자세한 수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원유철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한 저의 정책을 실현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2배수 압축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압축은 남경필 의원을 제외한 세 의원들이 유력 경선주자에 맞서 2파전으로 치를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3일 긴급 회동을 하고 당 공천위가 여론조사로 경선후보를 2배수로 압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경필 의원은 그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 온 만큼 이제 당내 경선보다 본선무대를 위한 전략구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남 의원은 최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적합도와 지지율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40% 이상을 얻어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당 후보와의 양자 또는 3자 가상대결에서도 최대 20% 이상의 격차로 우세를 보였다.

각종 여론조사 통계에서 나타난 남 의원의 지지율 우세 속에 여타 후보군의 선거전략 구상과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기영기자 lgy929@itimes.co.kr

의 결 번 호	2014지선169
언 론 사	(주)인천일보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26 대표이사 김 정 섭
심의대상기사	경기인천일보 2014년 4월 15일자 1면「새정치 도지사경선 박빙」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정치 도지사경선 박빙

(전략)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 남경필 예비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후보로 나타났다.(후략)

새정치 도지사경선 박빙

김상곤·김진표·원혜영 후보 지지율 '엎치락 뒤치락'

6·4지방선거 D-50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누구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안갯속 형국이다.

최근들어 김상곤·김진표·원혜영 세 후보의 지지율도 혼전을 거듭하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지를 등에 업고 순항할 것이란 게 정가의 일반적 전망이다.

특히 안 대표는 삼고초려 끝에 초빙한 김상곤 예비후보와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경선방식 변경 요구가 당 지도부에서 일부 수용되면서 안 대표의 지지를 확인했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는 안 대표가 차기를 향한 외연 확장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 한 김 예비후보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곤 안철수 공동대표 지원 예상…순항 전망

김진표 여·야 아우르는 대중적 지지 기반 우세

원혜영 남경필과 양자대결 경쟁력 높게 나타나

김진표 예비후보는 여당 지지자까지 포함한 여론조사를 주장할 만큼 대중적 지지기반이 우세하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6만8274표(61%)를 얻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지난 18대 총선보다도 무려 11.2%p 늘어난 수치이고, 야권 후보를 통틀어 서울 구로 을의 박영선 당선자(61.94%), 안천 계양 을의 신학용 당선자(61.50%)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만 놓고 보면 67.46%를 득표한 새누리당 정병국 당선자(여주·양평·가평)에 이어 2위다.

전통텃밭인 수원 영통구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김 예비후보 지지세력의 확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영통구는 수원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아주대와 경기대 등 대학가 밀집지역으로 평균연령 또한 30대 초반이다.

또 도심 한가운데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있고 소득과 학력, 집값 등도 도내 상위권에 속한다.

김 예비후보의 여당 지지자와 무당파에 대한 흡수력에 전통 지지세력의 결집이 더해지면 파급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예비후보는 그 동안 여론조사에서 김상곤·김진표 예비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원 예비후보는 새정치연합의 경선룰 번복 사태 당시중재안을 제안,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부각시키며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 남경필 예비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후보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의 양자대결 지지율은 50.9% 대 36.6%였다.

남 의원은 김진표 의원과는 49.7% 대 34.9%, 김상곤 전 교육감과는 54.1% 대 33.3%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원혜영 예비후보도 지지율 상승을 내심 반기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재도약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원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최선을 다해 이번 주 내 1위를 굳히고 반드시 남경필 후보에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들의 안개 속 질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후의 승자의 몫은 누구에게 돌아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현민기자 hmyoon@itimes.co.kr

의 결 번 호	2014지선170
언 론 사	(주)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대표이사 변 근 원
심의대상기사	충북일보 2014년 4월 15일자 12면 「괴산군수 '4파전' 압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북 괴산군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괴산군수 '4파전' 압축

(전략)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차기 괴산군수로 임각수 현 군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지만 송 후보가 새누리당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만큼 경선에 참가했던 이들의 협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세다.(후략)

충북일보
2014년 04월 15일
12면 (지역)

괴산군수 '4파전' 압축

선택!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서
314표 득표 송인헌 확정
임각수·김춘묵·노광열
예비후보 4명 대결 구도


송인헌 임각수 김춘묵 노광열

괴산군수 선거가 4파전으로 치르게 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괴산군민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괴산군수 후보 경선에서 송인헌 예비후보가 여론조사(50%)와 당원 선거인단 현장 투표(50%·393명)를 합산한 결과 314표(선거인단 170표, 여론 36.55%)를 얻어 260표(131표, 32.85%)와 212표(92표, 30.60%)에 그친 나용찬(60) 중원대 겸임교수와 신동본(61) 전 안전행정부 과장을 따돌리고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괴산군수 선거는 새누리당 송인헌 후보와 무소속 임각수(66) 군수, 김춘묵(54)전 서울시 도시경관관리팀장, 노광열(64) 전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대결로 좁혀졌다.

지난 2월20일 본보가 군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무소속의 임각수와 새누리당 송인헌, 민주당 노광렬 3자 대결 시 송인헌 19.3%, 노광렬 1.8%, 임각수 58.1%로 나타났다. 연령별 지지도에서도 △19~29세 임각수 65.4% 송인헌 19.5% △30대 임각수 49.2% 송인헌 20.2% △40대 임각수 55.1% 송인헌 21.4%를 보였고 △50대에서는 임각수 60.8%, 송인헌 20.4%, 노광렬 2.7%였다. △60대 이상 임각수 58.1%, 송인헌 17.6%, 노광렬 2.9%를 보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차기 괴산군수로 임각수 현 군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지만 송 후보가 새누리당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만큼 경선에 참가했던 이들의 협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세다.

한편 일각에서는 임 군수와 제대로 된 경쟁을 위해서는 단일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성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괴산 / 김성훈기자

(16.9*13.7)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84
언 론 사	(주)전남일보 광주 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대표이사 이 재 욱
심의대상기사	전남일보 2014년 4월 16일자 3면 「교육감 선거 광주 '혼전' 전남 '차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 교육감, 전남 교육감)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교육감 선거 광주 '혼전' 전남 '차분'

(전략)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 예비후보는 20%중·후반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양 예비후보가 20%초·중반대의 지지율로 추격하는 양상이다. 윤봉근·김왕복·김영수·정희곤·고영을 예비후보들은 선두권과 다소 격차가 벌어져 있지만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후략)

全南日報
2014년 04월 16일
03면 (종합)

교육감 선거 광주 '혼전' 전남 '차분'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선거의 초반 기상도는 엇갈리고 있다. 시 교육감 선거는 현직이 조기 등판하면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도 교육감 선거는 조용한 분위기다.

일단 초반 시교육감 선거 판세는 현 교육감인 장휘국 예비후보와 양형일 예비후보의 양강구도라는 것이 각 캠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 예비후보는 20% 중·후반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양 예비후보가 20% 초·중반대의 지지율로 추격하는 양상이다. 윤봉근·김왕복·김영수·정희곤·고영을 예비후보들은 선두권과 다소 격차가 벌어져 있지만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일단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타 후보들을 압도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지지율 역시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후보가 난립한 배경이기도 하다.

장 예비후보는 전교조 출신 후보들간의 단일화 논의가 무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10여일 이상 앞당겨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단일화 과정에서 지난 선거의 최대 우군이었던 시민사회단체가 극심한 내분을 겪은 부분은 부담이다. 현직 교육감 중 가장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점은 장 예비후보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이 교육계나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확실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선거구 단위로 투표용지를 달리해 후보자들의 이름을 번갈아 적어 넣는 '교호순번제' 도입으로 '로또선거'가 사라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 예비후보를 추격하는 양 예비후보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있지만 초반 현역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장 예비후보 반대 진영을 끌어오고 있다는 평이다.

국회의원과 조선대 총장 출신으로 지역내 인지도가 높은 것도 강점이다. 약점으로 분류되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은 '중앙에서 예산을 끌어 올 수 있는 적임자'라는 논리로 교육계 인사들을 공략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시교육감 선거와 달리 차분한 상황이다.

선거가 50일 남은 15일 현재 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이 유일한 상황이다. 장만채 도교육감은 일단 다음달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내부에서는 굳이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띄울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동철 전남도의회 교육의원이 17일 도교육감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향후 교육감 선거판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광주

장휘국·양형일 양강체제 후보 난립 셈법계산 분주

●전남

장만채, 내달1일 출마선언 김경택·김동철도 출마

장우석 기자 wsjang@jnilbo.com

(16.9*15.2)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90
언 론 사	유한회사 정읍뉴스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5 (수성동,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곽 시 형
심의대상기사	정읍뉴스 2014년 3월 6일자 1면 「"유심의 향배 어디에 있느냐"로 지역정가 뜨겁다」 2면 「유성엽의원 논평 통합과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환영한다」 「유성엽 의원 "30일 현장속으로!" 전북을 탈원전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 「유성엽 의원, "동해표기 및 위안부 문제에 관심 가질 것"」 3면 「유성엽 의원 "30일, 현장속으로!" 동학정신으로 6.4 지방선거를 치르자」 2014년 3월 13일자 2면 「유성엽 의원 논평 전북연구개발특구 반드시 지정돼야!」 7면 「유성엽 의원 '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 제정안 발의」 「유성엽 국회의원, 전북 발전 구상 밝혀」 2014년 3월 20일자 3면 「유성엽 의원논평 '동해 위안부 교육 법안'통과를 환영한다」 2014년 3월 27일자 2면 「유성엽 의원 논평 나호남지역본부, 통폐합돼도 전북에」 「유성엽 후보 "버스공영제 정책연대" 선언」 2014년 4월 3일자 2면 「유성엽 의원 논평 착신전환 전화, 여론조사서 원천 배제를 환영한다」 5면 「동학혁명 유적지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추진 약속」 7면 「유성엽 '전기세 0, 에너지 도민주권' 정책 제시」 2014년 4월 10일자 2면 「유성엽 의원, 대통령 새누리당에서 탈당 요구」 7면 「대한민국 산지 가치, 열배 된다!」 「노인복지, 일자리로 풀겠다」 2014년 4월 17일자 2면 「유성엽 의원 논평 기초선거 공천 결정을 존중한다」 7면 「"TV토론 3회 이상 개최를 공식 제안합니다"」 8면 「도지사경선, 공론조사 100%로 바꿔야한다」 2014년 4월 24일자 1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될 수 있기를 빕니다」 2면 「유성엽 의원 논평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를 환영한다」 7면 「현금 없이 편하게 타는 전북 택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도지사)와 관련하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여러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6일부터 2014년 4월 24일까지 유성엽 후보자에 대한 선거근황, 공약, 정견 등의 기사를 22 건 보도한 반면 상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거나 한 건만 보도하였다. 또한, 심의대상 기사 중 5건의 '유성엽 의원 논평'은 유성엽 예비후보가 작성한 원고를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3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심의 향배 어디에 있느냐"로 지역정가 뜨겁다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유성엽 국회의원이 새정치연합 후보로 당선될 경우, 정읍 지역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또 다른 변수까지 있어 예비후보들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후문과 지난 19대 총선에서 유성엽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유 의원 당선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정도진 전 정읍시의회 의장을 선택할지, 김생기 현 시장의 손을 들어줄지에 지역 정가가 뜨거운 가운데 유성엽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도지사 선거에 전념할 것이라는 여론 또한 팽배하고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유성엽 의원이 힘들게 민주당에 복당을 했기에 "과연 '유심'의 향배가 어디에 있느냐"로 지역 정가가 뜨겁다.(후략)



"유심의 향배 어디에 있느냐"로 지역정가 뜨겁다

정읍시민들의 주권행사가 정읍의 미래를 바꾼다

유성엽의원 논평 통합과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환영한다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 양측이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하였다.(후략)



[유성엽 의원 논평]

통합과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환영한다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 양측이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기초공천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민주당의 당론이었다. 본인 또한 오래 전부터 국민의 뜻에 따라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야권이 분열되어서는 선거에 승리할 수 없고,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낼 수 없다. '신당 창당으로 통합'결정을 환영한다. 통합으로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더 나아가 2017년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민주세력 모두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통합에 힘을 보태기를 희망한다.

유성엽 의원 "30일 현장속으로!" 전북을 탈원전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

유성엽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결정을 '매우 잘 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민주세력이 이번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부문에서 전승도 바라볼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후략)



유성엽 의원 "30일, 현장 속으로!" 전북을 탈원전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

유성엽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결정을 '매우 잘 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

민주세력이 이번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부문에서 전승도 바라볼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또 항간의 전북 전략공천설에 대해 "광역단체장 나눠 먹이 공 당선인데 도지사를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은 구태다"라고 말하고, 새정치연합 측에서 '전북을 분으로 요구하는 것은 새정치에 부합하지 도 않고 도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신당이 전국적으로 안심을 얻게 되고 안철수 의원의 정치생명이 끝나게 될 수도 있다"고 맞받았다.

공천방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유의원은 "조직동원의 폐해를 원천적 조사는 기술적으로 오차가 존재하고 확신 등에 따른 여론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 여론조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전북은 부안 방폐장 사태라는 아픔을 겪었고, 현재 원전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전북은 원전에 대해 특별한 생각과 고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 시점에서 국가 전체의 '원전한 반핵'주장은 너지 · 탈원전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탈원전 국가로 가는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식남 기자)

유성엽 의원, "동해표기 및 위안부 문제에 관심 가질 것"

유성엽 의원은 3일,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 이철우 회장 및 여익환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은 한인사회 최초로 2006년 뉴욕주지사 경선 캠페인의 핵심부에 이철우 회장이 아시아 리더로 발탁되어 아시안위원회라는 캠페인 조직을 만들면서 태동이 되었고, 미 정치권에 한인의 이익대변, 한미간의 비공식 외교채널 구축 등의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후략)



유성엽 의원, "동해표기 및 위안부 문제에 관심 가질 것"

– 한미공공정책위원회 이철우 회장과 면담 –

유성엽 의원은 3일, 한미공공정책위원회&APAC 이철우 회장 및 여이환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미공공정책위원회&APAC은 한인사회 최초로 2006년 뉴욕주지사 경선 캠페인의 핵심부에 이철우 회장이 아시안 리더로 발탁되어 아시안위원회라는 캠페인 조직을 만들면서 태동이 되었고, 미 정치권에 한인의 이익 대변, 한미간의 비공식 외교채널 구축 등의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미공공정책위원회는 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이행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하였고, 뉴욕주 현충원에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와 뉴욕주 상 ·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기림비"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이철우 회장은 동해 병기와 관련하여 유성엽 의원이 지난 달 27일 미국 뉴욕주 의회 아쎔블 상원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 전원에게 "아쎔블 의원이 발의한 '동해와 종군위안부 교육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동해 및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전 세계인이 미래의 공유물이될 역사적 사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착은 없는 온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한미공공정책위원회가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외교 활동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현재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동아시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임식남 기자)

유성엽 의원 "30일, 현장속으로!" 동학정신으로 6.4 지방선거를 치르자

현장에서 '전북의 길'을 찾겠다며 민생행보를 하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5일 정읍 이평면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고부봉기 기념제'에 참석했다.(후략)



유성엽 의원 "30일, 현장 속으로!" 동학정신으로 6.4 지방선거를 치르자

현장에서 '전북의 길'을 찾겠다며 민생행보를 하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5일 정읍 이평면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고부봉기 기념제'에 참석했다.

금년은 구한말 쓰정과 외세에 항거하여 제폭구민(除暴救民),보국안민(輔國安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를 내걸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주년 되는 해다. 1894년 1월에 일어난 고부봉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교도와 농민이 들고일어나 관아를 점령한 역사적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유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구한말 의병활동, 일제 때 독립운동,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4.19와 5.18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왔다. 동학혁명이 전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의로운 피'가 흐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그 후손인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회정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대통령은 오만과 불손으로 민의를 외면하고, 허울 좋은 경제민주화 구호 아래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망언과 망동을 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고, "동학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전북인들이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식남 기자)

유성엽 의원 논평 전북연구개발특구 반드시 지정돼야!

전북은 지난 2010년 전주 · 완주 · 정읍 일대에 걸쳐 농생명 · 식품 · 탄소 등을 특화해 정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후략)



[유성엽 의원 논평]

전북연구개발특구 반드시 지정돼야!

전북은 지난 2010년 전주 · 완주 · 정읍 일대에 걸쳐 농생명 · 식품 · 탄소 등을 특화해 정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상반기 중 자체검토와 지역주민공청회 부처협의 등을 마친 뒤 연구개발특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본인은 지난 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수도권과 대전에 70%가 넘게 편중된 데 반해 전북은 1.7%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R&D예산의 균형배분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경기연구개발특구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경남연구개발특구 등이 지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 지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들이다. 지역간 균형이 맞지 않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며, 이는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농생명 · 식품 · 탄소산업은 타 지역과 중복되지 않으며, 전북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특화해서 육성하고 있는 분야다. 때문에 미래부가 전북이 신청한 연구개발특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북연구개발특구지정을 위해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긴밀하게 협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유성엽 의원 '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 제정안 발의

국회 유성엽 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후략)



유성엽 의원 '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 제정안 발의

전통시장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해법 제시

국회 유성엽 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의 전통시장은 1511개이며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들이 산재해 있음"과 그에 따른 "안전문제, 재산권문제 등을 입으키고 있음"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상인은 정상적인 영업혜가를 받을 수 없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불만과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합법적 증·개축이 불가능한 위법건축물 특성상 구조안정성이 취약함"과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게 된다.

유 의원은 법안의 효과에 대해 "전통시장 내의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유성엽 의원 외 김승남·김재윤·박남춘·배기운·서영교·안규백·염동열·유기홍·이만우·이상직·이에리사·이자스민·장하나·전정희·정성호·정청래·최민희·최원식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했다.

(곽시형 기자)

유성엽 국회의원, 전북 발전 구상 밝혀

유성엽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후략)



유성엽 국회의원, 전북 발전 구상 밝혀

공정한 경선방식 정해 중앙당에 공동명의로 요청할 것 제안

유성엽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야권통합이라는 정치지형 변화에 6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를 전북발전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먼저 "민주당 소속으로서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각 도지사 후보 진영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경선방식을 정해 이를 중앙당에 공동명의로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불법 유혹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강조하며 모든 후보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전북이 잘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며 전북도는 이에 대비해 "장기적 안목으로 제3세대 대표선수를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역경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잘사는 전북'을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으며 장차 전북도민의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곽시형 기자)

유성엽 의원논평 '동해 위안부 교육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일, 미 뉴욕주의회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상정한 '동해병기와 위안부 교육 법안'이 통과됐다.(후략)



[유성엽 의원 논평]

'동해 위안부 교육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동해와 위안부 교육법안' 미 뉴욕 주의회 상원 법사위 통과

지난 11일, 미 뉴욕 주의회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상정한 '동해병기와 위안부 교육 법안'이 통과됐다.

뉴욕 주의회 법사위의 '동해병기와 위안부 교육 법안' 통과를 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아울러 뉴욕 주의회 의원들의 역사의식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려는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시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정부 인사들의 망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요즈음 뉴욕 주의회 법사위의 법안통과 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상원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인은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주 의회 아벨라 상원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 19명 전원에게 동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고, 이달 1일에는 전주에서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유성엽 의원 논평 LH호남지역본부, 통폐합돼도 전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본부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LH 전북본부가 또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전남에 흡수당하거나 위상이 격하될까 매우 우려스럽다.(후략)



[유성엽 의원 논평]

LH호남지역본부, 통폐합돼도 전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본부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LH전북본부가 또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전남에 흡수당하거나 위상이 격하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과거 전북의 공공기관은 통폐합이 있을 때마다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통폐합되는 희생을 당해왔다. 전북도민은 광주·전남이 호남의 대표로 간주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몹시 자존심이 상한다.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과 경제성만을 내세워 통폐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낙후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LH는 3년 전 전북도민의 유치 열망을 저버린 채 경남 진주로 가고, 도민 가슴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하필이면 그 LH공사 전북본부가 사라진다면 도민의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다. 도민 자존심을 지키고 더 이상의 지역경제 낙후를 막기 위해 정치권과 전 도민이 나서서 사수해야 한다. 통폐합이 되더라도 호남본부는 전북으로 해야 한다.

유성엽 후보 “버스공영제 정책연대” 선언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유성엽(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6일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후략)



유성엽 후보 "버스공영제 정책연대" 선언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유성엽(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6일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유 후보측은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유 후보와 문병호, 원혜영, 이낙연 의원, 김영춘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버스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의 대중교통만족도가 전국 최하위로 수익성 없는 버스사업이 재정지원이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고 있다" 며,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3단계 무료버스 정책' 의 구체적 내용은 "전라북도 교통공사 설립, 버스 공영제 , 재정상황에 따른 단계적 무료버스 시행으로 이어지는 3단계" 라고 부연했다.

유 후보측은 "대중교통 만족도가 떨어지는 전북에서 버스문제에 대해 도지사 후보들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면서 "버스공영제와 무료버스에 뜻을 같이하는 광역단체장과 시·군 지자체 후보자들이 '버스공영제 정책연대' 결성에 맞춰 한자리에 모여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곽시형 기자)

유성엽 의원 논평 착신전환 전화, 여론조사서 원천 배제를 환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여론조작 논란을 빚어온 착신전환 전화를 6.4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원천 배제키로 잠정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후략)



[유성엽 의원 논평]

착신전환 전화, 여론조사서 원천배제를 환영한다

모든 선거 여론조사에 확대 적용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여론조작 논란을 빚어온 착신전환 전화를 6.4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여론조사 · 공론조사 · 선거인단 모집 등 전화를 매개로 하는 모든 경선방식에 적용할 것이라 한다. 중앙당이 그 동안 착신전환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조작과 왜곡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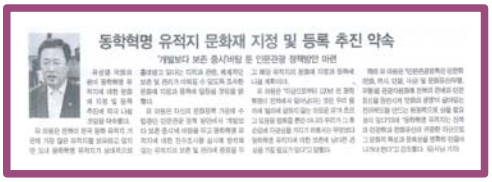
여론조사는 민심을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후보들이 선거운동의 지표로 삼는 중요한 수단이다. 나아가 여론조사는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원칙로 그 지위가 높아졌다. 그런데 세칭 신거기술자들이 '휴면선화를 사들이거' '신규전화 증설'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본인은 일찍부터 지역에 착신전환 전화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여론왜곡의 심각성과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착신전환 전화의 배제는 경선에서 뿐만 아니라 경선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왜곡 조작된 허위 여론의 거품을 벗겨 내고 진짜 민심을 드러내야 한다. 정부도 현재 결제적으로 나투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전체의 얽은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

여론조작이라는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 6.4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고, 이를 전북발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동학혁명 유적지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추진 약속

유성엽 국회의원이 동학혁명 유적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추진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후략)



동학혁명 유적지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추진 약속

'개발보다 보존 중시'타당 돈 인문관광 정책입안 마련

유성엽 '전기세 0, 에너지 도민주권' 정책 제시

유성엽 국회의원이 '전기세 0, 에너지 도민주권' 이라는 획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선보였다.(후략)



유성엽 '전기세 0, 에너지 도민주권' 정책 제시

도민 모두가 전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유성엽 의원, 대통령 새누리당에서 탈당 요구

국회 유성엽 의원이 3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대선 약속인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해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꿨다”며 “원칙과 신뢰의 상징인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탈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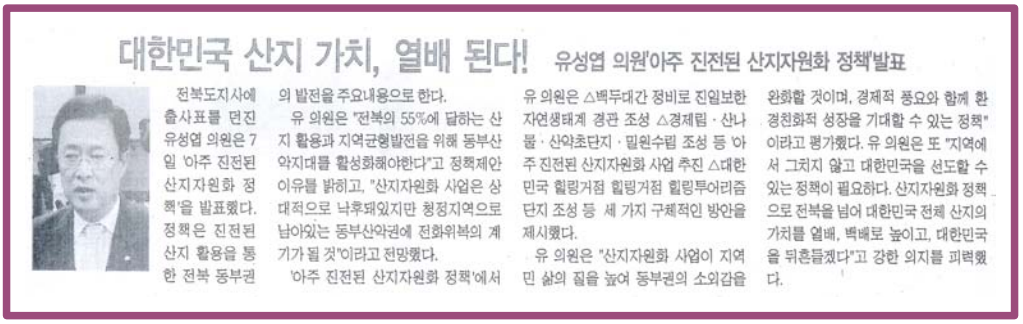


유성엽 의원, 대통령 새누리당에서 탈당 요구

재량적 대통령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 분권형 개헌도 주장

대한민국 산지 가치, 열배 된다!

전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유성엽 의원은 7일 '아주 진전된 산지자원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진전된 산지 활용을 통한 전북 동부권의 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한다.(후략)



대한민국 산지 가치, 열배 된다! 유성엽 의원'아주 진전된 산지자원화 정책'발표

전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유성엽 의원은 7일 '아주 진전된 산지자원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진전된 산지 활용을 통한 전북 동부권의 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유 의원은 "전북의 55%에 달하는 산지 활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산악지대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정책제안 이유를 밝히고, "산지자원화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돼있지만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동부산악권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 진전된 산지자원화 정책'에서 유 의원은 △백두대간 정비로 진일보한 자연생태계 경관 조성 △경제림·산나물·산약초단지·밀원수림 조성 등 '아주 진전된 산지자원화 사업 추진 △대한민국 힐링거점 힐링거점 힐링투어리즘 단지 조성 등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산지자원화 사업이 지역민 삶의 질을 높여 동부권의 소외감을 완화할 것이며, 경제적 풍요와 함께 환경친화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또 "지역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산지자원화 정책으로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산지의 가치를 열배, 백배로 높이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인복지, 일자리로 풀겠다

전북 도지사를 향해 뛰고 있는 유성엽 국회의원은 9일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정읍지회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했다.

유의원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복지혜택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고, 우리는 어르신들의 여생을 행복하게 해드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후략)



노인복지, 일자리로 풀겠다

단순히 현금만 지급하는 복지는 좋은 복지 아니다

전북 도지사를 향해 뛰고 있는 유성엽 국회의원은 9일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정읍지회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했다.

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복지혜택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고, 우리는 어르신들의 여생을 행복하게 해드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박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의원은 "그러나 단순히 현금만 지급하는 복지는 좋은 복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돕는'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즐겁게 일하고 그 댓가를 받도록 하는 노인일자리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전북은 노인인구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고령화 속도 또한 매우 빠른 지역"이라며 노인복지에 배전의 관심을 갖고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성엽 의원 논평
기초선거 공천 결정을 존중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기초공천의 폐지를 주장해 왔던 입장에서 무공천 철회는 안타깝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후략)



유성엽의원 논평

기초선거 공천 결정을 존중한다

광역단체장도 기초와 함께 지역순회 경선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기초공천의 폐지를 주장해 왔던 입장에서 무공천 철회는 안타깝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결정했다가 철회한 것은 전적으로 무공천 공약을 파기하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과 근시안적 안목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외면한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기왕 기초공천을 하기로 결정했으니,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천이 돼야 한다. 그동안 지적된 기초공천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공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내야 한다. 중앙당은 비리전력자 연루혐의자 등 부적격 후보들을 걸러내야 한다. 지도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기초단체 별 경선을 도입할 경우 광역단체장의 경선을 지역순회로 동시에 치르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을 순회하면서 광역과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후보 4명을 동시에 뽑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선거에 승리하고, 무공천 공약을 파기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

“TV토론 3회 이상 개최를 공식 제안합니다”

도지사선거는 ‘지방선거의 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경선이 임박했지만 예년 선거에 비해 도민협회 관심도는 매우 저조해 정책 대결 실종과 인물검증 없는 이른바 ‘묻지마 선거’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후략)



“TV토론 3회 이상 개최를 공식 제안합니다”

정책대결과 인물 검증위한 필수과정

도지사 선거는 '지방선거의 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경선이 임박했지만 예년 선거에 비해 도민들의 관심도는 매우 저조해 정책 대결 실종과 인물검증 없는 이른바 '묻지마 선거'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추진위원회의 통합으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 정서상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새정치연합의 도지사 경선은 내용적으로 사실상의 본선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정책대결과 인물검증 기회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돼야 합니다. 저는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TV토론을 통해 표심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들과 방송사에 'TV토론 3회 이상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실제로 정봉준, 김황식, 이혜훈씨가 격돌하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은 무려 7차례나 TV토론을(TV토론 4회, 정책토론회 3회 모두 TV 중계), 홍준표, 박완수씨가 맞붙은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은 2차례의 TV토론을 실시했습니다.

TV토론은 경선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전북발전 비전과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모든 후보들이 저의 공식 제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17일 오전까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경선 입후보자 유 성 엽

도지사경선, 공론조사 100%로 바꿔야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론조사 50%와 공론조사 50%의 전북도지사경선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국민여론조사에서 착신전화 배제 등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면 국민여론조사 경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면 공론조사 100%로 바꿔야 한다.(후략)



도지사경선, 공론조사 100%로 바꿔야 한다

새전북신문 여론조사 신뢰성 공정성 문제 있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론조사50%와 공론조사50%의 전북도지사경선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국민여론조사에서 착신전화 배제 등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면 국민여론조사 경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면 공론조사 100%로 바꿔야 한다.

새전북신문은 14일 전북도지사후보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도내 전역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가구 유선전화를 무작위 추출한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이라 한다.

새전북신문의 여론조사의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새전북신문은 착신전환 전화의 문제점을 가장 강력히 제기하는 등 공정한 여론조사와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온 언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첫째, 최근 여론조작과 왜곡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착신전환 전화를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착신전환에 의한 특정인의 여론조작을 묵인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연령대별 표본 구성의 최소기준조차 충족시키지 않아 조사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다. 연령대별 표본의 구성은 전라북도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와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조사의 오차범위가 적어진다. 새전북신문의 여론조사는 특정 연령층에서 지나칠 정도로 과소 또는 과대 표본을 모집하고 보정을 줌으로써 결과의 신뢰도에 결함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여론조사는 민의를 가름하는 잣대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는 각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그 지위가 격상됐다. 때문에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여론을 왜곡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다.

언론은 사회의 소금이다. 사회의 구석구석의 부조리를 파헤쳐 썩지 않도록 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런 언론이 여론조작과 왜곡이라는 범죄에 눈감으면 안 된다. 확인 있는 언론이라면 이런 문제점을 제척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론조사50%와 공론조사50%의 전북도지사경선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국민여론조사에서 착신전화 배제 등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면 국민여론조사 경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면 공론조사 100%로 바꿔야 한다.

(곽시형 기자)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될 수 있기를 빕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후략)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될 수 있기를 빕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하루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지사 출마자로서 모든 경선준비 활동을 중단합니다.

다시는 사람 실수로 인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구조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길 빕고 또 빕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유성엽 의원 논평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를 환영한다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를 환영한다.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후략)



유성엽의원 논평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를 환영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통과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를 환영한다.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 전체회의와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전북 도민의 자긍심 향상이다. 그 동안 전북의 관공서나 금융기관의 지사·본부 등이 광주·전남으로 통폐합이 잦아지면서 전북도민은 심한 박탈감을 느껴왔다.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는 인위적 결정이 아닌 실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둘째,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는 '전북의 아시아권 금융허브화'의 시작이다. 이를 시작으로 연간 4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예정대로 전북으로 이전하면, 전북은 명실 공히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금융산업은 농생명산업·문화산업과 함께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끝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전북 정치권도 일치단결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현금 없이 편하게 타는 전북 택시

유성엽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현금 없이도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전북 택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후략)



현금 없이 편하게 타는 전북 택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신용카드 통신비 지원

유성엽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현금 없이도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전북 택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택시산업은 공급 포화와 승객감소로 사양화하고 있고 택시 종사자들의 수입은 줄어들고 근로조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런 환경 아래서 택시 기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피하려 승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전북 택시의 카드결제 시스템은 99% 갖춰져 있지만 카드 결제금액은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전북도에서 총괄하여 14개 시·군 카드수수료를 통일하고 카드사와 수수료인하 협상을 주도하겠다며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와 결제시스템 통신비를 지원하여 저임금과 과로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수입증가와 승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께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얼굴이라며 택시기사가 즐겁고, 도민과 관광객이 만족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관광 전라북도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91
언 론 사	(주)반월신문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1, 대우빌딩 305호 대표이사 홍 일 호
심의대상기사	반월신문 2014년 4월 17일자 4면「돌봄과 살림 정치를 위한 정책 제언」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안산시의원)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의 기고를 게재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3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돌봄과 살림 정치를 위한 정책 제언

2014년 6·4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역 변화를 만드는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정책공약이 제시될 것인가?

지난 지방선거 공약의 최대 이슈로 학교 무상급식 복지공약이 부각되었다.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이번 선거에도 많은 복지정책 공약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후략)



2014년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역 변화를 만드는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정책공약이 제시될 것인가?

„지난 지방선거 공약의 최대 이슈로 학교 무상급식 복지공약이 부각되었다.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이번 선거에도 많은 복지정책 공약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복지공약의 관심은 세계화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을 위한 경쟁사회, 불안정한 사회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자구책이다. 앞으로 더욱 한국사회 복지제도가 발달할 것으로 진단하는데, 평등과 연대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돌봄의 사회화'가 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마경희 박사의 '돌봄의 사회화' 3가지 원칙을 통해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마경희 박사는 돌봄 사회 구축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돌봄을 인간의 보편적 경험으로 전제하고 통합적 시민권 개념에 기초하여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돌 봄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다. 돌봄 필요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에 의해 공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하고, 가족 내에서 혹은 가족 밖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가족 안과 밖의 돌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이다. 돌봄자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것, 사회보험 등 사회정책 수급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셋째, 유급노동자의 돌봄 시간이다. 유급노동자의 돌봄 책임의 보편성을 전제함으로써 돌봄 필요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탄력근무, 유연노동시간, 산전산후육아, 육아휴직, 가족간호 휴가, 안식년 등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다양한 돌봄 관련 휴가들이 유급노동자의 돌봄 책임과 권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일 중심사회에서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 사람을 살리고 지역공동체를 유지적으로 만들 것이다. 돌봄 정책은 현재 안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좋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가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저소득층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활동, 사회적 기업의 돌봄 공동체 모임, 노인복지관 농부학교, 협동조합의 돌봄 사업 등이 안산 지역에서 좋은 돌봄 정책 사례로 만들어 지고 있다.

경쟁위주의 사회에서 돌봄과 살림의 사회는 돌봄 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돌봄 인지적 기획과 집행이 필요하다. 단순 소박한 생활양식으로서 전환을 통해 일 중심사회에서 돌봄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문화 조성도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모든 노동자가 일, 가정, 공동체, 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필요하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적당한 사회적 노동으로 경제적 독립과 자존을 유지할 수 있는 성 평등한 정책과 성인지적 예산에 대한 확립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 어떠한 정책을 구현할까? 유능한 정치지도자 되려면 지역 공동체를·잘 돌보고 지역시민을 잘 살리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구축은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는 복지체제 바탕이 될 것이다. 안산시가 상생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돌봄의 사회화'가 되기 위한 다양한 복지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의정칼럼

나 정 숙 / 안산시의회 의원

돌봄과 살림 정치를 위한 정책 제언

사회(社內)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92
언 론 사	주식회사 고성신문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산로 21 대표이사 강 덕 희
심의대상기사	고성신문 2014년 4월 25일자 15면「박종훈 경남교육감 예비후보의 경남도민들에게 드리는 글」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남 교육감)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의 기고를 게재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3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종훈 경남교육감 예비후보의 경남도민들에게 드리는 글

수학여행 길에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학생들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후략)



박종훈 경남교육감 예비후보의 경남도민들에게 드리는 글

수학여행 길에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학생들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의 결 번 호	2014지선193
언 론 사	주식회사 한남일보 경남 거제시 고현로 9길 25 대표이사 정 일 응
심의대상기사	한남일보 2014년 4월 21일자 2면「밀양나노산단의 성공적 조성 위해 '밀양시장 예비후보 연석회의' 공식 제안 합니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밀양시장)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의 기고를 게재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3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밀양나노산단의 성공적 조성 위해 '밀양시장 예비후보 연석회의' 공식 제안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6.4지방선거 새누리당 밀양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 이창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밀양시가 직면하고 있는 밀양나노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논의하는 마당으로 '밀양시장 예비후보 연석회의'를 이번 밀양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에 앞서 저는 오늘 처음 공무원과 밀양시민들에게 밀양시장예비후보로서 저의 신상과 입장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후략)


이창연 밀양시장 예비후보 제언문

밀양나노산단의 성공적 조성 위해
'밀양시장 예비후보 연석회의' 공식 제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6.4지방선거 새누리당 밀양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 이창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밀양시가 직면하고 있는 밀양나노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논의하는 마당으로 '밀양시장 예비후보 연석회의'를 이번 밀양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에 앞서 저는 오늘 처음 공무원과 밀양시민들에게 밀양시장예비후보로서 저의 신상과 입장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동안 함께 한 인간적인 정치적 동지입니다. 대통령과 어려운 역경을 함께 넘었고 대통령이 되는 기쁨도 함께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보로서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오랜시간 동안 변함없이 신의로 한길로만 걸어 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지로,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젊고고 강한 정치인이 되었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잘 알게 되었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많은 인맥과 동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신의와 인맥이 저 이창연의 힘이고 자랑입니다. 이것은 곧 밀양의 힘이고, 밀양의 자랑이 될 것이라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이창연이 지금 불타는 정열로 밀양을 위하여 우리 고향 밀양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된다면 공무원과 시 행정에 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밀양시 공무원 여러분 저는 공무원의 정부성을 많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시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반 행정은 부시장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십시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는 중앙정부와 관계된 정책협정과 여러분 지역정책사업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공무원과 시 행정에 대한 저의 입장이고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기자 회견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노단지의 바른 심상을 알리고 그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밀양나노산업단지에 대해 지난 3월 12일 정부가 지정 발표 하였습니다. 그것은 밀양시장과 공무원의 기념 동안의 땀으로 만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창연은 밀양주민의 한 사람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노고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밀양시는 지금 이 나노산단을 마치 국가산단으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많은 분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밀양시민들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산단으로 알고 그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밀양시가지 곳곳에 걸려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나노단지의 실상을 알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밀양시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나노산단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밀양시는 밀양나노단지에 대하여 밀양시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밀양시민의 좌절을 깨고 밀양시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결국은 우리의 숙원사업인 나노단지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나노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오는 9월경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국가산단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고 그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나노산단이 국가산단이 아닌 일반산단으로 지정된다면 나노산단 조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재원을 밀양시에서 떠맡아야하기 때문에 밀양의 나노의 꿈은 좌절되거나, 조성된다 해도 그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노산단을 반드시 국가산단으로 만들어야하고, 그러고 정부는 반드시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민은 우리 산단은 반드시 국가산단으로 만들어야하고, 그러고 정부가 반드시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산단의 지정은 중앙정부가 하고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보로 오직 한길로만 걸어온 젊고 정치인 저 이창연, 정부와 국회에 많은 인맥과 동지가 있는 제가 가장 좋은 적임자라고 자신합니다.
힘없는 야당후보가 또는 자은 행정경험을 가진 여당후보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밀양시장에 출마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산단 지정 분제는 밀양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제입니다. 이는 저 이창연 혼자만의 분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제이고, 밀양의 전체의 분제입니다. 밀양의 모든 시민들은 똘똘하여 각자의 크고 작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정적인들은 반목 모두 잊잘시고 그 다음에 밀양시민들이 나서도록 요청합시다. 저는 이번 선거에 누가 당선되든 앞장설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밀양나노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이번 밀양시장후보로 출마한 각 예비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94
언 론 사	주식회사 세종매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28, 대산빌딩 202호 대표이사 이 평 선
심의대상기사	세종매일 2014년 4월 25일자 3면 「정말 초라한 '기초연금 20만원'을 넘어서는 안정적 노후를 보장해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여주시의원)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의 기고를 게재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제3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말 초라한 '기초연금 20만원'을 넘어서는 안정적 노후를 보장해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세계경제교역규모 12위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OECD 가입국가를 중 노인빈곤률 1위요, 노인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짊어지고 있는 현실에 슬픔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후략)


스마일론

정말 초라한 '기초연금 20만원'을 넘어서는 안정적 노후를 보장해야

의 결 번 호	2014지선197
언 론 사	경북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93 대표이사 한 국 선
심의대상기사	경북일보 2014년 5월 2일자 18면 「"권영진 후보는 제 아들입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구광역시장)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자 어머니와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해당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내부필진의 기고를 게재하여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 기사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권영진 후보는 제 아들입니다"

희생과 헌신 마다하지 않고 무명의 아들
성공으로 이끈 어버이 고마움 잊지 말아야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최종 주자를 가리기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어느 주말 토요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동구 갓바위 등산로 입구.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모가 여성도우미 한명과 등산객을 상대로 한표를 호소하고 있었다.

"권영진 후보 어머니입니다." 필자는 명함 1장을 받아들고 지나갔다. 나이든 노모가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곧 풀어졌다. 권영진 후보의 어머니였던 것. 나중에 알았지만 78세 최채란 여사였다. 그 어머니는 필자 뒤에 오던 60대 중반의 남자 등산객에도 어김없이 명함을 건네면서 필자에게 했던 말처럼 똑같이 했다.

그런데 60대 등산객이 권 후보 어머니에게 아들이냐고 말을 다시 걸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제 아들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자, 그 등산객은 "어머님이 고생이 더 많으시다"며 위로를 한 후 갓바위로 향했다.

필자는 잠시나마 가던 길을 멈추고 권 후보 어머니와 60대 등산객이 나누던 대화를 들었다. 모르긴 해도 60대 등산객은 권 후보를 지지했음에 틀림없다.

치열했던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여러가지 승리 요인이 있었을게다. 청구고 동문들의 성원과 안동 권씨 문중에서의 헌신적이고도 전폭적인 지원도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됐을게다.

특히 후보들간 방송토론에서 그는 차분한 논리로, 때로는 격하게, 한편으론 냉정한 목소리로 호소를 한 것이 시민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움직이게 한 요인이 됐다.

권 후보가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섰을 때만 해도 지역의 여론은 "글쎄요?"였다. 후보들 가운데 지역 사정의 파악과 조직 관리로 따지면 가장 약세였는지도 모른다. 당시의 인지도를 따지면 솔직히 무명에 가까웠다. 국회의원과 동구청장을 역임한 후보자에 비해 권 후보는 고등학교 3년을 대구에서 보냈을 뿐 대학을 거쳐 지난해 대구에 오기 전까지 줄곧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대구교대 안동부속초)와 중학교(경안중)는 안동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친화력과 설득력을 통해 자기사람화 하는 힘이 놀라웠다. 시장에 출마해 보겠다며 주소지를 대구로 옮기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그러니까 4~5개월 만에 새누리당 대구시장 최종 후보로 시민들의 인정을 받아낸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수훈갑들이 많을 게다. 그중에서 권 후보 노모의 자식을 향한 간절함도 보태졌음에 틀림없다.

내일 모레면 '어버이 날'이다. 권 후보가 도시계획 전면 개편과 일자리 창출 등 대구 미래를 위한 공약들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경선에서 권 후보가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순간, 필자는 무엇보다도 묵묵히 아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먼저 뇌리를 쓰쳐갔다. "권영진 후보는 제 아들입니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각인됐다. 자식의 성공 저편에는 자신을 희생해온 어버이가 항상 자리하고 있듯이. 최 여사는 중풍으로 고생하던 시아버지(권 후보 할아버지)를 15년 동안 대소변을 가릴 정도로 효부이자 안동며느리였다고 지인은 귀띔해 줬다. 그 안동며느리, 노모는 자식의 꿈을 위해 마지막 혼신을 불태우고 있을게다.

이제 권 후보는 6·4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들과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경북일보

2014년 05월 02일
18면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권영진 후보는 제 아들입니다"

박무환
대구취재본부장

희생과 헌신 마다하지 않고
무명의 아들 성공으로 이끈
어버이 고마움 잊지 말아야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최종 주자를 가리기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어느 주말 토요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동구 갓바위 등산로 입구.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모가 여성도우미 한명과 등산객을 상대로 한표를 호소하고 있었다.

"권영진 후보 어머니입니다." 필자는 명함 1장을 받아들고 지나갔다. 나이든 노모가 누구일까하는 궁금증이 곧 풀어졌다. 권영진 후보의 어머니였던 것. 나중에 알았지만 78세 최재란 여사였다. 그 어머니는 필자 뒤에 오던 60대 중반의 남자 등산객에도 어김없이 명함을 건네면서 필자에게 했던 말처럼 똑같이 했다.

그런데 60대 등산객이 권 후보 어머니에게 아들이냐고 말을 다시 걸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제 아들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자, 그 등산객은 "어머님이 고생이 더 많으시다"며 위로를 한 후 갓바위로 향했다.

필자는 잠시나마 가던 길을 멈추고 권 후보 어머니와 60대 등산객이 나누던 대화를 들었다. 모르긴 해도 60대 등산객은 권 후보를 지지했음에 틀림없다.

치열했던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여러가지 승리 요인이 있었을게다. 청구고 동문들의 성원과 안동 권씨 문중에서의 헌신적이고도 전폭적인 지원도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됐을게다.

특히 후보들간 방송토론에서 그는 차분한 논리로, 때로는 격하게, 한편으론 냉정한 목소리로 호소를 한 것이 시민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움직이게 한 요인이 됐다.

권 후보가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섰을 때만 해도 지역의 여론은 "글쎄요?" 였다. 후보들 가운데 지역 사정의 파악과 조직관리로 따지면 가장 약세였는지도 모른다. 당시의 인지도를 따지면 솔직히 무명에 가까웠다. 국회의원과 동구청장을 역임한 후보자에 비해 권 후보는 고등학교 3년을 대구에서 보냈을 뿐 대학을 거쳐 지난해 대구에 오기전까지 줄곧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대구교대 안동부속초)와 중학교(경안중)는 안동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친화력과 설득력을 통해 자기사람화 하는 힘이 놀라웠다. 시장에 출마해 보겠다며 주소지를 대구로 옮기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그러니까 4~5개월만에 새누리당 대구시장 최종 후보로 시민들의 인정을 받아낸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수훈갑들이 많을 게다. 그중에서 권 후보 노모의 자식을 향한 간절함도 보태졌음에 틀림없다.

내일 모레면 '어버이 날'이다. 권 후보가 도시계획 전면 개편과 일자리 창출 등 대구 미래를 위한 공약들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경선에서 권 후보가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순간, 필자는 무엇보다도 묵묵히 아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먼저 뇌리를 쓰쳐갔다. "권영진 후보는 제 아들입니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각인됐다. 자식의 성공 저편에는 자신을 희생해온 어버이가 항상 자리하고 있듯이. 최 여사는 중풍으로 고생하던 시아버지(권 후보 할아버지)를 15년 동안 대소변을 가릴 정도로 효부이자 안동며느리였다고 지인은 귀띔해 줬다. 그 안동며느리, 노모는 자식의 꿈을 위해 마지막 혼신을 불태우고 있을게다.

이제 권 후보는 6·4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들과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23.9×15.9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98
언 론 사	(주)정읍신문 전북 정읍시 수성동 666-1 대표이사 김 태 룡
심의대상기사	정읍신문 2014년 4월 30일자 4면「민선 6기 시장 당선자께 건의합니다 천변 벚꽃도 산내 구절초도 좋지만…」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 도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의 기고를 게재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3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선 6기 시장 당선자께 건의합니다
천변 벚꽃도 산내 구절초도 좋지만…

해마다 4월이 시작될 무렵 우리 정읍 시민들은 정읍천변 왕벚꽃길을 학수고대하게 됩니다. 올해도 천변의 벚나무들은 늘어진 가지마다 송이송이 꽃망울을 터뜨려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후략)



나의주장

민선 6기 시장 당선자께 건의합니다
천변 벚꽃도 산내 구절초도 좋지만…

이학수
정읍시 제2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

해마다 4월이 시작될 무렵 우리 정읍 시민들은 정읍천변 왕벚꽃길을 학수고대하게 됩니다. 올해도 천변의 벚나무들은 늘어진 가지마다 송이송이 꽃망울을 터뜨려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읍천변 벚꽃길을 볼 때마다 사라져서 추억의 한편에 자리한 정읍 벚꽃축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활기와 윤택함을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으로서 정읍에 작지만 알찬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풍광을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전라북도의 14개 시 군의 한 해 70여 개의 각종 축제와 함께 흘러갑니다. 각 지역의 자랑거리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축제가 계절에 맞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도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비롯하여 태산선비문화제, 자생화축제, 정읍예술제, 평생학습축제, 정읍사문화제, 구절초축제 등 약 7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내의 구절초 축제를 제외하고는 외지인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읍의 꽃축제 하면 정읍천변 벚꽃잔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열리던 정읍천변의 벚꽃축제가 사라진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벚꽃 축제의 폐지가 지역 상권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알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역 상권과 벚꽃축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 고민은 깊어집니다.

지난 가을 저는 산내 구절초 축제를 둘러보게 되었고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나무 아래 핀 새하얀 구절초를 보고자 산내의 깊은 산속까지 많은 외지인이 찾아온 것을 보니 이에 못지않게 외지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벚꽃축제가 단절된 것이 더 서운했습니다.

구절초 축제에는 하루에도 몇 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지만 음식과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반듯한 부스가 없고 허술하게 관리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벚꽃과 가을 구절초, 이 아름다운 풍광에 정읍 지역의 먹거리를 연계시키는 축제를 기획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상을 차리려면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각 읍면과 지역상인을 위한 부스를 만들고, 전문가의 콘테스트를 거쳐 지역민들이 마련한 먹거리 코너를 마련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로컬 푸드 개념의 먹거리 장터는 지역 농업과 농촌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산, 가공 판매,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99
언 론 사	반월신문(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1 대우빌딩 305호 반월신문사 대표이사 홍 일 호
심의대상기사	반월신문 2014년 5월 8일자 4면「당신은 국민을 버린 대통령입니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의회의원)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의 기고를 게재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3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당신은 국민을 버린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꿈꾸고,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온 국민이 사고 발생 후 보름이 넘도록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던 우리 아이들의 창백한 주검을 하루하루 속절없이 계수만 하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생명도 구출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국가시스템의 붕괴를 목도하며 슬픔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나라, 이런 대통령 아래서 살고 있었나하는 존재의식의 국민적 자각입니다.(후략)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꿈꾸고,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온 국민이 사고 발생 후 보름이 넘도록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던 우리 아이들의 창백한 주검을 하루하루 속절없이 계수만 하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생명도 구출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국가시스템의 붕괴를 목도하며 슬픔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나라, 이런 대통령 아래서 살고 있었나하는 존재의식의 국민적 자각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던 당신은 비겁한 대통령입니다. 사고 당일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구출하라"고 명령했고, 다음날은 "철저한 조사와 원인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모두 엄벌토록 하겠다." 기염을 토하며 가족과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전부이고 끝이었습니다. 단 한명의 생명도 구출하지 못했고, 이를 책임질 사람은 국가시스템의 최고 꼭짓점에 있는 바로 당신이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라 핑계대고, 방탄총리를 앞세워 뒤에 숨었습니다. 장관들 앞에서 한 사과도 진정성이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실종된 나라의 식물 대통령입니다. 시범케이스로 자르고 으름장을 놓아도 국가의 위기대응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호통 칠수록 더 납작 엎드려 눈치만 보게 함으로써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신의 책임윤리와 국정리더십, 나아가 국가와 정부 시스템이 한꺼번에 실종됐습니다. 세월호 침몰도 재난이지만 국가대응시스템 자체가 재난이고, 재난을 재앙으로 키운 주범입니다. 국가보다 안산시민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시스템이 훨씬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국민을 버린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국가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지 않게 됐습니다. "말을 잘 따른 아이들만 희생됐다"는 잔인한 역설이 당신 치세의 교훈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선장이지만, 대통령이 먼저 1년짜리 비정규직 선장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돌을 던질 때 온 국민이 그 돌을 맞는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 동영상과 카톡에서 "무슨 일인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기다리래. 다른 안내방송은 안 나와요"라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당일 오후 5시 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면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 했습니다. 차디찬 바닷물 속 선체에 갇힌 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수장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체이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서지 못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넘어 이제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지 않고 반발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남학생들이었으면', '장차관 아이들이었으면' 하는 울분이 터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뢰를 잃고 있는 나라의 불신의 대통령입니다. 이는 복원력을 잃은 세월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침몰하지 않으려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시스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이고 선장입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구조현장을 지켜보며 "모두가 내 책임이다.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다 쏟아 부어라" 고 밤새워 지휘하십시오.

절망은 희망과 믿음마저 잃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온 국민이 대통령과 나라에, 정치에 절망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세월호 참사가 남긴 가장 무서운 '트라우마' 입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의정칼럼

양 근 서 /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社內)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200
언 론 사	㈜국제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 대표이사 이 정 섭
심의대상기사	국제신문 2014년 5월 7일자 1면「양자・3자대결 모두 서병수 1위」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산광역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부제목과 보도문에는 '서병수 후보자와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44.1%와 40.4%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의 리드를 지킬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였음에도 기사제목을'양자・3자대결 모두 서병수 1위'라고 게재하였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의 경우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4.1대 40.4 오차범위 내
野단일후보 오거돈 압도적
(기사생략)

서-오-김 3자 땐 39.3%
서병수-오거돈 양자대결

국제신문

양자·3자대결 모두 서병수 1위

2014년 05월 07일 1면 (사설/칼럼)

6·4 선거 부산시장 여론조사

서-오-김 3자 땐 39.3%
서병수-오거돈 양자대결
44.1 대 40.4 오차범위 내
野단일후보 오거돈 압도적

최정현 권혁범 기자 ch@kookje.co.kr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 (3자대결)



6·4부산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3자 대결을 벌이면 서 후보가 비교적 여유있게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 후보가 김 후보 또는 오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하더라도 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오 후보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격전을 예고했다.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오 후보의 경쟁력이 김 후보의 경쟁력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3면

국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 5일 이틀간 실시한 '2014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서 후보와 김 후보, 오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본선에 나서면 서 후보가 39.3%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24.6%, 김 후보는 11.3%였다. 모름·무응답은 24.8%였다. 서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인 김 후보가 맞붙으면 각각 51.0%와 25.9%의 지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3.1%였다. 서 후보는 오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이더라도 각각 44.1%와 40.4%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리드를 지킬 것으로 조사됐다. 두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는 모름·무응답이 15.5%로 줄어들었다.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무소속 오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답한 시민이 52.7%에 달했다. 반면 김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6.0%였다.

지방선거의 투표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시민 67.4%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21.7%의 시민이 가급적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고,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나란히 확정된 이후 약 1주일 만에 실시됐다. 여야 주요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예선을 거쳐 본선의 막이 오르는 시점의 민심을 짚어본 것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사건을 겪고 난 후 민심의 향주소이기도 하다. 여당의 서 후보에게는 당내 역량 결집이, 김 후보와 오 후보에게는 단일화 방법이나 여부가 선거전 초반 최대 과제다. 이번 여론조사가 이런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부산지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질문을 절반씩 섞어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3.0×14.03cm)

의 결 번 호	2014지선203
언 론 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대표이사 송 영 승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2014년 5월 7일자 8면「최대 승부처 서울, '야 우세'로 바뀌었다」 2014년 5월 8일자 12면「무당파로 돌아서는 40대 엄마들…51.3% "야당이 선거 이겨야"」 2014년 5월 13일자 12면「정몽준·박원순 빅매치…수도권 '세월호 후폭풍'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최대 승부처 서울, '야 우세'로 바뀌었다

'세월호 전후' 판세 비교

-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17곳
- 여 우세 7, 야 우세 6, 백중 4
- 인천 '야 백중우세' 상승세
- 부산 여당·무소속 오차범위

(기사생략)

경향신문

2014년 05월 07일 08면 (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 '야 우세'로 바뀌었다

'세월호 전후' 판세 비교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17곳
여 우세 7, 야 우세 6, 백중 4

인천 '야 백중우세' 상승세
부산 여당·무소속 오차범위

D-28.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 판세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민적 애도분위기속에 여야 모두 선거 유·불리에 대해선 말을 삼가고 있지만, 수도권 판세는 야권에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여야 자체 분석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광역단체장 17곳 판세는 대략 새누리당 우세 7곳, 새정치민주연합 우세 6곳, 백중 4곳으로 분류된다. 세월호 참사 이전 경향신문 판세 분석(새누리 우세 7곳, 새정치 우세 5곳, 백중 5곳)과 비교하면 야권 우세 지역이 한 곳 늘었지만, 그곳이 서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부산을 제외한 영남 4개 지역과 제주지사, 대전시장 선거에서 우세를 보였다. 부산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선다. 새정치연합은 서울과 충남·강원 및 호남 3개 지역에서 우세로 나타났다.

승부처인 수도권에선 야권 상승세가 감지된다.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과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혼전을 벌였던 서울시장 선거전은 '세월호 이후' 박 시장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지난 3~5일 실시된 매일경제·메트릭스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49.3%)은 정 의원(37%)을 여유있게 눌렀다.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 4구에서도 박 시장(45.2%)이 정 의원(44.1%)에게 앞섰다.

평평하던 인천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세월호 책임론'에 휘말리면서 야당의 백중우세로 변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대세론을 형성했던 경기지사 선거전도 야권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세월호 이전 남 의원은 15~20%포인트 차로 새정치연합 김진표 의원을 눌렀지만, 매일경제 조사에선 두 사람의 차가 10%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대로는 수도권이 힘들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기도는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서울과 인천은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당에서 누가 나오든 서울시장은 이길 수 있다. 인천도 승산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승부처인 충청권에서도 여야 대결이 팽팽하다. 충북지사 선거에선 새정치연합 후보인 이시종 현 지사가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대전시장은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를 새정치연합 권선택 후보가 뒤쫓는 추세다. 여당 충청권 인사는 "대전에서는 숨겨진 야권 표가 10~15% 정도 된다. 백중세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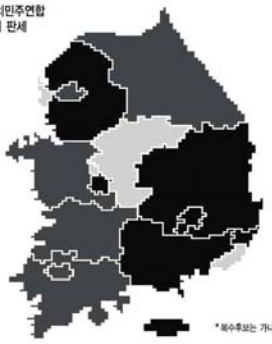
여당 분위기는 어두워졌다. 특히 여권을 떠받치던 대통령 지지율 폭락을 하락세의 징표로 받아들인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26~27일 실시한 비공개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53%로 세월호 이전(62.5%) 보다 9%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부동층 공략 방안을 고심중이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세월호 참사 이전엔 새누리당의 압도적 우위가 예상됐다. 하지만 사고 이후 야당의 지지층 결집 계기가 마련되면서 해볼 만한 경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용욱·김진우 기자
woody@kyunghyang.com

(25.1×20.9)cm²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

여 우세
야 우세
백중



* 복수후보는 가나다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판세
서울	김황식 이혜훈 정몽준	박원순	야 우세
부산	서병수	김영춘 오거돈(무소속)	백중
대구	권영진	김부겸	여 우세
인천	안상수 유정복	송영길	백중
광주	이정재	윤장현	야 우세
대전	박성효	권선택	여 우세
울산	김기현	이상범	여 우세
세종	유한식	이춘희	백중
경기	남경필 정병국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여 우세
강원	최흥집	최문순	야 우세
충북	윤진식	이시종	백중
충남	정진석	안희정	야 우세
전북	박철곤	강봉균 송하진 유성엽	야 우세
전남	이중효	이낙연 이석형 주승용	야 우세
경북	김관용	오중기	여 우세
경남	홍준표	김경수	여 우세
제주	원희룡	신구범	여 우세

무당파로 돌아서는 40대 엄마들…51.3% "야당이 선거 이겨야"

■ 대선 때 충성도 높았던 지지층, 세월호 참사 후 '싸늘'

■ 40대, 박 대통령 부정평가 17%P 급증… 선거 변수로(기사생략)

경향신문

2014년 05월 09일 12면 (정치)

무당파로 돌아서는 40대 엄마들… 51.3% "야당이 선거 이겨야"

대선 때 충성도 높았던 지지층, 세월호 참사 후 '싸늘'
40대, 박 대통령 부정평가 17%P 급증… 선거 변수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40대 여성의 표심이 싸늘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7일 "당의 최대 관심은 40대 여성"이라고 말했다. 고교생 자녀를 둔 40대 엄마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40대 여성은 당초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편이었다. 2012년 대선 당일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40대 여성 지지율은 40대 남성에 비해 7.3%포인트 높았다. 당시 여당은 박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의 실제 득표율이 40대 남성의 경우 백중세였지만, 40대 여성에서는 박 대통령이 문후보보다 8~10%포인트 더 앞은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0대 여성의 민심 이반 징후는 뚜렷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전인 4월7~10일 4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61%였지만 4월29~30일 조사에서는 45%로 급락했다. 리서치뷰 조사에서도 4월25일과 5월4일을 비교하면 40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0.6%에서 29.3%로 소폭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7.6%에서 65.9%로 급증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40대 여성의 표심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중·고교생 자녀를 둔 40대 여성의 모성 본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새누리당 한 수도권 의원은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한 40대 여성이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로 돌아섰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면서 "특히 충성도가 높았던 전업주부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5일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40대 여성(서울지역)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51.3%)는 응답이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28%)는 응답의 2배 가까이 됐다.

다만 40대 여성의 표심 변화가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어느 폭으로 창출되는 미지수다. 지난달 30일 엠브레인이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무당파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세대는 40대로 전체 평균 43.8%보다 높은 52.1%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40대 여성이 당장 야권으로 가기보다 일단 중도지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미다. 이병일 엠브레인 상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이탈표가 야당으로 직행하지 않고 무당파로 갔다"면서 "야당 역시 사고 이후 제 역할이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40대 여성 지지가 빠질 경우 대통령 지지율도 평균 40% 이하로 떨어지면서 기본 지지층이 이탈하는 조점을 보일 것"이라며 "아직 그런 조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한·심혜리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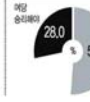
(35.2×11.0)cm²

40대 여성 표심 변화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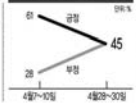
2012년 12월19일 대선 방송3사 출구조사 (40대 여성)



2014년 5월5일 중앙일보 여론조사 40대 여성 지지성향 (서울지역)



세월호 참사 전후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변화 (40대)



정몽준 · 박원순 빅매치…
수도권 '세월호 후폭풍'

여야 '빅 3' 대진표 확정

- 새누리 지지율 30%대 하락
- 세월호 민심에 여 후보 주춤
- 남경필 · 김진표 15% ➡ 0.8%차

6 · 4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빅 3' 대진표가 확정됐다. 서울시장에 정몽준-박원순, 경기지사 남경필-김진표, 인천시장 유정복-송영길이라는 1 대 1 대결 구도가 완성된 것이다. 수도권 선거 판세는 '세월호 후폭풍'이 현실화하며 여당 후보들이 주춤거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7~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새누리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38.1%를 기록, 지난 대선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후략)

경향신문

2014년 05월 12일 12면 (정치)

정몽준·박원순 빅매치… 수도권 '세월호 후폭풍'

여야 '빅3' 대진표 확정

새누리 지지율 30%대 하락

세월호 민심에 여 후보 주춤

남경필·김진표 15%➡0.8%차

6·4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빅 3' 대진표가 확정됐다. 서울시장에 정몽준-박원순, 경기지사 남경필-김진표, 인천시장 유정복-송영길이라는 1 대 1 대결 구도가 완성된 것이다. 수도권 선거 판세는 '세월호 후폭풍'이 현실화하며 여당 후보들이 주춤거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7~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새누리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38.1%를 기록, 지난 대선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서울은 '정몽준 대 박원순'으로

서울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63)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현 시장(58)이 맞대결하게 됐다. 정 의원은 12일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 현장투표(80%)와 여론조사(20%) 지지율을 표로 환산한 총 4497표 중 71.1%인 3198표를 얻어 예상을 깨고 압승했다. 정 의원은 현장투표에서 73.8%의 몰표를 얻었고, 여론조사에서도 60.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후보로 확정된 뒤 수락연설을 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왼쪽부터)를 국회로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당 지도부에 지방선거 지원을 요청했다. 정지윤 기자

세월호 참사 전후 정몽준-박원순 후보 세대별 지지율 단위:%



서울은 지방선거의 상징적 승부처인 데다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여야가 승패를 주고받은 곳이어서 사활을 건 대결이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잠재적 대선 주자라는 점에서 '대권 예비 관문' 성격도 띠고 있다. 선거까지 남은 23일 동안 정의원으로선 '재벌 대 서민' 구도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현대중공업 주식 백지신탁, 막내아들의 '국민미개' 발언 파문 등도 야립레스건이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시 지하철 추돌사고와 '안보관' 공세가 넘어야 할 산이다.

변수는 '세월호 민심'이다. 정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지난 3월 초부터 팽팽하던 구도는 '세월호' 이후 변했다. 세월호 참사(4월16일) 직전인 지난달 13일 KBS·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백중세던 판세는 지난 5일 중앙일보·갤럽 조사에서 박 시장이 6.4%포인트 앞서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박 시장은 이날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예방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후보직을 양보한 안철수 공동대표와 야권 후보를 놓고 경쟁한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여기 (선거 승리의) 주역이 다 계시다"면서 "2011년 선거 승리'를 다시 합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 인천도 출렁

세월호 후폭풍은 경기·인천에서도 확연하다.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가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한 달 전 같은 조사(4월11~12일)의 49.7%에서 40.2%로 급락했다. 새정치연합 김진표 의원은 34.9%에서 39.4%로 상승했다. 한 달 새 남의원이 15%포인트 앞서던 독주에서 0.8%포인트 차 초박빙으로 바뀐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전 접전이던 인천에서도 지난 11일 발표된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선 새정치연합 송영길 현 시장이 46.5%로 새누리당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34.4%)을 크게 앞섰다.

김진우·유정연 기자 jwkim@kyunghyang.com

(29.6×19.9cm)

의 결 번 호	2014지선211
언 론 사	주식회사 중심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7길 19-6 대표이사 이 정 의
심의대상기사	2014년 5월 10일~5월 19일자 3면 「문석진 후보 공약이행률 96점 이라고 확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후보자의 출마회견문 전문을 게재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제3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공약이행률 96점'등과 같이 해당후보자에게 우호적인 표현을 정확한 근거없이 기사제목과 본문에 게재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 기사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문석진 후보 공약이행률 96점이라고 확신?

(전략) 본지 이기자가 공약이행 질문에 문구청장은 공약 96%이행했고 그래서 96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석진 후보 공약이행률 96점 이라고 확신?

출마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청장 예비후보자 문석진입니다. 저는 어제 5월 1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공번6.4. 지방선거 출마를 결정하였습니다.

민선5기 서대문구는 아름다운 변화, 열린구정, 행복도시 서대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구정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민 여러분께서 행복도 평가 전국 2위라는 큰 선물을 서대문구에 안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흥이냐 아픔니다. 4월에 갑작스럽게 들려온 세월호 참사!

안전불감증에서 온 이번 사태로 구민 여러분 또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슬픔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함으로 애통하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서대문구는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 K등급인 문화시설아파트를 비롯해

관내 노후 건축물, 대형공사장,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 점검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구청장의 책무를 끝까지 다해왔습니다.

비록 저는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중단되지만 서대문구청 전 직원들은 32만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청이 바뀌면 서울이 바뀌고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작은 것부터 바뀌나가겠습니다"라고,당선자 시절에 인터뷰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5기의 구정 철학은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재임기간 내내 지방정부의 작은 변화가 중앙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정책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에 기장 대표적인 예로 "꿈 복지 허브화 사업"이 있습니다.

"꿈 복지 허브화 사업을 지방이 중앙을 움직인 대표적인 사업이며, 국회과 해보도 선정되어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낡고 노후 주개발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조정했던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홍제고가와 아현고가 철거, 전국 최초" 무장애 안산자락길 조성,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등의 사업은 민선5기의 손꼽힐만한 주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대문의 아름다운 변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청장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민선5기 추진했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민선5기 출범식의 세족식을 시작으로, 민선4기의 영광된 타이틀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법규와 관례에 얽매이지 않은 융통성과 주민중심의 구청운영 철학으로 오해 관한한 구청장, 부족 일을 행하는 구청장, 주청부대에(未請臥薪, 까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라는 평을 들을 만큼 지난 4년 무명인 공직자의 검을 걸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이 더 큰 도약으로 발전해 나갈 앞으로의 1년!

민선6기는 사람이 중심인 서대문, 안전하고 깨끗한 서대문, 어르신이 덕욱 살기 좋은 서대문 구현을 위해 종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서대문의 아름다운 변화를 주도해 주신 1,200여명의 서대문 공직자 여러분과, 늘 뜨거운 후원과 가 되어 주신 32만 구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청장 예비후보자 문석진 올림

본지 이기자가 공약이행 질문에 문구청장은 공약96%이행했고 그래서 96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212
언 론 사	(주)전북중앙신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5 대표이사 이 창 승
심의대상기사	전북중앙신문 2014년 5월 20일자 3면「송하진 후보 득표율 70% 넘어설까」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선거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도지사 선거의 승패가 정당의 공천만으로 특정 후보자로 정해졌으며, 득표율이 70%를 넘을지가 관건'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여타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 심의대상 기사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송하진 후보 득표율 70% 넘어설까

(전략) 도지사 선거의 승패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당선권으로 읽혀져 왔기 때문이다.(중략)

따라서 이번 선거의 관건은 새정치연합 송 후보가 70%를 넘어서느냐 그리고 새누리당 박 후보가 과거 정운천 후보의 득표율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후략)



전북중앙신문

2014년 05월 20일 03면 (종합)

송하진 후보 득표율 70% 넘어설까

지선 선거구 관전포인트

1. 도지사 후보 득표율

민주 텃밭 승패의미없어 3명 후보들 득표율 관심 지난 지선 김지사 68.7% 70% 뛰어넘을지 촉각

6.4 지방선거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북과 도내 14개 시군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대다수 지역에서 지역 중심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후보들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구가 상당수 있다. 이들 선거구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도지사 선거에는 새누리당박철곤, 새정치민주연합송하진, 통합진보당 이광석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 정운천, 민주당 김완주, 민주노동당 하연호, 진보신당 염경석, 평화민주당 김대식 등 모두 5명이 출전했다. 이번 선거는 출마자 수가 줄어 주요 정당 후보의 득표율에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지사 선거의 승패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 송하진 후보가 기존 득표율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2010년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완주 현 지사는 68.7%를 얻었다. 김 지사에 맞섰던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는 18.2%의 득표율을 얻었다. 역대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얻은 최고 득표율이다. 한나라당은 정당 지지율에서도 12.5%를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하 후보는 6.3%, 진보신당 4.3%, 평화민주당 2.2%를 각각 얻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관건은 새정치연합 송 후보가 70%를 넘어서느냐 그리고 새누리당 박 후보가 과거 정운천 후보의 득표율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공천 파동에 대한 도민들과 유권자들의 비난이 많았지만 차분하게 정책 선거를 주도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전북에 내려온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핸디캡이 있다. 또 정운천 전 농림장관에 비해 인지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박 후보 스스로의 경쟁력이 뒷받침된다면 의외의 득표율을 올릴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 이광석 후보의 결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후보는 책임자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전주시내 현안으로 부상한 버스 문제를 포함, 타 후보와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들이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준다면 기대이상의 득표율 확보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김일현기자 khelns@

의 결 번 호	2014지선225
언 론 사	주식회사 빛가람나주신문사 전남 나주시 대호길 45-36(대호동) 대표이사 박 선 재
심의대상기사	나주신문 2014년 5월 12일자 6면「아버지의 '윤장현'을 부르는 법, '큰 사람아, 큰 사람아'」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광역시장)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아버지와의 일화를 소개하고, 특정후보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내부필진의 기고를 게재하여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 기사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아버지의 '윤장현'을 부르는 법, '큰 사람아, 큰 사람아'

다도면 출신 윤지혁 초대 나주시장 장남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후보 공천자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후보인 윤장현 〈사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장현 후보는 우리지역 다도면 출신으로 윤지혁(90) 전 초대 나주시장(금성시장)의 장남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부친인 윤지혁씨는 나주댐이 축조되면서 수몰된 다도면 대초리에서 태어나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여 강진과 장흥, 전남도 식산국장 등을 거쳐 화순군수로 재임하다 금성시로 지명을 바꾼 80년에 초대시장을 역임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재광나주향우회 고문 등을 거치면서 나주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시민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초대시장으로 재임중 나주시 신청사 건립을 나주시 송월동으로 확정짓고 금성시의 명칭을 나주시로 개칭하는데 기여했으며, 상수도 설치공사, 중소기업 단지조성, 완사천 보존, 정열사 이전,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비 건립, 나주향교 정화사업 추진 등 수많은 업적으로 나주시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 그는 몰락한 가문의 쉰둥이로, 친척집 새끼꼴 머슴을 하다 독학으로 한글을 배워 공직자 길로 나선 의지가 공직자로 화순군수, 나주시장, 광주부시장 등을 역임했지만 강직한 성품으로 청빈한 생활을 이뤘다.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지만 이웃과 나누길 즐겨하고, 사회에 가치있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부모님 밑에서 철부지 어린 윤장현은 혼도 많이 났다. 특히 아버지는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면 서릿발 같이 혼을 내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의지가 강한 분으로 당신이 이루고자 한 것은 꼭 이루었다. 또한 목민관으로서 공직에 있는 것에 상당한 긍지를 갖고 계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린 윤장현을 혼도 많이 내셨지만 절대적 지지자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윤장현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큰 사람아, 큰 사람아' 하고 부르면서 윤장현이 무엇을 하든 믿음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윤장현이 그 이유를 딱히 물어보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 한다.

덕분에 윤장현은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고, 아무리 큰 일도 주저없이 도전하고 성취해 내고야 마는 '큰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소년 윤장현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사사로운 삶을 멀리하고 사회에 가치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광주의 가치를 지키고, 알리고, 재창조하는데 앞장서 온 윤장현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3년 중앙안과(현재 아이안과)를 개업해 인술을 펼치고 있는 안과의사지만 의료계 보다는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을 지내는 등 시민운동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시민운동 대부'로 불릴 정도로 각종 시민사회운동의 대표 인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재)5·18 기념재단 창립이사를 역임하는 등 1980년 5·18 이후 '광주정신'의 세계화와 열성을 다해 온 인물로 꼽히고 있다.

전국의 재야단체에서는 널리 알려졌지만, 지역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그가 부친의 후광을 뛰어넘어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광주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아버지의 '윤장현'을 부르는 법, '큰 사람아, 큰 사람아'

다도면 출신 윤지혁 초대 나주시장 장남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후보 공천자로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후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후보인 윤장현(사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장현 후보는 우리나라 다도면 출신으로 윤지혁(90) 전 초대 나주시장 겸 금성시장의 장남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부친인 윤지혁씨는 나주댐의 추즈도변사 수몰된 다도면 대초리에서 태어나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여 강진과 장흥, 전남도 산산국장 등을 거쳐 회순군수로 재임하다 금성시로 지명을 바꾼 80년에 초대시장을 역임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대광 나주향우회 고문 등을 거치면서 나주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시민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초대시장으로 재임중 나주시 신청사 건립을 나주시 송월동으로 확정짓고 금성시의 명칭을 나주시로 개칭하는데 기여했으며, 상수도 설치공사, 중소 기업 단지 조성, 원사천 보존, 정명사 이전 공원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윤장현 후보는 부친의 이러한 공직생활의 영향으로 학생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광주 YMCA 사무총장과 시민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시민운동에 헌신해 왔다.

윤 후보는 "아버지는 나주댐이 추즈도변사 수몰된 다도면 대초리에서 태어나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여 강진과 장흥, 전남도 산산국장 등을 거쳐 회순군수로 재임하다 금성시로 지명을 바꾼 80년에 초대시장을 역임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대광 나주향우회 고문 등을 거치면서 나주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시민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초대시장으로 재임중 나주시 신청사 건립을 나주시 송월동으로 확정짓고 금성시의 명칭을 나주시로 개칭하는데 기여했으며, 상수도 설치공사, 중소 기업 단지 조성, 원사천 보존, 정명사 이전 공원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윤장현 후보는 부친의 이러한 공직생활의 영향으로 학생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광주 YMCA 사무총장과 시민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시민운동에 헌신해 왔다.

특히 아버지는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면 사정없이 같아 혼을 내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의지가 강한 분으로 당신이 이루고자 한 것은 꼭 이루었다. 또한 복민관으로서 광주에 있는 것에 상당한 긍지를 갖고 계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린 윤장현을 혼도 많이 내셨지만 절대적 지지자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윤장현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같이 "큰 사람아, 큰 사람아" 하고 부르면서 윤장현이 무엇을 하든 믿음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윤장현이 그 이유를 따라 물어보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 한다.

덕분에 윤장현은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고, 아무리 큰 일도 주저없이 도전하고 성취해 내고야 마는 '큰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소년 윤장현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사사로운 삶을 멀리하고 사회에 가치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광주의 가치를 지키고, 알리고, 재창조하는데 앞장서 온 윤장현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3년 중앙안과(현재 아이안과)를 개업해 인술을 펼치고 있는 안과의사지만 의료계 보다는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을 지내는 등 시민운동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시민운동 대부'로 불릴 정도로 각종 시민사회운동의 대표 인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재)5·18 기념재단 창립이사를 역임하는 등 1980년 5·18 이후 '광주정신'의 세계화와 열성을 다해 온 인물로 꼽히고 있다.

전국의 재야단체에서는 널리 알려졌지만, 지역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그가 부친의 후광을 뛰어넘어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광주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정동안 기자

3. 권 고

의 결 번 호	2014지선8
언 론 사	(주)새전북신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2-6, 4층 대표이사 박 명 규
심의대상기사	새전북신문 2014년 2월 4일자 5면 「"군민의 행복이 곧 순창의 미래입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전북 순창군수)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터뷰내용 및 인물사진,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역리포트

■ 순창군 2014 군정 설계 방향

달리는 청마의 진취적인 기상이 2014년도 순창군의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순창군은 3만 군민의 염원을 모아 올 한해도 모두가 잘 사는 순창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군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군정의 올해 운영 비전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순창건설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순창농업 6차 산업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 △만성질환 치유거점조성과 장류·장수산업 고급화 △쾌적하고 특색있는 도시형 농촌 조성 △보편적 복지진입 노력과 수준높은 교육 △문화자원 확충으로 행복한 문화순창 만들기 △자원순환형 청정한 클린순창 조성이다.(후략)

■ 농특산물 직판장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
■ 농업 스토리텔링 개발-전자상거래 교육 강화
■ 5개 읍면 307억 투입…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추진
■ 생활환경 정비-경관 개선 등 농촌미을 모델 제시
■ 작지만 품격 높은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키로
■ 강천산 휴양단지 등 체류형 관광기반 투자 지속


"군민의 행복이 곧
순창의 미래입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9
언 론 사	주식회사 뉴아시아일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9길 56, 505호 대표이사 권 기 호
심의대상기사	아시아일보 2014년 2월 4일자 16면「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경기 포천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새해를 맞아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는 기업친화도시를 만들어 기업과 취업 희망자에게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2014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후략)


아시아일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0
언 론 사	서울일보미디어(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815호 대표이사 김 용 석
심의대상기사	서울일보 2014년 2월 5일자 20면「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구미」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경북 구미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구미!

■ 최근 연이어 대규모 국제·전국단위 행사 4개 유치 '그랜드슬램'

최근 구미시에는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다. 대규모 국제·전국단위 행사가 연이어 유치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단적으로 보면 구미시의 대외적 위상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유진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국제단위 행사 2개, 전국단위 행사 2개를 한꺼번에 유치한 것은 지방의 중소도시로서는 유래가 없는 일이다.(후략)


20 Special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구미

의 결 번 호	2014지선11
언 론 사	(주)울산매일신문사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4 9층 대표이사 이 연 희
심의대상기사	울산매일 2014년 2월 6일자 16면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울산의 중심' 자리매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울산광역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울산 남구청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터뷰내용 및 인물사진,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울산의 중심' 자리매김

■ 국내 최초 고래바다여행 크루즈선 도입… 각종 인프라 구축 '고래관광도시' 우뚝
■ '여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내년 준공… '죽음의 강'서 '명품 생태하천' 변모 기대
■ 선암호수공원 조성 구민 여가공간 확대… 솔마루길, 도심 속 최고 산책코스 자부
■ 산업구조 고도화해 성장잠재력 높여야… 서비스산업·창조문화사업 발굴·발전을

■ 시장예비후보 등록후 울산 곳곳 누비며 시민의 바람·생생한 현장 민원 들을 것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울산 남구 건설을 위해 지난 8년간 끊임없이 노력한 김두겸 남구청장. 6일 퇴임을 앞두고 5일 김 청장을 만나 울산 남구의 발전과정 등 소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후략)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울산의 중심' 자리매김

의 결 번 호	2014지선12
언 론 사	(주)수도권일보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79, 3층 대표이사 강 신 한
심의대상기사	수도권일보 2014년 2월 4일자 14면「기업 · 구직자에게 행복의 날개 달아주는 포천시 만든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경기 포천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기업 · 구직자에게 행복의 날개 달아주는 포천시 만든다

- 2014년 기업친화도시 조성 지표 설정
- 중기 육성자금 융자 50억원 확대 지원
- 해외시장 개척 · 기업 불편 해소 총력
- 고용률 70% 목표 일자리 창출 확대

포천시는 새해를 맞이해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는 기업친화도시를 만들어 기업과 취업 희망자에게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2014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후략)


기업 · 구직자에게 행복의 날개 달아주는 포천시 만든다

2014년 기업친화도시 조성 지표 설정
중기 육성자금 융자 50억원 확대 지원
해외시장 개척 · 기업 불편 해소 총력
고용률 70% 목표 일자리 창출 확대

의 결 번 호	2014지선13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구영남매일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71 대표이사 최 종 탁
심의대상기사	대구영남매일 2014년 2월 4일자 5면 「겨울에도 모두 따뜻하고 훈훈한 구미 만들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경북 구미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남유진 시장,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농산물상품권 등 위문품 전달 · 새해 인사 나눠

구미시가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에 걸쳐 저소득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기업과 개인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 서민안정과 위기가구, 차상위계층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해 시민 모두가 따스하고 훈훈한 겨울을 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달 27일 선산읍 소재의 선산실버타운과 사랑의 쉼터를 직접 방문, 농산물상품권과 쌀을 전달하고 새해 덕담과 인사를 나누며 "늘 구미시민 가장 가까이에서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행복메신저역할을 하겠다"며 입소자들을 격려했다.(후략)



겨울에도 모두 따뜻하고 훈훈한 구미 만들기

남유진 시장,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농산물상품권 등 위문품 전달·새해 인사 나눠

의 결 번 호	2014지선14
언 론 사	주식회사 경도신문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122, 2층 대표이사 김 순 희
심의대상기사	경도신문 2014년 2월 5일자 12면「기업 살리고 일자리 창출 나선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경기 포천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소상공인 육성자금 · 기업불편 해소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지원시책 연계 추진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새해를 맞이해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기업이 살아야 포천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는 기업친화도시를 만들어 기업과 취업 희망자에게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2014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후략)


경도신문

기업 살리고 일자리 창출 나선다

포천시 '미래 희망 프로젝트' 친환경 기업육성 박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 기업불편 해소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지원시책 연계 추진

의 결 번 호	2014지선15
언 론 사	수도일보 주식회사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4, 705호 대표이사 임 영 식
심의대상기사	수도일보 2014년 2월 4일자 12면 「"인천시, 투자유치는 멈추지 않는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인천광역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천시, 투자유치는 멈추지 않는다"

패션그룹 형지·BMW 서비스 등
문화센터·대형할인매장 유치
상반기중 하나금융타운 착공…
대우인터내셔널 연내 입주 예정

- 투자유치 종합계획 발표… 최고의 국제도시로 비상
- 컨택센터 필두로 한 원도심 창조경제… 인천서 실현
- 올해도 대기업 입주·착공 '잇따라'
- 인천에 투자가치는 상한가 행진중…

민선5기 출범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가 유치한 주요 기업본사는 코오롱글로벌(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주), 티오케이 첨단재료(주),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주), LG전자 인천캠퍼스, 대한사료(주), 스태츠 칩팩 코리아(주) 등 3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 관심대상이 되고 있으며, 투자유치도 멈춤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30일 인천시와 패션그룹 '형지'는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998년 설립돼 2012년 약 73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패션그룹 '형지'는 '패션을 통해 세상에 행복을 전한다'라는 미션을 실현하고 있다.

'샤트렌', '크로커다일 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등 여성복 중심에서 최근 '와일드로즈', '노스케이프' 등의 브랜드를 통해 아웃도어 시장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했으며, '예작', '본', '랑방 컬렉션'을 보유한 우성I&C를 인수해 남성복 시장에 진출한데 이어 학생복 브랜드 '엘리트'를 보유한 '에리트 베이직'도 인수해 '종합패션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후략)

수도일보

"인천시, 투자유치는 멈추지 않는다"

패션그룹 형지 · BMW 서비스 등 문화센터 · 대형할인매장 유치
상반기중 하나금융타운 착공… 대우인터내셔널 연내 입주 예정



동북아무역타워 예상계약 체결.

투자유치 종합계획 발표… 최고의 국제도시로 비상
컨택센터 필두로 한 원도심 창조경제…인천서 실현

올해도 대기업 입주 · 착공 '잇따라'

인천에 투자기치는 상한가 행진중…

민선5기 출범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가 유치한 주요 기업분석는 코오롱글로벌(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주), 티오케이 화단재료(주), 엠로 테크놀로지 코리아(주), LG전자 인천캠퍼스, 대한사료(주), 스테크 컴퍼 코리아(주) 등 3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 관심재상이 되고 있으며, 투자유치도 멈출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30일 인천시와 패션그룹 '형지'는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998년 설립해 2012년 약 73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패션그룹 '형지'는 '패션을 통해 세상에 행복을 전한다'라는 미션을 실천하고 있다.

'시프트', '크로커다일 레이디', '엘리비아 하임리' 등 여성복 중심에서 최근 '바잘트로즈', '노스페이로' 등의 브랜드를 통해 아웃도어 시장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했으며, '에이', '보', '칼빙' 컴퍼션' 을 보유한 우성ABC를 인수해 남성복 시장에 진출한데 이어 화성복 브랜드 '엘리트'를 보유한 '에리트 베이직' 도 인수해 '종합패션기업' 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이 사업은 국내 여성복산업을 이끌고 있는 형지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네오패션형지(주)'가 주관하고 유국인투자기업인 일본의 Takihi Orimono(다이이치오리모노)' 사가 함께 참여한다.

패션그룹형지는 오는 2018년 12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1-2번지 일대 102만5501.6m²(약 3782평) 의 부지에 사업비 약 8000억원을 들여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를 건립한다.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는 오피스(지상 21층), 오피스텔(지상 17층), 판매시설(지상 3층) 등으로 구성된다. 오피스 시설에는 쇼핑센터에팅연구센터, 신소재연구센터, 캠퍼패션연구센터, 디자이너 협업 디자인센터 등 RAD센터' 쇼핑센스몰, 리테일전문인력양성스쿨, 섬유패션 MBA스쿨, 대리점 CEO 교육이 진행될 교육시설 쇼케일사, 브랜드사업부 등 패션그룹형지의 오피스가 들어서게 된다.

또한, 판매시설은 패션브랜드 멀티매장, 몰리보레이션 복합매장, 식당 및 소매점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오피스텔은 입지한다나 바이어들의 휴식공간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1월11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 'BMW 서비스 및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인천광역시-바바리안모토(주)-BMW 그룹 코리아 간의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바바리안모토(주)는 총 440여명을 투자해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1만3225m² 부지에 연면적 2만3040m², 지상 4층 규모의 BMW 문화센터와 서비스 차량을고 센터를 함께 건립할 예정이다.

2015년 하반기 문화센터를 건립해 '인차 빌프장소', '산악레동 프레스닝 센터', 'BMW 문화관'박물관 · 어린이 교통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차량 정비 수입에 맞춰 서비스센터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BMW 그룹이 한국의 성장 잠재성을 인정하고 아시아 지역 최초로 'BMW 서비스 및 문화센터' 건립에 함작 투자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설립된 BMW 그룹은 2011년 약 97조25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럭셔리 자동차 제조 글로벌 기업으로 13개국 24개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140개국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BMW, MINI, Rolls-Royce 등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을 제조하고 있다. 올해 계장 예정인 영종지구 내 'BMW 그룹 드라이빙센터' 등 국내에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에는 송도리테일피에프브이(주)와 송도대형할인매장 유치를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송도리테일피에프브이㈜ 및 홈플러스㈜측은 약 98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2015년 4분기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연면적 약 9만㎡의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된다.

홈플러스 유치로 500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약 300만명의 관광객 유입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TP 확대조성단지의 동 사업부지 내 전입될 컨택프라임 아울렛과 함께 7공구의 소공엘커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TP 확대조성단지 스트리프몰에 투자할 인천펀드 및 재외동포의 안식처가 될 KAVI(Korean American Village) 사업 등과 함께 인천TP 확대조성단지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 본격 시동 및 대우인터내셔널 입주

지난해 4월1일 체결한 '청라 경제자유구역 하나드림타운 사업추진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의 비전을 담아 그룹 임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정신의 중심으로서 하나금융타운을 상징적으로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사업주체인 하나금융추자유 컨소시엄에는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약 7300억원을 투자해 2만3778㎡의 규모에 2017년까지 하나금융지주 본사, 금융경영연구소, 통합IT센터, 인재개발원 등 그룹 계열사의 주요 기능을 집적화한 '하나금융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드림타운 조성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시 인천 지역 거주자의 우선 채용 및 지역전상업계의 공사참여를 노력하기로 합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7년까지 단계별 조성기간 중 상당한 지역경기 부양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고 하나금융지주의 그룹핵드퀴터 등 주요 영커시설이 인천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7월2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송도 동북아무역타워(NEATT)에 입주한기로 한 대우인터내셔널도 금년 하반기에 정식 입주할 예정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매출 17.5조원, 자산규모 약 7.5조원의 대형 글로벌기업으로 수출입, 해외산업플랜트를 포함한 무역부문과 자원개발부문, 그리고 국내외 제조, 유통부문의 세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입주로 기대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1.8조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은 2014년 하반기 중 입주를 목표로 2014년 약 1000명의 지원의 송도근무를 목표로 단계별 입주인력을 확대해 2016년까지 1500명 규모의 인력이 송도 NEATT타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앞으로 NEATT타워는 1~33층까지는 업무시설로 활용되며, 34~36층은 식당, 연회장, 피트니스, 비즈니스센터 등 부대시설, 37~64층은 호텔, 68층은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컨택센터를 필두로 한 원도심 창조경제
'인천시가 앞섰다'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지난 1월29일 원도심 고용창출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2014년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발표 했다.

투자유치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심형 미래지식산업인 컨택센터를 다수 유치해 우선 2015년까지 3단계에 달하는 입지의 창출의 성과를 낼 예정이다.

또한, 전국 최초의 중앙정부 해산사업으로 해외마케팅, 바이어 대응, 맞춤식무문생산 등 중소기업의 취약부분 해결을 위한 국제컨택센터를 집중 유치해 온라인마케팅을 통해 16세기 네델란드 무역강국과 같은 신무역강국 대한민국을 인천에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원도심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단락으로 컨택센터 기업유치는 물론 루원시티, 도화구에 등 개발을 위한 국내외 자본의 투자유치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인도에서 국제도시 인천시에 글로벌컨택산업 입지를 문의해 와 인천시에서는 글로벌비즈니스 컴벨도시로 갈 수 있는 희망도 갖게됐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현 상수도사업본부 건물과 각 군 · 구에서 요구하는 빌딩 및 3~5개 민유건물을 신축해 컨택센터 기업유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산운영사 등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친 결과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축예정인 전용건물은 1건물당 5000명에서 1만5000명 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다양한 업종의 유치사업이 가능하여 원도심활성화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를 십분 활용한 IT, 자세대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환경, 물류, 유통, 해양, 항공산업 등 인천 입지에 맞는 일자리창출 기업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해 입는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과 연계해 철저한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관련 기업들을 원도심에 유치함으로서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이 상생 발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공항공사, 항만공사 등과 함께 세계적 인상산업을 선도할 국제산상센터, 국제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의 선도교육을 담당할 복합의료혼련센터, 2030년까지 30일사 발표 기준 전세계 100만여 명의 조종사와 정비사 등의 일자리를 일부 담당할 130만평의 항공MRO센터(정비, 앙비료에 탑재한 입자가속기 및 글로벌 물류기업 등 10여개 기업의 투자자와 접촉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현지의 입금상승과 정책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역연고기업과 수도권복귀기업을 대상으로 강화, 검단 등 신규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중점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핵심 기지인 LG전자 인천캠퍼스를 비롯해 일본 TOKI사, 미국 앱코, 싱가포르 투자기업 스테츠칩팩코리아 등 세계적 반도체기업을 유치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또한, 젤트리온과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아지노모도제넥신 등을 유치해 세계적 바이오 메카로서의 급부상했다.

이어 미국 보잉(Boeing)사의 항공운항훈련센터와 프랫앤휘트니사(Pratt & Whitney)사의 항공엔진정비센터가 유치됨으로서 인천은 국제공항과 더불어 명실상부 항공산업의 허브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이외에도 유엔녀석기후기술사무국(CTC)과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세계산기구관련의회(A-WEB) 유치로 인천은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소가 어우러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발전가능한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인천시는 투자 관련 전문가들 포함하는 투자유치기획단을 구성해 루원, 도화, 검단신도시, 송도관광단지, 예상공개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 투자유치업무를 총괄해 효율성 및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핵심타깃지역 선정을 통한 합동설명회 개최와 개별기업 맞춤형 투자상담을 병행해 선택적 집중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KOTRA, 산업통상자원부, 각급 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동을 추진하고, 투자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계사업을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와 직접 연계되는 원도심지역에 많은 투자유치와 산업혁신, 새로운 개념의 투자유치 전략을 통해 원도심을 살리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도시'로 도약하는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gs@sudobo.com



하나금융타운 사업추진 협약 체결식.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조감도.



송도국제도시 NEATT.



BMW 서비스 및 문화센터 조감도.

제4부 심의 · 의결 사례

의 결 번 호	2014지선16
언 론 사	(주)인천일보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26 대표이사 박 길 상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4년 2월 6일자 18면「따뜻한 복지 · 거침없는 소통… "시민이 최고입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경기 의정부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터뷰내용 및 인물사진,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따뜻한 복지·거침없는 소통…
"시민이 최고입니다"

- 민 · 관 복지서비스협력체 구축
- 3S 운동 · 원스톱민원처리 호평
- 미군 공여지에 대학설립 박차
- 남녀노소 독서진흥 시책 활발
- 문화 살아 숨쉬는 행복도시로

민선 5기를 이끌어 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 민주를 위한 소통행정,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 혁신을 위한 창의행정을 시정방침으로 세우고 '희망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해 힘을 쏟아 왔다. 올해는 국가 전체적으로 저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 또한 부동산 경기 지속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지방세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축했다. 의정부시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본다.

(후략)



따뜻한 복지·거침없는 소통 "시민이 최고입니다"

경기도 시군 특별 사업

의정부시 시민중심 성김행정

민선 5기를 이끌어 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시민을 위한 친절행정, 찬추를 위한 소통행정,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혁신을 위한 창의행정을 시정방침으로 세우고 '최강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해 힘을 쏟아 왔다. 불혁는 국가 전체적으로 서민정세가 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 또한 부동산 경기 지속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지방세수의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고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축했다. 의정부시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본다.

▲안전재정·일자리확대로 활기찬 도시 조성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세 신규 노 지원단부 시스템 구축과 법원경매정보 서비스 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세의 세외수입 최날 상수에 힘을 기울여기로 했다. 특히 나녀에는 공공주시설 폐쇄관리를 이용한 전기와 지역난방을 공급으로 30억여원, 유시설을 지원해서 10억일가스 생산으로 2억여원 등 폐기물 에너지 사업의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 10억 이 재정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다 참출을 통한 고성을 70% 달성은 목표 기업지원과 창업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취 프로그램 제공, 경력 단절자의 인재다 발굴을 한 '시 민자다 시장비즈'을 운영할 계획이다. 생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활성화 구 다원, 스타트 이벤트 개발, 전통시장과 상점가 성을 위한 사장자년 등 도심상권 재생프로젝 도 계속 추진한다.

▲보편적 복지, 다불어 사는 따뜻한 행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및 복지위원이 활 강화로 계간 감화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성화를 이 복지서비스 전략 체계을 구축하는 등 나눔 문화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선다.

교육가족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업소에고 노후 시설 보호관리을 위 보호단체가 입주할 수 그에 공감비용을 감축·이도심유학 예정), 행복한 노년, 즉 안생 이지하으로 외롭시 않은 선환이 가능하도록 경로당을 다양한 문화·건강 프로그램으로 채운다니. 서소득층에 대부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노력을 배경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도모를 꾀하기로 했다.

등록 초 준공하는 양로 장애인복지회관에 서부지역 장애인에게 거점이 되도록 문화센터를 기능 계획이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의적시에기업을 놀린 취업과 창업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대한이린 주공주산 사업, 노부송합지원센터 시설 확충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공부하는 시장, 끊임없는 공도부, 공부하는 시민"도 조성사업을 계획한다. 시는 "교육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생생학습을 바탕으로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다일동로 서부할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도 박차을 가하기로 했다.

관산천 정비사업 이해선 수도권 친환경 환승할인제 도입, 노사협노회 개설 등을 관도할 계획이다. 주요 IC개설 공식, 동부간선도로 확장, 탄력차수 BRT, 상도 30여시 추진과간 노로 개설로 총 13개 노선(13.3k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국·노비를 추가확보하고 가로계획을 최대한 적 입해 주차 환경에 노력하겠으며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에스바기로 했다. 녹색부시구 에게 두 선택할 수 있는 지역에 제개발·지간화 정비 사업도 추진하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 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의 보존·정비·개발을 통해 노후한 낙후 근린을을 균형적으로 관리한 예정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마을단위 정비 사업을 위해선 근린 등 세대 가이드라인 개발로 마을부민이 직접 참여한 도시관리를 만들어 나간다.

시민 참여 바는 소통의 날 행사

민·관 복지서비스협력체 구축

3S 운동·원스톱민원처리 호평

미군 공여지에 대학설립 박차

남녀노소 독서진흥 시책 활발

문화 살아 숨쉬는 행복도시로

▲안전·녹색환경·건강도시로 정비료

안심하고 아낄 수 있는 주도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저한 수입감사을 하고 노후된 상수도관은 교체한 계획이다. 의정부시 번입수·송복산 일원을 HILLO구을 연 3번방 생산력 필요한 곳에 공급해 주며, 공공하수세이시설 이전 다대체 조사 용역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입검에도 실시한다. 적년에 이어 올해도 '1백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확대해 유입도시 명성 넘을 행복한 가꾸수 있을 조성한다.

시민근린공원, 추동근린공원을 단건공원으로 개꾸고 변환공에다 캠핑 휴동장이 남동 지역에 시계전 테마 시에의료원, 시청 앞에는 잔디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민이 보고, 즐기고, 직접 가꾸고 보호하는 근린공을 정착시켜 진정한 시민의 공간로 거듭나게 하다는 계획이다.

▲의정부 가치를 높이는 명품행정 구현

친절 3S 운동, One-Stop 민원처리, 탄탄 안내 도우미, 시설의 작자 배려 철구, 변원단축 검고시스템, 민원인 권리 고지제 시행, 원확인불 순의 신경호 원칙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효율적인 종합상황관리시스템 신명을 정착시켜 서장 공무추진에 효율을 기한다. 시민안족시책을 찾고 방글해 "안원서비스 우수기관"의 명성을 경제는 전정서비스 혁정도 장전해 나간 방침이다.

▲세계적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

캔브레드플라우드(CB)일을 세계적 안보테마 관광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기서 이라계획을 세우면서 역사적인 보존가치를 고려한 타당성을 비탕으로 현재 연구보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여지는 대한민국 헌신세을 이른 이 에어고 시랜스캠프 캠프 개거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장소로 보존하고 주변에 원대중기서 방원를 위해 캔브레드플라우드 (CB) 일원은 타당성 검토하였다. 방문객편성 조성 등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변들어 시민 문식회로 되돌려 줄 계획이다.

인터뷰 / 안병용 의정부시장

배움 차별 없는 평생학습 구현

여성·가족 친화사업 중점 투자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소감은.

"의정부시 의정부의 기치를 높이겠습니다."

의정부시 슬보건으로 나름대로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지난해에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5개 관야, 55개 시민에 12억여원을 투자했습니다. 캠퍼교육지원센터, 시민자치대학, 학습형 일자리교육 학습프로그램 확충 운영으로 배움에 차별이 없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했지요. 여성가족부에서 실과 가운정책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안전행정부로부터는 시민을 위한 원리행정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향후 지역개발과 문화사업은.

"경국 최초·최대 민간투자사업으로 미군인환공여지인 캠프 에세이블에 국내 송합대학이 유치대학교의 대학병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실시대학자과 MOU를 체결해 오는 3월 본지캠퍼스 의정부캠퍼스 학습을 앞두고 있지요. 2017년 대학병원 개원, 2020년 글로벌헬스케어 개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10 Korea 한국대표 시범전의 2년 연속 개최도 의정부시 비보이의 메카로 시민축합하고, 세 꿈는 청소년 '세계 도전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시민 위한 성김 봉사행정은.

"시민과 소통하는 방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민원을 상담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시장과의 1일 데이트'를 활성화하고 빈과 현장에 충실한 공무한 민원처리를 위해민 행정보호를 위해 민원과 방문 상담 창구 일원 주간민원, 야간민원, 부부조정대한회, 시선상사정구제, 민원마당'과 제도, 등 민원행정의 공정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여성친화도시와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에 계기로 여성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가치적한 아울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농부지역 혼남근린공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 지역 간 남균한 체육과 전통문 화스년 육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행복한다감 공간이설로 바꾸는 '시설 없는 테을관' 프로젝트를 시행해 갑습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7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3 대표이사 임 재 율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4년 2월 6일자 11면「구리, 시민 행복도시 디자인하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경기 구리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의 인터뷰내용을 인물사진,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구리, 시민 행복도시 디자인하다

인터뷰/ 박영순 구리시장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최종심의만 남아
- 그린벨트 해제땐 올해 사업 본격 착수
- 서울시 상수원 수질오염 문제 제기에
- 市, 개발후 수질개선 전제하 협의 이뤄

- 경제불황·세수감소속 복지 예산 확대
- 지난해보다 15% 늘려 986억 예산 확보
- 소외계층에 혜택 더 돌아가도록 최선
- 자원봉사회관 복합 건물 건립 계획도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 적극 추진
- 초·중학교 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도
- 노인 인지 재활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
- 국민체육센터 활용 생활체육시대 열 것

"고구려의 기상, 세계속의 구리시~"

구리시가 시(市)로 승격된 지 올해로 28주년이 되는 해다.

구리시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는 도시다.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 동구릉으로 이어지는 푸른 숲이 병풍처럼 펼쳐져 맑은 산소를 공급하고 있고 민족의 젖줄인 한강과 유서 깊은 왕숙천, 그리고 장자호수 등 빼어난 아름다움을 뽐내는 수변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3개의 국도가 구리시를 관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에는 '조선왕조' 500년의 근대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아차산 일대에는 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물이 출토돼 1천500여년 전 동아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 고구려의 기상이 꿈틀거리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마부정제(馬不停蹄: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의 소신을 갖고 인구 20만의 수장인 박영순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새해 주요역점 시책사업을 들어본다.(후략)

중부일보



인터뷰/ 박영순 구리시장

"고구려의 기상, 세계속의 구리시~"

구리시가 시(市)로 승격된 지 올해로 28주년이 되는 해다. 구리시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여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는 도시다.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 동구릉으로 이어지는 푸른 숲이 병풍처럼 펼쳐져 맑은 산소를 공급하고 있고 인especially의 찻길은 환강과 유서 깊은 왕숙천, 그리고 장자호수 등 빼어난 아름다움을 뽐내는 수변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3개의 국도가 구리시를 관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에는 "조선왕조 500년의 근대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아차산 일대에는 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물이 출토돼 1천500여년 전 동이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 고구려의 기상이 곳곳에 묻어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마부정제(馬不停蹄·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의 소신을 갖고 인구 20만의 수장인 박영순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새해 주요 역점 시책사업을 들어본다.

임병권기자

▶구리시 최대 이슈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관련, 서울시 반대 입장에 대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2012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수해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포함된 친수구역이 지정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서울시가 국토부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추진 반대 의견을 보냈다고 하나 구리시는 근본적으로 서울시와는 상생발전 하자는 취지이며, 지난해 9월 서울시와 6개월에 걸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수원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는 구리시가 서울시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해 개발전보다 개발후가 수질이 더 개선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설사 모든 개발 사업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서울시가 계속 반대 하더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모두가 함께하면 좋은 반듯이 이뤄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램입니다.

보편적 복지에서 주민의 복지권은 단순한 생존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주민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비록 경제 불황과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내년도 복지 분야의 예산은 과감하게 확대토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2014년도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나 시 전체 예산 중 무려 43%인 980억원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하고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여성회관 및 자원봉사회관을이르를 열에 복합건물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명품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혁신교육도시 조성에 대해?

좋은 교육환경은 지역주민의 반목도로 연결되고 정주의식 또한 향상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혁신교육지구 4차년도 사업으로 혁신담임역지원 등 공교육혁신의 내실화, 교육과정 특성화 사업, 미래역량 인재육성사업, 토요학교 지원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초·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푸른 꿈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청소년을 육성 시키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쉼터를 운영하고 국제자매결연 도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리시에 거주하시다 타계하신 박완서 선생의 문학 자료관을 건립해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데?

먼저 질병의 치료와 예방차원을 넘어서 우리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감염병 예방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안창동에 심내 배드민턴장과 심내의게이트볼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완공했으며, 이로인해 본격적인 1인 1종목 생활체육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의 예방과 안전대난의 사전예방으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Safe Guri, 안전한 구리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의 심김 행정과 참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초시이 되는 열린 i政을 펼치겠습니다.시민은 i政의 초시이며, i政의 존재이유입니다.18대 새 정부는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3.0"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창조행정 3.0'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유연 정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소통을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운영해스마트한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과 창조행정 3.0이 병행 될 수 있는,시장혁신을 계속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SL 1-143.9/cm



박영순 구리시장이 목민아카데미 6기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최종심의만 남아
그린벨트 해제땐 올해 사업 본격 착수
서울시 상수원 수질오염 문제 제기에
市, 개발후 수질개선 전제하 협의 이뤄

경제불황·세수감소속 복지 예산 확대
지난해보다 15% 늘려 980억 예산 확보
소외계층에 혜택 더 돌아가도록 최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 적극 추진
초·중학교 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도
노인 인지 재활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
국민체육센터 활용 생활체육시대 열 것



멀티스포츠센터 투시도

의 결 번 호	2014지선18
언 론 사	주식회사 시대정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54번길 24, 9층 대표이사 권 기 현
심의대상기사	시대일보 2014년 2월 10일자 16면「고양시, 600년 역사 신 한류로 완성하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경기 고양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고양시, 600년 역사 신 한류로 완성하다


시대일보

고양시, 600년 역사 신한류로 완성하다

"역사를 담은 문화정책, 지역경제 OK! 한류관광 OK!"

최 성 고양시장

■ "역사를 담은 문화정책, 지역경제 OK! 한류관광 OK!"

2013년 개최된 고양행주문화제와 고양호수예술축제는 관람객 52만명으로 시민참여형 축제의 성공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각 마을별로 전해지는 고양의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된 '시민 퍼레이드'는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로 참여자와 관람객이 하나가 되어 함께 즐긴 축제였다. 특히 고양시는 2013년 지역 예술가와 고양시민을 위한 약3,000개의 문화예술 일자리를 창출하여 '축제는 소비적인 문화활동'이라는 패러다임을 깨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꽃박람회와 행주문화제, 호수예술축제 등 대규모 축제기간 중 문화행사를 집중 배치하고 주변상권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했다.(후략)

의 결 번 호	2014지선19
언 론 사	광남일보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54, 6층 대표이사 김 선 남
심의대상기사	광남일보 2014년 2월 4일자 19면「일자리 창출과 취업확대에 올인하는 광주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광주광역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울인 개인적인 노력 및 성과 등을 우호적으로 기술한 광주광역시 대변인의 기고문을 게재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일자리 창출과 취업확대에 올인하는 광주시

(전략)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고용률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58.2%로 최초로 7개 특별시와 광역시 중 3등을 차지했다. 어쩌다 한번 5등 한 적이 있고 계속 6등 아니면 7등을 해왔는데 최초로 3등까지 올라선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민선5기 강운태 시장 취임 이후 경제살리기에 올인한 결과로 풀이된다.(후략)



광남일보

기 고

일자리 창출과 취업확대에 올인하는 광주시

유 종 성
광주시 대변인

오늘은 새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춘이지만 2월은 1년 중 가장 힘든 달이기도 하다.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상대적으로 많은 계절이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등록금으로 목돈을 내야하고, 산업생을 둔 부모라면 방을 얻고 살림을 마련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거기다 대학마다 졸업시즌이 되면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통계에 의하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49.2%에서 2010년 40.8%로 5.4%나 떨어졌다고 한다.

청년실업률도 2004년 이후 계속해서 7~8%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실업률 3%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30만명이 청년실업자란 의미다. 무위도식하면서 취업 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NEET족(NEET)'은 1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광주의 고용사정은 아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고용률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58.2%로 최초로 7개 특별시와 광역시 중 3등을 차지했다.

어쩌다 한번 5등 한 적이 있고 계속 6등 아니면 7등을 해왔는데 최초로 3등까지 올라선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민선5기 강운태 시장 취임 이후 경제살리기에 올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른 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경제활동을 강화해 왔다. 청년창업 초기업과 마을기업, 장애인직업장 등을 가장 모범적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지난 해부터 광주시가 일자리 숫자 증가율과 고용률 증가율에 계속 1등을 차지하더니 마침내 바닥권이던 고용률이 3등을 차지한 것이다. 영광스러운 통계가 아닐 수 없다.

강 시장의 일자리에 대한 열정과 삼성의 '대학총장 추천제' 발표에도 범주지 않았다. 삼성이 '대학총장 추천제'를 발표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강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총장추천제는 폐래와 균형, 특히 사회 약자에 대한 공생정신이 많이 부족하다"며 "삼성에 지역대학을 좀 더 고려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이 광주에 가전사업부를 두고 지역경제에 공헌한 데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감사 드린다"며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삼성이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했나 격정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달 28일, 평소 친분이 깊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강 시장은 한 시간 가량의 통화에서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 삼성의 결정에 대한 반감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게 분명하다"며 삼각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최 부회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고, 강 시장은 "유보해야 한다. 왜 삼성이 사서 욕을 먹으려 하느냐"고 설득했고, 결국 삼성은 이날 대학총장 추천 할당제 백지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강 시장은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100대 기업과 400여개 출향·연고기업에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문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도 발송했다.

강 시장은 서한문에서 "열정과 역량을 가진 광주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기업에서 꿈과 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일자리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 협의체 '일자리 창출 시민 상생협력 회의'를 발족했다. 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일자리 영향평가제와 목표관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년창업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모델도시 조성사업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행복도시 광주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

(23.4×14.8cm)

의 결 번 호	2014지선20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구영남매일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71 대표이사 최 종 탁
심의대상기사	대구영남매일 2014년 2월 10일자 17면「자기주도 행정과 창조 행정」 2014년 2월 6일자 3면「중앙과 원활한 소통에 국비확보 독보적… 숲 군수에 힘 실리는 형국」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대구 서구청장)의 재임 중 시행한 시정성과 등을 미화하고 우호적으로 기술한 현직 단체장의 기고문을 게재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자기주도 행정과 창조 행정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표방하는 현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지금은 개념이 정립되고 실천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 개념이 모호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창조경제는 한마디로 추격형·모방형에서 선도형·창의형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히트상품 하나를 개발하면 길게는 10년 이상 거뜬히 먹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방심하고 안주하면 금방 도태돼 버리는 세상이 됐다.

노키아와 소니의 몰락이 글로벌 경쟁의 냉혹함을 말해 주고 있다. 정말 졸면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홀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아무튼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행정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구민의 기대와 욕구는 다양하고 수준이 높다. 전례답습적인 방법으로는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됐다.

늘 하던 대로 하거나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성장도 발전도 없다. 그저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며 구체적인 성과로 말해야 한다. 시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행정마인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구의 행정은 주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일선행정이고, 분야와 내용이 다양한 종합행정이다.

구민의 요구가 있으면 소관을 불문하고 그것이 곧 행정수요이고 업무이다. 그만큼 범위가 넓고 내용도 다양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자녀교육에 지극히도 열성적인 우리 국민들은 자녀교육 문제가 가정생활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 열풍의 시대이다.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이제 더 이상 교육기관만의 역할과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다.

우리구가 교육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교육으로 꿈을 키워가는 서구'를 구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학생들의 공부 방법 중에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있다. 학원이나 과외선생님의 계획에 따라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탐구해 성취하는 것으로 학습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우리구는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을 구정에 접목하기 위해 구청장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른바 '자기주도행정'을 주문했다.

수동적이고 무사안일 한 방법으로는 지역발전과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에 과감히 도전할 것을 강조했다. 그 결과 우리구는 구정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7개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1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비롯해 구민 평생학습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구민 학습관 개관, 청소년 교육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교육으로 꿈을 키워가는 서구'를 구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학생들의 공부 방법 중에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있다. 학원이나 과외선생님의 계획에 따라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탐구해 성취하는 것으로 학습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우리구는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을 구정에 접목하기 위해 구청장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른바 '자기주도행정'을 주문했다.

수동적이고 무사안일 한 방법으로는 지역발전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에 과감히 도전할 것을 강조했다. 그 결과 우리구는 구정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7개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비롯해 구민 평생학습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구민 학습관 개관, 청소년 교육문화 도시 조성, 국제교류사업, 구민축제의 획기적 개선,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기타 서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자기주도행정과 창조행정은 각각 주체와 내용면에서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면서 상호 필요 또는 충분조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창조행정을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이어야 하며, 자기 주도적이지 않고서는 창조행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자기주도'와 '창조'의 개념과 가치를 행정은 물론 우리사회 각 분야에 적용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거 같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행복도 과거 자기주도적이었고 창조적이었던 누군가의 치열했던 열정과 고민, 땀과 노력의 산물이다.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구의 비전은 '꿈과 희망이 자라는 행복한 서구'이다. 현정부의 국정목표도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구호아래, 국정기조에 '국민행복'이 있다. 가히 희망과 행복이 대세인 시대이다.

이처럼 구정운영과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이 비슷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구민이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기 고

자기주도 행정과 창조 행정

강성호
대구 서구청장

국민행복은 국정의 최고 가치로 표방하는 현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높에 뜨는 것이 동조관계이다.

지금은 개념이 희박되고 심천방법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 개념이 모호해 시행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동조관계는 한마디로 추계형·모범형에서 선도형·참여형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세계복으로도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하루상점 하나를 개발하면 겁계는 10년 이상 거뜬히 먹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의 빌점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방심하고 안주하면 금방 도태돼 버리는 세상이 됐다.

노키아와 소니의 블랙이 글로벌 경쟁의 냉혹함을 일깨 주고 있다. 동당 좋은 주는다는 뜻이 나쁜 점도로 소홀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아무튼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끊임없이 변화해고 발전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행정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구민의 기대와 욕구는 다양하고 수준이 높다. 전례답습적인 방법으로는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늘 하던 대로 하거나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성공도 보장도 없다. 그래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며 적극적인 성과로 말해야 한다. 시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행정마인드를 요구하고 있다.

적어 우리 행정은 주민편할과 멀날이 없는 일상업무이고, 분야와 내용이 대양한 종합행정이다.

구민의 요구가 있으면 소관은 불문하고 그것이 곧 행정수요이고 위무이다. 그만큼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고 다양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자녀교육이 지역주도 연성적인 우리 국민정은 자녀교육 문제가 가정생활의 가장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 열풍의 시대이다.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이제 더 이상 교육기관만의 역할과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해야할 중요한 몫이다.

우리구가 교육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교육으로 꿈을 키워가는 서구'를 구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학생들의 공부 방법 중에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있다. 학원이나 과외선생님의 계획에 따라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탐구해 성취하는 것으로 학습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우리구는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을 구정에 접목하기 위해 구청장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른바 '자기주도행정'을 주문했다.

수동적이고 무사안일 한 방법으로는 지역발전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에 과감히 도전할 것을 강조했다. 그 결과 우리구는 구정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7개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비롯해 구민 평생학습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구민 학습관 개관, 청소년 교육 문화도시 조성, 국제교류사업, 구민축제의 획기적 개선,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기타 서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자기주도행정과 창조행정은 각각 주체와 내용면에서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면서 상호 필요 또는 충분조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창조행정을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이어야 하며, 자기 주도적이지 않고서는 창조행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자기주도'와 '창조'의 개념과 가치를 행정은 물론 우리사회 각 분야에 적용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거 같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행복도 과거 자기 주도적이었고 창조적이었던 누군가의 치열했던 열정과 고민, 땀과 노력의 산물이다.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구의 비전은 '꿈과 희망이 자라는 행복한 서구'이다. 현정부의 국정목표도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구호아래, 국정기조에 '국민행복'이 있다. 가히 희망과 행복이 대세인 시대이다.

이처럼 구정운영과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이 비슷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구민이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24
언 론 사	(주)영남일보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대표이사 손 인 락
심의대상기사	영남일보 2014년 2월 6일자 3면「중앙과 원활한 소통에 국비확보 독보적… 金군수에 힘 실리는 형국」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의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성주군수)와 관련, 판세를 분석하면서 "독보적", "힘 실리는 형국" 등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중앙과 원활한 소통에 국비확보 독보적… 金 군수에 힘 실리는 형국

■ 李 전 주민복지실장, 선전 여부 따라 양자 대결구도 가능성

성주군수 선거의 초반 판세는 4년간 무난히 군정을 이끌고 재선을 노리는 김항곤 현 군수와 군행정에 잔뼈가 굵은 토박이 이수열 전 성주군 주민복지실장 간의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오근화 전 성주군의원이 최근 출마를 결정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최성곤 계명대 교수는 출마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정영길 경북도의원은 차기를 노리며 경북도의원 선거로 선회했다.

김항곤 군수(64)는 역대 군수들 가운데 중앙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군수로 평가받고 있다. 국비 확보에서는 김 군수를 따를 자가 없다. 성주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김 군수에게 다소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예산 3천억원 시대를 연 김 군수는 1·2차 산단 조성으로 연간 지방세 수입 100억원 확충, 일자리 1만여개 창출, 독창적인 생명문화 콘텐츠 개발 등으로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비도 450억원이나 확보하는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며 재선을 향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군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다"며 "'클린성주 만들기'를 '친환경 농촌 만들기' 전

국 시범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고, 세종대왕자태실과 생명문화의 세계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주에서 태어나 성주에서 잔뼈가 굵은 이수열 전 주민복지실장(57)은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산 이씨 문중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전 실장은 지난 37년간의 공직 경험을 토대로 전통시장 현대화, 농·축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 지원 등으로 전국 제1의 부자 군(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바닥 민심부터 차근차근 다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체계를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다문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빈곤 탈출 지원,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행복한 생활 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천~진주 간 철도노선 조기 착공, 대구지하철 성주연장을 통한 위성도시 육성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근화 전 성주군의원(62)은 두 번의 군수선거 낙선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성주군을 좀 더 공업화되고 근대화된 도농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당공천 제도는 백해무익하다"며 "무소속으로 당선돼 성주군민의 뜻을 소신있는 행정으로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영남일보

2014년 10월 08일 (목)

중앙과 원활한 소통에 국비확보 독보적…金 군수에 힘 실리는 형국

■ 성주군수

李 전 주민복지실장

선전 여부 따라

양자 대결구도 가능성

김항곤 이수열 오근화

성주군수 선거의 초반 판세는 4년간 무난히 군정을 이끌고 재선을 노리는 김항곤 현 군수와 군 행정에 잔뼈가 굵은 토박이 이수열 전 성주군 주민복지실장 간의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오근화 전 성주군의원이 최근 출마를 결정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최성곤 계명대 교수는 출마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장영길 경북도의원은 차기를 노리며 경북도의원 선거로 선회했다.

김항곤 군수(64)는 역대 군수들 가운데 중앙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군수로 평가받고 있다. 국비 확보에서는 김 군수를 따를 자가 없다. 성주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김 군수에게 다소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예산 3천억원 시대를 연 김 군수는 1·2차 산단 조성으로 연간 지방세 수입 100억원 확충, 일자리 1만여개 창출, 독창적인 생명문화 콘텐츠 개발 등으로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비도 450여원이나 확보하는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며 재선을 향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군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다"며 "'클린성주 만들기'를 '친환경 농촌 만들기' 전국 시범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고, 세종대왕자태실과 생명문화의 세계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주에서 태어나 성주에서 잔뼈가 굵은 이수열 전 주민복지실장(57)은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산 이씨 문중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전 실장은 지난 37년간의 공직 경험을 토대로 전통시장 현대화, 농·축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 지원 등으로 전국 제1의 부자 군(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바닥 민심부터 차근차근 다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체계를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다문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빈곤 탈출 지원,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행복한 생활 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천~진주 간 철도노선 조기 착공, 대구지하철 성주연장을 통한 위성도시 육성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근화 전 성주군의원(62)은 두 번의 군수선거 낙선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성주군을 좀 더 공업화되고 근대화된 도농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당공천 제도는 백해무익하다"며 "무소속으로 당선돼 성주군민의 뜻을 소신있는 행정으로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성주=박현철기자 phc@yeongnam.com

김성수기자 gs830@yeongnam.com

의 결 번 호	2014지선30
언 론 사	주식회사 중앙일보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 대표이사 홍 석 현
심의대상기사	중앙일보 2014년 2월 6일자 6면「"믿을건 신당밖에" vs "안, 적극성 거시기해"」 2014년 2월 10일자 4면「호남 1위 탈환한 민주당… 안철수 신당 심상찮다」 2014년 2월 11일자 6면「부산시장 권철현 급부상 오거돈과 엎치락뒤치락」 제하의 기사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이 공표하거나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지율 꺾인 전북 안철수 바람 …
고점 찍었나? 재도약?

전북은 '안풍(安風)'이 센 곳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휴먼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안철수 신당(가정)의 지지율은 45.5%, 민주당(32.3%)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인다. 설 연휴 직전 이 지역의 안철수 신당 지지율은 30.1%, 민주당(42%)과 지지율이 뒤바뀌었다.(후략)

지지율 꺾인 전북 안철수 바람 … 고점 찍었나? 재도약?

“믿을 건 신당밖에” vs “안, 적극성 거시기해”

전북은 ‘안풍(安風)’이 센 곳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휴먼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안철수 신당(가정)의 지지율은 45.5%. 민주당(32.3%)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인다. 설 연휴 직전 이 지역의 안철수 신당 지지율은 30.1%. 민주당(42%)과 지지율이 뒤바뀌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5일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멤버들과 함께 전주를 방문해 창당설명회를 열었다. 안 의원의 방문은 지난해 11월 새정추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전주 시민들은 대부분 안철수 신당에 ‘뎜뎜한’ 기대를 나타냈다.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 안철수 개인이 아닌 또 하나의 정당이 생기는 데 대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당이 전북에 해준 게 뭐 있어. 광주는 외곽에 가도 8차로 도로가 뻥뻥 뚫려 있는디. 여그는 진짜로 바꿔야 혀. 믿을 건 안철수 신당밖에 없어.”

전주 토박이 이용일(46)씨의 말이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근디 인물이 후지면 안 뽑지. 강봉균 같은 사람 나오면 이미지가 나쁘진 않으니까 지지할 텐데 (민주당에서) 정동영같이 힘센 사람이 나오면 (그쪽) 찍는 거지”라고 말을 고쳤다. 안철수 신당 후보를 향해 “나오려면 빨리 나와야지…. 간 보지 말고”라고도 했다.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안철수 신당의 전북지사 후보로 언급되는 이들은 신선하지 않고, 출마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 역시 신당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대한 평가도 한층 냉정해졌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가정식백반 식당을 운영하는 조상선(60)씨는 안 의원 얘기가 나오자 “대선 때보다 더 헷갈린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별다른 기대감이 없다. 적극성이 거시기해서….”

전주역에서 만난 대학생 김유섭(전북대·23) 씨도 “대선 때는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날 안 의원은 설명회에서 “새로운 정당은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양만 중시해 기존 정당을 답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설’에 대해 “국익과 민생을 위한 연대·협력은 마다하지 않겠지만 선거만을 위한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준 새정추 의장은 “국익을 위한 연대는 국정원 댓글 진상규명이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같은 정책 연대를 의미한다”고 말해 사실상 후보연대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전북에선는 아직 ‘안철수 신당이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선에 연이어 패배한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안철수 신당에 관심이 많아 군산에서 올라왔다는 나 모(61)씨는 “사람다운 사람을 영입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람이 없다”며 “민주당 간담을 서늘하게 할 사람이 있어야 (민주당을) 버리고 찍지”라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가 신당을 만든다니까 민주당이 전북을 좀 신경 쓰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죽도록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는 기색이었다.

전주=**이소아** 기자, **하선영** 기자
lsa@joongang.co.kr

호남 1위 탈환한 민주당… 안철수 신당 심상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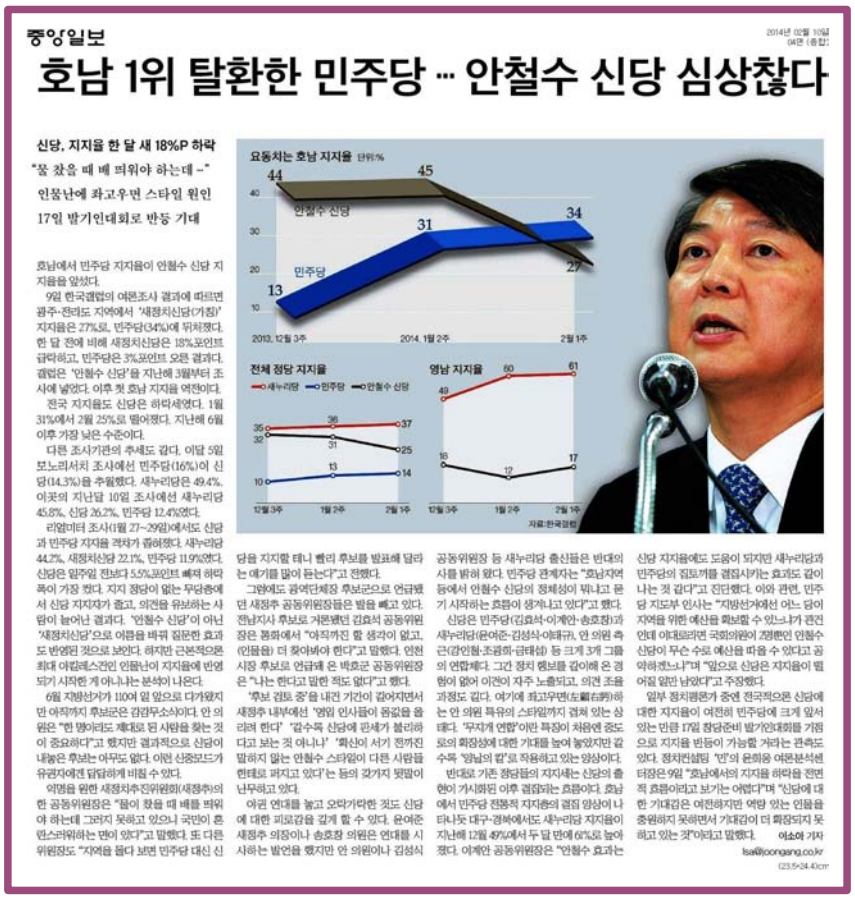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안철수 신당 지지율을 앞섰다.

9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라도 지역에서 '새정치신당(가칭)' 지지율은 27%로, 민주당(34%)에 뒤처졌다. 한 달 전에 비해 새정치신당은 18%포인트 급락하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결과다. 갤럽은 '안철수 신당'을 지난해 3월부터 조사에 넣었다. 이후 첫 호남 지지율 역전이다.

전국 지지율도 신당은 하락세였다. 1월 31%에서 2월 25%로 떨어졌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른 조사기관의 추세도 같다. 이달 5일 모노리서치 조사에선 민주당(16%)이 신당(14.3%)을 추월했다. 새누리당은 49.4%. 이곳의 지난달 10일 조사에선 새누리당 45.8%, 신당 26.2%, 민주당 12.4%였다.

리얼미터 조사(1월 27~29일)에서도 신당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새누리당 44.2%, 새정치신당 22.1%, 민주당 11.9%였다. 신당은 일주일 전보다 5.5%포인트 빠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신당 지지자가 줄고, 의견을 유보하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다. '안철수 신당'이 아닌 '새정치신당'으로 이름을 바꿔 질문한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최대 아킬레스건인 인물난이 지지율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후략)



중앙일보

2014년 02월 10일 (04면 1종합)

호남 1위 탈환한 민주당 … 안철수 신당 심상찮다

신당, 지지율 한 달 새 18%P 하락

"물 찼을 때 배 띄워야 하는데 -"

인물난에 좌고우면 스타일 원인

17일 발기인대회로 반등 기대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안철수 신당 지지율을 앞섰다.

9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라도 지역에서 '새정치신당(가칭)' 지지율은 27%로, 민주당(34%)에 뒤처졌다. 한 달 전에 비해 새정치신당은 18%포인트 급락하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결과다. 갤럽은 '안철수 신당'을 지난해 3월부터 조사에 넣었다. 이후 첫 호남 지지율 역전이다.

전국 지지율도 신당은 하락세였다. 1월 31%에서 2월 25%로 떨어졌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른 조사기관의 추세도 같다. 이달 5일 모노리서치 조사에선 민주당(16%)이 신당(14.3%)을 추월했다. 새누리당은 49.4%. 이곳의 지난달 10일 조사에선 새누리당 45.8%, 신당 26.2%, 민주당 12.4%였다.

리얼미터 조사(1월 27~29일)에서도 신당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새누리당 44.2%, 새정치신당 22.1%, 민주당 11.9%였다. 신당은 일주일 전보다 5.5%포인트 빠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신당 지지자가 줄고, 의견을 유보하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다. '안철수 신당'이 아닌 '새정치신당'으로 이름을 바꿔 질문한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최대 아킬레스건인 인물난이 지지율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가 1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후보군은 감감무소식이다. 안 의원은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신당이 내놓은 후보는 아무도 없다. 이런 산중모드가 유권자에겐 답답하게 비칠 수 있다.

익명을 원한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한 공동위원장은 "물이 찼을 때 배를 띄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이 흔들스러워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장도 "지역을 돌다 보면 민주당 대신 신당을 지지할 테니 빨리 후보를 발표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새정추 공동위원장들은 발을 빼고 있다.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통화에서 "아직까진 할 생각이 없고, (안철수) 더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장 후보로 언급돼 온 박호군 공동위원장은 "나는 한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후보 검토 중'을 내건 기간이 길어지면서 새정추 내부에선 '영입 인사들이 몸값을 올리려 한다' '깜수록 신당에 관세가 불리하다고 보는 것 아니냐' '혁신이 서기 전까진 말하지 않는 안철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 한테도 퍼지고 있다'는 등의 갖가지 뒷말이 난무하고 있다.

아권 연대를 놓고 오락가락한 것도 신당에 대한 피로감을 깊게 할 수 있다. 윤여준 새정추 의장이나 송호창 의원은 연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안 의원이나 김성식 공동위원장 등 새누리당 출신들은 반대의 사를 밝혀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지역 등에서 안철수 신당의 정체성이 뚜나고 묻기 시작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신당은 민주당(김효석·이계안·송호창)과 새누리당(윤여준·김성식·이태규, 안 의원 측근(강인철·조광희·금태섭) 등 크게 3개 그룹의 연합체다. 그간 정치 행보를 같이해 온 경험이 없어 이견이 자주 노출되고, 의견 조율 과정도 깁다. 여기에 최고우면(독불장군)하는 안 의원 특유의 스타일까지 겹쳐 있는 상태다. '무지개 연합'이란 특징이 처음엔 중도로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 놓았지만 걸수록 '영남의 칡'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반대로 기존 정당들의 지지세는 신당의 출현이 가시화된 이후 결집되는 흐름이다. 호남에서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 양상이 나타나듯 대구·경북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지난해 12월 49%에서 두 달 만에 61%로 높아졌다. 이제안 공동위원장은 "안철수 효과는 신당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질보끼를 결집시키는 효과도 같이 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지방선거에선 어느 당이 지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야권분리면 국회의원이 3명뿐인 안철수 신당이 무슨 수로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공약하겠느냐"며 "앞으로 신당은 지지율이 웹 어질 걸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치평론가 중엔 전국적으론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민주당에 크게 앞서 있는 만큼 17일 창당준비 발기인대회를 기점으로 지지율 반등이 가능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정치컨설팅 '민'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9일 "호남에서의 지지율 하락을 전면적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역량 있는 인물을 충원하지 못하면서 기대감이 더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23.5×24.43cm)

부산시장 권철현 급부상… 오거돈과 엎치락뒤치락

(전략) 부산MBC와 한길리서치가 부산지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22.3%로 1위를 기록해 서 의원(13.8%)과 박 의원(7.5%)을 앞섰다.

부산KBS ·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도 권 전 대사는 23.2%로 1위였다. 이명박계 출신 권 전 의원이 친박 실세 서 의원을 제치고 선두를 줄달음치는 형국이다.

2위는 서 의원(14.5%), 박 의원은 설동근 동명대 총장(10.8%)에 이어 4위로 밀렸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지낸 설 총장은 부산시 교육감을 세 차례 지내는 등 지역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다.(중략)

부산KBS · 미디어리서치 조사를 보면 더 알쏭달쏭해진다. 이 조사에 따르면 3자 대결의 경우 오 전 장관은 41%대의 지지율을 보이며 권 전 대사(39.8%)나 서 의원(38.5%)을 따돌렸다. 야권 후보단일화에 따른 양자 대결을 상정할 경우 그 차이는 더 벌어져 오 전 장관은 46%대 지지율을 보이며 서 의원에겐 5.4%포인트, 권 전 대사에겐 5%포인트 앞섰다.

당선 가능성을 물은 국제신문 ·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도 오 전 장관이 부산시장이 될 것이란 응답이 18.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서 의원(16.2%)과 권 전 대사(12.0%), 박 의원(4.7%)이 이었다. 부산 시민들이 '오거돈 부산시장'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후략)



중앙일보

2014년 02월 11일 (중합)

부산시장 권철현 급부상 … 오거돈과 엎치락뒤치락

요동치는 부산시장 선거 판세

여권에 유리하단 조사 결과 많지만 단위(%, 국제신문-리서치앤리서치)

안철수 신당 우위 결과도 부산KBS-미디어리서치

※10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오 전 장관이 안철수 신당 후보로 나서고 3자 대결을 상정했을 경우

지역언론 6·4선거 여론조사 보니

서병수·박민식에 앞서 여권 1위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다."

부산 사정에 밝은 한 새누리당 인사가 부산시장 선거전에 대해 한 얘기다. 10일 압해야 발표된 부산지역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 그간 새누리당 후보 자리를 놓고 서병수 의원과 박민식 의원의 '2강(强)'이란 시각이 무색했다. 그러나 '권철현 반수'가 돋을했다.

부산MBC와 한길리서치가 부산지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22.3%로 1위를 기록해 서 의원(13.8%)과 박 의원(7.5%)을 앞섰다.

부산KBS-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도 권 전 대사는 23.2%로 1위였다. 이명박계 출신 권 전 의원이 친박 실세 서 의원을 제치고 선두를 줄달음치는 형국이다.

2위는 서 의원(14.5%), 박 의원은 설동근 동명대 총장(10.8%)에 이어 4위로 밀렸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지낸 설 총장은 부산시 교육감을 세 차례 지내는 등 지역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다.

아권 후보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 결과를 점치기 더 복잡해진다. 부산MBC·한길리서치조사나 국제신문·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선 3자 대결 시 여권 후보 3인방(권 전 대사, 서 의원, 박 의원) 중 누가 나서더라도 오 전 장관을 앞섰다.

다만 권 전 의원의 지지율(35.6%)이 서 의원이나 박 의원보다 높았다. 오 전 장관을 무소속 후보가 아닌 안철수 신당(새정치신당) 후보로 대입한 결과다. 오 전 장관은 두 여론조사에서 28%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 여권 후보들과 그리 격차가 크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은 5~6%대의 지지를 받았는데 오 전 장관과 김 전 의원의 지지율을 합치면 새누리당 후보들과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가게 된다.

부산KBS·미디어리서치 조사를 보면 더 알쏭달쏭해진다. 이 조사에 따르면 3자 대결의 경우 오 전 장관은 41%대의 지지율을 보이며 권 전 대사(39.8%)나 서 의원(38.5%)을 따돌렸다. 야권 후보단일화에 따른 양자 대결을 상정할 경우 그 차이는 더 벌어져 오 전 장관은 46%대 지지율을 보이며 서 의원에겐 5.4%포인트, 권 전 대사에겐 5%포인트 앞섰다.

당선 가능성을 물은 국제신문·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도 오 전 장관이 부산시장이 될 것이란 응답이 18.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서 의원(16.2%)과 권 전 대사(12.0%), 박 의원(4.7%)이 이었다. 부산시민들이 '오거돈 부산시장'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오거돈 개인의 경쟁력'과 '여권 후보들의 난맥상'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당 관계자는 "오 전 장관이 말을 좀 더듬고 말투도 어눌하지만 행사에 합격하고 장관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은 화려해 '안간극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며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것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의원들의 견해는 다르다. 한 부산지역 관계자는 "여권 예선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지난 19대 총선 때, '나동강 벨트' 운운했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오 전 장관이 어디로 갈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당내 경선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안철수 신당도 오 전 장관 영입을 타진하고 있으나 오 전 장관은 무소속 출마 입장을 지키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남지사에 당선된 김두관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29.4×21.4cm)

의 결 번 호	2014지선31
언 론 사	(주)시사저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02번지 대표이사 권 대 우
심의대상기사	시사저널 2014년 2월 1269호 30면~31면 「'소통령' 누가 될지 40대 표심에 갈렸다」 32면~35면 「안철수 비집고 들어갈 틈 좁아졌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이 공표하거나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소통령' 누가 될지 40대 표심에 갈렸다

(전략) 리얼미터가 지난 연말 MBN 의뢰로 조사한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박원순 시장과 여야 일대일 구도로 맞붙을 경우 박 시장 50.1%, 정 의원 42.3%로 박 시장이 7.8%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략 박원순 시장과 나정원 후보가 대결했던 2011년 보궐선거 득표율 격차와 비슷한 수치다.(후략)


'소통령' 누가 될지 40대 표심에 달렸다

안철수 비집고 들어갈 틈 좁아졌다

(전략)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1월 29일자로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중략)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월 30일자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중략)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다.(중략)

반면 비슷한 시기에 광주·여수·목포 MBC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중략)

지난 1월27일 발표된 전북도민일보와 전주 MBC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중략)

경남도민일보가 설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중략)

JIBS와 제주일보가 설을 맞아 지난 1월 27일과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후략)


안철수 비집고 들어갈 틈 좁아졌다



기획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종합 등과의 가상 맞대결에서 모두 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후 차관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래도 안 지사에게 10.6%포인트 뒤졌다.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안 지사의 개인 인기가 높은 것은 '도정 지지율' 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리얼미터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 지지율 3주차 응답도 30.1%였다.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매우 잘 하고 있다"고 답한 이가 44.8%로 높게 나왔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6개 여월 앞선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다. 가기서는 오히려 후 차관이 안 지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선거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후 차관이 안 지사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충북의 현역 역시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지사이지만, 조선일보 조사 결과 "재선에 나오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4.8%에 그쳤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2월말 공동선 전 제일저축은행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의원은 충북도지사 도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윤 의원이 출마가 가시화되기 전 시급을 전 농림부장관, 이기용 교육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에 이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던 이 지사는 향후 윤 의원과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장 선거는 현역 염홍철 시장의 불출마로 설 이후에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선일보 조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것 시장은 물론 야 신안데도 불구하고 대전 주민 41.3%가 '놀아버면 무료하겠다'에 여전히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전시장 출마인 새누리당의 박성효 의원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염 시장이 지원하는 노병환 행정부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맞붙을 것이란 예기도 최근 들어 부쩍 자주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권선택 전 의원이, 선거에서는 선행을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충남

충남 지역은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답게 민주당과 신당 후보가 각 여론조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우선 한차례 의 광주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신당이 윤상현 새정추 공동위원장이 31.2%의 지지율을 보여 25.0%를 얻은 강준하 사장을 앞섰다. 윤 위원장은 이용섭 민주당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35.6%의 지지율 얻어 이 의원(24.9%)을 앞섰다. 반면 이순한 시가에 광주 서구·북구을 MBC가 공동으로 실시한 양문조사에서는 강 시장이 29.2%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고, 그 뒤는 이홍섭 의원(20.2%), 이행원 노무현재단 이사장(14.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위원장은 8.2%에 그쳐 한차례 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 지역 신문 '시민의 소리'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장 적합도로 강 시장이 22.5%, 윤 위원장이 20.7%를 기록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일치터리서치하는 광주와 달리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신당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광주·전남 언론인회장 7개 회원사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주승용(24.0%)·이낙연(20.5%) 의원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고 신당 측 후보로 거론되는 이석형 전 힐튼군수(5.8%)와 김효석 전 위원장(5.6%)은 상대적으로 뒤지는 결과를 보였다. 광주·여수·목포 MBC 공동 조사 결과 에서도 역시된 민주당 의원이 27.2%로 1위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주승용(18.4%), 이낙연(16.2%), 이석형(11.0%), 김효석(9.4%) 순으로 조사에 민주당 주세가 두드러졌다.

문화예술 의원의 향방이 1위나고 있다. 당초 신당 지지층이 흡나올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신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3월27일 발표된 전북도민일보와 전주MBC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24.7%로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 소속 송하진 전주시장과 유성엽 의원이 각각 23.2%, 10.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신당 후보로 거론되 강봉균 전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은 7.0%, 3.0%를 얻는 데 그쳐 10.9%를 얻은 새누리당 정운천 전 장관에게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한 시가에 이뤄진 뉴스1전북취재본부 조사에서는 송하진 전주시장이 23.2%로 1위를 차지하고 그 뒤로 유성엽 의원(10.6%), 강봉균 전 의원(12.7%), 정운천 전 장관(10.1%) 순을 보였다.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제주도지사

■ 대구·경북

TK 지역에선 역시 새누리당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일찌나 선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달을 존 TK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당 차원에서 총력을 쏟고 있다. 새누리 당에서는 권영진 전 시율시 경무부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으며, 이밖엔 대구 동구청장이 2월12일 퇴임식을 가졌으로 대구시장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의원도 곧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구의 미래 구상에 대한 입그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지사의 경우 김관용 지사의 3선 출마가 확실한 가운데, 제일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권오을 전 의원이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김천일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 후 한때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 돌었지만, 이번 설 귀향에 나선 지역 의원들은 "재도전 의사가 확고하다"고 전한다.

■ 부산·경남

한차례가 실시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무소속 오거돈 전 장관이 경력 이점이 컴복한다. 오 전 장관이 만약 신당 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의 서병수 의원, 민주당의 김영춘 전 의원과 맞붙을 경우 오 전 장관(37.0%)이 서 의원(30.9%)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를 박민식 의원으로 바꿔 경우에도 오 전 장관이 42.7%의 지지를 얻어 25.2% 지지율에 머 의원을 크게 앞섰다. 오 전 장관은 지난 1월2일 부산일보 조사에서도 13.5%의 선호도로 1위를 차지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선 새누리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민일보가 설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지사가 30.3%를 지지해 선두를 달렸고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18.9%로 뒤를 이었다. 홍 지사와 '양수' 관계로 관심을 모았던 안상수 전 인나광역시장은 전신 대표는 12%를 얻었다. 최근 창원시장 출마을 선언한 김석기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울산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방송이 지난 1월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강길부 의원(26.6%)과 새누리당 주군인 지사(25.3%)가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신당의 신구범 전 지사(8.8%)가 뒤를 따랐다. 새주 지역 6개 민나분 언론사 공동 조사 결과에서도 주 지사(36.9%), 신 전 지사(16.5%), 김 의원(16.3%) 등 3명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해문 기둥에 러시아산 소나무 사용" 관련 알림

본지는 지난해 12월에게재한 커버스토리 "송해문 기둥에 러시아 소나무 썼다"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송해문 기둥 일부가 수입산인 러시아 소나무라는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했다거나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러시아산 소나무 3~4개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는 등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수사 책임자가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더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32
언 론 사	(주)문화일보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2 (충정로1가, 문화일보) 대표이사 이 병 규
심의대상기사	문화일보 2014년 2월 5일자 3면 「높은 인지도 · 정치외교 감각 두루 갖춰 '백지신탁' 등 재산문제 공격받을 수도」 제하의 기사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이 공표하거나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 · 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높은 인지도 · 정치외교 감각 두루 갖춰 '백지신탁' 등 재산문제 공격받을 수도

■ 정몽준은…

(전략) 가장 최근 여론조사로 지난 3일 발표된 시사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 의원은 박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43.3% 대 43.0%로 근소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안 전 의원이 안철수 신당 후보로 나설 경우 '정몽준 40.8%, 박원순 33.9%, 이계안 14.9%'였다. 정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젊은 층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중도 및 청년층에서 표 확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후략)

문화일보

2014년 02월 05일
03면 (선거)

높은 인지도·정치외교 감각 두루 갖춰 '백지신탁' 등 재산문제 공격받을 수도

▨ 정몽준은…

▒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정몽준 의원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인지도와 경쟁력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 최고 경쟁력을 갖췄다. 이는 박 시장의 벽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던 새누리당에 희소식으로 다가오면서 정 의원이 다크호스로 부각되고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로 지난 3일 발표된 시사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 의원은 박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43.3% 대 43.0%로 근소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안 전 의원이 안철수 신당 후보로 나설 경우 '정몽준 40.8%, 박원순 33.9%, 이계안 14.9%'였다. 정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젊은 층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중도 및 청년층에서 표 확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물면에서 정 의원의 장점은 정치적 부채가 없고 외교 및 경제감각을 두루 갖춘 미래형 지도자 이미지를 들 수 있다. 정 의원은 오랫동안 무소속 의원을 지낸데다 특별히 누구에게 정치적으로 빚을 진 게 없다.

반면 정 의원의 최대 단점은 재산문제다.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을 1조6979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가족이 3000만 원을 초과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 공직 취임 후 한 달 이내에 주식을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후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선박회사이자 울산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이 서울시장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정 의원은 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며, 최악의 경우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 해도 법대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승부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지고 있다. 단점이 극복되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처럼 월급을 받지 않고 서울시정에 전념해 재산문제를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일훈 기자 one@

(9.7*14.8)cm

의 결 번 호	2014지선33
언 론 사	(주)한국경제신문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대표이사 김 기 웅
심의대상기사	한국경제 2014년 2월 8일자 5면 「'새정치신당'으로 물었더니 安신당 지지율 6%P 하락」 제하의 기사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이 공표하거나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정치신당'으로 물었더니…
安신당 지지율 6%P 하락

(전략) 한국갤럽이 지난 3~6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별 지지율이 새누리당 37%, 새정치신당 25%, 민주당 14% 등으로 집계됐다.(후략)



'새정치신당'으로 물었더니 安신당 지지율 6%P 하락

갤럽, 새누리 37%·새정치신당 25%·민주 14%

안철수 무소속 의원(사진)이 이끄는 새정치신당(가칭)의 지지율이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설문조사 분항에서 '안철수 신당'이 아닌 공식 명칭인 '새정치신당'으로 변경한 뒤 나타난 변화라 눈길을 끈다.

한국갤럽이 지난 3~6일 전국만 19세 이상 남녀 121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별 지지율이 새누리당 37%, 새정치신당 25%, 민주당 14%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그동안 '만약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든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새정치신당을 포함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라고 바꿨다.

그 결과 지난 1월에 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1%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새정치신당은 6%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새정치신당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18%포인트 급락한 27%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31%)보다 3%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은 "아직 안 의원 외에는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 새정치신당이 (유력 인사가 많은 민주당과) 대비돼 기존 야권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결집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올라 55%를 기록,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직무를 잘 못하고 있다'는 2%포인트 하락해 35%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것과 관련,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로 인한 대북 관계 개선 기대감과 함께 선거 중립 훼손시 엄단·규제 철폐 등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발언이 이어진 때문이라고 갤럽 측은 분석했다.

이호기기자 hglee@hankyung.com

의 결 번 호	2014지선42
언 론 사	(주)경남일보사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상평동, 경남일보) 대표이사 하 순 봉
심의대상기사	경남일보 2014년 2월 18일자 3면 「洪–朴 '공천권 전쟁' 시작됐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이 공표하거나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洪–朴 '공천권 전쟁' 시작됐다

■ '새누리당 공천=당선' 6·4선거에도 이변 없을 듯
■ 당 후보 적합도 5.8%p 差… 양측 장담하긴 일러

6·4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본보 경남도민 여론조사 결과 경남은 여전히 새누리당의 텃밭임을 실감케 했고 새누리당 소속의 어느 후보가 당 공천권을 획득하느냐가 당선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을 준비중인 홍준표 현 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 간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후략)

洪-朴 '공천권 전쟁' 시작됐다

'새누리당 공천=당선' 6·4선거에도 이변 없을 듯
당 후보 적합도 5.8%p 差… 양측 장담하긴 일러

6·4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본보 경남도민 여론조사 결과 경남은 여전히 새누리당의 텃밭임을 실감케 했고 새누리당 소속의 어느 후보가 당 공천권을 획득하느냐가 당선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을 준비중인 홍준표 현 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 간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 항목에서 홍 지사가 박 전 시장보다 5.8%p 앞서고는 있지만 다소 큰 격차가 아니어서 어느 때보다 박빙의 '공천권 전쟁'이 예상되고 있다.

또 가상대결 구도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인물에 관계없이 상대후보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6월4일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에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조사결과 정당 지지도를 보면 새누리당이 48.7%, 새정치신당(새정치연합) 11.6%, 민주당 11.3%, 통합진보당 1.3%, 정의당 0.7%, 무당층 23.0%로 조사됐다.

안철수 새정치신당이 민주당보다 0.3%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점과 새누리당이 50%를 넘지 못했다는 점이 관심을 끌지만, 새누리당은 타 정당과의 격차가 30%대 이상을 웃돌면서 경남은 여전히 새누리당 텃밭임을 증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새정치신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60% 정도가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 거창 산청 함양 합천 밀양 의령 창녕 함안군 등 서북부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50%를 넘어섰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지도가 타 정당보다 높음에 따라 현재 새누리당 공천을 준비중인 홍준표 현 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놓고 타 정당 후보자들과의 가상대결을 펼친 결과 어느 후보가 나서더라도 큰 격차로 상대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지사와 민주당 김경수,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간 가상대결에서는 홍 지사가 45.4%, 김경수 14.7%, 강병기 3.8%를 기록했고, 박 전 시장과 김경수, 강병기 후보간 대결에서도 박 전 시장이 43.6%, 김경수 15.0%, 강병기 2.0%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누리당 공천 낙점자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후보로는 누가 적합할까.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 조사결과 홍 지사는 34.3%, 박 전 시장은 28.5%로 5.8%p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 진영 모두 공천권 확정을 장담하기는 일러 보인다.

홍 지사는 50대 이상에서, 박 전 시장은 20~3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역별로는 홍 지사의 경우 통합창원시 지역에서만 박 전 시장에게 뒤질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박 전 시장은 타 지역보다는 서부경남지역에서 후보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사실 이번 도지사 선거는 새누리당 공천권자가 누가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면서 "본 선거에 앞서 공천권 획득을 위한 양 진영의 숨막히는 대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의 결 번 호	2014지선76
언 론 사	(주)울산신문사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11층 대표이사 조 희 태
심의대상기사	울산신문 2014년 2월 17일자 3면「여야 시장 예비후보, 인지도 높이기 잰걸음」 2014년 2월 20일자 15면「남구, 가금류 소비촉진행사」 2014년 2월 24일자 3면「울산시장 예비후보 "바쁘다 바빠"」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울산광역시장)와 관련, 여야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사진만 게재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여야 시장 예비후보, 인지도 높이기 잰걸음

6·4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여야 예비후보들은 지난 주말과 휴일을 이용, 인지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았다.(후략)



여야 시장 예비후보, 인지도 높이기 잰걸음

김두겸·이영순·조승수 등 지역 각종 행사 참여 홍보 주력

6·4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여야 예비후보들은 지난 주말과 휴일을 이용, 인지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먼저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주말인 지난 15일 아침부터 각 산악회 산행출발지를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누는 일정을 시작으로 각종 행사장을 순회하고 명함을 건네며 인지도 확산에 주력했다.

휴일인 16일은 중구 성남동의 천사사랑나누기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급식도우미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인 이영순 전 국회의원은 지난 주말과 휴일경 주청소년수련원에서 가진 울산진보연대 수련회에 참석한데 이어 북구지역 주민들을 만나 정책 반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제는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광역시가 돼야 한다"며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식 참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의당 예비후보인 조승수 전 국회의원은 지난 주말 초등학교 동문회 산행에 참석했으며, 주말인 16일은 출판기념회 준비에 시간을 할애했다. 이동욱기자 uslu@

남구, 가금류 소비촉진행사

19일 이진벽 남구청장 권한대행이 남구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류 소비촉진행사에 참석해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후보(전 남구청장) 및 직원들과 삼계탕을 먹고 있다.



남구, 가금류 소비촉진행사 19일 이진벽 남구청장 권한대행이 남구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류 소비촉진행사에 참석해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후보(전 남구청장) 및 직원들과 삼계탕을 먹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

울산시장 예비후보 "바쁘다 바빠"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22일 새벽 공업로타리에서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후략)

울산시장 예비후보 "바쁘다 바빠"

김두겸 등 새벽부터 밤까지 열띤 선거운동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22일 새벽 공업로타리에서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동구 주전동을 방문, 동구야구연합회 개막 경기를 관람한 후 각종 병영테니스클럽 대회와 울산신문사배 전국탁구대회 개회식 등 각종 행사장을 방문, 인지도 높이기에 열을 올렸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공업탑로터리에서 인사를 나누던 도중 승용차 전복사고를 목격하고 급히 달려가 사고수습에 나서 주위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롯데광장에서 열린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와 독도침탈음모 규탄대회에 참석한 뒤 동천체육관을 찾아 울산모비스 대 서울SK의 프로농구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통합진보당 이영순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문대성 복당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이 박사논문 표절로 탈당했던 문대성 의원을 복당시켰다"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해서라도 국회과반은 지키려는 권력의지의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동욱기자 usldu@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울산모비스 대 서울SK의 프로농구 경기 응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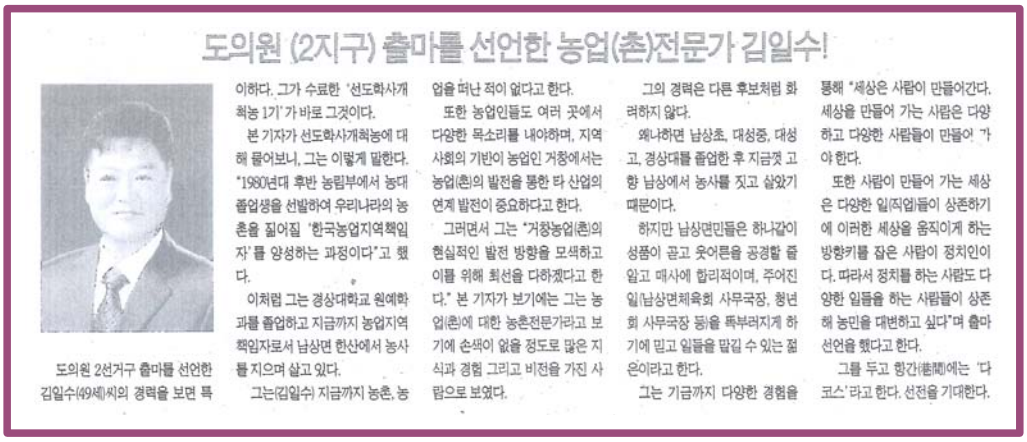
의 결 번 호	2014지선77
언 론 사	주식회사 거창한신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38-1번지 대표이사 백 강 희
심의대상기사	거창한뉴스 2014년 2월 17일자 12면「도의원(2지구) 출마를 선언한 농업(촌)전문가 김일수!」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남도의원)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경력과 지식을 부각하고, '성품이 곧고,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매사에 합리적이며…' 등으로 우호적 평가를 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도의원(2지구) 출마를 선언한 농업(촌)전문가 김일수!

(전략) 남상면민들은 하나같이 성품이 곧고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매사에 합리적이며, 주어진 일(남상면체육회 사무국장, 청년회 사무국장 등)을 똑부러지게 하기에 믿고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젊은이라고 한다.(중략)

그를 두고 항간(巷間)에는 '다코스'라고 한다. 선전을 기대한다.



도의원 (2지구) 출마를 선언한 농업(촌)전문가 김일수!

도의원 2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김일수(49세)씨의 경력을 보면 특이하다. 그가 수료한 '선도학사개척농 1기'가 바로 그것이다.

본 기자가 선도학사개척농에 대해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한다. "1980년대 후반 농림부에서 농대 졸업생을 선발하여 우리나라의 농촌을 짊어질 '한국농업지역책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고 했다.

이처럼 그는 경상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농업지역 책임자로서 남상면 한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그는(김일수) 지금까지 농촌, 농업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농업인들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하며, 지역사회의 기반이 농업인 거창에서는 농업(촌)의 발전을 통한 타 산업의 연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거창농업(촌)의 현실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본 기자가 보기에는 그는 농업(촌)에 대한 농촌전문가라고 보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

그의 경력은 다른 후보처럼 화려하지 않다.

왜냐하면 남상초, 대성중, 대성고, 경상대를 졸업한 후 지금껏 고향 남상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상면민들은 하나같이 성품이 곧고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매사에 합리적이며, 주어진 일(남상면체육회 사무국장, 청년회 사무국장 등)을 똑부러지게 하기에 믿고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젊은이라고 한다.

그는 기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은 사람이 만들어간다.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사람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다양한 일(직업)들이 상존하기에 이러한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방향키를 잡은 사람이 정치인이다. 따라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상존해 농민을 대변하고 싶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한다.

그를 두고 항간(巷間)에는 '다코스'라고 한다. 선전을 기대한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82
언 론 사	주식회사 경주신문사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69 대표이사 김현관, 손동우
심의대상기사	경주신문 2014년 2월 28일자 19면 사설「경북도 국가예산 10조원 돌파」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와 관련하여 현직 단체장의 재임기간동안 국비예산규모가 5배 증액되었다는 시의성이 부족한 내용을 실제보다 과장된 그래프 및 인물사진과 함께 보도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경북도 국가예산 10조원 돌파

경북도의 2014년 지역투자 국비예산 규모가 역대 최고인 10조 2,63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민선 4기 출범시 2조원보다 5배나 증가했고, 지난해 9조 393억원 대비, 13.5%인 1조 2,244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후략)


경북도 국가예산 10조원 돌파 민선 4기 출범 당시 2조원보다 5대 증액

경북도의 2014년 지역투자 국비 예산 규모가 역대 최고인 10조 2,63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민선 4기 출범시 2조원보다 5배나 증가했고, 지난해 9조 393억원 대비, 13.5%인 1조 2,244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그래프 참조)

특히 김관용 도지사가 2006년 취임한 후 이같이 국가예산이 급증한 결과 ▶광역SOC 인프라 구축 ▶미래 첨단과학 산업육성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도청이전 명품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역점으로 추진해온 지역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경북도는 무엇보다 올해 정부 복지예산 확대-반영에 따라 국가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동서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등 66건의 사업에 1,219억원을 반영, 앞으로 총 23조 9418억원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사람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신규사업 예산규모를 보면 ▲동서5축 고속도로(보령-울진) 10억원 ▲신라왕궁(월성) 복원 50억원 ▲울릉공항 및 임주도로 개량 25억원 ▲독도입도지원센터 30억원 ▲대형수리모형 실험시설 2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38억원 ▲2014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15억원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 3억원 ▲차세대 해양수중 글라이더 운영지원센터 조성 5억원 ▲창조 미디어랩 설립 5억원 등이다.

또한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 공약사업을 정부 정책과 연계, 동해안 고속도로 등 11건의 사업에 7,236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창조경제 산업과 문화융합시대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사업은 ▲남북7축(영덕-포항-울산) 고속도 2,523억원 ▲동서5축(봉화-울진) 국도 확장 1,002억원 ▲영천 항공전자 시험평가구축 30억원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1,200억원 ▲3D프린팅 문화·생체관광 기반 조성 987억원 ▲신라왕궁(월성) 및 황룡사 복원 85억원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490억원 등이다.

이밖에 정부예산안에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공조한 결과 경북도 본청-의회 신청사 건립사업 등 93건에 1,60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주요 사업은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건설 200억원(4,013→4,213억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부설 100억원(1,934→2,034억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100억원(1,100→1,200억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30억원(93→123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11개 지구) 128억원(125→253억원) ▲세계군인체육대회 44억원(108→152억원) 등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이병석 국회부의장,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김광림 예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방문해 "경북 SOC는 최소한의 주민 복지인 만큼 SOC예산을 줄이는 것은 경북도민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당부하는 등 300만 도민의 뜻을 전달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관용 도지사는 "300만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지역 균형발전의 큰 틀을 만들어 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문화융성, 창조경제를 활발히 펼쳐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연합
이성원 기자 newsir@naver.com

경북도 역점사업 추진에 박차

국민행복시대 여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의 결 번 호	2014지선88
언 론 사	(주)세계일보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26 대표이사 조 한 규
심의대상기사	세계일보 2014년 3월 10일자 4면 「대형 이슈에 선거판세 출렁…격전지 오차범위 안팎 '접전'」 「與 친박진영, 인천시장 유정복으로 '교통정리'」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타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공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 꼬리 무는 대형 이슈에 격전지 판세 출렁

(전략) 최근 여론조사에서 혼전 흐름이 감지된다. 한겨레신문·리서치플러스가 9일 공개한 여론조사(6~8일 실시) 결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3.7%포인트) 이상 앞섰다. 새누리당 선두주자인 정몽준 의원과는 47.5% 대 39.2%로 8.3%포인트 따돌렸다. 하지만 같은 기관의 5주 전 조사 당시 격차(15.7%)보다는 크게 줄었다. 매일경제· MBN·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여론조사(5~7일 실시)에서도 박 시장(51.8%)이 정 의원(42.9%)을 눌렀으나 지난달 조사때(박 시장 51.7%, 정 의원 39.1%) 보다는 간격이 좁혀졌다.

경기지사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야권 후보를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격차는 좁혀지는 추세로 분석된다. 한겨레신문 조사에서 남 의원(38.5%)은 김 전 교육감(36.7%)을 간발의 차로 따돌렸다. 앞서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3, 4일)에서는 남 의원이 김 전 교육감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남 의원이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해 오름세를 탈지 주목된다.(후략)



세계일보

대형 이슈에 선거 판세 출렁… 격전지 오차범위 안팎 '접전'

박원순 47.5% 대 정몽준 39.2%
지난달 조사 때보다는 간격 좁혀
남경필 출마선언- 경쟁자들 견제
南, 여론조사서 野후보 모두 이겨
野는 증거조작 의혹 정점화 벌려
3대이슈 파괴력 놓고 희견 갈려

6·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대형 이슈가 맞붙라 터지면서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움직임에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권선거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여야 모두 곳곳에 지뢰밭을 깔아 놓은 형국이다.

◆접전 무는 대형 이슈에 격전지 판세 출렁

최근 여론조사에서 혼전 흐름이 감지된다. 한겨레신문-리서치플러스가 9일 공개한 여론조사(6~8일 실시) 결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3.7%포인트) 이상 앞섰다. 새누리당 선두주자인 정몽준 의원과는 47.5% 대 39.2%로 8.3%포인트 따돌렸다. 하지만 같은 기관의 5주 전 조사 당시 격차(15.7%)보다는 크게 좁혔다. 매일경제·MBN·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여론조사(5~7일 실시)에서도 박 시장(51.8%)이 정 의원(42.9%)을 눌렀으나 지난달 조사 때의 박 시장 51.7%, 정 의원 39.1%보다는 간격이 좁혀졌다.

경기지사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야권 후보를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격차는 좁혀지는 추세로 분석된다. 한겨레신문 조사에서 남 의원(38.5%)은 김 전 교육감(36.7%)을 간발의 차로 따돌렸다. 앞서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3, 4일)에서는 남 의원이 김 전 교육감을 10% 포인트 이상 앞섰다. 남 의원이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해 오름세를 탈지 주목된다.

남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자 "경기지사는 등 떠밀려 나온 후보가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문재철 의원), "도민이 원하는 것은 준비된 후보"(정병국 의원)라는 경쟁자들의 견제가 쏟아졌다.

야권에서는 경기지사에 도전한 원혜영 의원이 기자단 오찬에서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진보공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야당 공천 내부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다.

여야 후보 간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종근 의원은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대종공업 및 현대중공업 계열사는 서울시와 최근 5년간 150억원 이상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정 의원의 현대종공업 주식 보유와 서울시장직의 직무 관련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직무 관련성 여부는 시장당선 후 백지타largest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증거조작 의혹·박심 논란·통합신당 효과 예측불허

야권은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국정원장 해임과 직접 도입을 촉구하며 정권에 역공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야권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방선거는 풀뿌리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복잡하면 뇌관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예고했던 이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심(朴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與 친박진영, 인천시장 유정복으로 '교통정리'

(전략) 중앙일보·한국갤럽의 7일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송 시장에게 전패한 가운데 유 전 장관은 37.7%를 얻어 안 전 시장(39.4%)에 1.7%포인트 뒤졌다. 이날 공개된 한겨레신문·리서치플러스의 여론조사에선 송 시장(43.2%)과 유 전 장관(35.2%)의 지지율 격차가 8%포인트로, 송 시장(50.2%)과 안 전 시장(30.9%) 간 차이(19.3% 포인트)보다 훨씬 적었다.(후략)



세계일보

與 친박진영, 인천시장 유정복으로 '교통정리'

이학재 불출마~ 지지 공개 선언
민주 송영길과 빅매치 가능성
안상수 前시장, 朴心 의혹 제기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오른쪽)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지한다고 밝힌 뒤 유 전 장관과 포옹하고 있다. 남재현 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89
언 론 사	(주)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대표이사 이 철 휘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4년 3월 4일자 3면「서울 與 정문준·김황식 흥행몰이…안개 걷힌 野 박원순과 빅매치」 2014년 3월 5일자 25면「통합 청주시 첫 수장 누가 될까 최대 관심」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울, 與 정몽준·김황식 흥행몰이… 안개 걷힌 野 박원순과 빅매치

(전략) 이날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박 시장과 정 의원은 각각 47.7% 대 44.9%의 지지율로 2.8% 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를 보였다.

(중략) 지난달 25일 한국일보 여론조사 양자대결에서는 남 의원이 49.6%로 43.2%의 김 교육감을 조금 앞선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중략) 유 장관은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 46.3% 지지율로 송 시장의 42.4%보다 앞섰다.(후략)



서울신문

서울 與 정몽준·김황식 흥행몰이… 안개 걷힌 野 박원순과 빅매치

6·4 지방선거 대진표 요동

김상곤, 통합신당 후보로 출마 땐

새누리 남경필과 박빙 승부 예상

인천 與 유정복 vs 野 송영길 예고

安, 오거돈에 신당 합류 요청

부산서 與 서병수에 근소하게 앞서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의 '제3지대 신당' 창당 산연으로 6·4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군 대진표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야야가 일대일 구도로 재편된 만큼 새로운 선거 전략을 짜야 할 판이다. 야에 따라 지방선거 판세도 요동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창당준비단을 5대5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후보군 선정 과정은 경선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호남, 부산 등에서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후보군을 정리할지 관심을 모은다. 안 의원 측이 경기와 부산, 호남에서 후보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서울시장 선거가 양자대결로 굳어지면서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 야권에서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표를 잠식하는 야권 후보가 사라졌고, 안 의원의 지원까지 덤으로 얻게 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일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과 오는 14일 귀국해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간 경선을 통해 흥행몰이를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날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박 시장과 정 의원은 각각 47.7% 대 44.9%의 지지율로 2.8% 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를 보였다.

경기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4일 통합신당 후보로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어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과의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전날 저녁 안 의원을 만나 최종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한국일보 여론조사 양자대결에서는 남 의원이 49.6%로 43.2%의 김 교육감을 조금 앞선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통합 신당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한 김진표·원혜영 의원과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천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송영길 인천시장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유 장관은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 46.3% 지지율로 송 시장의 42.4%보다 앞섰다. 다만 유 장관은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이학재 의원과 같은 친박근혜계 후보라는 점에서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부산에서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동합 신당 후보로 출마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오 전 장관과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 전 장관에게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합류할 것을 간곡히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장관도 당초 5일로 예정했던 부산시장 출마 산언을 연기하기로 해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에서 오 전 장관은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많았다. 다만 민주당의 강경춘 전 의원,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의 후보 정리가 필요하다.

호남은 민주당과 안 의원 측 후보의 교통정리가 결실한 지역이다. 전북에서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송하진 전 전주시장, 유성엽 민주당 의원이 역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강 전 장관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안 의원 측이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여잔히 제기된다.

광주시장은 강운태 현 시장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안 의원 측의 윤장대 공동여원장이 여런식으로 경라불지 주목된다.

전남지사 역시 안 의원 측의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민주당의 박지원·이낙연·주승용·김영록 의원과 경선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황비웅 기자 stykid@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통합 청주시 첫 수장 누가 될까 최대관심

(전략)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정구복 영동군수는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다른 지역처럼 현역 프리미엄을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의 지원을 받게 될 새누리당 후보와의 접전이 예상된다. 괴산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는 임각수 군수가 독주하고 있는 양상이다. 여론조사에서 5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 희망자들이 잡음 없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임 군수의 아성에 도전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천시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최명현 시장이, 음성군수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이필용 군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후략)



서울신문

통합 청주시 첫 수장 누가 될까 최대관심

의 결 번 호	2014지선90
언 론 사	(주)한국경제신문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대표이사 김 기 웅
심의대상기사	한국경제 2014년 3월 3일자 3면「지방선거 판세 요동…서울·인천 野 힘받고 경기·부산은 '혼전'」 2014년 3월 4일자 1면「남경필 47.5% 〉 김상곤 40.5%」 6면「野후보 적합도, 김상곤 〉 김진표 〉 원혜영」 2014년 3월 6일자 1면「안희정 50.7% 〉 이명수 35.2%」 6면「與후보 적합도, 이명수·홍문표 '박빙'」 2014년 3월 10일자 1면「충북지사 후보 가상대결 이시종 45.9% 〉 윤진식 42.4%」 6면「與후보 적합도, 정우택 〉 윤진식 〉 서규용」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방선거 판세 요동…서울·인천 野 힘받고 경기·부산은 '혼전'

(전략) 실제 한국경제신문과 글로벌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달 15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으로

실시한 정몽준 새누리, 박원순 시장(민주당), 새정치 연합 후보 간 조사에선 각각 36.1%, 38%, 14.9%로 박 시장이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산술적으로 야권의 지지율을 더하면 50%를 훌쩍 넘는다.

(중략) 지난달 22일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권철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무소속)은 각각 41%, 11.8%, 33.4%의 지지율을 보였다. 권 전 의원과 오 전 장관 간 양자대결에선 43% 대 38.9%로 격차가 훨씬 줄었다.(후략)



한국경제

지방선거 판세 요동 … 서울·인천 野 힘받고 경기·부산은 '혼전'

3자→양자대결 구도로

호남선 '신당공천 = 당선' - 불꽃 경선 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신당 창당에 전격 합의하면서 6·4지방선거는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여야는 기존의 선거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야권 분열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통합 신당의 선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한국경제신문과 글로벌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달 19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으로 실시한 정몽준 새누리, 박원순 시장(민주당), 새정치연합 후보 간 조사에선 각각 36.1%, 38%, 14.9%로 박 시장이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산술적으로 야권의 지지율을 더하면 50%를 훌쩍 넘는다.

지난달 25일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선 3자대결과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선 하지만, 승자가 바뀌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송영길 시장(민주당 소속), 박호군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간 3자대결에서는 황 대표가 41.8%의 지지율로 39.8%인 송 시장보다 2%포인트 앞섰지만, 황 대표와 송 시장 간 양자 대결 때는 송 시장이 3.9%포인트 이겼다.

지난달 22일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권철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무소속)은 각각 41%, 11.8%, 33.4%의 지지율을 보였다. 권 전 의원과 오 전 장관 간 양자대결에선 43% 대 38.9%로 격차가 훨씬 줄었다.

그러나 통합 신당 내부 계파 간 경쟁 양상과 창당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여부에 따라 선거 정국이 더욱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뿐 아니라 경기와 부산 등에서도 민주당 후보와 새정치연합의 후보가 차별화해 경쟁하고 있다.

깜짝 발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면서 메소핫고 있다.

이유진 기자 sweet@hankyung.com

전북지사의 경우 민주당에선 유성엽 의원과 송하진 전 전주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강봉균 전 의원이 출마가 유력하다. 전남지사의 경우 민주당에선 이낙연, 주승용, 김영록 의원이 뛰어들었고, 새정치연합 쪽에선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주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는 민주당에서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새정치연합 측에선 윤장현 공동위원장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새 정치'에 열광했던 안 의원의 지지층이 기성정당인 민주당과의 통합에 실망해 이탈현상을 보일 경우 이는 민주당과 안 의원 모두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시도 모두에 후보를 내는 것은 물론 "100년 정당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새정치연합이 기성 정당과 합병한 사실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김재후기자 hu@hankyung.com

경기지사 후보 가상 대결…
남경필 47.5% 〉 김상곤 40.5%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간 경기지사 선거 양자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남 의원의 지지율은 47.5%로 김 교육감의 지지율 40.5%보다 7%포인트 앞섰다.(후략)



한국경제

경기지사 후보 가상 대결

VS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 김상곤 경기교육감

남경필 47.5% 〉 김상곤 40.5%

한경·글로벌리서치 조사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간 경기지사 선거 양자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남 의원의 지지율은 47.5%로 김 교육감의 지지율 40.5%보다 7%포인트 앞섰다. ▶관련기사 A6면

한국경제신문과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1일 경기도에 사는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6월4일 치러지는 경기지사 후보자 선호도 조사(유무선 임의 전화걸기 방식, 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3.1%)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남 의원은 지난달 중순까지도 경기지사보다는 원내대표에 출마하길 원한다고 밝혔으나, 최근 들어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부소속인 김 교육감은 지난 2일 통합을 선언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모두 경기지사 후보로 영입하길 원한 인물이었다. 김 교육감은 4일 교육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다른 야권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남 의원과 김진표 민주당 의원 간 양자대결 시 지지율은 각각 47.3%, 37.4%로 9.9%포인트 차이였다. 남 의원과 원혜영 민주당 의원 간 양자대결 시에는 지지율이 각각 48.4%, 34.6%로 13.8%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대훈기자 lee@hankyung.com

한국경제

지방선거 한경·글로벌리서치, 경기지사 후보 여론조사

野후보 적합도, 김상곤 〉 김진표 〉 원혜영

충남지사 후보 가상 대결…안희정 50.7% 〉 이명수 35.2%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 간의 충남지사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각각 50.7%, 35.2%로 나타났다.(후략)



한국경제

2014년 09월 06일 01면 (종합)

안희정 50.7% 〉 이명수 35.2%

충남지사 후보 가상 대결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 간의 충남지사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각각 50.7%, 35.2%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A6면

한국경제신문과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4일 충남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충남지사 선거 후보자 지지율 조사(유무선 임의 전화걸기 방식, 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3.1%)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안 지사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51.8% 대 34.2%),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54.5% 대 31.7%)과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앞섰다.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 충남지사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고르라는 질문에는 이 의원 17.9%, 홍 의원(충남 홍성·예산) 17.5%, 정 전 사무총장 11.7% 순으로 나타났다. 추기영기자 gychu@hankyung.com

(11.4×9.1)cm

안희정(현 지사·민주당) VS 이명수(새누리당 의원)

※한경 글로벌리서치, 충남도민 1000명 대상 전화 조사

한국경제

지방선거 안경·글로벌리서치, 충남지사 후보 여론조사

與후보 적합도, 이명수·홍문표 '박빙'

安 지사, 모든 여권 후보에 10%P 이상 차이 우위

정당지지도는 與 크게 앞서 "친당 창당 반대" 51%

충북지사 후보 가상대결… 이시종 45.9% 〉 윤진식 42.4%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야권 통합신당 후보로 출마 가정)가 충북지사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각각 42.4%, 45.9%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한국경제

2014년 09월 10일 01면 (주식)

이시종 45.9% 〉 윤진식 42.4%

충북지사 후보 가상대결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야권 통합신당 후보로 출마 가정)가 충북지사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각각 42.4%, 45.9%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A6면

한국경제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8일 충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 임의 전화걸기(ARS/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49%)은 이 지사(44%)와의 가상 대결에서 우위를 보였으나 불출마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에서 막판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호기기자 hglee@hankyung.com

(11.4×9.7)cm

이시종(현 지사·야권통합신당) VS 윤진식(새누리당의원)

※한경 글로벌리서치, 충북도민 1000명대상 전화조사

한국경제

지방선거 안경·글로벌리서치, 충북지사 후보 여론조사

與후보 적합도, 정우택〉윤진식〉서규용

'접전' 이시종-윤진식 '리턴매치' 가능성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가 2배 높아

의 결 번 호	2014지선91
언 론 사	국민일보(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대표이사 최 삼 규
심의대상기사	국민일보 2014년 3월 8일자 5면 「너무 느긋한 '추격자' 김황식 역전 가능할까」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너무 느긋한 '추격자' 김황식 역전 가능할까

(전략)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에서 정 의원은 43.0%의 지지를 얻었으나 김 전 총리는 13.7%에 불과했다. 정 의원이 29.3% 포인트 차로 김 전 총리를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6.5%를 얻었다.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가 ±3.5% 포인트였다. 앞서 지난달 10~11일 실시된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31.7%를 얻었고 김 전 총리는 28.0%를 기록했다. 격차는 불과 3.7%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었다. 이 조사는 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3.5% 포인트였다.(후략)

국민일보

2014년 01월 08일
01면 (종합)

너무 느긋한 '추격자' 김황식 역전 가능할까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정몽준 월등
"한 달 가까이 美 머물며 때를 놓쳤다" 우려도

너무 느긋한 추격자가 있다. 김황식(사진) 전 국무총리 얘기다. 그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달 11일 출국한 김 전 총리는 여전히 미국에 머물고 있다. 김 전 총리는 14일 귀국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여권 주변에서는 "선거는 초반 기세가 중요한데 김 전 총리가 경쟁자들에 비해 너무 늦게 출발한다"며 "미국에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몽준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미 출마선언을 마치고 경선에 대비해 표밭을 분주하게 다지고 있다. 정 의원은 7일 서울 군자차량기지를 방문했고 경쟁자인 이혜훈 최고위원의 서울시장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와 서울시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2일 출마선언을 한 뒤 선거운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의원은 비공개로 새누리당의 서울시 원내외 당협위원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핑 위에서 몸을 풀고 있는데 김 전 총리는 여전히 핑 밖에 있자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에서 정 의원은 43.0%의 지지를 얻었으나 김 전 총리는 13.7%에 불과했다. 정 의원이 29.3% 포인트 차로 김 전 총리를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6.5%를 얻었다.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가 ±3.5% 포인트였다. 앞서 지난달 10~11일 실시된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31.7%를 얻었고 김 전 총리는 28.0%를 기록했다. 격차는 불과 3.7%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었다. 이 조사는 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3.5% 포인트였다.

서로 다른 여론조사를 단순 비교할 경우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에서 정 의원과 김 전 총리의 지지율 차이는 한 달 만에 25.6% 포인트나 더 벌어진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원이 출마선언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동안 김 전 총리는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며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당협위원장 확보에서도 김 전 총리가 밀린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당내 경선에선 당협위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당협위원장을 경쟁자보다 빨리 만나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며 "김 전 총리가 귀국하면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게 시작한 만큼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총리 측은 민생을 강조하기 위해 재래시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는 방안과 정공법으로 당사에서 출마선언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131.3×10.9cm

의 결 번 호	2014지선92
언 론 사	(주)매일경제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대표이사 장 대 환
심의대상기사	매일경제 2014년 3월 1일자 5면「남경필, 경기지사 출마하나」 2014년 3월 3일자 5면「유정복, 인천시장 도전한다」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남경필, 경기지사 출마하나

(전략) 남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한국일보 · 코리아리서치 조사(지난달 22~23일 700명 대상)에 따르면 남 의원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새정치연합 후보로 가정)과 대결에서 43%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교육감은 28.1%, 김 의원은 21.3%였다. 또 새누리당 후보 선호도에서 남 의원은 51.8%로 원유철(13.3%) 정병국(9.8%) 의원을 앞섰다.

남경필, 경기지사 출마하나

"가능성 열려있다…내주 표명할것"
여론 지지율 김진표·김상곤 앞서



경기지사 출마를 당에서 권유받아 온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차기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히며 경기지사 출마에 선을 그었던 입장이 변화한 것이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불출마 여부를 다음주에 밝히겠다"면서 "5선 의원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 새누리당 뜻에 부합하는 일이 어떤 역할일지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 가능성이 열렸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가능성을 닫지 않고 오늘 임시국회가 끝나면 많은 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또 "늦지 않은 시기에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판단하게 됐다"면서 "지도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달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 측 관계자는 "이전보다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뀐 게 사실"이라며 "다음주 수요일(3월 5일)을 넘기지 않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다음주 방송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독일로 출국하려면 계획을 방송국과 상의해 연기했다. 이 관계자는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방송 촬영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 입장 변화는 당 안팎의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당내에서 중진 차출론 대상으로 자신이 거론되고 기존 주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당의 요구가 높은데 끝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고수하면 자칫 경기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불리해질 때 남 의원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남 의원은 "정치인들은 민심의 소리에 귀를 닫을 수 없는 것 같다"면서 "아예 안 한다고 처음부터 문을 닫는 건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지난달 22~23일 700명 대상)에 따르면 남 의원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새정치연합 후보로 가정)과 대결에서 43%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교육감은 28.1%, 김 의원은 21.3%였다. 또 새누리당 후보 선호도에서 남 의원은 51.8%로 원유철(13.3%) 정병국(9.8%) 의원을 앞섰다.

이상훈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도전한다

(전략)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지율이 송영길 시장을 앞선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후략)

유정복, 인천시장 도전한다

<안정행정부 장관>



5일께 장관직 사퇴할듯
청와대와 교감 가능성
3월 부분개각설 재부상

핵심 친박계로 꼽히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한다. 현직 장관 가운데 첫 '차출'로 향후 여권의 선거 구도와 지방선거전 '부분 개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일 새누리당과 안행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인천시장 출마를 사실상 결심하고 3~4일 이틀간 휴가를 냈다. 1년 전 취임한 유 장관이 휴가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출마선언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6일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 장관은 4·5일께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그간 새누리당에서 출마를 권유받아 왔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가 출마를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송영길 시장에 맞설 마땅한 대항마가 없었고, 제물포고를 졸업한 유 장관은 여권이 꺼낼 수 있는 최적의 카드로 꼽혀 왔다.

김포시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데다 관선 시절 인천 서구청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지율이 송영길 시장을 앞선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에 합의한 직후 유 장관의 결심이 섰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대표이던 시절 5년간 비서실장을 지낸 유 장관은 '친박' 핵심이자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그동안 "자리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고, 현재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말로 출마를 완곡히 고사해 왔다. 실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 장관은 이달 중순 예정된 아프리카 출장을 준비했다.

하지만 야권이 신당 창당에 합의하고 여권에서도 정몽준 의원이 서울에, 남경필 의원이 경기도에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선거 구도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개각이 없다고 강조해 왔지만 유 장관 출마로 개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인사 폭이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주변에선 '이르면 3월 부분개각설'이 또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경제팀도 교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상훈·박만원 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93
언 론 사	(주)뉴스포스트 서울시 중구 중림동 500번지 디오센터빌딩 3층 대표이사 강 중 구
심의대상기사	뉴스포스트 2014년 2월 23일자 2면 「인천시민, 안정과 새 경쟁력 놓고 '갈등'」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천시민, 안정과 새 경쟁력 놓고 '갈등'

(전략)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영길 시장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49.8%대 28.5%로 나타나 이 의원을 21.3%p 격차로 따돌렸다. 송 시장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49.4%대 32.4%로 안 전 시장을 17%p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영길 시장과 안상수 전 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 54.6%대 26.8%로 나타나 27.8%p로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영길 시장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는 54.0%대 25.2%로 28.8%p로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는 45.2%대 40.5%로 나타나 4.7%p 격차를 보였다.(후략)



인천시민, 안정과 새 경쟁력 놓고 '갈등'

6·4 지방선거 가격적 관전 포인트 ③

인천시장편

포토에세이

내란음모 혐의 '징역 12년'

국회 UN SDG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항할 새누리당 후보는?

송영길 시장 아성에 새정치연합 후보 3차대결 가능성

새누리당, 인천시와 '루원시티' 사업 타당성 놓고 설전

奧 황우여 대표 '중전 차출론' VS 野 원직 프리미엄 송 시장

NEWS POST 뉴스포스트

의 결 번 호	2014지선94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3(인계동) 대표이사 임 재 율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4년 3월 3일자 1면「파주 이인재, 압도적 우세」 2014년 3월 4일자 1면「유정복, 시장 출마 결심… 선거판 요동」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파주 이인재, 압도적 우세

중부일보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파주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이인재 파주시장이 여유있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월28~3월1일 양일간 파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임의 번호 걸기) 방식으로 실시됐다. 최대 허용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다.



파주 이인재, 압도적 우세

파주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 (단위: %)

새누리 민주

6·4지방선거 D-93
중부일보-리얼미터
파주시장 선거 여론조사

선거특별취재반

새누리 지지도 1위 조병국
李시장과 1대1서 박빙 추격
정당지지도 새 52%·민 18%

중부일보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파주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이인재 파주시장이 여유있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 예비후보 5명과의 1대1 가상대결에서도 오차범위 안팎에서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새누리당 소속 김의웅 중앙당 기독교위원회 위원장, 박재홍 전 파주시 기획행정국장, 이용근 전 삼성제일모직 사업본부장, 이재홍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조병국 경기도당 부위원장 5명과 이인재 시장 6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관련기사 2면

여야 후보지지도에서는 이 시장이 38.1%를 얻어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21.7~33.6%p 격차를 벌리며 압도했다. 조병국 16.4%, 박재홍 13.6%, 이재홍 10.4%, 이용근 6.9%, 김의웅 4.5% 순이었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0.2%였다.

새누리당 후보 지지도는 조병국 21.6%, 박재홍 15.2%, 이재홍 10.9%, 이용근 5.4%, 김의웅 4.1%순이었다. 다만,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42.8%로 당해 아직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계층이 새누리당 공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의 맞대결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실시한 가상대결 결과에서도 이 시장이 새누리당 예비후보 모두에게 우위를 점했지만, 지지율 격차는 좁혀졌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지지도 1위인 조병국-이인재 가상대결에서는 조 부위원장이 41.1%를 얻어, 43.5%를 얻은 이 시장을 오차범위 내까지 추격했다. 박재홍(39.1%)-이인재(47.8%), 이재홍(33.6%)-이인재(47.0%), 이용근(25.7%)-이인재(53.8%), 김의웅(26.3%)-이인재(53.1%) 순으로 지지율 격차는 벌어졌다.

여야 후보지지도와 가상대결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당지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주지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52.1%, 민주당 18.1%, 통합진보당 8.4%, 새정치연합 6.9%, 정의당 2.0% 순이었다.

이인재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평가가 52.2%(매우 잘한다 19.6, 잘한다 32.6%)로, '잘못한다'는 평가 26.3%(잘못한다 16.0%, 매우 잘못한다 10.3%)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잘모름·무응답은 21.5%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월28~3월1일 양일간 파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임의 번호 걸기) 방식으로 실시됐다. 최대 허용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다.

유정복, 시장 출마 결심… 선거판 요동

(전략) 유 장관은 인천 출신에다 초·중·고교를 모두 인천에서 졸업하고 고위 공직과 행안부장관 등을 역임해 행정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3선 국회의원으로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유 장관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 지지율을 앞서기도 했다.(후략)



중부일보

2014년 03월 04일 01A면 (종합)

유정복, 시장 출마 결심… 선거판 요동

6일 전까지 장관 사퇴 동시에 출마 선언할듯

이진호기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을 창당키로 한 가운데 차출 압박에도 선뜻 나서지 않던 새누리당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천 지방선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3일 새누리당을 비롯,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는 6. 4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3~4일 이틀간 휴가를 내고 새누리당 주요 인사를 접촉해 의견을 듣는 등 사실상 출마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되는 출마 요청과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오늘 아침 휴가를 신청했다"면서 "휴가에서 돌아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오는 5일 사퇴와 동시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정되며 이번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기한인 6일 전까지 현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현직 장관 가운데 첫 '차출'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유 장관의 출마 결심은 현직 프리미엄을 안은 민주당 송영길 현 시장에 맞설 인물이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차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인천 송림초등학교, 선안중학교, 인천제물포고등학교, 연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유 장관은 1979년 행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기획담당관, 인천 서구청장, 김포군수, 김포시장, 17·18·19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거쳐 안전행정부 장관을 맡고 있다.

유 장관은 인천 출신에다 초·중·고교를 모두 인천에서 졸업하고 고위 공직과 안행부 장관 등을 역임해 행정 능력을 인정 받으면서 3선 국회의원으로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장관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 지지율을 앞서기도 했다.

유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새누리당 인천시장 출마 예정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이학재 의원 등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유 장관의 시장 선거 출마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유 장관이 차출되더라도 기존 경선을 통한 시장 후보 선출이라는 당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도 이날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현 송영길 시장과의 선의의 경쟁을 예고했다.

(25.3×10.0cm)

의 결 번 호	2014지선95
언 론 사	(주)충남일보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16번길 32-4 (오류동 2,3층) 대표이사 전 재 철
심의대상기사	충남일보 2014년 3월 6일자 1면「지방선거, 요동치는 판세 與 우위속 野신당 맹추격」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방선거, 요동치는 판세 與 우위속 野신당 맹추격

■ 野신당 최대 10%p↑ '혼전' 예상
■ 여론조사결과 대부분 오차범위내
■ 전문가들 "중반이후 치열" 전망

(전략)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9.3%, 통합신당 29.8%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통합신당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9.9%, 민주당 10.3%, 새정치연합 13.7%로 나타난 결과에 대비해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0.6%p 떨어진 반면, 통합신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단순 합산한 24.0%보다 5.8%p나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무당파는 30.3%에서 22.8%로 7.5%p나 줄어 무당파 가운데 일부가 신당 지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40.6%로 통합신당 박원순 시장(36.9%)을 오차범위(±4.4%p) 내인 3.7%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경향신문 조사의 경기지사 대결에서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35.1%로 통합신당 김상곤 경기도교육감(22.8%)보다 12.3%p 앞선 것으로 나왔다. 남 의원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대결에서는 33.6% 대 23.8%, 원혜영 의원과는 35.8% 대 20.6%로 우세했다.(후략)

충남일보

2014년 03월 06일
01면 (종합)

지방선거, 요동치는 판세 與 우위속 野신당 맹추격

野신당 최대 10%p↑ '혼전' 예상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 오차범위내
전문가들 "중반이후 치열" 전망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를 발표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과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 그래프가 출렁이고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최대격전지인 서울, 경기 등 요충지역의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벌써부터 선거를 앞둔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5일 여야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기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대한 단순 지지율 합계보다 상승세를 타면서 새누리당을 맹추격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당이 긴장속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여야 선거전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제3지대 창당과 무공천 기류가 지역선거판을 뒤흔들면서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대전 · 충남북의 경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갈등변수가 점차 커지고 있어 각 진영의 후보들간 신경전도 커지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통합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현직 장관이나 중진 차출 등을 통해 대반격에 나서고 있어 치열한 선거전의 과열양상조짐마저 나올 전망이다.

▷**초반 여론조사 판세 '흥미진진'**= 서울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등 주요 격전지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앞으로 여야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혼전'이 예상돼 선거국면의 열기가 큰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9.3%, 통합신당 29.8%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통합신당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9.9%, 민주당 10.3%, 새정치연합 13.7%로 나타난 결과에 대비해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0.6%p 떨어진 반면, 통합신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단순 합산한 24.0%보다 5.8%p나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무당파는 30.3%에서 22.8%로 7.5%p나 줄어 무당파 가운데 일부가 신당 지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40.6%로 통합신당 박원순 시장(36.9%)을 오차범위(±4.4%p) 내인 3.7%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다만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군인 김황식 전 총리와 이혜훈 최고위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MBC가 지난달 25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과 정 의원의 양자대결시 박 시장 41.9%, 정 의원 40.7%의 지지율이 뒤집힌 것이다.

경향신문 조사의 경기지사 대결에서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35.1%로 통합신당 김상곤 경기도교육감(22.8%)보다 12.3%p 앞선 것으로 나왔다. 남 의원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대결에서는 33.6% 대 23.8%, 원혜영 의원과는 35.8% 대 20.6%로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각종 조사들은 추세를 반영하는 것인만큼 여야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선거초반, 유동적인 유권자들의 표심 등을 감안하면 우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이르다.

서울 = 김인철 · 한내국 기자 chobj5352@hanmail.net

(14.2×21.5)cm²

의 결 번 호	2014지선96
언 론 사	(주)대전일보사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 대전일보사 대표이사 남 상 현
심의대상기사	대전일보 2014년 3월 6일자 4면「민주-安통합 시너지…지지율 대폭 상승」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安통합 시너지…지지율 대폭 상승

■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 '무당파' 일부 흡수한 듯
■ 새누리엔 여전히 열세

(전략)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40.6%로 통합신당 박원순 시장(36.9%)을 오차범위(±4.4%포인트) 내인 3.7% 포인트 앞섰다. 경향신문 조사의 경기지사 대결에서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35.1%로 통합신당 김상곤 경기도교육감(22.8%)보다 12.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에게 24.5%대 33.4%, 권철현 전 의원에게 22.0% 대 32.6%로 밀렸다.

大田日報
2014년 03월 09일
04면 (정치)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양측 지도부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지도부 연석회의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계안, 윤장현, 김효석, 윤영관, 윤여준, 신경민, 안철수, 김한길, 전병헌, 박호군, 조경태(왼쪽부터). [연합뉴스]

민주-安 통합 시너지…지지율 대폭 상승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무당파' 일부 흡수한듯 새누리엔 여전히 열세

'새누리당 주춤, 야권 신당 뚜렷한 상승세.'

지난 2일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를 발표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과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 그래프가 출렁이고 있다.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기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대한 단순 지지율 합계보다 상승세를 타면서 새누리당을 맹추격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당파'가 움직이는 등 야권 신당 창당 합의에 따른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4일 전국 성인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9.3%, 통합신당 29.8%로 나타났다. 통합신당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21-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9.9%, 민주당 10.3%, 새정치연합 13.7%로 나타난 결과에 대비해서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0.6%포인트 떨어진 반면, 통합신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단순 합산한 24.0%보다 5.8%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무당파는 30.3%에서 22.8%로 7.5%포인트나 줄어 무당파 가운데 일부가 신당 지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내일신문이 야권의 신당창당 합의 발표 직후인 2일 오후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34.3%로 기존 정당구도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단순 지지율 합계(26.6%)보다 7.7%포인트나 올랐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4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40.6%로 통합신당 박원순 시장(36.9%)을 오차범위(±4.4%포인트) 내인 3.7% 포인트 앞섰다. 경향신문 조사의 경기지사 대결에서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35.1%로 통합신당 김상곤 경기도교육감(22.8%)보다 12.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에게 24.5%대 33.4%, 권철현 전 의원에게 22.0%대 32.6%로 밀렸다. [연합뉴스]

(20.6*18.2)cm²

의 결 번 호	2014지선97
언 론 사	음성뉴스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57-8 대표이사 이 규 홍
심의대상기사	음성뉴스 2014년 2월 25일자 1면「지방선거 본격 돌입」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방선거 본격 돌입

(전략) 6·4 지방선거 음성군수 선거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이필용 군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번 통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 도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후략)

지방선거 본격 돌입

21일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등록
정당 공천제 미확정 후보자들 혼란

6·4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과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선거 '룰'은 여전히 오무리중이다. 정치권은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여부와 교육의원 유지 여부, 선거구 확정 등 선거관련 제도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은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ㅠ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이번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음성군내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의원 제2선거구 출마예정인 새누리당 유영삼(44) 새누리당 중부4군 대외협력위원장, 역시 같은 당 이명섭(51) 전 한국농업경영인음성군연합회장 등 2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지지호소 어깨띠 착용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군내 다른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예비후보 등록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비롯해 교육의원 일몰제 유지 여부 등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 관련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의 선거전략 수립에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들은 정당 후보로 예비후보등록을 한 이후 정당공천제 폐지가 확정되면 정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는 데다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에도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일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5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 개혁의 일환으로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상향식 공천제 전면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당 공천제를 반대하는 야권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준위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5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개혁의 출발"이라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처럼 게임의 룰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지방선거 선거전이 본격 점화되는 바람에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선거방식 변화 여부에 따른 선거 전략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필용 군수 선두
충북일보 여론조사

6.4 지방선거 음성군수 선거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이필용 군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일보가 음성군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필용 군수는 46.6%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이어 이기동 전 충북도의회 의장 13.3%, 박희남 전 음성군의회 의장 6.4%, 이건용 전 군수 5.4%, 박한교 강동대 겸임교수 2.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3.3%다.

이번 통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 도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군수가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다는 전제로 진행된 3자 가상 대결에서도 54.2%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특히 이 군수는 타 후보자들과 대결에서 전 연령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 보면 △20대 29.7% △30대 40.1% △40대 54.3% △50대 57.7% △60대 이상 44.9%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이기동 전 도의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는 것을 가정한 3자 대결에서도 여당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의장은 3자 대결에서 43.2%의 지지율을 얻어 박 전 군의장(15.2%)을 28%p 차이로 앞섰고, 박 교수(8.1%)를 35.1%p 로 크게 앞섰다.

연령층별로 보면 △20대 31.6% △30대 28.4% △40대 46.9% △50대 45.2% △60대 이상 54.1%로 전 연령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용 전 군수도 새누리당으로 출마할 경우 지지율 33.6%로 박 전 군의장(19.5%)과 박 교수(8.4%)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층별로 보면 △20대 38.8% △30대 15% △40대 36.3% △50대 39.4% △60대 36.1%로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98
언 론 사	(주)뉴스1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SC빌딩 17층) 대표이사 홍선근 · 이유식
심의대상기사	뉴스1 2014년 3월 5일자 정치면 「요동치는 지방선거 판세…여론조사서 지지율 요동」 2014년 3월 5일자 전국면 「[6.4地選D-90] 인천시장 선거 판세는? 2014년 3월 6일자 전국면」「[6 · 4地選D-90] 경북 예천군수 선거 누가 뛰나 2014년 3월 7일자 전국면」「[6 · 4地選D-89]경북 문경시장 선거 누가 뛰나」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 · 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요동치는 지방선거 판세…여론조사서 지지율 요동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통합신당 창당 선언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정당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6·4 지방선거의 판세가 격동하는 것이다.(후략)

news1

인쇄하기

요동치는 지방선거 판세...여론조사서 지지율 요동

통합신당, 무당파 흡수로 지지율 올랐지만 與 콘크리트 잠백 깰 수 있나

통합 불구 주요승부처서 새누리 후보 앞서...아직 유동적

(서울=뉴스1)김승일 기자
입력 2014.03.05 16:31:06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통합신당 창당 선언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야의 정당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6·4 지방선거의 판세가 격돌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이 합쳐지며 통합 신당의 지지율은 기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단순 지지율 합(合)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후보들의 지지율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민주당 소속 현직 단체장들을 앞서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어 '대혼전' 양상이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율을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새누리당은 42.9%, 통합신당은 39.7%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중앙일보 조사(96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2%P)에서는 새누리당과 통합신당이 40.3%대, 35.9%였고, 지난 2일 리서치뷰 조사(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는 각각 43.3%대 42.1%로 나타났다.

같은 날(2일)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에서는 새누리당 40.0%, 통합신당 34.3%였다.

경향신문이 지난 3~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에서는 새누리당 39.3%, 통합신당 29.8%였다.

한국리서치가 야권의 통합신당 발표 전인 지난 21일~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9.9%, 민주당 10.3%, 새정치연합 13.7%로 나타났었다.

이를 따져 볼 때 민주당과 새정치 연합의 지지율 합산이 24.0%에서 단순 합산에서 통합신당 창당 선언 후 5.8%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지율은 39.9%에서 39.3%로 0.6%P 줄어들어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지지정당 없음은 30.2%에서 22.8%로 7.5%올어들었다. 이로 미뤄 부당층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놓고 저울질 하다 대거 지지정당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 통합신당의 지지율 상승세는 앞으로 통합신당의 창당과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 꺾일 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45%~5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다 야권의 통합으로 인한 지지율 일시 상승은 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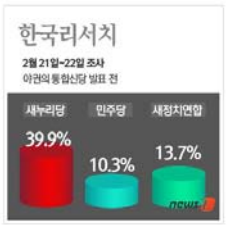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창당선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고, 정당이 만들어진 후에 나오는 조사가 가장 정

하지만 야권 통합신당의 지지율 상승세는 앞으로 통합신당의 창당과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 꺾일 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45%~5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다 야권의 통합으로 인한 지지율 일시 상승은 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창당선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고, 정당이 만들어진 후에 나오는 조사가 가장 정확하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콘크리트로 비유될 정도로 단단한 상황에서 얼마나 야권이 파괴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전국 주요 승부처의 승패 전망도 지금으로서는 섣부르다"며 "아직 각 당의 경선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누가 후보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지도는 출렁 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한편, 컨벤션 효과를 본 듯한 통합신당의 지지율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승부처에서는 치열한 혼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전 조사에서 앞세였던 주자들이 현역 단체장을 앞서는 결과도 나오는 등 예측 불허다.

경향신문 조사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통합신당 박원순 시장이 가상대결했을 때 40.6%대 36.9%로 정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반면 박 시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과 일대일로 대결할 경우 박 시장 36.9% 대 김 전 총리 29.8%, 박 시장 44.5% 대 이 최고위원 24.0%로 모두 앞섰다.

경기지사 선거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35.1%로 통합신당측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22.8%)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가상대결에서도 33.6%대 23.8%로, 원혜영 의원과는 35.8% 대 20.6%로 모두 앞섰다.

부산에서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합신당 후보로 나설 경우 고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과 오 전 장관이 맞대결할 경우 33.4% 대 24.5%. 새누리당 권철현 전 의원과 오 전 장관이 맞대결할 경우 32.6% 대 22.0%로 앞세였다.

하지만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권역별로 새누리당 후보와 통합신당 후보의 지지율을 물은 결과 서울은 37.1%대 47.9%로 통합신당 후보가 앞섰다.

경기는 44.2% 대 40.9%로 새누리당이 앞섰고, 인천에서는 38.9%대 49.3%로 통합신당이 우위였다.

충청은 새누리당, 호남권은 통합신당, TK와 PK는 새누리당, 강원과 제주에서는 여야가 박빙의 혼전을 벌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결과들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후보가 누가 되느냐, 야권다운 경선이 되느냐, 통합 신당 창당이 원활하느냐 등의 변수로 인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6.4地選D-90] 인천시장 선거 판세는?

(전략)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는 '송영길 42.4%, 유정복 46.3%'로 유 전 장관이 우세를,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송영길 33.4%, 유정복 30.9%'로 송 시장이 우세를 보였다.

(중략) 한겨레가 지난 1월2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송 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들과의 2자구도 대결 시 '송영길 49.4, 안상수 32.4%', '송영길 49.8%, 이학재 28.5%'로 여유 있게 앞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news1 KOREA

인쇄하기

[6.4地選D-90] 인천시장 선거 판세는?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입력: 2014.03.05 19:00:34

2강 1중 1약이었던 인천시장 선거 판도가 통합신당 출현으로 2강 1약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인천시장 선거에 예상되는 후보들은 새누리당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학재 의원 등 3명과 연합신당 ▲송영길 시장 ▲문병호 의원 ▲박호군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등 3명,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당 위원장 등 7명으로 압축된다.

이중 송영길 시장과 새누리당 후보가 1:1 구도를 형성할 것이 명약관화한 가운데 약세로 꼽히는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얼마나 많은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다.

송 시장은 각종 언론의 가상대결 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군들과 접전을 벌여 왔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송 시장은 지금껏 가장 강한 상대로 지목됐던 '황우여 카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송 시장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다 연합 신당 창당이라는 컨벤션 효과까지 덤으로 얻으면서 송 시장의 우위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다.

하지만 송 시장의 지지율이 40% 중반 대에 머물러 언제라도 뒤집혀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인천 정계의 한 관계자는 "송 시장의 지지율은 40~45%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1:1 구도에서는 위험한 지지율이 아닐 수 없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의 후보가 확정되고, 지지율이 급상승할 경우 뒤집어 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송 시장과 유 전 장관과의 가상대결에선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는 '송영길 42.4%, 유정복 46.3%'로 유 전 장관이 우세를,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송영길 33.4%, 유정복 30.9%'로 송 시장이 우세를 보였다.

새누리당이 당내 잡음 없이 경선을 통해 유 전 장관을 후보로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의 우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송 시장 측은 유 전 장관보다는 안상수 전 시장이나, 이학재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송 시장 측근은 "새누리당 후보가 누가 되던지 간에 승리할 자신이 있다"면서도 "유 전 장관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지난 1월2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송 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들과의 2자구도 대결 시 '송영길 49.4, 안상수 32.4%', '송영길 49.8%, 이학재 28.5%'로 여유 있게 앞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 · 4地選D-90]
경북 예천군수 선거 누가 뛰나

(전략) 도의원 8년, 군수 4년 등 12년간 행정경

험을 쌓은 이 군수는 최근 지역 언론사에서 벌인 예천군수선거 여론조사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후략)

news1 KOREA 인쇄하기

[6·4地選D-90] 경북 예천군수 선거 누가 뛰나

(대구경북=뉴스1) 채봉완 기자
입력: 2014.03.06 21:51:23



6.4지방선거 경북 예천군수 출마 예상자들. 왼쪽부터 김학동, 이현준, 오창근씨. © News1 /채봉완기자

경북 예천군수 선거전은 이현준 현 예천군수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김학동 전 예천경제인포럼 대표, 오창근 전 예천경찰서장 등 3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 하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들 세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맞붙은 전력이 있어 이번 선거전도 비슷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경북의 정서를 반영하듯 지역의 민심은 '새누리당 공천 결과'에 집중되고 있어 세 후보간 새누리당 공천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군수는 2010년부터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초단체에 뽑힌 것과 2012년 곤충엑스포 성공적 개최 등 지난 4년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 원만한 군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원 8년, 군수 4년 등 12년간 행정경험을 쌓은 이 군수는 최근 지역 언론사에서 벌인 예천군수선거 여론조사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룰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도시와 함께 예천을 동반성장시킬 적임자임을 주장하며 공천을 확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예천군수선거에서 낙선한 뒤 절치부심 해온 김 전 대표는 도청 이전에 따른 능동적 대처만이 예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신도시와 상생발전과 기업유치, 교육여건 개선으로 예천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손 잡고 박근혜대통령을 열심히 도와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오 전 서장은 지난 1월 '우리 모두는 사랑합시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오 전 서장은 중앙부처 인맥을 통해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 중앙무대로 뻗는 예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공천과 관련해 선거법관련 위반자는 경선 사전심사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깨끗한 자신만이 공천받을 적격자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 · 4地選D-89]
경북 문경시장 선거 누가 뛰나

(전략) 201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고 시장은 2년여의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400여억원의 국비 확보와 중소기업 유치 등 시정을 전반적으로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는 앞서 가는 양상이다.(후략)

news1 KOREA

인쇄하기

[6·4地選D-89]경북 문경시장 선거 누가 뛰나

(대구경북=뉴스1) 채봉완 기자
입력: 2014.03.07 16:56:25

경북 문경시장 선거에는 고윤환 현 시장과 신현국 전 시장의 맞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신영진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강명윤 전 문경시직장협의회장 등 4명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201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고 시장은 2년여의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400여억원의 국비 확보와 중소기업 유치 등 시정을 전반적으로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는 앞서 가는 양상이다.

신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5년여의 시장 재임 기간 국군체육부대 유치, 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등을 내세우며 "다시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지역 민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뿌리치고 시장직을 내던진 것과 재임 시절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문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받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네번의 선거를 치른 신 전 시장의 노하우와 고정지지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정서를 감안하면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두번째 도전에 나서는 신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은 젊은 패기를 앞세워 대기업 유치와 인구 20만 도시 조성으로 세 불리기에 한창이다.

신 전 서기관은 지난 시장 보궐선거에서 희망펀드를 도입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명예퇴직한 강명윤 전 문경시직장협의회장은 시정 전반에 관해 높은 이해력과 시민을 위한 시정을 내걸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로 지역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 결 번 호	2014지선99
언 론 사	(주)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율곡로 2길 25 대표이사 송 현 승
심의대상기사	연합뉴스 2014년 3월 5일자 정치면「요동치는 판세…與 격전지 우위속 野신당 맹추격」
주 문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타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요동치는 판세…與 격전지 우위속 野신당 맹추격

■ 野신당 최대 10%p 상승…엎치락뒤치락 '혼전' 예상
■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 오차범위내…추세변화 정도로 봐야

지난 2일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를 발표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과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 그래프가 출렁이고 있다.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기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대한 단순 지지율 합계보다 상승세를 타면서 새누리당을 맹추격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연합뉴스

송신세 | 홈닫기

요동치는 판세…與 격전지 우위속 野신당 맹추격



국기에 경례하는 민주-새정치
(서울=연합뉴스) 희재구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위원장(왼쪽) 등 양측 지도부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野신당 최대 10%p 상승…업치락뒤치락 '혼전' 예상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 오차범위내…추세변화 정도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새누리당 주춤, 야권 신당 뚜렷한 상승세.'
지난 2일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를 발표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과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 그래프가 출렁이고 있다.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기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대한 단순 지지율 합계보다 상승세를 타면서 새누리당을 맹추격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당파'가 움직이는 등 야권 신당 창당 합의에 따른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현직 장관이나 중진 차출 등을 통해 대반격에 나서고 있고, 선거 초반전이라 야권의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서울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등 주요 격전지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앞으로 여야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혼전'을 벌여나갈 전망이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4일 전국 성인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9.3%, 통합신당 29.8%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통합신당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21~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9.9%, 민주당 10.3%, 새정치연합 13.7%로 나타난 결과에 대비해서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0.6%포인트 떨어진 반면, 통합신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단순 합산한 24.0%보다 5.8%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무당파는 30.3%에서 22.8%로 7.5%포인트나 줄어 무당파 가운데 일부가 신당 지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내일신문이 야권의 신당창당 합의 발표 직후인 2일 오후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34.3%로 기존 정당구도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단순 지지율 합계(26.6%)보다 7.7%포인트나 올랐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40.0%로 나타났다.

기존 정당구도 하에서의 지지율은 새누리당 38.8%, 민주당 13.1%, 새정치연합 13.5%로 조사됐다.

통합신당에 대한 뚜렷한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40.6%로 통합신당 박원순 시장(36.9%)을 오차범위(±4.4%포인트) 내인 3.7%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다만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군인 김황식 전 총리와 이혜훈 최고위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MBC가 지난달 25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과 정 의원의 양자대결시 박 시장 41.9%, 정 의원 40.7%의 지지율이 뒤집힌 것이다.

경향신문 조사의 경기지사 대결에서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35.1%로 통합신당 김상곤 경기도교육감(22.8%)보다 12.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다. 남 의원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대결에서는 33.6% 대 23.8%, 원혜영 의원과는 35.8% 대 20.6%로 우세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통합신당 후보로 나올 경우 새누리당에 후보들에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전 장관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에게 24.5%대 33.4%, 권철현 전 의원에게 22.0% 대 32.6%로 밀렸다.

그러나 선거 초반전이서 여야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유권자들의 표심도 유동적이어서 오차범위 내에서 나타난 우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단순한 추세의 변화 정도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100
언 론 사	(주)인천일보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26번지(구 항동4가 18-1번지) 대표이사 정 홍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4년 2월 13일자 18면 「교육·문화·복지 어우러진 '희망 가득' 창조도시로」 2014년 2월 27일자 18면 「대기업 산단 차례로 유치…지속발전 가능성에 날개」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의왕시장, 경기 평택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인터뷰와 기사를 해당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부각하여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교육·문화·복지 어우러진 '희망 가득' 창조도시로

■ 매년 교육지원 예산 확대 학생1인당 투자 道 2번째
■ 전국 최초 철도특구 지정 주변 연계 관광상품 개발
■ 노인복지 많은 관심·노력 경로당 현대화 사업 역점

■ 의왕시 김성제 시장 인터뷰

김성제 의왕시장이 민선5기 취임 3년 반 넘는 임기를 보냈다. 김 시장은 그동안 교육과 복지, 도시개발 등에 힘을 쏟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에게 지난 세월의 감회와 성과, 아쉬움 등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들어본다.(후략)


교육·문화·복지 어우러진 '희망 가득' 창조도시로

대기업 산단 차례로 유치… 지속발전 가능성에 날개

■ 평택시 새로운 100년 꿈군다

평택시(시장 김선기)가 지난해 삼성전자 산업단지 착공. LG전자 산업단지 확장 유치. 고덕신도시 1단계 공사 착공 등 대규모 사업을 벌이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시는 2014년을 맞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첨단산업도시, 교통·무역·물류도시, 전원환경농업도시, 지구촌문화도시 기반과 함께 교육·복지·문화도시, 지속발전 가능도시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꿈꾸는 평택시가 펼쳐나가는 사업을 살펴본다.(후략)



대기업 산단 차례로 유치…지속발전 가능성에 날개

삼성·LG 산업단지 조성 순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올해 착공
고덕신도시 2차개발 조기진행

권역별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평택농악 유네스코 등재 추진

평택시 새로운 100년 꿈군다

"사업성과 지역 파급 주력…명실상부 명품도시로"

의 결 번 호	2014지선109
언 론 사	경북일보(주)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93 대표이사 한 국 선
심의대상기사	경북일보 2014년 3월 10일자 3면「김항곤 현 군수 독주에 이수열 · 오근화 각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성주군수)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유리한 기사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항곤 현 군수 독주에 이수열 · 오근화 각축

(전략) 김 군수는 역대 군수중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비확보는 김 군수를 따를 자가 없다. 군 발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다소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군내 최대 문중인 김해김씨 종친회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고 있다.(후략)



경북일보

2014년 03월 10일 03면 (정치)

김항곤 현 군수 독주에 이수열·오근화 각축

이수열 전 주민복지실장, 선전 여부따라 양자대결 구도 가능 할 듯

6·4 지방선거 누가 뛰나 ▮성주군수

성주군은 4년간 무난히 군정을 이끌고 재선을 노리는 현 김항곤 군수(63)와 군 행정에 잔뼈가 굵은 토박이 이수열 전 성주군 주민복지실장 간의 양자대결 구도다. 여기에 오근화 전 성주군의원이 최근 출마를 결정,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김 군수는 역대 군수중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비확보는 김 군수를 따를 자가 없다. 군 발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다소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군내 최대 문중인 김해김씨 종친회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고 있다.

예산 3천억원 시대를 연 김 군수는 1·2차 산단 조성으로 연간 세수 100억원 확충, 일자리 1만여개 창출, 독창적인 생명문화 콘텐츠 개발 등으로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비도 450억원이나 확보하는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며 재선을 향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군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다"며 "'클린성주 만들기'를 '친환경 농촌 만들기' 전국 시범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고, 세종대왕자 태실과 생명문화의 세계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항곤

오근화

이수열

기나다순

성주에서 태어나 성주군에서 잔뼈가 굵은 이수열 전 주민복지실장(57)은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산 이씨 문중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전 실장은 37년간의 공직경험을 토대로 전통시장 현대화, 농·축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 지원 등으로 전국 제1의 부자 군(郡)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바닥 민심부터 차근차근 다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체계를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다문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빈곤 탈출 지원,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행복한 생활 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천~진주간 철도노선 조기 착공, 대구지하철 성주연장을 통한 위성도시 육성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근화 전 성주군의원(62)은 두 번의 군수선거 낙선에도 불구, 낙후된 군을 좀 더 공업화되고 근대화된 도농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재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당공천 제도는 백해무익하다"며 "무소속으로 당선돼 성주군민의 뜻을 소신있는 행정으로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상 기자

(25.8×13.9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13
언 론 사	유한회사 완주군민신문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대표이사 김 상 곤
심의대상기사	완주군민신문 2014년 3월 12일자 3면 「"당신이 있어 지난 8년 완주는 행복했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 전주시장)의 예비후보인 전 자치단제장(전북 완주군수)의 재임기간동안의 성과를 우호적으로 평가한 독자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당신이 있어 지난 8년 완주는 행복했습니다"

(전략) 돌이켜보면 민선4기와 5기 완주의 지난 8년은 주민중심형 사회적경제를 정착시키는 시간들이었다. 로컬푸드가 그 대명사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중략) 지난 3일 임 전 군수는 7년 8개월간의 군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전주시장 후보로의 도전을 시작했다.

그의 지난 8년여 간의 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폄하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했지만, 로컬푸드처럼 그가 이뤄낸 성과만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

(중략) 오는 6월 4일 우리 완주는 또 다른 지도자를 만나게 된다. 임 전군수보다 더 나은 지도자를 만날 수도, 그렇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변방의 완주를 중심에 서게 한 임정엽 전군수에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당신이 있어 지난 8년 완주는 행복했습니다"

지난 해 11월쯤이었던 같다. 이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가, 당시 이탈리아 볼로냐에 대한 지식이 얕아서인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볼로냐는 유럽의 이탈리아 중북부에 위치한 에밀리아로마냐주의 대표 도시로 큰 규모의 개별 협동조합이 잘 이뤄진 사회적경제의 상징이 되고 있는 도시였다.

이런 도시에 완주군이 빗대졌다니 완주군민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도 더 갖게 된 계기가 됐다.

돌이켜보면 민선4기와 5기 완주의 지난 8년은 주민중심형 사회적경제를 정착시키는 시간들이었다. 로컬푸드가 그 대명사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시작 초기인 5년여 정만해도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너무 적었고,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매장에 직접 진열하고, 이를 판매로 연결해 도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하며 우려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짙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월급 받는 농부의 시대를 연 완주군표 로컬푸드는 전국적 열풍을 일으켰고, 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뜻을 같이해준 주민이 있었고, 전사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교육시키는 데 앞장선 완주군 공무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인 임정엽 전 군수가 있었다.

지난 3일 임 전 군수는 7년 8개월간의 군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전주시장 후보로의 도전을 시작했다.

그의 지난 8년여 간의 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폄하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했지만, 로컬푸드처럼 그가 이뤄낸 성과만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

그가 떠난 후 많은 군민들이 아쉬워했던 것도 그가 일궈낸 성과들에 대한 고마움, 강력한 추진력, 탁월한 행정력 때문이라고들 한다.

돌이켜보면 그의 행정성과는 비단 로컬푸드뿐만 아니다.

전주시에 사는 한 학부모는 완주군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 이사를 했다고 한다.

이유인 즉 완주군 교육환경이 전주시보다 월등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민선 4·5기 교육예산은 이전보다 20배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해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원어민 영어, 중국어, 바이올린 등을 부담없이 배우고 즐길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은 로컬푸드와 교육과, 복지,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등 굵직한 주민중심 정책을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가예산 확충과 활발한 기업유치 등에 힘입어 지난 해 전국 군단위(84곳) 중 예산 규모 1위를 달성했으며, 최첨단 산업경제 기반구축 등을 통해 지역내총생산 도내 1위와 복지분야에서도 7년 연속 완주군 복지행정 전국 최고 평가를 일궈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임 전군수의 민선5기 공약이행률은 95.2%로 사실상 100%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퍼입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완주에서의 성공경험을 전주로 확산시켜나가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전주와 완주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가 바로 그의 새로운 길을 여는 자신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오는 6월 4일 우리 완주는 또 다른 지도자를 만나게 된다. 임 전군수보다 더 나은 지도자를 만날 수도, 그렇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변방의 완주를 중심에 서게 한 임정엽 전군수에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원천수 (완주군 운주면)

의 결 번 호	2014지선147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3 (인계동, LD그린토피아) 대표이사 임 재 율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4년 3월 31일자 1면「김윤주 독주 속 '1강 · 2중 · 8약' 구도」 2014년 4월 2일자 1면「새누리 김용서 · 박흥석 · 김용남 '초접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군포시장, 경기 수원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 보도 시에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 중 응답률, 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 · 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히고 질문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윤주 독주 속 '1강 · 2중 · 8약' 구도

중부일보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군포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소속 김윤주 군포시장이 22.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지난 28~30일 3일간 군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 (임의 번호 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최대 허용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중부일보

2014년 03월 31일 01면 (종합)

김윤주 독주 속 '1강·2중·8약' 구도

<군포시장>

6·4지방선거 D-65

중부일보-리얼미터 군포시장 선거 여론조사

선거특별취재반·김명철기자

중부일보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군포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소속 김윤주 군포시장이 22.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새정연과 무소속 등 야권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독주했다.

이번 조사는 6·4지방선거 군포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여야 주자들과 새정연 소속의 김윤주 시장 등 모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관련기사 3면

새누리당 소속은 김영재 나눔사회운동가, 박상진 전 군포시 주민자치자문단장, 송용순 새누리당 도당 여성부위원회 부위원장, 최진학 전 경기도의원, 하은호 전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5명이다.

새정연 소속은 김판수 군포시의회 의장, 채영덕 한중문화협회 부총재, 손산 사회정책연구소 부하유 소장과 김윤주 시장 4명이고, 무소속은 송재영 전 군포시의원, 정인환 협성대 교수 2명이다.

여야 주자들의 단순 지지율만 놓고 보면 '1강 2중 8약'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김 시장에 이어 새누리당 최진학(15.8%), 하은호(14.0%) 예비후보가 2위 자리를 놓고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김 시장과 두 예비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각각 6.7%p, 8.5%p였다. 2위권을 뒤쫓는 송용순(8.9%), 김영재(8.4%), 김판수(5.6%), 송재영(4.2%), 박상진(2.6%), 채영덕(2.5%), 손산·정인환(1.3%)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9%였다.

최진학·하은호·송용순 새누리 후보 지지도 '3파전' 야권선 金시장 30.7% '압도'

새누리당 후보 지지도에서는 최진학(18.6%), 하은호(16.0%), 송용순(13.0%) 예비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김영재(8.0%), 박상진(6.7%)는 약간 뒤쳐져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7.7%에 달해 판세가 요동칠 여지도 남았다.

야권 후보 지지도에서는 김 시장이 30.7%를 얻어, 경쟁 주자들을 압도했다. 김판수 예비후보가 12.1%로, 두자릿 수 지지를 얻었지만, 김 시장과의 격차는 18.6%p에 달했다. 송재영(9.6%), 채영덕(6.6%), 정인환(5.4%), 손산(2.7%)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2.7%로 비교적 높아 역시 판세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지난 28~30일 3일간 군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 (임의 번호 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최대 허용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군포시장 여야후보 지지도

●새: 새누리 ●새정연: 새정치민주연합 ●무: 무소속 (단위: %)

김윤주 (새정연) 22.5
최진학 (새) 15.8
하은호 (새) 14.0
송용순 (새) 8.9
김영재 (새) 8.4
김판수 (새정연) 5.6
송재영 (무) 4.2
박상진 (새) 2.6
채영덕 (새정연) 2.5
정인환 (무) 1.3
손산 (새정연) 1.3
잘모름 12.9

(25.7×20.5)cm

새누리 김용서 · 박흥석 · 김용남 '초접전'

중부일보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수원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주자 4명 중 김용서 · 박흥석 · 김용남 3명의 예비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수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 (임의 번호 걸기) 방식으로 실시됐다. 최대 허용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중부일보

2014년 04월 02일
01면 (종합)

새누리 김용서·박흥석·김용남 '초접전'

<17.7%> <15.7%> <12.9%>

6·4지방선거 D-63 중부일보-리얼미터 수원시장 선거 여론조사
중부일보 - 주간중부 공동보도

선거특별취재반·남궁진기자

중부일보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수원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주자 4명 중 김용서·박흥석·김용남 3명의 예비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야 주자 지지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여유 있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염 시장은 새누리당 예비후보 4명과의 1대1 가상대결에서도 모두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6·4지방선거 수원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새누리당 김용남 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수원 공동선대위원장·김용서 전 수원시장·박흥석 전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홍보네트워크 위원장·최규진 전 경기도의원, 새정연 염태영 수원시장, 통합진보당 임미숙 수원당원협의회장, 무소속 이대의 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관련기사 3면

부동층 46.3% 달해… 판세 '변수'

염 시장과 1대1 가상 대결선
與 예비후보 4명 모두 뒤져

새누리당 후보 지지도는 김용서 17.7%, 박흥석 15.7%, 김용남 12.9%, 최규진 7.4% 순이었다. 1, 3위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4.8%p였지만, 1, 2위와 2, 3위간 격차는 각각 오차범위 내인 2.0%p와 2.8%p에 불과했다. 특히 야야 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들 3명의 순위가 뒤바뀌는 등 판세를 예측하기 힘든 혼전 양상이다. 다만,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무려 46.3%에 달해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야야 후보 지지도에서는 염태영 시장이 29.6%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2위를 기록한 김용남(17.2%) 예비후보와의 격차는 12.4%p에 달했다. 박흥석 12.9%, 김용서 7.6%, 최규진 5.4%, 이대의 4.3%, 임미숙 2.9%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1%였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예선과 본선 경쟁력이 큰 차이를 보인 점이다.

당내 경쟁력에서 1, 3위를 차지했던 김용서, 김용남 두 예비후보가 본선 경쟁력 조사에서는 자리를 맞바꿨다. 특히 김용서 예비후보의 경우 지지율이 10.1%p나 빠졌다. 새누리당 주자들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흐름은 유력한 야권 시장 후보인 염태영 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염태영(46.1%) 대 김용남(41.6%)의 격차는 4.5%p에 불과했지만, 염태영(48.9%) 대 김용서(33.9%)는 15.0%p로 벌어졌다. 염태영(45.1%) 대 박흥석(36.1%)은 9.0%p, 염태영(47.5%) 대 최규진(31.6%)은 15.9%p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수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임의 번호 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최대 허용 표준오차는 95%

수원시장 새누리당 후보 지지도

(단위: %)



(25.3×16.1)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56
언 론 사	㈜시사저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02 대표이사 심 상 기
심의대상기사	시사저널 2014년 4월 1일~4월 8일자 36면 「남경필 vs 정병국, 김상곤 vs 원혜영 동지는 간데없고 적으로 으르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남경필 vs 정병국, 김상곤 vs 원혜영

동지는 간데없고 적으로 으르렁

(전략)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남 후보가 절대

우세다. 3월 25일 CBS의 여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남경필 후보 27.7%, 정병국 후보 5.5%, 원유철 후보 4.1% 등으로 나타났다. 3월 23일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도 남 후보 31.7%, 정 후보 6.6%, 원 후보 5.4%, 김영선 후보 5.3% 등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새누리당 공천 향방을 대충 짐작하게 한다. 때문에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후보 단일화 얘기가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남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탓에, 2~4위 후보인 정병국·원유철·김영선 3인이 연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남 후보와 정 후보는 이 가능성에 대해 모두 고개를 흔든다. 정 후보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고 밝혔고, 남 후보도 "정 후보와 당당하게 경선하자는 쪽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후략)



남경필 vs 정병국, 김상곤 vs 원혜영
동자는 간데없고 적으로 으르렁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새신파 등지 '40년 지기' 송부



의 결 번 호	2014지선157
언 론 사	주식회사 목포시민신문 전남 목포시 옥암로 27(상동) 2층 대표이사 유 용 철
심의대상기사	목포시민신문 2014년 4월 2일자 1면「목포시장후보 8명 난립 … 4강 4약 변화조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목포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목포시장후보 8명 난립 …
4강 4약 변화조짐

(전략) 본사가 한길리서치와 함께 지난해 12월 5일 실시했던 목포시장 입지자 여론조사에서 이상열(17.2%), 박홍률(6.8%), 홍영기(5.6%), 배용태(5.2%), 이광래(2.1%) 순이였다.(본사 12월 17일자 보도)

(중략) 지난 3월 2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상열(15.7%), 홍영기(12.3%), 박홍률(11.3%), 배

용태(8.3%), 이광래(6.3%)의 순으로 나타났다.(전남중앙신문 4월 1자 보도)

목포시장 초반 판세는 4명의 예비후보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열 예비후보가 10%대 후반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홍영기, 박홍률, 배용태 예비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이와 함께 이광래, 김종익 예비후보도 하위권 탈출을 위한 선거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후략)



초반 판세 누가 유리하나

목포시장후보 8명 난립…4강4약 변화조짐

예비후보 등록 후 한 달 표심
10%대 지지율 엎치락 뒤치락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목포시장 예비후보들이 선거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한 활동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목포시장 예비후보에 민주계 4명, 새정치연합계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당파 1명 등 8명이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국가정보원 충북지부장을 지낸 박홍률 예비후보를 비롯해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배용태 예비후보, 목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광래 예비후보,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열 예비후보, 경실련 사무처장을 지낸 김종익 예비후보,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홍영기 예비후보, 통합진보당 이승환 예비후보, 목포투데이 사장을 지낸 정태영 예비후보 등이 선거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예비후보 등록일을 기점으로 한 달 넘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훑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유권자들의 눈에 가장 띄는 대형 도로변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선거용 대형 프랑카드를 각자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들은 각종 봉사모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만나 지역경제 어려움을 경청, 각종 행사장을 찾아 유권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의 한 달간의 선거활동의 성적표는 어떨까? 얼마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었을까? 본사가 한길리서치와 함께 지난해 12월 5일 실시했던 목포시장 입지자 여론조사에서 이상열(17.2%), 박홍률(6.8%), 홍영기(5.6%), 배용태(5.2%), 이광래(2.1%) 순이였다.(본사 12월 17일자 보도) 선거활동이 있기 전 조사로 후보들의 인지도 조사에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여 예비후보의 지지도가 도드라져 보였다.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상열 예비후보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상위권을 달렸다. 지난 2월 10일 광주KBC에서 실시한 목포시장 여로조사에서도 이상열(16.4%), 홍영기(10.7%) 순로 나타났다. 그 뒤를 박홍률, 배용태, 이광래가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상열(15.7%), 홍영기(12.3%), 박홍률(11.3%), 배용태(8.3%), 이광래(6.3%)의 순으로 나타났다.(전남중앙신문 4월 1자 보도)

목포시장 초반 판세는 4명의 예비후보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열 예비후보가 10%대 후반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홍영기, 박홍률, 배용태 예비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이와 함께 이광래, 김종익 예비후보도 하위권 탈출을 위한 선거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이상열 예비후보의 초반 지지세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박홍률, 배용태, 홍영기 예비후보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예비후보의 지지세가 답보상태인 반면 배용태, 홍영기, 박홍률 예비후보들의 지지세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팽팽질 선거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시장 A예비후보는 "선거 초반 예비후보들의 선거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선두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며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선거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반 지지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3면에 이어짐

유응철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158
언 론 사	㈜한국경제신문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대표이사 김 기 웅
심의대상기사	한국경제 2014년 4월 8일자 6면 「鄭 43.8% vs 朴 42.7% … 서울도 '혼전속으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부산광역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鄭 43.8% vs 朴 42.7% … 서울도 '혼전속으로'

6·4 지방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의 최대 승부처이자 거물급 후보 간 '빅매치'가 예고된 수도권 지역 가운데 서울과 인천에서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통적 여당 텃밭인 부산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선 오거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한국경제
2014년 04
06일

鄭 43.8% vs 朴 42.7% … 서울도 '혼전속으로'

〈정몽준〉 〈박원순〉

지방선거 '수도권 초박빙' YTN·엠브레인 조사

인천 유정복 40 : 송영길 45 – 경기 남경필 우세
부산 권철현·오거돈 '접전' – 충청은 野 앞서

6·4 지방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의 최대 승부처이자 거물급 후보 간 '빅매치'가 예고된 수도권 지역 가운데 서울과 인천에서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통적 여당 텃밭인 부산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선 오거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인천 '혼전'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박원순 현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YTN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9개 광역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지지율에서는 정 의원이 43.8%로 박 시장(42.7%)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점했다.

박 시장은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총리와의 맞대결에선 51.5% 대 32.9%로 18%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경선 후보별 지지율은 정 의원 44.0%, 김 전 총리 20.1%, 이혜훈 최고위원 5.5% 순이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경기지사 가상대결에서는 남 의원이 모두 우세를 보였다. 김진표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남 의원은 47.6%의 지지율로 김 의원(36.7%)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6·4 지방선거 주요 광역단체 판세 (단위:%)

※조사:YTN 마크로밀엠브레인(4월1일~3일)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무:무소속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정당지지율
정몽준(새) 박원순(민)	남경필(새) 김진표(민)	유정복(새) 송영길(민)	권철현(새) 오거돈(무)	새누리당 40.2 / 새정치민주연합 17.7
43.8 : 42.7	47.6 : 36.7	40.6 : 45.4	43.9 : 44.3	
김황식(새) 박원순(민)	남경필(새) 김상곤(민)	안상수(새) 송영길(민)	서병수(새) 오거돈(무)	
32.9 : 51.5	49.8 : 35.8	39.5 : 47.2	40.7 : 45.6	
1049명 대상 조사, 오차범위 ±3.1%P	1000명 대상 조사, 오차범위 ±3.1%P	733명 대상 조사, 오차범위 ±3.7%P	726명 대상 조사, 오차범위 ±3.7%P	

◆오거돈, 새누리 후보와 '접전'

영남 최대 관심 지역인 부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과 선거 초반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간 접전이 이어졌다. 오 전 장관은 권철현 전 주일대사와의 양자대결에서 44.3% 대 43.9%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서병수 전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오 전 장관은 45.6%로 서 전 의원(40.7%)에게 우위를 보였다.

충남·북에서는 새정치연합 소속 현직 지사들이 여전히 우위를 점했다. 안희정 현 충남지사가 49.8%로 홍문표 의원(31.5%)을 앞섰다. 충북에선 이시종 현 지사가 41.7%로 윤진식 전 의원(38.7%)과 3%포인트 차로 접전을 벌였다.

반면 대전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박성효 의원이 55.7%로 권선택 전 의원(30.4%)과 25% 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제주에선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52.3%로 김우남 새정치연합 후보(32.9%)를 크게 앞섰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24.7×14.4)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59
언 론 사	(주)한국일보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신관 15층 대표이사 박 진 열
심의대상기사	한국일보 2014년 4월 8일자 4면「與 후보들 상승세 … 수도권서 엎치락뒤치락」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충북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與 후보들 상승세 …
수도권서 엎치락뒤치락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남기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 동안 열세에 놓여 있던 수도권 새누리당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수도권 수성 전략을 파고들면서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대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후략)

한국일보

2014년 04월 08일
04면 (정치)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왼쪽부터) 전 총리와 이혜훈 최고위원, 정몽준 의원이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에서 열린 'YTN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 각기 다른 방향을 응시하며 웃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與 후보들 상승세… 수도권서 엎치락뒤치락

|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판세 |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남기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열세에 놓여 있던 수도권 새누리당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수도권 수성 전략을 파고들면서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대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추격전을 벌이던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따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YTN과 엠브레인이 지난 1~3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가상대결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4.2%)에서 정 의원은 43.8%로 박 시장(42.7%)을 오차범위 내(1.1%포인트)에서 리드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에서는 정 의원(47.7%)과 박 시장(42.3%)의 격차가 5.4%포인트 차로 더 벌어졌다.

서울 오차범위 접전 속 정몽준, 박원순에 역전
경기·인천서도 與 우위
충북서도 윤진식 오름세
野는 충남에서 앞서

앞서 한국일보와 코리아리서치가 지난달 23, 24일 서울시민 7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P, 응답률 15.9%)의 경우 박 시장(48.9%)이 정 의원(47.2%)을 1.7%포인트 앞섰다.

인천에서도 새누리당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추격세가 무섭다. YTN-엠브레인이 인천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에 ±3.7%P, 응답률 24.6%)에서 유 전 장관(45.4%)은 새정치연합의 송영길 인천시장(40.6%)을 4.8%포인트 앞섰다. 유 전 장관은 지난달 24, 25일 CBS와 포커스뉴파니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7%P, 응답률 12.9%)에서도 32.3%로 송 시장(30.7%)을 리드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적극투표층의 지지율은 송 시장이 유 전 장관을 3.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혼전세를 보였다.

경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남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 김진표 의원이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리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여야가 각기 대전과 충남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충북에서 새누리당의 추격세가 두드러진다.

YTN-엠브레인이 충북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P, 응답률 38.1%)에서 새정치연합 이시종 충북지사(41.7%)가 윤진식 의원(38.7%)을 3%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지난달 21~23일까지 청주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충북도민 2,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 16.4%)에서 이 지사가 윤 의원을 18.3%포인트 앞섰던 것에 비하면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후보였던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의 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을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악수하고 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이날 박 시장에게 수도권 교통체계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26.0×28.3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60
언 론 사	㈜세계일보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26 대표이사 조 한 규
심의대상기사	세계일보 2014년 4월 8일자 4면「與 서울시장 경선 내일 첫 TV 토론회」 「새누리 경기지사 경선 남경필·정병국 맞대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與 서울시장 경선 내일 첫 TV 토론회

(전략) 정 의원은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46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후보 적합도에서 김 전 총리를 25%포인트 가까이 따돌렸다.(후략)

세계일보

2014년 04월 08일
04면 (종합)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정몽준 의원(왼쪽부터)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신사옥인 YTN뉴스퀘어에서 열린 뉴YTN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기자

與 서울시장 경선 내일 첫 TV토론회

공천관리위 총 4차례 일정 확정
후보간 정책토론회도 세 차례
鄭·金·李 "방어" "반전" "도약"
'3인3색' 토론 전략 마련 부심
鄭, 여론조사 金에 25%P 앞서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새누리당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최대 이벤트인 TV토론 첫회를 9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TV토론회 일정 혼선에 대한 책임론이 서울시당에서 중앙당으로 향하자 공천관리위가 부라부라 나선 결과다. 3명의 예비후보는 잇단 TV토론이 경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과 16일, 21일, 29일 총 4차례에 걸친 TV토론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간 정책토론회는 모두 세 차례(18·23·27일) 실시하며 방송사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선 후보들의 TV토론 노림수는 3인 3색이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정몽준 의원에겐 방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지만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 두 후보를 쫓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지율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감이 있다.

어떻게든 현재 판세를 뒤흔들어야 하는 2위 주자는 후보자 공개검증 무대인 TV토론회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김 전 총리 측 유성식 대변인은 "(7일) TV토론회 무산 사태는 당 경선관리가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전형적 사례"라며 "토론을 무산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정 의원은 비교적 담담히 경선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캠프 차원에서 TV토론 전략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정 의원을 돕는 한 재선 의원은 "정 의원은 TV토론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세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서울 발전 청사진을 각인시킨다면 토론 성적표는 6 대 4 정도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46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후보 적합도에서 김 전 총리를 25%포인트 가까이 따돌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오차범위 안이지만 1.1%포인트 차로 앞섰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7.7%를 얻어 박 시장(42.3%)보다 5.4%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23.1×20.3cm)

새누리 경기지사 경선 남경필 · 정병국 맞대결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이 주도했던 단일화 바람이 새누리당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당 경기지사 경선은 남경필·정병국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당 공천관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 의원과 맞설 경선 후보로 정 의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당내 원조 소장파 격인 '남·원·정(남경필 정병국 의원, 원희룡 전 의원)' 트리오 중 두 멤버가 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됐다. 남 의원은 발표 후 정 의원에게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남 의원은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경기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47.6% 대 36.7%로 10%포인트 앞섰다.(후략)

세계일보
2014년 04월 08일
04면 (종합)

새누리 경기지사 경선 남경필·정병국 맞대결

鄭, 여론조사서 원유철·김영선 앞서
부산도 단일화 필요성 잇단 제기
南, 김상곤과 가상대결 격차 벌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남경필


정병국

새누리당 경선 후보 적합도(단위: %)

서울	정몽준 44.0 김황식 20.1
경기	남경필 38.1 정병국 10.0 김영선 8.6 원유철 6.1
인천	유정복 39.4 안상수 34.2
부산	권철현 26.3 서병수 22.9 박민식 11.4

본선 가상대결 지지도(단위:%)

서울	정몽준 43.8 박원순 42.7
경기	남경필 47.6 김진표 36.7 남경필 49.8 김상곤 35.8
인천	유정복 40.6 송영길 45.4
부산	권철현 43.9 오거돈 44.3

자료: YTN·엠브레인 여론조사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이 주도했던 단일화 바람이 새누리당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당 경기지사 경선은 남경필·정병국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당 공천관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 의원과 맞설 경선 후보로 정 의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당내 원조 소장파격인 '남·원·정(남경필 정병국 의원, 원희룡 전 의원)' 트리오 중 두 멤버가 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됐다. 남 의원은 발표 후 정 의원에게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공천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정 의원과 원유철 의원, 김영선 전 의원 3명의 후보자 압축 결과 정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어 경선 후보가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삼인방의 지지율 차이가 워낙 미미해 공천위원들이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위는 지난주 말 2개의 외부 여론조사 기관(코리아리서치, AC닐슨)에 의뢰해 남 의원을 제외한 3명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후보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줬고 도민의 선택으로 결정된 만큼 제가 보답하는 길은 경선과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다만 남 의원이 상당한 격차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 3자 단일화가 경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 의원은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경기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47.6% 대 36.7%로 10%포인트 앞섰다. 남 의원은 신당 소속 김상곤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는 49.8% 대 35.8%로 격차를 벌렸다. 남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원과 끝까지 완주해 경선과정이 새 정치의 모형을 보여드리는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 이어 다른 지역의 추가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부산시장 경선의 경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병수 의원에 대적하기 위해 권철현 전 주일대사와 박민식 의원의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만 권 전 대사 측이 단일화 논의를 적극 요구하고 있음에도 박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단일화를 위해선 가치의 공감과 공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YTN·엠브레인 여론조사 결과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는 권철현, 서병수 후보가 각각 26.3%, 22.9%를 기록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인천시장 경선후보 조사에서는 유정복 의원이 39.4%, 안상수 전 시장이 34.2%의 지지율로 접전을 벌였다.

한편 공천위는 여성 우선공천지로 결정된 서울 종로·용산·서초구청장 후보로 각각 이숙연 전 종로구의원, 황춘자 전 서울메트로본부장, 조은희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선정했다.

(11.4×30.1)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61
언 론 사	㈜조선일보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대표이사 방 상 훈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4년 4월 8일자 5면「서울 정몽준·박원순 초박빙 … 忠北 이시종 … 윤진식 접전」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충북도지사, 제주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울 정몽준·박원순 초박빙 …
忠北 이시종 … 윤진식 접전

(전략) YTN과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해 7일 발표한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던 이 같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야 어디도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후략)

朝鮮日報

서울 정몽준·박원순 초박빙…

〈43.8%·새누리〉 〈42.7%·새정치연합〉

지방선거 판세… YTN 조사

여야가 6·4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인천에서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당의 텃밭인 부산에서도 새누리당 권철현·서병수 예비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

YTN과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해 7일 발표한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던 이 같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야 어디도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초박빙 승부 벌이는 수도권

서울시장 선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 상태가 됐다. 새누리당의 경선전이 불붙으면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4.1%로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 53.9%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43.8%로 42.7%를 기록한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정 의원이 47.7%, 박 시장이 42.3%로 격차가 벌어졌다. 김황식 전 총리와 박 시장의 양자 대결은 32.9% 대 51.5%였고, 이혜훈 최고위원과 박 시장의 대결은 26.3% 대 57.3%였다.



부산, 오거돈 바람 계속
인천, 송영길 박빙 우세
경기, 남경필 10%p대 앞서
제주, 원희룡 압도적 우세

새정치연합 소속 송영길 현 인천시장에게 맞서는 새누리당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안상수 전 시장의 대결도 접전 양상이었다. 유 전 장관과 송 시장의 맞대결은 40.6% 대 45.4%였지만, 적극 투표층에서는 45.2% 대 41.8%로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새정치연합 김진표·원혜영 의원과 김상곤 전 교육감에게 각각 10.9%포인트·19.1%포인트·14.0%포인트 격차로 모두 이겼다. 이날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새누리당 내에서 '남경필 대항마' 경선후보로 뽑힌 정병국 의원은 야권 주자들보다 8~17%포인트 지지율이 낮았다.

◇인물 대결 펼치는 충청권·강원

중원(中原)은 여야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지금까지는 인물 대결 구도

2014년 04월 08일
05면 (정치)

忠北 이시종·윤진식 접전

〈41.7%·새정치연합〉 〈38.7%·새누리〉



로 나타났다. 현역 단체장이 강세인 가운데, 충북에선 접전이 펼쳐졌다.

대전은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새정치연합 권선택·선병렬 후보에 비해 각각 25.3%포인트, 34.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은 새정치연합 안희정 지사가 새누리당 홍문표·이명수 의원, 정진석 전 국회사무처장 등과의 맞대결에서 각각 18.3%포인트, 25.7%포인트, 27.7%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시종 지사가 38.7% 대 41.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윤 의원이 44.8%, 이 지사가 38.2%로 반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강원도에서는 새정치연합 최문순 지사가 새누리당 예비 후보인 이광준 전 춘천시장, 최흥집 전 정무부지사,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을 16~21%포인트 차로 이겼다.

◇부산엔 오거돈 바람

여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야권의 무소속 후보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바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권철현 전 주일 대사와 오 전 장관의 양자 대결은 43.9% 대 44.3%로 나왔지만, 적극 투표층에선 47.0% 대 43.2%로 뒤집혔다. 서병수 의원과 오 전 장관의 맞대결은 40.7% 대 45.6%로 나왔고, 적극 투표층에선 43.2% 대 44.9%로 격차가 좁혀졌다.

제주에서는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의 우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 고희범·김우남 예비 후보 등과의 대결에서 최소 19%포인트 이상 격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경기에서는 성인 각 1000명, 부산·인천·대전·충북·충남·강원·제주는 700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오차범위는 서울과 경기 ±3.1%포인트, 부산 등 나머지 지역은 ±3.7%포인트다. 조의준 기자

(30.6*18.6)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62
언 론 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대표이사 송 영 승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2014년 4월 8일자 5면 「고정관념 깨는 선거구도 유권자들 '당'보다 '인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고정관념 깨는 선거구도 유권자들 '당'보다 '인물'

(전략) YTN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서울에서 박근혜 후보(48.2%)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51.4%)에게 뒤진 사실을 감안하면 정의원의 상승세는 의외다.(후략)

경향신문
2014년 04월 08일
04면 (정치)

강세지역선 고전, 약세지역선 선전

고정관념 깨는 선거구도 유권자들 '당'보다 '인물'

광역단체장 초반 판세

여 수도권, 야 강원·충청 선전
부산·대구에서도 이상 징후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판세가 그간의 '고정관념'과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여야가 서로 강세지역에서 고전하고 약세지역에서 선전하는 희한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당'보다 '인물'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 투표소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약세지역인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정몽준 의원이 약진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YTN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서울에서 박근혜 후보(48.2%)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51.4%)에게 뒤진 사실을 감안하면 정 의원의 상승세는 의외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새정치연합 김진표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모두 10%포인트 안팎으로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 여당 내에선 '남경필 완승론'까지 나올 정도다.

인천시장 대결에선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야당 후보인 송영길 시장과 오차범위 내에서 승부를 다투고 있다.

광역단체장 지지율 여론조사
(YTN · 엠브레인, 1~3일)

*새누리당=새, 새정치민주연합=민

서울시장			
정몽준(새)	43.8% :	42.7%	박원순(민)
경기지사			
남경필(새)	47.6% :	36.7%	김진표(민)
남경필(새)	49.8% :	35.8%	김상곤(민)
인천시장			
유정복(새)	40.6% :	45.4%	송영길(민)
부산시장			
권철현(새)	43.9% :	44.3%	오거돈(무)
서병수(새)	40.7% :	45.6%	오거돈(무)
강원지사			
이광준(새)	31.2% :	48.1%	최문순(민)
충북지사			
윤진식(새)	38.7% :	41.7%	이시종(민)
충남지사			
홍문표(새)	31.5% :	49.8%	안희정(민)

반면 새정치연합은 약세였던 충청과 강원에서 앞서가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전에선 야당 소속 이시종 지사가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을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사 선거에선 야당 안희정 지사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이명수 의원, 정진석 전 국회사무총장 등 여권 경쟁자들을 누르고 있다.

강원지사 선거에선 야당 최문순 지사가 이광준 전 춘천시장 등 모든 여당 후보들을 앞선다. 강원은 지역구 의원 9명이 모두 여당 소속으로, 최 지사의 선전은 이변이라 할 수 있다. 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30%가 최 지사를 선호한다고 답하고 있다"고 했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야당 후보들은 현직 프리미엄에다 인물 경쟁력으로 낮은 정당 지지도를 뛰어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부산과 대구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누리당 후보인 서병수 의원·권철현 전 주일대사와 호각지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의 한 의원은 "야당이 강한 게 아니라 여당 후보가 약하다"고 했고, 여당 핵심 관계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선거에선 야당 후보인 '김부겸 열풍'이 불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40.4%를 얻었던 김 의원은 서상기·조원진 의원 및 권영진 전 의원 등 여당 후보들을 바짝 뒤쫓고 있다. 대구의 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 부채의식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욱·강병한 기자
woody@kyunghyang.com

(15.0*23.5)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63
언 론 사	㈜중도일보사 대전 중구 계룡로 832 중도일보빌딩 대표이사 김 원 식
심의대상기사	중도일보 2014년 4월 8일자 4면「대전시장 박성효·권선택 '선두권' 충남지사 가상대결은 안희정 1위」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전광역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전시장 박성효 · 권선택 '선두권'
충남지사 가상대결은 안희정 1위

(전략) 7일 YTN의 여론조사(엠브레인 의뢰)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전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 의원이 지지율 46.4%로 이재선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13.3%)과 노병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8.2%)을 크게 앞질렀다.(후략)

중도일보
2014년 04월 08일
04면 (종합)

대전시장 박성효·권선택 '선두권' 충남지사 가상대결은 안희정 1위

YTN 여론 조사

대전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과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전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사 선거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당내 타 후보들을 앞지르는 양상을 보였지만, 가상대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희정 충남지사가 새누리당 후보 모두를 앞섰다.

7일 YTN의 여론조사(엠브레인 의뢰)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전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 의원이 지지율 46.4%로 이재선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13.3%)과 노병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8.2%)을 크게 앞질렀다.

새정치연합 측 후보 적합도에서는 권선택 예비후보가 30.6%의 지지율을 얻으며 송용호(15.6%)·선병렬(13.5%) 예비후보와 적잖은 격차를 보였다.

가상대결에서는 55.7% 대 30.4%로 새누리당 박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전 의원보다 우위였다.

새누리당 충남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 의원이 25.6%의 지지율을 기록, 당내 경쟁자인 이명수 의원(18.6%)과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11.9%)을 제쳤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안희정 현 지사와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지사가 새누리당 모든 후보들을 상대로 지지율 18%p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 충북지사의 경우, 윤진식 의원(충주)이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현 지사와의 가상대결에서는 38.7% 대 41.7%로 오차범위 접전을 보였다.

한편, YTN은 이번 여론조사를 지난 1~3일 대전과 충남·북 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 700명씩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법(응답률 대전 30.1%, 충남 33.5%, 충북 38.1%)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 포인트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14.3*10.5)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64
언 론 사	신아매일㈜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길 7 대표이사 김 명 수
심의대상기사	신아일보 2014년 4월 8일자 3면 「'지방선거' 서울 · 인천 · 부산 여야 접전 양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충남도지사, 제주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 · 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 · 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히고 질문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하도록 표기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방선거' 서울 · 인천·부산 여야 접전 양상

6 · 4지방선거 59일을 앞두고 실시된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서울 · 인천 · 부산에서 여야 접전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중 부산은 초 접전이 전망된다.(후략)

新亞日報
2014년 04월 08일
03면 (종합)

'지방선거' 서울·인천·부산 여야 접전 양상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강원은 야당·제주는 여당 우세

6.4지방선거 59일을 앞두고 실시된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서울 · 인천 · 부산에서 여야 접전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중 부산은 초 접전이 전망된다.

7일 발표한 YTN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장 맞대결에서는 정몽준 대 박원순은 43.8% 대 42.7%로 1.1%p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서 정몽준 의원이 앞섰다. 새누리당에서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하면 32.9%대 51.5%로 새정치연합 박원순 시장의 승리로 나타났다.

이혜훈 의원 출마 시에도 현 박원순 시장이 57.3%로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야권성향의 무소속 오거돈 전 장관이 여당 후보들과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중에서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와 서병수 의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적합도 1, 2위를 차지했다.

권 전 대사가 26%, 서 의원이 22%를 기록했고 박민식 의원은 11%에 그쳤다.

야권은 무소속을 고수한 오거돈 전 장관이 50%가 넘는 지지율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여야 양자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과 오 전 장관이 접전을 이뤘다.

권철현 전 대사와 맞붙을 경우 44.3% 대 43.9%, 서병수 의원과는 45.6% 대 40.7 %를 기록했다.

특히 권 전 대사와 오 전 장관은 새정치연합 후보가 포함된 3자 대결에서도 초접전을 보여, 향후 야권 단일화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장은 새누리당 유정복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 유정복 전 장관 40.6%, 새정치연합 송영길 현 시장 45.4%로 송영길 시장이 우세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경쟁에서는 박성효 의원이 46%로 가장 앞섰고, 이재선 후보 13%, 노병찬 후보 8%를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선택 예비후보가 31%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를 크게 앞섰다.

양측 선두 주자가 맞붙었을 때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56%, 권선택 후보는 30%를 기록, 박 의원이 큰차로 앞섰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47.6%, 새정치연합 김진표 의원 36.7%로 남경필 의원 우세를 보이고 있고, 새정치연합 김상곤 전 도교육감과의 대결에서는 49.8%대 35.8%로 남경필 의원이 14%p 차로 앞섰다.

강원지사는 새누리당에서 이광준 전 춘천시장이 출마하게 될 경우 새정치연합 최문순 지사가 새누리당 이광준 전 춘천시장을 16.9%p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최흥집 전 정무부지사 출마 시에도 28.5%대 50.4%로 새정치연합 최문순 강원지사가 정창수 전 차관이 나올 경우, 역시 최문순 지사가 50%의 지지를 받아 두 배 가까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충남지사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31.5% 새정치연합 안희정 지사 49.8%로 안희정 지사의 승리,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출마할 경우 안희정 지사는 52.9%의 지지를 받아 더 많이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 출마 시에도 26%대 53.7%로 안희정 지사가 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사의 경우 새누리당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예비후보를 사퇴하면서 윤진식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가상대결에서는 이시종 현 지사가 42%, 윤 후보가 39%로 오차범위 접전을 보였다.

제주에서는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뚜렷한 우세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인 김우남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52%대 32%로 앞섰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 40.2%, 새정치민주연합 17.7%, 통합진보당 2%, 정의당 0.9%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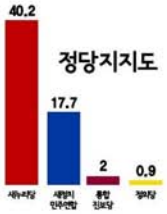
6.4지방 선거전이 본격 전개되면 여야 1대1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정당 지지도가 후보의 지지율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과 경기 거주 성인 각 천 명, 인천 거주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오차범위는 서울과 경기 ±3.1%p, 인천 ±3.7%p이다.

문경림기자 rgmoon@shinailbo.co.kr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40.2%
새정치민주연합 17.7%
통합진보당 2%
정의당 0.9%













(25.3×35.2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65
언 론 사	㈜한국일보미디어그룹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본관 6층 대표이사 조 상 현
심의대상기사	주간한국 2014년 3월 31일자 6면~7면「요동치는 경기지역 민심 … 與 전략공천 승부수 통할까」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수원시장, 과천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최초 공표·보도하면서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히고 질문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하도록 표기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요동치는 경기지역 민심 … 與 전략공천 승부수 통할까

(전략) 새누리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전략적인 공천에 고심 중이다. 이에 〈주간한국〉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3월 25~27일 조사, 여권 예비후보들에 대한 경기지역의 민심을 살펴봤다.(후략)

● 새누리당 주요 경기지역 판세 분석

요동치는 경기지역 민심… 與 전략

지방선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후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교두보라고 판단, 선거 결과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대야권을 형성한 이후 새누리당의 긴장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새누리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북지역으로 보인다. 여권이 강세를 보이는 경북지역과는 달리,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지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야권에 자리를 내준 굵직한 선거구들이 다수 있어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전략적인 공천에 고심 중이다. 이에 <주간한국>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3월 25~27일 조사, 여권 예비후보들에 대한 경기지역의 민심을 살펴봤다.



경기지사는 與 남경필 우세 속 野 혼전
전통적인 여당 표밭 성남선 與 예선 치열
수원시장은 野 유력한 가운데 與 추격
'여성가산점' 논란 과천은 與 후보 신경전

경기지사는 변화 바람

경기지사 선거전은 변화의 바람이 기세다. 새누리당은 일단 컷오프가 관심이다. 이미 다른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2~4배수로 후보를 압축하는 컷오프를 끝냈지만, 4명이 출마한 경기도에 대해서는아직 손을 대지 않은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이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지사 가상대결에서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이 33.3%의 지지율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15.9%)과 원혜영 의원(9.0%), 김진표 의원(7.5%)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52.5%, 새정치민주연합이 33.3%로 나타났다.

당내 후보 지지도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남 의원의 선전이 돋보인다. 남 의원이 40.2%로 압도적 우위를 점한 가운데 원유철 의원(7.1%), 정병국 의원(6.0%), 김영선 전 의원(5.8%) 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강2중 구도가 투영하다. 김 전 교육감이 27.4%로 우위를 점한 가운데 김 의원(18.1%), 원 의원(12.3%)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5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유권자 1,020명을 자동응답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06%p).

성남시, 여당 표밭 지지 변수

과거 분당과 판교신도시의 영향으로 여당이 강세를 보이던 성남시는 지난 민선 5기 기초단체장과 19대 총선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5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환준기 전 여성부 차관을 누르고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현직 프리미엄' 까지 등에 업은 이 시장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쟁쟁한 후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여권 후보들 중에서는 신영수 전 새누리당 의원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박정오 전 성남 부시장과 박영숙 전 분당구청장이 그 뒤를 맹렬히 쫓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신 전 의원은 22.9%를 차지해 단독 선두를 달렸고 박 전 부시장과 박 전 구청장은 각각 9.7%, 8.8%를 기록했다.

주목되는 점은 전통적으로 여당의 표밭이었던 분당구에서만큼은 박 전 부시장이 신 전 의원을 다소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의 경우 최근 몇 년새 신·구 시가지 표심이 갈리고 있다. 야당은 구시가지인 수정·중원구(유권자수 40만명)에서, 여당은 신시가지인 분당구(유권자수 38만명)에서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신 전 의원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여당 텃밭에서는 박 전 부시장이 우위에 선 이상,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적 판단을 할 경우 승부는 알 수 없게 된다.

두 사람은 선거 준비를 누구보다 빨리 시작한 것으로도 주목된다. 의원 시절 국토해양위 활동을 한 신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올해 성남시장 출마를 공공연하게 선언하며 각종 행사들에 얼굴을 내밀어 왔다.

박 전 부시장은 4년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 다년간의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하고 후보들 중 가장 먼저 출마 기자회견을 열 ↗
있다.

공천 승부수 통할까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신영수 전 새누리당 의원


박장오 전 성남시 부시장


김용서 전 수원시장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갑 당협위원장


이경수 과천시의회 의원


강현석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 조사는 성남시 거주 19세 이상 남녀 2,036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5%였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6%p).

수원시, 한역 프리미엄 맞상대는?

수원시는 인구 120만명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기초자치단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선거가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선거만큼이나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원시장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염태영 시장이다. 지난 선거에서 염 시장이 51.4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둔 것 이외에도, 수원시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에서 야권의 승리가 이어져 왔던 곳이다.

수원시 회복을 위해 여권에서는 김용서 전 수원시장,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갑 당협위원장 등이 나섰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7.0%를 기록하며 김 위원장(20.5%)을 앞간 앞섰다. 박흡석 전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대위 홍보네트워크 위원장, 최규진 전 경기도의원 등이 각각 9.5%, 5.3%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1, 2위를 달리고 있는 김 전 시장은 20~40대에서, 김 전 위원장은 50~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인 것이 주목된다. 선거 당일 젊은 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시장과 김 전 위원장의 공천후보적합도 격차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도 여겨질 수 있다.

그밖에 김 전 시장이 자영업자, 회사원, 학생 층에서 지지를 받고 김 전 위원장은 생산직과 공무원 및 전문직 층에서 지지를 받은 결과도 눈에 띈다.

이 조사는 수원시 거주 19세 이상 남녀 1,019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69%였다.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07%p).

과천시, '여성 가산점' 영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과천은 새누리당이 여성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해 관심이 컸다. 새누리당 공천단체장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과천시, 이천시를 비롯해 서울 종로·서초·용산구와 부산 중구, 대구 중구 등 7곳을 확정했으나 당내 반발이 거셌다. 논란 끝에 경기 과천시와 이천시는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확정한 후 여성후보에게 10% 가산점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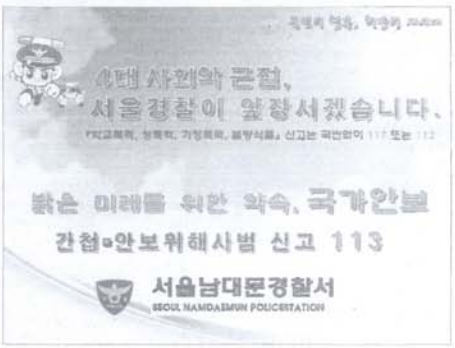
관심이 컸던 만큼 과천시장에 도전장을 낸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싸움은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과천 지역민들에게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공천적합도를 물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권 후보들 중에는 이경수 과천시의회 의원이 16.4%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강현석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15.5%), 신계용 전 새누리당 중앙당 여성국장(11.4%) 순으로 나타났다. 박연우 전 동부 팜가야 대표(9.2%), 백남철 과천희망포럼 대표(7.4%), 장원동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5.0%)이 뒤를 이었다.

여성 후보인 신 국장이 3위를 기록한 가운데, 상대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다. 신 국장이 10% 프리미엄을 받을 경우 앞선 후보들을 누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앙당 공천위에서는 자체 여론조사를 한번 더 실시하기로 밝힌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25일 경기 과천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유권자 542명을 대상으로 IVR(ARS) 자동응답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2%p).

윤지환기자 jjh@hankooki.com



의 결 번 호	2014지선166
언 론 사	경북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93 대표이사 한 국 선
심의대상기사	경북일보 2014년 4월 7일자 1면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선호도 긴급 여론조사 이강덕 25.1% '선두' 공원식 19.4% '정체' 김정재 19.2% '상승'」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포항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최초 공표·보도하면서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히고 질문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하도록 표기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선호도 긴급
여론조사 이강덕 25.1% '선두'
공원식 19.4% '정체' 김정재 19.2% '상승'

새누리당 포항시장 공천이 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강덕 후보가 선두에 나섰으며, 공원식, 김정재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2위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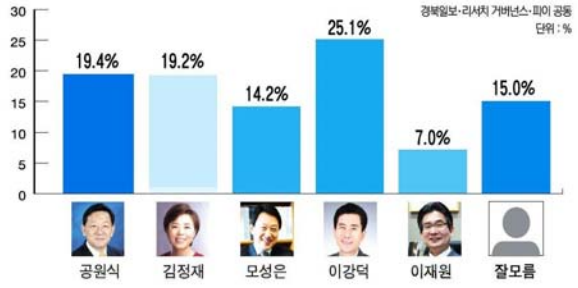
이 같은 사실은 경북일보와 리서치 거버넌스, 피이 등 3개 기관이 지난 5일 포항지역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예비후보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후략)

경북일보

2014년 04월 07일
01면 (종합)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선호도 긴급 여론조사

이강덕 25.1% '선두'
공원식 19.4% '정체'
김정재 19.2% '상승'



새누리당 포항시장 공천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강덕 후보가 선두에 나섰으며, 공원식, 김정재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2위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북일보와 리서치 거버넌스, 피이 등 3개 기관이 지난 5일 포항지역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예비후보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강덕 25.1%, 공원식 19.4%, 김정재 19.2%, 모성은 14.2%, 이재원 7.0%, 잘모름 15.5%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에 후보자 호명은 전체로테이션으로 실시해 가나다순에 의한 유·불리의 영향은 없도록 했다

남·여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이강덕 28.9%, 공원식 20.6%, 모성은 15.7%, 김정재 15.3%, 이재원 8.8%로 나타났다.

여성은 김정재 23.1%, 이강덕, 21.2%, 공원식 18.2%, 모성은 12.8%, 이재원 5.3% 순이다.

여성후보인 김정재 후보의 경우, 새누리당의 여성 전략공천지역 파동의 여파인지 남성들로부터는 낮은 지지를 받았으나 여성들로부터는 1위의 지지를 받는 등 성별 지지격차가 심했다.

연령별 지지도에서는 20~30대에서 김정재 후보가 29.1%로 2위 이강덕 후보의 19.7%보다 크게 앞서 젊은층의 지지가 두드러졌다.

40대에서는 이강덕 후보가 22.1%, 공원식 후보가 21.4%, 모성은 후보가 21.3%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다.

50대에서는 이강덕 후보가 35.9%로 2위 공원식 후보의 22.7% 보다 10%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60대 이상에서도 이강덕 후보가 26.1%로 2위 공원식 후보(20.9%)를 앞서고 있었다.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75.9%, 새정치민주연합 7.2%, 통합진보당 0.7%, 정의당 1.0% 지지정당 없음 1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포항시장 새누리당 후보선호도 여론조사는 지난 4월 5일 지역유권자들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포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여 1천5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을 통해 실시했다.

가중치 보정은 지역·성별·연령별 인구비례기준 가중치분석을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2.53%포인트, 응답률은 5.07%(2만9천577통화 시도)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주중 후보자들 가운데 경선참여자를 발표하고 19~20일께 당원경선을 거쳐 공천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년기자 kimdn@kyongbuk.co.kr

(25.6×14.4)cm²

의 결 번 호	2014지선171
언 론 사	㈜전국매일신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11 예농빌딩 대표이사 박 종 필
심의대상기사	전국매일신문 2014년 4월 15일자 3면 「50년 절친 리턴매치 등 '與野 대격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북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50년 절친 리턴매치 등 '與野 대격돌'

(전략) 지난 7일 YTN이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7%)에서는 이 지사의 지지율이 41.7%로 윤 의원의 38.7%를 오차범위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투표층에서는 윤 의원(44.8%)이 이 지사(38.2%)를 앞섰다.(후략)

■ 6·4지방선거 울산·세종·경북·충북 4곳 與野 대진표 완성

50년 절친 리턴매치 등 '與野 대격돌'

〈이시종 충북지사 vs 윤진식 의원〉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17곳중 울산, 세종, 경북, 충북 등 4곳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여야 모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는 후보 확정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선거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이미 여야 후보의 대격돌이 시작됐다. 재선을 노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시종 현 충북지사에 '50년 절친'인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두 사람이 지난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 충주에서 맞붙었던 '중원의 결투'에서는 이 시장이 승리했다. 6년만에 다른 링에서 치러지는 '리턴매치'인 셈이다.

새누리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새정치연합을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으면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YTN이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7%)에서는 이 지사의 지지율이 41.7%로 윤 의원의 38.7%를 오차범위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투표층에서는 윤 의원(44.8%)이 이 지사(38.2%)를 앞섰다.

윤 의원은 "지난 4년간의 도정을 냉혹하게 심판하겠다"며 이 지사를 정조준한 반면 이 지사는 '일하는 서민 도지사'를 내세우며 바닥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향후 판세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종시는 반대로 새누리당 소속의 유한식 현 세종시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시 건설 실무를 총괄했던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의 도전을 받고 있다.

유 시장과 이 전 차관도 이번에 두 번째로 맞붙는다. 지난 2012년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진 세종시장 선거에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던 유 시장이 41.7%를 얻어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이 전 차관을 눌렀다.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유 시장이 이 전 차관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중도·무당층 표심의 향배가 당락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유한식 세종시장 vs 이춘희 前 건설교통부 차관
중도·무당층 등 표심 향배가 당락 결정지을 듯
'與 표밭' 울산·'3선고지' 김관용 당선 무난할듯

여당의 안방격인 울산에서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출신의 김기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 맞붙는다.

새누리당이 단 한차례도 시장직을 야당에 빼앗긴 적이 없었던 '아성'인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여권의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야당에서는 이 후보 외에 통합진보당 이영순 전 의원, 정의당 조승수 전 의원 등이 울산시장에 도전했다.

경북 역시 3선 고지에 도전한 새누리당 김관용 현 경북지사에 대해 새정치연합 오중기 도당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었으나 이변이 없는 한 김 경북지사의 당선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의 결 번 호	2014지선172
언 론 사	㈜동아일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대표이사 김 재 호
심의대상기사	동아일보 2014년 4월 14일자 4면 「불붙은 경선 경쟁 새누리는 '黨心' 새정연은 '安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산광역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불붙은 경선 경쟁 새누리는 '黨心' 새정연은 '安心'

(전략) 3월 말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 17.2%에 그쳐 권철현 전 의원(22.9%)에게 뒤졌고, 4월 초 YTN 여론조사에서도 권 전 대사에게 3.4%포인트 정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새누리, 당원투표가 박빙 경선지역 승부 갈라

울산, 여론조사 뒤진 김기현 당원투표로 역전
친박 서병수-정진석, 조직표 끌어모으기 총력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당심(黨心)'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당심 대 민심이 '5 대 5'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외부 국민선거인단의 실제 선거 참여율이 떨어져 당심이 판세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 일반 여론조사에서 다소 밀리더라도 당내 조직력이 강하면 막판 역전극을 펼칠 수도 있다.

12일 치러진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기현 의원(3선·울산 남을)이 강길부 의원(3선·울산 울주)을 3.2%포인트 차이로 꺾었다. 직전에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주로 중앙무대를 누볐던 김 의원은 경선 초반 지역세가 강한 강 의원에게 밀렸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0.8%포인트 차이로 강 의원에게 졌지만 대의원·당원 등 투표에서 강 의원을 110표(3.96%포인트) 차로 이겼다. 대의원과 일반 당원 등 당심의 위력이 드러난 부분이다.

민심을 대변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친박(친박근혜)계 경선 후보들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당심에 기대 막판 역전극을 펼치기 위한 조직표 끌어모으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부산시장 경선은 친박계 경선주자가 열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핵심 친박 중진인 서병수 의원(4선·부산 해운대-기장갑)은 권철현 전 주일대사에게 밀리고 있다. 3월 말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 17.2%에 그쳐 권철현 전 의원(22.9%)에게 뒤졌고, 4월 초 YTN 여론조사에서도 권 전 대사에게 3.4%포인트 정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당심을 끌어안으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 울산시장, 세종시장 후보 경선 결과

대의원 20%+당원 30%+국민선거인단 30%+여론조사 20%.

구분		합계	대의원·당원·국민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
울산 시장	김기현	51.6%	51.98%	49.6%
	강길부	48.4%	48.02%	50.4%
세종 시장	유한식	64.8%	66.2%	58.9%
	최민호	35.2%	33.8%	41.1%

충남지사 경선도 비슷한 양상이다.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은 "내가 과거 자민련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표를 끌어모을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표 모으기에 나서고 있지만,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홍문표 의원, 이명수 의원에게 근소하지만 밀리는 모양새다. 정 전 사무총장 측은 "당에서 나를 밀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며 당심에

강원서 여론조사 3위 정창수도 당내선 경쟁력 앞서 결과 주목

기대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이광준 전 춘천시장이 22%,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20.2%, 정창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2.4%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정 전 사장이 당심에서 앞서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다른 후보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심이 경선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박빙의 상황에서는 당 지도부의 지지 여하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 경선은 20일, 충남지사 경선은 21일, 부산시장 경선은 22일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28.1*26.3)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73
언 론 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대표이사 송 영 승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2014년 4월 14일자 4면「7(여당우세) : 5(야당우세) : 5(백중 지역)」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7(여당우세) : 5(야당우세) : 5(백중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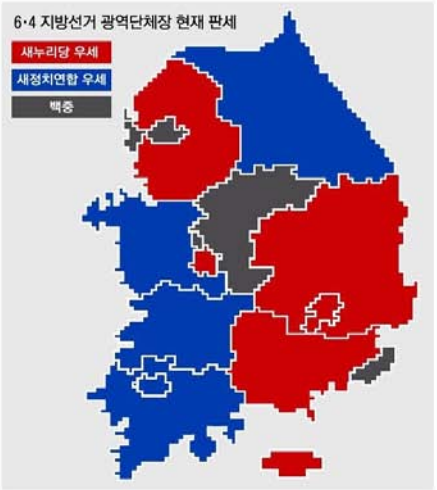
(전략) 최근 여론조사들을 종합하면 광역단체장 17곳의 현재 판세는 새누리당 우세 지역 7곳, 새정치연합 우세 지역 5곳으로 분석된다.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백중' 지역도 5곳으로 선거 막판까지 예측불허의 접전이 예상된다.

여야가 최대 승부처로 꼽고 있는 수도권·충청권은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결과가 뒤바뀔 정도로 초접전 상태다.(후략)

경향신문

2014년 04월 14일
04면 (정치)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현재 판세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대진표 ※오차범위 내 지지율 차이는 '백중'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판세
서울	김황식 정몽준 이혜훈	박원순	백중
부산	권철현 박민식 서병수	김영춘 이해성 오거돈(무소속)	백중
대구	권영진 서상기 이재만 조원진	김부겸	여 우세
인천	유정복 안상수	송영길	백중
광주	이정재	강운태 윤장현 이용섭	야 우세
대전	노병찬 박성효 이재선	권선택	여 우세
울산	김기현	이상범	여 우세
세종	유한식	이춘희	백중
경기	남경필 정병국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여 우세
강원	이광준 정창수 최흥집	최문순	야 우세
충북	윤진식	이시종	백중
충남	이명수 정진석 홍문표	안희정	야 우세
전북	박철곤	강봉균 송하진 유성엽	야 우세
전남	이중효	이낙연 이석형 주승용	야 우세
경북	김관용	오중기	여 우세
경남	박완수 홍준표	김경수 정영훈	여 우세
제주	원희룡	고희범 김우남 신구범	여 우세

〈여당 우세〉 〈야당 우세〉 〈백중 지역〉

7 : 5 : 5

서울·인천·충북 '초접전'… 부산도 '오거돈 변수'… 이달 말 대진표 확정 '가봐야 안다'

6·4 지방선거 판세 분석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현재 판세는 광역단체장 17곳 중 새누리당 7곳, 새정치민주연합 5곳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오차범위 내 백중 지역은 5곳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윤곽 잡히는 여야 대진표

13일 현재 17개 광역단체 중 새누리당은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10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후보자 등록일(5월15일)이 한 달 넘게 남았음을 감안하면 여야 대진표가 조기에 짜여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여야 모두 경선 없이 '단독 후보'로 확정된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현역 단체장이 버틴 지역에선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단체장들이 일찌감치 후보로 결정됐다. 현역 단체장이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한 9곳 가운데 광주·경남을 제외한 7곳이 경선 없이 현역 단체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현역 단체장 5명이 단독 입후보하거나 컷오프(예비경선)로 일찌감치 후보가 됐다.

여야 취약 지역인 호남과 영남의 경우 인물난에 허덕인 끝에 가까스로 후보를 골라 출마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이달 말쯤 대진표가 확정된다. 야당이 현역 단체장인 서울·인천의 경우 '도전자' 격인 새누리당 후보의 경선이 남아 있고, 여당 소속 김문수 지사가 3선 도전을 포기한 경기는 여야 모두 경선을 앞두고 있다. 여야가 경선 흥행을 고려해 후보 경선을 맨 뒤로 배치해놓은 것도 수도권 대진표 확정이 늦춰진 이유다.

■여 우세 7, 야 우세 5, 백중 5

최근 여론조사들을 종합하면 광역단체장 17곳의 현재 판세는 새누리당 우세 지역 7곳, 새정치연합 우세 지역 5곳으로 분석된다.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백중' 지역도 5곳으로 선거 막판까지 예측불허의 접전이 예상된다.

여야가 최대 승부처로 꼽고 있는 수도권·충청권은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결과가 뒤바뀔 정도로 초접전 상태다.

서울시장의 경우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YTN과 엠브레인이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 의원(43.8%)이 박 시장(42.7%)을 앞섰지만, 내일신문과 한국리서치의 지난 4~6일 조사에선 거꾸로 박 시장(42.2%)이 정 의원(36.5%)을 앞질렀다.

인천도 승패를 점치기 힘든 지역이다. 앞선 두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 송영길 시장과 새누리당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승패를 주고받았다. 여야 모두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경기지사 선거에선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새정치연합 김진표·김상곤·원혜영 예비후보 모두에게 10%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다.

충청권에선 새정치연합 소속 현역 지사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충남에선 안희정 지사가 새누리당 후보들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반면, 충북에선 새정치연합 이시종 지사와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다.

부산시장의 경우 무소속으로 나선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누리당 후보들과 백중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선거 판세는 5월 초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되고, '1 대 1' 구도가 형성되면 구체적으로 틀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충청권에선 초접전 지역이 많아 여야 선거 프레임과 현역 프리미엄 효과, 네거티브 폭로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판세가 출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표의 움직임도 관건이다. 치열한 당내 공천 및 경선 후유증,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 번복도 본선에 영향을 미칠 잠재 변수로 꼽힌다.

김진우·유정인 기자
jwkim@kyunghyang.com

(20.0×30.8)cm²

의 결 번 호	2014지선174
언 론 사	㈜한국일보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신관 15층 대표이사 박 진 열
심의대상기사	한국일보 2014년 4월 15일자 5면「경기 · 대전은 새누리, 충남·강원은 새정치 우세… 서울 · 인천은 박빙」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 · 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 · 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 · 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 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경기 · 대전은 새누리, 충남 · 강원은 새정치 우세…서울 · 인천은 박빙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결국 '중원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 승부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판세로도 여야는 중원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선거전

이 본격화하면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현재 판세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낮은 세종시를 제외한 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기와 대전에서, 새정치연합은 충남과 강원에서 각각 우위를 보이고 있다.(후략)



한국일보

경기·대전은 새누리, 충남·강원은 새정치 우세… 서울·인천은 박빙

| 지방선거 50일 앞으로- 여야 판세 |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결국 '중원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 승부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판세로도 여야는 중원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현재 판세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낮은 세종시를 제외한 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기와 대전에서, 새정치연합은 충남과 강원에서 각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충청권 쟁쟁
결국 중원싸움 될 듯
여야 후보 확정된 충북선
윤진식·이시종 접전 중

선거 판뒤흔는 이슈 없이
상호비방 가능 부린 수도

서울과 인천, 충북 등 3곳은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새누리당 우세 지역인 경기와 대전은 아직 내부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새정치연합이 상당한 정도로 뒤지는 형세지지율 격차를 따라잡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의 경우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새정치연합 경선후보 누구와 상대해도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새누리당 박성효 전 시장이 새정치연합 예비후보들을 2배 가량 차이로 리드하고 있다.

반면 충남과 강원은 새정치연합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인물론'으로 정당 지지도 열세를 극복해 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충남에서 이명수 홍문표 의원과 정진석 전 의원이, 강원에선 이광준 전 춘천시장과 정창수 전 인천부시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각각 경선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함께 부진하는 평가가 많다.

이에 비해 서울과 인천, 충북은 승부를 점치기 어려운 형국이다. 새정치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 현직 단체장들이 일찌감치 본인 무대에 올랐고, 새누리당에선 충북지사 후보 윤진식 의원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 2곳에선 예선전이 한창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박 시장이, 인천은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과 송 시장이 각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3 후보가 확정된 충북에서는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와 새정치연합 이시종 후보가 접전 중이다.

이처럼 중원에서 여야의 팽팽한 대결 구도가 펼쳐지면서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폭로전을 비롯한 거친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른 선거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처럼 전체 선거판을 관통하는 이슈가 없는 상황이다 상호 비방전 등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전국선거와 달리 눈에 띄는 큰 이슈가 보이지 않아 지엿 소모적인 정쟁거리가 과도하게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각 당 내부의 공천 및 경선 후유증이나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변복 논란 등 지방선거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안철수 현상'에 열광해 온 젊은층이 민주당과의 통합,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등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현실정치 행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한 무인정찰기 논란을 비롯한 민감한 안보 이슈의 파장, 5월 30~31일 진행될 사전투표에 따른 전체 투표율 등도 주목할 만한 변수다.

영향기자 torch@hk.co.kr

중원지역 시·도지사 선거 판세

의 결 번 호	2014지선175
언 론 사	㈜뉴시스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남산스퀘어 12층 대표이사 이 종 승
심의대상기사	뉴시스아이즈 2014년 4월 8일자~4월 14일자 16~17면 「박원순 시장 수성? 새누리당 탈환? 여야 사활 건 한판 승부…예측 불가」 25면 「여, 남경필 1위 … 맞설 야권 후보는 누구?」 26면 「최문순 1위, 새누리 3인 추격…'원주'가 변수」 27면 「여야 예선 2강 2약 … 본선은 변수 많아 '혼전'」 32면 「여, 홍준표·박완수 재대결 …야, 단일화 관건」 33면 「여야 경선 막판까지 혼선 … 우근민 출마 촉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충남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 대전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원순 시장 수성? 새누리당 탈환? 여야 사활 건 한판 승부…예측 불가

(전략) 한국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코리아리서치와 함께 지난달 23~24일 서울지역 유권자 706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 박 시장(48.9%)은 정 후보(47.2%)를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호도는 정 후보(45.6%), 김 후보(27.9%), 이 후보(7.7%) 순이었다.

이에 앞서 매일경제신문과 MBN, 메트릭스가 지난달 14~16일 각 지역별 유권자 600명씩을 대상으로 전국 6개 광역시·도 단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는 박 시장과 정 후보의 양자대결 시 박 시장이 47.1%, 정 후보가 40.7%로 나타났다. 박 시장과 김 후보 양자대결의 경우 박 시장이 50.0%, 김 후보가 32.0%로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은 정 후보가 36.3%로 선두였고, 김 후보 19.7%, 이 후보 6.3%로 나타났다.



이슈진단 | 지방선거 50여일 앞…안갯속 광역단체장 판세

박원순 시장 수성? 새누리당 탈환?
여야 사활 건 한판 승부…예측 불가

서울시장

새누리 비장전 봇사…경선 열기 고조



지지율, 박원순-정몽준 '초접전'

여, 남경필 1위 … 맞설 야권 후보는 누구?

(전략) 일단 새정연 예비후보 사이에선 김 전 교육감과 김진표 의원이 박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23일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선 김 의원이 18.3%의 지지율로 1위를, 김 전 교육감은 16.5%로 김 의원과 1.8% 포인트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10.7%로 뒤를 이었고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1.0%에 그쳤다.

또 지난달 24~25일 CBS의 여론조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적합도는 김 의원이 18.7%로 가장 높았고, 김 전 교육감 12.3%, 원혜영 의원 9.0%, 없음 · 모름 · 무응답 56.5%였다.

문제는 김 의원과 김 전 교육감 모두 남경필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뒤진다는 것이다. CBS 여론조사에서 남경필 의원을 새누리당 후보로 가정했을 때 남 의원과 김진표 의원의 양자대결은 39.5%대 22.3%로 남 의원이 앞섰고, 남 의원과 김 전 교육감도 43.6%대 22.0%, 남 의원과 원 의원 역시 44.7%대 17.0%로 어느 경우든 남 의원이 큰 차이의 우세를 보였다.(후략)



여, 남경필 1위…맞설 야권 후보는 누구?

경기지사

'정몽준-김황식'-'박원순' 대결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으면서 날로 묘미를 더해가는 서울시장 선거와 달리 경기도지사 선거는 상대적으로 '맥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컷오프 없이 남경필 · 원유철 · 정병국 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모두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지난달 31일 결정됐지만, 사실상 남경필 의원이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머지 세 예비후보를 몇 배 이상 앞서왔기 때문이다.

'4파전' 확정 전, 가장 최근인 지난달 22~23일 진행된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남경필 의원은 31.7%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병국 의원이 6.6%, 원유철 의원 5.4%, 김영선 전 의원 5.3% 순을 보였지만, 격차는 미미하다.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컷오프를 하지 않고 3월 말 재여론조사 후 '4파전'을 결정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 만큼 2차 레이스에서도 남경필 독주 체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지난 3일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은 긴급회동을 갖고 "남경필 의원을 포함해 경선후보를 2배수로 압축해줄 것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역자치단체장 경선 방식을 3가지로 압축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은 배심원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을 우선 경기도에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정연의 고민은 경선 룰보다는 딴 곳에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하나같이 출마자들이 새누리당에 큰 차이로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람몰이 효과'를 기대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으로 당 내부에서마저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보군 전체가 힘을 쓰지 못하는 형국이다.

남경필 원유철 정병국

김영선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김창호 백현종

일단 새정연 예비후보 사이에선 김 전 교육감과 김진표 의원이 박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23일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선 김 의원이 18.3%의 지지율로 1위를, 김 전 교육감은 16.5%로 김 의원과 1.8% 포인트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10.7%로 뒤를 이었고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1.0%에 그쳤다.

문제는 김 의원과 김 전 교육감 모두 남경필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뒤진다는 것이다. CBS 여론조사에서 남경필 의원을 새누리당 후보로 가정했을 때 남 의원과 김진표 의원의 양자대결은 39.5%대 22.3%로 남 의원이 앞섰고, 남 의원과 김 전 교육감도 43.6%대 22.0%, 남 의원과 원 의원 역시 44.7%대 17.0%로 어느 경우든 남 의원이 큰 차이의 우세를 보였다.

판세의 핵심은 '부동층 공략'이다.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이념 성향은 보수(35.7%)가 진보(24.9%)를 앞섰지만 중도가 39.4%에 달했다. 충분히 승기를 끌어올 수 있는 이 중도층 표심 비중에 새정연은 사활을, 새누리당 역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수원=갈태웅 기자 tukal@newsis.com

최문순 1위, 새누리 3인 추격… '원주'가 변수

(전략) 실제 'G1 강원민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코리아에 의뢰해 강원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17일 유선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최문순 현 지사가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을 따돌리며 여유있는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결과 최문순 현 지사 37.9%, 이광준 전 춘천시장 10.8%,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8.6%,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 4.3%로 나타났다. (후략)

이슈진단 | 지방선거 50여일 앞…안갯속 광역단체장 판세

최문순 1위, 새누리 3인 추격…'원주'가 변수



최문순 이광준 정창수 최홍집

강원지사

6·4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간 양자대결 구도 속에 통합진보당이 얼굴을 내밀었다.

새누리당은 이광준(58) 전 춘천시장과 정창수(57)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 최홍집(62) 전 강원랜드 사장이 후보 자리를 두고 치열한 공천전(戰)을 벌이며 기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막이 오른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경선은 20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막을 내린다.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이날 열릴 강원도지사 선출대회에서 본선에 오를 최종 후보를 선택한다.

경선투표는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의 방식으로 치러 본선 후보를 결정한다.

경선 선거운동은 13~19일 7일간 진행된다. 예비후보 3명은 문자메시지와 홍보물, 텔레비전 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서 자신이 왜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돼야 하는지를 말하게 된다.

강원도지사 경선전의 열기가 점차 달아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흥행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

새누리당이 바라는 대로 경선전 흥행이 될 경우 잔잔하던 판세는 서서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원도지사 후보는 현재 최문순(58) 강원도지사다.

지난 2일 마감된 도지사 후보 공천 접수에 최 지사만 신청함으로써 단독 후보가 됐기 때문이다.

최 지사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이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출마 선언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자신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G1 강원민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코리아에 의뢰해 강원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17일 유선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최문순 현 지사가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을 따돌리며 여유있는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결과 최문순 현 지사 37.9%, 이광준 전 춘천시장 10.8%,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8.6%,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 4.3%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가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되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경선을 통해 등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당력이 점차 결집하면서 응집된 힘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국회의원 9석 모두를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최 지사에게는 불리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3월 강원도지사 선거 판세는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최 지사가 1위를 했지만 4월, 5월, 6월 판세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판의 균형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가질 첫 번째 텔레비전 토론회 이후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파 텔레비전 토론회의 영향력이 상당한 탓이다.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는 영동 영서 간 지역 간 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정창수·최홍집 예비후보가 강릉 출신이고 최 지사가 춘천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 표심은 새누리당 후보에 쏠릴 것이고 춘천권 표심은 최 지사에게 더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소외된 원주권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는 강원도 3대 도시(강릉·춘천·원주시) 중 인구 30만이 넘는 유일한 도시인만큼 유권자 수도 다른 지역보다 많아 자연스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에 이광준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원주에 사무실을 차렸고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정창수 예비후보도 원주시청 주변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는 등 원주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광준 예비후보는 "원주가 유권자 수가 많은 곳이라서 이번 선거의 관건은 원주 표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지사 선거가 50여일 다가오면서 각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NN

춘천=김경목 기자 photo31@newsis.com

여야 예선 2강 2약 … 본선은 변수 많아 '혼전'

(전략) 청주 KBS가 지난달 24일 발표했던 '도지사 예비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35.7%로 윤 예비후보 14.8%, 이 전 교육감 14.7%, 서 예비후보 4.5%, 안 전 예비후보 3.3% 등 당시의 여권 예비주자 4명을 모두 제쳤다.

통합진보당 신장호 예비후보는 2.0%, 부동층으로 볼 수 있는 모름·무응답은 24.9%였다.

지지율 순위가 윤진식-이기용-서규용-안재헌인 점은 1대 1 가상대결, 당선 가능성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대 1 가상대결에서 이 지사는 50.0%로 윤 후보(31.7%)를 18.3%P 차로 앞섰다.

(중략)당시 여론조사는 KBS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충북 12개 시·군의 19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유무선 RDD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P였다.(후략)



여야 예선 2강 2약…본선은 변수 많아 '혼전'

이시종 윤진식 서규용 신장호

충북지사

선거일을 50여일 남겨둔 현재 충북지사 선거전 판세는 '2강 2약'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당에선 예선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고 야당 주자는 겉으론 여유롭지만, 속으론 조바심을 내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에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배수진을 친 윤진식 예비후보가 당내 경쟁상대인 서규용(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예비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여당 경선은 맥빠진 분위기가 됐다. 윤 예비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던 이기용 전 도교육감이 자진 사퇴하고 안재헌 예비후보 역시 '컷-오프'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시종 지사는 윤진식-서규용 후보가 벌이는 여당 예선전을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고 통합진보당 신장호 예비후보는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여당의 경선 레이스가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 판세만을 기준으로 하면 윤 예비후보와 이 지사가 본선에서 맞붙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다.

최근 공개된 언론사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청주 KBS가 지난달 24일 발표했던 '도지사 예비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35.7%로 윤 예비후보 14.8%, 이 전 교육감 14.7%, 서 예비후보 4.5%, 안 전 예비후보 3.3% 등 당시의 여권 예비주자 4명을 모두 제쳤다.

통합진보당 신장호 예비후보는 2.0%, 부동층으로 볼 수 있는 모름·무응답은 24.9%였다.

지지율 순위가 윤진식-이기용-서규용-안재헌인 점은 1대 1 가상대결, 당선 가능성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대 1 가상대결에서 이 지사는 50.0%로 윤 후보(31.7%)를 18.3%P 차로 앞섰다.

당선 가능성은 이 지사가 39.3%로 가장 높았고 윤 의원은 12.0%, 서 예비후보는 3.3%였다.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51.2%로 이달 말 출범할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새정치연합)의 2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통합진보당은 2.7%, 정의당은 0.9%다.

당시 여론조사는 KBS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충북 12개 시·군의 19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유무선 RDD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P였다.

지사 선거전의 관전 포인트는 이 지사의 예비후보등록 시점에 쏠린다. 이 지사의 등판 시기는 여당 후보가 결정되는 이달 22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지사는 지지도가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는 점엔 안도하지만 정당지지도가 '합당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돼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속정당의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인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점도 이 지사에겐 약점이다.

본선전이 전개되면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선 여야 주자가 박빙 승부를 벌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보인다. NN

청주=연중영 기자 jyy@newsis.com

충북도청 전경

여, 홍준표 · 박완수 재대결 …
야, 단일화 관건

(전략) 가장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홍 지사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에서 홍 지사는 41.1%, 박 전 시장은 32.8%로 홍 지사가 8.3%포인트 앞섰다.(후략)

이슈진단 | 지방선거 50여일 앞…안갯속 광역단체장 판세



홍준표 박완수 김경수 강병기 정영훈

여, 홍준표 · 박완수 재대결…야, 단일화 관건

경남지사

새누리당 경선 일정과 야권 주자들의 정책 제시가 본격화하면서 경남지사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선 가도에 도전장을 낸 인물들은 여야를 아울러 모두 5명.

새누리당 경선을 놓고는 홍 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양 측은 지난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이어 두 번째 당내 경선 경쟁을 한다.

야권에선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과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정영훈 새정치민주연합 신주갑 지역위원장이 도전장을 냈다. 3명 모두 18개 시군을 돌며 얼굴 알리기와 세몰이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홍 지사와 박 전 시장의 리턴매치가 성사된 새누리당 경선은 7일부터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12일까지의 경선 활동 기간 TV토론회 2회와 합동연설회 3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펼친다.

새누리당 경남지사 선거 경선인단은 지난 대선 유권자 기준 0.4%인 1만431명(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비율)이다. 13일 선거인단 투표를 하고, 14일 후보자 선출대회에서의 투표 결과와 사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 최종 득표수에 따라 후보를 결정한다.

지난달 31일부터 14일까지 휴가를 내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돌입한 홍 지사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짧은 재임기간 성과를 바탕으로 당당한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했다.

홍 지사는 지난 경남도정 운영의 성과로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한 부채 감축과 항공우주산단, 해양플랜트산단, 나노융합산단 등 역점사업의 정부 지역특화산단 선정 등을 꼽는다.

특히 홍 지사는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광역단체장의 정치력을 강조하며 박 전 시장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반면 진주의료원 폐업 등 자신의 정치적 결단이 '독단과 독선'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넘어야 할 과제다.

지난 2월 일찌감치 시장직을 내려놓고 경남지사 선거전에 뛰어든 박완수 전 창원시장은 홍 지사에 대한 견제와 정책공약 제시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박 전 시장은 맨 먼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위축된 서부경남지역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경남행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 지사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어 홍 지사를 향해 '불통의 도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30여 년간 행정가의 길을 걸어 검증된 행정 능력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박 전 시장은 "더 이상 경남도정이 정치인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동시에 경남도 평양사무소 설립, 낙동강 유람선 운항, 범도민 기업사랑운동 전개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에 따른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가장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홍 지사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에서 홍 지사는 41.1%, 박 전 시장은 32.8%로 홍 지사가 8.3%포인트 앞섰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과 정영훈 변호사,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등 3명의 주자가 나선 야권은 역시 후보 단일화가 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을 통해 김경수, 정영훈 두 예비후보가 한명으로 압축된다 해도 새정치연합과 통합진보당 후보 간 단일화라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남아있다.

김경수, 정영훈 예비후보가 야권단일화에 뜻을 같이하는 반면 강병기 예비후보는 통합진보당 내 사정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라는 관측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영의 두 예비후보는 '경청 탐방(김경수)'과 '경남 319사랑(정영훈)' 등을 통해 18개 시군을 돌며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강병기 예비후보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물론 탈원전 대책 추진과 농성혁신위원회 구성 등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newsis.com

여야 경선 막판까지 혼선 … 우근민 출마 촉각

(전략) 지난달 19일 KBS제주와 도내 인터넷언론 5사(미디어제주 · 시사제주 · 제이누리 · 제주의 소리 · 헤드라인 제주)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후보별 지지도는 원희룡 예비후보 48.5%,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 10.6%, 무수속 우근민 지사 9.1%로 원 전 의원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전 지사 6.2%,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5.7%, 새누리당 김방훈 전 제주시장 4.5%, 김경택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1.3%로 나타났다.

당내 경선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별 지지도는 원희룡 64.2%, 김방훈 7.0%, 김경택 3.6%, 양원찬 후보 2.5% 순으로 역시 원 전 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22.7%%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지지도는 김우남 의원이 30.8%, 신구범 19.4%, 고희범 14.4%, 로 조사됐다.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35.4%였다.(후략)



여야 경선 막판까지 혼선…우근민 출마 촉각

제주지사

6·4 지방선거 50여일을 앞둔 제주도지사 선거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판세 속에서 현재는 당 공천을 앞둬 예비후보들의 경선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새누리당 경선 불참을 선언한 이후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거취가 아직도 불투명해 제주 지방선거 판세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얘기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9일과 10일 제주도지사 경선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고, 3일까지 후보 공모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는 20일을 전후해 후보를 확정하면 비로소 제주도지사 선거는 우열의 판세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는 김경택 전 제주도정무부지사(60), 김방훈 전 제주시장(59), 원희룡 전 국회의원(51)이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우남 국회의원(60), 고희범 전 민주당도당위원장(61),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72), 박진우 한국어류연구소대표(48) 등이 나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우근민 제주지사의 출마여부다. 우 지사는 지난달 15일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불참한다고 발표 한 후 출마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 지사는 새누리당 중앙당 경선관리위원회가 당초 2:3:3:2(대의원 20% · 당원 30% · 국민경선 30% · 여론조사 20%)의 당원경선에서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선회해 결정함에 따라 경선 불참을 보이곳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 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이 겨루는 선거로 치러질지 아니면 우근민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3파전으로 갈지가 아직 분명치 않은 상황에 있다.

무소속 우 지사를 포함한 3파전일 경우, 우 지사의 출마포기로 양당이 경쟁하는 구도로 될 경우의 판세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에서는 후자의 경우 판세는 선거 막판까지 혼전에 혼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근민 지사의 출마여부는 10일 새누리당 후보가 결정되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우열 윤곽이 드러나는 이달 중순께를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9일 KBS제주와 도내 인터넷언론 5사(미디어제주 · 시사제주 · 제이누리 · 제주의 소리 · 헤드라인 제주)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후보별 지지도는 원희룡 예비후보 48.5%,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 10.6%, 무수속 우근민 지사 9.1%로 원 전 의원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전 지사 6.2%,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5.7%, 새누리당 김방훈 전 제주시장 4.5%, 김경택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1.3%로 나타났다.

당내 경선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별 지지도는 원희룡 64.2%, 김방훈 7.0%, 김경택 3.6%, 양원찬 후보 2.5% 순으로 역시 원 전 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22.7%%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지지도는 김우남 의원이 30.8%, 신구범 19.4%, 고희범 14.4%, 로 조사됐다.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35.4%였다.

이 조사는 지난달 원희룡 전 의원이 사실상 제주도지사 선거전에 뛰어 든 후 처음으로 반영된 여론이다. 지역 정가는 이후 10여일이 지나면서 지지도가 다소 출렁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N

제주=강정만 기자 kjm@newsis.com

의 결 번 호	2014지선176
언 론 사	경북도민일보(주)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대표이사 윤 두 영
심의대상기사	경북도민일보 2014년 4월 14일자 3면「여야 광역長 대진표 속속 확정…수도권 초접전 양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여야 광역長 대진표 속속 확정… 수도권 초접전 양상

(전략) 새누리당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 의원과 박 시장이 오차 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YTN과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이 지난 1~3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정 의원은 43.8%를 얻어 42.7%를 기록한 박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후략)

경북도민일보

2018년 04월 14일 토요일 1면 | 종합

여야 광역長 대진표 속속 확정… 수도권 초접전 양상

6·4 지방선거 여야 종간 대진표 현황

광역시도	새누리	새정치연합
서 울	정몽준 김황식 이혜훈 (30일)	박원순
부 산	서병수 박민식 권철현 (22일)	김영춘 이해성 (미)
대 구	서상기 조원진 권영진 이재만 (20일)	김부겸
인 천	유정복 안상수 (23일)	송영길
광 주	이정재	강운태 이용섭 윤장현 (미)
대 전	박성효 이재선 노병환 (18일)	권선택
울 산	김기현	이상범
경 기	남경필 정병국 (20일)	원혜영 김진표 김상곤 (미)
강 원	김진태	오중기
충 북	윤진식	이시종
충 남	안희정 박해수 (14일)	김장수 정광호 (미)
전 북	박철곤	유성엽 송하진 (미)
전 남	이동희	이낙연 주승용 이석형 (미)
경 북	김관용	이시종
경 남	이광수 홍문표 정진석 (7일)	인재정
제 주	이경은 정병수 최종원 (20일)	최문순
세 종	유한식	김무성 고희범 신구범 (미)
		이춘희

•후보 이름은 한계도표, 선수(동일선수일 경우 가나다순), 정파 순으로 종전 •새정치연합의 굵표(미)는 미경의 의미 •빨색 단체장일 경우에는 기호 건계 표기

17개 광역단체장 중 새누리 8·새정치연합 10곳 영호남, 지역구도 영향 선거결과 이변 없을 듯 경선 후유증·기초공천 유탄 등 표심 변수 주목

여야의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500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전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13일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10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새누리당에서는 당내 경선과 경쟁 후보 사퇴, 단독 응모 등으로 제주지사(원희룡), 울산시장(김기현), 세종시장(유한식), 경북지사(김관용), 충북지사(윤진식) 후보가 결정됐다. 최악지인 호남에서는 광주시장(이경재), 전남지사(이낙연), 전북지사(유성엽) 후보가 최고위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나 사실상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서울시장 후보를 끝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서울시장(박원순), 대구시장(김부겸), 인천시장(송영길), 대전시장(권선택), 울산시장(이상범), 강원지사(최문순), 충남지사(안희정), 충북지사(이시종), 경북지사(오중기), 세종시장(이춘희) 후보가 본선무대에 각각 진출한다.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에서는 지역구도의 영향으로 선거 결과에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선거 전문가마다 예측이 엇갈린다. 선거일에 기까워질수록 여야 후보들이 상대 후보를 향해 '날 좀' 을 드러내는 상호 폭로전 속에 판세를 뒤흔드는 와일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부동표의 움직임도 관건이다.

또 치열한 당내 경선 및 경선 후유증, 여야의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 변백도 본선에 영향을 미칠 잠재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은 초접전 = 최대 승부처답게 '박빙지' 가 선거전에서 여야 각 당이 당력을 쏟아붓는 입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경선을 통해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을 후보로 확정한다.

새누리당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 의원과 박 시장이 오차 범위내에서 접점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YTN과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이 지난 1·2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정 의원은 43.8%를 얻어 42.7%를 기록한 박 시장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전체적인 서울시장 선거판세는 새누리당의 후보경선이 끝나고 박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5월초부터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며 우열이 가려질 전망이다.

인천에서는 재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현 시장과 새누리당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결한다. 최근들어 판세를 섬사리 경치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양당은 진단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여야 모두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경병국 의원이 고배전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원혜영 김진표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겨루고 있다.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경선의 틀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어 결과는 예측불허다.

◇충청·강원…'현역 프리미엄'+'인물대결' 혼전 = 정당 지지율이 뒤집 변화 것이나, 새정치연합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인물론으로 효를 것이나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며 승리를 장담한다.

그러나 인물론을 점쳐시키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충남에서는 진노(진노무현) 진영의 대표성을 지닌 새정치연합 소속 안희정충남지사가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명수 홍문표 의원과 정진석 전 국회사무총장을 모두 앞서고 있다.

강원에서도 새정치연합의 최문순 현 지사가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광준 전 춘천시장, 정창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최종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을 두렷의게앞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충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현 지사와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윤진식 예비후보가 접전 중이다.

대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권선택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새누리당에서는 박성효 의원과 이재선 전 의원, 노병환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영·호남은 텃밭 효과…부산진 혼전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본선보다는 최종 후보로 공천받기 위한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하다.

다만 부산이 야당끼리에 롭싸여 있다. 부산시장에 무소속으로 도전한 오거돈 전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전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뭰

의 결 번 호	2014지선177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3(인계동) 대표이사 임 재 율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4년 4월 14일자 1면「현삼식, 2위와 2배 이상격차 '선두'」 6면「새정연, 도지사 경선룰 따라 지지율 순위 '엎치락 뒤치락'」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양주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최초 공표·보도하면서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히고 질문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하도록 표기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현삼식, 2위와 2배 이상격차 '선두'

중부일보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양주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소속 현삼식 양주시장이 29.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1~12일 양일간 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700명(성별분포 남성 50.9%, 여성 49.1%·19~29세 15.9%, 30대 19.6%, 40대 24.0%, 50대 19.7%, 60대 이상 20.9%)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임의 번호 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최대 허용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현삼식, 2위와 2배 이상 격차 '선두'

<양주시장>

중부일보-리얼미터 양주시장 선거 여론조사

선거특별취재반·김성훈기자

중부일보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양주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소속 현삼식 양주시장이 29.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장은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독주했다.

이번 조사는 6·4지방선거 양주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여야 주자들과 새누리당 현삼식 시장 등 모두 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관련기사 3면

새누리당 소속은 김억기 전 경기도 교통건설국장, 김영도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임경식 양주시의회 부의장, 현삼식 양주시장 등 4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소속은 이성호 전 양주시 도시건설국장, 이홍규 전 경기도의원 2명이다.

이홍규·김영도·이성호·김억기 2위자리 놓고 오차범위 내 접전

당 지지도 與 51.9%·野 27.6%

여야 주자들의 단순 지지율만 놓고 보면 '1강 4중1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현 시장에 이어 새정연 이홍규(12.0%), 새누리당 김영도(11.1%), 새정연 이성호(10.0%), 새누리당 김억기(8.8%) 예비후보가 2위 자리를 놓고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현 시장과 이들 4명 예비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17.9~20.2%p였다. 2위권을 뒤쫓는 새누리당 임경식 예비후보는 5.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6%였다.

새누리당 후보 지지도에서는 '1강3약' 구도가 선명했다. 현 시장이 31.6%로 여유 있게 앞선 가운데 김억기(11.6%), 김영도(10.0%), 임경식(8.8%) 예비후보가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0%였다.

새정연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홍규 예비후보가 26.7%를 얻어, 18.9%에 머문 이성호 예비후보에게 우위를 보였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무려 54.4%에 달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당 후보 지지도는 새누리당 51.9%, 새정연 27.6%로 큰 격차를 보였다. 무당파는 16.1%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1~12일 양일간 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700명(성별분포 남성 50.9%, 여성 49.1%·19~29세 15.9%, 30대 19.6%, 40대 24.0%, 50대 19.7%, 60대 이상 20.9%)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임의 번호 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최대 허용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양주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단위: %)

현삼식(현 양주시장)

이홍규(전 경기도의회 의원) 12.0

김영도(현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11.1

이성호(전 양주시도시건설 국장) 10.0

김억기(전 경기도 교통건설국장) 8.8

임경식(현 양주시의회 부의장) 5.6

잘모름 23.6

새정연, 도지사 경선룰 따라 지지율 순위 '엎치락뒤치락'

(전략) 김 전 교육감 측이 언론사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YTN의 여론조사의 경우 새정연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후보 적합도는 김상곤 30.3%, 원혜영 27.2%, 김진표 23.5% 순이었다. 하지만,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김진표 25.0%, 김상곤 21.8%, 원혜영 18.1% 순이었다. 새정연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큰 차이가 나는 셈이다.(후략)



중부일보

새정연, 도지사 경선룰따라 지지율 순위 '엎치락뒤치락'

김상곤-김진표-원혜영 엇갈린 셈법 '갈등 심화'

남윤진기자

김상곤, 새누리 지지층 제외 요구

새정연 지지층만 조사 땐 1위

김진표 중도 보수적 색채 강해

與 지지층 포함땐 역전 가능성

김진표, 연령별 투표율 보정 요구

당, 김상곤 의견 수용하자 반발

지난 총선 젊은층 투표율 저조

상향상 고령층에 인기 많아 유리

원혜영, 김-김 갈등 진화 '결층론'

여야 지지율 50%씩 반영 방식

어떤 룰 적용하든 통과 자신감

경선 파국 자단 못 긴긴 듯

의 결 번 호	2014지선178
언 론 사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광주일보사 대표이사 김 여 송
심의대상기사	광주일보 2014년 4월 14일자 1면「광주시장 강운태 · 이용섭 오차범위내 '혼전' 전남지사 이낙연 · 주승용 1.3%P '초박빙'」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광역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최초 공표 · 보도하면서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 · 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한 여론조사 보도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은 밝히고 질문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하도록 표기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광주시장 강운태 · 이용섭 오차범위내 '혼전'
전남지사 이낙연 · 주승용 1.3%P '초박빙'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 · 4 지방선거 광주 · 전남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 광주에서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선두를 놓고 오차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이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타래' 에 의뢰해 지난 12일 광주 · 전남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154명(광주 1085명 · 전남 1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광주와 전남 모두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이다.(후략)

光州日報
2014년 04월 14일
01면 (종합)

광주시장 강운태·이용섭 오차범위내 '혼전'
전남지사 이낙연·주승용 1.3%P '초박빙'

광주일보-(주)타래 새정치연합 후보 여론조사
▶관련기사 4·5면

광주시장 적합도
강운태 40.1·이용섭 36.9%
윤장현 12.2%로 3위

전남지사 적합도
이낙연 33.7·주승용 32.4%
이석형 12.9%에 그쳐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 광주에서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선두를 놓고 오차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윤장현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이 뒤쫓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응답 층에서는 강 시장, 이 의원과 윤 위원장이 근소한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초박빙의 차이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 의원은 전남 서부에서, 주 의원은 전남 동부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전남 동서간 지지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장휘국 현 교육감이 오차범위내에서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에 앞서는 등 양강구도를 형성한 반면 전남교육감은 장만채 현 교육감의 독주체제였다.

이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타래'에 의뢰해 지난 12일 광주·전남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154명(광주 1085명·전남 1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광주와 전남 모두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이다.

조사결과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다자대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운태 광주시장이 35.7%로 선두를 달렸고,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이 33.0%로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10.1%) ▲무소속 이병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5.3%) ▲새누리당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4.0%)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2.4%) ▲노동당 이병훈 노무사(1.9%) 순이었다. 무응답층은 7.6%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강 시장이 40.1%로, 이용섭 의원(36.9%)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장현 전 위원장은 12.2%였다.

전남지사 후보 지지도(다자대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각각 32.5%와 30.4%의 지지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같은 당 이석형 전 함평군수(11.7%), 통합진보당 이성수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3.5%), 새누리당 이중효 가천대학교 겸임교수(3.0%) 순이었다. 무응답 층은 15.4%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이낙연 의원이 33.7%로, 32.4%를 얻은 주승용 의원과 1.3%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앞서며 초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12.9%에 그쳤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지지 유보층이 응답자 10명 중 2명꼴인 20.9%로, 아직까지 차기 전남지사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향후 부동층의 향배가 현재 박빙의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주승용 의원의 경선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에 대해 광주에서는 56.0%가, 전남에서는 48.2%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광주교육감은 장휘국 현 교육감이 28.1%로 24.7%의 지지율을 보인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에 앞섰고 전남교육감은 장만채 현 교육감이 39.1%로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15.6%)을 크게 앞섰다.

한편 흔들리는 안철수 리더십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지역민 10명 중 5명(50%)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과거 대권 후보 당시 광주·전남에서 나온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 최권일기자 ckl@kwangju.co.kr

(23.8×22.1)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85
언 론 사	주식회사 경향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대표이사 현 재 오
심의대상기사	경향일보 2014년 4월 23일자 2면「의정부·양주시장 후보지지도 여론조사」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의정부시장, 경기 양주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지난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 'J일보가 …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의정부·양주시장 후보지지도 여론조사

의정부 안병용 현 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 각당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일보가 지난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정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후략)

의정부·양주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의정부시장 안병용 현 시장 '압도'…양주시장 현삼식 현 시장 2위와 2배 격차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의정부 안병용 현 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 각당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일보가 지난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정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새누리당 상대후보 가운데 안 시장과의 경쟁력은 강세창, 김남성후보로 나타났다.

안병용 현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의 경쟁력은 안시장이 40.4% 김경호 도의회의장 16.4%, 이용 한국정보행정정책연구회장 9.7%로 나타났으며 잘모름이 33.5% 이다.

또한 안병용 현시장과 새누리당 후보 4명과의 가상 대결에는(안병용 42.1% 강세창 37.8%) (안병용 43.8% 김남성 37.8%) (안병용 48.4% 김승재 31.9%) (안병용 49.9% 김시갑 30.9%)로 모두 안시장이 앞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가상대결에서 새누리당 소속 후보 가운데 강세창 예비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J일보가 양주시장 예비후보에 양주지역 투표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현삼식 (새누리당) 현 양주시장이 29.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를 따 돌리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시장은 자당 후보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독주체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사는 6, 4지방선거 양주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여야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억기 (전 경기도 교통건설국장), 김영도 (새누리당 양주, 동두천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임경식 (양주시의회 부의장) 이다.

현삼식 현 시장에 이어 경쟁력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흥규 (12.0%) 새누리당 김영도(11.1%) 새정치민주연합 이성호 (10.0%), 새누리당 김억기(8.8%) 예비후보가 2위자리를 놓고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삼식 시장과 4명의 예비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17.0 -20.2%이며 임경식(새누리당) 예비후보 5.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6% 였다.

이 조사는 여론전문기관 (의정부 한길 리서치,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4.4%P 양주시 리얼미터, 최대 허용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 ±3.7%P)에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유선전화 등의 방식으로 실시했다

/황호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186
언 론 사	㈜한라일보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이사 유 병 호
심의대상기사	한라일보 2014년 4월 22일자 3면「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 관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주 교육감)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 관심↑

(전략) 지난 3월 16~1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4명의 후보가 바닥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KBS제주와 제주지역 5개 인터넷언론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다.

분석 결과 후보별 지지도는 윤두호 예비후보 12.6%, 이석문 예비후보 11.2%, 양창식 예비후보 10.4%, 강경찬 예비후보 10.2%였다. 고창근 예비후보(5.1%), 김익수 예비후보(2.4%), 김희열 예비

후보(1.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무응답층은 46.6%에 달했다. 4명의 예비후보가 10%선을 가까스로 넘기면서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어 순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후략)

한라일보
2014년 04월 22일
03면 (종합)

제주도교육감 선거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 관심 ⬆

빅 이슈 실종… 공약 차별성도 없어
절반 이르는 부동층 공략 지켜 볼만

6월 4일 치러지는 제15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양성언 현 교육감은 일찍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금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는 강경찬(62) 교육의원, 고창근(63)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익수(65) 전 제주관광대 부총장, 김희열(60) 제주대 교수, 양창식(61) 전 탐라대 총장, 윤두호(63) 교육의원, 이석문(55) 교육의원 등 7명이다.

지난 3월 16~1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4명의 후보가 바닥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KBS제주와 제주지역 5개 인터넷언론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다.

분석 결과 후보별 지지도는 윤두호 예비후보 12.6%, 이석문 예비후보 11.2%, 양창식 예비후보 10.4%, 강경찬 예비후보 10.2%였다. 고창근 예비후보(5.1%), 김익수 예비후보(2.4%), 김희열 예비후보(1.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무응답층은 46.6%에 달했다. 4명의 예비후보가 10%선을 가까스로 넘기면서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어 순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한라일보·KCTV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됐다. 양창식·고창근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 경합을 벌이는 등 향방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20.6%로 줄었다.

이번 교육감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보수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성사 여부다.

'제주 올바른 교육감 후보추대 협의회'가 지난 15일 제주자치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불을 지폈다. 이들은 "입후보의 난립을 조정하기 위한 선택적 방법에 중지를 모아서 정책토론 또는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상위권을 단일화하려 한다"며 7명의 예비후보들에게 단일화 참여를 요청했다.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강경찬·고창근·김희열·양창식·윤두호 예비후보는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석문 예비후보는 반대입장이다. 김익수 예비후보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17일엔 제주시내 상록회관에서 추대협의회 주최로 간담회가 열렸다. 동참 의사를 밝힌 강경찬·고창근·김희열·양창식·윤두호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이 날 예비후보들은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두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에도 불구 예비후보간 온도차로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은 도출되지 못했다. 대신 의견조율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여론조사, 정책토론 등 단일화 방법과 기준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지난 2010년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판을 달궜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빅 이슈가 보이질 않는다. 예비후보 7명 모두 '교사 행정업무 줄이기' '교원 지원책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을 정도로 사정은 변했다. '고입제도 개선' '무상교육 확대'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별반 차별성은 없어 보인다. 교육 이슈가 아닌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적잖다.

선거는 이제 40여일을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지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부동층은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지자 및 부동층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아젠다 설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전교조 등 관련 단체와 외곽 단체들의 영향·파급력도 또다른 관전 포인트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강경찬 예비후보


고창근 예비후보


김익수 예비후보


김희열 예비후보


양창식 예비후보


윤두호 예비후보


이석문 예비후보

(18.0×28.1)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87
언 론 사	㈜매일경제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대표이사 장 대 환
심의대상기사	매일경제 2014년 4월 16일자 6면「서울 정몽준·부산 권철현 與후보 약진」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강원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충북도지사, 부산광역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울 정몽준·부산 권철현 與후보 약진

정당마다 6·4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한창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가운데 새누리당은 영남과 경기 등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과 충남 등 4곳에서 확실한 우위다. 이는 상대 당도 인정하는 판세다.

하지만 서울 인천 충북 부산 강원 등 5곳은 여야의 판세 분석이 다르고, 전문가 전망 역시 갈린다. 다음달 15일 시작되는 본선에서 소위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격전지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새누리당은 최대 13곳,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 9곳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을 전망이다.(후략)

매일경제
2014년 04월 16일
06면 (정치)

지방선거 與野 경합지역 5곳 최근 판세는

서울 정몽준·부산 권철현 與후보 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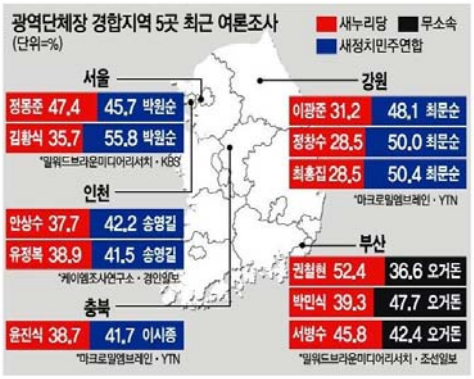
정당마다 6·4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한창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가운데 새누리당은 영남과 경기 등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과 충남 등 4곳에서 확실한 우위다. 이는 상대 당도 인정하는 판세다.

하지만 서울 인천 충북 부산 강원 등 5곳은 여야의 판세 분석이 다르고, 전문가 전망 역시 갈린다. 다음달 15일 시작되는 본선에서 소위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격전지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새누리당은 최대 13곳,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 9곳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서울 인천 충북은 당초 현직 시도지사들이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됐지만 새누리당 후보군이 압축되면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다.

서울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7선·서울 동작을)이 앞서는 모습이 포착된다. KBS·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의 13일 여론조사에서 정 의원(47.4%)이 박 시장(45.7%)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조선일보·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의 11~12일 조사에서도 정 의원(48.5%)이 박 시장(45.5%)에 앞섰다.



수도권·충청 승부처…무공천 후폭풍 주목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선 흥행몰이 덕분이라고 일축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본선에서 1대1 대결이 펼쳐지면 정책 등에서 박 시장이 우월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영길 시장과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이 접전이다. 경인일보·케이엠조사연구소가 이달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 41.5% 대 유 의원 38.9%였다. 안상수 전 시장 역시 송 시장을 추격 중이다.

새누리당의 한 공천위원은 "당내 경선이 끝나면 보수층 결집 효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은 이시종 지사(새정치민주연합 소속)와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청주고 40회 동기동창으로 리턴 매치를 벌이는 곳이다. 인물도 인물이지만 정당 선택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후보군이 가장 많아 전망이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1차로 후보를 압축했는데도 현재 권철현 전 대사, 박민식 의원, 서병수 의원 등 3파전 경선이 치열하다.

야권에서는 무소속으로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깃발을 들고 김영춘 전 의원과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사표를 던졌다.

YTN·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에서는 권 전 대사 43.9% 대 오 전 장관 44.3%, 서 의원 40.7% 대 오 전 장관 45.6%로 집계됐다. 그만큼 초접전이다.

강원은 최문순 현 지사가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들을 20%포인트 전후로 앞선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에서 승리를 장담한다. 20일 이광준 전 춘천시장,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정창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간 경선이 끝나면 높은 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수표가 결집될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변수는 안철수·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결단을 내린 기초선거 무공천 번복이다. 기초선거 공천 방침으로 인해 기초선거 후보들이 광역선거 후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무공천 번복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4월 첫째주 새정치민주연합은 33.4% 지지율을 보였지만 둘째주 들어 28.5%로 4.9%포인트 급락했다. 리얼미터는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상훈·이상덕·채종원 기자

(20.9×20.6)cm

의 결 번 호	2014지선188
언 론 사	(주)시대정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54번길 24, 9층 (중동, 천마프라자) 대표이사 권 기 현
심의대상기사	시대일보 2014년 4월 17일자 3면 「6.4 광역판세 … '12대5'냐, '7대10'이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강원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충북도지사, 부산광역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6.4 광역판세 … '12대5'냐, '7대10'이냐

(전략) CBS노컷뉴스와 포커스컴퍼니가 지난 1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과 정 의원의 지지율은 각각 51.9%, 31.3%로 20%p 이상의 격차를 보였지만 지난달 24~25일 조사에서는 박시장 39.0%, 정 의원 40.4%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중략) 유 전 장관은 당의 차출에 보답하듯 송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면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은 43.7%, 유 전 장관은 43.1%로 차이는 0.6%p에 불과했다.

충북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지사를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맹추격하며 오차범위 내 격전지로 변했다. YTN과 엠브레인이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윤 의원의 지지율은 각각 41.7%, 38.7%로 3%p차 였다.(후략)

6.4 광역 판세…'12대 5'냐, '7대 10'이냐

선거 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절반 가량 확정

16일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중 새누리당은 9곳, 새정치민주연합은 10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취약지역 경쟁자 사퇴, 취약지역 우선공천을 통해 충북·경북도지사 후보로 윤진식 의원, 김관용 현 경북도지사, 전남·전북도지사와 광주시장 후보로는 이중효 가천대 겸임교수, 박철곤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 등 5명이 각각 경선 없이 내정됐다.

또 11일 유일한 여론조사 경선으로 확정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시작으로 12일 세종시장과 울산시장 후보에 각각 유한식 현 시장과 김기현 의원, 14일에는 경남도지사 후보로 홍준표 현 지사가 선출됐다.

새정치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5명의 현역 단체장이 본선 직행 티켓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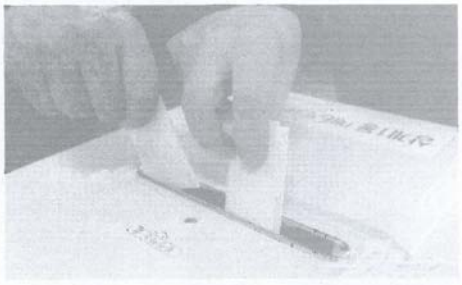
대구시장과 대전시장 후보는 김부겸·권선택 전 의원으로 확정됐고 경북도지사, 울산시장, 세종시장 후보에는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낙점됐다.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 진용은 오는 30일 서울시장 경선을 끝으로 완성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즈음 출전 선수가 대부분 가려질 예정이다.

◈ 승패 가를 접전지 5곳, 표심의 향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4 지방선거 전체의 승패를 가름할 접전지역은 5곳 정도로 압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여야가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불허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백중지역을 모두 가져가면 '12대 7', 새정치민주연합이 휩쓸면 '10대 7'의 최종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새누리당은 전체 17곳 중 텃밭인 영남권의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등 4곳의 수성을 장담하고 있다. 또 경기, 제주, 대전 등 3곳도 낙승을 자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기반인 호남권의 전북, 전남, 광주 등 3곳을 비롯해 안희정·최문순 두 현역 도지사를 앞세운 충남, 강원을 파란색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 역시 승부처는 수도권과 충청권이다.

서울의 경우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과의 경선 흥행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박빙' 판세를 만들었다.

CBS노컷뉴스와 포커스컴퍼니가 지난 1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과 정 의원의 지지율은 각각 51.9%, 31.3%로 20%p 이상의 격차를 보였지만 지난달 24~25일 조사에서는 박 시장 39.0%, 정 의원 40.4%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박 시장과 정 의원은 이후 여론조사들에서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어 서울시장 선거는 6월 4일의 최고 하일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인천시장과 새누리당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인천 승부도 이에 못지 않다.

유 전 장관은 당의 차출에 보답하듯 송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면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은 43.7%, 유 전 장관은 43.1%로 차이는 0.6%p에 불과했다.

충북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지사를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맹추격하며 오차범위 내 격전지로 변했다. YTN과 엠브레인이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윤 의원의 지지율은 각각 41.7%, 38.7%로 3.0%p차 였다.

부산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서병수 의원과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본선 못지 않은 예선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만만치 않은 기세로 새누리당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달 15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여야 모두 남은 주자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비후보들 간 분란이 커짐에 따라 경선 과정 관리가 본선 변수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고공비행을 바탕으로 압승을 거두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통합의 시너지를 현실화하며 전세를 뒤집느냐, 격전의 남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의 결 번 호	2014지선195
언 론 사	㈜한국일보미디어그룹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본관 6층 대표이사 조 상 현
심의대상기사	주간한국 2014년 4월 21일자 10면~11면「與7・野5 우세 속 5곳 혼전 양상 5월 중순 우열구도 확연해질 듯」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북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與7・野5 우세 속 5곳 혼전 양상 5월 중순 우열구도 확연해질 듯

(전략) 서울은 여야의 최대 승부처답게 중량감 있는 후보간 맞대결이 펼쳐진다. 새누리당은 현재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간 후보 결정전이 치열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한발 앞서가고 있는 형국이다. 미디어리서치의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 조사에서 정 의원은 42.4%, 김 전 총리

는 15.6%, 이혜훈 전 의원은 4.9%를 얻었다. 단순 수치만 보면 정 의원이 유리하지만 모름·무응답층도 37.1%나 됐다. 다소 불리한 형세이긴 하나 김 전 총리 측은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같은 기관의 정 의원이 여당 후보가 됐다고 가정한 박원순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48.5% 대 45.5%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정 의원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총리는 박 시장과의 대결에서 39.2%대 50.5%로 오차범위를 넘어선 수치로 뒤졌다. 아무래도 내부 경쟁은 상대당과의 대결에서 이길 가능성이 큰 예비후보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점을 감안하면 정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의 8부 능선을 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의 최근 조사에서도 정 의원은 43.8%를 얻어 42.7%를 기록한 박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CBS노컷뉴스와 포커스컴퍼니의 지난달 24~25일 조사에서도 정 의원이 40.4%로 박 시장(39.0%)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 측은 후보로 확정되면 컨벤션 효과를 타고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르는 데다, 김 전 총리를 지지하고 있는 친여-친박 성향 표심들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올 경우 본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박 시장을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중략)

송 시장을 상대로 한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새누리당 안상수 전 시장은 43.9%대 42.5%, 유전 장관은 43.8%대 42.0%로 양자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경기에서는 여야 모두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정병국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원혜영·김진표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겨루고 있다. YTN 여론조사에서 양자대결 시 남경필 47.6%-김진표 36.7%, 남경필 49.8%-김상곤 35.8%로 각각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남경필 49.7%-김진표 34.9%, 남경필 50.9%-원혜영 35.6%, 남경필 54.1%-김상곤 33.3%로 나타났다.(중략)

다만 충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지사의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접전 중이다. YTN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의 1~3일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윤 의원의 지지율은 각각 41.7%, 38.7%로 3.0% 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상태다.(후략)


10 주간한국 | politics

여야 광역단체장 1대1 구도 속속 확정

與 7·野 5 우세속 5곳 혼전양상


politics | 주간한국 11

5월 중순 우열구도 확연해질 듯

의 결 번 호	2014지선196
언 론 사	㈜조선뉴스프레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대표이사 김 창 기
심의대상기사	월간조선 2014년 5월호 108면~127면 「'지방선거=여당의 무덤' 공식 깨어지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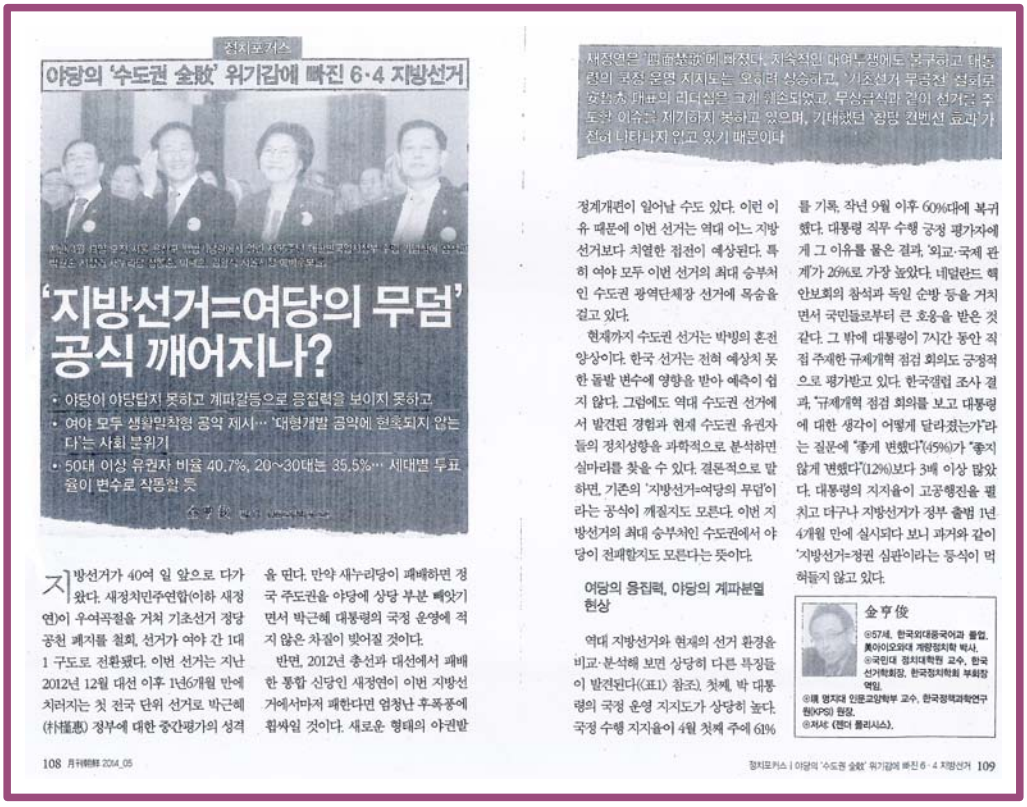
'지방선거=여당의 무덤' 공식 깨어지나?

(전략) 첫째, 후보 적합도이다. 4월 초 YTN·엠브레인 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는 정 후보 44.0%, 김 후보 20.1%, 이 후보 5.5%였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정 후보(62.3%)가 김 후보(17.8%)를 압도했다. 4월 중순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도 결과가

비슷했다.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정 후보 42.4%, 김 후보 15.6%, 이 후보 4.9%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차이가 더 벌어졌다. 정 의원이 63.9%로 1위였고, 김 전 총리는 12.9%, 이 최고위원은 3.7%였다.

(중략) YTN·엠브레인 조사(4월 1~3일)에 따르면, 새정연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김진표 의원이 25.9%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김상곤(21.8%), 원혜영(18.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새정연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김상곤 후보가 30.3%로 1위를 차지하고 그 뒤를 원혜영(27.2%)이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23.5%로 3위를 차지했다.

(중략) 한편, 본선 경쟁력은 유 후보가 앞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임 시장인 안 후보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표 6〉에서 보듯이, 4월 초 YTN·엠브레인 조사 결과, 인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에서 유 후보는 송영길(宋永吉) 시장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4.8%포인트 뒤지지만, 안 전 시장은 오차범위를 벗어난 7.7%포인트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정치포커스

야당의 '수도권 全敗' 위기감에 빠진 6·4 지방선거

'지방선거=여당의 무덤' 공식 깨어지나?

-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계파갈등으로 응집력을 보이지 못하고
- 여야 모두 생활밀착형 공약 제시… '대형개발 공약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사회 분위기
- 50대 이상 유권자 비율 40.7%, 20~30대는 35.5%… 세대별 투표율이 변수로 작용할 듯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우여곡절을 거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철회, 선거가 여야 간 1대1 구도로 전환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이후 1년6개월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박근혜(朴槿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다. 만약 새누리당이 패배하면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상당 부분 빼앗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반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한 통합 신당인 새정연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마저 패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야권발

새정연은 '피눈물'에 패했다. 지속적인 대여투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로 文재인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되었고, 무상급식과 같이 선거는 주도할 이슈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대했던 '정당 캔버스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모두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 목숨을 걸고 있다.

현재까지 수도권 선거는 박빙의 혼전 양상이다. 한국 선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영향을 받아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역대 수도권 선거에서 발견된 경험과 현재 수도권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지방선거=여당의 무덤'이라는 공식이 깨질지도 모른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야당이 전패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여당의 응집력, 야당의 계파분열 현상

역대 지방선거와 현재의 선거 환경을 비교·분석해 보면 상당히 다른 특징들이 발견된다(표1 참조). 첫째,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월 첫째 주에 61%를 기록, 작년 9월 이후 60%대에 복귀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국제 관계'가 26%로 가장 높았다. 네덜란드 핵안보회의 참석과 독일 순방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 같다. 그 밖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 회의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좋게 변했다'(45%)가 '좋지 않게 변했다'(1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대구나 지방선거가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실시되다 보니 과거와 같이 '지방선거=정권 심판이라는 등식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金亨俊

- ⊙57세, 한국외대몽골어과 졸업, 美아이오와대 게랑정치학 박사.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선거학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 ⊙現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 원장.
- ⊙저서 《랜더 폴리시스》.

돌째, 집권당이 계파분열 없이 상당한 응집력을 보이고 있다. 역대 집권당들은 지방선거에서 당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돼 선거에서 패배했다. 가령, 2002년 6월 지방선거는 12월 대선의 전초전이었기 때문에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비주류 출신인 노무현(盧武鉉) 대선 후보의 전적인 책임하에 치렀다. 그러나 당내 호남의 DJ 주류는 영남 출신 노무현 후보를 끊임없이 견제했다.

심지어 비주류는 노 후보의 대선 지지율이 급락하자 후보 교체론까지 들먹이며 흔들었다. 노 후보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반격으로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선거 등 이른바 영남 광역단체장 3곳 중 1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후보를 사퇴할 수도 있다는 배수진을 쳤다. 그만큼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상당히 심각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에는 집권당인 한나라당도 주류인 친이(親李)와 비주류인 친박(親朴) 세력 간에 내전(內戰)에 가까운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에는 친이 세력이 쇠퇴하면서 친박 중심의 세상이 됐다. 대통령과 청와대 의중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당내 전달될 정도로 응집력이 높다.

〈표1〉 역대 지방선거 특징과 2014년 지방선거 비교 · 분석

	2002년 지방선거	2006년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예측)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30%대	20%대	40%대	안정적 50%대
집권당	친DJ(주류) 대 친노무현(비주류) 분열	친노(주류) 대 비노(비주류) 분열	친이(주류) 대 친박(비주류) 분열	강력한 대통령 친위 체제
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체제	박근혜 대표 단일 체제	정세균 대표 체제 (친노+비노 공존)	김한길 · 안철수(주류) 대 친노(비주류)
특징	12월 대선 전초전 (노무현 대 이회창)	2007년 대선 전초전 (정동영 대 박근혜)	정몽준 대 정세균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유력 대권 후보 충돌
야권 연대	무	무	유 (민주당+민노당)	무
선거 시기	집권 5년차	집권 4년차	집권 3년차	집권 2년차
선거 결과	여당 참패 (수도권 전패)	여당 참패 (수도권 전패)	여당 패배 (서울 및 경기도 여당 승리/ 인천 야당 승리)	수도권 박빙 혼전
핵심 선거 이슈	▲김대중 후 개헌론(이원집정제) ▲부패정권 심판론	▲뉴타운 개발 ▲박근혜 피습 사건	▲무상급식 ▲4대강 개발 ▲천안함 (전쟁 대 평화)	▲생활 밀착형 이슈 ▲무상교통
투표 고려 요인*	정책공약 8.7% ▲속정정당 16.7% 능력(도덕성) 30% 주변평가 5.1% 출신 지역 1.3%	정책공약 10.6% ▲속정정당 21.0% 후보능력 16.8% 도덕성 3.9% 주변평가 4.9% 출신 지역 .9%	정책공약 25.3% ▲속정정당 20.0% 후보능력 10.5% 도덕성 7.0% 주변평가 4.3% 출신 지역 1.6%	-
투표율	48.8%	51.6%	54.5%	50%대(?)
북한 변수	무	무	'전쟁 대 평화' 프레임	북한 무인기 침투

*: 출처: 한국선거학회가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국민 의식 조사 자료.

110 月刊朝鮮 2014_05

안철수의 '철수(撤收) 리더십'의 한계

셋째,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계파 갈등으로 응집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과거 야당들은 지방선거 때 계파갈등 없이 똘똘 뭉쳤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6개월 후에 치러질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 이회창(李會昌)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선거의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다. 특히 선거 막판 서울시장 지원 유세에서 피습을 당한 박 대표의 병상 발언 "대전은요"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야당인 새정연은 어떠한가? 통합 신당까지 출범시켰지만 당내는 김한길·안철수(安哲秀) 공동 체제(주류)과 문재인(文在寅) 중심의 친노(비주류) 간에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당내 경쟁과인 친노(親虛) 세력은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주장하며 지도부를 흔들었다. 결국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민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기초선거 무(無)공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재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 결과, "공천해야 한다"가 53.4%로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46.6%)보다 많아 무공천은 철회됐다. 투표용지에 기호 2번은 부활되었지만 새정연의 합당 명분은 사라졌고, 안철수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되었다. 무엇보다 안 대표의 '철수(撤收) 리더십'이 한계를 보여줬다. 무공천 철회로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이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장수가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다는 것은 새정연에 큰 악재임에 틀림없다.

넷째, 야권이 주도하는 선거 이슈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과 뉴타운 개발 공약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승패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정책과학연구소(KPSI) 조사 결과,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인은 후보 능력과 도덕성(30%)이었다. 그다음으로 후보의 소

속 정당이 18.7%였다. 정책·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정책·공약이 25.3%로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만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2〉에서 보듯이 KPSI가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투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건이나 이슈로 천안함(29.0%), 4대강 개발(20.6%), 무상급식(1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무상급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시·도지사 선거에서 34.2%가 한나라당 후보, 46.3%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이슈가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4대강 개발 이슈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6·4 지방선거에선 과거 선거와는 달리 야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를 선점하지도 못하고 있다.

'무상교통' 공약 힘입어… 야당 '정권 심판론' 안 먹힌다는 의미

더구나, 여야가 대형 이슈보다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새누리당은 '가족행복'이라는 테마로 노인, 주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시리즈 공약을 내놓고 있으며, 새정연은 '국민생활비 경감'을 테마로 교통비·통신비·주거비 등에 대한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각종 공약의 이행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정당이나 유권자들이 더는 대형 개발 공약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정연의 김상

〈표2〉 2010년 지방선거에서 투표 영향 사건 및 이슈

이슈	전국 비율	시 · 도지사 선거에서 지지 후보 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미래연합	국민참여당
무상급식	19.5	34.2 (22.7)	46.3 (77.8)	9.4	–	6.0	3.4
4대강	20.6	34.9 (10.0)	50.3 (73.3)	1.7 (3.3)	.6	2.9	5.7 (13.3)
세종시	5.8	80.4 (67.5)	13.7 (12.5)	2.0	–		2.0
천안함	29.0	58.1 (56.3)	33.1 (43.8)	3.2	–	2.8	2.4
노무현 서거 1주기	5.7	1.8	85.2	–	–	–	–
MB 대북강경발언	2.8	35.7 (35.0)	64.3 (65.0)	–	–	–	–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안산 한경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비 경감을 위한 캠퍼스 미팅'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표(맨 왼쪽) 의원과 김상곤(맨 오른쪽) 전 경기교육감.

곤(金相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시한 무상교통 이슈는 당내 경쟁자들로부터 공격받고 언론에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판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상급식 이슈로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재미를 봤던 김상곤 후보는 무상교통 공약을 제기한 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추락하는 양상이다. 대형 공약에서 생활 밀착형 이슈로의 전환은 그만큼 야권이 제기할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보수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안보 이슈'를 야권은 '전쟁과 평화' 프레임으로 바꿔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했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연급과 독일 드레스덴대학에서 밝힌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의 3대 제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통일구상'의 발표 여파인지는 몰라도, 북한이 최근 서해 포격, 무인기 침투, 미사일 발사,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 등 동시 다발적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야권이 제기하는 평화 이슈는 과거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무공천 철회로 인해 그동안 새정연의 최대 무기로 활용됐던 '거짓정치 대(對) 악속정치'의 프레임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분명 새정연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지속적인 대여투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되었고, 무상급식과 같이 선거를 주도할 이슈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대했던 '창당 컨벤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표3〉에서 보듯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야

권 통합 발표(3월 2일) 후 새누리당과 새정연의 정당 지지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물론 4월 첫째 주 서울 지역 새누리당 지지도는 전국 흐름과는 달리 약간 하락했지만, 인천·경기 지역은 상승 곡선을 유지했다. 수도권의 새정연 지지도는 전국 흐름과는 달리 지지도가 3~5%포인트 상승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안철수 새정연 공동 대표가 더 이상 '새 정치의 아이콘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KBS·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안 위원장이 신당에서 새 정치를 잘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2.7%로 "그렇다"(40.6%)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굳히기냐 뒤집기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4월 30일 '원샷 경선'으로 결정된다. 정몽준(鄭夢準) 전 대표(이하 정 후보), 김황식(金滉植) 전 총리(이하 김 후보), 이혜훈(李惠薰) 최고위원(이하 이 후보) 간 3자 대결로 치러진다. 현재까지 추세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정 후보가 앞서가고, 김 후보가 추격하며, 이 후보가 바닥에서 엎심히 뛰는 추세이다. 한마디로 '1강 1중 1약' 양상이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은 4번의 TV토론과 3번의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대의원과 당원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를 각각 2332의 비율로 적용해 후보를 선출한다. 정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적합도+지지도)에서 크게 앞서고 있지만 50% 에 달하고 있는 대의원과 당원 표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 당협위원장 48명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친박 성향이 전체의 70%가 넘는 30여 명이다. 비박 성향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당원들은 일반 시민과 좀 다르다. 단순히 인지도나 인기로 후보를 평가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초반부터 정점으로 부상한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 의중) 논란이 선거 막판에 다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 후보와 김 후보 간에 현대중공업 주식 백지신탁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김 후보는 서울시와 현대중공업과의 업무 연관성 사례를 지적하며 "본선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는 "(백지신탁 문제가) 네거티브가 아니면 포지티브란 말인가"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다. 누가 새누리당 최종 서울시장 후보가 될지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공산이 크다.

첫째, 후보 적합도이다. 4월 초 YTN-엠브레인 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는 정 후보 44.0%, 김 후보 20.1%, 이 후보 5.5%였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정 후보(62.3%)가 김 후보(17.8%)를 압도했다. 4월 중순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도 결과가 비슷했다.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정 후보 42.4%, 김 후보 15.6%, 이 후보 4.9%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차이가 더 벌어졌다. 정 의원이 63.9%로 1위였고, 김 전 총리는 12.9%, 이 최고위원은 3.7%였다.

둘째, '당내 기반' 구축 여부이다. 김황식 후보의 경우, 당내 기반이 거의 없다. 새누리당에 입당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을 정도로 당내 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더욱이 친박 세력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김황식 캠프에서 친박 핵심인 이성헌(李性憲) 전 의원이나 허용범(許容範) 전 국회대변인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경선 경쟁자인 이혜훈 후보도 원조 친박이다. 김 후보 측이 이 후보를 추가 컷오프시켜 경선 구도가 '정몽준-김황식' 양자 구도로 전환되길 학수고대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 후보는 경선 출마 선언 이후 언론을 통해

한 달 먹고 마는 보약보다 평생 먹는 밥부터 신경 쓰십시오
전짜 보약은 햇록 잡곡밥입니다
밥이 보약이라지만, 잡곡밥만 할까요?
3,000가닥 초고압으로 지어 톡톡튀는 부드럽고 맛있으며
식이섬유와 영양 성분이 풍부한 햇록 잡곡밥~
미 건강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맛은 부드럽게, 영양은 풍부하게! 동원 햇록 잡곡밥

〈표3〉 최근 정당 지지도 추이 분석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대통령국정운영지지도	새누리	새정연	중립층	새누리	새정연	중립층	새누리	새정연	중립층
3월1주	57	39	31	2	39	36	2	37	28	2
3월2주	55	41	30	1	41	29	1	39	30	1
3월3주	56	42	28	2	41	31	3	42	32	2
3월4주	59	43	28	1	43	28	1	41	28	2
4월1주	61	43	27	3	38	31	2	43	31	2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2014)

본인 스스로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상의를 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 '박심 마케팅'을 조기에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친박의 적극적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본선 경쟁력이냐 확장성이냐

셋째, 본선 경쟁력이다. 당초 김 전 총리가 출마 결심만 하면 친박과 친이의 연합군으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경쟁자인 정몽준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표4〉에서 보듯이 정 후보는 박원순(朴元淳) 시장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가고 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시간이 흘러도 박원순 시장과의 격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출마 선언 이후 종종 "굿바이 히트를 치겠다"고 공언한 김 후보 측은 본선에서의 확장성을 무기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정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거나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져서 야권표가 분산돼야 설득력이 있다. 여야 간 치열한 양자대결 구도 속에서 본선 경쟁력이 없는 막연한 확장성으로는 경선의 관문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서울시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선거에 출마하려는 새누리당 후보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돼야 자신들도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후보의 불확실한 확장성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만약 일반 국민 호응도가 높지만 당내 기반이 약해 당내 경선에서 밀리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물밑에서 당원들을 설득해 이를 '커버'해 줄 수 있지만, 다른 후보보다 일반 국민 호응도가 뒤처지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 당심(黨心)을 움직였다가는 김 전 총리를 돕는 게 아니라 되려 역풍(逆風)을 맞게 할 수 있다"고 연급한 한 친박 중진 인사의 말이 현 상황을 잘 웅변해 주고 있다.

넷째, 누가 차기 대권 후보로 부각될 수 있느냐 여부이다. 정 후보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2017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시장 임기를 마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YTN·엠브레인 조사에 따르면, 대권 후보 호감도에서도 정 후보는 13.1%로 안철수(18.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문재인(10.6%)과 박원순(7.3%)보다 높게 나왔다.

다섯째, 후보 단일화 여부가 마지막 관건이다. 김황식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3위로 처진 이 후보와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김 후보 측은 정 후보의 지역구를 이 후보에게 몰려주는 것을 매개로 '정-이 빅딜설'을 언론에 제기했다. 스스로 '김-이 연대'를 차단한 것이다. 이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수밖에 없는 동인(動因)을 김 후보 측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미숙함을 보였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큰 이변이 없는 한 김 후보의 막판 뒤집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은 몰라도 서울시장과 같이 중요한 공직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에서 당심이 민심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남경필 대세론'이냐 후보 단일화 효과냐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경선은 남경필(南景弼)-정병국(鄭柄國) 2파전으로 4월 25일에 치러진다. 경선에 출마했던 김영선(金映宣)-원유철(元裕哲)-정병국 세 후보가 지난 4월 3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고, 중앙당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 후보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TV토론회를 거쳐 24일 도내 31개 시·군별로 투표가 이뤄지며 25일 개표 및 도지사 후보선출대회를

〈표4〉 서울시장 선거 가상대결 분석

조사 시기	조사 기관	가상 대결					
		정몽준 (A)	박원순 (B)	차이 (A-B)	김황식 (C)	박원순 (D)	차이 (C-D)
3/14~16	MBN·메트릭스	40.7	47.1	-6.4	32.0	50.0	-18.0
3/17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43.8	49.4	-5.6	38.0	52.1	-14.1
3/18~19	JTBC·리얼미터	45.7	48.9	-3.2	41.2	49.9	-8.7
3/24~25	CBS·모커스컴퍼니	40.4	39.0	+1.4	30.8	41.7	-10.9
4/1~3	YTN·엠브레인	43.8	42.7	+1.1	32.9	51.5	-18.6
4/11~12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48.5	45.5	+3.0	32.9	50.5	-17.6

40대의 Must Eat
굳과 더불어 '제사푸드'라고 불리는 한국생선의 필수 영양소인 오메가-3를 비롯하여 남성의 스태미나에 좋은 아연,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Eat FISH for long life! Eat TUNA for better life!
웰빙시대 대표식품 바다에서 온 건강 – 동원참치



2014년 3월 20일 새누리당 정병국, 김영선, 남경필, 원유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공정선거 서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해 최종 도지사 후보자가 결정된다. 분명, 정 후보 주장처럼 "양자대결로 가게 되면 유권자들이 두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고 "더 많이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 판별력이 생길 것"이다. YTN·엠브레인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에서 남 후보(38.1%)는 정 후보(10.0%)를 크게 앞섰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남 후보는 과반에 육박한 47.3%를 얻은 반면, 정 후보는 7.7%에 불과했다. 더욱이, 본선 경쟁력에서 남 후보가 정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우세자에게 편승하는 '밴드 왜건(bandwagon)' 효과로 인해 '남경필 대세론'은 꺾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로 김상곤·김진표(金振杓)·원혜영(元惠榮) 후보 3명을 선정했다. 전 국정홍보처장인 김창호(金蒼浩) 후보는 탈락했다. 경선방식은 공론조사 선거인단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정했다. '국민여론조사'는 일반국민·당원 구분 없이 무작위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조사'는 미리 구성된 선거인단이 후보자들의 프레젠테이션·상호토론 등을 지켜본 뒤 투표에 나서는, 일종의 '나가수(나는 가수다)' 방식이다. YTN·엠브레인 조사(4월 1~3일)에 따르면, 새정연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김진표 의원이 25.9%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김상곤(21.8%), 원혜영(18.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새정연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김상곤 후보가 30.3%로 1위를 차지하고 그 뒤를 원혜영(27.2%)이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23.5%로 3위를 차지했다.

김상곤 후보가 상대적으로 일반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표5〉에서 보듯이,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김상곤 후보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원혜영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 후보는 지난 3월 남경필 후보와 가상 대결에서 17.0%밖에 얻지 못했지만, 최근에 실시한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4월 11~12일)에서는 36.6%로 김진표 후보와 김상곤 후보보다 더 높았다. 반대로 김상곤 후보와 김진표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하며 1, 2위를 유지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5〉 경기도지사 가상 대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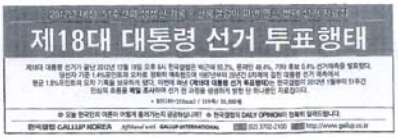
조사 기관	조사 시기	가상대결					
		남경필	김상곤	남경필	김진표	남경필	원혜영
CBS·포커스컴퍼니	3/23~24	43.6	22.0	39.5	22.3	44.7	17.0
YTN·엠브레인	4/1~3	49.9(56.0)	35.8(33.2)	47.6(52.5)	36.7(35.1)	51.9(58.2)	32.8(30.6)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4/11~12	54.1	33.3	49.7	34.9	52.9	36.6

김상곤이냐, 김진표냐, 원혜영이냐 엎치락뒤치락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는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진보 대 보수의 프레임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대선으로 증명된 만큼 경기도에서는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를 뽑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보 성향이 강한 김상곤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런데 4월 10일에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김상곤 후보가 제기한 여론조사 대상에서 '새누리당 지지자 배제' 의견을 받아들여 이미 정해진 경선룰을 바꿨다.

김진표 의원은 이에 강력 반발해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후보가 "경선룰 최종안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히 일단락됐다. 후보 간에 경선룰 변경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진보 "책제가 강한 김 전 교육감은 야당 지지자 또는 무당층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유리하고, 중도 성향의 김진표 의원은 새누리당 지지자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발




새누리당 인천시장 공천신청자 간담회에서 유정복, 안상수 예비후보가 공정선거 서약서에 서명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생한 일이다.

그런데 새정연 경기도지사 경선은 공론조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진표 의원과 당 정책위 의장 출신인 원혜영 의원이 공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론조사에서는 선심성 공약,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김상곤 후보의 단계적 무상버스 도입 공약이 쟁점이 될 것 같다.

경쟁자인 김진표 후보와 원혜영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신 김 후보는 버스 준(準)공영제, 원 후보는 버스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경선 후보들과 대선 주자급들 선대위원장들이 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어느 대선 후보급 주자의 조직과 힘이 센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김상곤 후보는 정동영(鄭東泳)파와 안철수, 김진표 후보는 문재인·손학규(孫鶴圭)·정세균(丁世均), 원혜영 후보는 김두관(金斗官) 공동선대 위원장과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선 막판까지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인천시장 경선, 누가 유심을 등에 업는가

새누리당 인천시장 경선은 안상수(安相洙) 전 시장과 유정복(劉正福) 의원 양자 간에 4월 23일에 치러진다. 서울과 경기 경선과는 달리 두 후보 간에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YTN·엠브레인 조사 결과, 후보 적합도에서 전체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유정복 의원이 39.4%로 안 전 시장(34.2%)을 앞선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안 전 시장(44.1%)이 오히려 유 의원(42.0%)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 유 의원이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도 경기도 김포에서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조직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본선 경쟁력은 유 후보가 앞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임 시장인 안 후보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표6〉에서 보듯이, 4월 초 YTN·엠브레인 조사 결과, 인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에서 유 후보는 송영길(宋永吉) 시장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4.8%포인트 뒤지지만, 안 전 시장은 오차범위를 벗어난 7.7%포인트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인천시장 가상대결 분석

조사 기관	조사 시기	가상대결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송영길
CBS·포커스컴퍼니	3/24~25	30.7	36.3	32.3	30.7
YTN·엠브레인	4/1~3	39.5(41.3)*	47.2(47.1)	40.6(45.2)	45.4(41.9)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4/11~12	42.5	43.9	42.0	43.8

* 괄호 안은 '반드시 투표층' 대상.

그런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유 의원은 송 시장을 3.4%포인트 앞서지만, 안 전 시장은 5.8%포인트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4월 중순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후보와 유 후보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송 시장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하튼 박심이 경선 막판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유 후보가 유리하다.

유 후보가 박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후보에게 패배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실패한 후보를 내세워 송 시장과 리턴매치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

50대 이상 유권자는 늘고, 20~30대는 줄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열세에 놓여 있던 수도권 새누리당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다. '수도권 대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언급했던 6·4 지방선거만이 갖고 있는 특정 이외에 수도권 선거 전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대별 유권자 구성 변화, 세대별 지지 및 투표율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전체 유권자 수에서 여권 성향이 강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였고 60대 이상은 21.1%로 총 40.3%였다. 반면 야권 성향이 강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17.9%, 30대는 20.8%로 총 38.7%였다. 그 차이는 1.6%포인트였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4 지방선거 예상 유권자 수가 4112만6040명으로 지난 대선 당시 4046만4641명보다 약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50대의 비중은 19.5%로 지난 대선 당시 19.2%

보다 0.3%포인트(58만명)가 늘었다. 60대 이상도 21.1%에서 21.2%로 늘어났다. 50대 이상 비율은 지난 대선 대비 0.4%포인트 늘어난 40.7%다. 반면, 20~30대 유권자는 지난 대선 대비 3.2%포인트가량 감소한 35.9%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50대(82.0%)와 60세 이상(80.9%)이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어서 40대(75.6%), 30대(70.0%), 20대(68.5%) 순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유권자 세대별 인구 구성과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이다. 〈표7〉은 지난 2012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에서 세대별 투표율과 4월 초에 실시한 YTN·엠브레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세대별 '반드시 투표층' 비율을 비교·고찰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 성향 박근혜 후보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냈던 50대와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비율이 80%대에 이른다. 이 수치는 지난 2012년 대선 투표율과 거의 비슷하다. 반면, 진보 성향 문재인 후보에게 절대 지지를 보냈던 20대와 30대에서 '반드시 투표 의향층'의 비율은 40~55%대로, 대선의 70%대와 비교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투표율의 이런 추세가 선거 때까지 유지된다면 새정연의 수도권 후보들은 전패할 수도 있다.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를 가상대결 구도에서 크게 앞도하지 못하고 심지어 큰 차이로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4월 초 YTN·엠브레인 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층'을 상대로 후보별 지지도를 분석해 보면,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시장을 6.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시된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4월 11~12일)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 정 후보는 51.8%의 득표로 박 시장(43.5%)보다 8.3%포인트 앞섰다. 한편, 〈표8〉에서 보듯이, 정 후보는 아직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얻은 득표에 못 미치고 있다.

여하튼 50대와 60대 이상에선 정 후보가 앞서고, 20~40대에선 박 시장이 우세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보듯이, 정 후보는 30대에서 지난해 말 조사(15.6%)보다 2배 가까운 지지(33.6%)를 받았다. 이런 결과는 박 시장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박원순의 '어게인 2011' 가능할까

다만, 정 후보는 40대 연령층에서 박 시장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YTN·엠브레인 조사 결과, 정 후보는 40대 연령층에서 39.6%의 득표로 박 시장(52.6%)에게 뒤졌다.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0대 표심'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표9〉에서 보듯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젊은 층과 나경원(羅卿瑗) 후보를 지지한 장노년층 간 세대 대결 양상이 뚜렷했다.

그런데 40대에서 박 후보가 나 후보를 두 배 이상(33.9%포인트)으로 크게 앞선 것이 선거 승패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박원순 시장 지지율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지난 2011년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령층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광 효과가 새누리당 후보에게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치혐오증으로 투표를 꺼리던 20~30대 젊은 층과 화이트칼라층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분출되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무장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면 박원순 시장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

〈표7〉 투표율 분석

	서울			인천			경기		
	반드시 투표층*	2010 지선**	2012 대선***	반드시 투표층*	2010 지선**	2012 대선***	반드시 투표층*	2010 지선**	2012 대선***
20대	39.7	43.6	71.3	43.6	40.2	69.0	38.6	41.7	69.0
30대	55.3	46.8	69.8	49.9	43.3	67.0	46.3	46.9	70.4
40대	64.5	52.2	72.5	64.5	50.6	72.4	62.2	59.2	74.9
50대	77.3	61.8	79.2	78.7	59.8	80.1	80.3	60.3	80.5
60대 이상	82.8	68.5	80.1	81.7	66.1	80.1	82.3	64.5	79.7

*: YTN · 엠브레인 2014년 4월 1~2일 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의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율 분석(2010) 및 여의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분석(2012).

〈표8〉 서울시장 가상대결 및 2012년 대선 시 서울 지역 후보 지지 분석

	지방선거 가상대결*						2012년 대선**	
	정몽준	박원순	모름	김황식	박원순	모름	박근혜	문재인
전체	적극적 투표층 비율	43.8 (42.7)***	42.7 (41.3)	13.5 (10.0)	32.9 (37.4)	51.5 (50.0)	15.5 (12.6)	47.9	51.2
20대	39.7	28.6	59.1	12.3	17.5	69.8	13.7	42.5	55.0
30대	55.3	30.3	56.4	13.3	18.5	72.7	10.8	26.7	73.3
40대	64.5	36.8	52.8	7.8	27.2	65.0	7.8	51.9	46.3
50대	77.3	54.4	29.5	10.1	47.9	33.3	18.8	61.2	34.8
60대 이상	82.8	65.9	16.1	18.0	53.5	19.7	26.8	80.0	17.8

*: YTN · 엠브레인 여론조사(2014년 4월 1~2일) 결과. **: 한국선거학회가 제18대 대선 직후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 ***: 질문 만든 '반드시 투표하겠다' 층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분석한 것임.

과가 새누리당 후보에게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치혐오증으로 투표를 꺼리던 20~30대 젊은 층과 화이트칼라층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분출되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무장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면 박원순 시장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은 낮 시간 동안 주춤하던 투표율이 오후 6시 39.9%에서 오후 7시 42.9%, 최종 48.6% 등으로 마지막 2시간 동안 8.7%포인트 상승했다.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알 수 있는 SNS 페이지에 따르면 당시 서울, 투표소, 투표율 등 선거와 관련된 단어가 검색어 톱10에서 80~90%를 꾸준히 차지했다.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게인 2011'을 외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2011년과 비교해 크게 다르다. 우선, 현 정부에 대한 20~30대 분노가 그렇게 강하게 표출될 것 같지 않다. 한국갤럽의 4월 2주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야권 성향의 20~30대 젊은 세대의 호의적 평가가 큰 몫을 하고 있다. 특히, 30대 지지율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를 앞질렀다.

둘째, 지난 2011년에 세차게 불었던 안철수 바람이 다시 재현될 개연성이 거의 없다. 안철수 대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수도권 유권자에게 "최근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보시면서 이전에 비해 이미지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물어본 결과, "나빠졌다"(50.5%)는 응답이 "좋아졌다"(9.5%)에 비해 훨씬 높았다. "변화 없다"는 33.6%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안 대표의 지지 기반인 20~30대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았다. 안철수 이미지가 "나빠졌다"와 "좋아졌다"가 20대는 34.2% 대 17.7%, 30대도 45.6% 대 11.6%였다. 안 대표가 내걸었던 '새 정치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무공천 철회로 리더십이 크게 도전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시민후보가 주는 반사이익도 사라졌다. 박 시장은 2011년 보궐선거에서 기존 정당을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거기에 시민운동권 출신인 박 후보는 시민사회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현재 박 시장은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새정연 소속으로 더 이상 시민후보라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현실들이 박 시장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게 하는 요인이다.

'재선 도전한 현직시장 모두 승리 공식' 이번에는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대세론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YTN·엠브레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령별 투표율을 분석해 보면 〈표10〉에서 보듯이, 남경필 후보는 김상곤·김진표 후보를 상대로 20~30대 젊은 세대에서 30%대 후반의 지지를 얻고 있다. 남 후보의 개혁과 세대교체 이미지가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 같다.

특히, 남 후보가 여론 주도층이며 한국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40대에서도 비기거나 이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야권 후보들의 추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인천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결정될 것인가가 큰 변수이다. 만약 안상수 전 시장이 새누리당 후보가 돼서 송영길 시장과 재격돌하면 송 시장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11〉에서 보듯이 안 전 시장은 인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드시 투표층'을 대상으로 하든 송 시장에게 모두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유정복 후보의 경우, 전체를 상대로 지지율을 분석하면 송 시장이 앞

〈표9〉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후보별 득표율 분석(2011년)

	나경원(A)	박원순(B)	차이(A-B)
선거 최종 결과	46.2	53.4	-7.2
20대	30.1	69.3	-39.2
30대	23.8	75.8	-52.0
40대	32.9	66.8	-33.9
50대	56.5	43.1	13.4
60대 이상	69.2	30.4	38.7

출처 KBS · MBC · SBS 등 방송 3사 출구조사.

50대의 Must Eat

미국국립보건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50대에는 참치처럼 DHA가 풍부한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at FISH for long life! Eat TUNA for better life!

웰빙시대 대표식품 바다에서 온 건강 – 동원참치

서지만 '반드시 투표층'을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유 후보가 앞섰다. 따라서 송 시장 상대로 유 후보가 나서게 되면 예측을 어렵게 하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다. 재선을 노리는 송영길 후보가 당내 386 차세대 주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성공적인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라도 현 시장이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송 시장에게는 우호적인 요인이다.

세대별 투표율을 분석해 보면, 20~30대 젊은 세대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 층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서울과 경기 지역보다는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요인은 송 시장에게 유리한 면이다. 더욱이, 유정복 후보가 오랫동안 경기도 김포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했던 것도 인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인천 지역의 경우, 과거 재선에 도전했던 모든 현직 시장이 승리했다.

1995년에 당선되어 98년 재선을 노렸던 최기선(崔箕善) 시장, 2002년 선거에서 승리해 2006년 선거에서 재선을 노렸던 안상수 시장 모두 승리했다. 이런 '재선 승리의 법칙'이 과연 이번에도 먹힐지 관심을 끈다. 현재 인천 시장 가상대결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발견은 〈표11〉에서 보듯이, 유 후보가 서울과 경기에서와는 달리 여권 성향의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유보층의 비율이 26.6%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김포 출신 국회의원인 유 후보가 아직 인천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입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 연맹이 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발표한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송영길 시장은 거의 꼴찌를 차지했다. 광역단체장 평균 공약 이행률이 73.5%인 데 반해 송 시장은 63.8%로 세종시(64.5%)에 이어 가장 낮았다. 이런 것이 실제 본선에서 어떻게 투영될지 관전 포인트다.

더욱이, 유 후보가 내세우는 '힘 있는 후보론'이 선거 막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송 시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낀 한계도 있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권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 후보가 향후 TV토론에서 인천 출신이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란 점을 강하게 어필하면 의외의 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

〈표10〉 경기도지사 가상대결 분석

	남경필	김상곤	모름	남경필	김진표	모름	남경필	원혜영	모름
전체	반드시 투표층	49.8 (50.0)*	35.8 (33.2)	14.4 (10.8)	47.8 (52.5)	36.7 (35.1)	15.7 (12.4)	51.9 (58.2)	32.8 (30.6)	15.3 (11.1)
20대		38.6	31.0	56.6	12.3	35.9	48.1	16.1	45.7	40.8	13.5
30대		46.3	34.1	49.1	16.7	34.3	52.0	13.6	36.9	49.2	13.9
40대		52.2	46.6	42.3	11.1	41.8	41.7	16.5	47.1	37.1	15.8
50대		80.3	68.8	17.6	13.6	65.0	21.8	13.2	66.5	18.6	15.0
60대 이상		82.3	71.9	8.9	19.2	65.0	15.6	19.4	67.2	14.2	18.6

출처: YTN · 엠브레인 조사(2014년 4월 1~3일)

〈표11〉 인천시장 가상대결 분석

	반드시투표층	안상수	송영길	모름	유정복	송영길	모름
전체	63.6	39.5 (41.3)*	47.2 (47.1)	13.3 (11.6)	40.6 (45.2)	45.4 (41.8)	13.9 (13.0)
20대	43.6	32.5	51.8	15.7	28.4	59.5	12.1
30대	48.9	30.0	61.2	8.8	34.2	57.1	8.7
40대	64.5	32.5	58.4	9.1	32.0 d	57.4	10.7
50대	78.7	50.4	34.0	15.6	57.8	28.8	13.6
60대 이상	81.7	54.3	27.3	18.4	51.4	22.0	26.6

YTN · 엠브레인 조사(4월 1~3일), * 괄호 안은 '반드시 투표층'에서의 지지율

| 광고 |

포루라이프 호일

셀러드 전용 식단 출시



초특가 식단 샐러드 호일

내 몸이 좋아하는 건강식단 호일대표 정세진, www.homeoi.net에서 저렴한 가격에 건강하고 맛있는 셀러드를 매일 즐길 수 있는 셀러드 전용라인 '셀러드 호일'을 출시했다.

'셀러드 호일'은 다이어트 식단 호일(Slim)의 자체구성 메인 셀러드를 기본으로 하고 아채스틱이나 단호박·고구마·감자 매시 등을 사이드로 추가, 건강티까지 제공하는 가볍고 든든한 셀러드 식단이다.

배송비 포함 1일 7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 영양사가 설계하고 특급호텔 출신 세프가 메인에서 드레싱까지 직접 만드는 프리미엄 수제 셀러드를 매일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하는 '셀러드 호일'은 1식 300kcal대에 다양한 패턴으로 메뉴가 기획되어 양질의 단백질, 필수 비타민·미네랄 등을 섭취할 수 있다.

1일 1세트 4주분(월~금 총 20회) 14만원을 초특가로 선보이는 셀러드 호일은 조리하지마자 보냉가방에 넣어 이른 새벽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되고 본사 소속 담당기사가 가정 앞까지 안전하게 직접 배달하여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일부 지역에 배송 가능하며 인터넷(www.homeoi.net)이나 전화(고객센터 080-999-1700)로 주문하면 된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201
언 론 사	(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본관동) 대표이사 안 양 옥
심의대상기사	한국교육신문 2014년 5월 12일자 2면「광주・전북, 보수 단일화시 승부수」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교육감)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각종 여론조사 …'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광주・전북, 보수 단일화시 승부수

(전략) 광주CBS와 무등일보의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진보진영의 장휘국 現 교육감이 27.9%로 2위를 한 보수진영 양형일 후보의 17.8%보다 10.1%p 앞섰다. 다음으로 윤봉근 前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6.0%, 김왕복 전 조선이공대 총장 5.5%, 고영을 고구려대 이사장 3.7%,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3.3%, 정희곤 교육의원 1.8%로 나타났다.

(중략)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만채 교육감이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을 크게 앞서고 섰다.(후략)

광주·전북, 보수 단일화시 승부수

광주·전북·전남

광주, 보수-진보 양강구도

보수, 진보진영 모두 단일화가 진척을 보지 못한 가운데 장휘국 現 교육감과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의 2강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광주CBS와 무등일보의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진보진영의 장휘국 現 교육감이 27.9%로 2위를 한 보수진영 양형일 후보의 17.8%보다 10.1%p 앞섰다. 다음으로 윤봉근 前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6.0%, 김왕복 전 조선이공대 총장 5.5%, 고영올 고구려대 이사장 3.7%,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3.3%, 정희곤 교육의원 1.8%로 나타났다.

변수는 34%에 달하는 무응답층이다. 또한 보수진영이 양형일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장휘국 후보와 승부수를 띄울 만하다는 분석이다.

전북, '非김승환' 단일후보 촉각

김승환 現 전북도교육감이 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감 선거는 김 교육감, 이미영 예비후보, 이른바 '비(非)김승환 단일후보' 간의 3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보수 단일화기구 주도로 신환철(전북대 교수)·유홍렬(前 전북교육위원회 의장)·이상휘(전북대 교수)·이승우(군장대 총장) 예비후보는 '비(非)김승환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7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9일 최종 발표된다.

현재 김 교육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일부 失政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비(非)김승환 단일후보'의 봄업에 따라 당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남, 현 교육감 여론조사서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만채 교육감이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을 크게 앞서고 섰다.

현재 등록 예비후보가 김 총장 1명뿐인데다 세월호 참사로 선거전은 잠잠한 상태다.

장 교육감은 5월 중순경에나 재선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진보·중도진영에서 장 교육감 단독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202
언 론 사	㈜중앙일보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 대표이사 홍 석 현
심의대상기사	중앙일보 2014년 5월 12일자 8면「고교·교회까지 같아…김진표·남경필 형님·아우 대결」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고교·교회까지 같아 … 김진표·남경필 형님·아우 대결

(전략) 4일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 경기지사 지지율은 남 의원(46.3%)이 김 의원(24.6%)을 앞섰다. 서울의 경우 정몽준 의원(6.4% 포인트)·김황식 전 총리(18.3%포인트)가 모두 박 시장에 뒤졌다. 인천에선 유 전 장관(38%)이 송 시장(34.8%)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매일경제의 조사(3~5일)에서는 송 시장의 지지율이 3.6%포인트 높았다.(후략)

중앙일보

2014년 06월 12일 아침 (경기)

고교·교회까지 같아 … 김진표·남경필 형님·아우 대결

〈경복고〉 〈수원중앙침례〉

여야 경기지사 후보 확정

중도보수 김 후보 "경제 살릴 것"

쇄신파 남 후보 "야권 인사 등용"





새누리당 남경필(49·5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67·3선) 의원의 '수원 대결' 승자가 경기지사다.

10일 새누리당이 남 의원을 후보로 선출하자 새정치연합이 11일 김 의원을 대항마로 선택하면서 이런 대결구도가 짜였다. 11일 새정치연합 경선에서 김 의원은 원해영 의원과 안철수 대표 측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눌렀다.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된 경선에서 김 의원은 48.2%의 지지율을 얻었다. 김 전 교육감은 30.7%, 원 의원은 21.1%를 득표했다. 앞서 남 의원은 1562표(60%)를 얻어 정병국 의원(1048표·40%)에 나승했다.

남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수원병(乙)·정(丁)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신장용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수원을(乙)을 포함하면 7·30 재·보선에서 수원 지역 4개 선거구 중 3곳에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두 사람은 경복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김 의원(41회)이 남 의원(58회)보다 17년 선배다.

사석에선 '형님-동생'으로 부르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 남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집사이고 김 의원은 장로다. 지연, 학연, 교연(敎緣)까지 얽혀라는 셈이다.

남 의원은 여권의 쇄신파로 분류돼 왔고, 김 의원은 야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도보수성향의 인사로 꼽혀 왔다. 각 당의 주류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뜻이다.

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권력을 향해 주장했던 개혁과 쓴소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연정(聯政)을 해서 야권 인사를 등용하고 ▶시·군에 지방권력을 이양하며 ▶도지사로서 야전 잠이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2011년 '창당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며 탈당했던 정태근 전 의원을 캠프에 합류시켰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교육부총리와 민주당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이다. 경기도지사 당선 후 일성이 '성장'에 대한 강조였다. 그는 후보수락연설에서 "8년째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기도) 경제를 살리고, 경기도민을 전·월세와 출퇴근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8일)에 이어 이날 경기지사 후보가 확정되면서 6·4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의 구도가 거의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친박(親朴)과 신박(新朴)의 조화다.

인천시장 후보인 박근혜계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남 의원에 이어 정몽준-김황식-이해훈 중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특정 계파의 독주 구도는 아니다. 새정치연합도 시민단체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과 486 세대 송영길 인천시장에 이어 김 의원을 선출하면서 다양한 그룹의 조화를 꾀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야당은 안정성을, 여당은 개혁성을 보완했다"며 "수도권 선거 결과가 오리무중(五里霧中)으로, 어느 한쪽이 3대0으로 독식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평했다.

4일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 경기지사 지지율은 남 의원(46.3%)이 김 의원(24.6%)을 앞섰다. 서울의 경우 정몽준 의원(6.4% 포인트)·김황식 전 총리(18.3%포인트)가 모두 박 시장에 뒤졌다. 인천에선 유 전 장관(38%)이 송 시장(34.8%)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매일경제의 조사(3~5일)에서는 송 시장의 지지율이 3.6%포인트 높았다.

여야는 이날까지 17곳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16명씩 후보를 확정했다.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15곳이다. 새누리당은 12일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새정치연합은 13일 전북지사 후보 선출을 남겨두고 있다. 이용섭 의원과 강운태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광주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김영춘 전 의원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무소속 오거든 후보의 행보가 남은 대결의 변수로 꼽힌다.

강대화·이윤석 기자

tnkang@joongang.co.kr

(29.2×21.6cm)

15개 광역시·도 대진표 확정

지역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부산시장	서병수	김영춘 오거든 (무소속)
인천시장	유정복	송영길
대구시장	권영진	김부겸
광주시장	이정재	윤장현 강운태·이용섭 (무소속)
대전시장	박성효	권선택
울산시장	김기현	이상범
세종시장	유한식	이춘희
경기지사	남경필	김진표
강원지사	최흥집	최문순
충북지사	윤진식	이시종
충남지사	정진석	안희정
전남지사	이중효	이낙연
경북지사	김관용	오중기
경남지사	홍준표	김경수
제주지사	원희룡	신구범

※무소속 후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2위 안에 든 후보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새누리당은 10일 남경필 후보(왼쪽)를,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김진표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남경필·김진표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뉴스1]

의 결 번 호	2014지선204
언 론 사	㈜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대표이사 이 철 휘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4년 5월 12일자 2면 「남경필 vs 김진표…고교 선후배 '맞짱'」 2014년 5월 14일자 1면 「7 〈與 우세〉 : 5 〈野 우세〉 : 5 〈접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남경필 vs 김진표…고교 선후배 '맞짱'

(전략)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남-김 양자 대결'에서는 현재 남 의원이 우세한 형국이다. 매일경제와 MBN이 지난 7일 발표한 남 의원과 김 의원의 대결에서는 각각 45.2%와 35.2%를 나타냈고 같은 날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발표한 가상대결에서는 남 의원이 42.8%로 26.9%인 김 의원을 15.9% 포인트 앞섰다.

서울신문

2014년 05월 12일
02면 (종합)



지난 10일 경기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남경필 의원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경기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이 주먹을 불끈 쥐며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경필 vs 김진표… 〈경복고〉 고교 선후배 '맞짱'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 확정
각각 정병국·김상곤 제쳐
새정치연 전남 후보엔 이낙연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누리당 후보에 남경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경복고 41회, 남 의원은 58회로 '고교 선후배' 간 혈투가 벌어지게 됐다. 새정치연합 전남도지사 후보에는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11일 경기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대회에서 공론조사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최종 득표율 48.2%를 획득해 30.7%를 얻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제치고 승리했다. 원혜영 의원은 최종 득표율 21.1%에 그쳤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49.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공론조사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285명 가운데 134표(47.2%)를 얻었다.

당초 김 전 교육감은 김 의원보다 지지율이 앞서가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김 전 교육감이 초반 '공짜 버스' 논란으로 고전하면서 지지율이 주춤하기 시작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감직을 사퇴해 도정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 등이 겹치면서 김 의원이 역전승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무너진 경기도 경제를 살려내 8년째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제를 살릴 책임, 도민을 전월세난·출퇴근난·재난으로부터 지켜낼 책임, 경기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책임을 느낀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만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이로써 김 의원은 4년 전 2010년 지방선거 때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에서 패배해 본선에 나가지 못했던 아픔도 말끔히 씻었다.

앞서 남 의원은 전날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선출 대회에서 전체 유효 투표 2612표 중 1562표(60%)를 획득해 1048표(40%)를 얻은 2위 정병국 의원을 눌렀다.

남 의원은 1988년 아버지 남평우 의원이 작고하자 해당 지역구에 33세의 나이로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5선을 했으며 당내 원조 '소장개혁파'로 분류된다. 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에서 야당 인사를 특보로 채용하는 등 작은 연정을 통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남 의원의 회견에는 2011년 김성식 전 의원과 함께 탈당했던 정태근 전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의원은 "동지인 남 후보가 큰 도전을 하는 길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키로 했다"며 "곧 당에 다시 들어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남-김 양자 대결'에서는 현재 남 의원이 우세한 형국이다. 매일경제와 MBN이 지난 7일 발표한 남 의원과 김 의원의 대결에서는 각각 45.2%와 35.2%를 나타냈고 같은 날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발표한 가상대결에서는 남 의원이 42.8%로 26.9%인 김 의원을 15.9% 포인트 앞섰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1.5×22.2)cm

7 〈與 우세〉 : 5 〈野 우세〉 : 5 〈접전〉

(전략) 이날 JTBC의 조사 결과 박 시장은 45.9%, 정 의원은 30.5%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날 발표된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남 의원 40.2%, 김 의원 39.4%로 박빙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날 부산MBC 조사에 따르면 야권이 오 전 장관으로 단일화할 경우 지지율은 서병수 의원 39.3%, 오 전 장관 40.8%로 조사됐다.(후략)

서울신문

2014년 05월 14일
01면 (종합)

6·4 지방선거 대진표 확정 D-21 광역단체 17곳 초반 판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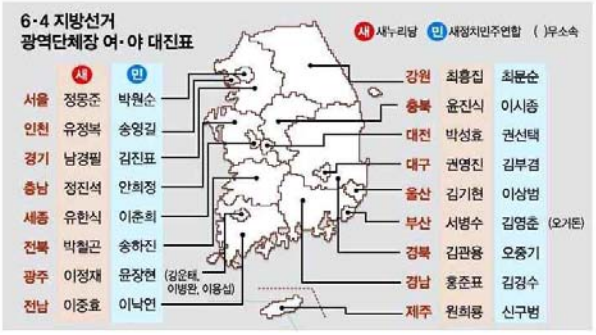
7:5:5

〈與 우세〉 〈野 우세〉 〈접전〉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지사 후보로 송하진 전 전주시장이 결정됨에 따라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최종 확정되며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여야는 15~16일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20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관련 이슈가 전면에 떠오르는 가운데 중도층과 40대 여성의 표심 향배, 투표율 등 3대 변수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선거판을 강타하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특히 40대 엄마들을 중심으로 무당파가 급증한 상황〈서울신문 5월 7일자 9면〉이라 대구·경북이나 호남 등 전통적 텃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야 모두 막판까지 승패를 점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신문이 지역별 여론조사와 당내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여당 우세 지역은 7곳, 야당 우세 지역은 5곳, 박빙 지역은 5곳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은 대구·경북·울산·경남 등 영남을 비롯해 세종·대전·제주에서, 야권은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과 함께 서울·충남에서 우세를 보



서울 박원순, 정몽준과 격차 벌려
경기 김진표 반격, 남경필과 박빙
부산 오거돈·김영춘 단일화 관건

었다. 경기·인천·충북·강원·부산은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판세 변동이 가장 심한 곳은 수도권이다. 서울에서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한때 새정치연합 박원순 시장을 앞서거나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으나 세월호 참사와 정 의원 아들의 '국민 미개인' 발언 논란 등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날 JTBC의 조사 결과 박 시장은 45.9%, 정 의원은 30.5%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독주하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과 새정치연합 경선의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김진표 의원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발표된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남 의원 40.2%, 김 의원 39.4%로 박빙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새정치연합 김영춘 전 의원의 단일화 여부가 관건이다. 이날 부산MBC 조사에 따르면 야권이 오 전 장관으로 단일화할 경우 지지율은 서병수 의원 39.3%, 오 전 장관 40.8%로 조사됐다.

여야는 이날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 등 '안전'을 주요 키워드로 한 6·4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관련기사 5면

(17.4×16.6)cm

의 결 번 호	2014지선205
언 론 사	한겨레신문(주)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길6 대표이사 정 영 무
심의대상기사	한겨레 2014년 5월 14일자 4면 「박원순-정몽준 격차 더 벌어져…남경필-김진표는 줄어」 5면 「40대 '앵그리맘' 표심·세월호 심판론·지지층 결집… '3대 변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원순-정몽준 격차 더 벌어져…
남경필-김진표는 줄어

혼전세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지사 후보로 송하진 전 전주시장을 확정하면서 6월 4일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정할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 중 수도권 3곳을 포함한 8곳의 판세가 세월호 참사 이후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참사 이전 백중세를 보이는 곳은 2~3곳 정도였다는 점에서 여당 후보 하락세, 야당 후보 상승세의 흐름도 확인된다.(후략)



한겨레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야 대진표

박원순–정몽준 격차 더 벌어져…남경필–김진표는 줄어

광역단체장 판세 점검

인천 유정복–송영길 접전
광주 후보 단일화가 변수
광역 17곳 중 수도권 포함 8곳
세월호 참사 이후 상당한 변화

40대 '앵그리맘' 표심 · 세월호 심판론 · 지지층 결집…'3대 변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의 가슴에 슬픔이 응어리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6·4 지방선거 최대의 변수는 단연 '세월호 참사'다. 이 변수가 선거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된 세대간 투표 대결구도가 정치권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복잡한 판단과 뒤얽혀 다양한 변수를 만들고 있다(후략)



한겨레

40대 '앵그리맘' 표심·세월호 심판론·지지층 결집…'3대 변수'

의 결 번 호	2014지선206
언 론 사	㈜헤럴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대표이사 이 영 만
심의대상기사	헤럴드경제 2014년 5월 14일자 8면「격전지 수도권·충청…세월호 파고 휩쓸리는 與」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수도권, 충청)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격전지 수도권·충청… 세월호 파고 휩쓸리는 與

세월호 참사가 6·4일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부상했다. 역풍을 우려해 공세를 자제했던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다시 들고 나왔고, 여권은 '경제위기론'을 선거의 새 프레임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키 위해 새누리당이 '개각요구'로 맞불을 놓는 점도 눈에 띈다. 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추격받던 야권 후보들은 여유를 찾은 반면, 여유있던 여권 후보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고 있다.(후략)

헤럴드경제 박간
2014년 05월 14일
08면 (정치)

격전지 수도권·충청…세월호 파고 휩쓸리는 與

세월호 참사가 6·4일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부상했다. 여풍을 우려해 공세를 자제했던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다시 들고나왔고, 여권은 '경제위기론'을 선거의 새 프레임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키 위해 새누리당이 '개각요구'로 맞불을 놓는 점도 눈에 띈다. 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추격발판 야권 후보들은 여유를 찾은 반면, 여유있던 여권 후보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새누리당 후보들에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전 박원순 시장과의 지지율을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혔던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은 막내아들의 '국민미개' 발언과 부인의 '지기가 문제' 논란 이후 박 시장과의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졌다. 박 시장과 정 후보간 지지율 차가 20% 넘게 나온 것은 '세월호 변수'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지사와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세월호 사고에 따른 판세 변화가 읽힌다. 중앙 정부와의 소통 능력을 강조했던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인천지역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40%대인 것을 고려하면 유 후보는 당 지지율에도 못미치는 지지율을 거두고 있다. 남경필 의원의 낙승이 예상됐던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김진표 후보의 추격이 거세다. 지난 3월 중순 조사(남 44.1%

서울·인천 지지율 벌어지는 양상
낙승 기대됐던 경기도 격차 좁혀져
캐스팅보트 중원지역 변화 두렷
野 '정권심판론' 본격 공세모드
與 경제회복·정부와 선긋기로 대응

·김 26.9%) 때 보다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야권 후보들의 선전이 나타나는 것은 '중앙 정치'에 민감한 수도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선 수도권 유권자의 절반 가량이 지방선거를 중앙정부 심판 선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영호남의 경우 지지정당을 바꾸는 경우가 적다. 수도권은 중앙정부에 대한 민감도가 타 지역보다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전략은 두가지다. 세월호 사고로 밋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를 '경제위기론'으로 격상시키면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건강이상설도 경제위기론을 강조할 배경으로 평가된다. 최근 정부가 7조8000억원의 긴급민생대책 자금을 투입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적극적인 개각론도 꺼내놓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개각 폭과 관련해 지난 13일 "빅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도마에 오른 정부를 더이상 옹호치 않으면서, 세월호 직격탄을 피하겠다는 노림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심판론'을 꺼내들었다. 원내에선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국정조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중이다. 대여 공세의 주제도 '안전'을 앞세운 정부 심판이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가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다수지만 반사이익이 새정치연합에 몰아갈지는 미지수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으면서 '정치 무관심'으로 확대될 경우,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후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이 8%가량 하락(46.7%→38.7%)하는 동안 새정치연합의 지지율(31.4%→30.1%)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48.8%, 2002년)를 하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도 분위기 속에 '조용한 선거'를 치르자는 여야 공감대가 있지만, 이는 추격을 해야하는 후발 주자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도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재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차 방문한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와 악수를 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경기서 이겨야 지방선거 이긴다"며,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 입은 단원고 가족 있어 어느 지역보다 수습 과정서 보여 준 박 정부의 무능 무책임에 대한 심판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26.7×32.3cm)

의 결 번 호	2014지선207
언 론 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26 청양빌딩 2,3,5층 대표이사 곽 영 길
심의대상기사	아주경제 2014년 5월 14일자 6면 「세월호 여파 '수도권 빅3' 野 상승세…與 전패 위기 고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월호 여파 '수도권 빅3' 野 상승세…與 전패 위기 고조

(전략) 종합편성채널 JTBC가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지난 9~12일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하는 서울시장 후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은 45.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정 후보는 30.5%에 그쳤다.

인천시장 선거 판세도 마찬가지다.

(중략)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9~10일 인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 새정련 소속 송영길 현 시장은 46.5%를 얻어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34.4%)를 12.1%포인트의 격차로 크게 따돌렸다.

세월호 참사 이전인 지난달 12일 조사에서 송 시장와 유 후보는 각각 43.8% 대 42.0%로 1.8%의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고 이후 유 후보 지지율이 급락한 양상이다.

경기지사 선거 역시 야권 모든 후보를 상대로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줄곧 선두를 달리던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새정련 김진표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가 13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 후보는 지지율 40.2%를 기록해 39.4%인 김 후보를 0.8%포인트 앞섰다.

한달 전(4월 11일~12일)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남 후보는 49.7%, 김 후보는 34.9%를 기록했는데 격차가 좁혀졌다.(후략)



아주경제

광역단체장 17곳 여야 대진표 완성… 권역별 판세 들여다 보니

세월호 여파 '수도권 빅3' 野 상승세…與 전패 위기 고조

3주 혈전 레이스 돌입

서울시장 박원순·정몽준
세월호 참사 이전보다
지지율격차 3배로 벌어져

캐스팅보트역 충청권
대전시장 박성효 우세속
권선택 후보 맹추격

여야 텃밭의 반란 영호남
야 대구·무소속 광주
출연 여부 정치권 관심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남경필 vs 김진표
서울시장 정몽준 vs 박원순
인천시장 유정복 vs 송영길
충남지사 정진석 vs 안희정
세종시장 유한식 vs 이춘희
대전시장 박성효 vs 권선택
전북지사 박일근 vs 송하진
광주시장 이정재 vs 윤장현
전남지사 이동호 vs 이낙연
제주지사 원희룡 vs 신구범
강원지사 최흥집 vs 최문순
충북지사 윤진식 vs 이시종
경북지사 김관용 vs 오중기
대구시장 권영진 vs 김부겸
울산시장 김기현 vs 이상범
부산시장 서병수 vs 김영춘
경남지사 홍준표 vs 김경수

서울호 이전 우세지역
여당 우세
야당 우세
백중세

17개 광역단체장 여야 후보가 13일 모두 확정되면서 3주 간의 본격적인 6·4 지방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단초 이변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을 등에 업은 새누리당이 '인물론'에서 앞서며 다소 우세한 추세였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여야 백중세로 돌아섰다.

특히 세월호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수도권 3곳에서는 야권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예측불허의 접전이 예상된다.

◆ 수도권 '빅3', 세월호 여파로 야권 상승세…새누리, '3:0 전패' 우려감 고조

전통적으로 서울시장은 전체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다.

'대선 잠룡들이 하나같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서울시장 선거에 당력을 쏟아 부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세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세월호 참사 이전보다 3배 이상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가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를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지난 9~12일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하는 서울시장 후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은 45.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정 후보는 30.5%에 그쳤다.

박 시장이 오는 1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유세에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벌어진 수치라는 평가다.

인천시장 선거 판세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9~10일 인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새정련 소속 송영길 현 시장은 46.5%를 얻어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34.4%)를 12.1%포인트의 격차로 크게 따돌렸다.

세월호 참사 이전인 지난달 12일 조사에서 송 시장과 유 후보는 각각 43.8% 대 42.0%로 1.8%의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고 이후 유 후보 지지율이 급락한 양상이다.

경기지사 선거 역시 야권 모든 후보를 상대로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줄곧 선두를 달리던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새정련 김진표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가 13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남 후보는 49.7%, 김 후보는 34.9%를 기록했는데 격차가 좁혀졌다.

◆ 새누리, 대전 우세 속 충남·충북 판막 단체장 명추격

역대 선거에서 매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청권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야권이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오히려 보수-노인표심의 결심으로 야권에게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못할 상황이다.

새정련 소속 안희정(충남)-이시종(충북) 현 지사는 각각 새누리당 정진석-윤진식 후보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청주-충주MBC가 지난 6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34.4%를 기록, 33.0%를 얻은 이 지사를 1.4%차로 앞섰다.

대전시장의 경우 시장과 정부부처사를 지낸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의 우세 속에 새정련 권선택 후보가 추격하는 구도다.

◆ 여야 '텃밭의 반란' 부산-광주…야권 단일화 변수

부산과 광주는 여야의 텃밭이면서 동시에 민심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역이다.

전통적인 여도인 부산에서 '야풍'이 거세게 인다면 동남권 바람몰이를 시작으로, 충부권의 판촉인 강원도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광주는 야권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지만, 최근 기류가 심상치 않다.

특히 두 곳은 새정련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 심기' 논란을 일으킨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안 대표의 '구태 공천'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산에선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병수, 새정련 김영춘, 한때 안 대표가 '앞고초려'했던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맞붙는다. 현재 판세는 3자 구도로 흐를 경우 서 후보의 압승, 양자 대결 시 오차범위내 혼전 양상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는 '김영춘-오거돈' 단일화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야남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 단일화 여부를 가린다.

광주 지역은 무소속 단일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대표의 전략공천 논란으로 당원들의 대거 탈당 사태를 맞고 있는 새정련은 윤장현 후보 당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정련을 탈당한 강운태 현 시장과 이용섭 후보는 단일화를 통해 무소속 바람을 일으킨다는 복안이다.

◆ 영호남 '오지부동'…야권 대구시장·무소속 광주시장 출현 여부 관심

영호남의 광역단체장 선거 지역은 여야 텃밭에서 펼쳐지는 관계로 큰 이변은 없을 전망이다.

경북의 경우 구미시장 3선을 지낸 새누리당 소속 김관용 현 지사가 새정련 오중기 후보에 맞서 재선을 노린다.

경남도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현 지사와 천노련노무현)계 새정련 김경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울산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과 새정련 이상범 후보가 격돌한다.

영남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치는 대구시장 선거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와 새정련 김부겸 후보는 2000년대 초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소장개혁파 모임인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멤버로 함께 활동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난 셈이다.

김 후보는 지난 2012년 제18대 총선 때 지역구에서 나와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나선했지만 40.4%의 높은 지지율을 얻은 바 있다.

호남 역시 새정련의 압승으로 요약된다.

전남도지사직을 놓고는 새누리당 이종효 후보와 새정련 이낙연 후보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이낙연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측근들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공천 확정이 유보된 상태다.

전북의 경우 새누리당 박철곤 후보와 새정련 송하진 후보가 맞붙는다.

◆ 세종시장 혼전 양상…'제주 與-강원 野' 우세

예초부터 관심 지역에서 벗어났던 세종과 제주, 강원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제주, 새정련이 강원에서 각각 앞서나가고 있는 가운데 세종은 야권 후보의 추격전이 매섭다.

세종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로 유한식 현 시장과 새정련 이춘희 후보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유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에 도전 중이고, 이 후보는 행정도시건설청장을 지낸 경력을 앞세워 균형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된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장 선거에서 유 후보는 37%, 이 후보는 33.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세종시의 시급한 과제로 '인도시, 구도심 균형 발전(48.9%)'이 1위로 점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둘러싼 양 후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제주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제주시장을 지낸 새정련 신구범 후보의 대결구도다. 현재 판세는 원 후보의 독주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당내 소장파를 이끌었던 원 후보는 '큰 인물론'을 앞세워 대세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전략이다.

강원에선 강원 출신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와 춘천 출신인 새정련 소속 최문순 현 지사의 '엎동-엎서 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시장이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많지만,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차이가 현격했던 만큼 여야 모두 바닥 표 훑기에 매진하고 있다.

김봉철·최선혁기자 nicebong@

의 결 번 호	2014지선213
언 론 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26 청양빌딩 2,3,5층 대표이사 곽 영 길
심의대상기사	아주경제 2014년 5월 20일자 6면「남경필 일방적 우세서 초박빙 대결로」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각종 여론조사 …'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남경필 일방적 우세서 초박빙 대결로

(전략) 경기일보가 기호일보, OBS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도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남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7.1%, 28.2%로 나타났다.(후략)

아주경제

2014년 06월 20일
06면 (종합)

남경필 일방적 우세서 초박빙 대결로

6·4 지방선거 판세분석 ②경기

남경필·김진표 고교 동문
정치성향도 중도층 대변

세월호 참사후 南 지지율 하락
金 맹추격… 통진당 득표력 변수

경기도는 인구 1250만, 유권자만 9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지방선거지로 서울시와 더불어 여야가 사활을 걸고 진검승부를 펼치는 곳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지난 2002년 한나라당 후보였던 손학규 전 지사 당선 이후 재선에 성공했던 김문수 지사 연임으로 12년간 새누리당의 '아성'이나 다름없었다. 유권자들은 5번의 지방선거 중 3번을 보수 정당 후보를 선택한 셈이다.

특히 경기도 북·동부 농촌 지역 상당수가 휴전선과 맞닿은 접경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선거 때마다 '색깔론'으로 대표되는 안보 공방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 남경필 對 김진표, 같은 지역·고교·교회 공통점…정치 성향도 비슷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경기지사 후보로 5선의 새누리당 남경필, 3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나섰다.

두 후보는 모두 수원 출신으로 나란히 서울 경복고를 졸업한 고교 동문이다. 남 후보가 김 후보의 17년 후배인 데다 같은 교회(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집사와 장로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정치 성향 면에서도 중도층을 대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남 후보는 새누리당 내에서 진보·개혁적 쇄신파로 분류되고, 김 후보는 새정치연합 소속으로는 중도·보수 색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남 후보는 '함께하는 따뜻한 도지사', '혁신 도지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준비된 경제도지사'로서 '경제통'으로서의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행시 13회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 주로 경제 부처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모두 지낸 정통 관료 출신답게 풍부한 경험도 강점이다.

두 후보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각종 공약과 가치관을 놓고 불꽃 튀는 대결을 벌였다.

◆ 세월호 참사 이후 南 지지율 하락·金 맹추격…통진당 득표력 변수

현재 판세는 남 후보의 일방적 우세에서 초박빙 대결로 뒤바뀌고 있다.

지난달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는 김 후보를 비롯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원혜영 의원 등 야권의 모든 후보에게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를 벌이며 남 후보의 강세가 뚜렷했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경기일보가 기호일보, OBS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도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남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7.1%, 28.2%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소재지가 경기도라는 점, 이번 참사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남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30·40대가 무당파로 돌아서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 막판에는 결국 인물론에서 앞서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통합진보당의 '종북 논란'으로 야권 연대가 사실상 파기된 상태에서 백현종 후보의 득표력이다. 이 여론조사에서 통진당 소속 백 후보는 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 김진표 후보를 꺾고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후보로 나섰지만 중도 하차한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무효표가 대거 발생하면서 패한 바 있다.

유 후보는 47.79%를 득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김문수 전 지사의 52.20%에게 4.41%포인트 뒤졌다. 심 후보의 무효표는 전체 투표수의 4.04%였다.

김봉철 기자 nicebong@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비교

새누리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남경필	후보	김진표
49	나이	67
서울	출신지	경기 수원
美예일대 경영대학원 졸	학력	서울대 법학과 졸
군필(육군 상병)	병역	군필(공군 일병)
15·16·17·18·19대 의원	경력	17·18·19대 의원
경인일보 기자		행정고시 합격(13회)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장관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겸 장관
새누리당 경기광역중앙선대위 부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따뜻하고 복된마을(따복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약	일자리 1등 경기도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운영		경기도재난위험평가제도 도입
매년 200억 지원 최소 70개 대박창업 창출		사회적 경제 육성, 4년간 2만4000개
청년 일자리 위한 800억원 규모의 '슈퍼맨 펀드' 조성		일자리 창출
		2000억원 규모의 경기청년일자리펀드 조성
경기도 빅데이터 무료 제공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비율 3%이상으로 확대
신개념 멀티 환승터미널 설치		버스준공영제 도입·철도노선 확대
경기북부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자료: 남경필·김진표 캠프

의 결 번 호	2014지선214
언 론 사	㈜내일신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3 (신문로2가) 대표이사 장 명 국
심의대상기사	내일신문 2014년 5월 20일자 5면 「경기지사,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떠올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각종 여론조사 …'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경기지사,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떠올라

(전략) 지난달 13일 한국방송(KBS)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남 후보는 49.8%로 김 후보(36.8%)를 13.0%p 차이로 앞섰다.

(중략) 지난 11~12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남후보(40.2%)와 김 후보(39.4%)의 차이가 0.8%p로 줄었으며, 지난 18일 경기신문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김 후보는 41.4%의 지지로 40.5%에 그친 남 후보를 0.9%p 차이로 앞섰다.(후략)

석간 내일신문

경기지사,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떠올라

남경필-김진표, 격차 크게 좁혀져 접전
남 "7~8%p 앞서" 김 "지지율 교차국면"

경기도지사 선거가 6·4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를 맹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이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민심의 동조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앞서가던 남 후보 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여야 후보측과 전문가들은 경기도지사 선거가 갈수록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남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달 중순까지 10%p 이상 격차가 났다. 지난달 13일 한국방송(KBS)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남 후보는 49.8%로 김 후보(36.8%)를 13.0%p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두 후보간 격차는 5월 들어 급속히 좁혀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불투명했던 새정치연합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김 후보의 지지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16일 시사저널과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남 후보(39.0%)와 김 후보(32.6%)의 격차는 6.4%p 차이로 줄었으며, 지난 17일 매일경제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남 후보(46.5%)와 김 후보(42.4%)의 격차는 4.1%p 차이로 좁혀졌다.

일부 조사에서는 김 후보와 남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거나 김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12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남 후보(40.2%)와 김 후보(39.4%)의 차이가 0.8%p로 줄었으며, 지난 18일 경기신문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김 후보는 41.4%의 지지로 40.5%에 그친 남 후보를 0.9%p 차이로 앞섰다.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이처럼 급속하게 좁혀지고 있는 데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수도권 민심의 동조화 현상과 함께 후보간 이미지와 장점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희웅 정치컨설팅 '민' 여론분석센터장은 "세월호 참사가 수도권 민심을 흔든 데다가 서울에 비해서 보수적 표심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야권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김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며 "남 후보의 개혁성과 대중성이 얼마나 지속성을 갖느냐가 향후 승패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판세분석도 두 후보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데 일치했다. 다만 양측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서로 우세와 승리를 장담했다. 김 후보측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20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자체적인 조사에서는 두 후보간 지지율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비슷해졌다"며 "남 후보에 비해 안정감 있는 정책적 리더십으로 승부를 하면 대도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측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태근 전 의원은 20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20대와 40대에서 김 후보에 밀렸던 것이 멈추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이후 지지층이 본격적으로 결집하는 양상"이라며 "우리가 적게는 3~4%p, 많게는 7~8%p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남 후보의 개혁적 이미지를 살려나가면 마지막까지 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TV토론에서 만난 남경필-김진표 6·4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남경필(사진 오른쪽), 김진표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선 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228
언 론 사	경북도민일보(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58-1 (해도동) 대표이사 윤 두 영
심의대상기사	경북도민일보 2014년 5월 26일자 3면 「경기, 엎치락뒤치락…與 텃밭 부산도 새 접전지 부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산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경기, 엎치락뒤치락…與 텃밭 부산도 새 접전지 부상

(전략) 최근 여론조사 가운데 중앙일보가 21일 해당지역 유권자 4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95% 신뢰수준±%3.46 표본오차)에 따르면 박 후보는 53.5%의 지지율로 34.4%의 정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따돌렸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상파 방송3사의 전화 조사(95% 신뢰수준

±3.5% 표본오차)에서도 정 후보 지지율은 35.4%, 박 후보는 51.0%로 격차가 15.6%포인트에 달했다.

(중략) 중앙일보 조사에서 남 후보 지지율은 39.2%, 김 후보는 지지율은 30.7%였다. 지상파의 경우 남 후보가 34.8%, 김 후보가 35.7%로 남 후보가 김 후보에게 오차 범위안에서 뒤졌다.

(중략) 가장 최근인 중앙일보 조사에서 유 후보 지지율은 35.1%, 송 후보 지지율은 41.7%였다. 방송 3사에서는 송 후보가 42.1%의 지지율로 31.8%인 유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중략) 여론조사상으로는 중앙일보의 경우 서 후보와 오 후보가 모두 38.0%의 동일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상파 조사에선 서 후보가 39.6% 지지율로 34.2%인 오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중략) 지상파 조사에서는 권 후보 지지율이 41.3%, 김 후보 지지율이 29.7%였고, 대구신문이 유권자 1036명을 대상으로 17~18일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 표본오차)에서는 권 후보 지지율이 40.5%, 김 후보는 26.8%였다.(후략)



경북도민일보

경기, 엎치락뒤치락… 與텃밭 부산도 새 접전지 부상

6·4 지방선거 D-9 수도권·영남권 중반판세

6·4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6일 여야는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한 민심의 풍향계가 될 선거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세월호 사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표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판도 변화를 조심스레 전망했다.

수도권

서울시장 박원순 초반부터 정몽준에 이유있게 리드

경기지사 남경필-김진표 오차범위 내 치열한 접전

인천시장 與 "경합 열세" 野 "안심할수 없지만 우세"

영남권

부산시장 서병수-오거돈 대결 팽팽, 접전지 부상

대구시장 새누리 권영진 김부겸에 10%이상 리드

경북지사 與 김관용 후보 오차범위 밖 크게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당시 나오던 초반 판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민심 돌림이' 까지 이어지면서 낙관론에서 다소 후퇴한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경우 수도권의 경기도 승리, 영남권 서권, 강원·세종·충북 접전지에서 1~2곳 승리를 '선방'했다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 넘어전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경기까지 모두 접수하고 영남권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면 '완승'이라는 게 지배 기준이다.

◇ **수도권** = 서울시장 선거는 초반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앞서는 추세다. 최근 여론조사 가운데 중앙일보가 갑일 여당지역 유권자 400명을

6·4 지방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인 26일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왼쪽)와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가운데),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시민을 만나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연

새누리당은 심재 투표에서는 여론조사보다 계적기 증시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의 두나면 승리를 기대했다.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남 후보 지지율은 39.2%, 김 후보는 지지율은 30.7%였다. 지상파의 방송3사의 전화 조사에도 신뢰수준 ±3.46% 표본오차에 따르면 박 후보는 53.5%의 지지율보 34.4%의 김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따돌렸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상파 방송3사의 전화 조사에도 신뢰수준 ±3.5% 표본오차에서도 정 후보 지지율은 35.4%, 박 후보는 51.0%로격차가 15.6%포인트에 달했다.

수도권의 '최대 격전지' 로 경기도가 부상하며, 여야 모두 이곳에서만큼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장도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가 지지율 오차범위를 벗어나고는 경합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중앙일보 조사에서 유 후보 지지율은 35.1%, 송 후보 지지율은 41.7%였다. 방송3사에서는 송 후보가 42.1%의 지지율로 31.8%인 유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새누리당은 다소 뒤지고 있지만 해볼만하다는 '경합열세' 라는 판단이

◇ **영남권** = 진통끝인 새누리당의 '텃밭' 이지만 부산이 접전지로 부상하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부산시장의 경우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인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대결 구도가 팽팽하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중앙일보의 경우 서 후보와 오 후보가 모두 38.0%의 동일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상파의 조사에선 서 후보가 39.6% 지지율로 34.2%인 오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새누리당은 안심할 수 없다는 두세하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소속이긴 하지만 야당후보가 이길 경우 '선거 혁명' 이라며 내심 승리를 기대했다.

대구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공영진 후보가 이유있게 앞서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지상파 조사에서는 권 후보 지지율이 41.3%, 김 후보 지지율이 29.7%였고, 대구신문이 유권자 1036명을 대상으로 17~18일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 표본오차)에서는 권 후보 지지율이 40.5%, 김 후보는 26.8%였다.

새누리당은 남수표 경합에 따른 무난한 승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지가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북도지사는 새누리당 김관용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후보를, 경남도지사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상황이다. 연

의 결 번 호	2014지선229
언 론 사	주식회사 일간경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A동 510호 (청천동,우림라이온스빌) 대표이사 김 상 옥
심의대상기사	일간경기 2014년 5월 26일자 1면 「D-9 중반 판세진단 '사활건 표심잡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 인천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D-9 중반 판세진단 '사활건 표심잡기'

(전략) 중앙일보 조사에서 남 후보 지지율은 39.2%, 김 후보는 지지율은 30.7%였다. 지상파의 경우 남 후보가 34.8%, 김 후보가 35.7%로 남 후보가 김 후보에게 오차 범위 안에서 뒤졌다.

(중략) 가장 최근인 중앙일보 조사에서 유후보 지지율은 35.1%, 송 후보 지지율은 41.7%였다. 방송3사에서는 송 후보가 42.1%의 지지율로 31.8%인 유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다.(후략)

일간경기
2014년 06월 26일
01면 (종합)

경기지사 후보 남경필 · 김진표 비교



남경필(49)
새누리당



김진표(67)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출신	경기 수원
· 15 · 16 · 17 · 18 · 19대 의원 · 경인일보 기자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 · 대통령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주요 역력	· 17 · 18 · 19대 의원 · 행정고시 합격(13회)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장관 · 민주당 원내대표
· 따뜻하고 복된 마을(따복마을) 공동체 만들기 ·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운영 · 매년 200억 지원 최소 70개 대박 창업 창출 · 청년 일자리 위한 800억원 규모의 '슈퍼맨 펀드' 조성 · 신개념 멀티 환승 터미널 설치 · 경기북부 통일 경제특구 조성	공약	· 일자리 1등 경기도 · 경기도 재난위험평가제 도입 · 2만 4천개 일자리 창출 · 2천억원 규모의 경기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 ·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비율 3% 이상으로 확대 · 버스준공영제 철도노선 확대 ·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 송영길 비교



유정복(57)
새누리당



송영길(51)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출신	경기 수원
· 17 · 18 · 19대 의원 · 행정고시 합격(23회) · 김포군수 · 김포시장 ·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안전행정부 장관	주요 역력	· 16 · 17 · 18대 의원 · 사법시험 합격(36회) · 변호사 ·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 민주당 최고위원 · 현 인천시장
· 인천발 KTX노선 신설 · 인천~강릉 고속화철도 건설 ·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 인천지하철 1호선의 검단신도시 연장 · 인천 특화산업 육성	공약	· 30만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20조원 투자유치 · 주거비 · 보육비 걱정없는 '누구나 집' 5만가구 공급 · 개발이익으로 뉴타운 매몰비용 70% 지원 · 시민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D-9 중반 판세진단 '사활건 표심잡기'

경기도지사 남경필-김진표 오차범위 접전
인천시장 유정복-송영길 '경합열세' vs 우세

6 · 4지방선거를 열흘앞둔 25일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한 민심의 풍향계가 될 선거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세월호 사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표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판도 변화를 조심스레 전망했다.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남 후보 지지율은 39.2%, 김 후보는 지지율은 30.7%였다. 지상파의 경우 남 후보가 34.8%, 김 후보가 35.7%로 남 후보가 김 후보에게 오차 범위 안에서 뒤졌다.

수도권의 '최대 격전지'로 경기도가 부상하며, 여야 모두 이곳에서만큼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애초 남 후보가 크게 앞서다 세월호 참사로 지지율이 하락한 만큼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기점으로 지지층이 재결집, '박빙우세' 정도의 판세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서울의 여론이 경기도로 옮겨가는 이른바 스필오버(spillover, 월경효과) 효과로 야당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라며 김 후보의 경우 오히려 취약했던 진보표가 후반으로 갈수록 결집해 상승세라고 추정했다.

인천시장도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가 지지율 오차범위를 왔다갔다하는 경합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중앙일보 조사에서 유 후보 지지율은 35.1%, 송 후보 지지율은 41.7%였다. 방송3사에서는 송 후보가 42.1%의 지지율로 31.8%인 유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새누리당은 다소 뒤지고 있지만 해볼만하다는 '경합열세'라는 판단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심할 수 없지만 우세하다는 전망이다.

이 선 기자 ls@1gan.co.kr
송홍일 기자 shi@1gan.co.kr

의 결 번 호	2014지선230
언 론 사	(주)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금남로2가) 대표이사 김 여 송
심의대상기사	광주일보 2014년 5월 22일자 4면「장만채 40% 웃도는 지지율…재선가도 순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도교육감)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장만채 40% 웃도는 지지율…재선가도 순탄

(전략) 40%를 웃도는 지지율로 재선이 유력시되는 장만채 후보는 여유가 있다. 후보등록 전날인 지난 14일에야 출마선언을 하고 선거팀도 최소화해 꾸렸을 정도다.

후보등록 결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 김동철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등이 경쟁하고 있다.(후략)

光州日報
2014년 05월 22일
04면 (종합)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장만채 40% 웃도는 지지율…재선가도 순탄

전남도교육감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장만채 현 교육감이 독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누가 당선되느냐'보다는 '2등이 15%이상 득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후보등록 결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 김동철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등이 경쟁하고 있다.

교사 경력이 있는 후보는 김동철 후보뿐이다. 장만채·김경택 후보는 교수 출신으로 대학 총장을 지냈다.

전남은 선거운동이 힘들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든데다 선거권역이 22개 시군으로 너무 넓어 선거 열기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40%를 웃도는 지지율로 재선이 유력시되는 장만채 후보는 여유가 있다. 후보등록 전날인 지난 14일에야 출마선언을 하고 선거팀도 최소화해 꾸렸을 정도다.

장 후보는 각계각층의 지지를 끌어내 연대와 협력의 선거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일 전남교육희망연대와 전국 진보교육감 후보들과의 정책협약 및 공동공약 발표가 대표적이다.

전남교육시민연대는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전남지역 18개 시민사회교육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당시 장만채 후보를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선택하기도 했다.

장 후보는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희망연대는 전남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무지개학교 확대 ▲전남 학생생활안전위원회 조례 제정 ▲농어촌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에듀버스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경택 후보는 장만채 후보를 타킷으로 삼아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 후보는 "올바른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청렴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무한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장 후보를 겨냥했다.

광주전남 전문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그는 교육청에 숟가락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삽과 쟁기를 들고 가겠다"며 '일하는 교육감'을 내세웠다. 공약으로는 ▲동부권(여수·순천·광양) 제2 교육청 청사 신설 ▲맞춤형 방과후교실 전면 무상화 ▲무기계약직 호봉제 정규직 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동철 후보는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순천에서 교편을 잡았고, 지난 4년간 전남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평준화 보완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지·덕·체 영역별 최저학력제 시행 ▲지역별 체육·예술센터 구축 등을 표방했다.

김 후보는 "스펙을 앞세운 정치공학적 논리가 또 다시 전남교육을 지배하려 한다"며 "생활이 곧 교육이라는 지론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하고싶은 교육의 초석을 놓는 교육주권을 되찾는 이 시대의 의병이 되고자 한다"고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출세와 돈벌이를 위해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관료주의적 평준화 대신 자신만의 가치가 분명하면서 다원적인 가치가 서로 협력하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며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별하며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관료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도교육감 후보



이름	장만채(56)	김경택(66)	김동철(60)
출생	영암	영암	보성
학력	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	단국대대학원 교육학박사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주요 경력	·전남도교육감 ·순천대 총장	·동아인재대 총장 ·광주전남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순천매산여고 교사
공약	·무지개학교 확대 ·농어촌 통학문제 해결 위한 에듀버스 ·학생생활안전위원회 조례 제정 ·에코스쿨 운영 ·학교자치 실현과 교육권 보호 전담팀 운영	·교권 회복 및 학습권 확장 ·동부권 제2교육청 청사 신설 ·맞춤형 방과후교실 전면 무상화 ·무기계약직 호봉제 정규직 전환 ·평생교육국 신설	·개인별 맞춤형 교육시스템구축 ·학교별 특성화 추구 ·지·덕·체 영역별 최저학력제 시행 ·작지만 강한 시골학교 육성 ·지역별 체육·예술센터 구축

장만채, 농어촌 통학문제 '에듀버스'로 해결
김경택, 삽과 쟁기 든 '일하는 교육감' 강조
김동철, 맞춤형 교육…'강한 시골학교' 육성

의 결 번 호	2014지선231
언 론 사	(주)남도일보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23, 5~7층 대표이사 박 성 호
심의대상기사	남도일보 2014년 5월 27일자 3면 「"단일화 후보, 새정치 후보에 앞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최초 공표·보도의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혔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서 그 밖의 사항(질문내용,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보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방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그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단일화 후보, 새정치 후보에 앞서"

광주광역시장 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대 무소속 강운태 후보간 양강 체제로 좁혀지면서 투표함을 개봉해야만 승자를 알 수 있게 됐다.

(중략) YTN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23~24일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강운태·이용섭 후보 중 강운태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강 후보(47.5%)가 윤 후보(23.7%)를 두 배가량 앞섰다.

다자대결에서는 강 후보 28.7%, 이 후보 20.5%, 윤 후보 20.4%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강 후

보가 이 후보 표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12~13일 광주 유권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 조사한 결과도 강 후보로 단일화되면 강 후보 32.2%, 윤 후보 24.4%로 강 후보가 7.8% 포인트 앞섰다.(후략)

南道日報



지지 호소하는 윤장현 후보

26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지하차도 시거리에서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장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단일화 후보, 새정치 후보에 앞서"

광주시장 선거 각종 여론조사 결과…표심 변화 '촉각'

광주광역시장 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대 무소속 강운태 후보간 양강 체제로 좁혀지면서 투표함을 개봉해야만 승자를 알 수 있게 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단일화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첫 무소속 시장이 탄생할지에 벌써부터 지역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강 후보로 된 단일화 카드는 윤 후보를 전략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를 낙관하게 만들지 못할 만큼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선 만판까지 단일화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강운태 · 이용섭 단일 후보'는 윤 후보를 크게 앞섰다.

YTN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23~24일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강운태 · 이용섭 후보 중 강운태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강 후보(47.5%)가 윤 후보(23.7%)를 두 배가량 앞섰다.

다자대결에서는 강 후보 28.7%, 이 후보 20.5%, 윤 후보 20.4%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강 후보가 이 후보 표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12~13일 광주 유권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한 결과도 강 후보로 단일화되면 강 후보 32.2%, 윤 후보 24.4%로 강 후보가 7.8% 포인트 앞섰다.

즉 두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윤 후보의 승리를 낙관키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투표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강 후보측은 단일화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전략공천에 따른 시민들의 선택권이 박탈당했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해 얼마만큼 유권자 표심을 잡아둘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맞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조직을 총동원한다면 남은 기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 지원 유세 등 새정치연합이 '윤장현 후보 구하기'에 총력전을 펼칠 것은 자명하다.

이 때문에 광주시장 선거는 막판까지 대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제2장

시정요구심의

1. 정정보도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4지선167
시 정 요 구 인	김주수 (520510-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 110-1번지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의성문소신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51 대표이사 김 현 철
심의대상기사	의성문소신문 2014년 4월 16일자 1면 「특정후보의 운동원과는 관련없음 확인」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의성문소신문〉 1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외밭에서는 신을 고쳐신지 말라' … 의혹 사건 해프닝으로 끝나)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의성문소신문 지면에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경북 의성군수 예비후보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자의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금품제공 관련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의 운동원과는 관련없음이 확인됐다'고 허위보도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비난으로 본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당내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시정요구인은 2014년 4월 6일 군의원 예비후보 개소식에서 일어난 '돈봉투 살포' 관련 금품제공자와 제공받은자와의 관계가 친척관계라는 것이 관할수사기관 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금품제공자가 특정 후보자의 운동원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성지구당 회계책임자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을 뿐이며 기사말미에 경찰 조사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는 등 특정후보를 두둔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시정요구인이 기사 말미에 '경찰수사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였으나 ① "특정 후보의 운동원과는 관련없음 확인", "'외밭에서는 신을 고쳐신지 말라' … 의혹사건 해프닝으로 끝나"라는 단정적인 제목과 부제목을 본 일반 유권자는 금품제공자와 특정 후보자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는 의성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 제한행위)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점과 의성경찰서 담당부서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심의대상기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정 정 보 도 문

보도내용

본지 2014년 4월 16일자 1면 「특정후보의 운동원과는 관련 없음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사실을 확인 한 결과 "2014년 4월 6일 군의원예비후보자 개소식에서 발생한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자와 특정후보자와의 연관성 유무에 대해서는 현재 의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내용

특정후보의 운동원과는 관련없음 확인

(전략) 경찰조사결과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사이가 인척임이 밝혀졌고 차량조사결과도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하고 특정 후보의 운동원이라는 것도 관련없음이 확인됐다.(후략)

'외발에서는 신을 고쳐신지 말라'… 의혹 사건 해프닝으로 끝나

특정후보의 운동원과는 관련없음 확인

지방선거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6일 군의원 예비후보 개소식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일어나 지역정가를 뜨겁게 달구었다.

사건은 이날 군의원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김 모씨(49)는 최가 7촌되는 아저씨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다 현장에 있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는 장면이 촬영되어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

이같은 행동이 선거관련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차량까지 조사를 했다.

경찰조사결과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사이가 인척임이 밝혀졌고 차량조사결과도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하고 특정 후보의 운동원이라는 것도 관련없음이 확인됐다.

이에 오해를 줄 수 있는 행동에 책임을 지고 김 모씨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에서 배제 되었으며 본소에 하는데로 한 것이 지역정가에 볼을 붙이는 결과에 심적인 부담이 됐을 것이다.

지역에서는 선거에 앞서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듬어주는 아량과 서로간의 감정적인 마음의 상해기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옛말에는 '외발에서는 신을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몸가짐을 말한다.

미연에 방지할 지혜가 있어야 하며 혐의를 받을 일이나 그런 곳에서는 처신을 바로 하란 말이다. 그러나 등양의 미덕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는다. 장날이나 행사장에서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국밥이나 소주잔도 기울이고 어른들에게는 차값도 쥐어준다.

좋은 감정도 좋지만 지금이 어떤 때인가 예비후보를 비롯한 유권자들이 예민해져 있는 가운데 몸뚱이 민주주의 선량을 뽑는 매리 행동과 말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으며 각박해져가는 인심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법치국가에 살면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현금을 제공한 김 모씨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다량의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하는 현실과 사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분자나 지지 발언도 없었다고 했다.

본인의 휴대폰까지 검색을 한다고 하니 관계당국의 공정한 처리를 기다려 봅임이며 민감한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투명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 오해가 없기를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김현철기자hck4607@hanmail.net

【 결정후 보도문 】

정정보도문 = 본지 2014년 4월16일자 「특정후보의 운동원과는 관련 없음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사실을 확인 한 결과 "2014년 4월 6일 군의원 예비후보자 개소식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자와 특정후보자와의 연관성 유무에 대해서는 현재 의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정정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 의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209
시 정 요 구 인	류승호 (630223-1******)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대경신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41 대표이사 우 성 대
심의대상기사	대경일보 2014년 5월 16일자 1면「막말파문 포항시 기초의원 후보, 또(?)」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대경일보〉 1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막말 이어 이번엔 선거사무실 추가개소 '논란'」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대경일보에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에 출마한 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선거사무실을 추가 개소하고 현수막을 두 곳에서 이중으로 게시하는 등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 건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소 철거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선거사무실 이전 신고를 하고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선관위도 '이 건과 관련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할 계획도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이 건 보도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선관위의 '2개의 선거사무실 개소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표현상의 차이로 'A후보의 경우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이라고 보도한 것이며, 선관위에서 '관련 사건에 대하여 조사에 들어갔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미미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종료한 것'이라고 밝혀 인터넷판 일부분을 정정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심의대상 기사는 피시정요구인이 의견진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포항시북구선관위가 이 건 사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미미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밝혔고, 우리 위원회가 선관위로부터 접수한 확인문서에도 류승호 후보가 선거사무소 이전 신고를 완료한 후 이전했고 선관위 직원의 발언이 왜곡되어 보도됐으며 현수막이 한 시간정도 중복 게시된 것은 고의성이 없고 선거의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체종결 처리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바 이 건 보도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정 정 보 도 문

보도내용

본보 2014. 5. 16.자 1면 「'막말 파문' 포항시 기초의원 후보, 또(?)」 제목의 기사와 관련, 포항시북구선관위는 'A 후보자는 흥해읍 남성리에 있던 선거사무소를 2014년 5월 14일자로 선관위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 2014년 5월 15일 흥해읍 달전리로 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선거사무소에 게시되었던 현수막과 새로 이전한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이 1시간 정도 중복 게시되었으나 고의성이 없고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체 종결 처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재심결정문】

의 결 번 호	2014지선221 {원심결정 : 2014지선209}
재 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경신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41 대표이사 우 성 대
심의대상기사	대경일보 2014년 5월 16일자 1면 「막말파문 포항시 기초의원 후보, 또(?)」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2014지선209(시심)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포항지역의 수많은 입후보자들 가운데 현수막 중복 게시행위는 종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충분히 기삿거리가 되었고, 현수막 중복게시 시간이 약 1시간이 아니라 최소한 3~4시간 정도는 됐다는 것이 제보자의 제보사항이고, 또한 선관위가 아닌 검찰과 경찰 등에 선관위 판단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본 위원회의 2014지선209(시심)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기사 작성을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제보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여 내린 결정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재심청구대상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린 원결정은 적합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막말파문 포항시 기초의원 후보, 또(?)

(전략) A후보는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로타리인근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A후보는 포항북구선관위의 본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기존 흥해읍 로타리 인근에 기존 사무실에 현수막 등을 그대로 게재하고 본인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 달전리 5거리 인근에 '추가로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버젓이 선거 홍보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명백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후략)

'막말 파문' 포항시 기초의원 후보, 또(?)

막말 이어 이번엔 선거사무실 추가 개소 '논란'

선관위, 본격 수사 착수

속보=새누리당 포항시기초의원 가흥해읍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의 막말논란(**본지 5월2일자 1면 보도**)으로 후보자질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다.

A후보는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로타리인근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입했다.

하지만 A후보는 포항북구선관위의 본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기존 흥해읍 로타리 인근에 기존 사무실에 현수막 등을 그대로 게재하고 본인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 달전리 5거리 인근에 '추가로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버젓이 선거 홍보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명백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A후보는 종전 지역 어르신인 70~80대 노인과 지인 등 4명에게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막말 등 막장 드라마식 표현을 거침없이 내뱉음으로써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바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당사자인 A후보는 반성과 사과는 커녕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선거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 A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과 장애인, 정치적 소수자에게 우선 배려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기호를 배정 한 후 당에서 기호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호배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해당행위를 한것을 두고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 기호는 남구는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해 기호를 배정한 반면 북구는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L후보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가'를 배정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항간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에게 최고 득표 자리를 빼앗길 것이 염려돼 기호배정은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당 관계자가 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우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하는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A후보가 여론조사 과정을 통해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향해 "시의원 자질도 안되는 후보에게 공천을 준 새누리당 핵심부 역시 같은 족속에 불과하다"며 거침없는 손소리를 내뱉고 있다.

또다른 지역 유권자는 "지역 어르신을 상대로 욕설 등 막말 파문에 이어 기호배정을 놓고 자신의 소속인 새누리당을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해당행위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또 다시 추가로 선거사무실까지 개소한 것 역시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이다"고 공분했다.

이와관련, 포항시북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61조에 따르면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는 1개의 선거사무실만을 개소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A후보의 경우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함으로 선거사무소 철거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균 기자

【 결정후 보도문 】

정정보도문

본보 2014. 5. 16 자 1면 「'막말 파문' 포항시 기초의원 후보, 또(?)」 제목의 기사와 관련, 포항시북구선관위는 'A 후보자는 흥해읍 남성리에 있던 선거사무소를 2014년 5월 14일자로 선관위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 2014년 5월 15일 흥해읍 달전리로 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선거사무소에 게시되었던 현수막과 새로 이전한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이 1시간 정도 중복 게시되었으나 고의성이 없고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체 종결 처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210
시 정 요 구 인	양 해 영 (650708-*******)
피시정요구인	(주)경남도민신문 경남 진주시 동진로 143, 4층 대표이사 황 인 태
심의대상기사	경남도민신문 2014년 5월 20일자 1면「양해영 후보 국고보조금 불법수령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주 문	1.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경남도민신문〉 1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어린이집 2곳 운영하며 정원 증 부풀려 불법으로 수령했다" 주장」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경남도민신문에 〈별지 2〉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상남도 도의원)에 출마한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①'시정요구인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원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의혹이 있으며, ②2007년 말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정부지원을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서둘러 시설을 폐지했고, ③원장이 직접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만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될 수 있고, ④시정요구인의이 신안동 4○○○번지에서 운영하던 '유아나라 어린이집'은 정원을 원래 허가받은 26명으로 강제 환원조치 되었다'고 보도 했으나, 이는 제보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것으로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객관성 및 사실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시정요구인은 ①제보자가 보유한 진주시 공문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정부지원 자격대상 선정과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제출된 시정요구인 측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관계기관의 심사과정에 모종의 탈·불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②2007년 12월 어린이집이 폐지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주시 공문서에 신안동 7○○○ 번지 어린이집이 '2007년 12월 28일 폐지신고서 접수'라고 명기되어 있었으며, ③ '원장이 직접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어야 했다'는 부분은 2002년도 진주시의 '정부지원 보유시설 지정요건' 공문서에 "임대한 시설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시정요구인의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란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나 시정요구인의 시설을 제외하곤 예외적으로 지정된 시설이 없어 지적한 것이며, ④어린이집 정원의 강제 환원과 관련해서는 진주시 공문서의 유아나라 어린이집 '정원 26명'을 근거로 보도한 것으로시정요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시정요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유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위원회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시정요구인의 국가보조금 불법수령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인이 제출한 경남지방경찰청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문을 볼 때, 시정요구인은 2007년 12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경남경찰청 역시 동일 사안에 대해 2010년 4월 수사가치가 없어 내사 종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인이 진주시에 요청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유아나라 어린이집과 유아나라 창의스쿨 어린이집의 인가 및 운영연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유아나라 창의스쿨이 2006. 6. 10. 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시정요구인이 진주시청에 요청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유아나라 어린이집과 유아나라 창의스쿨 2개 보육시설현황'에 따르면 유아나라 창의스쿨이 2006. 6. 13.인가된 것으로 나오는 바 이는 시정요구인이 동 시설을 타인에게 2006. 6. 10. 양도하고, 시설을 양도받은 자가 2006. 6. 13. 인가 신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피시정요구인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시정요구인이 직접 소유한 시설이 아님에도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피시정요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주시 공문서에는 '전담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시설장) 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하며'라고 적시되어 있을 뿐 피시정요구인의 답변과 같은 '임대한 시설은 자격시설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는 점, 시정요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영아전담시설 지정기준'의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영아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된 시설을 전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되려면 원장이 직접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어야 했다'는 기사는 원칙과 예외 규정을 함께 적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오인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유아나라 어린이집 정원을 원래 허가받은 26명으로 강제로 환원조치를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당초 진주시청 직원들의 행정착오로 '유아나라 어린이집'은 정원을 43명으로 허가받았으나, 2007년 12월에 행정착오가 발견되어 26명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관련 진주시청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래 허가받은 정원이 26명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시정요구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시정요구인이 부정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정 정 보 도 문

보도내용

본 지 2014년 5월 20일자 1면 「양해영 후보 국고보조금 불법수령 의혹 제기」제목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① 양해영 후보가 운영하던 '유아나라 창의스쿨'은 2006년 6월 시설폐지하고 타인에게 양도하여, 2007년 12월 시설폐지된 '유아나라 창의스쿨'은 양해영 후보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② 양해영 후보가 운영한 어린이집(유아나라)이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지정된 것은 '보건복지부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정기준'의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영아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된 시설을 전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기준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③ 유아나라 어린이집의 정원은 당초 43명으로 허가되었으나, 이는 허가당시 진주시청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인한 것임이 발견되어 2007년 12월에 26명으로 시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정원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불법수령 의혹'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경남지방경찰청 역시 동일 사안에 대해 2010년 4월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재심결정문】

의 결 번 호	2014지선222 {원결정 : 2014지선210}
재 심 청 구 인	(주)경남도민신문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43, 4층 (상대동) 대표이사 황 인 태
재심청구대상기사	경남도민신문 2014년 5월 20일자 1면 「시정요구인 국고보조금 불법수령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주 문	1.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결정의 정정보도문을 〈별지〉로 변경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경남도민신문〉 1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 「"어린이집 2곳 운영하며 정원 증 부풀려 불법으로 수령했다" 주장」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재심청구인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2014지선210(시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2014지선210(시심)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대상 기사는 진주시의 공문서와 공무원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정요구인이 취재관련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주지 않아 일부 날짜의 오류 등이 있었으나 중대한 사항은 아니기에 원결정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① 재심청구인은 시정요구인이 「유아나라 창의스쿨」을 2006년 6월 10일에 양도하고 폐지하였으나, 이때 양도받은 운영자가 시정요구인의 대리인이었으므로 해당 정정보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위원회의 원결정은 '2007년 시설폐지된 「유아나라 창의스쿨」의 대표자는 시정요구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것이었으므로 재심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② 재심청구인은 정부지원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2002년 9월 10일에 선정이 완료됐으므로 '「2003년 보건복지부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원기준」의 예외기준이 적용되어 시정요구인이 운영한 어린이집이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아전담 지원시설이 선정된 시기를 고려할 때 재심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원결정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결정을 취소한다. ③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인이 확인한 공문(서)에는 「유아나라 어린이집」은 인가 당시(2001. 2. 27) 정원이 26명으로 나와 있으므로 해당 정정보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주시청에서 발급한 '「유아나라 어린이집」의 인가 현황'을 보면 「유아나라 어린이집」 인가 당시(2001. 2. 27) 정원이 43명으로 되어 있고,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12월 28일자 진주시청의 공문(서)는 「유아나라 어린이집」의 보육시설현황 청구에 대한 것으로 해당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원은 인가 당시의 정원이 아니라 정보 공개 요청 시점의 정원으로 파악되므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시정요구인이 정원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불법 수령하였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시정요구인이 제출한 경남지방경찰청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문을 볼 때, 2007년 12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경남지방경찰청 역시 동일 사안에 대해 2010년 4월 수사가치가 없어 내사 종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도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경고결정은 적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정요구인 국고보조금 불법수령 의혹 제기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양해영 진주시 1선거구 도의원 후보가 이번에는 국고보조금 불법 수령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진주시가 알고도 양 후보가 불법으로 수령한 국고를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주시와 양 후보가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즉시 감사에 나서 양 후보의 국고보조금 불법수령 사실을 조사하고, 이 사실을 덮은 진주시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후략)

양해영 후보 국고보조금 불법수령 의혹 제기

"어린이집 2곳 운영하며 정원 등 부풀려 불법으로 수령했다" 주장

진주시 사실 알고도 양 후보가 불법 수령한 국고 환수조치 안 해 유착 의혹

경남도 감사 통해 진주시·양 후보의 유착 및 국고 불법수령 환수 조치해야



양해영 후보가 '유아나라 창의스쿨'을 운영했던 진주시 신안동 70○○번지 전경. 양 후보는 이 어린이집을 민원인A씨가 인원을 제기한 2007년 12월 28일 시설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폐지했다.



양해영 후보가 원대해 '유아나라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진주시 신안동 40○○번지 전경. 양 후보는 주인이 불법증축을 통해 건물면적을 넓힌 것을 활용해 수용정원을 늘려 정부지원을 받았다.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양해영 진주시 1선거구 도의원 후보가 이번에는 국고보조금 불법 수령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진주시가 알고도 양 후보가 불법으로 수령한 국고를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주시와 양 후보가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즉시 감사에 나서 양 후보의 국고보조금 불법수령 사실을 조사하고 이 사실을 알은 진주시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진주시 및 경남 어린이집 연합회 등에 따르면 양해영 후보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두 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부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이 기간 동안 정부지원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민원이 2007년 말 한 민원인에 의해 제기 되자 진주시는 양해영 후보가 운영하는 두 곳의 어린이집 모두를 서둘러 시설폐지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진주시는 양 후보의 어린이집 두 곳에 대해 정부지원 자격을 박탈하면서도 양 후보의 불법사실에 대해 고발조치하지 않고 또 그동안 지원해 왔던 국고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정부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면 당연히 진주시는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양해영 후보를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지원된 국고는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을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를 관할하고 있는 경남도는 당시 진주시가 취한 조치와 양해영 후보가 불법으로 국고를 지원받아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또 이를 묵인해 온 진주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해영 후보는 2002년에 진주시 신안동 70○○번지에서 '유아나라 창의스쿨'이란 어린이집과 이 미달하고 또 한 곳은 양 후보의 소유가 아니라 임대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후보가 임대해 운영한 어린이집은 정부보육시설 건물규모가 기준에 미달하자 건물주가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했는지 양 후보가 건물규모를 맞출 수 있도록 불법으로 증축 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불법 가건물을 증축해 보육시설 면적을 넓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시는 민원인 A씨가 2007년 12월 28일 민원을 제기하자 신안동 70○○번지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 '유아나라 창의스쿨'은 양 후보가 자진해서 시설폐지를 신고하는 형태를 거쳐 시설폐지를 했고 신안동 40○○번지에서 운영하던 '유아나라 어린이집'은 정원을 원래 허가받은 26명으로 감액도 환원조치를 하였다.

진주시는 민원인 A씨의 민원 제기에 따라 이 같은 행정조치를 2007년 12월 28일자로 모두 처리했다. 진주시가 이같은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은 양 후보가 그동안 운영해 왔던 어린이집이 모두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진주시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주시는 이 같이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양해영 후보가 그동안 저질렀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남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보통 이런 불법이 밝혀지면 운영자가 경찰에 고발되고 그동안 불법으로 받아온 국고지원금은 환수조치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런 케이스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몰라 정확한 내용은 진주시나 경남도가 감사를 해서 고발조치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경남도가 양해영 후보의 국고보조금 불법수령 의혹에 대해 감사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양 후보가 불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해영 후보가 이 기간(2002-2007년) 동안 두 곳의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받아온 정부지원금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경남 어린이집 연합회의 추정이다.

본지는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불법수령 의혹에 대해 몇일 전부터 양 후보자에게 반론을 받기위해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받지 않아 문자를 계속해 보낸 후에야 양 후보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은 오래된 일이라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면서 "반론 장의서를 팩스로 보내 주라"고 요청해 보내줬지만 끝까지 반론이 없어서 양 후보의 반론을 듣지 못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를 공천한 진주갑 박대출 의원측도 "그때 다 해결된 문제이며 공무원들이 실수해 발생한 일인데 양 후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결정후 보도문 】

정정보도문

본지 2014년 5월 20일자 1면 '양해영 후보 국고보조금 불법수령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①양해영 후보가 운영하던 '유아나라 창의스쿨'은 2006년 6월 시설폐지하고 타인하게 양도하여, 2007년 12월 시설폐지된 '유아나라 창의스쿨'은 양해영 후보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②유아나라 어린이집의 정원은 당초 43명으로 허가되었으나, 이는 허가 당시 진주시청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인한 것임이 발견되어 2007년 12월에 26명으로 시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경고결정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4지선220
시 정 요 구 인	김창균 (640206-1******)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구절초로 33 신용빌딩 3층 김창균 선거사무소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326번길 28 대표이사 이 상 창
심의대상기사	포천신문 2014년 5월 31일자 1면「포천시장 선거 막판 여론과 판세는? 서장원 VS 최호열 양자대결 압축」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결정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포천신문〉 1면에 〈별지1〉 경고 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포천시장 선거 막판 여론과 판세는?」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포천신문에 〈별지 2〉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시정요구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포천시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로, 피시정요구인이 포천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표된 여론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포천시장의 막판 여론이 서장원 후보와 최호열 무소속 후보간 양자 대결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객관적인 근거에 근거하지 않은 불공정하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는 선거를 앞두고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도의원, 시의원 선거와 함께 포천시장 선거의 여론과 판세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기획기사로, 2014년 4월 16일 중부일보-리얼미터 조사 이후 선거구도가 재편됐지만 객관적 여론조사 수치가 없어 여론주도층과 현장 민심탐방, 각 후보자 캠프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선거 막바지 여론과 판세를 다룬 것으로, 여론을 조작한 바도 없고, 특정 후보를 왜곡, 비방하지도 않았으며, 각 캠프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해 언론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이나, 후보자의 정책공약, 도덕성, 공직수행능력, 판세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판세분석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이 판세분석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분석에 부합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선거에 정통하다고 하는 지역 정가 인사들의 주관적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근거로 제목 등을 통해 선거 판세가 특정 후보자간 경쟁으로 압축되었다고 단정 보도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보도내용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로부터 2014. 5. 31.자 1면 「포천시장 선거 막판 여론과 판세는? 서장원VS최호열 양자대결 압축」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포천시장)가 임박한 시기에 판세분석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선거에 정통하다고 하는 지역정가 인사들의 의견 등만을 근거로 포천시장 선거 판세가 서장원 새누리당 후보와 최호열 무소속 후보 양자대결로 압축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이들과 경쟁하고 있는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의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재 심 결 정 문 】

의 결 번 호	2014지선234 {원결정 : 2014지선220}
재 심 청 구 인	주식회사 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326번길 28 대표이사 이 상 창
재심청구대상기사	포천신문 2014년 5월 31일자 1면 「포천시장 선거 막판 여론과 판세는? 서장원 VS 최호열 양자 대결 압축」 제하의 기사
주 문	1.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포천신문〉 1면에 〈별지〉 경고 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 「포천시장 선거 막판 여론과 판세는?」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하여야 한다.
재심청구취지	2014지선220(시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본 위원회의 2014지선220(시심) 결정에 대하여, 기사제목을 선정하는 것은 데스크 고유의 편집권이므로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인용부호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도하지도 않았으며 재심청구대상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특정 인사 한 두명의 의견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 후보 캠프측의 자체 전망까지 상세히 게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의 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기사제목인 '서장원 vs 최호열 양자대결 압축'은 설사 제목 선정이 데스크의 고유 편집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기사제목이 독자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판세가 특정 후보자간의 대결로 압축되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정한 것으로서 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재심청구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결정문」 게재 결정을 한 것은 적합하다고 할 것이어서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포천시장 선거 막판 여론과 판세는?
서장원 VS 최호열 양자 대결 압축

새누리당 서정원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김창균 후보, 무소속 최호열 후보가 출마한 포천시장선거 판세가 선거 막판에 접어들면서 서정원 후보와 최호열 후보간의 양자대결로 압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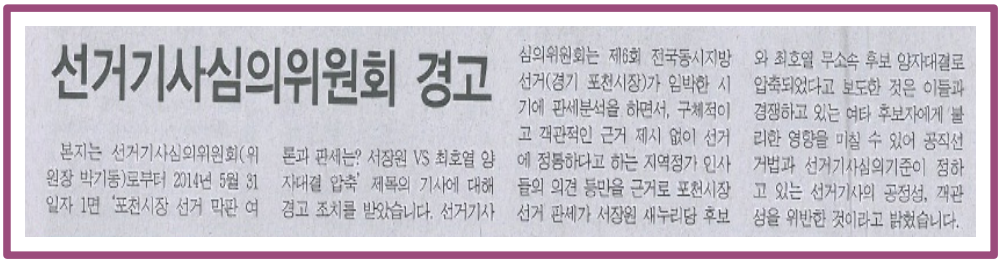
■ 포천시장 선거 막판 여론과 판세는?

"서장원 vs 최호열 양자대결 압축"

서장원 후보측 "여당 강세, 고정표 탄탄, 당선 무난"
최호열 후보측 "반 서장원 이탈표 결집, 역전 자신"
김창균 후보측 "선수교체 여론 비등, 1대1 구도 형성"

새누리당 서장원 후보(기호 1번) 무소속 최호열 후보(기호 4번) 새정치연합 김창균 후보(기호 2번)

【 결정후 보도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로부터 2014년 5월 31일자 1면 '포천시장 선거 막판 여론과 판세는? 서장원 VS 최호열 양자대결 압축'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 포천시장)가 임박한 시기에 판세분석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선거에 정통하다고 하는 지역정가 인사들의 의견 등만을 근거로 포천시장 선거 판세가 서장원 새누리당 후보와 최호열 무소속 후보 양자대결로 압축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이들과 경쟁하고 있는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경 고

의 결 번 호	2014지선153
시 정 요 구 인	김 창 균 (640206-1******)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구절초로 33 신용빌딩 3층
피시정요구인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326번길 지상 2층 대표이사 김 상 호
심의대상기사	포천신문 3월 31일자 1면 「'새누리당 vs 무소속' 구도 뜬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포천신문에 〈별지〉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시정요구인은 자신이 2014년 3월 24일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음에도 피시정요구인이 2014년 3월 31일자 「'새누리당 vs 무소속' 구도 뜬다」 제하의 기사에서 포천시장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최후열 후보자 1인 밖에 없는 것으로 보도하였고, '결승선착 무소속 최후열' 등의 표현과 인물사진을 게재하여 특정 무소속 후보를 부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해당신문 마감일인 2014년 3월 29일까지 김창균 예비후보의 등록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승선착'이란 표현은 선거의 구도와 판세를 전망하는 기사로서 각 후보측의 자체 여론조사와 자사의 취재망을 가동해 편집방향에 따른 보도이지 특정 후보를 부각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또한 2014년 4월 10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의 예비후보 등록사실을 보도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은 포천시에 소재한 주요 언론사로 포천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판세분석을 시도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후보등록현황을 파악했어야 한다. 또한, 각 후보측의 자체 여론조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판세분석을 시도하고 피시정요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자사 대표 출신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 '결승선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부각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4조(공정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누리당 vs 무소속' 구도 뜬다

■ 김종천 · 서장원 · 이강림, 새누리당 경선 앞두고 온갖 '설' 난무

■ '결승 선착' 무소속 최호열 "이번 선거는 낡은 세력과의 대결"

포천시장 선거 최종 대진표는 어떻게 짜여질까.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선거행보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포천시장 선거는 경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후보 대 무소속 최호열 후보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지만, 새누리당 경선전 후보 이탈시 새누리당 후보, 무소속 최호열 후보, 여당 이탈 무소속 후보 등 최대 3~4파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후략)

■ 포천시장 선거 두 달여 앞으로…

'새누리당 vs 무소속' 구도 뜬다

김종천·서장원·이강림, 새누리당 경선 앞두고 온갖 '설' 난무
'결승 선착' 무소속 최호열 "이번 선거는 낡은 세력과의 대결"



포천시장 선거 최종 대진표는 어떻게 짜여질까.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선거행보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포천시장 선거는 경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후보 대 무소속 최호열 후보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지만, 새누리당 경선전 후보 이탈시 새누리당 후보, 무소속 최호열 후보, 여당 이탈 무소속 후보 등 최대 3~4파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종천 시의원, 서장원 시장, 이강림 도의원이 양보할 수 없는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경선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오는 4월 25일 이전에는 경선이 완료돼 새누리당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명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일반시민과 당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후보들에게 4월은 1차 관문을 통과하여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면 출마자체가 무산되는 진인한 4월이 될 수도 있다.

경선을 앞두고 3명의 후보측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승우리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김종천 예비후보는 겉물 현수막에 '기호 1번'을 넣지 않았고, 당 로고를 제외하면 '새누리당'이라는 당명도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김종천 후보는 감히 부인하고 있지만 경선 전 이탈해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는 설이 돌고 있다.

신읍동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이강림 예비후보는 김 후보와는 대조적으로 '기호 1번'과 '새누리당'을 적극 앞세우고 있다. 명함을 내밀 때도 "새누리당입니다"라는 식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선 참여는 당연하다는 이 후보측은 서장원 시장, 김종천 시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혹시 이들 후보가 경선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5월 후보 등록 전까지 직무를 유지하며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서장원 시장은 최근 4년 전 선거조직을 재정비하며 공천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만심이반이 심각하다지만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앞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경선에서 이탈해 무소속으로 나설 것이라는 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경선을 앞둔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천경쟁 가도에서 무소속 최호열 예비후보(전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만심탐방을 통해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로 결승에 선착한 최호열 후보는 양자 대결이든, 3~4파전이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눈치다. 최 후보는 이번 선거구도를 '포천을 낡은 세력 대 포천을 변화시킬 새로운 세력'으로 몰고 간다는 전략이다.

김상호 기자 kshulk@naver.com

의 결 번 호	2014지선216
시 정 요 구 인	노두근 (530320-1******)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서부길 96
피시정요구인	함평천지신문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14-1 (기각리) 대표이사 김 상 석
심의대상기사	함평천지신문 2014년 5월 26일자 1면 「함평군수 선거 정책 대결 실종되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함평천지신문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시정요구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 함평군수)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로서 피시정요구인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각 후보들이 언론사에 보냈거나 보도된 정책공약 발표현황을 보면 안병호 후보가 5월 25일 현재 23건으로 가장 많은 정책공약을 발표한 반면 노두근 후보는 6건의 정책공약만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각 후보들의 공약은 후보 등록 후 배포한 선거공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선거공보에 의하면 안병호 후보는 7건, 시정요구인인 12건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전문가적 시각에서 정확하게 분석되어야 한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비방선거가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다수 군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각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 이후 5월 25일까지 피시정요구인을 포함한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보낸 정책발표공약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그 결과 안병호 후보는 총 26건의 보도자료 중 23건이 정책발표 관련이었고, 시정요구인은 총 6건의 정책관련 발표를 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일까지라도 정책대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 심의대상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는 5월 25일 현재 배포되지 않았으며, 위 심의대상기사는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한 것으로 시정요구인의 정정보도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각 후보자가 몇 건의 정책공약을 제시했는지를 파악하여 보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몇 건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는지 보다, 공약의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비록 선거공보가 5월 25일 현재 배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후보자들로부터 선거공보에 적시된 공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예비후보 등록일로부터 후보자가 언론사나 기자에게 전달한 보도자료 수'를 근거로 보도하여 시정요구인이 경쟁후보자보다 정책공약 준비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함평군수 선거 정책 대결 실종되다

함평의 미래를 책임질 함평군수 선거가 정책대결이 실종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각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 이후 언론사에 보냈거나 보도된 정책공약 발표 현황을 보면 안병호 후보가 5월 25일 현재 23건으로 가장 많은 정책공약을 발표한 반면 노두근 후보는 6건의 정책공약만 발표하였고 김성호 후보는 한 건의 공약도 보도되지 않은 상황이다.(후략)

함평군수 선거 정책 대결 실종되다

정책발표 안병호 23건, 노두근 6건, 김성호 0건

함평의 미래를 책임질 함평군수 선거가 정책대결이 실종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각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 이후 언론사에 보냈거나 보도된 정책공약 발표 현황을 보면 안병호 후보가 5월 25일 현재 23건으로 가장 많은 정책공약을 발표한 반면 노두근 후보는 6건의 정책공약만 발표하였고, 김성호 후보는 한 건의 공약도 보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함평읍에 사는 김 모씨는 "함평의 발전을 책임져야할 함평군수 후보라면 정책대결을 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정책보다 상호 비판적인 쟁점만 부각시키려는 느낌이 들어 혼란스럽다."고 걱정을 하였다.

함평읍에 사는 이 모씨는 "후보자 간의 정책대결은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로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 자기성향에 맞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를 지지해서 자기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정책대결을 펼쳐 군민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가오는 6월 4일 함평군수 선거에서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로 안병호 후보, 무소속으로는 노두근, 김성호 후보가 군민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정치 민주연합 안병호 후보는 기호 2번, 무소속 김성호 후보는 기호 4번, 무소속 노두근 후보가 기호 5번으로 확정되었다.

의 결 번 호	2014지선217
시 정 요 구 인	강 현 석 (52120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5-2 비전프라자 601호
피시정요구인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5번지 대표이사 임 재 윤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4년 5월 16일자 5면 「강현석 "오래된 적폐들이 쌓인 결과" 최성 "지도자, 시민 안전 책임성 인식」 2014년 5월 26일자 8면 「진흙탕 싸움 고양시장 선거, 정치공작 논란」 2014년 5월 28일자 4면 「강현석-최성 '고양터미널 화재' 대응 대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중부일보에 〈별지〉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1. 시정요구인의 주장 ① 2014년 5월 28일자 4면 『강현석-최성 '고양터미널 화재' 대응 대조』 제하의 기사는 기자의 양 후보들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기사 마지막 부분 "문자를 받은 일부 시민들은 ... '정신 나간 작태'라고 쓴 소리"라는 표현 역시 '일부 시민'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다수의 사람들이 본인을 비난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기자의 악의적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② 2014년 5월 26일자 8면 『'진흙탕 싸움' 고양시장 선거, 정치공작 논란』 제하의 기사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있지도 않았던 내용을 사실인양 단정 짓고, '발칵 뒤집으며'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본인을 비방하였다. '일산포럼' 회원인 K씨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최성 시장을 고발한 것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이도록 표현하여 최성후보를 이롭게 만들었고, K씨는 최성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한 시절에도 고양시 예산을 지원받은 인물로 'K씨가 본인과 밀접한 사이'라고 표현한 것은 K씨와 강 후보와의 관계만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K씨는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최성 후보는 물론 진보진영 인사들과도 아주 가까운 인물로, 그러한 인물을 본인과의 관계만을 부각시키며 몇 가지 사실을 악의적으로 짜깁기 하여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편향보도이다. ③ 2014년 5월 16일자 『여야 고양시장 후보 강현석-최성, 세월호 참사 시각 갈려』 제하의 기사는 '말을 흐리다가', "이에 대해서 지역 정가에서는 '두 후보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연의 입장만큼이나 상당한 차이가 난다'" 등의 문구는 '기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느낌을 기사로 작성해서 본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전파하려고 노력한 의도가 다분하다.

이 유

2. 피시정요구인의 답변

① 2014년 5월 28일자 4면『강현석-최성 '고양터미널 화재' 대응 대조』제하의 기사는 사실관계를 따져 보고 작성한 것으로, 최성 후보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자신이 향후 행동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당수 기자들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알린 반면, 피시정요구인은 자신의 동향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다가 5월 27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도자료를 보내온 점 등에 대해 두 사람 중 누가 옳거나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기 앞서 상당히 대조되는 행보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 그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정신 나간 작태"라고 표현한 것은 화재사건 발생 당일 피시정요구인 후원회 측에서 '기부금과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에서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취재원이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했는데도 나름대로 언어를 순화해서 작성한 것으로 기자가 악의적 의도가 드러났다는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판단이다.

② 2014년 5월 26일자 8면『'진흙탕 싸움' 고양시장 선거, 정치공작 논란』제하의 기사 관련, 'K씨가 시정요구인이 고양시장 재직 시 공무원 해외연수 교육을 도맡았으며, 상당한 횟수의 시 보조금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했고,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K씨가 시정요구인의 선거캠프에서 직책을 맡아 일했던 적도 있고 지금도 서로 연락을 주고 있는 사이인 것 등을 감안하여 'K씨가 시정요구인과 밀접한 사이'라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시정요구인이 '일산포럼' 일부 회원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최성 시장 고발자 명단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으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마치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이도록 표현하여 깎아내리고 최성후보를 이롭게 만들었다"고 한 것은 시정요구인의 편향적 주장이다.

③ 2014년 5월 16일자『여야 고양시장 후보 강현석-최성, 세월호 참사 시각 갈려』제하의 기사는 OBS가 2014년 5월 9일과 13일 시정요구인, 최성 두 후보와 한 인터뷰 내용을 조사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시정요구인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말을 흐리다'는 현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 표현했던 것이고, 실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나 말을 흐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마지막 평가 부분은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들은 시민단체 관계자의 평가를 그대로 담백하게 인용한 것이다.

3. 위원회의 판단

언론은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이나, 후보자의 정책공약, 도덕성, 공직수행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① 2014년 5월 28일자 4면『강현석-최성 '고양터미널 화재' 대응 대조』제하의 기사는 '비록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제목과 기사내용이 사실전달보다는 기자의 가치판단이 많이 반영되어 이를 접한 독자나 유권자들이 시정요구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② 2014년 5월 26일자 8면『'진흙탕 싸움' 고양시장 선거, 정치공작 논란』제하의 기사는 시정요구인이 정치공작을 벌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모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였으나, 언론보도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배한 것이다.

이 유	③ 2014년 5월 16일자 『여야 고양시장 후보 강현석-최성, 세월호 참사 시각 갈려』 제하의 기사는 비록 양 후보자가 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많이 작용하였고, 지역 정가의 평가 역시 '시민단체 관계자의 평가를 인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화 하여 전체의 평가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의 정하고 있는 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현석 "오래된 적폐들이 쌓인 결과" 최성 "지도자, 시민 안전 책임성 인식"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최성 후보간 시각과 견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설왕설래.(후략)

여야 고양시장 후보 세월호 참사 시각 갈려

강현석 "오래된 적폐들이 쌓인 결과"
최성 "지도자, 시민 안전 책임성 인식"


강현석


최성

강 "정부 책임만 묻기엔 좀…"
최 "앞으로 실질적 대책 수립 중요"

허일현기자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최성 후보간 시각과 견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설왕설래.

최근 지방의 한 방송사에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비전을 듣기 위해 양당 공천이 확정된 강 후보와 최 후보를 초청해 인터뷰를 차례로 진행.

이에 강 후보는 지난 9일 가진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대참사 앞에서 시민들이 많이 속상하고 했지 않았겠나. 그래다보니 정부에 대한 책임감은 것도 제기가 되고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것"이라고 언급.

또 "대통령 혼자만의 잘못도 아니고 그동안 오래된 적폐들이 쌓인 결과가 아닌가, 이런 것을 지금보면 대통령과 정부에다 계속해서 책임을 묻겠다하는 것은 좀-"이라며 말을 흐리다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 정서가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지않나. 아무래도 좀 섭지않은 선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여.

반면 최 후보는 지난 13일 가진 인터뷰의 비슷한 질문에 대해 "우선 세월호 참사가 준 충격은 모든 국민들에게 슬픔과 분노, 지도자의 책임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시민의 안전을 중요시 하는가 하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역설.

이어 "그런 점에서 모든 우선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 또 과연 내가 정치인으로 행정가로서 얼마만큼 시민의 안전에 올인해 왔나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

또 "누가 진정으로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향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피력.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두 후보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가 새누리당과 새정연의 입장만큼이나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평가.

진흙탕 싸움 고양시장 선거, 정치공작 논란

6·4 고양시장 선거전이 서서히 열기를 뿜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이름을 걸고 상대후보의 검찰 고발을 주도했던 인사가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인물로 드러나 정치공작 논란으로 지역정가를 발칵 뒤집으며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후략)

진흙탕 싸움 고양시장 선거, 정치공작 논란

허일현기자

6·4 고양시장 선거전이 서서히 열기를 뿜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이름을 걸고 상대후보의 검찰고발을 주도했던 인사가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인물로 드러나 정치공작 논란으로 지역정가를 발칵 뒤집으며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산동 주민자치위원을 맡고 있는 K씨는 시민3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난 3월27일 당시 최성 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작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씨는 김영선 시의원이 출간한 '최성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의 내용에서 주장한 Y-시티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특혜의혹과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 의혹 등을 주요골자로 최 시장이 시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고발의 배경에는 K씨가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의혹이 있다는 모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지역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K씨와 강 후보와의 밀접한 관계를 적시하면서 고발에 함께 참여해 연대서명을 받았다는 시민들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K씨가 강 후보와 밀접한 사이라는 주장은 강 후보가 고양시장 재직시절 중인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가 역사교육을 명분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들을 백두산과 중국 등에 연수보낸 당시와 몽골 사업에 자역내 한 교육단체를 운영하면서 이를 맡아 교육을 진행했던 인물이라는 것.

최성 시장 후보 고발 K씨 2010년 강현석 후보 지지자 사전교감 통한 개입설 나와

이에 고발인 명부에는 강 후보가 대표로 있는 '일산포럼' 일부 회원들과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측의 협조로 확보한 명단이 상당수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서명작업에 함께 참여한 H씨가 여느 새누리당 후보를 포함해 P후보측에도 협조를 구하려다가 거절을 당하면서 P후보측 관계자와 말다툼을 벌여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는 후문도 있어 서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속에 K씨의 행보에 대해 강 후보 선거캠프에 운동원으로 이름을 올려 놓지 않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강 후보 캠프에서 운동원으로서 직접 도왔던 적도 있고, 최 후보 고발 전후로 강 후보와 접촉을 가졌던 만큼 사전교감 속에 이뤄진 선거개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K씨는 지난 19일 지역내 한 도의원 선거구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최 후보를 당선시키기위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최 후보를 후보자 매수혐의로 또 다시 검찰에 고발해 '터무니 없는 마구잡이식 고발 남발'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강 후보 최 측근의 한 관계자는 "K씨는 후보와 관계가 없다"며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캠프에 발을 못부치게 하니까 나 모르게 강 후보를 살짝 살짝 만나러 다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화를 받을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측 관계자는 "K씨 등이 검찰 고발의 근거로 삼았던 김영선 시의원의 출판물이 경찰 조사결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시민의 이름을 내세워서 정치공작성 흑색선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현석-최성 '고양터미널 화재' 대응 대조

○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짧은시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고양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최성 후보의 대응이 대조를 이뤄 주목.(후략)

강현석-최성 '고양터미널 화재' 대응 대조

<새누리 고양시장 후보> <새정치 고양시장 후보>

최 "희생자 애도… 수습 최선" 다짐
강 "후원해달라" 문자메시지 발송

강후보, 하루 지나 최후보 책임추궁
일부 시민들 "이해 안된다" 쓴소리

허일현기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짧은시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고양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최성 후보의 대응이 대조를 이뤄 주목.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오전 9시2분에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돼 30여분만에 진압이 완료됐지만 7명이 사망하고 5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사건이 발생하자 최 후보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10시54분께 '선거운동 잠정 중단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부상자 치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자를 발송. 또 오후 3시36분 이메일을 통해 "화재사건 희생자께 깊은애도를 표하고 가족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시장직 무정지 상태이지만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의 안전대책마련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

반면 강 후보 측은 화재가 수습되지 않은 오후 3시50분께 후원회 명의로 '강현석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다시한번 도전에 나선다', '후원인 여러분 마음과 뜻을 모아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후원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

특해 화재와 관련 어떤 방식의 입장도 표명하지 않다가 27일 "최 후보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인재로 시민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했다"며 "늘 '안전'을 외쳐왔던 최 후보가 이번 화재사고에 대답해야 할 차례가 됐다"고 책임추궁식 보도자료를 배포.

문자를 받은 일부 시민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화재로 인해 세월호 참사처럼 많은 희생자가 나오면 어쩌나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정신나간 작태"라고 쓴소리.

의 결 번 호	2014지선218
시 정 요 구 인	유 두 석 (500227-1******)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9-1 3층 유두석 선거사무소
피시정요구인	우리군민신문 유한회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5-1 2층 대표이사 김 정 훈
심의대상기사	우리군민신문 2014년 5월 26일자 3면「손수정 2006년 선거 당시, 유두석 후보에 거액 건낸 사실 증언」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우리군민신문에 〈별지〉 사과문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시정요구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 장성군수)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로, 본인이 2006년 선거 당시 손 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는 시정요구인의 경쟁상대인 김 모 후보의 부인이 손 씨의 제보에 따라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된 후, '손 씨가 2006년 선거 시에는 시정요구인 후보의 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근거로 보도한 것이며, 보도 이후 손 씨가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체포되어 손 씨의 증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 기사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정요구인에게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반면,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증언내용은 눈에 띄게 편집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시정요구인이 손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배한 것이다. 다만,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데, 시정요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심의대상기사가 선거에서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손수정 2006년 선거 당시, 유두석 후보에 거액 건낸 사실 증언

김양수 장성군수후보의 부인에게 거액을 받았다며 검찰에 제보한 손수정씨가 2006년 유두석과 고 이병직후보와 선거당시에도 거액을 유두석 후보에게 건네고, 이를 빌미로 몇 배의 금액을 요구해 받아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증언대로라면 손수정씨는 김양수 군수부인의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 선거브로커로서 선거철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후보자나 가족에게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후략)

손수정, 어떤 사람인가?

불법 대부업 하면서 이권청탁 등 일삼아

이번 김양수 후보 부인으로부터 거액을 요구해서 받은 뒤 김양수 군수와 담판을 짓겠다던 손 모씨는 장성읍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그동안 불법 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손 모씨의 성격으로 볼 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김양수 군수를 옭아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모씨는 장성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100만원에 연이자를 120%까지 받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폭리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손수정 2006년 선거 당시, 유두석 후보에 거액 건낸 사실 증언

손수정, 어떤 사람인가?

불법 대부업 하면서 이권청탁 등 일삼아

손수정, 유두석에 건낸 돈 받아내는 과정

손수정, 오 모 씨 떠밀며 "건낸 돈의 몇 배를 받아오라" 발해

오모씨, 유두석 후보에게 돈을 달라 요구

유두석, 점잖하며 "그거하나 못 막고 돈 달라하는가, 자네도 똑같네"핀잔

오모씨, 유두석은 돈을 안주고 손수정은 계속해서 (돈 받아오라) 들볶고 해서 유두석에게 "안하가 됐든 줘 버려라"발해

유두석, 친구 정 모 씨 통해 일정 부분 돈 건네줌

오모씨, 정모씨 집 근처 밤 11시경 돈 건네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손수정이 돈을 가져감. 이후 손수정-정 모씨 선관위에 유후보 고발해 포상금 두고 협의도

4. 주 의

의 결 번 호	2014지선104
시 정 요 구 인	유 승 화 (5000529-1******)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경남투데이거제미래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3길 40 대표이사 최 윤 기
심의대상기사	경남투데이 2014년 2월 19일자 1면「특화산단확정, 권시장 공천 '파란불'」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경남투데이에 〈별지〉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소속 경남 거제시장 예비후보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의 위 심의대상기사 중「특화산업단지 확정」이라는 표현은 허위이고,「권시장 공천 '파란불'」이라는 제목은 중립적이지 못하며 상대후보자들의 주장을 '딴지'라고 표현 한 것은 불공정보도라며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거제시가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사실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기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상대 후보자의 주장을 '딴지'라고 표현한 것은 불공정 하다"는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딴지'라는 표현이 피시정요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만 게재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거제시를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로 지정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현직 시장의 독자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판단, 피시정요구인이「권시장 공천 '파란불'」,「공천에 한 발 자국 가까이 다가서는 … 희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등으로 표현한 것은 현직시장의 공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부분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특화산단확정, 권시장 공천 '파란불'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거제시가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입지선정에 확정되면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권민호 현 거제시장이 공천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서는 것 아니냐는 희망이 나오고 있다. 권 시장으로서는 호재를 만난 셈이다. 권 시장은 17일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단 지원 발표

에 따른 사업참여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거제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등면 사곡리 일원 약 381만㎡ 규모로 해상매립 형식이며, 오는 2020년까지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시는 또 이 사업의 주체가 될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이 법인으로 하여금 실수요조합과 금융권에서 민간부문 출자자를 모집하고, 지자체와 공기업 등에서는 공공부문출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SPC와 달리 실수요자와 금융권이 연계해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수요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해 주던 PF 대출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거제시가 기대하는 효과는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이다. 이 발전사업을 통해 58.8MW급 전력을 생산해 내면서 약 3,800억 원의 에너지생산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으로 기업의 입주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거제시가 '에너지 자급자족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그 포부다. (후략)

특화산단 지원확정, 권시장 공천 '파란불'

지방선거 유리하게 끌고 갈 호재로 작용할 듯



▲ 권민호 거제시장은 이번 특화산단확정이 선거에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브리핑 현장.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부여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거제시가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입지선정에 확정되면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권민호 현 거제시장이 공천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서는 것 아니냐는 희망이 나오고 있다. 권 시장은 17일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단 지원 발표에 따른 사업참여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거제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등면 사곡리 일원 약 381만㎡ 규모로 해상매립 형식이며, 오는 2020년까지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시는 또 이 사업의 주체가 될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이 법인으로 하여금 실수요조합과 금융권에서 민간부문 출자자를 모집하고, 지자체와 공기업 등에서는 공공부문출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SPC와 달리 실수요자와 금융권이 연계해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수요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해 주던 PF 대출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거제시가 기대하는 효과는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이다. 이 발전사업을 통해 58.8MW급 전력을 생산해 내면서 약 3,800억 원의 에너지생산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으로 기업의 입주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거제시가 '에너지 자급자족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그 포부다.

부산강서산단(주), 실수요자 확보 통한 금융권 지원 기대

거제시는 이번 사업에 주관사로 부산강서산업단지(주)(대표 손호영)의 주최로 만든 부산신항산업단지협동조합(이하 신항조합)을 선정했다. 신항조합 손호영 조합장은 이에 대해 "조합의 역할은 사업비를 조달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실수요자를 확보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는 '사전심수요자' 확보가 관건"이라고 했다.

거제시와 거제상공회의소 등 지역내 산업현장에서는 신항조합이 거제 특화산단에 뛰어들면서 보다 안정적인 금융권의 지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신항조합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정액 조달한다는 목표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맞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추진하게 된다. 또 선분양 효과로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어 유치업종에 적합한 우수기업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양질의 산업용지를 공급받기 희망하는 조합사들에게 저렴한 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청국, 타 거제시장 예비후보들 '예민한 반응'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부여투자진흥회의에서 나왔던 5개 지역 특화산단 지정을 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표에 대해 언론을 비롯해 국토부까지 "국가산단 확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때 '거짓말'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국가가 R&D자금지원과 거점시설 입지를 우선 공급하고 각종 인허가를 협조하는 등 실질적인 국가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인 만큼 명칭을 지나치게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긋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거제시의 입장도 경남도와 같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권민호 거제시장의 상대후보들 진영에서는 이번 '특화산단'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유승화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가 경남도 발표에 대해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특화산업단지 입지지원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야권단일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이보다 수위를 높였다. 그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거제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단확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이를 마치 확정된 것인 양 홍보를 한다"며 "나중은 모르겠고 우선 선거용으로 써먹자는 식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역특화산업단지의 의미는 법률적 지위가 담보되어 국가지원이 확정되는 산업단지 유형이 아니라 추상적인 정책용어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토부, "산업단지 명칭차이일 뿐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는 국가지원사업 맞다"

하지만 국토부 해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산단이라는 명칭은 지금 결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산단으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번 발표된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고,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향후 지자체의 수요가능성과 사업추진계획 등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이 사업지역으로 결정된 5개 지역에 대해서 일부에서 취소될 가능성을 묻기도 한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은 국가에서 이 지역들을 특화해서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곡산업단지의 자리적인 장단점을 종합해서 지정하거나 다른 곳을 지정하는 권한은 국가에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비록 일반산업단지가 되더라도 국가에서 해양플랜트 특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국가의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권민호 시장, "특화산단, 선거전에 악용돼선 안 돼"

권민호 시장은 "거제는 47개 유치기업을 확보한 상태"라며 "향후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산단 지정에 관가름이 날 것"이라고 했다. 권 시장은 또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눈 앞의 이익보다는 거제 미래 100년의 경제적인 분수령이 될 사업으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언론과 지역기업들, 그리고 지자체와 지방선거를 앞둔 모든 후보들과 거제시민들이 함께 이번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 해 달라. 우리 거제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악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박윤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 이사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인사말에서 "거제가 특화산단지 확정으로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메카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조합에서는 외국회사와 국내회사간 공동포럼과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해 인력의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을 지원하고, 외국 선주들의 업무대행 등 다양한 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민용 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141
시 정 요 구 인	강 석 주 (640810-1******)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4로 8
피시정요구인	한려투데이(주) 경상남도 통영시 미나리길 74, 2층 대표이사 이 광 호
심의대상기사	한려투데이 2014년 3월 28일자 1면, 2면「통영시장선거, 양강구도냐 3강체제냐」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한려투데이에 〈별지〉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경상남도 새누리당 통영시장 예비후보인 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이 후보자간 장단점을 기사화 하지 않고 '특정 후보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등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문구를 사용한 것은 자신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 왜곡이고, '놀라운 것은 강석주 후보가 두 번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 여론조사의 출처와 신뢰도는 차치하고라도 그 격차 역시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라고 보도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보도 시 공표해야 할 내용을 밝히지 않은 불공정한 선거보도"라며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는 ① '특정후보'만의 단점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 사이에 회자되던 후보별 장단점을 언급한 것일 뿐, 시정요구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②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시중에 나도는 여론의 하나일 뿐 여론조사결과가 아니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강석주 후보가 김동진 시장을 약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③ 기사 말미에서 "선거판은 이런저런 뜬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 관련 기사내용은 인터넷판 기사에서 삭제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나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시중의 평가와 여론만을 근거로 판세를 분석하여 보도한 것은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8조(여론조사 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제목과 부제목은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시정요구인이 인터넷판 기사에서 여론조사 관련 부분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심의대상기사는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사과문 게재 결정을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통영시장선거, 양강구도냐 3강체제냐

오는 6월4일 통영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치열하다. 더구나 새누리당 시장후보 경선결과가 4월 중순이면 나올

예정이서 더욱 그러하다. 새누리당 경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양강 다툼이 될 것이냐, 아니면 3강 싸움이 될 것이냐"로 전체 선거판도가 요동칠 전망이다.(중략)

그래도 혹시 김동진 시장이 경선결과에 승복한다면 강석주 새누리당 후보와 진의장 무소속 후보가 정면대결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어떤 전문가는 "강석주 후보가 못 이긴다. 진의장 전시장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다른 전문가는 "조직력과 젊음을 가진 강석주 후보가 노회하고 조직력도 없는 진의장 후보를 쉽게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략)

김시장은 이미 2010년 무소속후보로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이긴 전력이 있다. 모 소식통에 의하면 '3강싸움'을 전제로 한 두번의 여론조사 결과 김동진 시장이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강석주 후보가 두 번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 여론조사의 출처와 신뢰도는 차치하고라도 그 격차에서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한다.(후략)

통영시장선거, 양강구도냐 3강체제냐

김동진,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능성 무게, 물밑작업 완료 소문
강석주, 젊은 후보 장점 부각시키지 못해, 당결집 효과는 극대화
진의장, 3강 본선 팽팽한 대결 예상, 기본 지지층 탄탄

오는 6월4일 통영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치열하다. 더구나 새누리당 시장 후보 경선결과가 4월 중순이면 나올 예정이서 더욱 그러하다. 새누리당 경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양강 다툼이 될 것이냐, 아니면 3강 싸움이 될 것이냐"로 전체 선거판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편집자註)



▲ 6·4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둔 지금 강석주 예비후보(새누리당), 김동진 시장(새누리당), 진의장 전시장(무소속) (좌로부터)

일명 '빅3' 의 본선대결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 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시나리오의 중심은 역시 김동진 시장으로 그의 움직임에 따라 양강대결 또는 3자구도가 될 전망이다. (편집자註)

선관위 등록마감 5월16일 이후 부시장 대행체제 전환

6·4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또 새누리당의 후보공천여부가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보고 선거양상을 점쳐어 보는 것도 지방선거를 관전하는 재미가 될 것이다. 본지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다.

관전에 앞서 향후 선거일정을 먼저 살펴보자. 시장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의 선관위 등록마감일은 5월16일이다. 현재까지 강부근(67) 소장, 강석주(49) 전 도의원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있고(사퇴한 정동영 예비후보는 제외), 무소속으로 진의장(69) 전시장과 박청정(71) 대표가 등록했다.

김동진(63) 현 시장은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5월16일까지는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순간부터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직 시장은 현직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 가능한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김 시장도 최대한 미룰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정선거기간은 5월 22일~6월 3일까지 13일 동안이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경선일정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 지난 15일 공천접수를 마감한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이달 말까지 기본 자격심사를 거쳐 경선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에 경선방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경선후보자가 결정되면 경선룰에 따른다는 예비후보자간 합의를 완료하며 이렇게 되면 당내 경선참가자의 탈당 후 무소속출마는 원천 차단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달 13일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해 14일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투표결과와 사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최종 득표수에 따라 도지사 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시장·군수 경선결과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룰 합의되면 무소속 출마 원천차단

새누리당 경선의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 인지다. 일단 기본룰은 당원지지도 50%, 여론조사 50%다. 하지만 새누리당 당원 30%, 여론조사 30%와 더불어 지구당위원장 몫으로 20%를 배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강석주 예비후보는 어느 경우든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김동진 시장은 적어도 후자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직 프리미엄을 만끽(?)하고 있는 김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는 것도 새누리당과 이군현 위원장의 확답을 받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많다. 김 시장은 어쩌면 탈당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지도 모른다. 탈당분위기를 미리 조성해서 유리할 것 하나 없다는 판단이 그 배경일 것이다. 그리고 그 명분은 '경선룰이 너무 편향적'이라는 것이 될 공산이 크다.

당원이라고는 해도 위원장과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김 시장이 선불리 경선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이군현 위원장이 나설 2016년 총선까지 생각한다면 변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① 강석주 對 진의장 (金이 승복하고 姜이 공천된 경우 : 양강구도)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시나리오다. 현역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김동진 시장이 메인이벤트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좀체 하기 어렵다. 당내경선분위기가 강석주 예비후보로 쏠리면 김동진 시장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결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선결과에 승복한다면 강석주 새누리당 후보와 진의장 무소속 후보가 정면대결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어떤 전문가는 "강석주 후보가 못 이긴다. 진의장 전시장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다른 전문가는 "조직력과 젊음을 가진 강석주 후보가 노회하고 조직력도 없는 진의장 후보를 쉽게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군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강석주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이점도 있고, 그간 앙계 모르게 막혀있던 시장-국회의원 간 소통이 원할 해 질 것이란 예상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 2면 계속

〈社告〉
이번 호부터 지면 발행일을 매주 금요일로 변경합니다.

▶ 1면에 이어

진 전시장 캠프로서는 도의원 외에는 이렇다 할 경륜이 없는 강석주 후보가 상대하기 더 쉬울 것이란 관측과, 오랫동안 당원으로서 활동한 강석주 후보를 중심으로 당조직이 더욱 결집해 어려운 본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② 김동진 對 진의장(金이 새누리당 시장후보로 공천된 경우 : 양강구도)

현역시장이라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김 시장이 관변조직을 밑바닥부터 이미 접수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난해는 5월 중순에야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내달 3일 임시회에 1차 추경예산을 상정한다. 돈을 주무르는 입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것이란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러 번의 선거경험이 있는 진 전시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지만, 이 시나리오로는 정당조직의 지원을 받는 현역시장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측이 주를 이룬다.

진 전시장 캠프는 이 시나리오 역시도 장단점을 같이 내다보는 것 같다. 현직시장이라는 프리미엄에 당조직의 지원을 받으면 본선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단점이 있지만, 시민들이 '많은 일을 했던 시장'과 '일 하지 않은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뜻밖에 쉬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예측도 조심스레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본선은 아직 염두에 두지 않고 당내경선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강석주 후보자 캠프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새누리당 필패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군현 위원장은 당내경선에 어느 예비후보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후보경선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큰 정치적 자산을 얻을 수 있는 강석주 후보로서는 아쉬울 것도 없어 보인다.

시나리오① 전문가 의견 엇갈려 검증 안 된 姜보다 陳 유리할 가능성
시나리오② 현직프리미엄+당조직의 지원 업으면 가장 유리, 李心이 변수
시나리오③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여론조사 결과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

③ 강석주 對 김동진 對 진의장(金 탈당 무소속 출마, 姜 공천)

물과 기름 같은 김 시장과 이 위원장이 윈-윈 전략으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경선룰에 불복한 김 시장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시나리오다. 또한 가장 예측하기 힘든 시나리오기도 하다.

현직프리미엄이 있다지만 무소속이라면 급격히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진의장 전시장도 결코 유리해 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강석주 새누리당 후보에게 기회가 올 공산이 크다. 진 전시장 캠프도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본선에서 평평하게 힘겨루기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시장은 이미 2010년 무소속후보로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이긴 전력이 있다. 모 소식통에 의하면 '3강싸움'을 전제로 한 두 번의 여론조사 결과 김동진 시장이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강석주 후보가 두 번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 여론조사의 출처와 신뢰도는 차치하고라도 그 격차 역시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강석주 후보가 김동진 시장을 약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선거판의 이런저런 뜬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각 후보진영, 장단점 극복하고 공정한 본선 대결 펼치기를

강석주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강석주 후보는 4대비전과 세부실천공약을 발표하면서 "통영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권력으로 무언가를 축적하는 의심이 든다"며 김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일종의 네가티브 전술을 폈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있다. 젊음이라는 강점을 가진 강석주 후보가 굳이 케케묵은 네가티브 전략전술을 구사해 구세대와의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통영을 변화시키는 젊은 파워, 열정과 패기 넘치는 미래 통영의 청사진을 기대하고 개소식에 참가했던 중도성향계층이 실망했다는 후문이다.

김동진 시장은 "지금까지 선거 중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다. 또 강석주 후보의 "시장직을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나서라", "추경예산은 신임시장에게 맡기라"는 말을 애써 무시하는 모양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충실한 것 같지 않다"는 주위의 날선 비판도 김시장이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진 전시장은 다른 후보들이 자신의 고령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건강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가 결정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내달 5일이면 선거일 D-60일이 된다. 시민들이야 본선까지 이어질 후보군들의 열띤 경쟁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테지만, 당사자들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을 것이다. 우리가 팔칠 다음 장(章)은 통영시와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좋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놓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는 일일 것이다.

김숙중 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181
시 정 요 구 인	윤 진 식 (460304-1******)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1037 BYC빌딩 7층
피시정요구인	(주)충청투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운천동 1373) 대표이사 정 남 진
심의대상기사	충청투데이 2014년 2월 17일자 21면 「자치단체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2014년 2월 20일자 1면 「윤진식 에코폴리스 쟁점화 재보궐선거 비난 무마용」 2014년 2월 21일자 1면 「불안한 윤진식…결국 '사석' 두나」 2014년 2월 24일자 1면 「AI 확산 속 초비상인데 윤진식 '치적홍보' 눈총」 2014년 2월 24일자 21면 「윤진식 의원이 충북지사에 출마하려면」 2014년 3월 4일자 1면 「이시종에 칼대고 박근혜엔 줄대고」 2014년 3월 4일자 2면 「"출마 자격 없다" 尹 비판 여론 '부글'」 2014년 3월 13일자 1면 「아군 없는 윤진식 '사면초가'」 2014년 3월 13일자 2면 「혁신 정책 바닥났나 공약베끼기 웬말인가」 2014년 3월 28일자 1면 「윤진식 '차출인사' 맞나」 2014년 3월 28일자 2면 「윤진식 "모두 다 이시종 탓" 보궐선거 문제 물타기 하나」 2014년 3월 31일자 1면 「충주에코폴리스 진실은…"지사되면 관련 공무원 문책" 핫이슈」 2014년 4월 3일자 1면 「"본전 생각에 고집하다간 쪽박"」 2014년 4월 4일자 1면 「'반쪽 에코폴리스' 부메랑」 2014년 4월 4일자 20면 「尹의원은 도지사선거 출마할 때인가」 2014년 4월 7일자 20면 「'막말' 이래도 됩니까?」 2014년 4월 7일자 21면 「이시종 · 윤진식 후보 정책대결 펼쳐라」 2014년 4월 11일자 1면 「윤진식 '미행' 선거전 한창 시기 돌연 3박5일 일정 미국방문 궁금증 증폭」 2014년 4월 14일자 1면 「STX 강덕수 구속영장…MB맨들 '긴장'」 2014년 4월 17일자 1면 「떠오르는 충북지사 선거 이슈 '세종시' 尹 "치명적 발상"」 2014년 4월 17일자 2면 「윤진식 '나홀로 경선' 뒤엔 '빅딜' 있었다?」 2014년 4월 18일자 1면 「수도권 기득권 유지 찬동 "지역대표 자격없다" 여론」 2014년 4월 18일자 2면 「국민 슬픔 이용 '선거운동 문자' 빈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충청투데이에 〈별지〉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시정요구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충북도지사후보로, 피시정요구인이 이시종 현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는 사실적 보도를 하면서 시정요구인에 대해서는 기사, 칼럼, 사설 등을 통해 흠집내기성 인신공격이나 정책 · 공약의 왜곡 등 불공정한 보도를 함으로써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며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 유	이에 대하여 피시정요구인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일후보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뉴스거리가 별로 없는 반면, 연초부터 새누리당의 충북도지사 후보결정이 지역의 관심사였고, 시정요구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충주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점,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한 것에 대한 지역 내 여론 등에 근거해 위 심의대상기사를 보도한 것이므로 단순히 '양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심의대상 기사가 전반적으로 시정요구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나, 선거와 관련한 지역의 관심사를 보도한 점, 시정요구인이 고위 공직을 수행했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공인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도정을 책임질 수도 있는 유력한 후보자의 검증 차원에서 언론이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심의대상기사 중 2014년 2월 24일자 21면『윤진식 의원이 충북지사에 출마하려면』제목의 사설에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 '망발'등 감정적이고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 2014년 3월 4일자 2면『"출마 자격 없다" 尹 비판 여론 '부글'』제목의 기사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긴 것, 2014년 4월 4일자 20면『尹의원은 도지사선거 출마할 때인가』제목과 2014년 4월 7일자 20면『'막말' 이래도 됩니까?』제목으로 시정요구인을 비판한 외부인사 칼럼을 게재한 것, 2014년 4월 14일자 1면『STX 강덕수 구속영장 …MB맨들 '긴장'』제목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비리와 연관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보도한 것, 2014년 4월 17일자 2면『윤진식 '나홀로 경선' 뒤엔 '빅딜' 있었다』제목의 기사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 등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공정보도를 통해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자치단체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6·4지방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늘상 거론되는 인물들 외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인사들이 튀어 나오는 걸 보면 자치단체장의 매력은 여전한 모양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정도로 자치단체장이 그리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다.(중략)

그런데 요즘 충북지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인사들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이시종 현 지사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했다지만 새누리당의 경우는 뚜렷한 주자 없이 간보기에만 나선 주자들이 많은 것 같다. 현재 거론되는 새누리당 지사 후보로는 서규용 전 농림부장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윤진식 국회의원, 김기용 전 경찰청장 등이다.(중략)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재판중인 윤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지사 출마를 시사 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 전 청장도 몇몇 국회의원으로부터 출마권유를 받고 여론탐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社說

자치단체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6·4지방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늘상 거론되는 인물들 외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인사들이 튀어 나오는 걸 보면 자치단체장의 매력은 여전한 모양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정도로 자치단체장이 그리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다.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과 리더십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충북 입장에선 두터운 중앙인맥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물이 절대 필요하다. 체력도 달리고 중앙인맥도 변변치 못해 집무실에서 하루 종일 죽치는 그런 단체장은 필요 없다.

그런데 요즘 충북지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인사들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이시종 현 지사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했다지만 새누리당의 경우는 뚜렷한 주자 없이 간보기에만 나선 주자들이 많은 것 같다. 현재 거론되는 새누리당 지사 후보로는 서규용 전 농림부장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윤진식 국회의원, 김기용 전 경찰청장 등이다.

서 전 장관은 장관시절부터 지사 표밭갈이에 힘써 왔고 다음달 5일 사퇴 예정인 이 교육감 역시 교육계를 정치판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지사 야욕이 강하다.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재판중인 윤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지사 출마를 시사 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 전 청장도 몇몇 국회의원으로부터 출마권유를 받고 여론탐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사에 맞설 새누리당 주자가 이들 중에서 나올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툭 튀어 나올지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 이 가운데는 왜 나오려 하는지 이해안가는 인사도 있다. 단지 얼굴이 알려졌다고, 또 고위직 출신이라는 이유로 출마를 들먹이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들은 정당지지도만 믿고 깃발만 들고 나오면 당선되는 줄 아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곱씹어 보게 된다.

자치단체장의 수준은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장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한자리 해 먹겠다고 나선 그런 정신 나간 인물들을 응징하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유권자들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윤진식 에코폴리스 쟁점화 재 · 보궐 선거 비난 무마용

충주에코폴리스 공방전으로 이시종(67) 충북지사에게 선제 공격을 날린 윤진식(68) 국회의원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6 · 4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뜻을 둔 상태에서 에코폴리스라는 지엽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윤 의원의 시선이 이 지사가 아닌 충주시민을 향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충북도가 내놓은 충주에코폴리스 분할 개발방식을 '반쪽 개발'로 깎아내리고 원안대로 개발할 능력이 안된다면 차기 지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충북도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냈고 민주당 소속 충주시 · 도의원 13명도 성명을 통해 "충주에코폴리스와 관련해 윤 의원이 충북도의 단계적 개발을 반대한 것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역풍을 맞은 윤 의원은 16일 기자회견 때의 기세와는 달리 충북도와 민주당의 역공에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후략)



윤진식 에코폴리스 쟁점화
재·보궐 선거 비난 무마용

6·4 지방선거

공방전 숨고르기 들어가
李 공격카드 편치력 약해
"민심 보듬기 위한 꼼수"

충주에코폴리스 공방전으로 이시종(67) 충북지사에게 선제 공격을 날린 윤진식(68) 국회의원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6·4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돛을 문 상태에서 에코폴리스라는 지엽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윤 의원의 시선이 이 지사가 아닌 충주시민을 향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충북도가 내 놓은 충주에코폴리스 분할 개발방식을 '반쪽 개발'로 깎아내리고 원안대로 개발할 능력이 안된다면 차기 지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충북도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냈고 민주당 소속 충주시·도의원 13명도 성명을 통해 "충주에코폴리스와 관련해 윤 의원이 충북도의 단계적 개발을 반대한 것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역풍을 맞은 윤 의원은 16일 기자회견 때의 기세와는 달리 충북도와 민주당의 역공에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에코폴리스 문제 제기는 오송역 세권, 청주공항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잽에 불과하고 재·보궐 선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충주지역 민심을 보듬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충주는 2004년 이후 재·보궐선거만 4차례 치러지는 등 '선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2004년 당시 충주시장이었던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시장직을 사퇴해 갑은 해 6월 보궐선거가 열렸다. 2006년 5월 한창희(61) 전 시장은 기자에게 촌지를 준 혐의로 3개월 만에 낙마하면서 이해 10월 재선거를 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시종 지사가 충북지사에 당선되면서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2011년에는 우건도(65)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고 10월 재선거가 열렸다.

충주시가 한 차례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드는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연이은 선거 때문에 시민혈세 수십억원이 투표함 속으로 사라진 셈이다. 특히 잦은 선거는 지역분열을 심화시킨다.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충주시민들의 시선이 싸늘한 이유다.

한 충주시민은 "선거라면 지긋지긋하다. 올해는 부표하락 가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충주시는 2012년 4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50대에서 가장 낮은 50.1%의 투표율을 보였다. 충북 전체 투표율은 54.6%였다.

윤 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한다면 충주시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자리를 재두기 위해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더욱이 대법원에 상고된 윤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만약 도지사 당선 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도지사 재선거까지 치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역 민심을 읽은 윤 의원이 시민들의 재·보궐 선거에 대한 반감을 지역 개발 이슈로 희석시키기 위해 에코폴리스 개발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방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안 개발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폴리스 문제를 꺼내 든 것은 이 지사를 공격하는 카드라기엔 편치력이 약하다"며 "충주 지역에 재·보궐 선거에 대한 반감을 가라앉히고 다음 한방을 위한 탐색전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lymcu@cctoday.co.kr

불안한 윤진식…결국 '사석' 두나

충북지사 출마를 시사한 새누리당 윤진식(68·충주) 국회의원이 무리수를 둬 가며 정치적 모험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은 꼭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다"며 충북지사 출마의사를 내비친 뒤 충북도와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윤 의원이 '집토끼 잡으려다 산토끼까지 둘 다 놓치는 사석(捨石·바둑에서 작전상 버릴 셈 치고 놓는 돌)을 두고 있다'는 반응이다. 윤 의원이 이처럼 정치적 모험을 하는 것은 일단 2016년 치러질 제20대 총선에서 공천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후략)



불안한 윤진식…결국 '사석' 두나

〈捨石〉

차기 총선 '親李 공천학살' 재연 우려 지선으로 눈돌려
당선후 대법 판결서 뒤집히면 재·보궐선거비만 16억원

충북지사 출마를 시사한 새누리당 윤진식(68·충주) 국회의원이 무리수를 둬 가며 정치적 모험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은 꼭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다"며 충북지사 출마의사를 내비친 뒤 충북도와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윤 의원이 '집토끼 잡으려다 산토끼까지 둘 다 놓치는 사석(捨石·바둑에서 작전상 버릴 셈 치고 놓는 돌)을 두고 있다'는 반응이다. 윤 의원이 이처럼 정치적 모험을 하는 것은 일단 2016년 치러질 제20대 총선에서 공천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친박 공천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이(이명박)계가 여당내 야당이었던 친박계를 철저히 공천에서 배제했던 상황이 역으로 재연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를 잘 아는 윤 의원이 살아남기 위해 지방선거로 눈을 돌리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윤 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된 검찰 증거가 2심에서 깨진 부분이 있어 상고심에서 다툼보기로 했다"며 상고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충주시민들은 또 다시 두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훈시규정 상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속처리토록 돼 있지만 형사법을 따르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재판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실례로 한명숙(70)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0월31일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2년 9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윤 의원의 재판은 기소후 1년 9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혹여 윤 의원이 충북지사에 당선됐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총선(국비 10억원)과 지선(지방비 6억원) 재·보궐선거 비용으로만 16억여원이 날아갈 것"이라며 "재·보궐선거 공화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민심이반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8@cctoday.co.kr

AI 확산 속 초비상인데 윤진식 '치적홍보' 눈총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 속에서 의정보고회를 강행중인 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 의원의 행보에 대해 "농촌실정을 외면한 처사"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 윤진식(68·충주) 국회의원은 24일 충주시 연수동과 교현동에서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윤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충주지역 읍·면·동을 순회하고 28일에는 충주문화회관에서 종합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AI가 인근 음성지역까지 확산돼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중부내륙선철도 예산 확보, 롯데맥주 충주공장 완공 등 의정활동 치적을 설명하는 의정보고회를 강행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후략)



AI 확산 속 초비상인데
윤진식 '치적홍보' 눈총

오늘 의정보고회 강행
내일까지 지역 순회도
28일에는 종합 보고회
"농촌실정 외면한 처사"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 속에서 의정보고회를 강행중인 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 의원의 행보에 대해 "농촌실정을 외면한 처사"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 윤진식(68·충주) 국회의원은 24일 충주시 연수동과 교현동에서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윤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충주지역 읍·면·동을 순회하고 28일에는 충주문화회관에서 종합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AI가 인근 음성지역까지 확산돼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중부내륙선철도 예산 확보, 롯데맥주 충주공장 완공 등 의정활동 치적을 설명하는 의정보고회를 강행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김모(64·주덕읍) 씨는 "AI가 코 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다른 곳에 신경 쓸 정신이 있겠느냐"며 "윤진식 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열리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 농민은 "다른 지역은 AI때문에 일정을 취소하는 판에 주민들 모아놓고 굳이 의정보고회를 강행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음성군은 저난 4일 대소면 삼정리, 18일 맹동면 봉현리 씨오리농가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1일 삼성면 청용리 농가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비상이 걸린 상태다. 충주는 음성과 맞닿은 지역인데다가 전국에서 처음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에서 씨오리를 분양받은 농장도 있다. 충북에서 첫 AI 확진 판정을 받은 진천의 오리농장도 고창농장에서 씨오리를 공급받았다. 이에 따라 충주 지역 가금류농가들도 초비상 상태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윤 의원이) 지사 선거 출마를 시사했지만 아직은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것 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소 무리해 보이기까지 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이용민 기자 lymeus@cctoday.co.kr

윤진식 의원이 충북지사에 출마하려면

6·4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과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사 선거전은 벌써부터 감정을 내세운 혼탁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그 중심엔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의원이 있다. MB정부시절 왕의 남자로 불리던 윤 의원의 등장으로 충북도민들도 기대가 컸다. 실세인 만큼 충북에 큰 도움을 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그 막강한 힘을 정적제거에 이용했다는 의심을 사더니 당선 후에는 충북도와 사사건건 대립했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서로 각을 세워봤자 득 될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좋으나 싫으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 의원은 그러질 않았다. 그 예가 충부내륙철도와 충주에코폴리스다. 윤 의원은 당선으로 추진 중이던 중부내륙철도(여주-충주-문경)를 북선으로 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더니 착공시기마저 늦추게 했다. 지금은 당선으로 회귀한 사업 예산을 따냈다며 홍보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태클은 충주에코폴리스다.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관심을 갖고 나섰던 정우택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이 문제다. 윤 의원의 막무가내 식 추진으로 전투기비행장 인접지역을 사업지구로 하다 보니 소음·고도문제가 제기됐다. 소음지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충북도는 문제 지역을 분할,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윤 의원에게 사전 보고한 뒤 발표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도가 충주시민의 기대를 죽박 내려 한다는느니, 땅 한 평도 내 줄 수 없다느니, 차기 지사에 맡기라느니 등 말발을 쏟아냈다. 상식이하의 반응이자 적반하장이었다.

이 모든 게 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윤 의원의 의도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상황은 심각하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국론분열의 주범인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사 자리를 탐내 도정을 발목잡고 지지 세력을 규합해 압박하는 구태와 계속 손을 잡는다면 공인자격이 없다. 윤 의원이 이에 대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지사 자리는 그의 인감보신 [illegible] 일 뿐이라는 것을 일러주고자 한다.



社說

윤진식 의원이 충북지사에 출마하려면

6·4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과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사 선거전은 벌써부터 감정을 내세운 혼탁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그 중심엔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의원이 있다. MB정부시절 왕의 남자로 불리던 윤 의원의 등장으로 충북도민들도 기대가 컸다. 실세인 만큼 충북에 큰 도움을 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그 막강한 힘을 정적제거에 이용했다는 의심을 사더니 당선 후에는 충북도와 사사건건 대립했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서로 각을 세워봤자 득 될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좋으나 싫으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 의원은 그러질 않았다. 그 예가 충부내륙철도와 충주에코폴리스다. 윤 의원은 당선으로 추진 중이던 중부내륙철도(여주-충주-문경)를 북선으로 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더니 착공시기마저 늦추게 했다. 지금은 당선으로 회귀한 사업 예산을 따냈다며 홍보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태클은 충주에코폴리스다.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관심을 갖고 나섰던 정우택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이 문제다. 윤 의원의 막무가내 식 추진으로 전투기비행장 인접지역을 사업지구로 하다 보니 소음·고도문제가 제기됐다. 소음지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충북도는 문제 지역을 분할,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윤 의원에게 사전 보고한 뒤 발표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도가 충주시민의 기대를 죽박 내려 한다는느니, 땅 한 평도 내 줄 수 없다느니, 차기 지사에 맡기라느니 등 말발을 쏟아냈다. 상식이하의 반응이자 적반하장이었다.

이 모든 게 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윤 의원의 의도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상황은 심각하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국론분열의 주범인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사 자리를 탐내 도정을 발목잡고 지지 세력을 규합해 압박하는 구태와 계속 손을 잡는다면 공인자격이 없다. 윤 의원이 이에 대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지사 자리는 그의 인감보신 [illegible] 일 뿐이라는 것을 일러주고자 한다.

이시종에 칼대고 박근혜엔 줄대고

윤진식(68·충주) 국회의원이 오는 6월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천명하면서 이시종(67) 지사에게 칼 끝을 겨눴다.

윤 의원은 3일 오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공조가 어려운 야당 도지사는 전국 3% 수준의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충북을 강하게 만들 수 없다"며 "잘 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비가 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듯 정부 눈치만 보는 천수답(天水畓) 농부 도지사에게 충북의 미래를 맡겨선 안 된다"면서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충북을 이끌어야 샘을 파고 관개수로를 놓아 비가 오지 않아도 풍년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에서만 활동한 사람이 도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며 '50년 지기'라는 이 지사를 '우물 안 개구리'로 깎아내리기도 했다.

자신이 MB라인임을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부각시키는데도 중점을 뒀다. 스스로를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충북 내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근혜'와 '대통령'이란 단어를 출마 연설 도중 각각 10여차례씩 언급했다.(후략)



"충주에서만 활동한 사람이 도정 이끌겠냐"
"충북내 대통령과 소통가능한 유일한 인물"

이시종에 칼대고 박근혜엔 줄대고

윤진식 충북지사 출마선언
"보궐선거 정치발전 위한것"

윤진식(68·충주) 국회의원이 오는 6월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천명하면서 이시종(67) 지사에게 칼 끝을 겨눴다.

윤 의원은 3일 오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공조가 어려운 야당 도지사는 전국 3% 수준의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충북을 강하게 만들 수 없다"며 "잘 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비가 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듯 정부 눈치만 보는 천수답(天水畓) 농부 도지사에게 충북의 미래를 맡겨선 안 된다"면서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충북을 이끌어야 샘을 파고 관개수로를 놓아 비가 오지 않아도 풍년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에서만 활동한 사람이 도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며 '50년 지기'라는 이 지사를 '우물 안 개구리'로 깎아내리기도 했다.

자신이 MB라인임을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부각시키는데도 중점을 뒀다. 스스로를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충북 내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근혜'와 '대통령'이란 단어를 출마 연설 도중 각각 10여차례씩 언급했다.

재보궐 선거에 대한 충주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선거를 만드는 것은 문제지만 다른 의위로 돌기기 위한 보궐선거는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란 다소 군색한 해명을 내놨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지역여론이 좋지 않고 대법원 선고도 남아 있는데다가 야권 통합으로 전략공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이 지사의 대항마로 부각시켜 당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엿보인다"고 이날 출마연설을 평가했다.

윤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충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 ▲오송역세권 등 숙원사업 해결 ▲청주·청원 통합 지원 전인 ▲SOC확충 등 균형발전 ▲기업유치에 올인 ▲재정혁신으로 복지예산 확보 ▲능력인이 잘 사는 충북 등 7가지 과제를 내놨다.

1972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발을 들인 윤 의원은 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을 지냈다. 이날 출마 선언 현장에는 윤 의원의 충주지역 지지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용민 기자 lymprus@cctoday.co.kr

윤진식(68·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3일 새누리당 충북도당 당사에서 충북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엔뉴스

"출마 자격 없다" 尹 비판 여론 '부글'

새누리당 윤진식(68) 의원의 출마 선언에 야권과 시민단체 등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피고인인 만큼 충북의 발전과 충북도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 신분으로 충북도민에게 자신을 뽑아달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충주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중략)

시민단체들도 윤 의원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앞장서 추진한 윤 의원은 지사 출마 자격이 없다"며 "혈세 낭비, 국토 파괴, 생태계 훼손,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후략)



"출마 자격 없다" 尹 비판 여론 '부글'

<윤진식>

야권·시민단체 "충북도민 책임질 자격 없어" – 피고인 신분·4대강 인사 지적

새누리당 윤진식(68) 의원의 출마 선언에 야권과 시민단체 등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피고인인 만큼 충북의 발전과 충북도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 신분으로 충북도민에게 자신을 뽑아달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충주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충주에코폴리스와 관련해선 "자신의 독단으로 꼬인 부지 선정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남 탓만 하는 것은 글로벌 비전이나 다양한 인맥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꼈다.

윤 의원이 이날 기자들이 재보선 문제를 지적하자 '보궐선거는 재선거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편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자신을 포장하려고 '경제도지사', '서민도지사', '상생도지사', '행복도지사' 등을 남발하는 사람이 보궐선거 문제 등 자신의 약점에는 침묵을 지키거나 동문서답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윤 의원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앞장서 추진한 윤 의원은 지사 출마 자격이 없다"며 "혈세 낭비, 국토 파괴, 생태계 훼손,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4대강 사업으로 혈세 22조 원이 낭비됐다"며 "이 사업에 주력한 인사가 반성 없이 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인사가 충북지사에 출마하도록 방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새누리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윤 의원이 충주지역 지지자들을 대거 이끌고 출마선언장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버스까지 대절해 온 모양인데 지지자들이 '윤진식'을 연호하며 마치 공천 후보의 출정식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며 "도 당사가 개인 것도 아니고 당내 경선도 치르지 않았는데 다른 예비후보들은 뭐라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지사 선거는 민주당이 장악한 지난 4년간의 도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받고 평가받는 선거"라며 "인신공격과 네거티브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이 과연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기자 lmeus@cctoday.co.kr

아군 없는 윤진식 '사면초가'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인 윤진식(68) 국회의원이 사면초가의 형국에 빠졌다.

이종배(57) 충주시장은 12일 4일간 일정으로 투자유치차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윤 의원이 '의원직 조기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보궐선거 출마를 압박했지만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중략)

당내 경선에서 맞붙는 이기용(69) 전 충북교육감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특정인들끼리 자리를 대물림하는 구태 정치"라며 "새누리당이 누누이 강조해온 상향식 공천 정신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내 분위기도 좋지 않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의 공천 원칙과 어긋나게 특정인을 밀어준다거나 당내 다른 예비후보와도 때 이르게 각을 세우는 등 경선 흥행몰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자칫 당내 분열로 이어져 충주는 물론 충북 전체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세종시 수정안 찬성, 잦은 보궐선거 등을 이유로 연일 날 선 공세를 펼치고 있다. 12일에는 '조건부 의원직 사퇴' 발언에 대해 공직을 거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윤 의원이 과거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인사라고 야당의 공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후략)

아군없는 윤진식 '사면초가'

상왕식 인물 꽂아넣기
안팎서 비난여론 일어
"자리 대물림 구태정치"
"경선 흥행몰이에 찬물"
"공직거래 무책임 행동"

윤 측 "강하다는 반증"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인 윤진식(68) 국회의원이 사면초가의 형국에 빠졌다.

이종배(57) 충주시장은 12일 4일간 일정으로 투자유치차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윤 의원이 '의원직 조기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보궐선거 출마를 압박했지만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 시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시장 후보로 줄곧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당선은 물론 공천 여부마저 불투명한 보궐선거 사이에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길형(52) 전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을 충주시장 후보로 영입했다. 자신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시장에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윤 의원의 바람과는 반대로 시장선거에 나가면 윤 의원의 '삼각편대' 구상이 어그러진다.

윤 의원의 상왕식 인물 꽂아넣기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당내 경선에서 맞붙는 이기용(69) 전 충북교육감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특정인들끼리 자리를 대물림하는 구태 정치"라며 "새누리당이 누누이 강조해온 상향식 공천 정신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내 분위기도 좋지 않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의 공천 원칙과 어긋나게 특정인을 밀어준다거나 당내 다른 예비후보와도 때 이르게 각을 세우는 등 경선 흥행몰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자칫 당내 분열로 이어져 충주는 물론 충북 전체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세종시 수정안 찬성, 잦은 보궐선거 등을 이유로 연일 날 선 공세를 펼치고 있다. 12일에는 '조건부 의원직 사퇴' 발언에 대해 공직을 거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윤 의원이 과거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인사라고 야당의 공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위에 아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윤 의원이 가장 강하다는 반증"이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용민 기자 iympus@cctoday.co.kr
김지훈 기자 starkih@cctoday.co.kr

혁신 정책 바닥났나 공약베끼기 웬말인가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들의 경선 열기가 가열되면서 후보간 공약 베끼기 논란이 일고 있다.(중략)

공약 베끼기 논란의 시작은 지난 3일 새누리당 충북도당에서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윤진식(68) 국회의원이 경제도지사, 서민도지사를 표방하면서 부터다.

경제도지사는 민선4기 충북지사를 지낸 정우택(61·청주상당) 국회의원, 서민도지사는 민선5기 이시종(67) 충북도지사를 연상케 한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선 성공한 역대 충북지사들의 캐치프레이즈에 익숙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위한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윤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발맞춰 '충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가진 가지회견에서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도내 전역을 돌며 민심을 들어 공약으로 반영하는 '상향식 공약 채택'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이 조차도 당내 경선후보인 서규용(66)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원조 논란'을 빚고 있다.(후략)



혁신 정책 바닥났나 공약 베끼기 웬말인가

윤진식 경제·서민도지사
안재헌 경제혁신 3년 계획
이기용 삼성기업 유치 등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
역대 지사 선전 문구 표방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들의 경선 열기가 가열되면서 후보간 공약 베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선 후보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자칫 별반 다르지 않은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식상함이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 열기를 조기에 식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공약 베끼기 논란의 시작은 지난 3일 새누리당 충북도당에서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윤진식(68) 국회의원이 경제도지사, 서민도지사를 표방하면서 부터다.

경제도지사는 민선4기 충북지사를 지낸 정우택(61·청주상당) 국회의원, 서민도지사는 민선5기 이시종(67) 충북도지사를 연상케 한다. 이름 두고 지역정가에선 성공한 역대 충북지사들의 캐치프레이즈에 익숙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위한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윤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발맞춰 '충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가진 가지회견에서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도내 전역을 돌며 민심을 들어 공약으로 반영하는 '상향식 공약 채택'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이 조차도 당내 경선후보인 서규용(66),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원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또 다른 경선후보인 안재헌(66) 전 여성부 차관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따른 충북도의 추진계획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 방안으로 '전문가를 공모해 도 산하기관에 대한 정실 인사를 근절하는 등 인사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새누리당 충북도당사에서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 한 이기용(69) 전 교육감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삼성그룹 공장과 연구시설을 오송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이 같은 공약은 정 의원이 민선4기 충북지사 재임 때 삼성그룹 계열사 유치에 나섰다가 실패한 바 있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공약대결은 좋지만 신뢰성이 떨어지는 환당공약이나 차별성 없는 식상한 공약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young98@cctoday.co.kr

윤진식 '차출인사' 맞나

새누리당 충북지사 경선후보가 윤진식(68) 국회의원과 서규용(66)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명으로 압축되면서 윤 의원이 과연 중앙당 차출후보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중략)

하지만 스스로 차출인사임을 과시하듯 충북도당 당사에서 출정식을 가진 윤 의원의 경우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선 룰을 적용받자 '과연 차출인사가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의 말대로 중앙당이 차출했다면 윤 의원의 본선진출에 유리한 경선구도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중략)

새누리당 중앙당에서도 "윤 의원은 차출인사라기 보다 스스로 출마의사를 표명해 길을 열어 준 '자가발전형'에 가깝다"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후략)



윤진식 '차출인사' 맞나

새누리 중앙당 차원 유리한 경선구도 배려없어
"스스로 출마의사 표명"-윤 "당 권유 맞다" 일축

선택 6·4 지선 D-86
참일꾼을 뽑읍시다

새누리당 충북지사 경선후보가 윤진식(68) 국회의원과 서규용(66)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명으로 압축되면서 윤 의원이 과연 중앙당 차출후보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 중앙당으로부터 제주지사 후보로 차출된 원희룡(50) 전 국회의원과 극명하게 대조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원 전 의원은 중앙당으로부터 6·4제주지사 선거 출마를 권유받은 이른바 '차출 후보'다. 그는 5선인 우근민(72) 제주지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100% 여론조사 방식'의 선거룰을 이끌어 냈다. 당초 새누리당 경선룰은 '2:3:5:2(대의원 20%, 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관선 2번, 민선 3번 등 모두 5번이나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새누리당 제주당 책임당원 8000명 중 75%인 6000명이 우 지사의 사람인 상황에서 경선은 원 전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그러나 중앙당은 우 지사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룰을 깨고 '100%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해 원 전 의원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줬다. 자신들이 차출한 후보를 기어이 본선에 진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차출인사임을 과시하듯 충북도당 당사에서 출정식을 가진 윤 의원의 경우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선 룰을 적용받자 '과연 차출인사가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의 말대로 중앙당이 차출했다면 윤 의원의 본선진출에 유리한 경선구도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최근 KBS청주방송국 여론조사에서 건강악화로 사퇴한 이기용(69) 전 교육감과 다자대결에서 14.8%대 14.7%로 오차범위내 0.1%p라는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차출인사라는 명분을 무색케 했다.

새누리당 중앙당에서도 "윤 의원은 차출인사라기 보다 스스로 출마의사를 표명해 길을 열어 준 '자가발전형'에 가깝다"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윤 의원은 충청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진이라면 3선 이상은 돼야 하는데 재선의원인 나의 경우 중진차출인사라기 보다 차출인사에 가깝다"며 "충문종(59) 사무총장과 김재원(50) 전략기획본부장의 출마 권유로 결심하게 됐다"고 사실상 차출인사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선 "사실상의 전략공천이나 다름없는 중진차출이라면 중앙당에서 배려를 해야 하는데 윤 전 의원에겐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차출논란을 자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윤 의원은 분명 기존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이 지사의 대항마로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중앙당의 권유를 받고 출마한 차출인사가 맞다"고 일축했다.

경철수 기자 csyoung98@cctoday.co.kr

윤진식 "모두 다 이시종 탓" 보궐선거 문제 물타기 하나

윤진식(68·충주) 국회의원이 보궐선거 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시종(67) 충북지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자신의 지사선거 출마로 치러질 수 밖에 없는 보궐선거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해 물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중략)

윤 의원은 "충주에서 4번의 재·보선을 치렀던 것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한창희(61)·우건도(65) 전시장과 이 지사는 다 민주당 소속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지사는 2번이나 보선을 치르게 했는데 한번 치르게 했다고 해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냐"며 하소연했다.

충주에코폴리스 분할 개발과 관련해선 "충북도가 전체 개발 계획없이 반쪽만 개발하겠다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전투기 소음으로 제외되는 사업지역 만큼 추가 부지 확보와 개발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당선 시 이 지사는 물론 에코폴리스 담당 공무원 전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충북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를 설득하려고 도청 직원들이 1년 가까이 매달려 있는 동안 윤 의원은 뭘 했나 궁금하다"며 "애초에 타당성 없는 곳에 입지를 잡아놓고 나몰라라 하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후략)

윤진식 "모두 다 이시종 탓" 보궐선거 문제 물타기 하나

尹 "법 허용, 비난 이해불가"…에코폴리스 문제로 화살 돌려

도 "애초 타당성 없는 터 잡아놓고 나몰라라 하더니…" 황당

윤진식(68·충주) 국회의원이 보궐선거 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시종(67) 충북지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자신의 지사선거 출마로 치러질 수 밖에 없는 보궐선거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해 물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4 지방선거 충북지사 새누리당 경선에 출마한 윤 의원은 27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도지사 출마는 충북과 충주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28일 사퇴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궐선거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궐선거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허용한 제도"라며 "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를 치르는 재선거는 열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주에서 4차례나 재·보선이 열리게 된 원인으로 이 지사를 지목했다.

윤 의원은 "충주에서 4번의 재·보선을 치렀던 것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한창희(61)·우건도(65) 전 시장과 이 지사는 다 민주당 소속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지사는 2번이나 보선을 치르게 했는데 한번 치르게 했다고 해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냐"며 하소연했다.

충주에코폴리스 분할 개발과 관련해선 "충북도가 전체 개발 계획없이 반쪽만 개발하겠다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전투기 소음으로 제외되는 사업지역 만큼 추가 부지 확보와 개발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당선 시 이 지사는 물론 에코폴리스 담당 공무원 전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충북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를 설득하려고 도청 직원들이 1년 가까이 매달려 있는 동안 윤 의원은 뭘 했나 궁금하다"며 "애초에 타당성 없는 곳에 입지를 잡아놓고 나몰라라 하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에코폴리스 사업이 부분 개발을 하게 된 것은 '소음·고도제한 문제'가 있는 부지를 선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 의원의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

충주에코폴리스 진실은…"지사되면 관련 공무원 문책" 핫이슈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인 윤진식(68) 국회의원의 관련 공무원 문책 발언으로 충주에코폴리스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윤 의원의 "충북도가 전체 개발 계획없이 반쪽만 개발하겠다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충북도는 "애초에 부적절한 위치에 사업지구를 선정한 당사자가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하려 한다"며 적반하장 격이라고 맞서고 있다.(중략)

충북도는 2007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해 12월 개발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이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방향과 대응, 지정 범위 등이 담긴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중략)

애초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충주는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충북 방문을 계기로 경제자유구역에 이름을 올렸다. 충주지역 보궐선거에 나선 윤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자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열을 올렸다.(중략)

그러나 이해 5월 19전투비행단의 고도 제한과 소음 문제가 사업추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방부는 소음 민원 대비책이나 인근 공군부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개발 불가 입장을 보였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국방부와 1년에 가까운 줄다리기 끝에 지난 2월 개발 부지의 52%인 2.2㎢를 우선 개발하겠다는 '분할 개발' 계획을 내놨고 지난 26일 어렵사리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얻었다.(중략)

윤 의원은 충북도의 이같은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윤 의원은 "충북도의 사업의지 부족으로 에코폴리스가 반토막 났다"며 "지사가 되면 관련 공무원 모두를 문책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놨다. 여기에 충북도가 반론을 내놓고 이시종(67) 충북지사가 속한 새정치민주연합까지 윤 의원을 비판하면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후략)



"지사되면 관련 공무원 문책" 핫이슈

기획보도 충주에코폴리스 진실은-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인 윤진식(68) 국회의원의 관련 공무원 문책 발언으로 충주에코폴리스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윤 의원의 "충북도가 전체 개발 계획없이 반쪽만 개발하겠다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충북도는 "애초에 부적절한 위치에 사업지구를 선정한 당사자가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하려 한다"며 적반하장 격이라고 맞서고 있다. 충주에코폴리스 개발 사업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코스요리에 어떻게 이름을 올렸는지, 또 부분 개발로 선회하면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진식 "도 사업의지 부족 반토막" 선거 쟁점화

"당시 전투비행장 인근에 지정해놓고 나몰라라"

충북도 반박·새정치연합 비판 등 '뜨거운 감자'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지구를 의미한다. 이곳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세제 및 자금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적용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용,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특례를 받는다.

충북도는 2007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해 12월 개발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이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방향과 대응, 지정 범위 등이 담긴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개발계획안에는 2027년까지 국비, 도비, 민간자본 등 총 5조원을 투입해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엔 태양광산업 등 녹색성장형 지식산업 육성, 물류기반 및 BINT(바이오·정보·나노융합기술) 벨트 구축 등 국가산업 경제기반 전초기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청주, 청원, 증평 등을 직합 지역으로 봤다. 이후 6차례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면서 태양광으로 주목받던 증평이 빠지고 그 자리에 충주가 포함됐다.

애초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충주는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충북 방문을 계기로 경제자유구역에 이름을 올렸다. 충주지역 보궐선거에 나선 윤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자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열을 올렸다.

충북도는 2011년 3월 충주를 추가해 경자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정부의 추가지정 불가 방침으로 난항을 겪었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린 청원군의 에어로폴리스와 농지가 많고 사유지 비율이 높은 충주에코폴리스가 걸림돌이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충북도가 다각적으로 노력한 끝에 2012년 9월 예비지정에 성공했고 2013년 2월에는 경자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상. 정치 도마 위 오른 생태도시
중. 불도저식 입지 선정이 발목
하. 반토막이나 손절매나

그러나 이해 5월 19전투비행단의 고도 제한과 소음 문제가 사업추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방부는 소음 민원 대비책이나 인근 공군부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개발 불가 입장을 보였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국방부와 1년에 가까운 줄다리기 끝에 지난 2월 개발 부지의 52%인 2.2㎢를 우선 개발하겠다는 '분할 개발' 계획을 내놨고 지난 26일 어렵사리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얻었다.

경자청은 다음달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2.2㎢에 대한 구체적 개발방안을 마련한 뒤 상반기 중 2차 민간투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윤 의원은 충북도의 이같은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윤 의원은 "충북도의 사업의지 부족으로 에코폴리스가 반토막 났다"며 "지사가 되면 관련 공무원 모두를 문책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놨다. 여기에 충북도가 반론을 내놓고 이시종(67) 충북지사가 속한 새정치민주연합까지 윤 의원을 비판하면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용민 기자 lymin@cbilbo.co.kr

"본전 생각에 고집하다간 쪽박"

(전략) 윤진식(68) 국회의원의 에코폴리스 구상에는 공군기지 이전이라는 밑그림이 깔려있었다는 시각이 있다.

2008년 충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윤 의원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지렛대 삼아 충주발전을 가로막는 공군부대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대운하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충주 공군부대가 이전돼야 한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고 에코폴리스는 '부지 부적합' 꼬리표를 뗄 수 없었다.(후략)



"본전 생각에 고집하다간 쪽박"

기획보도

충주에코폴리스 진실은…

상. 정치 도마 위 오른 생태도시
중. 불도저식 입지 선정이 발목
하. 반토막이나 손절매나

3년 이내 실시계획 나오지 않으면 지구지정 해제
윤진식 비행장 이전 공약 불발 부지부적합 꼬리표
면적 줄면서 비용·분양부담 덜어…관심기업 증가

경제자유구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검토에 참여했던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더디고 외자유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되는 경자구역이 많은 현실을 보여주는 법 개정이다. 2003년 이후 10년 넘는 시간 동안 8개 구역, 101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중 48개 구역은 개발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면적으로는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이 절반을 넘어섰다. 2010년 1차 조정에서는 전체 166.47㎢의 경자구역 면적의 54.3%인 90.51㎢가 지정 해제됐다. 문화재 등 지장물이 많다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부지문제가 개발의 발목을 잡았다.

2011년 2차 조정의 칼날은 더 매서웠다. 전체 54.9㎢ 중 71.7%에 달하는 39.4㎢가 경자구역에서 제외됐다. 지구 지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자 선정 등 개발진척이 미진하다는 이유였다.

경자구역법상 지정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지난해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사업자 1차 공모에 사업제안서를 낸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부지가격 등 경제성보다 먼저 관심을 두는 사항은 원활한 사업추진 여부"라며 "국방부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서는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에코폴리스를 원안대로 개발하려면 국방부와의 협의가 선결조건이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공군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경자구역법 제3조는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는 것보다 균형개발과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원칙이다.

윤진식(68) 국회의원의 에코폴리스 구상에는 공군기지 이전이라는 밑그림이 깔려있었다는 시각이 있다. 2008년 충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윤 의원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지렛대 삼아 충주발전을 가로막는 공군부대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대운하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충주 공군부대가 이전돼야 한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고 에코폴리스는 '부지 부적합' 꼬리표를 뗄 수 없었다.

사업자 선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자구역 지정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부처인 국방부는 에코폴리스 면적 축소나 분할 개발을 권했다. 산자부는 소음이 75~80웨클 이하인 80만㎡를, 국방부는 80~85웨클 이하인 130만㎡를 우선 개발하자는 안을 내놨다.

충북도는 전체 면적 419만㎡의 절반 이상은 개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설득한 끝에 220만㎡를 우선 개발하는 쪽으로 지난 2월 국방부와 협의를 이끌어냈다.

개발면적이 줄면서 지구 조성 비용이나 분양 부담도 '반쪽'이 돼 에코폴리스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충북도는 사업자 유치가 쉬운 지역을 먼저 개발한 후 사업자가 원한다면 산자부에 지구 변경을 요청해 추가 개발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주식이 반토막 났다고 본전 생각에 끝까지 쥐고 있다가는 쪽박을 찰 수가 있다"며 "모든 계획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서 '손절매'로 반이라도 건진 후 미래를 기약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

이용민 기자 lymeus@cctoday.co.kr

'반쪽 에코폴리스' 부메랑

윤진식(68)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이시종(67) 충북지사를 겨냥해 날린 '에코폴리스 반쪽 개발'이 오히려 윤 의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최근 충북도의 에코폴리스 분할 개발 방침에 대해 '충주시민에 대한 충북도의 약속 파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왔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 공약도 지키지 못하면서 약속 파기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론이 터져 나온다.

윤 예비후보는 2008년 총선을 치르면서 △충주를 대운하의 중심으로 육성 △국회의원 세비 반납 △세계 1위 물류기업 유치 △수안보 세계민속랜드 건설 △공군부대 이전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추진 △충주관광공사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이들 공약 대부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후략)

'반쪽 에코폴리스' 부메랑

윤진식 '충북도 약속파기' 공세 되레 비판론

"총선공약 이행 못하면서 논하는 것 부적절"

세비 반납·공군부대 이전 등 사실상 물거품

"충북지사 공약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의문"

선택 6·4 지선 D-61
참일꾼을 뽑읍시다

윤진식(68)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이시종(67) 충북지사를 겨냥해 날린 '에코폴리스 반쪽 개발'이 오히려 윤 의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최근 충북도의 에코폴리스 분할 개발 방침에 대해 '충주시민에 대한 충북도의 약속 파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왔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 공약도 지키지 못하면서 약속 파기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론이 터져나온다.

윤 예비후보는 2008년 총선을 치르면서 △충주를 대운하의 중심으로 육성 △국회의원 세비 반납 △세계 1위 물류기업 유치 △수안보 세계민속랜드 건설 △공군부대 이전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추진 △충주관광공사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이들 공약 대부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충주를 대운하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대운하건설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세계 최고 물류기업 유치 공약 역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없이 '공약(空約)'으로 머물고 있다. 수안보에 100만평 규모의 민속랜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온데간데 없다. 국회의원 세비는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반납한 적 없이 전액 수령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내륙선 복선화 추진 약속도 타당성 검토만 하느라 시간만 끌다가 당초 계획대로 단선화로 확정돼 사업 지연만 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충주에코폴리스 분할 개발 문제를 이 지사 공략 카드로 사용했지만 이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충주공군부대 이전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론으로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서 충북지사 출사표를 던지며 내놓은 핵심공약인 '충청 신수도권 고속급행철도(GTX)'도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예비후보의 총선 공약 중 대부분이 공수표가 된 상황에서 충북지사 공약을 내놓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싶다"며 "에코폴리스 문제도 논리적·절차적으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 후 비판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lymus@cctoday.co.kr

尹의원은 도지사선거 출마할 때인가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의 도지사 선거 출마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갈수록 심상치 않다. 윤 의원은 제일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 그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니 충주시민과 충북도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물론 헌법 제25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이고 자유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과 보편적인 상식을 충족해야 한다.(후략)



尹의원은 도지사선거 출마할 때인가

박 연 수
전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충북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의 도지사 선거 출마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갈수록 심상치 않다. 윤 의원은 제일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 그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니 충주시민과 충북도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물론 헌법 제25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이고 자유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과 보편적인 상식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고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사법부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사법부를 마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미 약속이나 받은 것처럼 오해를 살 만한 대목이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도지사 출마 운운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윤 의원의 자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둘째, 시민과의 약속 이행이다.

충주시민들은 윤 의원 재판이 진행될 때 무죄를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탄원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충주시민들이 탄원서를 보낸 이유가 충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유죄 판결로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전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것은 충주시민과 윤 의원간의 무언의 약속인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주시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출마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 위반이며 시민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셋째, 160만 도민에 대한 존중이다.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윤 의원이 만약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에 당선된 후 유죄로 확정된다면, 그럴리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도민들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것이다.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해 심각한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고 도민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윤리적 기준과 보편적 상식을 무시하고 윤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면 그것은 법적으로는 윤 의원과 새누리당의 자유지만 그만큼 시민과 도민은 더욱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지금은 윤 의원의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충주시민과 충북도민, 그리고 윤 의원 자신이 모두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때다.

정치는 개인의 영달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지역과 크게는 나라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큰 의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막말' 이래도 됩니까?

(전략) 지난달 3일 충북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는 윤 후보의 기자회견에서부터 거친 말들이 쏟아졌다. "주로 지방행정 분야에서 일해 온 '우물 안 개구리 도지사'에게 도민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은 내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의 경험을 줄곧 거쳐 온 윤 후보의 면면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함께 진흙을 뒤집어쓰자는 얘기인 듯 들린다.

윤 후보는 또 "하늘만 쳐다보며 천수답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의 도정을 운영했다", "인기를 끌기 위해 대형 이벤트성 행사에만 돈 쓰는 도지사"라는 표현으로 이 지사의 공적을 깎아내렸다. 업적에 대한 평가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구체성에 근거하지 못한 경솔한 표현임은 물론 친구인 상대후보에게 건네질 말은 더더욱 아닌 듯하다.

최근의 표현은 더욱 거칠다. 윤 후보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부분 개발은 도청 직원들이 충주시민을 우롱하는 꼼수"라는 말에 이어 "도지사에 당선되면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을 반쪽으로 추진한 공무원 전원을 문책하겠다"는 말로 공직자들의 공분을 샀다.(후략)



'막말' 이래도 됩니까?

이 재 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충북집행위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에서의 관심사는 뭐니뭐니 해도 오랜 친구사이가 치열한 선거라이벌 관계로 변해버린 두 명의 도지사 후보 즉, 이시종·윤진식 후보에게 쏠려있다. 두 후보는 충주가 같은 고향인데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둘 다 행정고시를 거쳐서 행정가, 정치가로 행로를 밟아온 점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주자로 정면대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더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냉엄하고 잔혹한 투쟁이 흔한 정치세계에서 두 후보의 친구관계가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 걸었던 기대라면 두 후보의 정치적 경쟁이 온전한 모양새로 각자의 역량과 정책비전에 의해 판가름됐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험악한 말잔치가 시작됐다.

지난달 3일 충북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는 윤 후보의 기자회견에서부터 거친 말들이 쏟아졌다. "주로 지방행정 분야에서 일해 온 '우물 안 개구리 도지사'에게 도민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은 내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의 경험을 줄곧 거쳐 온 윤 후보의 면면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함께 진흙을 뒤집어쓰자는 얘기인 듯 들린다.

윤 후보는 또 "하늘만 쳐다보며 천수답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의 도정을 운영했다", "인기를 끌기 위해 대형 이벤트성 행사에만 돈 쓰는 도지사"라는 표현으로 이 지사의 공적을 깎아내렸다. 업적에 대한 평가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구체성에 근거하지 못한 경솔한 표현임은 물론 친구인 상대후보에게 건네질 말은 더더욱 아닌 듯하다.

최근의 표현은 더욱 거칠다. 윤 후보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부분 개발은 도청 직원들이 충주시민을 우롱하는 꼼수"라는 말에 이어 "도지사에 당선되면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을 반쪽으로 추진한 공무원 전원을 문책하겠다"는 말로 공직자들의 공분을 샀다.

공무원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부지불식 잘못 선정한 스스로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며 겁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후보자가 당선 가능성을 빌미로 공적업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조직에 겁박수준의 엄포를 놓는 것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공개성명을 통해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공 개발과 도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충북도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태"라고 정의한 뒤 "윤 후보의 발언에 3000여명 공직자를 대표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 일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수뇌협의로 상고심에서 최종 판결을 거쳐야 하는 윤 후보는 아직까지는 '피고인' 신분임을 잊지 말고 좀 더 겸손해지길 바란다. 또 친구인 상대후보를 폄훼함으로써 밥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정책을 도민들에게 알리는데 진력하길 바란다. 부딪쳐야 할 상대이긴 해도 친구이지 않은가? 윤 후보에게 진정한 경쟁,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라 권하고자 한다.

이시종 · 윤진식 후보 정책대결 펼쳐라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인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 4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는 윤진식 국회의원이 확정됐다. 서 전 장관의 사퇴는 예견된 일이었다.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하는 등 지사 선거 출마에 집착했던 그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선거비용 부담 때문에 중도하차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후략)



社說

이시종·윤진식 후보 정책대결 펼쳐라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인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 4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는 윤진식 국회의원이 확정됐다. 서 전 장관의 사퇴는 예견된 일이었다.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하는 등 지사 선거 출마에 집착했던 그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선거비용 부담 때문에 중도하차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서 예비후보의 사퇴로 컨벤션 효과를 노렸던 새누리당으로선 다소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당초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4명이었다. 이 가운데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이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퇴한 데 이어 안재현 전 여성부차관은 컷오프 됐다. 서 전 장관마저 사퇴함으로써 새누리당은 경선이라는 흥행몰이를 하지 못하고 후보를 확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물론 당락을 본 선거에 올인할 수 있게 됐고, 경선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일수도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새누리당의 후보가 예상보다 일찍 확정됨으로써 조기 과열혼탁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충북지사 선거는 윤 예비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현 지사와의 정면 승부로 가려지게 됐다. 2008년 충주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바 있는 이들은 동향(충주)에 고교 동기이자 관료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선거를 계기로 정치적 맞수가 된 이들은 그동안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덕담을 주고받아야 할 기공·준공식 등 공식행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난무한 독설이 이를 말해준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달 3일 지사 선거 출정식에서 이 지사를 50년지기라고 하면서도 '천수답 도지사', '우물 안 개구리 도지사', '이벤트 도지사'로 폄훼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게 해 주고도 남는 대목이다. 사실 윤 의원의 등장으로 이번 선거는 전국적인 흥행거리로 부상했다. 둘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그런데 절친이라면서 6년만의 맞대결이 혈투고 비방으로 흐른다면 유권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둘이 진정 친구라고 한다면 비방이 아닌 정책대결로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페어플레이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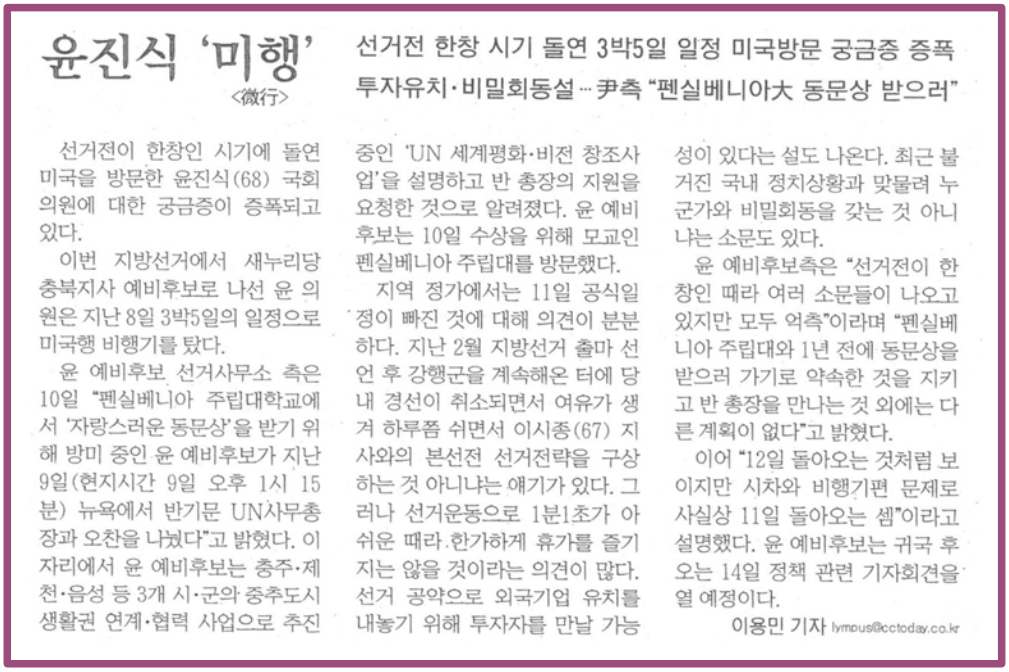
윤진식 '미행' 선거전 한창 시기 돌연 3박5일 일정 미국방문 궁금증 증폭

선거전이 한창인 시기에 돌연 미국을 방문한 윤진식(68) 국회의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윤 의원은 지난 8일 3박5일의 일정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10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기 위해 방미 중인 윤 예비후보가 지난 9일(현지시간 9일 오후 1시 15분) 뉴욕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오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예비후보는 충주·제천·음성 등 3개 시·군의 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UN 세계평화·비전 창조사업'을 설명하고 반 총장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예비후보는 10일 수상을 위해 모교인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방문했다.(후략)



윤진식 '미행'
<微行>

선거전이 한창인 시기에 돌연 미국을 방문한 윤진식(68) 국회의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윤 의원은 지난 8일 3박5일의 일정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10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기 위해 방미 중인 윤 예비후보가 지난 9일(현지시간 9일 오후 1시 15분) 뉴욕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오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예비후보는 충주·제천·음성 등 3개 시·군의 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UN 세계평화·비전 창조사업'을 설명하고 반 총장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예비후보는 10일 수상을 위해 모교인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방문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11일 공식일정이 빠진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월 지방선거 출마 선언 후 강행군을 계속해온 터에 당내 경선이 취소되면서 여유가 생겨 하루쯤 쉬면서 이시종(67) 지사와의 본선전 선거전략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으로 1분1초가 아쉬운 때라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선거 공약으로 외국기업 유치를 내놓기 위해 투자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도 나온다. 최근 불거진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누군가와 비밀회동을 갖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

선거전이 한창인 시기에 돌연 미국을 방문한 윤진식(68) 국회의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윤 의원은 지난 8일 3박5일의 일정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10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기 위해 방미 중인 윤 예비후보가 지난 9일(현지시간 9일 오후 1시 15분) 뉴욕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오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예비후보는 충주·제천·음성 등 3개 시·군의 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UN 세계평화·비전 창조사업'을 설명하고 반 총장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예비후보는 10일 수상을 위해 모교인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방문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11일 공식일정이 빠진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월 지방선거 출마 선언 후 강행군을 계속해온 터에 당내 경선이 취소되면서 여유가 생겨 하루쯤 쉬면서 이시종(67) 지사와의 본선전 선거전략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으로 1분1초가 아쉬운 때라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선거 공약으로 외국기업 유치를 내놓기 위해 투자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도 나온다. 최근 불거진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누군가와 비밀회동을 갖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

선거전이 한창인 시기에 돌연 3박5일 일정 미국방문 궁금증 증폭

투자유치·비밀회동설…尹측 "펜실베니아大 동문상 받으러"

윤 예비후보측은 "선거전이 한창인 때라 여러 소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모두 억측"이라며 "펜실베니아 주립대와 1년 전에 동문상을 받으러 가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고 반 총장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12일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차와 비행기편 문제로 사실상 11일 돌아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윤 예비후보는 귀국 후 오는 14일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

STX 강덕수 구속영장…MB맨들 '긴장'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8일 청구되면서 강 회장과 친분이 있던 정·관계 인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횡령 자금의 일부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회장은 MB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깊어 STX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는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윤진식(68·충주) 국회의원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후략)

STX 강덕수 구속영장…MB맨들 '긴장'

검찰, 횡령자금 정·관계 로비자금 유입 수사 확대
윤진식, STX 조정선수권·도서관 개관식 등 참석
연관 없다 하더라도 선거 앞 '입방아' 자체가 부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8일 청구되면서 강 회장과 친분이 있던 정·관계 인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횡령 자금의 일부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회장은 MB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깊어 STX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는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윤진식(68·충주) 국회의원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합병(M&A)의 귀재로 알려진 강 전 회장은 쌍용중공업, 범양상선(STX팬오션), 대동조선(STX조선해양) 등을 잇달아 인수, STX그룹을 창업했다. STX는 MB정부 시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한때 재계 서열 13위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당시 STX가 MB정부 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STX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아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부실대출의 여파로 지난해 산업은행은 13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1조 4000억원에 이른다. 대출 당시 산은 은행장은 MB정부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낸 강만수(69) 씨다.

강 전 특보는 윤 의원과 함께 MB노믹스를 주도한 핵심 2인방이다. 둘 다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 조세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고 강 전 특보는 14대 관세청장을, 윤 의원은 18대 관세청장을 지냈다.

또 현 기획재정부에 속하는 재정경제원과 재정경제부에서 차례로 차관에 올랐다. 강 전 특보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윤 의원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주미 뉴욕총영사관 재무관으로 일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뉴욕을 방문하고 이틀 뒤인 12일 귀국했다.

윤 의원은 2011년 7월 경기 가평 미사리에서 열린 'STX배 제53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STX와 인연이 있다. 이해 4월에는 STX그룹이 충주에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6호점을 지어 줬는데 개관식에는 당시 대한조정협회 회장이었던 이종철(61) STX그룹 부회장이 윤 의원과 동석했다. 이 부회장의 고려대 선배인 윤 의원이 도서관 설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또 다른 STX인맥은 2009~2013년 STX중공업·에너지 총괄 회장을 맡았던 이희범(65) 현 LG상사 부회장이다. 윤 의원과 행정고시 12회(1972년) 동기인 이 부회장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주미대사관 상무관보를 지냈는데 윤 의원의 미국생활 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 부회장은 2003년 서울산업대 총장에서 물러나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옮겨갔고 윤 의원은 2003년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물러나 2004년부터 서울산업대 총장으로 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퇴임을 2주 앞두고 이 부회장에게 국민훈장 서열 1위인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달초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민 기자 lymous@cctoday.co.kr

떠오르는 충북지사 선거 이슈 '세종시'
尹 "치명적 발상"

2010년 1월 11일 충청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정운찬(68) 당시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으로 포장됐지만 사실상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백지화방안이었다.(중략)

대표적인 인물이 정 전 총리와 윤진식(68·새누리) 국회의원이다. 충남 공주 출신의 정 전 총리는 충남권에서 여론전을 펼쳤고 충북 충주 출신의 윤 의원은 충북 민심을 돌리기 위해 분주했다.

윤 의원은 2010년 1월 29일 청주에서 열린 지식인자유포럼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 당초 계획은 수도 분할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비효율·비효과적 계획으로 국가 발전에 낭비적이고, 치명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후략)



긴급점검 떠오르는 충북지사 선거 이슈 '세종시'

<2>수정안-기득권 사수에 나선 MB맨들

尹 "치명적 발상"

<윤진식>

2010년 1월 11일 충청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정운찬(68) 당시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으로 포장됐지만 사실상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백지화방안이었다.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이전하기로 했던 원안 대신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 등이 포함된 인구 50만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원안과 비교할 때 중앙행정기능을 없애고 주거용지 규모도 대폭 줄었다. 무엇보다 '수도기능 분산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원안의 취지가 실종됐다.

사회 각계에서는 "국민을 위한 균형발전 대신 수도권 기득권 유지를 택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 부처를 옮기는 대신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당근을 내밀었지만 충청권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일로 정 전 총리는 충청인들로부터 '배향노'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충청지역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시 예정부지 인근 지역을 찾았다가 지역 주민들에게 '계란세례'를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에 알레르기에 가까울 정도의 거부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장 재임 당시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충청권의 반발이 예상되자 충청 출신 인사를 발탁해 지역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 전 총리와 윤진식(68·새누리) 국회의원이다. 충남 공주 출신의 정 전 총리는 충남권에서 여론전을 펼쳤고 충북 충주 출신의 윤 의원은 충북 민심을 돌리기 위해 분주했다.

윤 의원은 2010년 1월 29일 청주에서 열린 지식인자유포럼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 당초 계획은 수도 분할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나타

2010년 3월 17일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열린 세종시 수정법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대회 모습.

MB 당선되자 '재검토' 천명

정운찬·윤진식 충청인사 발탁

지역반발 예상 여론설득 작업

"비효율적 계획 국가발전 낭비"

충청권 "균형발전 묵살 심판"

로 국가 발전에 낭비적이고, 치명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31일 행정도시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에 따라 차출된 인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고향에 와서 궤변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해 행정도시 원안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는 게 고향을 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충청권에서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분권,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 요구를 묵살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실제로 여권은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등 핵심 지자체장 선거에서 전패했다.

선거 결과로 민심을 확인한 국회는 같은 해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한다. 윤 의원은 수정안 부결을 한달 앞두고, 정 전 총리는 수정안이 부결되고 한달 후에 각각 대통령정책실장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진식 '나홀로 경선' 뒤엔 '빅딜' 있었다?

(중략) 안재헌(66) 전 여성부 차관은 중앙당의 컷오프제에 걸려 탈락하고 서규용(66)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윤 의원의 손을 들어주고 자진사퇴했다. 이중 안 전 차관과 서 전 장관의 향후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서 전 장관은 표면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했지만 윤 의원의 수차례에 걸친 회유에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선 서 전 장관과 안 전 차관이 단순히 윤 의원의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만족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과 이들 간 모종의 빅딜설이 나오는 이유다. (후략)



윤진식 '나홀로 경선' 뒤엔 '빅딜' 있었다?

수도권 기득권 유지 찬동 "지역대표 자격없다" 여론

"윤진식(68)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여러 가지 실정(失政) 중에서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세종시 무력화 시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대표적 인사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충청도민은 분권의 상징이기도 했던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지난달 3일 윤 의원의 충북지사 출마 선언 후 터져 나온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다. 4년전 '세종시 수정안'의 여진은 여전히 지역을 울리고 있다.

충북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10일 성명을 발표해 윤 의원의 지사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는커녕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윤 의원은 어떠한 사과도 책임도 없었다"며 "지역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수차례 충북을 찾아 "원안보다 수정안이 낫다"고 주장했다.(후략)



긴급점검 떠오르는 충북지사 선거 이슈 '세종시'

<3>여진-'반성 없는 전진' 자격론 비등

수도권 기득권 유지 찬동 "지역대표 자격없다" 여론

"윤진식(68)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여러 가지 살펴(?)본 증에서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세종시 무력화 시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대표적 인사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충청도민은 분권의 상징이기도 했던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지난달 3일 윤 의원의 충북지사 출마 선언 후 터져나온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다. 4년전 '세종시 수정안'의 여진은 여전히 지역을 울리고 있다.

충북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10일 성명을 발표해 윤 의원의 지사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는커녕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윤 의원은 어떠한 사과도 책임도 없었다"며 "지역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수차례 충북을 찾아 "원안보다 수정안이 낫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면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것이 충주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더 이상 고향을 팔아 입신양명하려 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세종시는 예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 도시 성장을 방지하도록 주상됐다. 행정중심 명품도시로 개발하되 인구 80만명 규모가 되면 인구 증가 억제 등 성장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KTX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 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통합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충북이 산업, 관광, 유통, 농업 등 세종시의 배후도시 기능을 하며 성장한다는 시나리오다.

균형발전지방분권연대연대 이무영(49) 집행위원장은 17일 "윤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없는 것 같다"며 "예초에 장관 자리에 오른 것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이뤄진 부분이 큰데 고향 발전을 외면하고 수도권 기득권 유지에 찬동한 것에

윤진식, MB정부 최측근
세종시 무력화 대표 인물
어떠한 사과·책임도 없어
"지역 균형발전 저해 주범"

대해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윤 의원이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충주가 세종시와 무슨 상관이냐'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005년 11월 노무현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충북도가 요구한 엑스(X)축 개발안 등 사업의 상당부분을 반영했다. 이 때부터 충북은 국토개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주요 정부부처가 자리하는 세종시가 X축 개발의 핵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부선 라인만 기형적으로 발전했다. 충청의 지명 가장 앞에 위치할 정도로 큰 도시였던 충주가 쇠락해 가는 이유다. 세종시를 기점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충북 북부지역도 균형발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끝>

이용인 기자

국민 슬픔 이용 '선거운동 문자' 빈축

강상무·홍순규 도교육감 후보, 윤진식 도지사 후보 여론 뭇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17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애도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무리한 선거운동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강상무(62)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저는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모든 선거운동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교육감 예비후보 강상무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 도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홍순규(62) 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를 당한 학생이 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 사랑해"를 활용, "오늘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윤진식(68)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진도 여객선 침몰 탑승객 '제발 살아돌아오기를 빕니다' 윤진식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밖에 일부 선거 주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이용,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자료 등을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시민 김모(31)씨는 "탑승객들이 돌아오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같은 문자는 보내지 않았어야 했다"며 "참사를 이용해 자신들을 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윤모(50) 씨는 "후보들은 가족들이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릴지 생각이나 했을지 궁금하다"며 "이를 기회다 싶어 애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다니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권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지역구 선거 주자들에게 명함 배포나 문자 전송 등 모든 선거운동 중단은 물론 애도 문자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박하샘 기자 phs@cctoday.co.kr

국민 슬픔 이용 '선거운동 문자' 빈축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17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애도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무리한 선거운동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중략)

윤진식(68)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진도 여객선 침몰 탑승객 '제발 살아돌아오기를 빕니다' 윤진식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중략)

윤모(50) 씨는 "후보들은 가족들이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릴지 생각이나 했을지 궁금하다"며 "이를 기회다 싶어 애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다니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후략)

의 결 번 호	2014지선215
시 정 요 구 인	장 일 (580815-1******)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7길 30(방학동, 성원아파트) 105동 302호
피시정요구인	(주)뉴시스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구 극동빌딩) 12층 대표이사 이 종 승
심의대상기사	뉴시스 2014년 5월 23일자 「[선택 6·4-서울도봉구] 이석기-이동진-조용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뉴시스에 〈별지〉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시정요구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도봉구청장)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로, 피시정요구인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서울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봉구청장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의 사진과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만 제외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시정요구인의 전화번호로 5월 19일에서 5월 20일 양일간 세 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도봉구청장 후보 기사 마감일이 5월 21일 오후여서, 특정 후보만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청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추진하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차별이나 유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고, 5월 26일 시정요구인에게 경쟁 후보 인터뷰와 같은 형식의 보도기회를 제공하는 안을 전달했으나 시정요구인측에서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전화번호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사 마감 전까지 전화번호의 착오를 인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경쟁후보자들이 모두 참여한 공통인터뷰 기사에서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시정요구인을 배제한 것은 피시정요구인이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주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선택 6·4-서울도봉구]
이석기-이동진-조용현

김지훈 기자 정성원 인턴기자 = 서울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봉구청장 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이석기 후보(65·기호 1번)와 새정치민주연합 이동진(53·기호 2번) 후보, 통합진보당 조용현(37·기호 3번) 후보 인터뷰.

[선택6·4-서울 도봉구]이석기-이동진-조용현

기사입력 2014.05.23 오전 8:56
최종수정 2014.05.23 오전 8:58

1> 가- 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정성원 인턴기자 = 서울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봉구청장 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이석기 후보(65·기호 1번)와 새정치민주연합 이동진(53·기호 2번) 후보, 통합진보당 조용현(37·기호 3번) 후보 인터뷰.

TOP

의 결 번 호	2014지선219
시 정 요 구 인	윤 장 현 (490426-1******)
피시정요구인	(주)한국일보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18 한진빌딩 신관5층 대표이사 장 재 구
심의대상기사	한국일보 2014년 5월 26일자 14면「새정치 윤장현 후보, 자신 병원 건물 지하창고 '술방'으로 무단 용도 변경」 2014년 5월 27일자 14면「광주동구청 윤장현 눈치보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한국일보에 〈별지〉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시정요구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소속 후보로, 피시정요구인이 위 기사에서 본인의 병원건물 지하에 있는 손님 접대용 공간에 대해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사유가 되지 않는 공간이며, 법 개정 이후에도 신고의무가 없는 사적 공간(건축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임에도 마치 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만나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지하 술방'이라고 표현하고 광주 동구청이 본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해당 사항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여 독자들이 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5월 23일 광주시 동구청 건축과장을 만나 창고의 무단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건축과장은 "창고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그런(지하벙커) 용도로 쓰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정요구인이 무단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건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도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역시 건축물의 유형적 변경의 경우에 한하고 있음을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 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년 12월 24일 선고 2002도5396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며, 구조변경이나 대수선 등을 거치지 않은 문제의 창고는 '사랑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무형적 용도변경'에 해당돼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의 위 심의대상기사는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역단체장에 선출될 수도 있는 시정요구인의 도덕성과 준법성 등에 관한 것인 바, 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정요구인의 주장과 광주시 동구청 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인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사에 "술 방", "상류층 밀실문화를 흉내 내면서" 등의 표현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정치 윤장현 후보, 자신 병원 건물 지하창고 '술방'으로 무단 용도 변경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자신 소유의 병원 건물 지하 1층 창고를 정치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 등과의 술자리 등 사교모임을 위한 '프라이빗 룸'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14년 동안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중략)

윤 후보는 용도변경 당시부터 이 창고를 사실상 '지하 술방'으로 꾸미면서 관할 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도 하지 않았다. 당시 건축법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건축물대장상에는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2005년 11월 건축법이 바뀌면서 해당 창고는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됐지만 윤 후보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고 있다.(후략)

새정치 윤장현 후보, 자신 병원 건물 지하창고 '술방'으로 무단 용도변경

스탠드 바와 노래방 기기 등 설치 '지하벙커'로 불러

"비밀 공간 아닌 열린 공간" 해명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자신 소유의 병원 건물 지하 1층 창고를 정치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 등과의 술자리 등 사교모임을 위한 '프라이빗 룸'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14년 동안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2000년 2월 동구 호남동에 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지상 4층짜리 1안과 건물 지하 1층 다방(292.15㎡)의 일부(28.15㎡·약 8.5평)를 별도의 창고로 용도를 변경했다. 현재 지하 다방은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당시 창고로 용도변경한 면적 중 서너 평 남짓한 공간에 나무 벽재(壁材)를 설치한 뒤 내부에는 천장용 와인잔 걸이가 걸린 스탠드 바와 소파, 테이블, 벽걸이TV, 냉장고, 피아노,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했다. 윤 후보는 이곳을 '지하 벙커'로 부르며 중앙 정치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 등과의 사적인 모임장소로 최근까지도 이용했다. 이 벙커는 나무 벽재를 사이에 두고 지하식당과 맞붙어 있지만 식당 비상구 바깥 쪽에 위치해 있는 데다 평소엔 출입구가 잠겨 있어 그 실체를 알 수 없게 돼 있다.

윤 후보는 용도변경 당시부터 이 창고를 사실상 '지하 술방'으로 꾸미면서 관할 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도 하지 않았다. 당시 건축법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건축물대장 상에는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2005년 11월 건축법이 바뀌면서 해당 창고는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됐지만 윤 후보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 광주지역 시민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윤 후보는 이 벙커에서 주로 정·재계 인사나 지인 등과 술자리를 즐기며 인맥을 형성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해 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윤 후보가 상류층 밀실 문화를 흉내내면서 낮은 자세의 '시민시장'을 표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남들과의 '구별짓기'를 하던 사람이 과연 서민의 입장을 현실성 있게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당시 병원장실이 매우 비좁아 나를 찾아오는 국내외 정치인이나 NGO(비정부기구) 활동가 등과 다담(茶談)을 나눌 공간이 없는데다, 이런 분들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도 편치 않아 지하1층 일부를 사적인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며 "벙커는 비밀스런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젊은 NGO활동가들이 술값 들고 오갈 데 없으면 이곳에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광주동구청 윤장현 눈치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자신 소유의 병원 건물 지하창고를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과의 사교모임을 위한 '프라이빗 룸'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데(본보 26일자 14면) 대해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가 윤 후보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정보완명령을 문서를 통하지 않고 구두로만 고지한 데다, 무단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해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후략)

광주 동구청 윤장현 눈치보기?

말로만 "지하창고 치워라" 시정명령… 오락가락 입장 도마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자신 소유의 병원 건물 지하창고를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과의 사교 모임을 위한 '프라이빗 룸'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데(**본보 26일자 14면**) 대해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가 윤 후보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정보완명령을 문서를 통하지 않고 구두로만 고지한 데다, 무단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해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구는 26일 윤 후보 소유의 호남동 1안과 병원 건물(지상 4층 지하 1층) 지하 창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무단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 윤 후보 측에 시정명령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윤 후보가) 지하창고를 거시기(프라이빗 룸)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 측에 창고 내부를 치우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구는 윤 후보 측에 시정명령을 명령서 등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고지해 행정처분 효력 논란과 함께 윤 후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광주시장 유력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동구는 앞서 지난 23일 문제의 지하창고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갔다가 창고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내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더구나 동구는 "창고에서 밥도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서재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며 무단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추후 법률 검토 의견까지 밝혔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그쪽(윤 후보 측)에서도 변호사들이 말(법령 검토 등 이의제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 측 변호인은 "지하창고 용도변경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 관련 공무원의 거짓말 논란까지 낳고 있다. 특히 현행 건축법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산업 등의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창고시설'을 프라이빗 룸과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일부에선 동구가 법률 검토를 운운한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시정명령 공문 발송 등과 관련한) 우리 업무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5. 권 고

의 결 번 호	2014지선142
시 정 요 구 인	박 완 수 (550810-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47 명빌딩 601호
피시정요구인	(주)경남도민신문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43, 4층 (상대동) 대표이사 황인태
심의대상기사	경남도민신문 2014년 3월 5일자 1면「서부경남발전장애물 박완수와 투쟁하겠다」 2014년 3월 10일자 3면「박완수 '아성'서도 흔들 "전략대결서 홍준표 승" 분석」 2014년 3월 10일자 14면「홍준표의 말은 쉽고 박완수의 말은 어렵다」 2014년 3월 11일자 1면「박완수 후보는 뭐가 그리 초조하나」 2014년 3월 11일자 2면「구·창원지역 경남도지사 판세 요동치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에게 주의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위 심의대상기사들에서 ① 특정 협의회 회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였고, ②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과장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③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된 기사표현을 사용하는 등으로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에 따른 '주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들은 언론 본연의 역할과 정당한 언론활동에 기반한 것으로 여론조사관련보도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일 뿐이고, 시정요구인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보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결과를 근거로 한 분석 기사 등에서 감정이 개입된 제목 등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판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부경남 발전 장애물 박완수와 투쟁하겠다

"박완수 예비후보는 서부경남발전에 장애물일 뿐이다. 서부경남 발전을 저해하는 박완수 예비후보와 투쟁하겠다"

김진수 서부경남발전협의회 회장은 4일 박완수

후보가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데 대해 이렇게 말하고 “서부경남발전협의회 회장이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발언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황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박완수 경남도지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김진수 회장이 지난달 남강둔치에서 열린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행한 ‘서부청사 조기개청 촉구 발언’이 홍준표 도지사를 이롭게 해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중략)

김 회장은 “서부경남발전협 1만여 회원들은 지금 서부경남 염원인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을 가로막는 박완수 후보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부경남발전협 회원들이 박 후보가 서부경남을 방문하면 인분세례, 달걀세례 등을 통해 박 후보가 서부경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흥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본인도 흥분한 서부경남발전협 소속 회원들의 행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박 후보가 진주 등 서부경남을 방문할 때 어떠한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 서부경남발전협의회 회장은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10개 시, 군에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조기에 개청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현재 5만여명이 서명을 완료했으며 발전협의회 측은 오는 15일까지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후략)

“서부경남 발전 장애물 박완수와 투쟁하겠다”

서부경남발전협, 박완수 예비후보측 선관위 고발에 강력 대응키로



김진수 서부경남발전협의회 회장



서부경남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진주시내 일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조기개청해 달라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이용규기자

“박완수 예비후보는 서부경남발전에 장애물일 뿐이다. 서부경남 발전을 저해하는 박완수 예비후보와 투쟁하겠다”

김진수 서부경남발전협의회 회장은 4일 박완수 후보가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이렇게 말하고 “서부경남발전협의회 회장이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발언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박완수 경남도지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김진수 회장이 지난달 남강둔치에서 열린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행한 ‘서부청사 조기개청 촉구 발언’이 홍준표 도지사를 이롭게 해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진수 회장은 이에 대해 “본인은 서부경남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서부경남 100만 도민들의 염원인 서부청사 조기개청을 촉구하는 것이 왜 선거법 위반이 되는 지 그 연유를 알 수 없다”며 “서부청사 조기개청 주장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박 후보는 서부경남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종 방식을 통해 박 후보가 서부경남 발전에 장애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서부경남발전협의회 소속 1만여 회원들과 함께 새누리당 중앙당에 박 후보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서부발전협의회 회원들 박 후보에 인분 퍼 부을 것
새누리당 중앙당에 박 후보 사퇴 촉구 등 정면대응

김 회장은 “서부경남발전협 1만여 회원들은 지금 서부경남 염원인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을 가로막는 박완수 후보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부경남발전협 회원들이 박 후보가 서부경남을 방문하면 인분세례, 달걀세례 등을 통해 박 후보가 서부경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흥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본인도 흥분한 서부경남발전협 소속 회원들의 행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박 후보가 진주 등 서부경남을 방문할 때 어떠한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 서부경남발전협의회 회장은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10개 시, 군에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조기에 개청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현재 5만여명이 서명을 완료했으며 발전협의회 측은 오는 15일까지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와에도 각종 행사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조기 개청하는 것이 서부경남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역설해 가고 있다. 이 같은 김 회장의 활동에 대해 박완수 후보측은 “김 회장의 활동이 사실상 상대인 홍준표 도지사를 돕는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선관위 고발 등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회장측이 이 같은 박 후보의 옹졸함에 대해 박완수후보를 서부경남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규정하고 낙선운동 등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뜻을 비쳐 앞으로 박완수-김진수 대결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송학기자

People 진주으뜸유치원 하영숙 원장 5면

박완수 '아성'서도 흔들 "전략 대결서 홍준표 勝"분석

이번 여론조사의 5대 특징

① 홍준표 –박완수 지지율 격차 더 확대돼
② 구(舊)창원시 지지율 홍준표가 역전시켜
③ 진주시, 서부경남의 홍 지사 지지율 견고
④ 안상수 박완수지지,박후보에 오히려 악재
⑤ 박완수 네거티브 전략 지지율 상승 못시켜

이번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사는 야당까지 포함한 조사보다는 새누리당 내에서 후보경합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간의 경쟁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홍지사와 박후보의 경쟁에서 지난 1차 조사인 지난 1월 25일에서 2차 조사인 3월7일, 약 한달 반 사이에 홍 지사가 더 나은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박 후보의 지지율 상승보다 너 높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양자간의 지지율 격차는 더 확대됐다. 또 박완수 전 시장의 아성이었던 구 창원시도 박시장이 홍 지사에게 내주고 말았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박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한 것이 나머지 창원시장 후보들의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박 시장에게 독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후보는 도지사 출마선언 이후 자신의 열세지역인 진주와 서부경남 공략을 위해 진주에 살다시피 하면서 화력을 집중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홍준표의 말은 쉽고 박완수의 말은 어렵다

그동안 박완수 전 창원시장은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상대인 홍준표 도지사를 공격하는 데 집중해 왔다. 홍 지사를 "독선과 불통"으로 규정하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 하겠다"며 기회 있을 때 마다 홍 지사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남도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이같은 박완수 후보(정확히는 예비후보)의 전략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도지사와 박 전 시장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번 1차 조사에 비해 오히려 확대 되었기 때문이다.(중략)

홍준표는 역시 노련했다. 홍준표는 박완수의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대신 지방순방을 통해 그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지사는 "역시 도지사는 홍준표야…박완수는 도지사로는 감이 안 되지…"라는 말이 각 지역 여론주도층에서 나오게 만들었다.(중략)

이에비해 홍준표의 말은 익숙하다. 귀에 잘 들어온다. 원래 진주는 도청이 소재한 곳이었다. 여기에 서부청사라도 개청해 진주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주겠다는 것은 한귀에 들어오는 말이다. 또 "새 건물을 지어 서부청사로 하려면 자신의 임기 중에 못한다. 그러니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 서부청사로 쓰면 자신의 임기 중에 할 수 있다. 나는 내 임기중에 서부청사를 개청하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말은 듣는 사람 누구나 고개를 끄떡이게 한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박완수의 말은 치사하게 들리고 이미 상대방 깍아내리는 말로 들린다.(후략)



경남도민신문

2014년 08월 10일
14면 (오피니언)

이선효의 여론조사 읽기

홍준표의 말은 쉽고 박완수의 말은 어렵다

선임기자

그동안 박완수 전 창원시장은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상대인 홍준표 도지사를 공격하는 데 집중해 왔다. 홍 지사를 "독선과 불통"으로 규정하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 하겠다"며 기회 있을 때 마다 홍 지사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남도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이같은 박완수 후보(정확히는 예비후보)의 전략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도지사와 박 전 시장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번 1차 조사에 비해 오히려 확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필자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박완수는 경남도지사가 되면 무엇 하겠다는 거냐, 홍 지사 욕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신이 무엇 하겠다는 건지는 전혀 모르겠다"는 말들을 자주 해 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필자 주변의 이런 말들이 경남도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홍준표는 역시 노련했다. 홍준표는 박완수의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대신 지방순방을 통해 그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지사는 "역시 도지사는 홍준표야…박완수는 도지사로는 감이 안 되지…"라는 말이 각 지역 여론주도층에서 나오게 만들었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사는 진주지역은 이번 도지사 선거의 핵심전략지역이다. 역대 도지사 선거에서 항상 서부경남을 잡는 사람이 이겼다.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모두 그랬다. 홍준표 역시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서부경남 민심을 잡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정치구도가 그렇기 때문에 박완수도 출마 선언 후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공략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 박완수는 서부경남에 살다시피 하며 서부개척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그런데 박완수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서부경남 주민들은 박완수가 무엇하겠다는 건지 잘 모른다. 진주의료원을 재개원 하겠다고 했다가 이것이 강경노조의 편을 든다는 지적이 있자 행복의료원으로 재개원 하겠다고 바꿨다. 박완수는 또 수백만원의 외국인 전용공단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런 박완수의 말은 어렵다.

이에 비해 홍준표의 말은 익숙하다. 귀에 잘 들어온다. 원래 진주는 도청이 소재한 곳이었다. 여기에 서부청사라도 개청해 진주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주겠다는 것은 한귀에 들어오는 말이다. 또 "새 건물을 지어 서부청사로 하려면 자신의 임기 중에 못한다. 그러니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 서부청사로 쓰면 자신의 임기 중에 할 수 있다. 나는 내 임기중에 서부청사를 개청하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말은 듣는 사람 누구나 고개를 끄떡이게 한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박완수의 말은 치사하게 들리고 이미 상대방 깍아내리는 말로 들린다.

정치는 원래 이런 것 아닌가. 국민이 쉽게 알아듣는 말로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박완수 입장에서는 지난 한 달 반이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자신의 사퇴와 출마선언이 이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퇴와 출마선언은 보통은 소위 이벤트 효과를 나타내는 지지율 상승에 제일 중요한 정치행사이다. 그런데 박완수 후보는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상대인 홍준표 욕하는 데 사용해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놓쳤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박완수 후보는 상대가 못한다는 말 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완수를 시키면 통합 후 창원시의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고 소외된 서부경남 발전도 더 적임자일 것 같다"라는 점을 경남도민들이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24.2×12.9)cm

박완수 후보는 뭐가 그리 초조하나

필자가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지만 언론사 여론조사를 두고 대변인 성명서를 내는 것은 처음 보았다. 필자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박완수 후보는 10일 본지의 경남도지사 2차 여론조사를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이해는 한다.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완수는 홍준표에게 더블스코어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아성이었던 구 창원시에서도 홍준표에게 밀렸고 진주와 서부경남에서는 여전히 홍지사의 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입장에서 이런 보도를 접하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중략)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괜찮고 불리한 것은 민심의 왜곡이라고 주장한다면 박완수 후보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다른 언론의 여론조사가 왜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들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통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지도 본지 나름대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중략)

박 후보가 빨리 고발을 해서 본보 여론조사가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다만 필자가 박완수 예비후보에게 아쉬운 것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보아 달라는 말이다. 여론조사 하나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역으로 "여론조사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박 예비후보는 출마선언 이후 주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따르면 늘 뒤지는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해 왔다는 사실이다. 필자 역시 박완수의 네거티브를 보고 "아! 홍준표 도지사에게 뒤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다.

본지는 2차 조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3차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3차 조사에서는 박완수 후보가 잘 나올 수도 있다. 아직은 선거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박 후보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지지율은 올라가게 된다. 박완수 후보는 뭐가 그리 초조하나.



박완수 후보측 본보 여론조사 비난 논평

박완수 후보는 뭐가 그리 초조하나

필자가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지만 언론사 여론조사를 두고 대변인 성명서를 내는 것은 처음 보았다. 필자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박완수 후보는 10일 본지의 경남도지사 2차 여론조사를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이해는 한다.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완수는 홍준표에게 더블스코어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아성이었던 구 창원시에서도 홍준표에게 밀렸고 진주와 서부경남에서는 여전히 홍지사의 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입장에서 이런 보도를 접하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후보가 되면 누구나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한다. 꼴찌를 하는 후보도 자신이 이긴다고 생각한다. 선거의 본질이 그렇다 보니 박완수 후보도 자신이 지금 홍 지사를 이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박 후보 측은 장황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남도민신문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과학이다. 한계가 있다 보니 현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잘 못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종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가 박 후보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괜찮고 불리한 것은 민심의 왜곡이라고 주장한다면 박완수 후보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다른 언론의 여론조사가 왜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들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통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지도 본지 나름대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박 후보 측이 주장한대로 언론사의 여론조사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선거가 끝난 후 6개월까지 여론조사의 로그파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들어다 볼 수 있게 돼 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언론사가 자기 죽을 짓을 하지 않는 한 여론조사를 잘못하지는 않는다. 본지는 여론조사 하나로 자신을 죽일 만큼 어리석지 않다.

본지의 2차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검증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실시했다. 그리고 그 자료도 다 공개해 있다.

박 후보가 빨리 고발을 해서 본보 여론조사가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경험상
늘 뒤지는 후보가
시비를 거는 경향이 있다

다만 필자가 박완수 예비후보에게 아쉬운 것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보아 달라는 말이다. 여론조사 하나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역으로 "여론조사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박 예비후보는 출마선언 이후 주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따르면 늘 뒤지는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해 왔다는 사실이다. 필자 역시 박완수의 네거티브를 보고 "아! 홍준표 도지사에게 뒤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다.

본지는 2차 조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3차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3차 조사에서는 박완수 후보가 잘 나올 수도 있다. 아직은 선거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박 후보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지지율은 올라가게 된다. 박완수 후보는 뭐가 그리 초조하나.

이선효 선임기자

구(舊) 창원지역 경남도지사 판세 요동치나

본보의 경남도지사 2차 여론조사 결과 구 창원지역의 지지율에서 홍준표 현 도지사가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이 그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구 창원지역은 박완수 전 시장이 오랫동안 지지기반을 다져온 박완수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홍준표 도지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구 창원시가 홍 지사에

게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와 박완수 예비후보의 창원시장직 사퇴를 들었다.(중략)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박완수 전 시장이 보기 좋게 안상수 전 대표에게 한방 먹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안상수 전 대표의 박완수 지지선언은 안 전 대표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박 전 시장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안 전 대표는 창원에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에 박 전 시장 지지선언으로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을 끌어 모아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안 전 대표의 지지선언으로 6명에 달하는 창원시장 출마예상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박 전 시장이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 노회한 안상수 전 대표에게 보기 좋게 한방 먹은 셈이다. 역시 정치수완은 박완수가 한 수 아래인 것 같다"고 말했다.(후략)

구(舊) 창원지역 경남도지사 판세 요동치나

홍준표 구 창원시 지지율 박완수에 앞서자 다양한 해석 나와

본보의 경남도지사 2차 여론조사 결과 구 창원지역의 지지율에서 홍준표 현 도지사가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이 그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구 창원지역은 박완수 전 시장이 오랫동안 지지기반을 다져온 박완수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홍준표 도지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구 창원시가 홍 지사에게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와 박완수 예비후보의 창원시장직 사퇴를 들었다.

박완수 예비후보는 당초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전략으로 홍 지사와 현직관계인 안상수 전 대표를 영입해 3자 관계를 유지하다가 안 전 대표가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하는 모습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안 전 대표가 당초 일정보다 앞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고 창원시장 출마로 가닥을 잡고 말았다.

그런데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박완수 지지 및 창원시장 출마선언이 박 후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 안 전 대표가 박완수 지지선언을 하자 그동안 박 후보의 좋은 관계를 가져오고 있는 창원시장 출마자들이 대부분 박 후보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 실제로 배한성 등 대부분의 창원시장 출마 후보들이 박완수 전 시장을 대놓고 비난은 하지 않지만 안상수 전 대표의 창원시장 출마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밖에 아니라 오랜 박완수 후보의 사람이던 J후보 등도 박 후보와 안 전 대표가 가까워 지자 내막적으로는 홍 지사 편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박완수 전 시장이 보기 좋게 안상수 전 대표에게 한방 먹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안상수 전 대표의 박완수 지지선언은 안 전 대표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박 전 시장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안 전 대표는 창원에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에 박 전 시장 지지선언으로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을 끌어 모아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안 전 대표의 지지선언으로 6명에 달하는 창원시장 출마예상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박 전 시장이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 노회한 안상수 전 대표에게 보기 좋게 한방 먹은 셈이다. 역시 정치수완은 박완수가 한 수 아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구 창원시에서 박 전 시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지역정치권에서는 박 전 시장의 창원시장직 사퇴를 들고 있다. 박완수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시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던 공무원들과 관변단체들이 자유로워진 것이 홍 지사 지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 홍 지사 측에서는 실제 구 창원시 관변단체들과 유지들의 표정이 훨씬 자유로워 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지사의 한 지지자는 "과거 박완수 시장이 창원시장직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이나 관변단체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롭게 만나고 있다. 또 박 시장이 창원시장직에 10년이나 있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 보다는 서운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홍 지사가 창원시를 파고 들기에 유리한 입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정치권에서도 박완수 시장의 10년 창원시장 적폐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박완수 시장이 창원시장직을 10년이나 했다.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또 박 시장에게 혜택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혜택보다는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다. 공무원이나 관변단체인사만 해도 그렇다. 한 사람 승진시키면 탈락되는 사람이 10명이다. 서운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밖에없는 구조이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 경선 때는 박 후보가 창원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박 시장이 시장을 사퇴했다. 그렇다고 도지사 경선에서 유리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드러내 놓고 박 전 시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중앙분리대 입찰 등이 사건화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세상인심이다"고 말했다.

안상수 전 대표의 지지 박완수가 보기 좋게 한방 먹은 것
박완수 창원시장 사퇴로 공무원·관변단체 자유로워져

창원시장직을 사퇴하고 배수의 진을 친 박완수의 선택이 오히려 박완수 예비후보에게는 독이 되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욕을 듣더라도 최대한 창원시장직 사퇴의 시기를 늦추었다면 오히려 지지율 면에서는 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남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구 창원시가 박완수 예비후보에게서 자유로워 짐에 따라 구 창원시를 두고 벌이는 홍준표 도지사와 박완수 전 시장간의 지지율 경쟁이 앞으로 점점 더 흥미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효 선임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179
시 정 요 구 인	이 칠 재 (581111-1******)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42번길 32-9(파장동)
피시정요구인	수원시민신문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56(호매실동) 발행인　김 삼 석
심의대상기사	수원시민신문 2014년 4월 11일자 ~ 4월 17일자 1면, 2면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눈먼 돈'인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수원시민신문에 〈별지〉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시정요구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현직 수원시의회 상임위원장으로, 수원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상임위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의정활동과 관련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피시정요구인이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장단의 실명을 거론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보도하여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며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을 비롯한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 수행은 언론의 사명으로, 심의대상기사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2010~2013년 수원시의회 카드대금 명세서'를 분석한 것으로 당사자의 반론도 모두 반영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공적 감시 대상인 수원시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과 관련한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보도한 것은 유권자인 독자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정요구인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역력해 제보자는 공직선거법위반, 공금횡령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카드대금 명세서와 함께 보도한 것은 비록 보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카드사용내역 모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눈먼 돈'인가

제9대 후반기 수원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업무목적외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중략)

노 의장은 지난해 5월 11일, 전주콩나물국밥집에서 1만8천원까지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파리

바게트수원매탄점만 수 십 차례 이용하면서 수백만을 이용했다.

백 의원은 지난 해 3월 12일, 정관장 홍삼을 21만원에 구입, 지난해 4월 16일엔 수원의 한 문고에서 책값 등으로 16만 8천원을 카드로 사용한다. 백 의원은 지난해 4월 25일, 세탁소에서 6만7천원을 사용했다. 또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주)호텔앙코르에서 40만원을 사용했다.

이칠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식당인 '산촌'에서 2012년 12월 6일 48만원을, 12월 20일 '산촌'의 옆집인 '콩마당'에서 25만원을, 같은 날 주소불명의 '기와집'에서 37만원 어치의 식대를 클린카드로 지출했다. 12월 한달에만 업무추진비로 384만원을 지출했다.(중략)

안행부 재정지원과의 한 담당자는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 한 건 한 건 등을 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같다. 클린카드로 집행해서는 안될 경비를 집행한 경우는 감사대상이다. (감사부서가 하겠지만) 감사결과를 가지고 징계, 고발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천명했다.

수원시권선선관위 지도담당관은 "카드가 됐든, 현금이 됐든 돈의 성격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기부행위면은 선거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시의원들이 시민세금을 목적외에 사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아울러 조만간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과 관련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후략)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눈먼 돈'인가

꽃집, 밧데리, 기름값, 하이패스비, 세탁 등 사적사용 논란

당사자들 "직접 카드 관리하지 않지만, 직무와 관련있어"
제보자 "시민세금, 목적 외에 사용해도 되나 … 고발감"



▲ 이칠재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 식당인 '산촌'에서 2012년 12월 6일 48만원을, 12월 20일 '산촌'의 옆집인 '콩마당'에서 25만원을, 주소가 불분명한 12월 6일 '기와집'에서 37만원의 식대를 클린카드로 지출했다. 12월 한달에만 업무추진비로 384만원을 지출했다.

제9대 후반기 수원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업무목적 외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장 1인, 부의장 1인, 상임위원장 5인에게는 한 달에 법인카드(클린카드)로 업무추진비로만 320만원, 180만원, 각 1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업무추진비는 예산심의와 조례제정, 시정감사 등의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식사 등에 지출해서는 안된다. 또 50만원 이상 사용 시에는 내역서는 물론 지출사유, 지출자, 제공자 등을 엄격하게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수원시 장안구 한 시민이 수원시의회 사무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시의회 지도부 업무추진비 수년치 카드이용대금명세서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여러 해 제보자는 공직선거법위반, 공금횡령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본지는 먼저 4년간 명세서 중 지난 해의 일부 자료만 공개한다.

지난 해 1월 13일 민한기 의회부의장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민화원'이라는 꽃집에서만 하루 21만원의 꽃을 사는 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클린카드를 사용했다. 지난 해 자신이 아내의 꽃집에서 4월 7일엔 24만원, 5월 7일엔 10만원어치를 샀다. 더더욱 선거법상 정치인들이 화환을 주고받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다른 상임위원장과 시의회 사무국이 졸졸이 이 꽃집을 이용해 시의원 밀어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시의회 의정팀장은 이에 대해 "다른 곳(꽃집)이 없으니까"라는 말로 대신했다.

한용권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월 10일 동료의원이자 전반기 시의회 건설개발위원장이었던 정준태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준플라워' 꽃집에서 40만원의 꽃을 구입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월 25일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인 하이플러스 카드를 20만원에 충전(구입)했다. 충전카드 구입은 지난해 4월 16일 이칠재 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장도 같은 가격에 클린카드로 구입했다. 그 하루 전날은 노영관 시의회 의장이 마찬가지로 30만원의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위 '준플라워' 꽃집에서 2월 7일 45만원, 4월 15일 또 45만원을 사용한다. 이칠재 의원도 지난해 같은 꽃집에서 3월 26일 40만원, 5월 9일 15만원을 사용하고, 지난해 3월 12일엔 백정선 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이 '민화원'에서 23만원의 꽃을 구입했다.

시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구석구석에서 드러난 흔적이 보인다.

노 의장은 지난해 2월 16일, 수영하한 밧데리점에서 14만5천원을 카드로 긁는다. 지난해 2월 26일, 10만6천원 가량의 클린카드로 청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 지난해 6월 4일, 백 위원장은 16만원어치의 기름을 넣는다. 이칠재 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장도 지난해 4월 17일, 기름대금으로 16만 8천원을 사용했다. 전날 하이패스 카드 20만원을 구입한 바로 다음 날이다.

노 의장은 지난해 5월 11일, 전주꼼나물국밥집에서 1만8천원까지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파리바게트수원매탄점만 수 십 차례 이용하면서 수백만을 이용했다.

백 의원은 지난 해 3월 12일, 정관장 홍삼을 21만원에 구입, 지난해 4월 16일엔 수원의 한 문고에서 책값 등으로 16만 8천원을 카드로 사용한다. 백 의원은 지난해 4월 25일, 세탁소에서 6만7천원을 사용했다. 또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주)호텔앙코르에서 40만원을 사용했다.

이칠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식당인 '산촌'에서 2012년 12월 6일 48만원을, 12월 20일 '산촌'의 옆집인 '콩마당'에서 25만원을, 주소가 불분명한 12월 6일 '기와집'에서 37만원 어치의 식대를 클린카드로 지출했다. 12월 한달만 384만원을 지출했다.

안행부의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의회비 규정을 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회 사무국은 지난해 1월 사무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합친 카드이용대금이 5,837만원, 2월에 3,521만원, 3월에 3,101만원, 4월에 2,747만원, 5월에 1,869만원, 6월에 3,084만원을 사용했다.

노영관 시의회 의장은 "카드는 비서가 가지고 다니지 나는 모른다. 밧데리 수리한 것도 모른다. 하이패스 카드 구입은 의장 카드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빵 구입은 그동안 관례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한기 부의장은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에 남겼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 2면으로 이어짐

김삼석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이칠재 의원은 "상임위 카드는 내가 쓰지 않고, 주무관한테 맡겼다. 클린카드로 기름을 안넣었다. 기름넣으면 큰일 나지"라고 말했다가 "지난해 워크샵때 버스에 기름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식사를 한 부분에 대해 "활동무대가 거기니까 가끔했다"고 강조했다.

백정선 의원은 "옷 세탁은 의원 합창단 옷"이고, "책은 복지공무원에게 간단한 선물로 준 것"이고, "홍삼은 위원회 워크샵을 간 곳에서 의장님의 영광 누나의 식사 대접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답했다. 이어 "꽃 구입은 나에게 물어보지말라"고 한뒤 "업체 선택은 의회 사무국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영 의원은 "호텔앙코르는 처음 듣는다. 어디에 있느냐. 한번 알아본 뒤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의정팀장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줄은 모른다"며 "다만 원래 6월말까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선거도 있고 해서 카드를 다음 주에 모두 회수한 다음에 의정활동에 꼭 필요할 때만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 재정지원과의 한 담당자는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 한 건 한 건 등을 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같다. 클린카드로 집행해서는 안될 경비를 집행한 경우는 감사대상이다. (감사부서가 하겠지만) 감사결과를 가지고 징계, 고발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천명했다.

수원권선선관위 한 담당자는 "카드가 됐든, 현금이 됐든 돈의 성격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기부행위면은 선거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시의원들이 시민세금을 목적외에 사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아울러 조만간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과 관련해 고발할 예정"이다.

본지는 관련 내용을 연속 보도한다.

6. 기 각

의 결 번 호	2014지선143
시정요구인	박완수 (550810-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47 명빌딩 601호
피시정요구인	경남매일신문(주)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125 대표이사 박 태 홍
심의대상기사	경남매일 2014년 2월 21일자 3면「말... 말... 말...」 2014년 2월 28일자 2면「홍준표 박완수 전운 감돈다」 2014년 3월 3일자 1면「"도청이전 재논의 하겠다"」 2014년 3월 3일자 2면「깜되는 사람끼리 경선해야지 …」 2014년 3월 6일자 2면「홍지사, 시·군 순방 마무리 '경선앞으로'」 2014년 3월 7일자 1면「朴心 파는 박심 논란」 2014년 3월 10일자 19면「당당하게 단체장 되라」 2014년 3월 13일자 1면「본선열차 누가 타나」 제하의 기사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에게 주의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수차례 특정 후보자에 대해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하였다며 '주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가 시정요구인의 격을 낮추려 한 적도, 폄하하려한 의도도 전혀 없었으며, 칼럼이나 사설의 경우 글쓴이의 주관이 일부 들어갈 수 있으나, 보도의 공공성에 충실했으며, 또한, 심의대상기사 중 "창원시장 비서실 유지 문제있다"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원의 결정(2014경남조정24)에 따라 정정보도를 하였고, 시정요구인이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 이를 대대적으로 기사화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심의대상기사 중 일부 여론조사결과와 관련된 기사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의 기사는 시의성 있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보인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말… 말… 말…

○… 최근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역선택 현상이 나타났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상대방 정당의 약한 후보를 본선에 올리라는 역선택의 결과인지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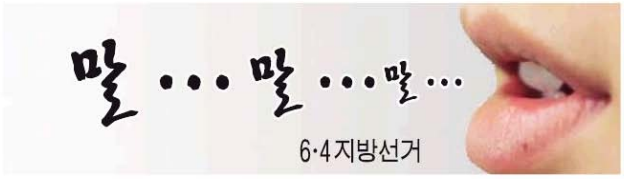
지난 2월 17일 도내 모 일간지가 보도한 리서치

앤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란 질문에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 49.6%, 박완수 후보 21.9%로 홍준표 지사가 2.2배 이상의 차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완수 후보가 50.4%로 27.5%의 지지를 받은 홍준표 지사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당선 가능성은 홍준표 지사가 38.4%로, 박완수 후보 2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헷갈리네, 진짜 '상대방 정당의 약한 후보를 본선에 올리자'는 전략적인 역선택이란 말인가?"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후략)



"전략적 역선택인 것인가"
"해당 행위·철새 솎아내야"
"16년 동안 시민 부름 받아"

○… 최근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역선택 현상이 나타났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상대방 정당의 약한 후보를 본선에 올리라는 역선택의 결과인지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7일 도내 모 일간지가 보도한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란 질문에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 49.6%, 박완수 후보 21.9%로 홍준표 지사가 2.2배 이상의 차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완수 후보가 50.4%로 27.5%의 지지를 받은 홍준표 지사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당선 가능성은 홍준표 지사가 38.4%로, 박완수 후보 2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헷갈리네, 진짜 '상대방 정당의 약한 후보를 본선에 올리자'는 전략적인 역선택이란 말인가?"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 "해당 행위 전력이 있고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닌 철새 정치인과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난 19일 김해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임용택 전 김해시의회 의장은 "새누리당 11명 후보 중 이해득실을 쫓아 당적을 옮긴 후보도 있고 해당 행위를 한 후보가 있다"며 "이들 후보와 같이 경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공천경쟁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무소속 출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어 "자신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의리 있게 자리를 지켰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이어오면서 계속 자리를 지킨 정치인은 11명 후보 중 임용택 뿐이다. 이제는 당이 나에게 답을 할 차례"라고 말했다.

○… "4번 연속으로 김해시민의 부름을 받은 정치인은 저뿐입니다."

새누리당 김해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성규 도의원은 "김해시민들에게 선택받아 1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해지역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이어 오면서 오직 한길을 걸어왔고 4번 연속으로 시민들의 부름을 받았다"며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김성규가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재근·허균 기자

홍준표vs 박완수 전운 감돈다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날 선 공방에 대해 "나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협력자일 뿐이다"며 대응을 극히 자제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캠프운영에 나선다.

따라서 지난 도지사 보궐선거에 이어 다시 한 번 맞붙은 선거전은 경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임을 감안할 때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예비후보가 결선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중략)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이것에 기초한다. 지난 17일 도내 모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란 질문에 홍준표 지사 49.6%, 박완수 후보 21.9%로 홍준표 지사가 2.2배 이상의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완수 후보가 50.4%로 홍준표 지사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 지사 측은 "상대방 정당의 역한 후보를 본선에 올리기 의한 민주당 지지층 등의 역선택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완수 후보 측은 "경남도민의 선택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받았다.

아무튼 도정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의 선거운동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던 홍 지사 측은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측근들을 선거캠프에 전진배치, 이후부터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후략)



홍준표 전운 감돈다 박완수

홍, 캠프 운영 박차 박, 홍보전략 강화

홍준표 경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예비 후보

만으로만 볼 경우 엇비슷한 것 같지만 속내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는 조직확보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이것에 기초한다. 지난 17일 도내 모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란 질문에 홍준표 지사 49.6%, 박완수 후보 21.9%로 홍준표 지사가 2.2배 이상의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완수 후보가 50.4%로 홍준표 지사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 지사 측은 "상대방 정당의 역한 후보를 본선에 올리기 의한 민주당 지지층 등의 역선택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완수 후보 측은 "경남도민의 선택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받았다.

아무튼 도정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의 선거운동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던 홍 지사 측은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측근들을

경선 전 당원과 대의원 확보 총력전

여론조사 결과 신경전… 경쟁 가열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날 선 공방에 대해 "나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협력자일 뿐이다"며 대응을 극히 자제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캠프운영에 나선다.

따라서 지난 도지사 보궐선거에 이어 다시 한 번 맞붙은 선거전은 경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임을 감안할 때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예비후보가 결선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로 인력을 결집시키는 등 경선체제로 돌입했다. 이 같은 발빠른 조직 강화는 경선전에서 투표권을 가진 당원과 대의원을 빠른 시간안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한 인사는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물밑에서 양측이 활발하게 국회의원과 시의원, 당협위원장에 대한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 경선이 3자 구도에서 양자 대결로 굳어진 것과 관련, 양자대결이란 게 공방전 선거캠프에 전진배치, 이후부터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 측은 그동안 박 후보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도민만 보고 간다며 시군순방을 해오다 최근 경선을 대비, 적극적으로 움직일 태세다.

홍 지사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정장수 공보특보와 오태완 도 정책담당이 3월 1일 자로 경남도에 사직서를 낸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선거준비사무소로 합류하기 위해서다. 이곳은 지난 2012년 당내 경선 때 선거사무실로 쓰던 곳으로 그 당시, 승리한 곳이어서 다시 게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홍 지사 취임 후 경남도청에서 1년 2개월간 근무하며 공보업무와 정책을 만들어 왔으나 경선이 가까워 짐에 따라 차출된 것이다. 두 사람은 캠프에서 주로 선거공약과 홍보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재기 경남도 중소기업특보가 먼저 도청을 떠나 선거준비사무소로 옮겨 경선을 준비해 왔다. 박 특보는 대의원과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박완수 후보 측은 일찌감치 선거사무소를 내고 새로 영입한 언론팀을 가동해 홍 지사를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명빌딩 6층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종부 전 창원부시장을 비롯, 주임환 전 MBC 국장 등 전직 언론인들이 홍보를 맡고 있다.

박완수 후보 측은 연일 보도자료와 성명서 낸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 측은 선거준비사무소 명의로 단 한 번의 보도자료를 냈을 뿐 일정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3월 1일 자로 선거사무실이 개소된 후 두 후보 간 공방전은 어떻게 전개될지가 미지수다.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도청 이전 재논의 하겠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2년 말 보궐선거 때 내걸었던 ‘도청 마산 이전’공약에 대해 “단순한 도청 이전이 아닌 마창진 통합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중략)

통합갈등과 관련 홍 지사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며 “옛 창원은 강자고 마산은 약자다. 배려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통합의 기본”이라고 했다.

홍 지사의 이날 도청이전 관련 발언은 도청이전을 시청사, 야구장과 패키지로 묶어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 발 빼기로 해석될 수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중략)

홍 지사는 지난달 26일 함안군을 순방한 자리에서는 ‘광역시 승격은 선거용’이라며 평가절하한 바 있다.

최근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잇단 공격성 발언과 관련해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당내 선거의 기본”이라고 했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창원시장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3~4선 된 사람들이 광역단체장으로 대거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며 “기초단체장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나 본인의 선택이며 시민과 당원의 선택에 달렸다”고 했다. 최근 방송에서 안상수 후보에 대해 ‘나 같으면 그짓은 안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가볍게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다. 악의는 없다”고 해명했다.

“도청 이전 재논의 하겠다”

홍지사 창원시청사·야구장과 연계 시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2년 말 보궐선거 때 내걸었던 '도청 마산 이전'공약에 대해 "단순한 도청이전이 아닌 마창진 통합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8일 창원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약 이행에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전임시장이 극렬히 반대해 추진할 수 없었다.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 지역유지들로 마창진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논의의 대상에는 도청이전은 물론 시청사, 야구장까지 포함시켰다.

통합갈등과 관련 홍 지사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며 "옛 창원은 강자고 마산은 약자다. 배려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통합의 기본"이라고 했다.

홍 지사의 이날 도청이전 관련 발언은 도청이전을 시청사, 야구장과 패키지로 묶어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 발 빼기로 해석될 수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홍 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용도변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다"며 진주의료원을 서부 제2청사로 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용도변경에 제동을 걸 경우 "투입된 국비를 반환하면 시비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했다.

최근 창원시장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창원시 광역시 승격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광역시 승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도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로 도의 권한이 대부분 위임돼 있다"며 "2단계 행정체제 개편 때 (광역시 승격 문제를)적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달 26일 함안군을 순방한 자리에서는 '광역시 승격은 선거용'이라며 평가절하한 바 있다.

최근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잇단 공격성 발언과 관련해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당내 선거의 기본"이라고 했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창원시장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3~4선 된 사람들이 광역단체장으로 대거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며 "기초단체장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나 본인의 선택이며 시민과 당원의 선택에 달렸다"고 했다. 최근 방송에서 안상수 후보에 대해 '나 같으면 그짓은 안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가볍게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다. 악의는 없다"고 해명했다.

오태영 기자 oooh5163@naver.com

“깜 되는 사람끼리 경선해야지…”

홍준표(사진) 경남지사는 지난 28일 박완수 전 창원시장과의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공천 경쟁을 두고 “깜(감)이 되는 사람끼리 경선해야지…”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시·군 순방 일정 중 김해를 방문해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저는) 중앙정치 무대서 계파 도움 없이 자력으로 당 대표까지 했다”면서 이같이 밝혀 박 전 시장과 정치적 위상이 다름을 내비쳤다.

이어 “이미 2007년에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 바가 있고 김혁규·김두관 전 경남지사처럼 지방을 발판으로 대권에 도전한 정치인과도 비교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후략)

"깜 되는 사람끼리 경선해야지…"

홍준표 지사,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공천 경쟁 빗대



홍 준 표 (사진) 경남지사는 지난 28일 박완수 전 창원시장과의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공천 경쟁을 두고 "깜(감)이 되는 사람끼리 경선해야지…"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시·군 순방 일정 중 김해를 방문해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저는) 중앙정치 무대서 계파 도움 없이 자력으로 당 대표까지 했다"면서 이같이 밝혀 박 전 시장과 정치적 위상이 다름을 내비쳤다.

이어 "이미 2007년에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 바가 있고 김혁규·김두관 전 경남지사처럼 지방을 발판으로 대권에 도전한 정치인과도 비교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남지사 재선에 성공한다면 대권에 도전하겠느냐는 질문에 홍 지사는 "지금은 재선을 하느냐, 아니냐가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해 장유관광유통단지 개발 이익금 배분으로 김해시와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유지역은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여서 공공시설이 부족한데 이들 시설 확충에 배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세진 기자 bigi@daum.net

安·오거돈 오늘 회동 부산시장 출마 논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무소속으로 부산시장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3일 서울에서 회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안 위원장이 민주당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오 전 장관과의 회동이 이뤄져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거돈 전 장관이 내일(3일) 서울에 올 일 있다며 안철수 의원에게 한 번 만나자 해서 안 의원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오 전 장관에게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 배경을 설명하고 오 전 장관에게 신당의 후보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홍 지사, 시 · 군 순방 마무리 '경선 앞으로'

"도민과 함께 하겠다, 도정 수행이다"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잠재운 홍준표 경남지사가 5일 하동, 6일 고성군을 마지막으로 도내 18개 시 · 군 순방을 모두 마친다.

홍 지사는 순방 기간 중 해당 시 · 군과 주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꼼꼼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중략)

언론인 간담회에선 상대후보와 경선에 관한 '소신' 발언도 이어갔다. 도지사 후보 경선은 수용한다면서도 상대인 박완수 전 창원시장에 대해선 "경쟁자가 아니다, 도정 협력자"란 이야기를 두 차례나 했다.

홍 지사는 거대야당의 탄생으로 새누리당의 중진 차출론이 제기되는 등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안전지대'인 경남의 경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 지사, 시·군 순방 마무리 '경선 앞으로'

오늘 마지막 고성군 찾아… 주민 건의 꼼꼼히 답변

"도민과 함께 하겠다, 도정 수행이다"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잠재운 홍준표 경남지사가 5일 하동, 6일 고성군을 마지막으로 도내 18개 시·군 순방을 모두 마친다.

홍 지사는 순방 기간 중 해당 시·군과 주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꼼꼼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상대후보를 향해 "깜(감)이 되지 않는다" 등 논란거리도 서슴지 않았고 진주의료원 활용방안과 자신의 공약이었던 도청 마산이전에 대해서도 자신의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번 순방을 시작하면서 상대후보와 야당이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짙다고 비난하자 "순방 자체가 도정 수행"이라며 "현직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번 순방을 18명의 시장·군수를 비롯해 지역 유지들과 스킨십을 갖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고한 대로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적절하게 도와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소규모 사업 예산지원도 약속했다.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선 상대후보와 경선에 관한 '소신' 발언도 이어갔다. 도지사 후보 경선은 수용한다면서도 상대인 박완수 전 창원시장에 대해선 "경쟁자가 아니다, 도정 협력자"란 이야기를 두 차례나 했다.

홍 지사는 거대야당의 탄생으로 새누리당의 중진차출론이 제기되는 등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안전지대'인 경남의 경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朴心 파는 박심 논란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에 나선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6일 "윗선과 교감이 이뤄져 출마를 결심했고 윗선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민들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도민들의 바람인 정책공약으로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도 윗선을 강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새누리당은 진상을 파악,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등 파장이 도민 자존심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중략)

박 전 시장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한 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박심(朴心 ·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역할이 있어 창원시장직을 사퇴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며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고 다시 '윗선의 의중과 메시지'를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윗선'이 어디냐는 질문과 '교감'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알아서 생각해 달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다만 본인이 친박(친박근혜) 후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친박 의원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들었다"고만 언급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박 후보는 자신이 여권 핵심부와 깊숙한 논의를 거쳐 출마한 것이란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하지만 윗선은 청와대입니까? 당내입니까? 란 기자 질문에 박완수 후보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십시오"라고 답했다. 이어 또 다른 기자가 본 내용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질문하자 정확한 내용의 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심논란으로 당이 어려운 처지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朴心 파는
박심 논란

박완수 예비후보 윗선 메시지 주장
유 장관 이어 불거져 파장 확산될 듯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에 나선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6일 "윗선과 교감이 이뤄져 출마를 결심했고 윗선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민들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도민들의 바람인 정책공약으로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도 윗선을 강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새누리당은 진상을 파악,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등 파장이 도민 자존심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특히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박심(朴心)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가 논란인 가운데 불거진 사안이어서 그 파장은 친박, 비박의 계파논쟁에도 불을 지핀 결과를 불고 왔다.

서울 등 곳곳에서 출마예상자 선정과 관련, 박심 논란으로 새누리당은 파벌논쟁이 일고 있는 터여서 공정경선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박 전 시장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한 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역할이 있어 창원시장직을 사퇴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며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고 다시 '윗선의 의중과 메시지'를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윗선'이 어디냐는 질문과 '교감'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알아서 생각해 달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다만 본인이 친박(친박근혜) 후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친박 의원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들었다"고만 언급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박 후보는 자신이 여권 핵심부와 깊숙한 논의를 거쳐 출마한 것이란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하지만 윗선은 청와대입니까? 당내입니까? 란 기자 질문에 박완수 후보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십시오"라고 답했다. 이어 또 다른 기자가 본 내용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질문하자 정확한 내용의 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심논란으로 당이 어려운 처지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재근 기자

당당하게 단체장 되라

바둑판에서 꼼수를 자주 쓰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바둑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하고, 변화무쌍한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석을 둬야 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박심(朴心) 논란 등 지방선거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표심보다는 박심을 팔거나 매달리려 한다는 얘기다.

안전행정부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선거 개입의혹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에 불을 지르고 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인정받은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후광(後光) 효과`를 얻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 당내 경쟁 주자들을 주저앉히려는 의도였다면 옳지 않다. 또 청와대 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 신청자 15명과 산행을 하는 등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목적을 위해 꼼수이 작용한 탓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남지사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박완수 예비후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심을 공개적으로 거론, 또 다른 공정선거 논란을 몰고 왔다.(중략)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매달리려는 듯, 또 다시 중앙정치권에 빌붙으려 한다면 볼썽사나울 뿐이다. 경남이 여당의 전통적 텃밭인 탓에 박심을 거론했다면 난센스다.(중략)

욕심과 집착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얻지 못한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바둑 십계명인 '위기십결(圍棋十訣)'의 첫 번째 항목이다. 경남도지사란 자리는 누가 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경남도민의 눈높이에서 경남지사가 탄생될 뿐이다. 즉 유권자 몫이란 것이다.

경남지사가 되려한다면 경남도민에 의한 경남도민을 위한 것에서 경남도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진리다. 꼼수는 옳지 않다.

박재근 칼럼

당당하게 단체장 되라



본사 전무이사

바둑판에서 꼼수를 자주 쓰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바둑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하고, 변화무쌍한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석을 둬야 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박심(朴心) 논란 등 지방선거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표심보다는 박심을 팔거나 매달리려 한다는 얘기다.

안전행정부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선거 개입의혹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에 불을 지르고 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인정받은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후광(後光) 효과'를 얻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 당내 경쟁 주자들을 주저앉히려는 의도였다면 옳지 않다. 또 청와대 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 신청자 15명과 산행을 하는 등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목적을 위해 꼼수이 작용한 탓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남지사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박완수 예비후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심을 공개적으로 거론, 또 다른 공정선거 논란을 몰고 왔다.

따라서 윗선의 메시지를 받고 출마했다는 공개 발언에 앞서 그 진위여부를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다. 윗선이 "청와대인가, 당내인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알아서 생각해 달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설혹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크게 잘못된 일이고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를 두고 바닥세인 지지율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부자 몸조심하듯, 대응 않는 홍 지사 측에 대한 공세적 측면이다. 또 왕조(王朝)시대, 군부쿠데타 시절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윗선 발안을, 또는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 등 각양각색의 말이 쏟아진다. 하지만 그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박심의 인정을 받은 후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윗선을 강조했다면 큰 잘못일 수 있다.

바둑은 흑백의 정수를 찾아가는 순간 순간마다 변화무쌍한 앞길을 알 수 없는 선택의 기로라면 "버림"으로서 취함을 강조하고 있다. 바둑 십계명인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란 사소취대(捨小取大), 위기가 닥치면 과감히 돌을 버리란 봉위수기(逢危須棄)는 우리들 삶의 경구(警句)다. 하지만 불리해지면 무리수를 두는 게 다반사다. 상대를 속이기 위한 작전이나 꼼수 등 정석에는 없는 변칙수와 함정수를 자주 쓰면 오래가지 못하고 뒤집힌다는 사실에도 그러하다. 현재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예가 잦은 것 같다.

경남도내 지방선거에서도 박심이, 친박이 거론되는 게 심상찮을 정도다. 경남도민들의 또 다른 상처를 건드리는 무리수와 다를 바 없다. 우리 정치 근현대사를 보면 3·15와 부마민주항쟁 등 경남도민에 의해 길을 달리한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난 10년의 경남도정, 그 헛세월" 동안, 부산에, 대구경북에 밀리고 채인 경남은 로스쿨 없는 도(道)로 뒤처지는 등 이런 저런 국책사업 등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그 결과가 근래 여당강세지역으로 분류됐다지만 지난 선거 때 첫 야당 도지사를 탄생시킨 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경남의 목소리가 절박했다는 증좌다. 물론 지역이기를 부추키는 게 아니다. 경남도민의 정서를,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것은 현 정부와의 협력을 공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매달리려는 듯, 또 다시 중앙정치권에 빌붙으려 한다면 볼썽사나울 뿐이다. 경남이 여당의 전통적 텃밭인 탓에 박심을 거론했다면 난센스다. 또 "경남의 친박 국회의원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언급하는 등으로 엄버무려 버릴 일은 더욱 아니다. 정치란 게 바둑과 같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흑백이 정수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의외의 수도 허다하게 나오지만 묘수도 무궁무진하다. 또 장고 끝에 악수도 나오고 자충수도 둔다. 결론은 승리를 탐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부득탐승(不得貪勝)'이다.

욕심과 집착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얻지 못한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바둑 십계명인 '위기십결(圍棋十訣)'의 첫 번째 항목이다. 경남도지사란 자리는 누가 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경남도민의 눈높이에서 경남지사가 탄생될 뿐이다. 즉 유권자 몫이란 것이다.

경남지사가 되려한다면 경남도민에 의한 경남도민을 위한 것에서 경남도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진리다. 꼼수는 옳지 않다.

본선 열차 누가 타나

경부선 상행열차, 새누리호에 탑승할 첫 주인공은 누구일까? 새누리당이 텃밭인 경남 등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선거 바람을 몰고 가는 전략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해 그 주인공이 누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략)

이어 홍 지사는 "지난 보궐선거 때에 대한 재선을 포함, 5년 6개월의 임기, 즉 재임을 목표로 경남의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며 "도정업무에 충실하고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것이 선거전략이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4일 중앙당에 공직후보자 신청을 하고 당이 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경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박완수 예비후보는 경남도 평양사무소 설립 등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시군을 순회하는 등 얼굴알리기에 나선 상태다.

경남 또는 부산을 시작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이 검토되고 있는 새누리당에 비례, 야당 후보군들도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는 것이 경남지역 정가의 여론이다.(후략)

새누리, 경부선 상행열차 따라 세몰이 시도지사 경선

본선 열차 누가 타나


홍준표 지사


박완수 예비후보

경부선 상행열차, 새누리호에 탑승할 첫 주인공은 누구일까? 새누리당이 텃밭인 경남 등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선거 바람을 몰고 가는 전략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해 그 주인공이 누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충북·세종→대전·충남→인천·강원→경기→서울 순으로 진행하는 '경부선 경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텃밭인 영남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바람을 불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합을 벌이는 박완수 예비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경선도 달아오르고 있다. 경남도지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경선 일정도 전국에서 가장 빠른 4월 초순께로 예정된 상태다.

홍 지사는 12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국가경제의 핵이 경남이다"며 경남은 항공 등 3개 산업단지 지정, 창원공단 등 2개 공단의 재생사업이 확정된 기자회견 후 오는 14일 후보를 등록한 후 17일(월요일) '출마의 변'을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지사는 "지난 보궐선거 때에 대한 재선을 포함, 5년 6개월의 임기, 즉 재임을 목표로 경남의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며 "도정업무에 충실하고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것이 선거전략이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4일 중앙당에 공직후보자 신청을 하고 당이 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경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박완수 예비후보는 경남도 평양사무소 설립 등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시군을 순회하는 등 얼굴알리기에 나선 상태다.

경남 또는 부산을 시작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이 검토되고 있는 새누리당에 비례, 야당 후보군들도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는 것이 경남지역 정가의 여론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5일까지 당내 경선을 마무리해야 선관위로부터 투·개표 인력·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근 기자

의 결 번 호	2014지선182
시 정 요 구 인	이 낙 연 (521220-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14 석가아파트 102동 207호
피시정요구인	(주)뉴스1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 SC빌딩 17층) 대표이사 홍선근 · 이유식
심의대상기사	뉴스1코리아 2014년 4월 24일 「'당비대납' 이낙연 측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뉴스1코리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시정요구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로, 시정요구인측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피시정요구인과의 통화에서 「당비대납」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시정요구인측 선거사무소 관계자 중 피시정요구인과 통화하거나 당비대납을 인정한 사람은 없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취재원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으나, 시정요구인측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게재한 것이므로,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시정요구인의 소명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보도가 허위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당비대납' 이낙연 측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당비대납' 혐의가 있는 이낙연 의원측 선거사무소 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이 의원측은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측 선거사무소 한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올해 초 당비대납 투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비대납은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선거에 나오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 중 당비대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경선에 나서는 시도의원 후보들까지 대부분이 당비대납을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후략)


'당비대납' 이낙연측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

(무안=뉴스1) 박준배 기자
입력:2014.04.24 11:35:47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당비대납' 혐의가 있는 이낙연 의원측 선거사무소 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이 의원측이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라며 당비대납을 인정했다.

이 의원측 선거사무소 한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올해 초 당비대납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비대납은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선거에 나오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 중 당비대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경선에 나서는 시도의원 후보들까지 대부분이 당비대납을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제기된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전남 이낙연 의원측을 검찰에 고발하고 주승용 의원 측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이 의원측 지역사무소직원 4명은 올해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117명의 당비 총 3178만1000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1310명의 당비 786만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는 주 의원측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에 대해선 상호교차 입금 및 조직적인 대납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 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 인

1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선거기사심의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2. 선거기사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3.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

제3조(심의고려사항) 위원회는 제2조의 심의기본원칙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4.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5.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의도성 여부

제2장 일반 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2조제1호의 공정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사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방적,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또는 기고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5조(형평성) 제2조제1호의 형평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 또는 사실과 다르게 변형한 기사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 6 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2조제2호의 객관성 및 사실보도의무를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기사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은 기사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을 취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
4.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기사
5.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
6.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거나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기사
7.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기사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 7 조(정치적 중립성) 제2조제3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 또는 비방하거나 미화하는 기사
2. 그 밖에 위 1호에 준하는 기사

제 3 장 세부 심의기준

제 8 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위원회 설치일로(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밝히지 않은 경우
3. 위원회 설치일로(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

나. 그 밖의 사항은 중앙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4.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에서 해당 조사의 전제 여건 및 결과와 다른 해설을 하거나 해당 조사와 현저히 다른 여건에 적용하는 경우

6.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포함한 개인이나 정당을 포함한 단체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덧붙여 보도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상반된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 또는 변형시켜 편집, 게재한 경우 또는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0조(사진게재) 선거와 관련한 사진 또는 이미지 기사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3. 선거운동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참가 인원이나 내용 등을 왜곡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 · 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 · 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4장 결 정

제13조(제재결정 등) ①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 (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 · 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또는 주의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반론보도청구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첨 부 : 본인승낙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본 인 승 낙 서

<table>
<tr><td rowspan="2">성명</td><td>한글</td><td></td><td rowspan="2">주민등록번호</td><td rowspan="2"></td><td rowspan="2">직업</td><td rowspan="2"></td></tr>
<tr><td>한자</td><td></td></tr>
<tr><td rowspan="2">주소</td><td colspan="3" row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e-mail</td><td colspan="2"></td></tr>
<tr><td>학력</td><td colspan="6"></td></tr>
<tr><td>경력</td><td colspan="6"></td></tr>
</table>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4">시 정 요 구 서</td></tr>
<tr><td rowspan="2">시정요구인</td><td>① 성 명</td><td></td><td>② 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③ 주 소
(e-mail 주소)</td><td></td><td>④ 전 화 번 호</td><td></td></tr>
<tr><td rowspan="3">시정요구
대상</td><td>⑤ 언론사명
(매체명)</td><td></td><td>⑥ 대표자 성명</td><td></td></tr>
<tr><td>⑦ 보 도 일 자
및 지 면</td><td></td><td>⑧ 소 재 지</td><td></td></tr>
<tr><td>⑨ 보 도 내 용</td><td></td><td>⑩ 전 화 번 호</td><td></td></tr>
<tr><td>시정요구
사항
(별지작성
가능)</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별지 제5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2">재 심 청 구 서</td></tr>
<tr><td rowspan="2">원 심 결 정</td><td>의 결 번 호</td><td></td></tr>
<tr><td>결 정 일 자</td><td></td></tr>
<tr><td rowspan="4">청 구 인</td><td>성 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r>
<tr><td>주 소</td><td></td></tr>
<tr><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E-mail</td><td></td></tr>
<tr><td>청구의 취지
및 사유</td><td colspan="2">별 첨</td></tr>
<tr><td colspan="3">「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able>

(별지 제7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4">반 론 보 도 청 구 회 부 서</td><td>처리시간
48시간</td></tr>
<tr><td rowspan="3">청 구 인</td><td>①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d>② 주 소
(e-mail.주소)</td><td colspan="2"></td></tr>
<tr><td>③ 대표자 성명</td><td></td><td>④ 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⑤ 소 재 지</td><td></td><td>⑥ 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피 청 구 인</td><td>⑦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d>⑧ 주 소</td><td colspan="2"></td></tr>
<tr><td>⑨ 대표자 성명</td><td></td><td>⑩ 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⑪ 소 재 지</td><td></td><td>⑫ 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반 론 보 도
청 구 대 상</td><td colspan="2">⑬ 언 론 사 명
(매 체 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⑭ 보도일자 및 지면</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⑮ 보 도 내 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4. 보도기사 전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제 8 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 · 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 8 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 · 방송학계 · 대한변호사협회 ·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 형평성 · 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

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

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 8 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 · 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 · 신문 · 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신문 ·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통신 · 잡지 또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 · 살포 · 게시 ·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 살포 · 게시 · 첩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 ·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 · 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

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제108조의2(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 · 운영, 평가지표 · 기준 · 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 ·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 · 직업 · 경력 등 · 재산 · 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 ·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 · 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 · 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강 · 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 · 정책의 홍보, 당원 · 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 · 도안 · 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6조·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2.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⑩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 ·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4

심의대상 매체현황

※ 일간지 129종, 주월간지 292종, 전문신문 21종, 뉴스통신 15종 : 총 457종

1) 일간지 : 129종

중앙 일간지 (26)	종합일간	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	6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스포츠지	6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경향, 일간스포츠
	무가지	3	데일리노컷뉴스, 더데일리포커스, 메트로
지역 일간지 (103)	서울	12	내외일보, 새한일보, 서울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이투데이, 일간투데이, 매일일보, 아시아타임즈, 경향매일
	경기, 인천	19	경도신문, 인천일보, 경기인천일보, 기호일보,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수도일보, 수원일보
	대전, 충남	10	금강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세종매일, 충청매일, 대전투데이
	충북	5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강원	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부산, 울산	7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울산광역매일
	대구, 경북	11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영남매일,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대경일보, 경상매일, 대경일보
	경남	9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창원일보, 일간뉴스경남, 한남일보
	광주, 전남	14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광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즈, 전남도민일보, 호남일보, 희망일보
	전북	10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새만금일보, 전민일보, 전북매일신문, 일일전북신문
	제주	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한라일보

2) 주 · 월간지 : 292종

주간지 월간지 (263)	종합주간	14	뉴스포스트, 미디어워치, 민주신문, 사건의내막, 시민사회신문, 월드경제,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토요경제, 주간한국
	서울	37	강남내일신문, 강남저널,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신문, 구로타임즈, 노원신문, 동북일보,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북신문, 양천투데이, 영등포신문, 은평시민신문, 종로저널, 강남신문, 위클리온서울, 동대문신문, 동작신문, 마포신문, 서대문신문, 서부신문, 시정신문, 은평신문, 종로신문, 중랑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지역연합신문
	경기 인천	33	가평타임즈, 고양신문, 과천문화신문, 광명일보,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동부교차로저널,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타운, 세종신문, 수원화성오산신문, 시흥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산타임스, 안양광역신문, 양주신문, 여주신문, 용인신문, 이천신문, 자치안성,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포천신문, 화성신문, 남동신문, 시사인천, 연수신문, 굿뉴스, 시선집중, 지방시대, 더피플(ThePeople)
	대전 충남	19	시사충청, 태안미래신문, 천안저널, 보령신문, 온양신문, 충남신문, 서천신문, 놀뫼신문, 당진투데이, 서산타임즈, 온주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금산신문, 예산신문, 공주신문, 홍성신문, 금산저널, 세종포스트
	충북	11	영동신문, 옥천신문, 제천신문, 진천시사신문, 충주신문, 충청리뷰, 증평괴산저널, 음성뉴스, 음성신문,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강원	18	강릉신문, 설악신문, 원주투데이, 강원리뷰, 홍천신문, 강원영동네트, 워크신문, 강원신문, 영월신문, 삼척동해신문, 횡성신문, 강원희망신문, 횡성희망신문, 홍천희망신문, 강원고성신문, 강원북부신문, 강원가정복지 · 다문화신문, 철원신문사, 태백신문
	부산	7	부산여성뉴스, 시민미디어, 기장신문,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울주신문, 울산저널
	대구 경북	26	팔공신문, 대구달성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대구푸른신문, 청도신문, 군위신문, 고령신문, 칠곡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김천신문, 경북자치신문, 상주신문, 영주신문, 영주시민신문, 예천신문, 안동신문, 고향신문, 영덕신문, 울진신문, 의성신문, (영천)시민신문, 경주신문, 울진21
	경남	39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신문, 거창신보, 거창중앙신문, 거창韓신문, 경남여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글로벌 경남뉴스, 김해뉴스, 남해시대, 남해신문, 뉴스사천,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밀양아리랑신문, 산청시대, 새거제신문,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아림신문, 한산신문, 주간함양, 창녕신문, 하동신문, 하동저널, 한려투데이, 함안뉴스,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함안정통신문, 함양신문, 합천대야신문, The 함안신문, 시사인코리아, 피플파워
	광주 전남	36	시민의소리, 강진우리신문,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목포시민신문, 목포투데이, 무안군민신문, 무안신문, 남해안신문, 큰여수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향진도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강진신문, 나주신문, 영광신문, 완도신문, 전남중앙신문, 전남희망신문, 장흥신문, 함평신문, 해남신문, 항도신문, 해남군민신문, 해남우리신문, 화순군민신문, 화순뉴스, 화순일보, 굿뉴스피플, 전라도닷컴, 고흥타임즈

	전북	21	고창신문,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완주군민신문, 익산신문, 익산투데이, 정읍신문, 진안신문, 군산신문, 소통신문, 전북신문고, 정읍뉴스, 해피데이고창, 시사전북
	제주	2	서귀포신문, 뉴스제주
잡지 (29)	주간	14	뉴시스아이즈, 대한뉴스, 매경ECONOMY, 미래한국, 시사IN(인),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씨앤비(CNB)저널, 주간경향,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믹리뷰, 주간동아, 주간조선, 한겨레21
	월간	15	경제풍월, 뉴스저널, 서울21,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폴리피플, 한국논단, 레이디경향,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주부생활

3) 뉴스통신 : 15종

뉴스통신	15	내외뉴스통신, ANT뉴스통신, ㈜국제뉴스, 서울뉴스통신, 뉴스토마토통신, NSP통신, 뉴스1코리아, 동양뉴스통신, KNS뉴스통신, 코리아프레스, PENTA PRESS, 아시아뉴스통신, 합동뉴스, 뉴시스(NEWSIS), 연합뉴스

4) 전문신문 : 21종

전문신문	11	PD저널, 기자협회보, 변협신문, 재외동포신문,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즈, 농민신문, 환경일보, 미디어오늘, 시정신문, 여성신문
교육신문	10	교육평론, 새교육, 교육사랑, 대한교육신문, 주간 교육, 한국교육신문, 한국교직원신문, 전라교육신문, 참교육신문, 대전교육신문

5

색 인

1) 결정유형별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 체 심 의	경고	2014지선3	울산신문	
	경고	2014지선4	우리일보	
	경고	2014지선5	전북중앙신문	
	경고	2014지선43	경북도민일보	
	경고	2014지선44	경향일보	
	경고	2014지선45	전남중앙신문	
	경고	2014지선46	영남일보	
	경고	2014지선48	대구영남매일	
	경고	2014지선58	경기신문	
	경고	2014지선62	전북중앙신문	
	경고	2014지선78	경기신문	
	경고	2014지선84	대경일보	
	경고	2014지선106	창원일보	
	경고	2014지선108	대경일보	
	경고	2014지선130	경향일보	
	경고	2014지선148	내외일보	
	경고	2014지선168	새거제신문	
	경고	2014지선223	영광신문	
	경고	2014지선224	담양신문	
	경고	2014지선226	군위신문	
	경고	2014지선227	예천신문	
	경고	2014지선233	하나로신문	
	경고	2014지선234	이천일보	
	주의	2014지선1	현대일보	
	주의	2014지선2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4지선6	경기신문	
	주의	2014지선7	경향일보	
	주의	2014지선21	뉴스포스트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주의	2014지선22	대경일보	
	주의	2014지선23	경향일보	
	주의	2014지선25	경북도민일보	
	주의	2014지선26	전라일보	
	주의	2014지선27	부산일보	
	주의	2014지선28	대구일보	
	주의	2014지선29	전북도민일보	
	주의	2014지선34	매일신문	
	주의	2014지선35	대구일보	
	주의	2014지선36	광주매일신문	
	주의	2014지선37	군산신문	
	주의	2014지선38	문화일보	
	주의	2014지선39	한국일보	
	주의	2014지선40	우리일보	
	주의	2014지선41	아시아타임즈	
	주의	2014지선47	여수신문	
	주의	2014지선49	경인일보	
	주의	2014지선50	완주군민신문	
	주의	2014지선51	중부일보	
	주의	2014지선52	중부신문	
	주의	2014지선53	울진신문	
	주의	2014지선54	경주신문	
	주의	2014지선55	성주신문	
	주의	2014지선56	경산신문	
	주의	2014지선57	화성신문	
	주의	2014지선59	경안일보	
	주의	2014지선60	현대일보	
	주의	2014지선61	전국매일신문	
	주의	2014지선63	시대일보	
	주의	2014지선64	아시아타임즈	
	주의	2014지선65	수도일보	
	주의	2014지선66	대경일보	
	주의	2014지선67	대구영남매일	
	주의	2014지선68	내외일보	
	주의	2014지선69	전북일보	
	주의	2014지선70	서울일보	
	주의	2014지선72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4지선73	시정신문	
	주의	2014지선74	중구신문	
	주의	2014지선75	뉴스경남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 체 심 의	주의	2014지선79	주부생활	
	주의	2014지선80	여성조선	
	주의	2014지선81	전남저널	
	주의	2014지선83	경향일보	
	주의	2014지선85	광남일보	
	주의	2014지선86	경남매일	
	주의	2014지선87	대구영남매일	
	주의	2014지선101	전라일보	
	주의	2014지선102	기호일보	
	주의	2014지선107	경안일보	
	주의	2014지선110	함안뉴스	
	주의	2014지선111	광주매일신문	
	주의	2014지선112	나주투데이	
	주의	2014지선114	경안일보	
	주의	2014지선115	경북일보	
	주의	2014지선116	경북도민일보	
	주의	2014지선117	대경일보	
	주의	2014지선118	대구일보	
	주의	2014지선119	경도일보	
	주의	2014지선120	경북매일	
	주의	2014지선121	경상매일	
	주의	2014지선122	거제중앙신문	
	주의	2014지선123	아시아경제	
	주의	2014지선124	영광신문	
	주의	2014지선125	강원일보	
	주의	2014지선126	내외일보	
	주의	2014지선127	중도일보	
	주의	2014지선128	경북매일	
	주의	2014지선129	대경일보	
	주의	2014지선131	중부매일	
	주의	2014지선132	지방시대	
	주의	2014지선133	익산투데이	
	주의	2014지선134	서울경제	
	주의	2014지선135	여수신문	
	주의	2014지선136	경북매일	
	주의	2014지선137	광주매일	
	주의	2014지선138	전북도민일보	
	주의	2014지선139	충청투데이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주의	2014지선140	경북일보	
	주의	2014지선144	당진투데이	
	주의	2014지선145	한남일보	
	주의	2014지선146	해피데이고창	
	주의	2014지선149	수도권일보	
	주의	2014지선150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4지선151	여성중앙	
	주의	2014지선154	경남도민신문	
	주의	2014지선155	경기인천일보	
	주의	2014지선169	경기인천일보	
	주의	2014지선170	충북일보	
	주의	2014지선184	전남일보	
	주의	2014지선190	정읍뉴스	
	주의	2014지선191	반월신문	
	주의	2014지선192	고성신문	
	주의	2014지선193	한남일보	
	주의	2014지선194	세종신문	
	주의	2014지선197	경북일보	
	주의	2014지선198	정읍신문	
	주의	2014지선199	반월신문	
	주의	2014지선200	국제신문	
	주의	2014지선203	경향신문	
	주의	2014지선211	서대문신문	
	주의	2014지선212	전북중앙신문	
	주의	2014지선225	나주신문	
	권고	2014지선8	새전북신문	
	권고	2014지선9	아시아일보	
	권고	2014지선10	서울일보	
	권고	2014지선11	울산매일	
	권고	2014지선12	수도권일보	
	권고	2014지선13	대구영남매일	
	권고	2014지선14	경도신문	
	권고	2014지선15	수도일보	
	권고	2014지선16	인천일보	
	권고	2014지선17	중부일보	
	권고	2014지선18	시대일보	
	권고	2014지선19	광남일보	
	권고	2014지선20	대구영남매일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 체 심 의	권고	2014지선24	영남일보	
	권고	2014지선30	중앙일보	
	권고	2014지선31	시사저널	
	권고	2014지선32	문화일보	
	권고	2014지선33	한국경제	
	권고	2014지선42	경남일보	
	권고	2014지선76	울산신문	
	권고	2014지선77	거창한뉴스	
	권고	2014지선82	경주신문	
	권고	2014지선88	세계일보	
	권고	2014지선89	서울신문	
	권고	2014지선90	한국경제	
	권고	2014지선91	국민일보	
	권고	2014지선92	매일경제	
	권고	2014지선93	뉴스포스트	
	권고	2014지선94	중부일보	
	권고	2014지선95	충남일보	
	권고	2014지선96	대전일보	
	권고	2014지선97	음성뉴스	
	권고	2014지선98	뉴스1	
	권고	2014지선99	연합뉴스	
	권고	2014지선100	인천일보	
	권고	2014지선109	경북일보	
	권고	2014지선113	완주군민신문	
	권고	2014지선147	중부일보	
	권고	2014지선156	시사저널	
	권고	2014지선157	목포시민신문	
	권고	2014지선158	한국경제	
	권고	2014지선159	한국일보	
	권고	2014지선160	세계일보	
	권고	2014지선161	조선일보	
	권고	2014지선162	경향신문	
	권고	2014지선163	중도일보	
	권고	2014지선164	신아일보	
	권고	2014지선165	주간한국	
	권고	2014지선166	경북일보	
	권고	2014지선171	전국매일신문	
	권고	2014지선172	동아일보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권고	2014지선173	경향신문	
	권고	2014지선174	한국일보	
	권고	2014지선175	뉴시스아이즈	
	권고	2014지선176	경북도민일보	
	권고	2014지선177	중부일보	
	권고	2014지선178	광주일보	
	권고	2014지선185	경향일보	
	권고	2014지선186	한라일보	
	권고	2014지선187	매일경제	
	권고	2014지선188	시대일보	
	권고	2014지선195	주간한국	
	권고	2014지선196	월간조선	
	권고	2014지선201	한국교육신문	
	권고	2014지선202	중앙일보	
	권고	2014지선204	서울신문	
	권고	2014지선205	한겨레	
	권고	2014지선206	헤럴드경제	
	권고	2014지선207	아주경제	
	권고	2014지선213	아주경제	
	권고	2014지선214	내일신문	
	권고	2014지선228	경북도민일보	
	권고	2014지선229	일간경기	
	권고	2014지선230	광주일보	
	권고	2014지선231	남도일보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시정요구인/언론사명	면 수
시정요구 심의	정정보도문 게재	2014지선167	김주수 의성문소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2014지선209	류승호 대경일보	
	정정보도문 게재	2014지선210	양해영 경남도민신문	
	경고 결정문 게재	2014지선220	김창균 포천신문	
	경고	2014지선153	김창균 포천신문	
	경고	2014지선216	노두근 함평천지신문	
	경고	2014지선217	강현석 중부일보	
	경고	2014지선218	유두석 우리군민신문	
	주의	2014지선104	유승화 경남투데이	
	주의	2014지선141	강석주 한려투데이	
	주의	2014지선181	윤진식 충청투데이	
	주의	2014지선215	장일 뉴시스	
	주의	2014지선219	윤장현 한국일보	
	권고	2014지선142	박완수 경남도민신문	
	권고	2014지선179	이칠재 수원시민신문	
	기각	2014지선143	박완수 경남매일	
	기각	2014지선182	이낙연 뉴스1	

2) 언론사별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자체심의	강원일보	주의	2014지선125	
	거제중앙신문	주의	2014지선122	
	거창한뉴스	권고	2014지선77	
	경기신문	경고	2014지선58	
		주의	2014지선6	
		경고	2014지선78	
	경기인천일보	주의	2014지선155	
		주의	2014지선169	
	경남도민신문	주의	2014지선154	
	경남매일	주의	2014지선86	
	경남일보	권고	2014지선42	
	경도신문	권고	2014지선14	
	경도일보	주의	2014지선119	
	경북도민일보	주의	2014지선116	
		권고	2014지선176	
		권고	2014지선228	
		주의	2014지선25	
		경고	2014지선43	
	경북매일	주의	2014지선120	
		주의	2014지선128	
		주의	2014지선136	
	경북일보	권고	2014지선109	
		주의	2014지선115	
		주의	2014지선140	
		권고	2014지선166	
		주의	2014지선197	
	경산신문	주의	2014지선56	
	경상매일	주의	2014지선121	
	경안일보	주의	2014지선107	
		주의	2014지선114	
		주의	2014지선59	
	경인일보	주의	2014지선49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자체심의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4지선150	
		주의	2014지선2	
		주의	2014지선72	
	경주신문	주의	2014지선54	
		권고	2014지선82	
	경향신문	권고	2014지선162	
		권고	2014지선172	
		주의	2014지선203	
	경향일보	경고	2014지선130	
		권고	2014지선185	
		주의	2014지선23	
		경고	2014지선44	
		주의	2014지선7	
		주의	2014지선83	
	고성신문	주의	2014지선192	
	광남일보	권고	2014지선19	
		주의	2014지선85	
	광주매일	주의	2014지선137	
	광주매일신문	주의	2014지선111	
		주의	2014지선36	
	광주일보	권고	2014지선178	
		권고	2014지선230	
	국민일보	권고	2014지선91	
	국제신문	주의	2014지선200	
	군산신문	주의	2014지선37	
	군위신문	경고	2014지선226	
	기호일보	주의	2014지선102	
	나주신문	주의	2014지선225	
	나주투데이	주의	2014지선112	
	남도일보	권고	2014지선231	
	내외일보	주의	2014지선126	
		경고	2014지선148	
		주의	2014지선68	
	내일신문	권고	2014지선214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자 체 심 의	뉴스1	권고	2014지선98	
	뉴스경남	주의	2014지선75	
	뉴스포스트	주의	2014지선21	
		권고	2014지선93	
	뉴시스아이즈	권고	2014지선175	
	담양신문	경고	2014지선224	
	당진투데이	주의	2014지선144	
	대경일보	경고	2014지선108	
		주의	2014지선117	
		주의	2014지선129	
		주의	2014지선22	
		주의	2014지선66	
		경고	2014지선84	
	대구영남매일	권고	2014지선13	
		권고	2014지선20	
		경고	2014지선48	
		주의	2014지선67	
		주의	2014지선87	
	대구일보	주의	2014지선118	
		주의	2014지선28	
		주의	2014지선35	
	대전일보	권고	2014지선96	
	동아일보	권고	2014지선173	
	매일경제	권고	2014지선187	
		권고	2014지선92	
	매일신문	주의	2014지선34	
	목포시민신문	권고	2014지선157	
	문화일보	권고	2014지선32	
		주의	2014지선38	
	반월신문	주의	2014지선191	
		주의	2014지선199	
	부산일보	주의	2014지선27	
	새거제신문	경고	2014지선168	
	새전북신문	권고	2014지선8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자 체 심 의	서대문신문	주의	2014지선211	
	서울경제	주의	2014지선134	
	서울신문	권고	2014지선204	
		권고	2014지선89	
	서울일보	권고	2014지선10	
		주의	2014지선70	
	성주신문	주의	2014지선55	
	세계일보	권고	2014지선160	
		권고	2014지선88	
	세종신문	주의	2014지선194	
	수도권일보	권고	2014지선12	
		주의	2014지선149	
	수도일보	권고	2014지선15	
		주의	2014지선65	
	시대일보	권고	2014지선18	
		권고	2014지선188	
		주의	2014지선63	
	시사저널	권고	2014지선156	
		권고	2014지선31	
	시정신문	주의	2014지선73	
	신아일보	권고	2014지선164	
	아시아경제	주의	2014지선123	
	아시아일보	권고	2014지선9	
	아시아타임즈	주의	2014지선41	
		주의	2014지선64	
	아주경제	권고	2014지선207	
		권고	2014지선213	
	여성조선	주의	2014지선80	
	여성중앙	주의	2014지선151	
	여수신문	주의	2014지선135	
		주의	2014지선47	
	연합뉴스	권고	2014지선99	
	영광신문	주의	2014지선124	
		경고	2014지선223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자 체 심 의	영남일보	권고	2014지선24	
		경고	2014지선46	
	예천신문	경고	2014지선227	
	완주군민신문	권고	2014지선113	
		주의	2014지선50	
	우리일보	경고	2014지선4	
		주의	2014지선40	
	울산매일	권고	2014지선11	
	울산신문	경고	2014지선3	
		권고	2014지선76	
	울진신문	주의	2014지선53	
	월간조선	권고	2014지선196	
	음성뉴스	권고	2014지선97	
	이천일보	경고	2014지선234	
	익산투데이	주의	2014지선133	
	인천일보	권고	2014지선100	
		권고	2014지선16	
	일간경기	권고	2014지선229	
	전국매일신문	권고	2014지선171	
		주의	2014지선61	
	전남일보	주의	2014지선184	
	전남저널	주의	2014지선81	
	전남중앙신문	경고	2014지선45	
	전라일보	주의	2014지선101	
		주의	2014지선26	
	전북도민일보	주의	2014지선138	
		주의	2014지선29	
	전북일보	주의	2014지선69	
	전북중앙신문	주의	2014지선212	
		경고	2014지선5	
		경고	2014지선62	
	정읍뉴스	주의	2014지선190	
	정읍신문	주의	2014지선198	
	조선일보	권고	2014지선161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자체심의	주간한국	권고	2014지선165	
		권고	2014지선195	
	주부생활	주의	2014지선79	
	중구신문	주의	2014지선74	
	중도일보	주의	2014지선127	
		권고	2014지선163	
	중부매일	주의	2014지선131	
	중부신문	주의	2014지선52	
	중부일보	권고	2014지선147	
		권고	2014지선17	
		권고	2014지선177	
		주의	2014지선51	
		권고	2014지선94	
	중앙일보	권고	2014지선202	
		권고	2014지선30	
	지방시대	주의	2014지선132	
	창원일보	경고	2014지선106	
	충남일보	권고	2014지선95	
	충북일보	주의	2014지선170	
	충청투데이	주의	2014지선139	
	하나로신문	경고	2014지선233	
	한겨레	권고	2014지선205	
	한국경제	권고	2014지선158	
		권고	2014지선33	
		권고	2014지선90	
	한국교육신문	권고	2014지선201	
	한국일보	권고	2014지선159	
		권고	2014지선174	
		주의	2014지선39	
	한남일보	주의	2014지선145	
		주의	2014지선193	
	한라일보	권고	2014지선186	
	함안뉴스	주의	2014지선110	
	해피데이고창	주의	2014지선146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헤럴드경제	권고	2014지선206	
	현대일보	주의	2014지선1	
		주의	2014지선60	
	화성신문	주의	2014지선57	

구 분	언론사명/시정요구인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시정요구 심의	경남도민신문	양해영	권고	2014지선142	
		박완수	정정보도문 게재	2014지선210	
	경남매일	박완수	기각	2014지선143	
	경남투데이	유승화	주의	2014지선104	
	뉴스1	이낙연	기각	2014지선182	
	뉴시스	장일	주의	2014지선215	
	대경일보	류승호	정정보도문 게재	2014지선209	
	수원시민신문	이칠재	권고	2014지선179	
	우리군민신문	유두석	경고	2014지선218	
	의성문소신문	김주수	정정보도문 게재	2014지선167	
	중부일보	강현석	경고	2014지선217	
	충청투데이	윤진식	주의	2014지선181	
	포천신문	김창균	경고	2014지선153	
		김창균	경고 결정문 게재	2014지선220	
	한국일보	유장현	주의	2014지선219	
	한려투데이		주의	2014지선141	
	함평천지신문	강석주	경고	2014지선216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397-3114
언론분쟁상담 02)397-3000, 3010, 3100, 3110
선거기사심의 관련 문의 : 02) 397 - 3151~4
팩 스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8층
전화 051) 759 - 7083~4 | FAX 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5층
전화 053)763-0020~1 | FAX 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5층
전화 062)676-0360~1 | FAX 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도신로 45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5층
전화 042)525-0778~9 | FAX 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211-9022, 9027 | FAX 031)211-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전화 033)255-2878~9 | FAX 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286-8081, 8083 | FAX 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 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288-0010, 0981 | FAX 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263-1780, 1787 | FAX 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남광북5길 6 현곡빌딩 4층
전화 064)722-3328, 3352 | FAX 064)726-320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인쇄일 2014년 10월 일
발행일 2014년 10월 일
발행인 박용상
편 저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본부 기사심의팀 (02-397-3153)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 FAX 02)397-3089
http://www.pac.or.kr

제 작 계 문 사 02)725-5216

※ 이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